본보고서

2020년 서울도시기본계획

서울특별시



2006

“2020년 서울 도시기본계획”을 발간하며



서울시장 이 명 박

서울은 600년의 歷史와 傳統을 갖고 있는 由緖 깊은 古都입니다. 대한민국의 首都일 뿐만 아니라, 政治, 經濟, 社會, 文化 등 모든 분야에서 中樞機能을 遂行해 왔습니다.
世界社會에서 ‘한강의 기적’으로 불리는 經濟發展을 牽引했고, 올림픽과 월드컵축구를 誘致하여 세계를 향해 개방된 都市가 되었습니다.

서울은 建國이후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천만 인구가 살고 있는 대도시가 되기까지 양적인 개발이 불가피했던 점이 있었지만, 交通混雜, 地域不均衡, 疎外階層 등 都市問題를 남기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自然과 環境을 가꾸고 復原하는 노력을 소홀히 했던 側面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서울은 2002년 7월부터 ‘世界一流都市’를 目標로 빠른 變化를 거듭해 왔습니다. 청계천과 ‘서울 숲’으로 象徵되는 지속가능한 개발로 세계적인 親環境都市로 認定받고 있습니다.
尨大한 都市交通體系를 革新하여 빠르고 편리한 大衆交通을 만들었으며, 세계의 여러 도시에 그 노하우를 輸出하고 있습니다.
文化 인프라를 擴充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도시의 品格과 市民의 삶의 質을 높이고 있고, 세계1위의 電子政府를 具現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都市計劃에서도 世界一流가 되기 위해 魂神의 勞力을 다해 왔습니다. 서울의 未來像에 관해 市民의 生角과 意志를 反映하기 위해 公募를 했습니다.
그리하여 自然과 人間, 歷史와 尖端이 어우러지는 世界都市 서울, 동북아

경제를 선도하는 世界都市, 서울다움이 느껴지는 文化都市, 자연이 되살아나는 生態都市, 더불어 사는 풍요로운 福祉都市, 통일 후에도 변함없는 韓半島의 수도 서울을 '5대 政策目標'로 提示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서울의 長期發展 構想을 담은『'2020년 서울都市基本計劃』을 마련했습니다. 高度成長期에 누적된 도시문제를 치유하고, 서울의 역사를 빛내고 자연환경을 되찾으려는 熱情과 비전을 담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청계천, 뉴타운, 交通體系 改編, 市民廣場, 文化都市 및 歷史 保全 등 주요 核心事業들은 20년 計劃의 틀 안에서 이미 實現된 것도 있고, 앞으로 持續해야 할 것도 있습니다.
서울시는 각종 정책모니터링지표를 提示하고, 시민들이 政策目標의 達成 여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투명한 行政에 힘쓰고 있습니다.
서울이 變化와 發展을 통해 '世界一流都市'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끊임없는 聲援을 부탁드립니다.

본 계획의 樹立過程에 많은 도움을 주신 서울市議會, 中央政府 및 서울시의 都市計劃委員會 委員, 각 分野의 諮問委員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서울市政開發研究員 연구진과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널리 읽히고 유익하게 活用되기를 바랍니다.

2006. 4.
서울특별시장 이명박

목 차

제1부 기본구상

Ⅰ 계획의 기조

1. 도시기본계획의 성격과 범위 5
2. 계획수립의 배경 및 추진경위 7
3. 계획수립의 여건변화 전망 10
4. 상위계획 검토 18
5. 2020 서울도시기본계획 수립의 접근방향 28
6. 2020 서울의 미래상과 주요 계획목표 34
7. 계획의 추진방향과 원칙 35

Ⅱ 서울의 계획과제와 기본지표

1. 서울의 현황 39
2. 서울의 현상과 문제점 48
3. 서울의 강점 · 약점 · 위협 · 기회요인 51
4. 계획기조와 주요 계획과제 52
5. 계획의 기본지표 62

Ⅲ 공간구조 개편구상

1. 현황과 문제점 87
2. 여건변화 전망 95
3. 미래상 96
4. 계획방향 97
5. 목표체계 98
6. 공간구조 구상 및 중심지체계 102

제2부 부문별 기본계획

Ⅰ 생활권 계획

1. 생활권계획의 필요성 115
2. 생활권의 설정 및 구분 117
3. 생활권별 계획방향 119
4. 생활권별 기본구상 121

Ⅱ 토지이용계획

1. 현황과 문제점 159
2. 여건변화 전망 170
3. 미래상 174
4. 계획방향 175
5. 목표체계 176
6. 장래 서울시 용도지역별 소요면적 추정 186
7. 용도지역별 관리방향 192
8. 대규모 개발가능지의 관리방향 197

Ⅲ 재건축 · 재개발계획

1. 현황과 문제점 201
2. 여건변화 전망 214
3. 미래상 217
4. 계획방향 218
5. 목표체계 219
6. 목표별 정책지표 227



Ⅳ 교통 및 물류계획

1. 현황과 문제점 231
2. 여건변화 전망 240
3. 미래상 245
4. 계획방향 245
5. 목표체계 246
6. 목표별 정책지표 276

Ⅴ 정보통신계획

1. 현황과 문제점 285
2. 여건변화 전망 291
3. 미래상 295
4. 계획방향 296
5. 목표체계 297
6. 목표별 정책지표 307

Ⅵ 산업경제계획

1. 현황과 문제점 311
2. 여건변화 전망 340
3. 미래상 343
4. 계획방향 344
5. 목표체계 345
6. 목표별 정책지표 367

Ⅶ 주택계획

1. 현황과 문제점 373
2. 여건변화 전망 381
3. 미래상 386
4. 계획방향 387
5. 목표체계 388
6. 목표별 정책지표 404
7. 권역별 계획 407

Ⅷ 환경보전계획

1. 현황과 문제점 411
2. 여건변화 전망 424
3. 미래상 430
4. 계획방향 432
5. 목표체계 435
6. 목표별 정책지표 463

Ⅸ 공원녹지계획

1. 현황과 문제점 469
2. 여건변화 전망 478
3. 미래상 479
4. 계획방향 480
5. 목표체계 482
6. 목표별 정책지표 499

X 경관계획

1. 현황과 문제점 503
2. 여건변화 전망 510
3. 미래상 511
4. 계획방향 511
5. 목표체계 512
6. 목표별 정책지표 528

XI 사회개발계획

1. 현황과 문제점 533
2. 여건변화 전망 540
3. 미래상 543
4. 계획방향 544
5. 목표체계 546
6. 목표별 정책지표 568

XII 방재계획

1. 현황과 문제점 575
2. 여건변화 전망 577
3. 미래상 579
4. 계획방향 579
5. 목표체계 581
6. 목표별 정책지표 598

제3부 실현방안

I 계획의 실현화방안

1. 현황과 문제점 605
2. 여건변화 전망 628
3. 실현화방안 644
4. 부문별 계획의 중장기 투자계획 659
5. 목표별 정책지표 665

부 록

부록 1. 공간구조 개편구상 관련 669
부록 2. 자치구별 생활환경 관련 672
부록 3. 시가화예정용지 수요근거 675
부록 4. 서울시 세출 및 세입예산 추계방법 및 결과 677
부록 5. 계획의 실현화방안 관련자료 681
부록 6. 용도지역별 수요량 산출 684
부록 7. 서울시 관내 하천현황 687

제1부 기본구상

Ⅰ. 계획의 기조

Ⅱ. 서울의 계획과제와 기본지표

Ⅲ. 공간구조 개편구상

Ⅰ. 계획의 기조



1. 도시기본계획의 성격과 범위
2. 계획수립의 배경 및 추진경위
3. 계획수립의 여건변화와 전망
4. 상위계획 검토
5. 서울도시기본계획 수립의 접근방향
6. 서울의 미래상과 주요 계획목표
7. 계획의 추진방향과 원칙

1. 도시기본계획의 성격과 범위

1) 도시기본계획의 성격

- 도시기본계획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9조에 의해 도시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써 각종 하위 도시계획수립의 지침이 되는 법정계획이다.
- 도시기본계획은 도시의 20년 이후 모습을 내다보며 목표년도의 장기적인 미래상 및 발전의 기본골격을 제시하는 장기계획으로써, 5년마다 기정 도시기본계획의 그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하는 법정 절차를 통해 수정·보완하는 과정을 거친다.
- 도시기본계획은 토지, 주택, 교통, 환경 등 물적 부문에 대한 골격계획의 성격을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구, 산업, 사회개발, 재정 등 사회·경제부문에 대한 정책을 포괄하는 종합계획이다.
- 도시기본계획은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단계별 전략을 제시하는 과정적 계획의 성격을 지닌다.

2) 도시기본계획의 범위

시간적 범위	• 계획 기준년도 : 2000년 도시의 자연환경, 인문환경, 지역경제 등 각 분야별 현황과 부문별 계획의 기준년도는 2000년으로 설정한다. • 계획 목표년도 : 2020년 본 계획은 2020년을 목표연도로 하되, 그 이후까지 고려하여 계획한다.
공간적 범위	• 서울시 인접지역이 대부분 시로 승격되었고, 지방자치제 실시이후에 경기도에서 관할구역의 분리요청이 있어, 도시계획구역을 서울시 행정구역과 일치시킨다. • 단, 계획과제를 도출하기 위한 현황 및 여건분석과 공간구조 개편구상에 있어서는 서울과 주변의 수도권지역을 포함하여 광역적으로 접근한다. • 계획구역면적 : 605.96㎢
내용적 범위	• 장기적·거시적 관점에서 도시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실천전략을 제시한다.

3) 도시기본계획의 역할

- 서울의 미래상을 정립한다.
- 법정계획으로써 도시계획에 대한 기본방향 및 의사결정의 지침을 제시한다.
- 자치구 도시계획의 조정원칙을 제시한다.
- 중앙정부 및 인접 지자체와의 협력의 기본방향을 제시한다.

2020 서울도시기본계획

- 기정 '2011 서울도시기본계획(1997)'을 수정·보완하는 계획이다.
- 급격한 도시성장과정에서 누적된 현안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21세기 세계화·지방화·다원화 시대에 대비한 도시발전전략을 제시한다.
- 서울 대도시권의 기능적 통합과 공간적 일체화를 이룩하기 위한 자치단체들간 분담과 협조의 공생기반 원칙과 지침을 제시한다.

2. 계획수립의 배경 및 추진경위

1) 기정 서울도시기본계획의 수립과정

- 1978년 : '2000년대를 향한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안)' 수립
  수도권정비기본계획의 수립으로 수정·보완
- 1980년 : 서울 도시개발 장기구상·중기계획 수립
- 1981년 : 도시계획법 개정으로 도시기본계획의 법정화 명시
- 1982년 ~ 1984년 : 각 구별 구단위 도시기본계획 (17개구) 수립
- 1984년 : 제2차 도시기본계획(안) 수립
  (2000년대 서울 도시구조개편을 위한 다핵도시 개발연구)
- 1988년 : 제3차 도시기본계획(안) 수립
- 1990년 : 건설부 승인으로 도시기본계획 확정 (법정 도시기본계획)
- 1991년 ~ 1995년 : 각 구별 구단위 도시기본계획 (22개구) 수립
- 1993년 : 자치구 도시기본계획의 종합화·조정
- 1993년 : 기정 서울도시기본계획(1990) 검토·보완
- 1993년 ~ 1994년 : 21세기 구상연구
- 1994년 : 서울대도시권 계획구상
  수도권의 인구, 주택, 산업·경제, 교통에 대한 연구를 통한 서울대도시권 설정과 계획과제 도출
- 1994년 : 기정 '서울도시기본계획(1990)' 수정·보완의 방향 설정
- 1994년 ~ 1995년 : '2011 서울도시기본계획' 수립
- 1995년 : 시민공청회 개최 및 시의회 의견 청취
- 1995년 ~ 1996년 : 민선시장 취임에 따른 내용보완
- 1997.1.7 : 법정계획인 '2011 서울도시기본계획'건교부 승인

2) 2011 서울도시기본계획의 수정·보완 배경

- 매 5년마다의 수정·보완하는 법정절차 이행을 위해, '2011 서울도시기본계획(1997)'에 대한 타당성 검토와 수정·보완이 요구된다.
- 제4차 국토종합계획, 제3차 수도권 정비기본계획, 광역도시계획 및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등 상위계획 및 주요 정책의 변경사항을 반영해야 한다.
- 자치구 도시기본계획이 폐지됨에 따라 권역별·생활권별 도시발전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자치구 도시계획의 수립기준을 제시한다.
- 서울시 상주인구의 지속적 감소와 고령화 탈공업화 및 첨단·정보화의 진전, 통일시대 대비 등 2011년 계획수립 이후 변화된 국내외 여건에 대응하면서 향후 계획여건의 전망과 분석을 통한 바람직한 도시관리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 변화된 여건에 맞추어 재건축·재개발, 환경보전·경관, 교통 등 서울시가 당면하고 있는 주요 현안문제에 대한 정책기본방향을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
- IMF 금융위기 이후의 사회적·물리적 여건 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도시상 창출이 요구된다.
- 『세계일류도시 서울』의 계획이념을 실현할 수 있는 중장기 프로젝트를 개발·운용하고,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도시관리의 기본 틀에 대한 재고가 요구된다.

3) 2020 서울도시기본계획 수립의 추진경위

- 2000년 10월 : 기정 '2011 서울도시기본계획(1997)'의 수정·보완 착수
- 2000년 12월 : '2011 서울도시기본계획'의 타당성 검토 워크샵 실시
- 2001년 1월 : '2020 서울도시기본계획' 홈페이지 개통
- 2001년 1월～3월 : '서울의 미래상' 라운드테이블 개최
- 2001년 3월～4월 : '서울의 미래상' 슬로건 공모전 실시
- 2001년 3월～7월 : '도시기본계획' 관련 연구 세미나 개최
  - 친환경·에너지 절약형 도시계획 수립
  - 서울시 문화정책과 문화도시
  - 2000년대 서울 디지털도시 구축방안 연구
- 2001년 3월～7월 : 부문별 '서울의 현안문제'에 관한 인터넷 설문조사 실시
- 2001년 3월～8월 : 부문별 계획 내부토론회 제1, 2라운드 개최
- 2001년 9월 : 총괄부문 계획의 기조 및 미래상, 목표 정립

- 2001년 9월～11월 : 부문별 계획(안) 작성 및 부문간 조정
- 2001년 11월～12월 : 계획(안)에 대한 실무부서와의 의견 조율
- 2002년 1월 : 전임시장단 보고
- 2002년 4월 : 최종 종합계획(안) 작성
- 2002년 5월 : 전략보고서 작성, 권역별 도시발전방향 제시, 정책지표 개발
- 2002년 8월 : 21C 서울기획위원회 보고
- 2002년 12월 : 시장단 보고
- 2003년 1월～2월 : 시정운영4개년계획 반영과 관련실국과의 검토 조율
- 2003년 3월 28일 : 시장단 보고
- 2003년 5월 13일 : 공청회 개최
- 2003년 6월 18일 :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 2003년 10월 20일 : 서울시 의회 의견청취
- 2004년 4월 1일 : 2020도시기본계획(안) 설명회 개최
- 2004년 5월 30일 : 2020도시기본계획(안) 승인 신청(서울시 ➡ 건교부)
- 2004년 6월～8월 : 관련부처 협의(건교부 ➡ 관련부처)
  - 국방부, 행자부, 농림부, 환경부, 소방방재청, 문화재청, 철도청, 건교부
- 2004년 9월～10월 : 도시기본계획 보완 및 협의(서울시, 건교부)
- 2004년 11월 19일 : 중앙도시계획위원회(본회의) 심의
- 2005년 3월 3일 : 중앙도시계획위원회(2분과) 심의
- 2005년 3월 24일 : 중앙도시계획위원회(2분과) 심의
- 2005년 5월 12일 : 중앙도시계획위원회(2분과) 심의
- 2005년 5월 31일 : 건교부 주택국 자료 보완 요구
- 2005년 6월 14일 : 건교부 주택국 보완자료 제출
- 2005년 6월 29일 : 도시기본계획안 주택분야 회의(건교부, 서울시)
- 2005년 7월 7일 : 중앙도시계획위원회(2분과) 심의 -본회의 회부
- 2005년 9월 29일 :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본회의 심의 -조건부 가결
- 2005년 12월 12일 : 2020 서울도시기본계획안 조건부 승인(건교부)

3. 계획수립의 여건변화와 전망

1) 인구구조의 변화

• **상주인구의 감소와 노령인구의 증가**

- 전국적으로 인구는 목표년도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이나 증가율은 점차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이런 추세속에 서울시의 인구는 1992년 1,093만인을 기점으로 점차 감소하면서 안정화추세에 접어들고, 수도권내 인구비중이 감소추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측된다. 반면 수도권의 인구는 인천시 인구의 소폭 상승과 경기도 인구의 급속한 증가로 인해 목표년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전국 비중의 점진적 증가세도 지속될 것이다.
- 서울의 상주인구는 감소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주간인구(상주인구 + 종사자수 -거주취업자수)는 상주인구에 비해 60만～70만명이 많게 추산되며 그 차이는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계획년도별 상주인구와 주간인구

구 분	2000	2005	2010	2015	2020
상주인구(천인)	10,373	10,216	10,038	9,914	9,798
주간인구(천인)	10,938	10,856	10,716	10,620	10,538
차 이 (천인)	565	640	678	706	740

- 65세 이상의 노령인구의 증가 경향은 앞으로 더욱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평균수명 연장과 낮은 출산율로 인해 아동인구가 감소하고, 1세대 가구나 독거 가구의 증가로 인해 가구 규모가 전반적으로 축소될 것이다.

OECD 한국경제보고서 (2001)

우리나라는 2000년 현재 노인인구 7% 이상의 노령화사회로 진입하였으며,
2022년 노인인구 14% 이상의 노령사회로의 진입이 예상된다.

통계청 장래인구전망 (2001)

현재 75세인 평균수명은 2020년 81세로 연장되며, 생산가능인구의 노인부양부담이
현재 10명당 1명에서 2020년 4명당 1명 수준으로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사회구조의 변화**

- 경제활동방식의 변화와 더불어 핵가족화, 노령화, 독신가구의 증가 등 인구구조의 변화는 시민생활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
- 공간적으로 볼 때 인구구조의 변화는 가구수 증대와 이에 따른 주택 수요의 증가, 교육 및 보육서비스 시설에 대한 수요 증가, 노령인구의 복지공간 확대 요구 등의 변화를 유발한다.

• **거주 외국인의 증가**

- 서울은 외형적인 성장에 비해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이 미흡한 게 사실이다. 앞으로는 서울이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세계적인 도시로 변모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인해 향후 서울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비중이 앞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 따라서 서울에서 거주할 외국인들의 생활상 또한 향후 도시계획 수립에 있어 주요한 요소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2) 지방화/시민참여

• **민선지방자치의 정착**

- 지방자치제의 정착은 시민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지방정부의 행정영역을 급격히 확대시키고 이는 주민과 행정당국의 상호의존성을 높인다.
- 지방자치는 자치구 단위의 고유성·특수성을 감안한 전략 수립이 가능하다는 긍정적 영향이 있는 반면, 상호간의 경쟁과 갈등으로 인해 도시의 새로운 문제의 근원을 제공하기도 한다.
- 특히 서울과 같은 광역대도시차원에서 내재된 도시문제의 유동성과 복합성을 고려할 때, 자치구 단위의 독자적인 도시계획과 함께 서울시 전체의 통합적 도시계획과 행정의 강화가 요구된다.

• **시민참여의 심화와 NGOs 역할의 증대**

- 자신의 이해와 요구를 적극적으로 행정에 반영시키고자 하는 주민들의 의식변화와 활동은 과거 형식적이거나 수동적인 참여에서 실질적이며 적극적인 참여로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으며, 시민참여의 양상과 내용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있다.
- 이제까지 시민참여는 혐오시설 반대, 재건축 요구 등 재산권과 관련된 제한된 분야에서 주로 이루어졌으나, 점차 시민의 생활환경에 대한 요구가 다양해지고 분야 또한 확대되고 있다. 참여방식에 있어서도 일회성의 행사나 형식적인 공청회 등 효과성이 낮은 과거의 방식을 탈피하여, 시민이 주체가 되는 적극적인 참여의

분위기로 변하고 있다.

- 현재 변화추세의 연장선상에서 볼 때, 이해관계의 상충으로 인한 대립과 갈등, 이로 인한 집단적 의사표현은 갈수록 다기화될 것이다.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다양한 비정부기구(NGOs)의 활약을 바탕으로 한 전문성과 대안을 갖춘 시민운동이 더욱 많은 분야에서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더욱 폭넓고 조직화된 형태로 시민참여의 활성화를 주도할 것이다(NGO 수 : 1991년 9,716개 ➡ 2000년 13,436개).
- 이런 변화의 분위기속에서 NGOs는 시정에 대한 의견과 비판을 논의하는 자리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문제시되고 있는 지역에 대한 공동조사 등을 기획함으로써 그 역할이 더욱 증대될 것이다. 이를 통해 NGOs는 계획과 행정간의 가치공유의 기회를 마련하고 행정이 간과한 편의주의를 극복하여 보다 발전된 상호 협력적인 관계 창조를 위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 민간부문의 성장에 따른 새로운 관계 정립 및 역할 분담 요구

- 후기 자본주의의 확대·발전과 함께 민간부문의 활동이 사회전반에 걸쳐 활성화되었다. 이러한 흐름은 정부와 민간 사이의 새로운 관계 정립과 역할분담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도시영역에서 과거 공공에 의해 공급되던 기반시설이나 서비스의 민영화 추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 기본적인 전제는 과거의 통제 위주의 규제 전략에서 인센티브 위주의 유도전략(incentive strategy)으로 나아가는 것인데, 민간부문의 장점을 활용할 수 있는 공공사업 영역을 획기적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그러나 과도한 효율성 추구로 형평성의 약화와 장기적 관점 상실 등의 부정적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시 잠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충분히 고려해서 계획을 수립·집행하여야 할 것이다.

3) 서울대도시권의 광역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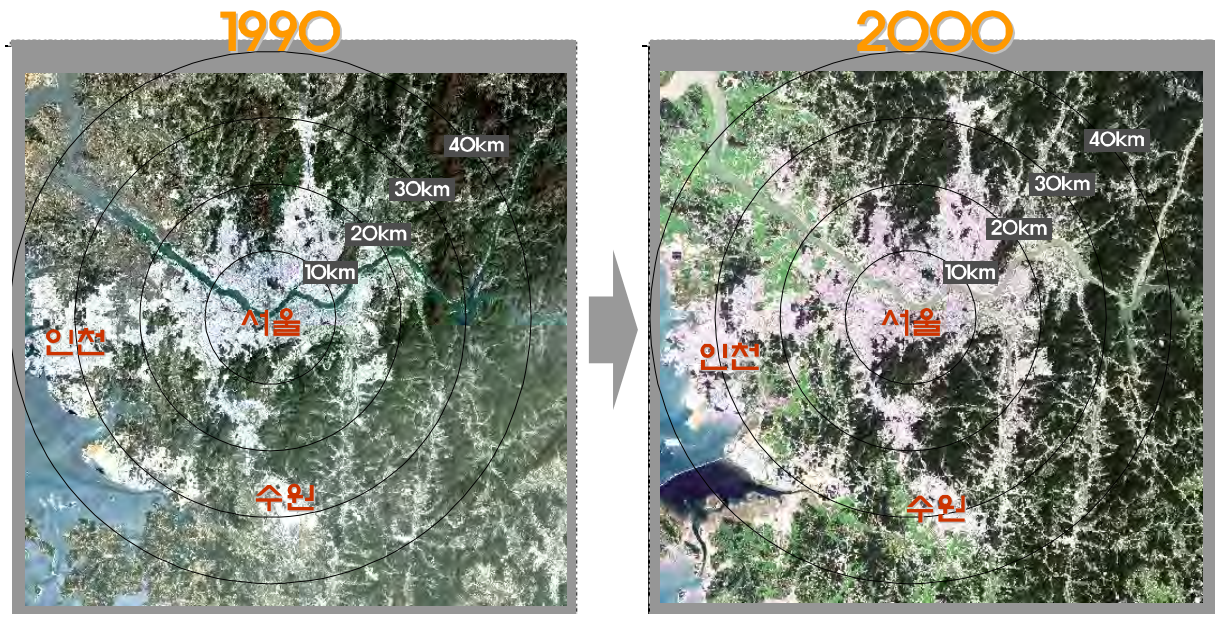
• 서울대도시권 광역화의 진전

- 지난 수십여년간의 서울은 지속적으로 그 영향력을 주변으로 확대시키는 광역화의 과정을 경험하였다.
- 서울대도시권은 이제 단순한 행정체계상의 도시구분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복잡하고 다양한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공간으로써 주변 도시와의 통합된 생활공간으로써 역할하고 있고 이에 따른 계획적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

• **서울의 성장 패턴의 변화**

- 서울의 인구 증가는 1992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현재 거의 정체상태에 머물러 있다. 반면, 외곽 지역은 급격한 인구 성장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서울이 이제 인구 집중기를 벗어나 상대적 분산기에 접어들고 있음을 의미한다.

- 더욱이 서울은 개발압력에 비해 신규개발 가용지가 크게 부족한 상태로써 서울인구분산기능의 필요에 의한 서울대도시권의 확대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서울은 강남북 도심과 부도심을 중심으로 반경 30-40km권내의 도시들과 급속도의 기능적 통합을 이루어가고 있으며, 향후 서울 대도시권은 경기지역 전체로 확대되어갈 전망이다.



수도권의 광역화 추세

4) 환경중시시대

• **환경중시시대의 도래**

- 20세기 후반부터 그 파급효과의 광역성과 유동성 때문에 환경과 관련된 논의가 전세계적인 차원에서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세계환경문제와 지속가능성은 범지구적인 관심사가 되었다.

• **계획 명제로써의 지속가능한 개발**

- 초기 환경적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의 개념에서 시작된 '지속가능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은 이제 경제·사회·문화적 지속가능성으로까지 확

장된 개념으로써 개발과 성장의 기본원칙으로 자리 잡았다.

- 현 세대에서의 자원활용에 대한 결정은 생태계의 일부로써의 인간과 도시, 자연의 수용용량, 그리고 세대간 형평성 등의 제약조건을 감안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삶의 질적 향상을 추구하는 현대 도시에서 환경부문의 비중이 커짐에 따라, 지속가능한 개발은 단순히 선언적 원칙으로써가 아니라 제도화를 통한 실천으로 이행되어야 할 것이다.

• 성장관리적 도시계획으로의 전환

- 이제 서울은 과거의 개발 위주, 양적 성장위주의 도시개발의 관점에서 탈피하여 질적인 도시성장과 개발의 관리가 요구되는 시점에 있다.

5) 정보화 및 지식기반사회로의 이행

• 전자적 공간과 물리적 공간의 복합체로써의 도시

- 정보통신기술의 비약적인 성장과 정보의 생산, 유통, 이용의 확대는 현대 사회의 구조와 지배적 가치를 변화시키고 있으며, 정보에의 접근성과 활용여부는 개인뿐만 아니라 도시나 나라의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가 되었다.

- 정보기술의 발달과 관련 활동은 앞으로도 가속화될 전망이며, 기존의 물리적 공간이외의 전자공간에서 일어나는 도시구성원의 업무·쇼핑 등 생활 활동 비중이 크게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 이에 따라 앞으로의 도시공간에서는 물리적 근접성 못지않게 정보·통신과 교류측면의 접근기회가 중시될 것이다. 구성원간 교류에 있어 물리적 거리에 대한 고려가 줄어들 수 있다는 변화는 사회·경제기능의 공간적 연계 범위가 확대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 이미 쾌적한 업무공간·주거공간에 대한 요구 증가와 함께 재택근무, 전자상거래의 증가 등 초공간상에서 이루어지는 도시활동은 기업과 주택 입지의 광역화 추세에 일조하고 있다.

- 한편 정보화가 진전됨에 따른 공간적으로 상대적인 정보격차 심화나 정보 수혜계층의 편중은 도시내의 지역 불균형과 계층간 위화감을 더욱 심화시킬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 가상도시화론의 부상

- 전지구적인 네트워크의 형성과 비약적인 소프트웨어 기술 등의 발달로 인한 정보기술의 발전은 인류의 생산양식과 삶의 방식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산업화기간 동안에 발생한 도시화 현상에 버금가는 새로운 도시화

현상으로써 '가상도시화' 라고 명명할 수 있다.

- 가상도시화는 정보기술의 측면에서 개인용 컴퓨터의 보급, 이를 엮는 세계적 규모의 통신네트워크 구축, 소프트웨어 기술의 발전을 통해 생산양식뿐만 아니라 생활양식을 변화시킴으로써 새로운 문화를 형성시키고 있다. 또한 가상도시공간에서는 통신네트워크를 이용한 상호 의사소통이라는 새로운 인간관계가 출현하고 인간활동의 영역이 중첩적으로 확장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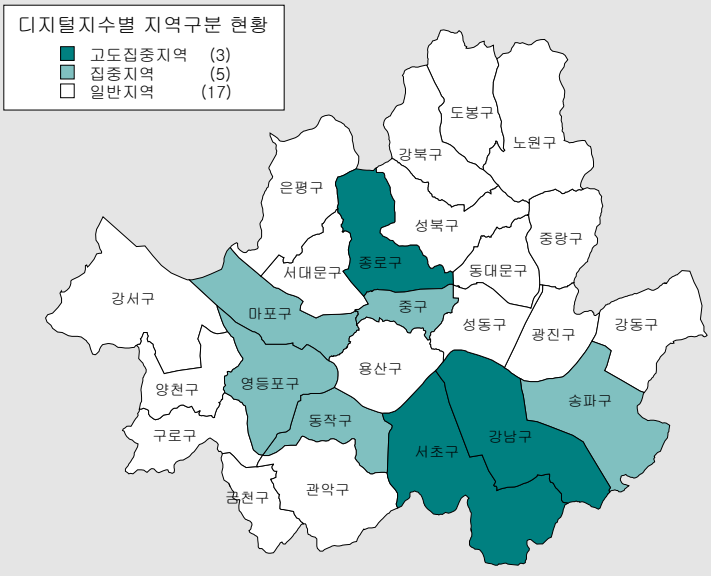
• 탈공업화의 진전과 도시형 신산업 육성의 필요성 증대

- 기존 서울의 경제적 기반이 되어온 제조업부문은 급격히 약화되고 있다. 향후 서울의 경제성장은 도시형 신산업과 생산자서비스업, 관광 및 여가산업 등이 주도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 도시형 신산업으로써는 고부가가치의 산업연관효과가 크고, 토지자원의 소모가 적은 저공해형 기술집약·지식집약산업이 적합한데, 서울은 미디어, 인쇄, 의류, 디자인, 만화, 교육, 의료 등 하이터치 산업에 IT, BT, NT 등의 첨단기술의 접목을 통해 성장기반을 확보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정보화 / 탈산업화 시대의 서울

• 지식기반사회로의 이행
- 고부가가치 산업구조로 전환
- '20 대 80의 사회'
: 상위 20% 소득이 하위 20% 소득의 5배 이상(2001년)

• 인터넷 이용의 급격한 증가
- 인터넷 이용자수 '세계 3위'
: 100명당 61명(2003년)
- 정보격차(Digital Divide) 심화



6) 남북교류의 진전과 지역균형발전 요구 증대

• **긴장완화와 통일기대감 증대**

- 구소련의 몰락과 동구의 민주화는 전 세계의 정치적인 역학관계와 경제적인 상호관계를 크게 변화시키기 시작했다. 한국전쟁이후 반세기가 넘도록 지속된 남북간의 불신과 대치상태는 서서히 회복되고 있는 상황이며, 6·15선언 이후 경제·사회적 교류가 더욱 활발히 진행되면서 통일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 특히 경의선 복원 및 아시아 대륙철도 연계사업과 개성공단 건설, 금강산과 설악산을 잇는 관광권역의 공동개발 구상 등 남북한간의 실질적인 경제협력의 대상도 구체화되어, 남북간 화해의 새시대가 이제는 실현가능한 미래로 다가오고 있다.

• **통일에 대비한 서울의 계획과 변화 전망**

- 갑작스런 통일이 올 경우 남북한 간의 상이한 문화와 사고방식의 상충 등의 갈등으로 혼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인구 및 경제규모의 확대와 국토 공간 재편 필요, 저밀도로 이용되고 있는 북한토지에 대한 개발수요 증대 등이 예상된다.
- 도시계획 측면에서 볼 때, 서울은 통일이후 사업이나 정착을 목적으로 북한에서 이주해오는 인구에 대비한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다. 통일이 되면 상대적으로 토지활용의 여유가 있는 경기 북부지역의 급격한 개발이 예상되며, 이 지역의 개발은 서울 북부지역의 기반시설과 도시기능의 용량을 초과하는 수요를 발생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 통일은 서울을 명실상부한 한반도의 수도서울이자 성장의 견인차로 만들 것이며, 서울의 경제·사회·문화적 중심지로써의 기능은 더욱 확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 **국토균형발전의 요구증대**

- 균형발전의 대표적인 국책사업으로 논란이 뜨거웠던 행정수도이전의 위헌판결에 따라 후속조치로써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대규모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7) 세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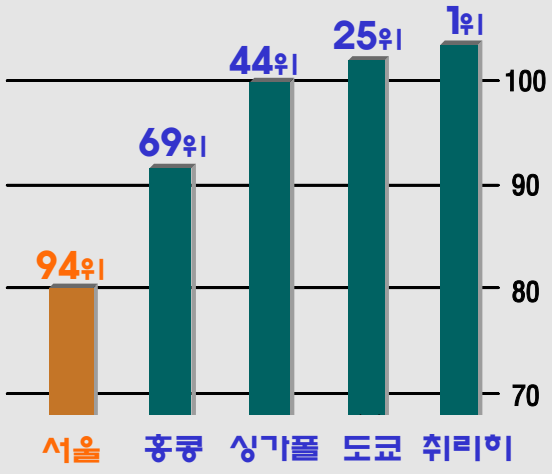
• **동북아 중심도시로써의 성장 잠재력**

- 동북아 지역은 이미 경제대국으로써 입지를 굳힌 일본과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우리나라, 세계인구의 1/4을 차지하며 연 10%이상의 고성장을 보이고 있는 중국, 자원의 보고인 러시아 등이 자리잡고 있어 향후 세계의 경제를 선도해 나갈 가장 역동적인 지역으로 지목되고 있다.
- 지정학적으로 동북아시아 중심지역에 위치한 한반도를 가운데 두고 환서해권과 환동해권이 동북아지역 경제권의 양날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동북아지역의 성장과 함께 한반도의 위상도 크게 변모할 것이다.
- 특히 서울은 상해-북경-서울-동경을 잇는 동북아시아 중심축의 한 가운데 위치하고 있어, 정보·통신·지식산업의 비중이 증대된 국제적 네트워크 속에서 동북아 중심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을 갖추고 있다.

세계화 속의 서울시 위상

• 미 상공회의소 CEO를 대상으로 한 기업환경설문조사 결과 (2002) : 동경, 싱가폴, 홍콩, 상해에 비해 경쟁력 미흡

• William M. Mercer사 (2002) : 세계도시 삶의 질 평가 '94위'



Quality of Life
2002, 뉴욕=100
(W.M. Mercer사)

4. 상위계획 검토

1) 제4차 국토종합계획

계획의 기조

• 약동하는 통합국토의 실현

기본목표

• 상생하는 '균형국토'
• 경쟁력 있는 '개방국토'
• 살기 좋은 '복지국토'
• 지속가능한 '녹색국토'
• 번영하는 '통일국토'

6대 추진전략

• **자립형 지역발전 기반의 구축**
  - 중추기능의 지방분산과 지역발전 잠재력 확충
  - 지역특성을 살린 개성 있는 발전전략 추진
  - 지역산업의 경쟁력 제고
  - 문화·관광 기반 확충을 통한 지역경쟁력 강화

• **동북아 시대의 국토경영과 통일기반 조성**
  - 동북아의 상생적 경제협력거점의 개발
  -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남북협력기반의 강화

• **네트워크형 인프라 구축**
  - 개방 및 다핵연계형 국토구조 형성을 위한 종합기간교통망 구축
  - 동북아 물류중심을 위한 국가물류체계 구축
  -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교통체계 구축

- 교통체계의 효율화 및 교통투자의 효율성 제고
- 국토정보화를 통한 편리하고 경쟁력 있는 국토 실현

• **아름답고 인간적인 정주환경 조성**

- 살기 좋은 도시 만들기
- 균형적인 도시체계 구축 및 정주체계 정비
- '선계획-후개발' 국토이용체제 정립
- 참여와 협력에 기초한 도시계획체제 구축
- 국민 주거복지 향상을 통한 사회통합의 실현

• **지속가능한 국토 및 자원관리**

- 건강하고 쾌적한 녹색 국토의 조성
- 맑은 물의 안정적 공급
- 재해에 강한 국토기반 조성

• **분권형 국토계획 및 집행체제 구축**

- 국토관리 행정의 지방분권강화
- 참여와 협력의 거버넌스체계 구축
- 국토계획 집행관련 갈등 조정시스템 구축
- 국토계획 투자재원의 확보와 운영 효율화

2) 202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안)

계획수립의 목적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를 포함하는 수도권 지역의 광역도시계획 수립과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 조정방안을 제시함으로써,

• 시·군 단위에서의 도시기본계획 수립 및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도시계획 입안에 대한 지침을 제시한다.

광역도시권의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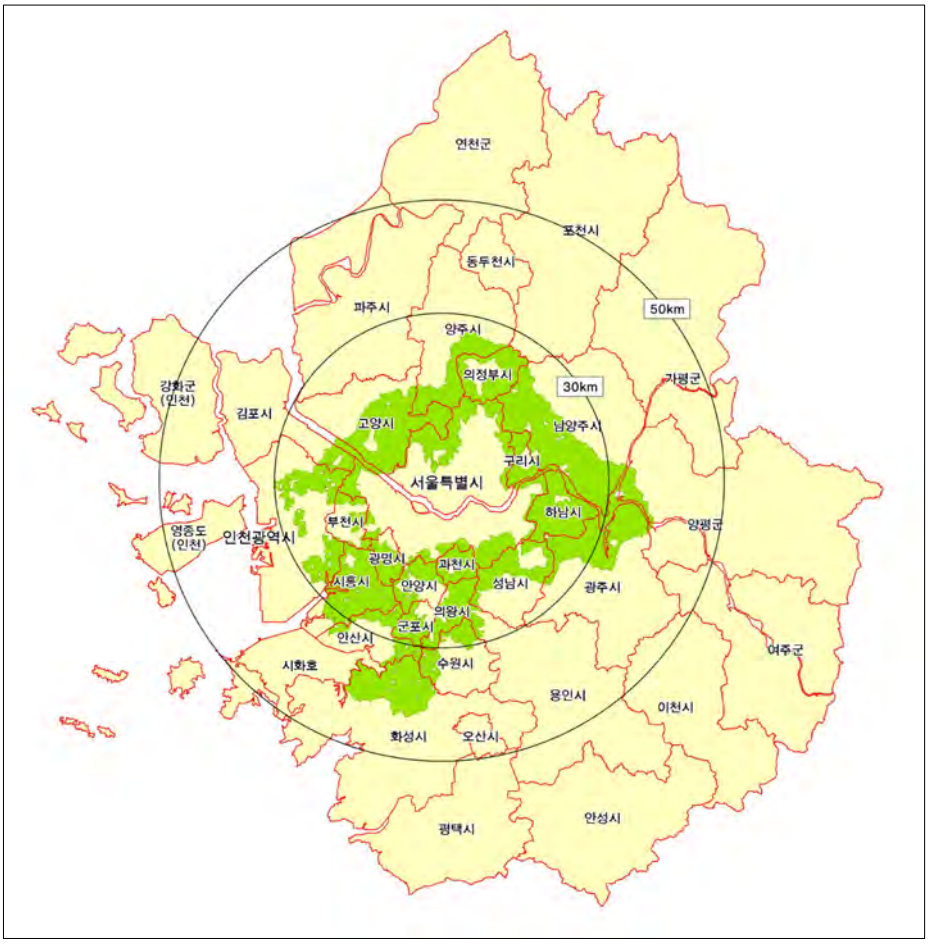
• 면적 11,754㎢

• 인구 2,135만인(2000년)

• 개발제한구역 면적 1,541㎢

기본방향

- 환경보전의식 증대에 부응
- 세계화 시대의 국제경쟁력 제고
- 정보화/광역화/지방화에 따른 다원화된 생활문화 창출
- 수도권내 균형발전 및 남북통일에 대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권 범위》

목표 및 전략

• 수도권의 「주민 삶의 질 제고」,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도모」, 「국제경쟁력 제고」라는 목표아래 다음의 주요 전략을 제시한다.

전략 1 수도권 공간구조를 다핵공간구조로 하고, 지역별로 자족도시권을 형성
공간구조구상과 도시성장관리를 고려하여 개발제한구역 조정가능지역을 설정

전략 2 공간구조구상과 도시성장관리를 고려하여 개발제한구역 조정가능지역을 설정

전략 3 광역 생태녹지축 구성하고 녹지 및 여가공간과 연결되는 생태여가·관광벨트 구축

전략 4 효율적이며 친환경적인 대중교통중심의 광역교통체계 구축

전략 5 광역시설 서비스의 협력적 공급 및 체계적 관리시스템 구축

전략 6 광역적 차원의 대기질·수질·생태계 보전체계 구축

공간구조 개편구상

주요 정책과제

- 서울의존형 단핵공간구조의 개편과 자족도시권 형성
- 환경보전과 친환경적 도시개발
-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 조정
- 남북통일과 세계화시대에 대하는 공간구조 개편

수도권 거점도시 육성

- 주핵도시 서울은 중추관리기능을 집적시키되, 현재 서울도심, 영등포, 상암(수색), 영동, 청량리(왕십리) 등을 포함하는 다심체계로 개편 유도
- 1차 거점으로 인천, 수원을, 2차 거점으로 남북축에 파주, 동두천, 평택을 육성하고 남양주, 이천을 지역중심으로 거점도시별로 기능을 부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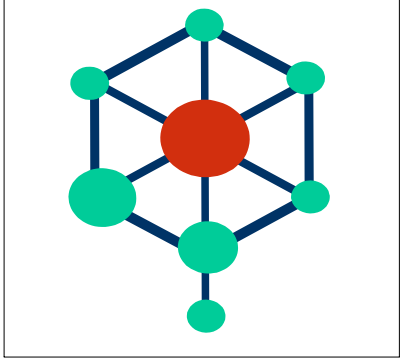
교통축 중심의 개발축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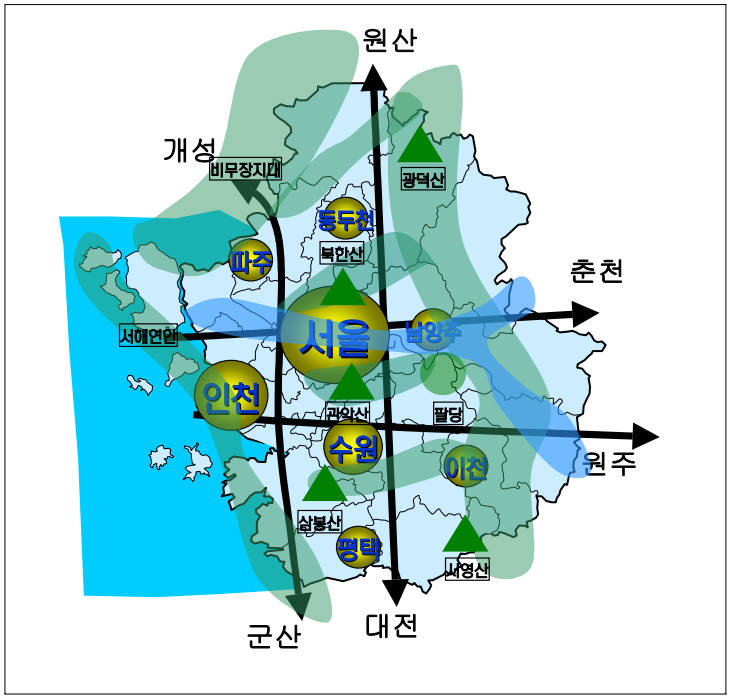
- 주축 : 남북 1축(경의-서해안축), 남북 2축(경원-경부축)
- 부축 : 남북방향 - 중부축(중부고속도로), 서울~김포~강화~해주축, 과천~의왕~천안축, 동서방향 - 강화~김포축, 파주~동두천축, 평택~제천축

녹지축 설정

- 서해안 연안축, 한강수계축, 비무장지대 녹지축
- 내륙의 주요 녹지거점을 연결하는 남북녹지축 1개와 4개의 동서 녹지축을 설정한다.

• 주핵도시 : 서울
• 국제교육·정보 : 인천
• 수도권 남부 거점 : 수원
• 남북협력 : 동두천, 파주
• 전원·여가 : 이천, 남양주
• 임해물류 : 평택





부문별 계획

광역토지이용

핵심과제	전 략
• 공간구조 개편에 부응하는 지역별 도시성장관리의 강화 • 자연환경보전 우선의 계획적 토지이용관리체계의 구축 • 지역특성별 도시개발 및 정비추진	• 중부지역등 5개지역별 토지이용 및 정비방향 설정 • 보전용지를 우선적 설정하여 도시성장을 관리 • 도시용지의 통합관리 및 효율적 이용 • 도시화 예정용지의 단계적 개발체계 확립 등

• 수도권 토지수급 방향을 제시한다.

- 서울 및 서울연접도시지역은 현재 인구규모수준 유지
- 2020년 목표인구(2,420 ~ 2,570만인)와 주택소비수준(10평/인) 향상 고려
- 신규 토지수요는 도시용지, 도시화예정용지에서 우선 공급

• 토지수요 및 공급

- 총 추가 토지소요 추정량 : 약 500㎢
- 신규 토지공급량
  - 도시용지내 미개발지 : 270㎢
  - 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예정용지 : 140㎢
  - 개발제한구역 활용 : 110㎢내외

• 4개 토지용도별 관리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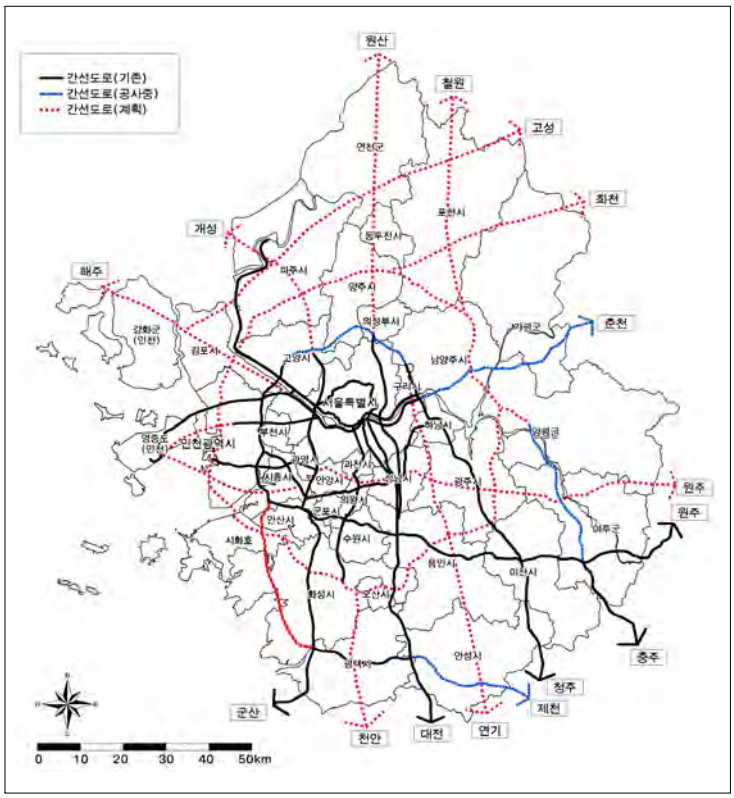
구분	해당지역	관리방안
도시용지	• 용도지역상 주거, 상업, 공업지역	• 도시용지내 개발계획은 광역계획에서 제시하는 지역별 개발밀도를 반영하여 수립 • 기존시가지 정비를 통한 신·구시가지 불균형 해소 • 저이용지 개발을 통한 시가지 이용의 내실화
도시화예정용지	• 장래 도시용지로 이용할 지역, 개발제한구역 중 조정가능지역	• 공간구조 개편전략에 따라 보전용지와 녹지축 단절을 피하여 개발 • 지역거점도시의 도시화예정용지를 우선 개발하되, 1차 거점도시는 인구집중을 유발하는 개발억제 • 철도역세권 우선개발, 동부·북부지역은 서울반경 20㎞외곽, 서부·남부지역은 서울반경 30㎞ 외곽의 주요 교통결절점이 있는 역세권을 중심으로 개발 • 주요 개발축상의 도시화예정용지를 개발(종합개발계획 수립) • 기반시설계획과 연동하여 단계적으로 개발 허용
보전용지	• 개발제한구역, 녹지지역 중 보전할 지역, 도시공원 • 국토이용관리법상 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 상수원 수질보전 및 수원함양에 필요한 지역, 호소·하천구역 및 수변구역	• 목표년도까지 보전중심으로 관리 • 도시화예정용지 설정 및 기타용지 개발시 연안생태계, 농지, 산림의 녹지체계를 활용하여 보전용지의 연계성 확보
기타용지	• 자연녹지지역의 준농림 지역으로써 계획적 관리가 필요하거나, 토지특성에 따라 보전용도로 설정할 필요가 있는 지역	• 도시화예정용지에 여유가 있음에도 기타용지를 개발할 경우, 해당 양만큼 도시화예정용지를 축소 • 기타용지를 도시화예정용지로 설정할 경우 광역도시계획의 취지와 광역지방정부의 지침에 부합해야 함

광역교통

핵심과제	전 략
• 광역교통망 구축 • 광역철도시설 확충 및 환승체계 개선 • 광역 교통관리체계 구축	• 공간구조개편과 연계된 교통계획 수립 • 토지이용과의 정합성 확보 • 급행열차 운행 및 광역교통수단 확충 • 거점도시 주변 환승시설 확충 • 투자재원의 합리적 분담 • 교통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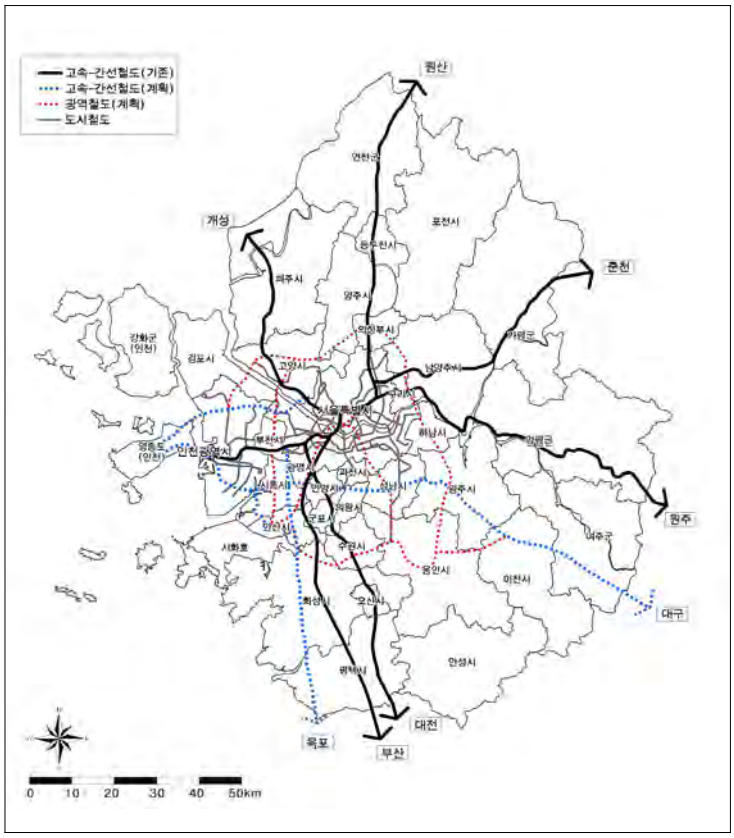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간선도로망

- 격자 순환망 구축
  - 남북축(5개) : 해주~평택축, 개성~천안축, 원산~대전축, 원산~청주축, 철원~충주축
  - 동서축(5개) : 강화~고성축 인천~화천축, 인천~춘천축, 안중~제천축
  - 순환축 : 제2순환(서울외곽순환도로) 제3순환(인천~김포~파주~남양주~광주~용인~시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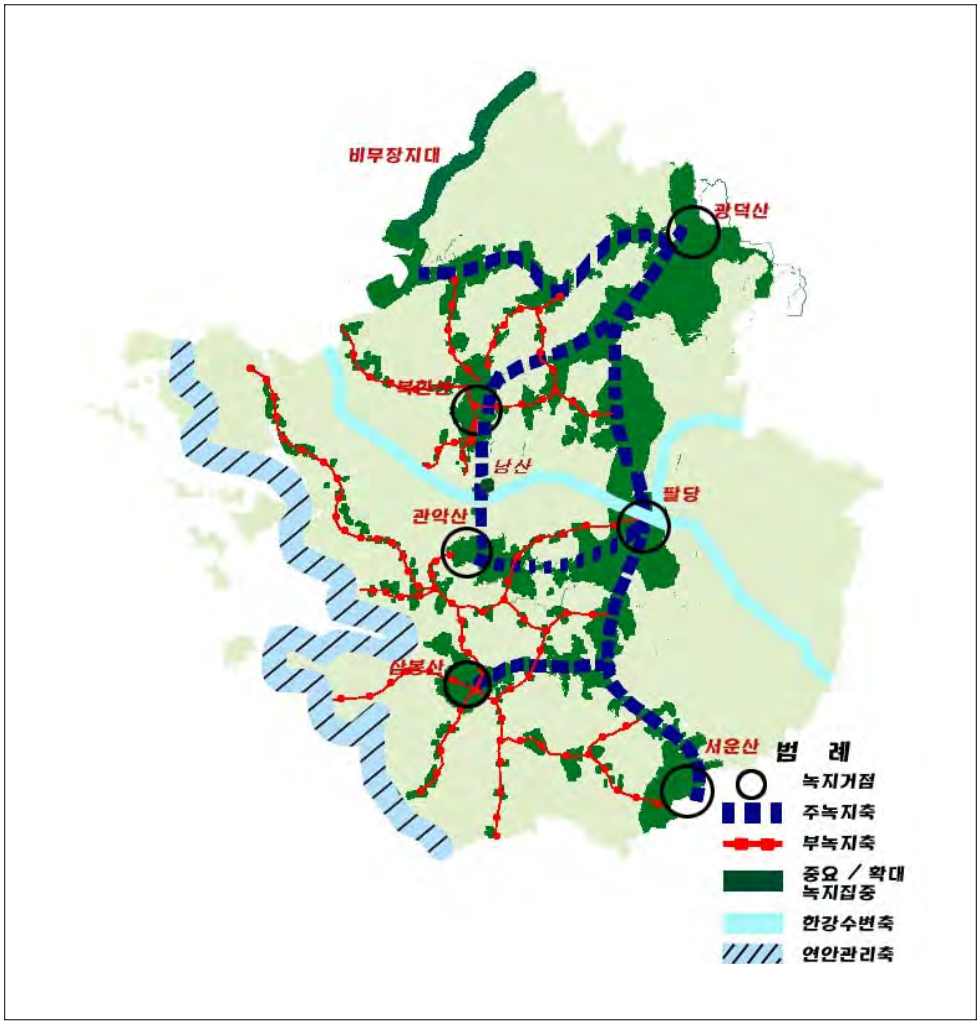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간선철도망

- 고속-간선철도
  - 경부고속철도, 서남선 철도, 인천국제공항철도, 중부내륙선, 기타 방사형 노선
- 광역철도망
  - 수도권 순환선, 신분당선, 신안산선
  - 인천(국제공항)-고양(경의선)-의정부(경원선) 연계
- 도시철도간 연계
  - 도시철도간 : 서울 7호선, 인천3호선 등
  - 도시철도와 간선철도 : 인천2,3호선, 인천국제공항선, 경인선, 수도권 순환선 연계



녹지관리

핵심과제	전 략
• 광역녹지축 성정과 녹지의 녹지의 연계성 강화 • 도시내 녹지창출과 광역녹지축과의 연계 • 도시녹지관리체계 구축	• 주녹지축과 도시내부 녹지를 연결하는 부녹지축의 설정 • 기존산림과 공원녹지의 연결 강화 • 도시내 녹지량 확충과 공원조성 확대 • 녹지기본계획 수립 및 녹지보전·확충을 위한 기준강화등



광역녹지축 설정(안)

환경보전

구분	핵심과제	전 략
대기질	• 대기질 관리의 광역화 및 체계화 • 지역별 특성에 맞는 대기관리체계 구축 • 이동오염원 관리대책 강화	• 광역적 대기관리체계의 구축 • 토지이용·교통계획이 연계된 대기관리대책 수립 • 지역대기환경기준의 설정 및 대기 자동측정망의 확충 • 자동차공해 관리대책의 강화
수질	• 유역단위별 수질개선종합대책 수립 • 하천환경관리 및 지역소하천 수질개선 • 연안수질관리 및 해양오염관리 개선	• 유역차원에서의 수질관리 시행 • 친환경적 하천관리의 강화 • 소하천의 기능 및 재활대책 강화 등
자연환경	• 자연생태계의 종합적 관리 • 핵심보전지역 설정 및 보전 • 단절·훼손된 생태계 복원 • 친자연적인 생활공간의 창출 및 도시개발	• 생태계보전을 위한 기초조사의 시행 •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생태계 보전을 위한 조사자료의 정보화 • 생태적으로 중요한 지역을 핵심보전지역으로 지정 • 녹지축 단절지역의 녹지보전 및 조성 • 단절·훼손된 생태계의 복원기술개발과 정비

방재

핵심과제	전 략
• 일상생활위주 종합적 방재대책 수립으로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 광역적 수방재체계의 구축	• 재해위험도에 따른 지역관리 및 광역적 방재정보전달체계 구축 • 주요 하천 및 지천의 광역적 관리를 위한 수방재지침 수립 • 방재를 고려한 토지이용지침의 수립 • 오픈스페이스 및 시설을 고려한 방재대책 마련 등

광역공급 및 이용시설

핵심과제	전 략
• 미래를 대비한 충분한 광역시설 확보 • 광역시설 설치 및 운영체계 효율화 • 광역시설 서비스 공급의 지역간 형평성 제고	• 용수공급시설 - 상수원의 확충 및 보호, 지역간 상수공급 격차 해소 • 하수종말처리장 - 지역특성을 고려한 광역적 하수처리체계의 구축 • 폐기물처리시설 - 협력적·보완적 폐기물처리체계 구축 • 운동장시설 - 기존운동장의 특화를 통한 지자체간 보완적 이용 • 물류시설 - 물류거점시설의 설치 및 체계적인 종합물류체계의 구축 • 정보통신시설 -광역적 지역정보센터의 설치 운영 등

개발제한구역 조정방안

개발제한구역 조정의 기본방향

- 집단취락, 환경평가결과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 국책사업·지역현안 사업지를 대상유형으로 추진한다. 특히 집단취락은 「집단취락 등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계획 변경 수립지침」에 의거하여 조정대상 집단취락을 선정하여 우선 해제한다.
  - 우선해제 집단취락은 자연녹지지역으로 우선 해제한다. 단, 도시기반시설이 충분히 설치된 취락에 한하여 전용주거지역 및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부여가 가능
  - 환경평가결과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은 광역도시계획을 통해 조정가능지역으로 설정된 후 구체적 개발계획이 수립되면 해제한다.(일반조정가능지역)
  - 국책사업·지역현안사업지는 해당 사업이 국가적·광역적 차원의 필요성, 지역균형발전에의 부합성, 도시발전에 대한 기여도등을 고려할 때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경우 조정가능지역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국가적으로 추진하는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과 시도지사가 추진하는 시급한 지역현안사업은 우선해제 가능

5. 2020 서울도시기본계획 수립의 접근방향

1) '2011 서울도시기본계획'에 대한 타당성 검토와 평가

(1) 타당성 검토

추구해야 할만한 가치를 담고 있으며,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규정되어 있으나 전략적 계획을 위한 목표로써는 지나치게 포괄적이다.

• 주요 문제점

- 기본방향 및 목표의 추상성 및 모호성
- 부문계획간의 연계 미흡
- 계획의 실현성, 유연성 부족
- 실행전략의 미흡
- 서울 광역대도시권 주변지역 여건의 고려와 계획의 연계 미흡
- 상위계획과의 정합성 미흡

※ 보다 구체적인 타당성 검토는 자료집에 수록되어 있음

(2) 평가와 계획방향의 재설정

• 2011 도시기본계획의 평가

- 계획인구의 증가를 전제한 구상
- 현안문제의 대응에 치중한 계획
- 정책목표의 사후 평가지표 부재
-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고려 미흡

• 계획방향의 재설정

2011년	2020년
급격한 인구성장에 따른 수요대응형 계획	질적인 성장관리를 이끌어가는 정책유도형 계획
소수 전문가에 의한 결과지향적인 계획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과정지향적인 계획
선언적인 정책목표 및 나열식 전략 제시	명확한 정책목표 제시 및 사후 평가지표 개발

2) 계획수립의 접근방향

• '2020 서울도시기본계획'은 1997년에 수립된 '2011 서울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수정·보완 계획이다. 계획수립과정과 내용에 있어 다음과 같이 차별화된 접근을 통해 기존 계획이 갖고 있는 실현성 부족 및 정합성 부재의 문제를 극복하고자 한다.

(1) 계획 성격의 재설정

2011년 계획

• **종합계획(comprehensive plan)의 수립**

- 도시기본계획의 성격상 물적 계획과 사회경제적 측면을 포괄하는 종합계획의 성격을 띠고 있다.
- 계획의 기조, 미래상, 목표설정의 내용을 중심으로 한 총괄계획과 각 부문계획으로 대별되는 형식으로 구성된다.

2020년 계획

• **전략계획(strategic plan)으로 전환**

- 종합계획으로써의 도시기본계획이 갖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전략계획의 성격을 보다 부각시키고자, 목표 및 주요 전략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한다. 이런 변화는 선진대도시의 장기계획 사례검토 결과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 이를 위해 2011년 계획에서는 혼재되어있던 목표체계를 '미래상-목표-과제-전략' 체계로 통합함으로써 전 부문간 계획의 정합성을 강화한다.
- 기존 건설교통부의수립지침에 따른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차후에 내부 실무용으로 새로운 양식의 '전략계획'을 검토한다.

선진 대도시 장기계획

• 사례도시 : 영국(London), 일본(Tokyo), 미국(LA), 캐나다(Toronto)
• '종합계획' 탈피 ➡ '전략계획' 수립
- 통합적 목표체계 구성
- 이슈를 중심으로 전 부문을 통합
  삶의 질 개선을 위한 5대 캠페인 (Toronto)
  지속가능한 세계도시 런던을 위한 도전 (London)
- 핵심전략과 공간개념과의 연계
  중점개발대상지역별 공간계획방향 제시 (London)
  지역별 차별화된 개발전략 제시 (Toronto)
- 계획의 모니터링을 위한 정책지표 제시 (Tokyo)

(2) 계획 접근방식의 수정

2011년 계획

• 전문가 중심의 결과지향적 접근방식 추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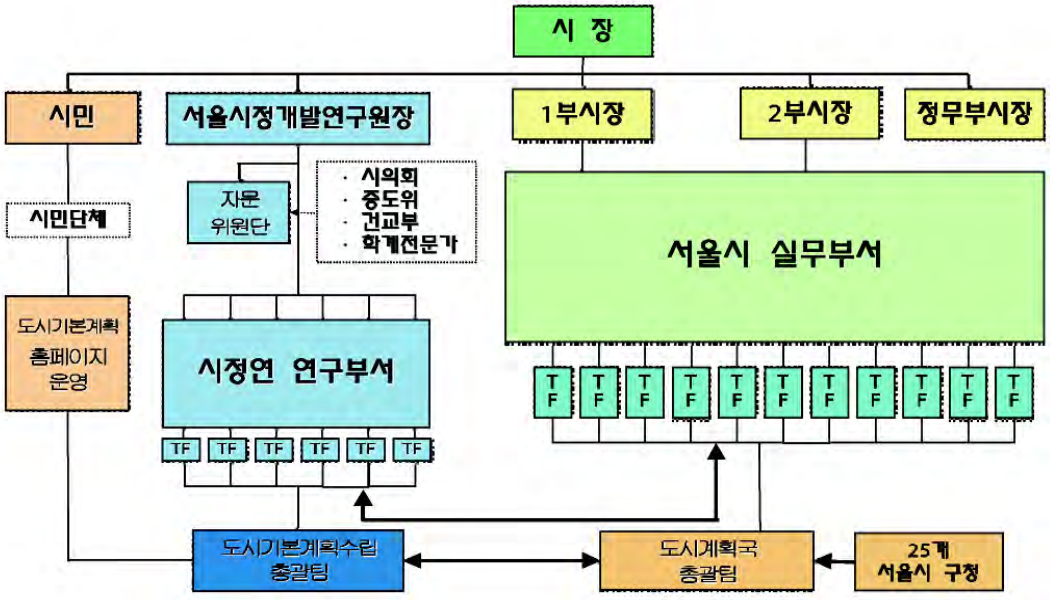
2020년 계획

• 참여적·과정지향적 접근방식 지향

- 계획수립과정에 보다 활발한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인터넷을 적극 활용한다.
- 연구진, 서울시, 전문가가 참여하는 토론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과정지향적 계획을 지향하며, 각계의 자문위원단을 구성하여 계획과정에 참여시킴으로써 계획의 질적 향상을 도모한다.

인터넷 홈페이지의 활용

- '도시기본계획 홈페이지(http://www.sdi.re.kr/seoul)' 개설
- 서울의 미래상 공모전 실시
- 서울의 현안문제에 관한 인터넷 설문조사 실시
- 자유게시판을 활용한 자유로운 의견개진 및 사례 실시
  ➡ 도시기본계획에 관한 '인터넷 커뮤니티' 형성



[그림 I-1] 추진체계도

(3) 미래상의 재정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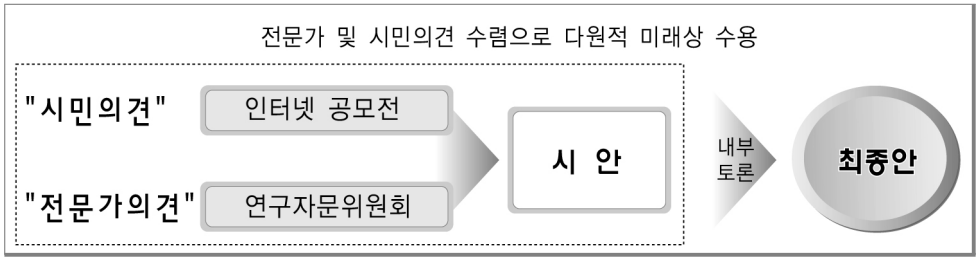
2011년 계획

연구진 내부 검토 작업을 통한 미래상 정립

▼

'인간중심의 살고 싶은 도시'

2020년 계획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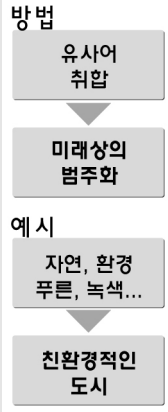
미래상 : '자연과 인간, 역사와 첨단이 어우러진 세계도시, 서울'

서울의 미래상 슬로건 공모전 분석

- 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30자 이내 슬로건 공모 (2001. 3.26-4.30)
- 접수현황 : 총 680여건
- 우수작

구 분	당선작
최 우 수	인간, 문화, 자연이 함께 숨쉬는 미래도시, 서울
우 수	푸른 서울, 맑은 서울, 정다운 서울
	살기 좋은, 살고 싶은, 살아있는 도시, 서울
	자연과 인간이 어울려 세계로 열린 첨단도시

- 미래상 슬로건 분석



미래상 이미지	전 체	
	건 수	비 율
친환경적인 도시	268	39.2
세계/국제적인 도시	225	32.9
인간적인 도시	189	27.7
꿈과 희망의 도시	137	20.1
첨단/정보화 도시	89	13.0
매력적인 도시	49	7.2
활력이 넘치는 도시	48	70

(4) 계획의 정책지표 제시

2011년 계획

• 계획이행의 모니터링 체계 미흡

2020년 계획

• 계획의 목표달성 및 모니터링 지표 제시

- 분야별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고 측정이 용이한 지표를 제시한다.

(5) 권역별 도시발전방향 제시

2011년 계획

• 자치구 도시기본계획을 반영한 생활권 계획 수립

• 문제점과 계획수립체계 변화

- 과거 자치구 도시기본계획은 자치구별 특성을 감안하지 않은 과다한 상업기능의 도입으로 무리한 용도지역 상향을 추진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 서울시 도시기본계획과는 별도로 자치구별 도시기본계획 수립시기를 정함에 따라 서울시 도시기본계획과의 정합성이 결여되는 문제를 안고 있었다.
- 따라서 과거 자치구 도시기본계획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양태의 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필요성이 부각되었다.
- 또한 서울시의 자치구 도시기본계획 승인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권역별 계획을 통한 자치구별 도시발전방향의 제시가 요구된다.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4조 2항

'시장은 관할구역에 관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되 이와 관련 구청장에게 관할구역에 관한 계획을 제출토록 하여 도시기본계획 수립의 참고자료로 삼도록 규정'

2020년 계획

• 25개 자치구 도시계획의 조정을 위해 5대 생활권역별 도시발전방향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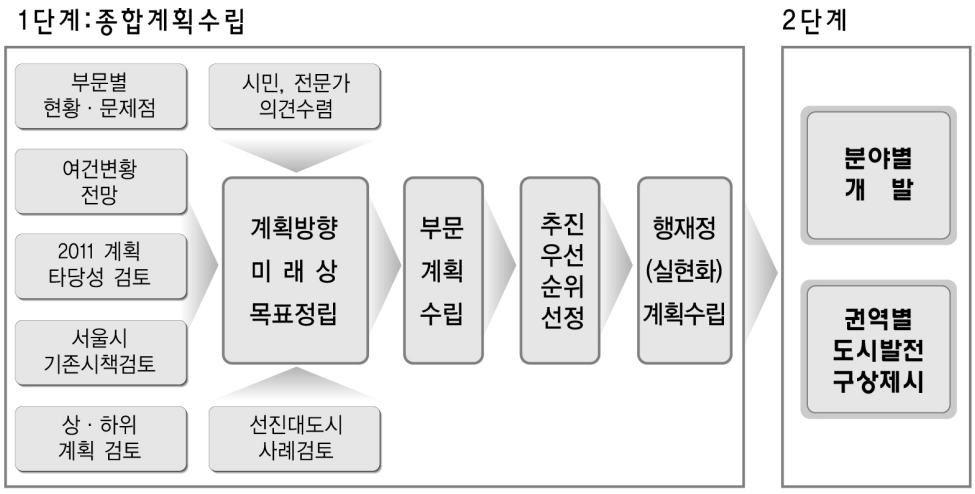
- 2020년 기본계획의 권역별 계획은 권역별 균형발전에 중점을 둔다.



[표 I-2] 2011 서울도시기본계획과 2020 서울도시기본계획과의 차별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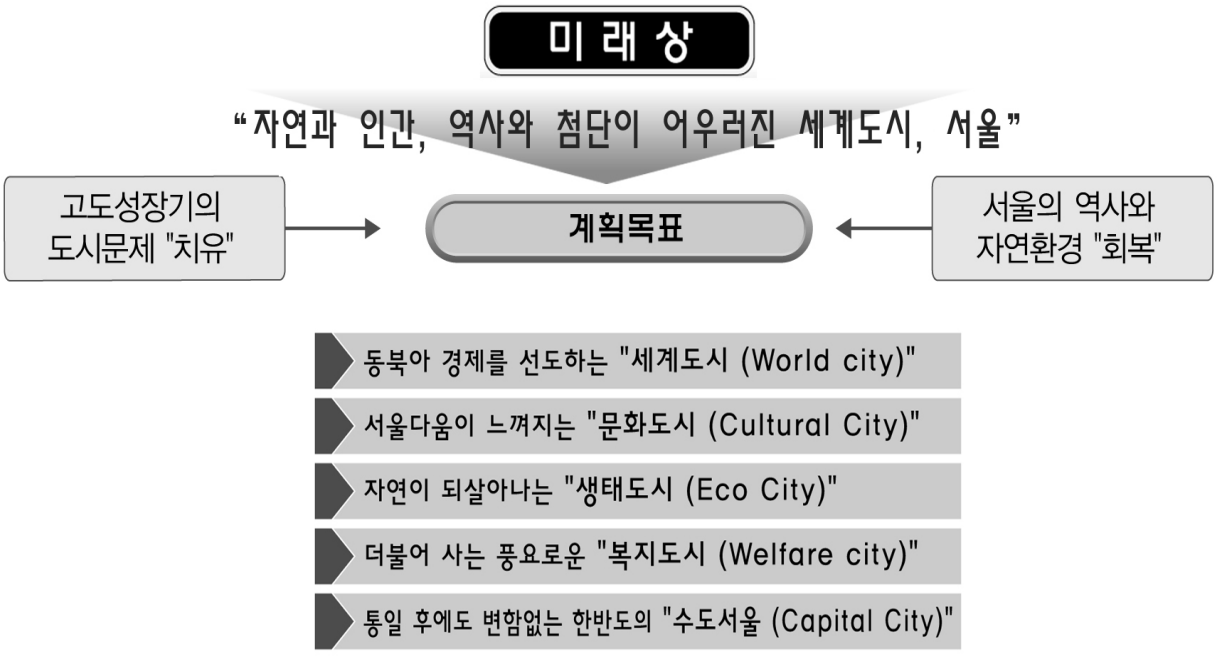
구 분	2011 서울도시기본계획	2020 서울도시기본계획
계획성격	종합계획 수립	전략계획으로 전환
계획 접근방식	결과지향적 접근	참여적·과정지향적 접근
미래상 정립방식	연구진 내부검토	전문가 및 시민의견 수렴
계획 모니터링 체계	정책지표 제시 미흡	정책지표 제시 강화
권역별 계획	자치구 도시기본계획을 반영한 생활권 계획 수립	자치구 도시계획 조정을 위한 도심 + 4대 생활권별 발전방향 제시

3) 과업 추진 흐름도



6. 2020 서울의 미래상과 주요 계획목표

1) 서울의 미래상과 계획목표



2) 4대 계획목표별 중점추진방향

계획목표	중점추진방향	
생태도시	• 공기가 맑은 도시 • 자연이 풍부한 도시	• 물이 깨끗한 도시 • 환경이 합리적으로 관리되는 도시
복지도시	•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도시 •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도시	• 시민복지가 향상된 도시 • 지역간 균형발전을 이룬 도시
문화도시	• 역사와 전통이 살아 숨쉬는 도시 • 지역별 고유문화를 간직한 도시	• 문화적 생활환경을 갖춘 도시
세계도시	• 기업 활동이 편리한 도시 • 경관이 수려한 도시 • 외국인도 살기 좋은 도시	• 교통이 편리한 도시 • 첨단정보도시 • 행정이 투명하게 열린 도시

7. 계획의 추진방향과 원칙

1) 추진방향

- **현안문제의 우선적 해결**
  - 생활의 질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한 시민생활 중시
  - 환경, 복지, 문화, 교통, 정보통신 분야에 우선 투자
  - 도시민의 안전을 위한 방재계획 강조
- **멀리 보면서 착실하게 미래를 준비**
  - 장기적인 도시골격 마련과 민간개발의 계획적 유도
  -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시설의 단계적 확충
  - 투명하게 열린 행정체계 구축
  - 세계일류의 국제적인 도시체계 구축

2) 추진원칙

- **도시기본계획을 체계적으로 추진한다.**
  - 1단계 : 중점 추진과제별·권역별 주요 집행계획 수립 및 추진
  - 2단계 : 도시기본계획의 지속적 추진과 이행 모니터링
- **시민참여를 통해 시민의 지지기반 위에서 추진한다.**
- **시민편의와 안전을 고려하여 도시개발의 일정을 합리화한다.**
- **중앙정부 및 인접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추진한다.**

II. 서울의 계획과제와 기본지표



1. 서울의 현황
2. 서울의 현상과 문제점
3. 서울의 강점 · 약점 · 위협 · 기회요인
4. 계획기조와 주요과제
5. 계획의 기본지표

1. 서울의 현황

1) 서울의 특성

(1) 도시연혁

• **행정구역의 연혁[1)]**

- 조선조 500년간의 수도 '한성부'에서 일제 '경성부'로 개칭되기까지, 서울의 행정구역 범위는 성곽내의 5부와 성저 10리를 포함한 지역으로 거의 변함이 없었다. 그러나 일제는 1910년 조선을 강점한 후 '경성부'를 경기도에 예속시킴으로써 서울의 지위를 격하시켰는데, 이 당시 경성부는 역사 이래 최소 면적인 36.18㎢를 관할하였고, 이는 이전 한성부 면적의 1/7 수준이었다.
- 해방후 경성부는 서울시로 개명되고 경기도로부터 독립하였으며, 주변 시역을 편입하여 시경계를 확장하였는데 1949년 당시 서울의 면적은 267.8㎢가 되었다.
- 전쟁의 혼란기를 극복하고 산업도시로 성장하던 서울은 1963년, 경기도 양주, 광주, 김포군 일부를 포함한 324.0㎢를 편입하는 대대적인 시역 확장을 진행시켰다. 이 당시 총면적은 593.75㎢였고, 영등포와 노량진을 제외한 대부분의 강남지역이 서울로 편입된 것이 바로 이 시기였다.
- 이후 계속되는 도시화로 유입되는 인구를 수용하기 위해 행정구역의 확장과 함께 신설이 빈번히 행해졌고 이는 인구의 공간적 분포에 급속한 변화를 동반하였다.
- 1973년 서울의 행정구역은 현재와 거의 같은 수준인 605㎢로 확장되었다. 이제까지 시역 확장과 인구증가와의 관계를 살펴볼 때, 대체로 시역은 인구밀도 100인/ha 수준에서 확장되어 왔으며, 계획 기준년도(2000년) 계획구역면적은 605.96㎢이다.

• **도시계획구역의 변천**

- 서울에서 최초로 근대적 의미의 도시계획이 수립된 것은 1930년이었다. 그러나 이 계획안은 성안이 되었어도 실제로 시행되지는 못했다.
- 근대적 의미의 진정한 도시계획은 1934년 조선시가지계획령의 제정과 함께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1936년에 수립된 경성시가지계획이 그것이다. 이 계획은

1)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서울 20세기 공간변천사, 2001, pp.29~97

1959년을 목표로 하여 당시의 경성부 전역과 주변지역을 포함한 총 108.8㎢를 계획구역으로 설정하였으며, 계획인구를 70만으로 설정하였다. 이후 서울은 1939년 상업, 공업, 주거, 미지정지역 등과 같은 용도지역을 지정하게 되었는데, 이때 형성된 공간구조의 기초가 현재까지도 도시구조 전반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 8·15 광복, 6.25 전쟁의 혼란기를 견뎌낸 서울은 1960년대부터 시작된 국가 성장의 중추적 역할을 하게 되면서, 급격한 인구집중을 경험하게 된다. 1963년 서울은 인구 300만을 넘어서게 되었고 도시계획구역도 713.24㎢로 대폭 확대되었다. 이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도시의 발전방향과 미래상을 제시하는 계획수립의 당위성을 확보해주는데, 이로써 서울의 도시기본계획 수립이 시작되었다. 서울의 성장을 현실적으로 수용하고 인구 500만이 거주하는 현대적 도시를 건설한다는 목표 아래 1966년 「서울도시기본계획」 이 수립 발표되었다. 이는 1985년을 목표년도로 하는 종합적 장기계획으로 이전의 지역지구제와 가로망 중심의 물적 계획에 비해 형식면에서 사회경제부문을 포함한 종합계획의 성격을 지녔으며 시민들에게 처음으로 공개되는 계획이었다.
- 그 후 수차례의 변경을 거쳐 1991년 부천시 일부와 과천시가 분리되면서 도시계획구역 면적이 665.98㎢에 이르게 되었다. 지방자치제의 실시 이후 1995년에 서울시 도시계획구역은 행정구역과 거의 일치하는 수준에서 변경되었으며, 계획기준년도(2000년) 계획구역면적은 605.96㎢이다.

(2) 자연적 특성

• 위치

- 한반도 서측 중앙부에 위치한 서울은 한강중류의 남북에 걸쳐져 있으며, 동경 126°59′, 북위 37°34′의 경위도를 갖는다.

• 지질

- 서울의 지질은 시생대의 암층인 편마암과 중생대 백악기에 관입된 화강암 및 제4기의 충적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뚝섬, 한남동, 남산, 서소문, 북아현동을 경계로 하여 서남방은 편마암이, 동북방은 화강암이 각각 분포하고 있으며, 도심부인 저부평지는 대부분 충적층이 지표를 덮고 있다.

• **자연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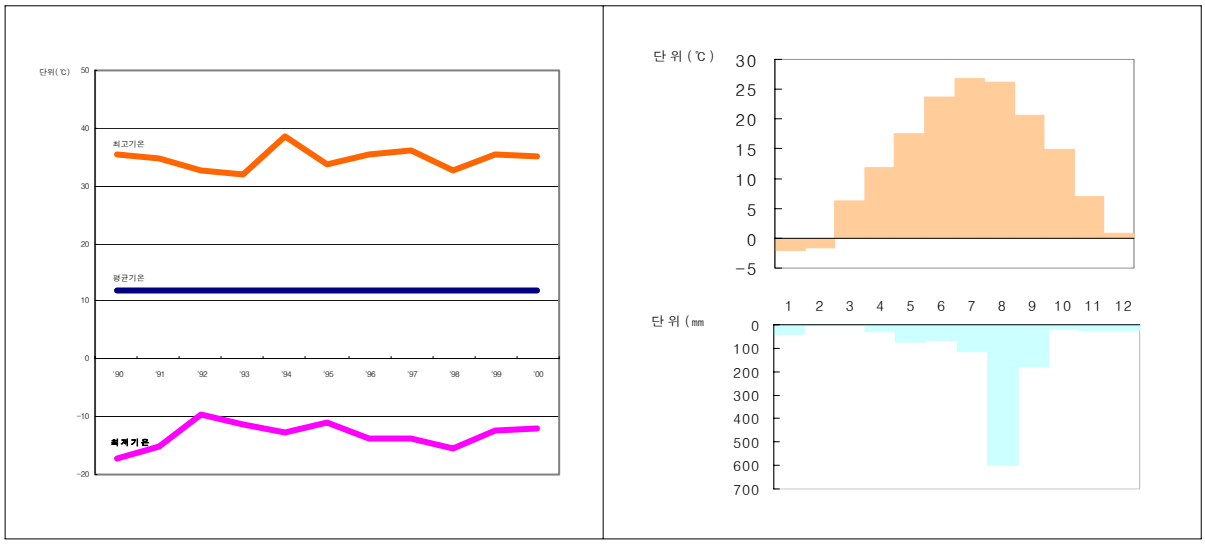
- 서울의 자연환경을 보면, 북방에는 태백산맥에서 서쪽으로 뻗친 북한산맥의 지맥인 북악과 그에 연한 인왕산이 위치하고 있다. 남쪽 멀리 위치하는 관악산은 북한산과 서로 대하고 그 중간에 남산이 있으며, 그 사이에는 대소의 많은 구릉과 산악이 산재하여 토지의 기복이 심하다. 그리고 동서로는 한강이 관통하여 녹지와 수계가 조화된 자연경관을 형성하고 있다.

- 한편 북악과 남산의 중앙은 분지가 형성되어 조선시대에는 이들 산의 능선을 따라 성곽이 축조되었고, 그 내부에 궁궐과 한성부의 주요 기능이 위치하였다. 이들 산지 사이를 한강의 지류인 중랑천, 청계천, 홍제천, 불광천, 탄천, 안양천, 양재천 등이 흘러 주요 수계를 형성하고 있다.

- 청계천을 중심으로 발달한 분지는 조선시대 이래로 서울의 중심지를 이루었고, 한강연안에는 하천 충적지가 형성되어 있고, 한강에는 뚝섬, 중지도, 잠실도, 여의도, 난지도 등의 하중도가 발달되었다. 그러나 그동안의 도시계획과정에서 이들 섬은 그 형상을 찾아 볼 수 없게 되었으며, 한강과 그 지류들의 일부를 인공적으로 심하게 변형되고 복개되어 도로로 이용되고 있다.

• **기후**

- 서울의 기후는 남부지방의 난대성 기후, 북부지방의 냉대성 기후의 중간적 성격을 나타내고 있다. 지형적인 영향을 강하게 받아 기온의 연교차가 큰 대륙성 기후를 보이며, 겨울의 기온은 같은 위도의 동해안보다 섭씨 2~3° 가 낮은 특색을 띤다.



자료 : 서울시, 서울통계연보, 2000

[그림 II-1] 기후개황도(평균기온 및 강수량)

- 서울의 연평균 강수량은 1,295mm이며 평균기온은 섭씨 11.6°이다. 그러나 지난 80년간의 연간 강수량을 보면 2,500mm 이상이 20회, 1,000mm 이하가 12회 정도를 나타내고 있어 불규칙한 편이다. 평균 기온의 기복은 심하지 않으나 최근에 다소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도시화과정을 거치면서 부분적 열섬현상이 계절에 따라 관찰되고 있다.

(3) 사회·경제적 특성

• 인구

- 서울은 우리나라의 수도로써, 행정·정치·경제의 중심지로써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경제적 여건을 기저로 하여, 과학, 기술, 정보, 문화 예술 등 전국에 대한 선도적 활동이 집중함으로써 제반 활동의 중추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 중추관리기능 및 생산자서비스업과 정보·지식산업이 집중된 도시이며, 제반 기능의 집중 결과, 이를 지원하는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이 성행하고 있다.
- 서울시의 정치·경제권은 국토단위를 벗어나 세계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국제화시대를 맞아 세계적 교류망을 확대하고 있다.
- 서울의 인구는 1970년부터 1990년까지 5,433천인에서 10,613천인으로 전국의 연평균 증가율에 비해 급격하게 증가함으로써 20년간 2배 가까이 성장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증가세가 둔화되기 시작했는데, 1992년 1,097만명을 정점으로 서울의 인구는 매년 감소하는 추세이다.
- 전국대비 서울시 인구비율은 1970년에 17.3%에서 1980년 22.3%, 1990년 24.5%로 완만히 증가하였으나, 1990년대 들어 계속 감소하여 2000년 현재 21.5% 수준이다.

[표 II-1] 서울시 인구증가 추이 (단위 : 천명)

구 분	1970	1980	1990	2000	증가율(%)		
					1980 / 1970	1990 / 1980	2000 / 1990
전국(A)	31,460	37,436	43,411	46,136	19.0	16.0	6.3
서울시(C)	5,433	8,364	10,613	9,895	53.9	26.9	-6.8
C/A(%)	17.27	22.34	24.45	21.45	-	-	-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년도

• 가구

- 핵가족화의 심화와 인구증가에 따라 가구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가구당 평균가구원수는 1980년 4.5인, 1990년 3.8인, 2000년 3.2인으로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표 II-2] 서울시 가구수 및 평균가구원수 추이

구 분	1980	1985	1990	1995	2000
가 구 수 (천호)	1,848	2,324	2,815	2,966	3,087
평균가구원수(인)	4.5	4.2	3.8	3.5	3.2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년도

• 인구구조

- 성별 인구구조를 살펴보면 1985년 이전에는 여자가 남자보다 약간 많았으나,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남자의 비율이 다소 높아지고 있다.

- 연령별 인구구조를 살펴보면 14세 이하의 아동인구가 1980년 31.2%에서 1990년 24.8%, 2000년 18.5%로 점점 감소한 반면, 15~64세의 경제활동인구는 1980년 66.3%, 1990년 71.8%, 2000년 76.1%로 증가했으며, 65세 이상의 노령인구도 1980년 2.5%에서 1990년 3.4%, 2000년 5.4%로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표 II-3] 성별·연령별 인구현황

구분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남녀 성비(%)		97.5	99.3	99.0	100.7	101.0	101.0
0 ~ 14세	인구(천명)	2,312	2,602	2,719	2,625	2,242	1,818
	구성비(%)	33.6	31.2	28.3	24.8	21.2	18.5
15 ~ 64세	인구(천명)	4,423	5,540	6,626	7,615	7,850	7,501
	구성비(%)	64.3	66.3	68.8	71.8	74.4	76.1
65세 이상	인구(천명)	145	208	280	363	459	535
	구성비(%)	2.1	2.5	2.9	3.4	4.4	5.4

주 : 남녀 성비는 여자 100에 대한 남자의 수
자료 : 경제기획원, 인구 및 주택센서스 보고, 1975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각년도

• 인구밀도

- 2000년 현재 서울시 인구밀도는 17,132인/㎢이다. 자치구별 인구밀도를 살펴보면 양천구, 동대문구, 동작구, 중랑구 등이 높고, 종로구, 용산구, 서초구, 강서구의 인구밀도가 낮은 편이다.

- 권역별로 보면 동북권의 밀도가 높으며, 상업 및 업무공간이 많아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도심권의 인구밀도가 가장 낮고, 동남권의 인구밀도도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4) 공간적 특성

• 외부공간

- 서울의 외곽지역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과도한 도시화에 따른 공간의 외연적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제도로 관리되어 왔다. 1971년 서울시 외곽에 총 152.8㎢의 면적에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고 도시개발을 제한할 목적으로 지정되었다.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은 이로 인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서울의 광역화가 진행되면서 수도권을 연결하는 전철망, 도로망 등 교통수단의 건설이 활발히 진행되고, 수도권 전체가 하나의 생활공간, 업무공간으로써 성장하게 되면서, 개발제한구역의 경계를 넘어선 주변 도시들이 서울의 위성도시로 성장하는 부정적인 현상을 경험하게 되었다.
- 이러한 서울주변 위성도시는 서울에 집중된 각종 기능에 대한 매력으로 이주하게 된 인구를 수용하기 위한 도시로 급격하게 성장함으로써 도시 자체는 기능에 있어 완결성이 결여된 주거도시(Bed Town)화되어 서울에로의 강한 종속성을 가지게 되었다. 이로 인해 서울의 과밀혼잡은 더욱 심화되었다.

• 내부공간

- 서울은 다핵형 공간구조를 지향하며, 전국토의 중추적 공간으로써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과밀에 따른 서울의 기능분산으로 수도권의 광역화기 빠르게 진전되고 있다. 하지만 광역대중교통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아 자동차 통행량 증가로 인한 혼잡과 대기오염 악화 등 외부불경제가 심각한 실정이다.
- 수도권 광역대도시권의 생활권역에 부응하면서 상호간의 활동을 연계시킬 수 있는 서울시 내부에 4개의 자족적 생활권을 구상하였으나, 생활권별 직주불균형의 문제로 여전히 장거리 교차통근이 발생하여 교통혼잡과 대기오염이 심각한 수준에 있다.
- 또한 기반시설이 잘 정비된 동남권은 양질의 업무상업공간이 지속적으로 확충되어 급속히 발전한 반면, 전통적 기성시가지인 동북생활권과 서북생활권은 개발여건 및 기반시설 확보에 제약이 많아 지역경제간 상대적으로 침체됨으로써 강남북간 지역격차가 심화되고 있으며 이는 서울의 심각한 도시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는 광역화되는 대도시권을 하나의 도시복합체로써 보고, 광역적 차원의 공간구조 구상을 통해 진정한 의미의 다핵화를 유도하고 있다.

(5) 도시세력권

• 행정권

- 2000년 현재 서울시 행정구역은 25개 자치구로 구성되어 있으며, 도시계획구역은 1982년 708.387㎢로 확대된 바 있으나 고양시, 남양주군, 구리시, 과천시 등이 분리되면서 행정구역과 도시계획구역이 거의 일치하는 수준으로 현재에 이르고 있다.
- 계획구역과 행정구역의 일치를 위한 재조정은 일관성 있는 계획 수립과 보다 효과적인 집행을 위해 이루어진 것이지만, 인접시와의 경계 미조정으로 광명시 일부(0.38㎢)가 포함되어 도시계획 관할구역이 행정구역과 약간의 차이가 있다.

• 사회·문화권

- 서울은 우리나라 행정의 수도로써 뿐만 아니라 경제·사회· 문화 등 제반 기능들이 집중된 중심지로써 선도적 도시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 서울은 특히 국내 유수의 종합대학을 비롯하여 각종 교육기관이 입지하여 미래의 잠재된 우수 인적 자원을 육성하는 교육의 장으로써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그 영향은 전국에 미치고 있다.
- 의료·보건부문은 시설, 인력, 기술적 측면에서 전국적 규모와 영향권을 가지고 있다.
- 신문, 라디오, TV 등을 비롯한 매스커뮤니케이션 부문 또한 본사기능이 서울에 집중되어 있고, 이러한 정보를 전국적으로 서비스함으로써 그 영향이 전국에 미치고 있다.
- 국제적인 문화·예술시설, 사회복지시설, 체육시설 등에 많으며 이러한 시설을 통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사회, 종교, 문화활동 및 행사를 주관하는 각종 단체의 국내본부 및 외국단체의 한국지부가 대부분 서울에 입지하고 있어, 명실상부한 국내 사회·문화 중심지로써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경제권

- 서울은 행정상 수도로써 가지는 이점과 특성 때문에 정치·경제활동의 의사결정기관 및 중추관리기능이 집중되어 있다. 국내 대부분의 기업본사가 입지하고 있어 전국 경제의 중심지로 전국에 걸쳐 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지속적인 경제발전의 결과 아시아는 물론 전세계에까지 그 영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 서울의 경제활동이 미치는 영향의 강도에 따라 직접세력권과 간접세력권으로 구분해보면 다음과 같다.
  - 직접 세력권은 일차적으로 서울시 행정구역내, 이차적으로는 수도권 지역
  - 간접 세력권은 일차적으로 직접세력권을 제외한 전국, 이차적으로는 동북아를 위시한 전세계를 근간으로 한 국제사회
- 현재 서울에 입지하고 있는 각종 외국상사, 국제금융기관, 외국공관, 국제경제단체들은 서울의 국제적 비지니스 환경조성에 기여하고 있다. 세계화·국제화의 흐름에 발맞춰 서울은 아시아의 경제중심지, 나아가서는 세계의 경제중심지로써의 자리매김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표 II-4] 경제권의 개념적 구분

직·간접 / 1, 2차	직접세력권	간접세력권
1차 영향권	서울시내	직접세력권을 제외한 전국
2차 영향권	수도권전역	동북아를 위주로 한 전세계

(5) 수도권 및 서울의 집중도

• 전국에서 차지하는 수도권의 집중도

(단위 : %)

구 분	서울/전국 비율				
	'90	'95	2000	'90 ~ '95변화	'95 ~ 2000변화
인구	42.8	45.2	46.3	2.6	1.1
총사업체종사자수	51.8	53.5	48.9	1.7	-4.6
지역내총생산	46.2	45.7	47.2	-0.5	1.53%
전화가입자수	46.8	47.9	48.1	1.2	0.1
자동차수	52.7	54.5	46.2	1.8	-8.3
사업체수*	57.5	57.1	44.8	-0.4	-12.3
금융기관수*	53.7	54.1	56.0	0.4	1.9
금융기관예금*	65.5	64.8	68.1	-0.8	3.3
금융기관대출*	62.9	59.4	65.3	-3.5	5.9
대학교*	45.2	42.0	41.0	-3.2	-1.0
대학교 학생수*	40.9	40.9	39.2	-0.1	-1.6
공무원수*	31.2	33.5	39.0	2.4	5.5

• 전국에서 차지하는 서울의 집중도

(단위 : %)

구 분	수도권/전국 비율				
	'90	'95	2000	'90 ~ '95변화	'95~2000변화
인구	24.5	23.0	21.6	-1.4	-1.4
총사업체종사자수	30.7	31.2	26.3	0.5	-5.0
지역내총생산	25.3	23.7	21.7	-1.7	-2.0
전화가입자수	29.6	27.5	26.1	-2.1	-1.4
자동차수	35.2	27.6	20.2	-7.6	-7.4
사업체수*	39.2	35.7	23.9	-3.5	-11.8
금융기관수*	40.7	36.3	37.1	-4.4	0.8
금융기관예금*	53.4	49.3	51.9	-4.0	2.5
금융기관대출*	52.1	44.9	47.6	-7.3	2.7
대학교*	29.6	26.8	24.2	-2.9	-2.5
대학교 학생수*	27.0	26.2	25.4	-0.9	-0.8
공무원수*	17.7	18.0	19.0	0.3	1.0

주 : 1. 지역내 총생산은 경상가격기준임
2. '90 ~ '95변화 및 '95 ~ 2000변화는 전국대비 수도권 및 서울 비율의 변화임.
3. '90 공무원수 자료는 '91년 자료임
4. 2000 전화가입지수 자료는 '99 자료임

자료 : 각년도 서울, 인천, 경기 통계연보 (* : 지역통계연보)

2. 서울의 현상과 문제점

1) 고도성장기에 누적된 도시문제

• 서울의 광역화에 다른 교통혼잡, 환경오염과 공간의 불균형적 성장

- 서울주변지역의 무분별한 개발행위와 지역간 통행량 증가는 교통혼잡, 환경오염은 물론 공간구조의 왜곡과 지역불균형을 가중시킨다. 대부분의 발전 및 입지 선택이 경인축·경수축을 따라 이루어짐으로써 수도권 내부 자체에서도 공간적 불균형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다.
- 실질적인 기능의 분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인구이동에 주로 기인한 공간의 외연적 확산의 결과는 서울과 주변도시간의 심각한 교통난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 출퇴근, 등하교, 업무 등을 위한 서울로의 교통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며, '대중교통활성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자가용 사용은 증가하고 있다.
- 이로 인해 교통정체와 혼잡은 가중되어 대기오염과 같은 또 다른 도시문제를 일으키고,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고 있다.

•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도시환경 훼손

- 지난 30년간의 급격한 인구증가에 따른 도시개발 수요로 인해 서울시의 농경지와 산림지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되어 왔고, 자연 생태계의 파괴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 시가지 개발은 이미 포화상태에 이르렀고 무분별한 개발을 구릉지나 한강변 등 자연환경을 해치며 무절제한 성절토와 옹벽으로 인해 도시형 재해를 발생시키기도 한다. 하지만 도시환경을 해치는 개발행위에 대한 관리나 규제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여 왔다.

• 심각한 환경오염

- 아황산가스나 먼지 등 환경오염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나 오존은 증가하고 있다.
- 가정 및 빌딩의 냉난방 에너지가 열 방출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하여 도시 열섬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 팔당댐 상류지역의 하수처리가 미흡하여 축산폐수 등의 유입으로 인한 상수원 오염이 문제시되고 있다.

2) 서울 고유의 정체성 부족

• **서울 고유의 이미지 형성 미흡**

- 이제까지 급속한 인구증가에 따른 성장중심 및 개발수요에 급급하게 대응한 결과, 서울문화의 전통성과 독창성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려는 노력이 상대적으로 등한시 되어왔다.
- 아직까지 서울만의 독자적인 이미지가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으며, 서울내에서도 지역별로 독특한 개성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을 찾기 힘든 게 사실이다. 지금까지 서울에서 대표적인 시민축제라고 불릴 수 있을 만큼 지역성이 뚜렷한 문화행사를 정례적으로 개최해온 전통이 없었던 점은 이를 반영해주는 결과라고 하겠다.

• **시민의 삶과 일체화된 문화의 부재**

- 서울 시민들의 문화향유에 대한 욕구는 강한 편이나, 그것이 능동적인 문화행위 형태인 그룹문화 혹은 동아리 문화의 발달로 확대되지 못한 채, 단순한 관람차원의 수동적인 문화행위 수준에 머물고 있다.
- 기존의 행정 또한 다분히 장식적이고 전시적인 효과를 위한 것들이어서 시민들의 삶과 일체화가 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시민들의 일상적인 삶과 직결되고, 집 근처에서 친밀감을 느끼면서 이용할 수 있는 문화 여가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차량소통 위주의 도시개발로 인해 도시의 매력을 발산하는 거리문화, 광장문화의 형성이 미흡하다.
- 또한 정부정책들이 주로 전통문화를 보전하는 것에 치중하고 있어 새롭게 창조되고 재해석되는 문화의 영역은 상대적으로 열외되어 있다.

3) 시민을 위한 도시정책 미흡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미흡**

- 기존의 서울시 교통정책이 차량소통 위주로 진행되어 온 결과, 서울은 자동차 위주의 도시로 변모하였다. 그 결과 어린이나 노인들, 장애인 등의 사회적 약자와 대중교통수단을 주로 이용하는 서민들에게 있어 서울은 생활하기 불편한 도시로 인식되었다.
- 주택정책의 방향이 저소득층의 거주환경개선에 두어졌다기보다는 주택의 양적 공급확대에 두어져 왔기 때문에 사회복지차원의 주택시책은 미미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 복지관련 시설의 공급은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서울의 인구규모와 국제도시로써의 위상을 고려해볼 때 아직은 부족한 상황이며, 시설입지측면에서 서비스가 특정지역에 편중된 경향이 있다.
- 사회적 약자, 특히 고령화에 대비하여 노인에 대한 공공의 지원서비스가 미흡하며, 가족지원체계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 시민참여에 의한 투명한 행정 구현 미흡

- 시민참여, 공개행정을 실행하기 위한 노력으로 상당부문 개선되었으나, 아직까지 우리의 공직문화는 규제, 감독, 지시 위주의 행정문화에 익숙해 있어 시민을 위한 지원, 대민 봉사행정 부문에 있어 개선의 여지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 서울시는 온오프라인을 통해 각종 행정정보의 공개를 실천하고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지속적인 의견수렴과 이를 행정에 효과적으로 반영시킬 수 있는 체제의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 시민참여의 대표적인 수단인 공청회의 경우 참여기회가 자유롭지 않아 형식적으로 운영된다는 문제가 있는데, 시민이 보다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 개발의 노력이 요구된다.
- 시정에 대한 홍보와 여론수렴이 부서별로 분리됨으로 인해 발생하는 일체화 미흡의 문제 해결을 위해 부서간 연계 혹은 통합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4) 변화에 대한 대응부족으로 도시경쟁력 미흡

• 동북아 중심도시로써의 경쟁력 미흡

- 급격한 인구증가에 따른 대처에 급급한 나머지 양적 개발우선논리로 인해 세계화시대가 요구하는 양질의 도시서비스 제공을 위한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특히 국제적 수준의 금융제도, 세제, 행정서비스 및 인적자원의 공급능력이 미흡한 수준이다.

•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처하지 못하는 산업정책

- 서울의 산업정책은 국제화, 정보화, 산업의 첨단기술화 및 소프트화, 국제 무역환경의 변화, 동북아 경제협력 등 국외 환경 변화와 지방자치제의 본격적 실시, 생활패턴 및 가치관의 변화, 통일여건의 성숙 등 국내 사회여건의 변화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 아직 서울의 인력과 기술력은 세계 선진도시와 경쟁할만한 수준에 도달했다고 할 수 없으며, 산업부문에 있어서 독창적인 영역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서울의 정체성과 잠재력을 담아낼 수 있는 산업의 개발 및 창출이 세계도시란 무

한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과제이다.

- **광역화로 인한 문제 대응의 미흡**
  - 수도권의 광역화로 인해 서울과 주변 도시들간에 공동으로 해결해야할 문제들이 다수 발생하고 있으나 아직 단편적인 문제대응으로 공동의 문제해결이 지지부진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 특히 비선호시설의 입지 등 광역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의 심각성과 비중이 날로 커져감에도 불구하고, 주체간의 대립 심화로 신속한 처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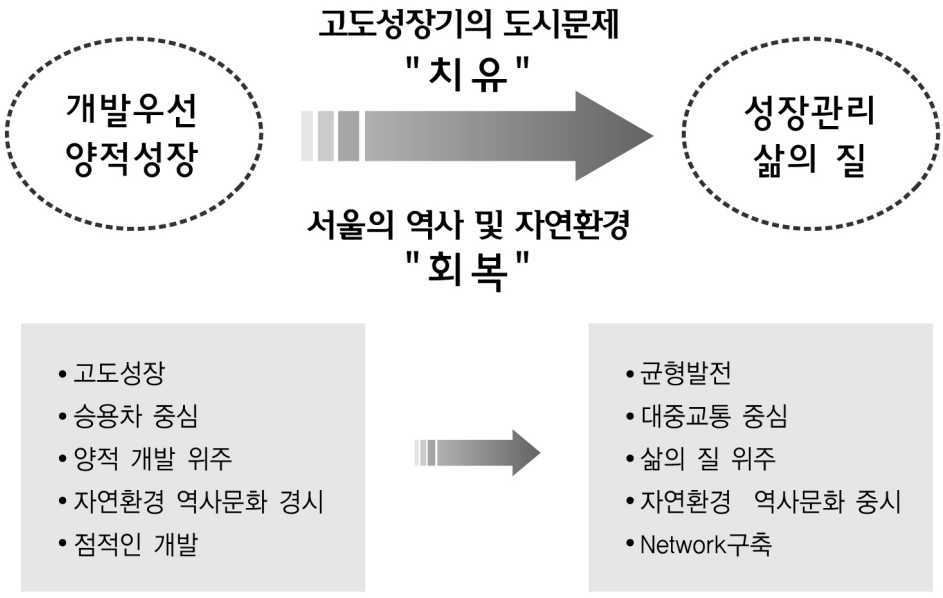
3. 서울의 강점 · 약점 · 위협 · 기회요인

강점(Strength)	기회요인(Opportunity)
· 정도 600년의 고도 · 수려한 자연환경 · 중추관리기능 집적 · 고급인력 및 기술의 집적	· 동북아 경제권의 가시화 · 동북아의 전략적 관문에 위치 · 정보화 및 지식기반 사회도래 · 시민참여의식 증대
약점(Weakness)	**위협요인(Threat)**
· 국제 경쟁력 미흡 · 서울 고유의 정체성 미흡 · 지역간 불균형 개발 · 신규 개발 가용지 고갈	· 서울주변지역의 과도한 개발 · 지역간/계층간 격차심화 · 통일로 인한 급격한 인구유입 · 행정중추기능 및 공공기관이전

- 지역특성상 서울의 강점으로 정도 600년의 고도, 수려한 자연환경, 중추관리기능 집적, 고급인력 및 기술의 집적 등을 들 수 있는 반면, 약점으로는 국제 경쟁력 미흡, 서울 고유의 정체성 미흡, 지역간 불균형 개발, 개발 가용지 고갈 등을 들 수 있다.
- 동북아 경제권의 급격한 부상, 동북아의 전략적 관문에 위치, 환경인식 변화, 시민참여의식 증대 등은 서울이 발전할 수 있는 기회요인으로 볼 수 있는 반면, 서울주변지역의 과도한 개발과 집중, 수도권내 지자체간 경쟁심화, 지역간/계층간 격차심화, 행정중추기능 및 대규모 공공기관 지방이전, 통일로 인한 급격한 인구유입의 가능성 등은 서울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는 위협요인이 될 수 있다.

4. 계획기조와 주요 계획과제

1) 계획의 기조



2) 주요 계획과제

환경(생태)도시

목표 1. 공기가 맑은 도시

대기오염 배출 저감

- 서울하늘 감성지수 개발 및 공개
- 대기오염 실시간 정보 제공 및 정보공개 확대
-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생활방식(자동차, 건축, 생활기기 등)의 정착화 유도
- 도로변 환경부하를 고려한 교통·환경관리정책의 수립

대기정화

- 도시 열섬 완화를 위한 녹지 확충 및 녹지네트워크 조성
- 원활한 공기순환 확보를 위한 지구단위계획의 추진
- 도시 미기후 보호 및 쾌적기후구역 조성·관리

목표 2. 물이 깨끗한 도시

먹는 물 수질 향상

- 수돗물 수질기준 강화
- 상수원의 수질관리 강화

하수처리 개선

- 하수도의 지속적 정비 및 재구축
- 하수관리시스템 정보체계 구축
- 오염물질 발생원 관리 강화

하천관리 강화와 풍부한 수자원 확보

- 하천수원 보전·회복사업 촉진
- 지하수, 오폐수 처리수의 수자원 활용체계 구축
- 수돗물 절약·저소비 생활로의 전환

목표 3. 자연이 풍부한 도시

자연생태계 보전기반 구축

- 생태축 설정 및 재생
- 도시녹화
- 자연환경 보전활동의 지원
- 생물서식지 및 주요 생물종 보호
- 공원녹지 생물다양성 증진

친환경적 도시관리체계 구축과 환경보전 의식 강화

- 친환경적 토지이용 및 관리체계 구축
- 복개하천의 복원(청계천 등)과 주변 환경친화적 정비
- 교통·환경 통합관리 대상지구의 지정 및 관리
- 생태계보전에 대한 시민과의 공조체계 구축
- 시민 환경교육 시행

목표 4. 환경이 합리적으로 관리되는 도시

저소비형 에너지 관리 강화

- 에너지 관리 등 관련 조례 제정
- 에너지 절약 인증제도 실시
- 폐기물 무배출사회 조성을 위한 관리 강화
- 자원 재활용 관리체계 구축
- 자원절약, 저소비의식 강화

합리적·통합적 환경관리체계 구축

- 환경, 도시계획, 교통부문간 통합적 환경정책 수립 및 집행
- 시민, 기업, 행정의 파트너쉽 강화
- 환경관련 정보체계 구축 및 공개
- 수도권 광역환경행정체계 구축 및 시행
- 생태예산제도 도입

복지도시

목표 1.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도시

기초생계보장 강화

- 직업훈련, 실업대책 등 자활지원사업 활성화
- 동등한 사회참여 기회 제공

보건·복지 서비스 강화

- 노인·장애인 요양시설 확충 및 전문화
- 공공의료기관의 의료사각지대 지원
- 예방적 차원의 시민건강 증진사업 실시

최저주거권 보장

-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 서민 주거비부담 완화(임차자 주거 안정)
- 최저기준 미달가구 해소

약자에 대한 지원체계 강화

- 도시내 barrier-free 환경 조성
- 사회적 취약계층(청소년, 여성, 노숙자, 외국인 근로자 등) 보호기능 강화

목표 2. 시민복지가 향상된 도시

시민참여에 의한 지역사회 공동체 활성화

- 동사무소를 중심으로 한 주민자치 기능 강화
- 의사결정에 주민참여 공식화를 위한 제도 정비
- 지역별 주민참여 학습, 사업, 문화활동 프로그램 확대
- 지역사회 협의체 구축
- 생활권 단위의 서비스 시설 확대

평생학습사회 구축

- 평생학습 기반시설 정비
-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 평생학습 참여 활성화를 위한 지원 강화

풍요로운 시민 여가문화생활 구현

- 지구별 공동체 문화 보호·육성
- 시민 여가문화 활동 지원 및 시설 확충

시민복지 행정의 강화

- 적극적인 민·관 협조체계 구축
- 서비스 전문인력 양성

목표 3.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도시

재난없는 사회 구현

- 방재사각지역 해소대책 확보
- 수해에 강한 수방관리체계 확립(침수피해 저감대책 마련)
- 건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지침 및 정기점검 의무화
- 시민의 방재의식 함양 및 방재능력 고도화

방재행정 역량 강화

- 효율적 시스템 관리체계 구축
- 재해약자의 안전보장 강화(노인, 장애인, 소년소녀 가장)
- 통계분석, 예측상황 판단 등 과학적 방재 지식기반 구축

목표 4. 지역간 균형발전을 이룬 도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건전한 재정 기반 구축

- 자치구간 재정격차 완화
- 자치구 재정조정제도의 정비(재정 확충을 위한 다각적인 세원 발굴)
- 대학을 거점으로 한 강북지역 산업공동체 결성 지원(강남북 불균형 시정)
- 권역별 산업경제체제 육성(기존 산업공간의 재구조화, 전통시장 기능 강화)

지역간 사회기반시설이 균형을 이룬 도시

- 강남북 균형발전을 추구하는 개발계획 및 교통체계 구축
- 도시기반시설의 균형 배분 및 취약지역에 대한 공급 강화
- 지역간 정보화 격차 해소

문화도시

목표 1. 역사와 전통이 살아 숨쉬는 도시

역사문화의 보존·복원

- 전통 문화유산의 보수·유지 강화
- 전통 문화예술활동(무형문화재)의 발굴과 지원
- 전통문화자원의 보전 및 관광자원화

역사 및 전통문화재 관리 강화

- 역사문화 미관지구 관리 강화
- 문화지구 지정 및 관리 강화

목표 2. 지역별 고유 문화를 간직한 도시

개성있는 지역문화 발굴 및 활성화

- 지역별 문화적 특성 발굴 강화
- 지역단위의 공연·전시 예술 프로그램 확충
- 유적지 및 문화지역을 연결한 문화네트워크 조성

시민참여형 지역문화축제 정착

- 지역고유의 상징축제 개발을 위한 지원 강화
- 거리 문화공간 및 지구별 문화환경 조성
- 지역별·관심영역별 문화네트워크 및 공동체 육성 지원

목표 3. 문화적 생활환경을 갖춘 도시

생활문화 기반시설의 확충

- 생활권별 문화복지시설 정비 및 확충
- 문화·체육시설의 시설복합화 및 집적화

다양한 여가문화 프로그램 개발 및 내실화

- 체육 및 건강 프로그램의 활성화
- 생활문화 프로그램의 다양화
- 문화축제 및 행사, 이벤트 지원

관광문화가 발달된 도시 조성

- 장소 마케팅 차원의 관광자원 개발 및 프로그램 강화
  (서울형 문화산업의 육성, 문화산업단지의 조성 및 지원 강화)
- 관광홍보 및 안내체계 구축
- 외국인 방문객에게 편리한 관광환경 조성
- 문화관광산업에 대한 지원 강화

세계도시

목표 1. 기업활동이 편리한 도시

서울의 이미지 제고

- 원활한 기업활동을 지원하는 행정체계 구축
- 국제적 컨벤션 산업의 체계적 육성
- 서울의 산업경제 환경에 대한 해외 홍보 강화

다국적 기업유치 강화

- 국제적 수준의 산업활동을 위한 물리적 기반 구축
- 전략적인 국제업무 중심지 육성
- 외국인 투자의 안정성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목표 2. 교통이 편리한 도시

편리하고 안전한 대중교통체계 구축

- 안전하고 접근이 편리한 대중교통과 보행자중심의 공간으로 정비
- 고도의 교통정보 전달체계 구축 및 활성화

교통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 대중교통 서비스의 질적 고급화 지속적 추진
- 보행환경을 고려한 도시교통체계 구축
- 교통시설의 친환경적 정비

도로교통시설의 효율성 제고

- 첨단도로관리 정보시스템 구축
- 병목구간 해소와 고도의 신호시스템 구축·운영
- 차고지 증명제 도입과 정착

교통과 토지이용간의 정합성 확보

- 개발수요는 대중교통 결절점에 입지 유도
- 공간구조 개편을 통한 직주근접화 실현

목표 3. 경관이 수려한 도시

매력적인 시가지 경관 조성

- 서울의 독창적 이미지를 위한 랜드마크 개발
- 가로 및 건축물 경관미관수준 향상을 위한 관리체계 구축
- 문화재, 근대역사 건축물 경관관리 강화
- 서울의 특징적 야간경관 창출을 위한 관리체계 구축

도시 자연경관 훼손 방지

- 한강변 경관차폐 억제와 단조로운 경관 개선
- 주요 산 주변의 경관특성 보전
- 구릉지 주거지역의 고층화 억제
- 자연경관지구 지정 및 관리 강화

주거환경 정비 강화

- 기존 주거환경과 조화로운 주택 개발
- 커뮤니티 회복을 위한 동네 주거환경 개선
- 주민참여형 마을 만들기 사업의 활성화

목표 4. 첨단정보도시

시민을 위한 정보서비스 기반 구축

- 정보인프라 구축 및 정보교육 확대를 통한 지속적인 정보화기반 마련
- 자료 및 정보시스템 관리체계 확립
- 정보개방에 따른 정보정책 마련(개인정보 보호조례 제정 등)

첨단정보도시의 전략적 육성

- 상암 DMC의 정보혁신 중심지 조성
- 기존 정보산업 집적지역과 신규조성지역간 적절한 역할분담 및 네트워크 구축
- 기존 신산업 집적지역의 정보연계망 구축
- 도심, 상암, 마곡, 뚝섬 등의 도시형 산업거점지역에 첨단정보화 정비 촉진

전자정부 구현

-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통합지식관리시스템 구축
- 인터넷 및 자동처리시스템을 이용한 행정서비스 확대
- 서울시 내·외부 시스템 연계·통합 및 데이터 공유환경 구현

목표 5. 외국인도 살기 좋은 도시

외국인과 함께 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

- 외국인 근로자 권익보호체계 정비
- 외국인과 함께 하는 문화축제 지원

거주 외국인 생활지원서비스 체계 강화

- 외국인을 위한 주택, 교육, 보건, 문화 등 각종 사회복지서비스 지원
- 외국인을 위한 교통 안내체계 및 여행환경 개선

목표 6. 행정이 투명하게 열린 도시

선진화된 행정 실현

- 시정개혁제도의 지속적 추진
  (성과지향적, 창의적 행정문화 확산, 반부패 행정체계 구축)
- 조직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지원 확대
- 중앙-서울시-지자체간 협력적 관계 조성
- 국제적 지식교류를 위해 해외 도시들과 국제적 교류 증진 확대·강화
- 해외 주요 자치단체 및 기관을 연결하는 국제적 정보네트워크 구축
-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체계 구축

시민참여 활성화

- 다각적인 시민참여 창구 개설을 통한 시민참여 증대
- 시 및 자치구와 NGO간 협력네트워킹 강화

5. 계획의 기본지표

1) 인구

(1) 서울시

• 과거추이

- 서울시의 인구는 1970년 543만명에서 계속 증가하다가 1992년 1,093만명을 정점으로 조금씩 감소하다가 1997년에 1,039만명, 2000년 1,037만명으로 거의 정체되어 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서울시 상주인구인 인구주택총조사상 인구의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0년에 990만명으로 1000만이하로 감소하였다.
- 전국대비 서울시 인구비율은 1970년에 17%에서 1990년에 24%로 증가하다가 이후 감소하여 2000년에는 22%로 감소하고 있다.
- 전국대비 수도권의 인구는 1970년에 28%에서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1990년에 43%, 2000년에는 46%로 수도권으로의 인구집중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
- 수도권 대비 서울시의 인구는 1970년에 62%에서 조금 증가하다가 1980년 이후 감소하여 1990년에는 57%, 2000년에는 47%로 계속 감소하고 있다.

[표 II-5] 인구 추이 (단위 : 명)

구 분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전국(A)	31,460,000	34,706,620	37,436,315	40,448,486	43,410,899	45,981,910	47,976,730
수도권(B)	8,733,542	10,928,358	13,298,241	15,820,156	18,586,128	21,204,447	22,215,568
서울시(C)	5,433,198	6,889,502	8,364,379	9,639,110	10,612,577	10,595,943	10,373,234
C/A(%)	17.27	19.85	22.34	23.83	24.45	23.04	21.62
C/B(%)	62.21	63.04	62.90	60.93	57.10	49.97	46.69
B/A(%)	27.76	31.49	35.34	39.01	42.74	46.11	46.30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1970-1990
서울시, 주민등록인구통계, 1995, 2000

서울의 인구

서울시 인구는 인구주택총조사 인구와 주민등록통계상의 인구의 차이가 1995년에는 365천명, 2000년에는 478천명의 차이가 있다. 주민등록통계상의 인구는 주민등록표에 등록되어 있는 내국인과 외국인 등록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며 주민등록 말소자는 제외된다. 인구주택총조사상의 인구는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한국인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며, 해외취업자, 유학생 및 외국외교관, 수행원, 공무로 체류중인 외국인, 국제연합소속 직원 가족 그리고 국내주둔 외국군인 및 가족은 제외된다. 이에 따라 인구주택총조사상의 인구는 주민등록상의 인구보다 과소 집계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구 분	1995	2000
주민등록통계 인구	10,595,943	10,373,234
인구주택총조사 인구	10,231,217	9,895,217
차 이	364,726	478,017주)

주 : 2020 서울도시기본계획에서는 인구주택총조사를 기초로 시도별 장래인구추계를 이용하였으며, 2000년 인구주택총조사에 의한 인구 추계치와 주민등록상의 인구 차이는 약 30만명임.

• **장래전망**

- 서울시의 인구추계는 생잔모형에 의한 조성법으로 산정하였다.
- 2000년 인구주택총조사를 기초로 시도별 장래인구추계(통계청, 2002. 5)의 인구변동요인분석에 의한 서울시 연령별 출산율, 성 연령별 생잔율, 성 연령별 순이동율에 의거 추계한 결과, 서울시 인구 전망치는 2005년 9,983천명, 2010년 9,869천명, 2015년 9,723천명, 2020년 9,508천명으로 추정되었다.
- 2000년 인구주택총조사에 의한 인구 추계치(10,078천명)와 2000년 서울시 주민등록상의 인구(10,373천명)와의 차이는 약 30만명이다. 따라서 이를 서울시 주민등록상의 인구전망치로 산정한 결과, 서울시 주민등록상의 인구전망치는 2005년 10,216천명, 2010년 10,038천명, 2015년 9,914천명, 2020년 9,798천명으로 추정되었다.
- 위의 인구추정치가 서울시의 가용 토지이용상 수용가능한 지를 검토한 결과, 서울시의 수용가능한 인구로써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서울시 인구는 2000년 현재 전국인구의 21.6%를 차지하고 있으나, 2020년에는 전국인구의 19.4%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II-6] 장래인구 추계결과 (단위 : 천명, %)

구 분	2005	2010	2015	2020
전국(A)	48,460.6	49,594.5	50,352.3	50,650.3
서울시(C)	10,216.2	10,037.5	9,913.6	9,798.4
C/A(%)	21.08	20.24	19.69	19.35

주 : 주민등록 인구통계상의 인구를 사용하여 추계한 결과임.

(2) 자치구

• 과거추이

- 1995년 25개구로 분구된 이후 서울시 인구대비 자치구별 인구비율은 1.3%(중구) ~ 6.4%(송파구)사이에 있으며, 최근 6년간 자치구별 인구비율의 변화가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다.
- 특히 자치구별 인구 중에서 도심(종로구와 중구)의 인구는 1980년에 54만명(6.4%)에서 2000년에는 33만명(3.2%)으로 20여만명이 감소하여 도심인구는 많은 감소가 있었으나 최근 들어 중구의 인구가 조금 증가하였다.

• 계획년도별 자치구별 인구

- 계획연도별 자치구별 인구는 계획연도별 서울시 추정인구 하에서 계획연도 및 자치구별 개발이용가능용적률 및 1인당 주거면적 추계치를 적용한 토지수용용량을 고려한 방법으로 추정하였다.
- 이용가능 용적률은 대지 중 토지이용상 주거이용자의 용도지역상 용도 및 법정용적률의 과거의 개발추이를 고려한 용적률이며, 주거용도 및 1인당 주거면적은 1인당 주거면적의 과거 추이를 이용하여 추정한 면적이다.
- 각 자치구별 인구는 종로구, 중구, 용산구, 동대문구, 성북구, 강북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반대로 성동구, 광진구, 중랑구, 도봉구, 양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등의 자치구 인구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 특히 용산구와 종로구의 증가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구로구 및 영등포구의 경우 감소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표 II-7] 자치구별 인구 및 인구비율

(단위 : 명, %)

구 분	1980		1985		1990		1995		2000	
	인구	비율	인구	비율	인구	비율	인구	비율	인구	비율
서 울 시	8,364,379	100.00	9,639,110	100.00	10,612,577	100.00	10,595,943	100.00	10,373,234	100.00
종 로 구	292,483	3.50	265,897	2.76	243,331	2.29	204,733	1.93	188,946	1.82
중 구	242,584	2.90	209,658	2.18	188,118	1.77	145,646	1.37	144,074	1.39
용 산 구	333,525	3.99	326,076	3.38	303,022	2.86	260,993	2.46	248,794	2.40
성 동 구	687,707	8.22	751,418	7.80	799,039	7.53	342,648	3.23	342,508	3.30
광 진 구	-	-					391,148	3.69	393,055	3.79
동대문구	848,081	10.14	942,617	9.78	503,394	4.74	420,069	3.96	382,122	3.68
중 랑 구	-	-			448,390	4.23	454,951	4.29	459,255	4.43
성 북 구	588,759	7.04	583,791	6.06	551,540	5.20	497,614	4.70	463,488	4.47
강 북 구	-	-					395,078	3.73	352,772	3.40
도 봉 구	753,302	9.01	846,972	8.79	671,795	6.33	374,271	3.53	371,932	3.59
노 원 구	-	-			480,004	4.52	599,462	5.66	634,068	6.11
은 평 구	382,891	4.58	441,939	4.58	469,891	4.43	503,272	4.75	470,747	4.54
서대문구	419,541	5.02	404,582	4.20	387,089	3.65	371,449	3.51	373,105	3.60
마 포 구	432,814	5.17	441,810	4.58	435,630	4.10	400,409	3.78	390,101	3.76
양 천 구	-	-			490,500	4.62	487,130	4.60	488,282	4.71
강 서 구	501,182	5.99	674,270	7.00	391,139	3.69	523,606	4.94	522,962	5.04
구 로 구	568,737	6.80	683,968	7.10	748,072	7.05	383,224	3.62	404,786	3.90
금 천 구	-	-					284,609	2.69	268,768	2.59
영등포구	431,992	5.16	446,600	4.63	470,109	4.43	417,914	3.94	409,399	3.95
동 작 구	392,916	4.70	405,979	4.21	403,724	3.80	436,684	4.12	417,396	4.02
관 악 구	501,624	6.00	556,156	5.77	574,255	5.41	558,462	5.27	525,926	5.07
서 초 구	-	-			395,699	3.73	407,887	3.85	401,858	3.87
강 남 구	474,880	5.68	771,205	8.00	491,062	4.63	559,032	5.28	555,493	5.36
송 파 구	-	-			634,338	5.98	669,042	6.31	665,644	6.42
강 동 구	511,361	6.11	886,172	9.19	532,436	5.02	506,610	4.78	497,753	4.80

자료 : 서울시, 주민등록인구통계, 각년도

[표 II-8] 계획년도별 자치구인구

(단위 : 천명, %)

구 분	2005	2010	2015	2020	인구증가율 (2020/2000)	연평균증가율 (2000-2020)
서 울 시	10,216.2	10,037.5	9,913.6	9,798.4	-5.54	-0.28
종 로 구	196.4	206.5	217.4	228.5	20.95	0.96
중 구	145.4	146.1	148.2	150.4	4.36	0.21
용 산 구	263.8	281.4	300.9	320.7	28.89	1.28
성 동 구	330.5	315.1	302.0	289.1	-15.58	-0.84
광 진 구	379.4	363.7	349.7	336.1	-14.49	-0.78
동대문구	390.5	399.8	411.9	424.3	11.05	0.53
중 랑 구	441.2	422.6	404.9	387.5	-15.63	-0.85
성 북 구	467.2	476.0	485.6	495.6	6.93	0.34
강 북 구	361.1	371.4	383.8	396.5	12.40	0.59
도 봉 구	357.7	339.6	323.8	308.3	-17.12	-0.93
노 원 구	609.1	571.7	541.0	510.8	-19.44	-1.08
은 평 구	482.1	496.6	513.6	531.1	12.82	0.60
서대문구	375.2	378.5	383.7	389.3	4.35	0.21
마 포 구	393.0	400.1	408.1	416.4	6.74	0.33
양 천 구	481.1	473.0	467.4	462.2	-5.34	-0.27
강 서 구	521.3	518.7	519.4	520.5	-0.46	-0.02
구 로 구	385.7	356.5	332.3	308.4	-23.81	-1.35
금 천 구	256.1	243.0	230.3	217.8	-18.97	-1.05
영등포구	389.6	364.6	342.0	319.8	-21.88	-1.23
동 작 구	415.7	417.6	420.1	422.9	1.33	0.07
관 악 구	513.7	496.5	483.2	470.3	-10.57	-0.56
서 초 구	390.6	378.4	367.9	357.6	-11.01	-0.58
강 남 구	537.7	520.8	505.7	491.0	-11.61	-0.62
송 파 구	643.8	619.6	597.9	576.8	-13.35	-0.71
강 동 구	488.4	479.9	472.9	466.4	-6.30	-0.32

주 : 계획년도별 인구는 주민등록통계상의 인구를 이용하여 추계함.

2) 인구구조

(1) 성별 구조

• **과거추이/지표**

- 성별인구추이는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사용하였다. 서울시의 성별인구비는 1990년 이전에는 여성의 비가 약간의 우위를 보이다가 1990년 이후에는 1.01로 남자의 비율이 높아졌다.
- 통계청 장래인구 추계자료(2002)에 따르면 2010년 이후 서울 인구의 성비는 거의 1.00으로 성비의 균형을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표 II-9] 성별 인구추이 (단위 : 천명)

구 분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남 자	2,864	3,493	4,274	4,876	5,272	5,212	5,075
여 자	2,821	3,511	4,241	4,848	5,200	5,129	5,002
성 비	1.01	0.99	1.00	1.00	1.01	1.01	1.01

주 : 성비=남자/여자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자료(2002.5), 각년도

[표 II-10] 장래 성별 인구지표 (단위 : 천명)

구 분	2005	2010	2015	2020
남 자	5,133.6	5,040.7	4,932.1	4,874.8
여 자	5,082.6	4,996.8	4,981.5	4,923.6
성 비	1.01	1.00	0.99	0.99

주 : 계획년도별 성비는 통계청(2002. 5)의 장래인구추계 자료를 이용하였음.

(2) 연령별 인구구조

• **과거추이/지표**

- 서울시 연령별 인구추이의 특징은 14세 이하 인구의 감소와 65세 노령인구의 증가를 들 수 있다.
- 14세 이하 인구는 1980년 31.2%, 2000년에 18.6%에서 2020년에는 13.9%로 감소한 반면, 65세 이상 노령인구는 1980년 2.49%, 2000년에 5.42%, 그리고 2010년에는 9.29%, 2020년에는 15.11%로 증가할 전망이다.

[표 II-11] 서울시 인구의 연령별 인구추이 (단위 : 천명)

구 분	0-14세		15-64세		65세이상	
	인구	비율	인구	비율	인구	비율
1980	2,602	31.16	5,540	66.35	208	2.49
1985	2,719	28.25	6,626	68.84	280	2.91
1990	2,625	24.76	7,615	71.82	363	3.42
1995	2,242	21.25	7,850	74.40	459	4.35
2000	1,916	18.58	7,837	76.00	559	5.42

자료 : 서울시, 주민등록인구통계, 각년도

[표 II-12] 장래 연령별 인구지표 (단위 : 천명)

구 분	0-14세		15-64세		65세이상		계
	인구	비율	인구	비율	인구	비율	
2005	1,755	17.59	7,521	75.34	706	7.07	9982
2010	1,615	16.36	7,336	74.35	917	9.29	9868
2015	1,568	15.81	7,159	72.22	1,187	11.97	9723
2020	1,363	13.91	6,955	70.98	1,481	15.11	9508

주 : 계획년도별 연령별 비율은 통계청(2002. 5)의 장래인구추계 자료를 이용하였음.

(3) 가구원 구성

• **과거추이/지표**

- 가구당 가구원수는 전국평균과 거의 비슷하게 감소하고 있으며, 1980년에 4.4명에서 1990년에 3.7명, 2000년에 3.1명으로 감소하였다.
- 제4차 국토종합계획(1999년)에서는 평균가구원수를 1인가구의 증가, 핵가족화 등으로 인한 가구원수의 지속적인 감소를 감안하여 2010년에 2.80명, 2020년에 2.64명으로 추계하였다.
- 2020년 수도권광역도시계획(안)에서도 전국과 수도권(서울)의 평균가구원수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으므로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서 설정한 2020년의 가구원수 2.64인을 수용하였는데, 이는 동경도의 1985년의 세대당 인구와 비슷한 수준이다.

[표 II-13] 서울시의 가구수·가구규모 추이 및 계획지표 (단위: 천명, 천가구, 인/가구)

구 분	인구수	가 구 수	평균가구원 수
1980	8,074	1,837	4.40
1985	9,352	2,324	4.02
1990	10,384	2,815	3.69
1995	9,992	2,966	3.37
2000	9,632	3,086	3.12
2005	10,216	3,499	2.92
2010	10,038	3,585	2.80
2015	9,914	3,672	2.70
2020	9,798	3,712	2.64

주 : 1980～2000 평균 가구원수는 인구주택총조사상 가구원수와 가구수를 이용하여 산출. 2000년 이후 평균가구원수는 제4차 국토종합계획을 수용. 평균가구원수와 인구(인구주택총조사, 주민등록인구, 예측인구)를 이용하여 가구수 재작성.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년도.

(4) 가구원수별 가구수

• 가구원수별 가구비율 추이

- 주민등록인구통계상에서는 가구원수별 가구수가 없기 때문에 가구원수별 가구수의 자료는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사용하였다.
- 서울시의 가구원수별 가구비율의 특징은 1인가구 비율의 증가와 5인 이상 가구의 감소로 볼 수 있으며, 특히 1인가구의 비율은 1980년 4.5%에서 2000년에는 16.3%로 4배정도 증가하였다.
- 그리고 4인 이하의 가구비율은 증가하는 반면 5인 이상의 가구비율은 점점 감소하고 있다.

[표 II-14] 서울시 가구원수별 가구수 (단위: 가구, %)

일반 가구	가 구 수					비 율				
	1980	1985	1990	1995	2000	1980	1985	1990	1995	2000
1인	82,477	156,207	257,382	382,024	502,245	4.49%	6.72%	9.14%	12.88%	16.28%
2인	191,684	265,524	330,684	426,210	524,663	10.44%	11.42%	11.75%	14.37%	17.00%
3인	280,905	387,722	537,364	615,127	670,538	15.29%	16.68%	19.09%	20.74%	21.73%
4인	432,906	657,230	914,443	996,854	989,621	23.57%	28.28%	32.49%	33.61%	32.07%
5인	394,901	473,481	563,096	403,136	312,946	21.50%	20.37%	20.00%	13.59%	10.14%
6인	245,933	258,977	138,172	102,344	63,668	13.39%	11.14%	4.91%	3.45%	2.06%
7인이상	208,097	125,078	73,704	40,099	22,255	11.33%	5.38%	2.62%	1.35%	0.72%
합계	1,836,903	2,324,219	2,814,845	2,965,794	3,085,936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년도

• 가구원수별 가구비율 추계

- 서울시 가구원수별 가구비율은 2000년의 가구원수별 가구수 현황을 기반으로 장래 서울시 가구수 추계와 가구원수별 가구수 추계를 이용하여 RAS기법으로 추정하였다.
- 서울시의 단독가구 비율은 2010년에 19%, 2020년에는 23%정도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미국의 1990년(24.6%), 일본의 1995년(25.6%)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은 수치이다.
- 미국과 일본의 단독가구 비율이 각각 24.6%와 25.6%일 때 가구원수는 각각 2.63명과 2.85명으로 나타났으며, 서울시 2020년 계획지표인 세대당 인구가 2.64인임을 감안하면 서울시의 단독가구비율 예측치는 대략 22%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 서울시 가구원수가 4인 이상의 가구의 비율은 1995년 이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6인 이상의 가구는 2020년 1%미만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II-15] 서울시 가구원수별 가구수/비율 추계 (단위 : 가구, %)

일반 가구	가 구 수					비 율 (%)				
	2000	2005	2010	2015	2020	2000	2005	2010	2015	2020
1인	502,245	620,654	692,322	765,381	836,805	16.28	17.74	19.31	20.85	22.55
2인	524,663	647,915	716,087	785,907	855,567	17.00	18.52	19.98	21.40	23.05
3인	670,538	763,798	772,634	774,793	756,791	21.73	21.83	21.55	21.10	20.39
4인	989,621	1,104,833	1,095,886	1,081,398	1,038,634	32.07	31.58	30.57	29.45	27.98
5인	312,946	296,644	258,643	226,857	195,639	10.14	8.48	7.21	6.18	5.27
6인이상	85,923	64,871	49,249	37,367	28,080	2.78	1.85	1.37	1.02	0.76
합계	3,085,936	3,498,715	3,584,821	3,671,704	3,711,515	100	100	100	100	100

주 :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계획년도별 추계가구를 이용하여 RAS(비례조정법) 기법으로 서울시 장래 가구원수별 가구 추정
자료 : 통계청, 추계가구, 각년도

(5) 경제활동인구(15세 이상) 구조

• 과거추이/지표

、 경제활동인구 추이

- 서울시의 경제활동인구는 1990년 460만명에서 1995년 500만명, 그리고 2000년에는 478만명으로 IMF 이후 경제활동인구가 줄어들었다.
- 경제활동참가율은 전국의 추세와 비슷하나 조금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1990년 60%에서 계속 증가하다가 IMF이후 다시 1990년 수준으로 하락하다가 2000년에는 61%로 조금 상승하였다.
- 실업률은 전국에 비해 조금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0년의 실업률은 전국이 4.10%, 서울이 4.80%로 나타났다.
- 서울시의 취업자수자는 1990년 440만명, 1995년에 488만으로 늘었다가 IMF이후 감소하여 2000년에는 456만명으로 나타났다.

[표 II-16] 서울시 경제활동인구 및 경제활동 참가율 (단위 : 천명, %)

구 분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전 국	15세이상인구	30,887	31,535	32,020	32,526	33,046	33,659	34,274	34,851	35,347	35,757	36,186
	경제활동인구	18,539	19,109	19,499	19,806	20,353	20,845	21,288	21,782	21,428	21,666	22,069
	취업자수	18,085	18,649	19,009	19,234	19,848	20,414	20,853	21,214	19,938	20,291	21,156
	비경제활동인구	12,348	12,426	12,521	12,720	12,693	12,814	12,986	13,070	13,919	14,092	14,118
	경제활동참가율	60.02	60.60	60.90	60.89	61.59	61.93	62.11	62.50	60.62	60.59	60.99
	실업률	2.45	2.41	2.51	2.88	2.48	2.06	2.04	2.61	6.95	6.34	4.14
서울시	15세이상인구	7,641	7,728	7,772	7,813	7,852	7,899	7,923	7,924	7,912	7,872	7,828
	경제활동인구	4,607	4,726	4,728	4,827	4,934	5,009	5,020	5,043	4,815	4,793	4,787
	취업자수	4,424	4,568	4,574	4,661	4,799	4,880	4,898	4,907	4,452	4,463	4,559
	비경제활동인구	3,034	3,002	3,044	2,986	2,918	2,890	2,903	2,881	3,097	3,079	3,040
	경제활동참가율	60.29	61.15	60.83	61.78	62.84	63.41	63.36	63.64	60.86	60.89	61.15
	실업률	4.00	3.40	3.30	3.40	2.80	2.60	2.40	2.70	7.60	6.90	4.80

자료 : 통계청 홈페이지(http://kosis.nso.go.kr/cgi-bin/sws_999.cgi)

• 경제활동인구 및 취업자수 추계

- 서울시 경제활동참가율 추계는 1990～2000년의 전국 경제활동참가율을 이용한 관계를 회귀식을 통하여 고성장 및 저성장으로 구분하여 계산하였다.
- 서울시 경제활동참가율은 2010년에 64%, 2020년에는 66%로 증가하며, 경제활동인구는 1997년 이후 감소하다가 경제활동참가율의 증가와 고령화로 인해 2010년에 약 500만명, 2020년에는 약 520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취업률은 최근 10년간 전국의 취업률과 서울시의 취업률과의 관계식을 이용하여 향후 서울시의 취업률 예측치를 적용하였다.
- 취업자수는 2005년에는 463～465만명, 2010년에는 477～480만명, 2015년에는 482～486만명 그리고 2020년에는 491～495만명으로 추계되었다.

[표 II-17] 경제활동인구 및 취업자수 추계 (단위 : 천명, %)

구 분		2005	2010	2015	2020
15세이상		7,837	7,862	7,798	7,798
경제활동인구	고성장	4,916	5,043	5,100	5,198
	저성장	4,931	5,066	5,100	5,174
경제활동 참가율	고성장	62.72	64.14	65.40	66.66
	저성장	62.92	64.44	65.40	66.36
취업자수	고성장	4,648	4,796	4,858	4,951
	저성장	4,632	4,765	4,819	4,912
취업률	고성장	59.30	61.00	62.30	63.50
	저상장	59.10	60.60	61.80	63.00
실업률	고성장	5.45	4.90	4.74	4.74
	저성장	6.07	5.96	5.50	5.06

(6) 산업별 취업인구구조

• 과거추이/지표

- 서울시의 산업별 취업자수 비율을 보면 1990년에는 제조업(30%)이 가장 높으나, 1995년에는 도소매, 음식, 숙박업(29%)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후에는 제조업의 취업자수의 비중은 눈에 띄게 줄어든 반면 도소매, 음식, 숙박업과 사회 및 개인서비스 업종의 비중은 크게 늘어났다.

[표 II-18] 전국 및 서울시 산업별 취업자수 (단위 : 명, %)

취 업 자	1990		1995		1990		1995	
	전국	서울시	전국	서울시	전국	서울시	전국	서울시
합 계	15,750,691	3,689,810	17,988,286	4,037,210	100.00	100.00	100.00	100.00
농림수산업	3,280,453	18,024	2,855,033	15,785	20.83	0.49	15.87	0.39
광업	62,342	2,270	36,002	2,854	0.40	0.06	0.20	0.07
제조업	4,320,605	1,095,132	4,278,732	962,613	27.43	29.68	23.79	23.84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59,992	14,197	82,301	18,174	0.38	0.38	0.46	0.45
건설업	1,119,049	344,787	1,538,150	404,968	7.10	9.34	8.55	10.03
도소매, 음식, 숙박업	3,036,552	1,022,578	4,116,466	1,171,672	19.28	27.71	22.88	29.02
운수, 창고 및 통신업	816,850	220,707	956,513	242,274	5.19	5.98	5.32	6.00
금융, 보험, 부동산업	594,239	244,605	837,496	281,352	3.77	6.63	4.66	6.97
공공행정 및 국방	500,163	119,279	687,141	143,813	3.18	3.23	3.82	3.56
사회 및 개인서비스	1,883,099	599,850	2,600,442	793,705	11.96	16.26	14.46	19.66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년도

• 산업별 취업자수 추계

- 서울시 산업별 취업자수 비율은 과거 전국 대비 서울시 산업별 취업자수 비율을 적용하여 각 계획년도별 산업별 취업자수 비율을 적용하고, KDI(한국개발연구원)의 고성장 및 저성장 시나리오를 이용하여 계획년도별 서울시 산업별 취업자수 비율을 추계하였다.
- 2020년 서울시 산업별 종사자수 비율의 특징은 도소매, 음식, 숙박업 및 제조업의 감소와 금융, 보험, 부동산업 및 사회, 개인서비스업의 증가를 들 수 있다.

[표 II-19] 전국 산업별 취업자수 비율 추계 (단위 : %)

구 분	고성장					저성장				
	2000	2005	2010	2015	2020	2000	2005	2010	2015	2020
농림수산업	9.7	8.4	7.1	6.2	5.2	9.7	8.4	7.0	6.2	5.3
광업	0.2	0.2	0.1	0.1	0.1	0.2	0.2	0.1	0.1	0.1
제조업	20.4	20.6	20.8	20.9	21.0	20.4	20.1	19.7	19.3	18.9
전기, 가스, 수도	0.6	0.7	0.8	0.8	0.8	0.6	0.7	0.8	0.8	0.8
건설업	7.8	8.0	8.2	8.0	7.7	7.8	8.4	8.9	8.7	8.5
도소매, 음식, 숙박	26.8	25.2	23.5	23.1	22.6	26.8	25.7	24.5	24.2	23.8
운수, 보관, 통신	6.0	6.4	6.8	6.7	6.5	6.0	6.4	6.7	6.8	6.8
금융, 보험, 부동산	8.8	9.5	10.1	10.8	11.5	8.8	9.4	10.0	10.7	11.3
공공행정, 국방	3.0	3.1	3.1	3.1	3.0	3.0	3.1	3.2	3.2	3.2
사회, 개인서비스	16.8	18.2	19.5	20.6	21.7	16.8	18.1	19.3	20.3	21.2

자료 : 한국개발연구원, 산업구조변화에 따른 중장기 인력수급전망, 2000. 4

[표 II-20] 서울시 산업별 취업자수 비율 추계

(단위 :%)

구 분	고 성 장					저 성 장				
	2000	2005	2010	2015	2020	2000	2005	2010	2015	2020
농림수산업	0.20	0.17	0.14	0.12	0.10	0.20	0.17	0.14	0.12	0.10
광업	0.04	0.03	0.02	0.02	0.02	0.04	0.03	0.02	0.02	0.02
제조업	18.48	18.39	18.31	18.16	18.01	18.48	17.86	17.25	16.72	16.21
전기, 가스, 수도	0.52	0.60	0.67	0.66	0.66	0.52	0.60	0.67	0.66	0.66
건설업	8.44	8.53	8.62	8.24	7.88	8.44	8.88	9.30	9.00	8.70
도소매, 음식, 숙박	31.52	29.15	26.85	25.99	25.15	31.52	29.65	27.85	27.17	26.50
운수, 보관, 통신	5.95	6.26	6.55	6.32	6.10	5.95	6.19	6.42	6.40	6.38
금융, 보험, 부동산	12.45	13.17	13.88	14.65	15.39	12.45	13.07	13.67	14.41	15.13
공공행정, 국방	2.54	2.55	2.55	2.48	2.41	2.54	2.58	2.62	2.59	2.57
사회, 개인서비스	19.86	21.15	22.40	23.35	24.28	19.86	20.97	22.05	22.90	23.72

[표 II-21] 서울시 산업별 취업자수

(단위 : 천명)

구 분	고 성 장				저 성 장			
	2005	2010	2015	2020	2005	2010	2015	2020
농림수산업	8	7	6	5	8	7	6	5
광업	2	1	1	1	2	1	1	1
제조업	855	878	882	892	828	822	807	797
전기, 가스, 수도	28	32	33	33	28	32	32	33
건설업	397	413	401	391	411	443	433	427
도소매, 음식, 숙박	1,355	1,288	1,263	1,246	1,373	1,327	1,309	1,301
운수, 보관, 통신	290	314	307	302	287	306	309	314
금융, 보험, 부동산	612	665	711	762	605	652	694	743
공공행정, 국방	118	123	121	119	119	125	125	126
사회, 개인서비스	982	1,074	1,134	1,202	972	1,051	1,104	1,165

(7) 직업별 취업인구구조

• **과거추이/지표**

- 직업별 취업인구구조는 통계청의 경제활동통계연보의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경제활동통계연보상의 9개의 직업분류를 5개로 재분류하였다.
- 1993년～2000년의 직업별 취업자수 증가율을 보면, 전문가, 기술공, 준전문가 및 사무직과 서비스근로자 및 상점과 시장판매근로자는 증가하고 있으나 나머지는 감소하고 있다.

[표 II-22] 서울시 직업별 취업인구구조 (단위 : 천명, %)

구 분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93-2000 변화
입법공무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187	207	197	200	194	178	150	155	-0.61
	4.01	4.32	4.04	4.08	3.95	4.00	3.36	3.40	
전문가, 기술공, 준전문가 및 사무직	1,715	1,776	1,857	1,877	1,887	1,711	1,708	1,774	2.1
	36.79	37.02	38.06	38.32	38.44	38.42	38.26	38.89	
서비스근로자 및 상점과 시장판매근로자	1,125	1,166	1,177	1,221	1,251	1,215	1,193	1,191	1.97
	24.14	24.31	24.12	24.93	25.48	27.28	26.72	26.11	
농업 및 어업숙련근로자	14	16	15	15	14	13	13	9	-0.1
	0.30	0.33	0.31	0.31	0.29	0.29	0.29	0.20	
기 타	1,620	1,632	1,633	1,585	1,563	1,336	1,400	1,432	-3.36
	34.76	34.02	33.47	32.36	31.84	30.00	31.36	31.40	
계	4,661	4,797	4,880	4,898	4,909	4,453	4,464	4,559	

주 : 기타는 기능원 및 관련기능근로자, 장치, 기계조작원 및 조립원 그리고 단순노무직근로자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통계연보, 각년도

• **직업별 취업자수 추계**

- 직업별 취업자수는 경제활동통계연보('93～2000년)의 직업별 취업자수 증가율을 이용하여 계획년도별 직업별 취업자수를 추계하였다.
- 경제활동통계연보상의 9개의 직업분류를 5개로 재분류하였다.
- 농업 및 어업숙련근로자의 경우, 산업별 취업인구구조의 농림수산업 취업자수 비율을 그대로 적용하였으며, 입법공무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의 경우 지난 7년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2020년에 3.8%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 되었다.
- 2020년에는 전문가, 기술공, 준전문가 및 사무직이 43.97%로 가장 높으며, 그 다음으로 서비스근로자 및 상점과 시장판매근로자가 30.81% 그리고 기타직업이 21.32%로 추계되었다.

[표 II-23] 계획년도별 직업별 취업자수 비율 (단위 : %)

구 분	2005	2010	2015	2020
입법공무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3.50	3.60	3.70	3.80
전문가, 기술공, 준전문가 및 사무직	40.35	41.56	42.76	43.97
서비스근로자 및 상점과 시장판매근로자	27.46	28.58	29.70	30.81
농업 및 어업숙련근로자	0.17	0.14	0.12	0.10
기 타	28.52	26.12	23.72	21.32
계	100.00	100.00	100.00	100.00

[표 II-24] 계획년도별 직업별 취업자수 추계결과 (단위 : 천명)

구 분	고성장				저성장			
	2005	2010	2015	2020	2005	2010	2015	2020
합 계	4,648	4,796	4,858	4,952	4,632	4,765	4,819	4,913
입법공무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163	173	180	188	162	172	178	187
전문가, 기술공, 준전문가 및 사무직	1,875	1,993	2,077	2,177	1,869	1,980	2,061	2,160
서비스근로자 및 상점과 시장판매근로자	1,276	1,371	1,443	1,526	1,272	1,362	1,431	1,514
농업 및 어업숙련근로자	8	7	6	5	8	7	6	5
기 타	1,325	1,253	1,152	1,056	1,321	1,245	1,143	1,047

(8) 자치구별 종사자수

• 종사자수 추이

-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상의 종사자수는 실제 종사자수와는 많은 차이가 있으므로 취업자수 대비 종사자수 비율을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 서울시 취업자수 대비 종사자수 비율은 1990년에 1.094, 1995년에 1.124 그리고 1997년에 1.155로 점차 증가하다가 IMF이후 1999년에는 다시 1.10으로 감소하였다.
- 외국의 사례를 보면, 런던 1.12(2000년), 뉴욕시 1.12(2001년), 샌프란시스코 1.14(2001년) 그리고 동경도의 경우 1.69(1999년)로 나타났다.

[표 II-25] 취업자수 대비 종사자수 비율 (단위 : 천명)

구 분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2020
취업인구	고성장	4,424	4,880	4,559	4,648	4,796	4,858	4,952
	저성장				4,632	4,765	4,819	4,913
직주비율(J/H)		1.094	1.124	1.134	1.138	1.142	1.146	1.150

주 : 직주비율(J/H, Job-Housing Balance) : 취업인구 대비 종사자 비율

- 취업자수 대비 종사자수비율은 서울의 추세 및 외국 중심도시의 사례를 통해 볼 때 2020년 서울시의 취업자수 대비 종사자수 비율은 1.10～1.20 정도로 예상되며, 본 연구의 종사자수 추계에서의 2020년 비율은 그 중간값인 1.15가 타당할 것으로 보았다.
- 서울시 종사자수를 고성장과 저성장을 고려하여 종사자수를 추계하면, 2010년에는 546만명 그리고 2020년에는 567만명 정도로 예상되었다.

[표 II-26] 종사자수 추계 (단위 : 천명)

구 분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2020
시나리오	고성장	-	-	-	5,288	5,477	5,567	5,694
	저성장				5,271	5,441	5,522	5,649
종사자수 예측치		4,840	5,485	5,169	5,280	5,459	5,545	5,672

주 : 고성장 및 저성장은 KDI 자료 인용

• 계획년도별 자치구별 종사자수

- 현재 자치구별 종사자수와 관련이 있는 변수들과 관계를 파악하여 2020년의 추정용적률 증가에 따른 각 자치구별 종사자수를 추계하였다.
- 상업업무지역의 용적률은 지목상 대지, 공장용지 중에서, 토지이용 현황상 상업업무지와 공장용지를 추출하여 용도지역에 따라 적정용적률을 적용하여 이용가능 용적률을 추정하였다.
- 서울시의 상업업무지가 계획년도에 305%, 각 자치구별 이용가능용적률로 개발된다는 가정하에서 2020년도 각 자치구별 상업업무지 용적률과 상업업무지의 면적과의 관계를 이용하여 자치구별 종사자수 비율을 예측하고, 이 비율을 적용하여 2020년 자치구별 종사자수를 예측하였다.
- 2020년 서울시의 종사자수 예측치는 대략 567만명으로 2000년에 비해 50만여명 증가가 예상되며, 각 자치구별로 보면 종사자수가 많은 지역은 강남구 60만명, 중구 46만명 그리고 영등포구 41만명 순이며, 종사자수가 적은 지역은 강북구 8만명, 성북구 12만명 그리고 광진구 12만명 순으로 나타났다.

[표 II-27] 자치구별 계획년도별 종사자수

(단위 : 천명, %)

구 분	2005		2010		2015		2020	
	종사자수	비율	종사자수	비율	종사자수	비율	종사자수	비율
서 울 시	5,438	100.00	5,459	100.00	5,545	100.00	5,672	100.00
종 로 구	352	6.47	358	6.55	367	6.62	379	6.69
중 구	508	9.34	488	8.93	472	8.52	461	8.12
용 산 구	204	3.75	220	4.03	238	4.29	260	4.58
성 동 구	178	3.27	178	3.26	179	3.23	183	3.22
광 진 구	127	2.34	124	2.27	122	2.21	122	2.14
동대문구	213	3.92	226	4.14	242	4.36	260	4.58
중 랑 구	135	2.48	142	2.60	150	2.71	160	2.82
성 북 구	125	2.30	122	2.24	120	2.17	120	2.11
강 북 구	84	1.54	82	1.50	81	1.46	80	1.42
도 봉 구	98	1.80	107	1.95	117	2.10	128	2.26
노 원 구	128	2.35	126	2.31	126	2.28	127	2.25
은 평 구	112	2.06	118	2.17	125	2.26	134	2.36
서대문구	136	2.50	141	2.58	147	2.66	155	2.74
마 포 구	197	3.62	186	3.40	176	3.18	169	2.97
양 천 구	137	2.52	149	2.72	162	2.92	177	3.12
강 서 구	206	3.79	204	3.74	205	3.70	207	3.65
구 로 구	160	2.94	160	2.94	163	2.94	166	2.92
금 천 구	166	3.05	167	3.06	171	3.08	175	3.09
영등포구	399	7.34	400	7.32	405	7.30	412	7.26
동 작 구	133	2.45	137	2.51	143	2.57	150	2.65
관 악 구	156	2.87	163	2.99	173	3.13	185	3.26
서 초 구	386	7.10	384	7.04	386	6.97	391	6.89
강 남 구	680	12.50	646	11.83	619	11.16	595	10.48
송 파 구	272	5.00	288	5.28	308	5.56	331	5.84
강 동 구	147	2.70	146	2.67	146	2.62	147	2.58

3) 산업경제

(1) 경제규모

• **과거추이/지표**

- 서울시의 지역내총생산은 1985년 전국대비(국방 및 소득세 제외) 24.5%에서 2000년에는 21.6%로 2.9% 정도 감소하였다. 1인당 지역내총생산은 1985년에 3,974천원에서 2000년에는 10,181천원으로 증가하였다.

[표 II-28] 전국 및 서울시 지역총생산

시 점	1985	1990	1995	2000
전국 (10억원)	80,411.3	177,114.3	357,722.5	503,451.9
서울시 (10억원)	19,713.9	44,852.8	84,598.7	108,523.8
전국대비비율 (%)	24.52	25.32	23.65	21.56
1인당GRP (천원)	3,974	6,093	8,269	10,181

주 : 전국자료는 국방 및 소득세가 포함되지 않은 전국시도 합계자료임. 당해연도를 기준으로 함.
자료 : 통계청, 지역내총생산 및 지출, 각년도 2000년 지역총생산 자료는 잠정결과임.

• **지역내총생산 추계**

- 지역내총생산의 증가율은 경제성장률과 높은 상관관계가 가지고 있으며, 경제성장률은 한국개발연구원(KDI, 2000)에서 발표한 잠재성장률 중 저성장을 기초로 하여 계획년도별 지역내총생산을 추계하였다.
- KDI에서 발표한 잠재성장률은 2001년~2010년까지 4.4%, 2011~2020년까지 3.3%성장하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 2020년 서울시의 지역내총생산은 217.3조원, 1인당 지역내총생산은 22,180천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표 II-29] 전국 및 서울시의 지역내총생산 증가율과 경제성장률 비교 (단위 : %)

구 분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년
전 국	12.07	11.28	9.90	7.25	9.61	9.58	7.00	5.72	8.10	7.61	8.35	4.88	-8.38	13.16	9.6
서 울	13.22	13.82	9.76	7.59	10.92	7.38	6.35	6.97	4.03	2.96	7.00	0.90	-9.12	9.50	6.1
경제성장률	11.00	11.00	10.50	6.10	9.00	9.20	5.40	5.50	8.30	8.90	6.80	5.00	-6.70	10.70	8.8

[표 II-30] 계획년도별 서울시 지역내총생산 및 1인당 총생산

구 분	2005	2010	2015	2020
전국 (10억원)	624,397	774,396	920,587	1,082,845
서울 (10억원)	130,874	159,990	187,524	217,327
전국 대비비율 (%)	20.96	20.66	20.37	20.07
1인당GRP (천원)	12,810	15,939	18,916	22,180

• **산업별 지역내총생산**

- 산업별 지역내총생산은 산업별 과거 생산액 및 비율을 분석하고 KDI의 한국의 장래 산업별 총생산 전망과 전국에서의 비중을 고려하여 산업별로 목표년도 및 단계별 최종년도의 지표를 설정하였다.
- 서비스업을 제외한 농수산업과 광업/제조업의 경우 지속적인 감소가 예상되고 있다.

[표 II-31] 산업별 국내총생산 성장률 추계치 (단위 : %)

구 분		1990	2000	2010	2020
농수산업		9.3	4.6	2.8	1.9
광업/제조업		29.2	28.8	27.2	25.6
서비스업		57.4	62.2	65.9	68.8
연평균 증가율	농수산업		-5.1	-3.9	-3.2
	광업/제조업		-0.1	-0.6	-0.6
	서비스업		0.8	0.6	0.4

주 : 공공행정 및 국방부문은 제외
자료 : KDI,산업구조변화에 따른 중장기 인력수급전망, 2000

- 과거 전국의 산업별 지역내총생산 년평균증가율과 서울시 산업별 지역내총생산 비율을 고려하여 계획년도별 산업별 지역내총생산 비율을 추계하였다.
- 농수산업과 광공업의 경우 지속적인 감소가 예상되며,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2000년 90.7%에서 2020년 92.6%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II-32] 서울시 산업별 지역총생산 추계 (단위 : 백만원, %)

구 분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2020
농림어업	381,261	422,822	585,918	564,937	502,369	468,809	434,654
	0.87	0.51	0.54	0.43	0.31	0.25	0.20
광공업	6,662,884	9,398,170	9,595,988	10,995,556	12,722,418	14,199,282	15,691,011
	15.18	11.31	8.81	8.40	7.95	7.57	7.22
서비스업	36,839,511	73,282,176	98,759,399	119,302,112	146,749,380	172,851,695	201,201,360
	83.95	88.18	90.65	91.16	91.72	92.18	92.58

(2) 소득 및 소비구조

• **과거추이/지표**

- 근로자가구의 소득 및 소비지출은 도시가계조사('75-2000년)에서 근로소득을 이용하였으며, 소비는 소비지출항목을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 과거추세와 시민소득의 증가경향 및 소비형태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추계하였다.

[표 II-33] 전국 및 서울시의 소득 및 소비구조 현황 (단위 : 원/월, %)

구 분		1975	1980	1985	1990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소 득	전 국	65,540	234,086	431,183	943,300	1,911,100	2,152,700	2,287,300	2,133,100	2,224,700	2,386,900
	서울시	67,290	250,564	471,631	982,500	2,086,800	2,336,300	2,470,700	2,213,000	2,251,200	2,438,400
	전국대비	103	107	109	104	109	109	108	104	101	102
지 출	전 국	56,890	175,471	309,607	650,000	1,230,600	1,395,400	1,453,700	1,297,900	1,473,500	1,614,800
	서울시	58,140	183,818	345,446	692,900	1,344,900	1,529,600	1,584,400	1,374,400	1,539,900	1,692,400
	전국대비	102	105	112	107	109	110	109	106	105	105

자료 : 통계청, 도시가계연보, 각년도

• **가계소득 및 소비 추계**

- 가계소득의 경우, 물가와 경제성장률과의 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KDI(2000)에서 발표한 경제성장률과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을 근거로 하여 계산하였다.
- 가계소득증가율은 2010년까지 연평균 7.4%(경제성장률 4.4%, 물가상승률 3%), 2021년까지 5.3%(경제성장률 3.3%, 물가상승률 2%)상승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하였다.
- 가계소비지출은 1980년부터 2000년 사이에 가계소득의 60%～75%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에도 지난 20년동안 가계소득 대비 75%～80%정도를 유지하고 있다.
- 따라서 서울시의 가계소득 대비 소비지출비율을 2020년에 75%로 하여 각 계획년도별 소득대비 소비지출비율을 산정하였다.

[표 II-34] 소득대비 소비지출비율 (단위 : %)

구 분	1975	1980	1985	1990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전 국	86.80	74.96	71.80	68.91	64.39	64.82	63.56	60.85	66.23	67.65
서울시	86.40	73.36	73.24	70.52	64.45	65.47	64.13	62.11	68.40	69.41

[표 II-35] 계획년도별 가계소득 및 가계지출 (단위 : 원/월, %)

구 분		2005	2010	2015	2020
전 국	가계소득	3,410,795	4,873,905	6,309,848	8,168,847
	가계지출	2,353,449	3,411,733	4,479,992	5,881,570
	비 율	69.00	70.00	71.00	72.00
서울시	가계소득	3,634,621	5,193,745	6,723,918	8,704,910
	가계지출	2,598,754	3,791,434	4,975,700	6,528,682
	비 율	71.50	73.00	74.00	75.00

• **5분위별 소득**

- 서울시 5분위별 소득은 전국의 5분위별 소득을 이용하여 추계하였다.
- 전국의 평균가계소득대비 각 분위별 소득비율을 그대로 서울시에 적용하여 추계하였다.
- 그리고 각 계획년도별 소득분위별 비율은 1980년에서 2000년까지 거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일본의 경우에도 지난 20년간 각 소득분위별 평균가계소득대비 비율은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36] 전국의 소득분위별 평균가계소득대비 비율 (단위 : %)

구 분	1980	1985	1990	1995	2000	평 균
1분위	0.39	0.39	0.42	0.42	0.38	0.40
2분위	0.65	0.64	0.66	0.67	0.63	0.65
3분위	0.86	0.84	0.86	0.88	0.85	0.86
4분위	1.13	1.12	1.12	1.15	1.13	1.13
5분위	1.97	2.01	1.94	1.88	2.01	1.95

[표 II-37] 서울시 분위별 소득 추계 (단위 : 원)

구 분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2020
1분위	97,883	182,384	410,618	886,762	918,601	1,461,484	2,073,766	2,718,148	3,518,965
2분위	162,435	302,973	650,204	1,403,903	1,545,440	2,387,770	3,376,325	4,425,453	5,729,273
3분위	214,451	393,966	842,739	1,830,632	2,072,982	3,132,371	4,417,147	5,789,690	7,495,440
4분위	283,855	529,243	1,104,834	2,394,835	2,763,261	4,150,564	5,848,618	7,665,962	9,924,497
5분위	493,992	950,064	1,903,452	3,916,449	4,889,570	7,164,713	10,064,299	13,191,585	17,078,072

4) 계획의 기본지표 총괄

(1) 인 구[주)]

구 분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2020
계획인구(천인) 전국대비(%)			8,364 22.34	9,639 23.83	10,613 24.45	10,596 23.04	10,373 21.62	10,216 21.08	10,038 20.24	9,914 19.69	9,798 19.35
상주·주간인구 (천명)	상주인구		-	-	10,613	10,596	10,373	10,216	10,038	9,914	9,798
	주간인구		-	-	11,029	11,201	10,983	10,856	10,716	10,620	10,538
	비율(%)		-	-	103.9	105.7	105.9	106.3	106.8	107.1	107.5
성별(%)			0.99	0.99	1.01	10.1	1.00	1.01	1.01	1.01	1.00
가구원구성	가구수(천호)		1,837	2,324	2,815	2,966	3,086	3,499	3,585	3,672	3,712
	1인가구비율(%)		4.49	6.72	9.14	12.88	16.28	17.40	18.97	20.51	22.55
	평균가구원수(인)		4.40	4.02	3.69	3.37	3.12	2.92	2.80	2.70	2.64
연령별 구조 (천인, %)	0-14		2,602 (31.16)	2,719 (28.25)	2,625 (24.76)	2,242 (21.25)	1,916 (18.58)	1,797 (17.59)	1,643 (16.37)	1,568 (15.81)	1,363 (13.91)
	15-64		5,540 (66.35)	6,626 (68.84)	7,615 (71.82)	7,850 (74.40)	7,837 (76.00)	7,696 (75.33)	7,462 (74.34)	7,159 (72.22)	6,955 (70.98)
	65이상		208 (2.49)	280 (2.91)	363 (3.42)	459 (4.35)	559 (5.42)	723 (7.08)	932 (9.29)	1,187 (11.97)	1,481 (15.11)
노동연령 인구구조 (천인, %)	경제활동 인구	고성장	-	-	4,607	5,009	4,787	4,916	5,043	5,100	5,198
		저성장						4,931	5,066	5,100	5,174
	취업인구	고성장	-	-	4,424	4,880	4,559	4,648	4,796	4,858	4,951
		저성장						4,632	4,765	4,819	4,912
	취업율	고성장	-	-	57.90	61.78	58.24	59.30	61.00	62.30	63.50
		저성장						59.10	60.60	61.80	63.00
산 업 별 취업구조 (천인, %)	농림 어업	고성장	-	-	18 (0.49)	16 (0.39)	9 (0.2)	8 (0.16)	7 (0.14)	6 (0.12)	5 (0.10)
		저성장						8 (0.17)	7 (0.14)	6 (0.12)	5 (0.10)
	광공업	고성장	-	-	1,097 (29.74)	965 (23.91)	845 (18.52)	857 (18.44)	879 (18.33)	883 (18.18)	893 (18.03)
		저성장						829 (17.91)	823 (17.27)	807 (16.76)	798 (16.24)
	서비스업	고성장	-	-	2,566 (69.53)	3,056 (75.69)	3,705 (81.28)	3,783 (81.39)	3,910 (81.53)	3,969 (81.71)	4,054 (81.88)
		저성장						3,795 (81.93)	3,935 (82.59)	4,006 (83.12)	4,110 (83.66)
직 업 별 취업구조 (천인, %)	입법공무원,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	-	187 (4.01)	197 (4.04)	155 (3.40)	162 (3.50)	172 (3.60)	178 (3.70)	187 (3.80)
	전문가, 기술공 및 준전문가 및 사무직		-	-	1,715 (36.79)	1,857 (38.06)	1,774 (38.89)	1,869 (40.35)	1,980 (41.56)	2,061 (42.76)	2,160 (43.97)
	서비스근로자 및 상점과 시장판매근로자		-	-	1,125 (24.14)	1,177 (24.12)	1,191 (26.11)	1,272 (27.46)	1,362 (28.58)	1,431 (29.70)	1,514 (30.81)
	농업 및 어업숙련근로자		-	-	14 (0.30)	15 (0.31)	9 (0.20)	8 (0.17)	7 (0.14)	6 (0.12)	5 (0.10)
	기 타		-	-	1,620 (34.76)	1,633 (33.47)	1,432 (31.40)	1,321 (28.52)	1,245 (26.12)	1,143 (23.72)	1,047 (21.32)

주 : 계획년도별 인구관련 추계는 주민등록 인구통계상의 인구를 기준으로 작성한 것임.
직업별 취업구조의 기타는 기능원 및 관련기능근로자, 장치, 기계조작원 및 조립원 그리고 단순노무직근로자임.
직업별 취업구조의 1990년은 1993년 자료임.
직업별 취업구조의 추계치는 저성장 기준임.

(2) 산업경제[주)]

구 분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2020
경제규모	경제규모(GRP)	지역내 총생산(10억원)	44,852.8	84,598.7	109,306.5	130,874.0	159,990.2	187,523.5	217,327.0
		전국대비(%)	25.32	23.65	21.70	20.96	20.66	20.37	20.07
		연평균성장률(%)	17.90	13.59	5.04	4.3	4.3	3.3	3.3
		인구1인당(천원)	6,093	8,269	10,181	12,810	15,939	18,916	22,180
	산업별 지역총생산(억원,%)	농림어업	381.3	422.8	585.9	564.9	502.4	468.8	434.7
			0.87	0.51	0.54	0.43	0.31	0.25	0.20
		광업/제조업	6,662.9	9,398.2	9,596.0	10,995.6	12,722.4	14,199.3	15,691.0
			15.18	11.31	8.81	8.40	7.95	7.57	7.22
		서비스업	36,839.5	73,282.2	98,759.4	119,302.1	146,749.4	172,851.7	201,201.4
			83.95	88.18	90.65	91.16	91.72	92.18	92.58
산업	종사자수(천명)		4,840	5,485	5,169	5,280	5,459	5,545	5,672
소득	가계소득(천원/월)		982.5	2,086.8	2,438.4	3,634.6	5,193.8	6,723.9	8,704.9
	소득계층별 소득(천원)	1분위	410.6	886.8	918.6	1,461.5	2,073.8	2,718.2	3,519.0
		2분위	650.2	1,403.9	1,545.4	2,387.8	3,376.3	4,425.5	5,729.3
		3분위	842.7	1,830.6	2,073.0	3,132.4	4,417.1	5,789.7	7,495.4
		4분위	1,104.8	2,394.8	2,763.3	4,150.6	5,848.6	7,666.0	9,924.5
		5분위	1,903.5	3,916.5	4,889.6	7,164.7	10,064.3	13,191.6	17,078.1
소비구조	월가계소비(천원/월)		692.9	1,344.9	1,692.4	2,598.8	3,791.4	4,975.7	6,528.7
	소득대비비율(%)		70.52	64.45	69.41	71.50	73.00	74.00	75.00
도시재정	총세입규모 (백만원)	고성장	4,715,703	9,269,740	11,008,259	15,623,285	20,034,842	24,492,864	29,942,856
		저성장				15,109889	18,739,748	22,042,729	25,927,878
	총세출규모 (백만원)	고성장	3,006,694	7,290,895	10,045,837	12,925,715	16,575,558	20,263,843	24,772,821
		저성장				12,500,964	15,504,080	18,236,756	21,451,082

주 : 지역내총생산은 당해년 기준임. 전국대비 비율은 전국시도 합계에 대한 서울시의 비율임.
가계소득은 도시가계조사에서 근로가구의 월평균소득임.
경제규모의 연평균 성장률은 2000～2010년까지 4.4%, 2011～2021년까지는 3.3%로 함. 이는 KDI(2000년), 산업구조변화에 따른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자료를 이용함.
도시재정 부문은 각년도 세입세출 결산(서울통계연보) 자료임.

(3) 교 통

구 분		1990	1995	2001	2005	2010	2015	2020
자동차 보유대수 (천대)	서울시	1,194	2,044	2,550	2,779	3,009	3,238	3,468
	수도권	1,789	4,039	5,983	6,611	7,239	7,868	8,496
총목적 통행량 (천대통행/일)		-	18,524	19,546	20,748	21,950	23,152	24,354
대중교통 수송분담율(%)		-	-	64	66	67	68	70

• 대중교통 수송분담율은 버스와 지하철,철도(환승포함)의 합임.
• 「연도별 서울시 교통지표 산출」(서울시, 2005)에서 예측한 장래 서울시 대중교통수송분담률을 토대로 조정함.
이 연구에서는 2020년 서울시 대중교통수송분담률을 67.7%로 예측함.

(4) 주 택

구 분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2020
주택보급률(%)	공식	-	68.0	77.4	82.5	85.2	87.4	89.6
	실질	-	85.8	96.6	102.2	105.4	108.2	110.9
1인당 주거 상면적(㎡)		10.63	15.20	19.50	24.47	27.00	28.20	28.71

Ⅲ. 공간구조 개편구상



1. 현황과 문제점
2. 여건 변화와 전망
3. 미래상
4. 계획방향
5. 목표체계
6. 공간구조 구상 및 중심지체계

1. 현황과 문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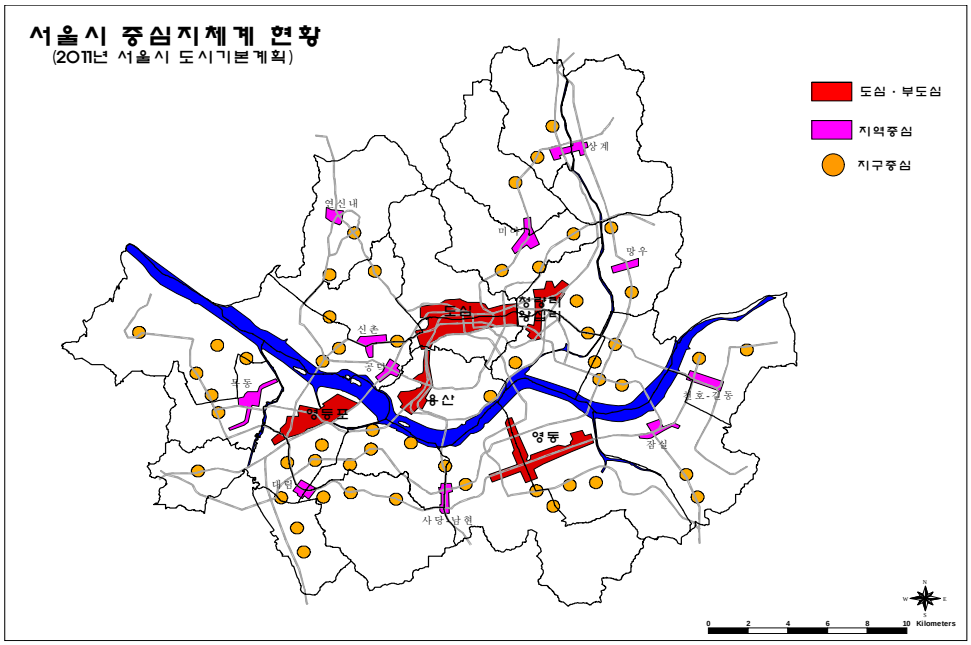
1) 2011년 서울도시기본계획상 공간구조 구상

(1) 공간구조 구상

- 대도시권 생활권역에 부응하면서 상호간의 활동을 연계시킬 수 있는 4개 생활권 구상
- 생활권 구상
  - 동북생활권 : 왕십리·청량리
  - 동남생활권 : 영동
  - 서남생활권 : 영등포
  - 서북생활권 : 수색 (2011년 이후)
- 신부도심의 육성 : 용산, 청량리·왕십리, 수색 (2011년 이후)
- 다핵구조를 지원하는 교통시스템의 구축 : 지역간 간선철도망, 순환교통시스템, 대규모 주차장과 환승시설의 구축

(2) 중심지체계

- 도심, 4 부도심 (영동, 영등포, 용산, 왕십리·청량리; 2011년 이후 수색 개발), 11 지역중심, 54 지구중심



[그림 III-1] 2011년 서울도시기본계획의 중심지체계

2) 서울시 공간구조의 현상진단

(1) 수도권 및 서울의 생활권별 통근패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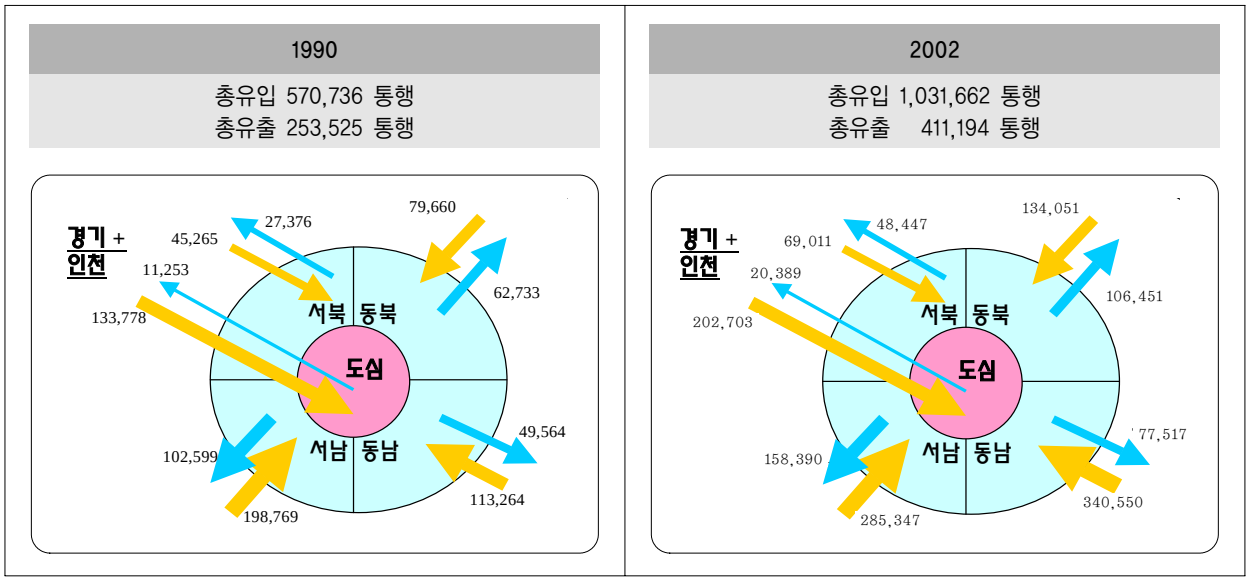
• **수도권 통근의 서울의존도 심화**

- 경기·인천에서 서울로의 통근통행은 1980년의 17만 통행에서 2002년에는 103만 통행으로 503%가 증가하여 통근통행 측면에서 수도권 지역의 서울의존도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표 III-1] 수도권 인구 및 통근량 현황(단위 : 천명, 천대통행)

구 분		1980년	1990년	1995년	1997년	2002년
인 구	서 울	8,364	10,613	10,231	10,348	10,281
	경기·인천	4,934	7,974	9,958	10,926	12,596
통근량	서울내부	1,885	3,139	3,348	3,242	3,215
	경기·인천 ⇨ 서울	171	571	814	913	1,031

자료 : 인구자료 중 1980, 90, 95년 자료는 인구주택총조사, 1997년, 2002년 자료는 주민등록인구통계자료임
통근자료 중 1980, 90, 95년 자료는 인구주택총조사, 1997년 자료는 경기도 가구통행실태조사 자료, 2002년 자료는 2002 서울시 가구통행실태조사 자료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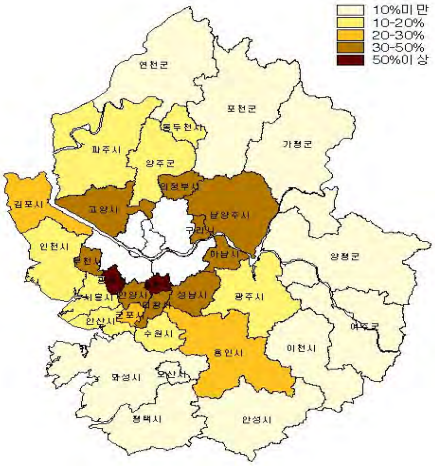


[그림 III-2] 서울 대도시권의 통근통행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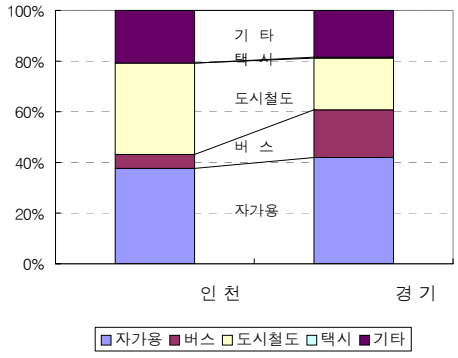
- 2002년 현재 수도권에서 서울로의 통근율이 10% 이상인 시군은 22개 지역이며 이 중 40% 이상도 8개 지역(과천시(62.3%), 분당신도시(53.1%), 광명시(51.2%), 하남시(48.6%), 구리시(46.6%), 고양시(45.8%), 일산신도시(41.2%), 중동신도시(40.4%))으로써 서울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실정이다. (서울시 가구통행실태조사 대죤 기준, 2002)

• 승용차 위주의 통근패턴

- 2000년 수도권에서 서울로 유입되는 통근통행을 수단별로 살펴보면, 인천에서는 37.5%, 경기도에서는 41.8%가 승용차를 이용하고 있어 수도권의 교통혼잡을 가중시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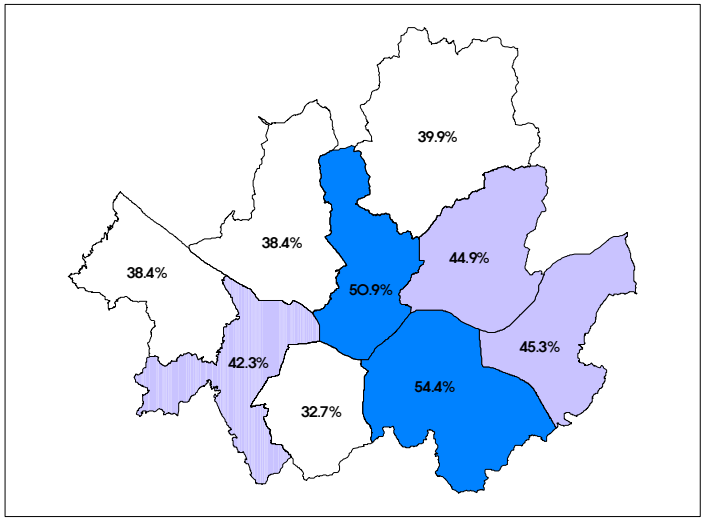
[그림 III-3] 서울로의 수단별 유입통근통행비율(2002년)



[그림 III-4] 서울로의 수단별 유입통근통행비율 (2000년)

• 서울내부통근의 경우 자족도가 낮은 생활권에서 장거리통근 발생

- 서울에서 통근자족도가 비교적 낮은 생활권은 서남3권(32.7%), 서북권(38.4%), 서남1권(38.4%), 동북2권(39.9%)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로 인하여 장거리통근 등 교통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주 : 내부통근율 = 생활권 내부도착통근 / 출발통근
자료 : 서울시, 가구통행실태조사, 200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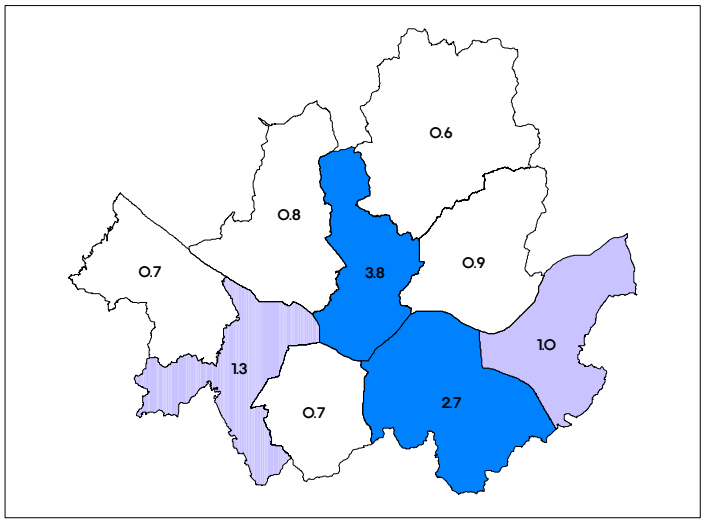
[그림 III-5] 서울시 생활권별 내부통근율 (2002년)

(2) 서울의 생활권별 직주비율

• **생활권별 직주불균형 발생**

- 2002년 현재 서울에서 직주비율이 높아 외부에서 통근통행을 많이 유입하는 생활권은 도심, 영동, 영등포의 3핵이 포함된 도심권(3.8), 동남1생활권(2.7), 서남2생활권(1.3)의 순으로 나타났다.

- 직주비율이 낮아 외부로 통근통행을 많이 유출하는 생활권은 동북2생활권(0.6)과 서남3생활권(0.7), 서남1생활권(0.7), 서북생활권(0.8)의 순으로 나타났다.



주 : 직주비율 = 도착통근 / 출발통근
자료 : 서울시, 가구통행실태조사, 200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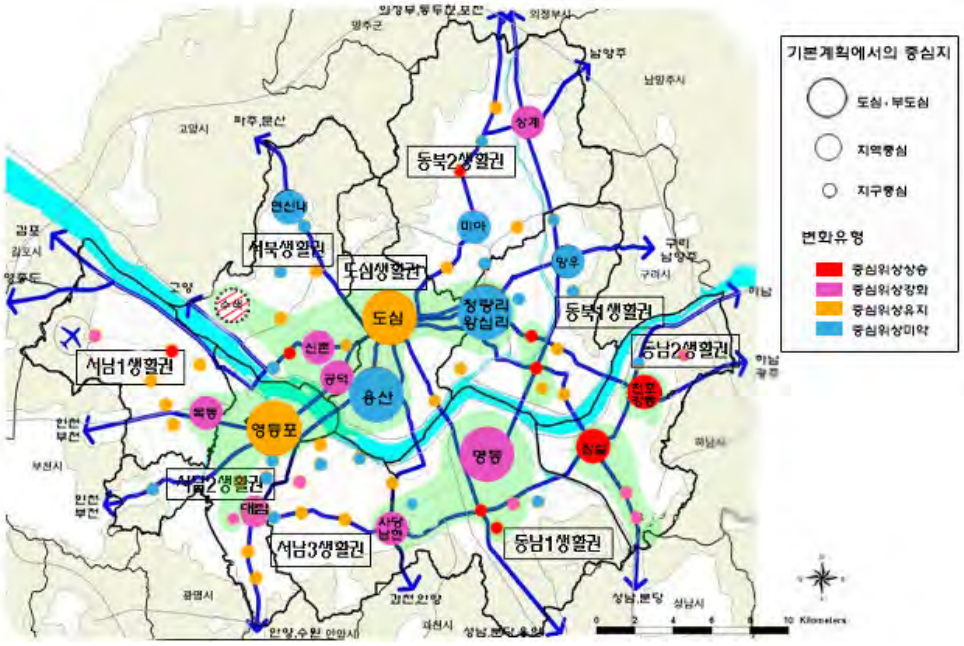
[그림 III-6] 서울시 생활권별 직주비율 (2002년)

(3) 각 중심지의 영향권 및 적정 역할분담

- **3핵 중심의 공간구조에서 동남권의 개발추세 활발**
  - 서울시는 다핵화 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으나 아직까지는 도심, 영동, 영등포의 3핵 중심의 발전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기성시가지인 강북지역에 비해 영동부도심을 중심으로 한 동남생활권에서의 성장추세가 활발하게 나타났다.

- **3핵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통근패턴의 지역분화 발생**
  - 수도권 통근패턴을 볼 때, 강북지역 및 경기 북부의 인근 도시들은 도심, 강남지역 및 경기 남부의 도시들은 영동부도심의 영향권에 속하며, 영등포부도심은 서남생활권 및 인근 산업도시들의 중심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일부 부도심의 미약한 위상과 강화되고 있는 지역중심의 역할**
  - 반면 청량리·왕십리 및 용산은 도심의 강력한 영향권에 속하여 아직 부도심으로써 위상이 미약하다.
  - 일부지역을 제외하면 지역중심은 대체로 중생활권의 중심지로써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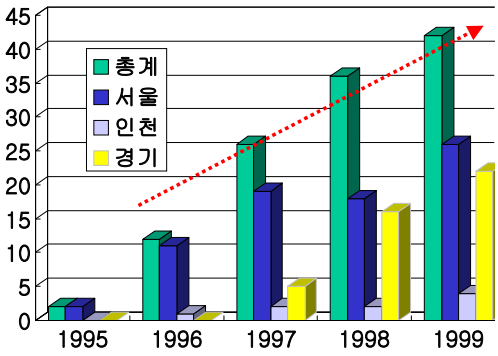
[그림 III-7] 서울 중심지 위상변화 (1989~2000)

(4) 환경 쾌적성 및 자연재해

- **전반적으로 녹지율은 높은 편이나 연계성 및 접근성 미흡**
  - 서울시는 외4산, 내4산 등 산악을 중심으로 하여 녹지는 풍부하나 외곽에 점적으로 치우쳐 있고 녹지간의 연계성 및 접근성은 미흡한 편이다.
  - 또한, 외곽의 녹지와 한강 등 서울시의 주요한 생태 및 경관자원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그림 III-8] 서울의 녹지 및 생태 현황



[그림 III-9] 수도권 연도별 오존주의보 발령추이

- **수도권의 광역화 및 자동차 위주의 통행체계에 의한 대기오염 악화**
  - 수도권의 광역화가 진전되고 있으나 광역대중교통체계의 구축 미흡으로 자동차 통행량이 증가하여 수도권의 대기오염이 전반적으로 악화되고 있다.
- **상습침수, 화재 등 재해의 지속적인 발생으로 인한 피해 증가**
  - 하절기의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최근 풍수해로 인한 피해가 심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지역별로는 중랑천 주변인 도봉구, 강북구, 성북구에 피해가 집중되어 있다.
  - 인구 1만명당 화재발생건수는 1980년 2.75건, 1990년 4.86건, 1999년 6.88건으로 급속도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피해액도 1980년에 비해서 1999년에 11.4배가 증가하였다.

3) 문제점

• **서울주변의 과도한 개발 및 승용차 위주 통근으로 인한 혼잡가중과 환경오염**

- 서울 주변의 과도한 개발과 승용차 위주 통근이 서울시 교통혼잡 및 대기오염 악화의 주요한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 주거기능 위주로 개발된 동북·서북생활권과 서남생활권 일부지역은 고용기반이 취약하여 장거리 및 교차통근의 발생이 심각한 수준이다.

• **동남권의 급속한 성장에 의한 지역간 격차 심화**

- 기반시설이 잘 정비된 동남생활권에는 양질의 업무·상업공간이 지속적으로 확충되어 급속히 성장한 반면, 전통적 기성시가지인 동북·서북생활권과 서남생활권 일부지역은 개발여건 및 기반시설 확보에 제약이 많아 지역간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표 III-2] 서울시 생활권별 업무·상업공간의 분포 및 변화 (단위 : 만㎡, %)

구 분	1995			2000			변화율		
	업무	중심상업	근린상업	업무	중심상업	근린상업	업무	중심상업	근린상업
서울시	2,726	976	3,362	3,712	1,038	4,625	36.2	6.4	37.6
도심권	741	258	372	939	234	535	26.7	-9.1	43.9
동북권	323	184	944	435	205	1,261	34.6	11.1	33.5
서북권	190	80	320	265	81	422	40.5	1.1	31.8
서남권	618	161	829	853	200	1,146	38.2	24.4	38.3
동남권	854	292	897	1,219	318	1,260	42.8	8.9	40.5

자료 : 서울시, 건물분재산세 과세자료, 각년도

• **중심지 위계에 따라 획일적으로 부여되는 용도지역 지정방향**

- 2011년 서울도시기본계획에서는 중심지 위계별로 용도지역의 지정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치구에서는 지역의 특성과는 관계없이 중심지 위계에 따라 용도지역을 획일적으로 부여하고 있으며 용도지역의 상향조정을 위한 근거로 악용하고 있다.

• **도심에 인접한 청량리·왕십리의 부도심 역할 미약**

- 청량리·왕십리부도심은 도심에 인접하여 성장속도가 느리며 동북생활권에서 부도심으로써의 역할이 아직 미약한 상태에 있다.

• **지구중심의 과다 지정과 일부 과밀개발로 인한 공간구조 왜곡**

- 2011년 서울도시기본계획에 의해 지구중심으로 지정된 54개의 중심지 거의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었거나 수립중이다.

-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을 살펴보면 지역여건과 발전잠재력 등 현실을 무시한 채 과도한 개발밀도의 설정과 용도지역의 무분별한 상향조정 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도시공간구조를 상당히 왜곡시키고 있다.
- 도곡지구중심의 초고층 업무복합단지 개발 등 도시기본계획상 중심지체계를 무시한 과도한 개발로 인하여 공간구조를 왜곡하는 현상이 초래되고 있다.

•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등 대규모 국책사업 및 여건변화에 따른 중심지체계의 조정 필요

- 상암·수색지역은 인천국제공항에 연계된 국제업무축상에 있고 남북교류를 위한 교통결절점에 해당하는 전략거점으로써 DMC(Digital Media City) 개발구상 등이 가시화되는 지역이므로 최근의 개발동향 및 장래의 역할을 새로운 공간구조 구상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 은평지역 및 수도권 인근지역의 개발제한구역이 대규모로 조정될 예정으로 있어 장래 이들 지역을 포함한 배후지의 고용 중심지로써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여건변화에 따른 대규모 개발가능지의 장기적인 개발방향 재정립 필요

- 마곡, 뚝섬, 문정·장지 등 서울의 대규모 개발가능지는 한강의 주요 중심축상의 개발잠재력이 높은 곳에 위치하여 장기적인 안목에서 체계적인 관리와 개발방향의 재정립이 필요하다.
- 강서구 마곡지역은 도심-상암-인천국제공항을 연결하는 국제업무축상에 위치하여 개발압력이 높으며 지하철 9호선과 신공항철도가 통과할 예정이어서 서울시 차원의 개발방향 정립과 함께 체계적인 도시관리가 요구된다.
- 성동구 뚝섬은 한강변에 위치한 미개발지역인데다 동북생활권에서는 마땅한 도시녹지 공간 확충이 용이하지 않으므로 지역균형발전 차원의 생활권별 녹지공간 접근성 측면에서 검토될 필요가 있다.
- 송파구 문정·장지는 잠실지역중심에서 성남시로 향하는 개발축상에 위치하나 이 지역이 개발될 경우 성남시와 연담화가 우려되므로 친환경적 성장관리의 원칙하에 계획적으로 관리한다. 문정지역은 얼마 남지 않은 대단위 개발가능지로써 요충지에 해당하므로 당해 지역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 차원에서 공공성이 높은 용도에 국한하여 환경친화적 개발을 유도하되 장기적 안목에서 계획적으로 관리해 나간다. 장지지역은 입지여건상 국민임대주택 건설의 적지로써 (택지개발예정지구로) 검토되고 있으므로 공공성이 높은 용도에 국한하여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되 인근의 성남시와 연담화가 우려되므로 충분한 완충녹지를 확보하도록 한다.

2. 여건변화 전망

• 대형 국책사업의 전개에 따른 공간구조 변화 예상

- 동북아의 허브공항으로써 인천국제공항의 개항(2001년), 경부고속전철 개통,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가시화 등 대형 국책사업이 수도권에서 전개되고 있다. 이에 따른 국제화 촉진 및 서울대도시권 공간구조의 변화가 예상되므로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
- 경의선 철도의 연결사업 및 아시아대륙 철도의 연계사업이 진행 중에 있어 아시아 대륙에서 서울의 입지적 이점의 강화가 예상된다.
- 남북간 당국자 회담과 이산가족의 상봉, 개성공단 등 산업단지의 협력개발, 금강산 관광 등 남북간의 교류 및 경제협력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어 통일여건이 성숙되고 있다.

•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에 따른 성장관리 전략 수립의 필요성 대두

- 정부의 개발제한구역 조정방침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을 포함한 서울대도시권 성장관리 및 도시정비 전략의 수립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은 집단취락, 국책사업, 지역현안사업 등에 의한 우선해제지역과 조정가능지역으로 지정하여 다양한 형태로 추진될 예정이므로 이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

• 제4차 국토종합계획의 수립 등 상위계획의 변화에 따른 전략적 대응 필요

- 제4차 국토종합계획,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안),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에서 제시된 주요 정책방향 및 개발축, 교통축, 녹지축 등을 반영한 공간구조 전략의 구체화가 요구된다.

• 환경 및 재해에 대한 시민의식 제고로 인한 친환경적 공간구조 구축 필요

- 개발에 의해 녹지면적이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 양호한 자연환경에 대한 욕구가 증대되고 있어 친환경적인 공간구조의 구축이 필요하다.
- 대기오염과 상수원 수질의 악화로 이를 개선함으로써 스스로 건강을 지키기 위한 시민들의 다양화되고 있는 요구를 반영하여 시민의 건강을 보호해야 한다.
- 반복되는 자연재해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하여 사후대책보다 사전예방을 중시하는 방재개념의 도입이 필요하다.

3. 미래상

“다핵분산형 광역대도시”

- 서울대도시권이 광역화됨에 따라 수도권의 거대한 도시복합체가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대도시권 공간구조를 구축한다. 서울주변의 과도한 개발 및 승용차 위주 통근이 교통혼잡 및 환경오염의 주요원인이므로 서울외곽 기성시가지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고용기반이 취약한 생활권에 고용기반을 확충함으로써 다핵분산형 도시복합체의 도시구조를 구현한다.

- 본격적인 세계화시대를 맞이하여 국제도시로써 서울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전략거점의 기반을 구축한다. 또한, 가시화되고 있는 남북통일에 대비하여 남북교류의 거점을 확보함으로써 언제 다가올지 모르는 통일을 대비한다.

4. 계획방향

친환경적이고 삶의 질을 중시하는 도시성장관리 체계로 전환

성장 위주의 개발시대에서 삶의 질이 강조되는 관리의 시대로 전환됨에 따라 그동안 고도성장기에 누적된 도시문제를 "치유"하고 그간 경시되어왔던 서울의 산과 강, 역사와 문화를 "회복"하여 서울의 정체성을 살려나간다.

수도권의 상위계획과의 정합성 확보

'서울 중심의 계획'에서 서울의 광역생활권에 속하는 도시들을 포함하는 '광역도시계획 등 수도권 관련계획의 정책방향과 정합성'을 유지한다.

도시관리의 성격 강화

개발수요에 급급했던 수요 대응적 성격이나 '개발현상의 사후추인'에서 '도시성장을 계획적으로 유도·관리하는 "정책유도형"의 성격'을 강화한다.

환경친화성, 지속가능성 우선 고려

교통, 주택, 고용 등 '사회·경제적 요소 중심'에서 '자연환경·생태요소 등 환경친화성 및 지속가능성'을 적극 고려한다.

광역도시권 차원의 접근

'서울시 행정구역 내부의 관점'에서 '서울대도시권의 관점'으로 접근한다.

전략계획의 성격 강화

'형식적이고 경직적인 용도지역 위주의 계획'에서 '장기적 안목에서 공간구조 개편구상의 핵심취지를 살리되 유연적인 대응이 가능한 전략계획'의 성격을 강화한다.

학습과정의 성격 강화

'소수의 전문가, 계획가 중심의 개편안'에서 '계획의 관련 주체 모두가 함께 참여하여 배우고, 만들어 가는 과정지향적 계획수립의 기회'로 적극 활용한다.

5. 목표체계

"다핵분산형 광역대도시"

목 표	과 제	전 략
1. 국제화와 남북통일에 대비한 공간구조	동북아의 전략거점으로써 서울의 위상 강화	• 인천국제공항과 국제업무축상 주요 중심지간 연계 강화 (강남, 도심, 용산, 상암, 마곡 등 ↔ 영종도, 송도신도시, 고양)
		• 용산, 상암 · 수색 등 전략적 요충지를 국제화 전략거점으로 육성
	남북통일에 대비한 남북교류 거점확보	• 고속전철 및 남북발전축의 결절점에 교류 및 물류단지 조성 (상암·수색, 청량리·왕십리 등)
2. 각 지역이 균형있게 발전하는 공간구조	생활권역별 중심성의 강화로 다핵공간구조 실현	• 전략 육성중심지 개념을 도입하여 향후 공간구조상 전략중심지의 계획적 관리·육성 (마곡, 연신내, 상계, 망우 등)
		• 생활권역별 중심성 강화를 위해 균형발전촉진지구의 지정 및 육성
	낙후지역 재정비 및 도심부 재편	• 낙후지역의 재정비로 지역균형발전 도모 (동북·서북생활권 및 서남생활권 등 기성시가지 위주로 뉴타운사업 추진)
		• 역사·문화 복원을 통한 도심의 상징성 강화 및 재활성화 (청계천복원, 도심광장, 도심교통체계 개편, 도심부 특별관리지구 지정 등)
3. 환경요소를 중시한 친환경적 도시구조	지형지세와 도시경관을 고려한 공간구조	• 외4산, 내4산, 주요하천 복원 등을 연계한 생태·녹지 네트워크 구축
		• 한강 등 주요 하천의 수변경관축 지정
	도시개발의 계획적 유도 및 관리 강화	• 신규개발 수요를 대중교통의 결절점으로 입지 유도
		• '선계획 후개발'의 원칙에 의한 친환경적 도시구조 유도
4. 도시복합체가 유기적으로 살아 움직이는 서울대도시권	광역철도망과 서울시 중심지간의 정합성 추구	• 고속전철, 광역전철 등 광역철도의 결절점의 부도심 기능 강화
		• 도시철도의 역세권에 중심지를 설정하여 대중교통의 역할 강화
	서울대도시권내 도시간 기능 및 역할 분담	• 서울에 중추 업무기능, 국제기능, 지식정보 등 고차서비스업의 입지강화로 집적효과 극대화

목표1 국제화와 남북통일에 대비한 공간구조

국제도시로써 서울의 위상을 제고하며 남북통일에 대비하여 남북교류를 지원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한다.

과제1 동북아의 거점도시로써 서울의 위상 강화

전략 1. 인천국제공항과 국제업무축상의 주요 중심지간 연계를 강화한다.
(영종도, 송도신도시, 고양컨벤션센터 ↔ 상암·수색, 도심, 용산, 여의도, 영동, 마곡 등)

전략 2. 용산 및 상암·수색 등 전략적 요충지를 국제화의 전략거점으로 육성한다.

과제2 남북통일에 대비한 남북교류 거점 확보

전략 1. 고속전철 및 남북발전축의 교통결절점에 남북교류 기반조성을 위한 전략거점을 육성한다. (상암·수색, 청량리·왕십리 등)

목표2 각 지역이 균형있게 발전하는 공간구조 구현

직주원격화에 의한 장거리통근 등 심각한 교통문제를 완화함과 동시에 대기오염을 개선하기 위해 직주근접형 도시구조를 구현한다.

과제1 생활권역별 중심성의 강화로 다핵공간구조 실현

전략 1. 중심지체계에 전략 육성중심지 개념을 도입하여 향후 공간구조상 전략중심지로 계획적으로 관리·육성한다. (연신내, 상계, 망우, 마곡 등)

전략 2. 직주근접형 도시구조를 실현하기 위해 "균형발전촉진지구"를 지정·육성하여 생활권역별로 중심성을 강화한다.

과제2 낙후지역 재정비 및 도심부 재편

전략 1. 노후·낙후된 지역의 재정비를 위해 뉴타운 사업계획을 단계적·체계적으로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간다.

전략 2. 역사·문화 복원을 통해 도심의 상징성을 강화하고 도심에 주거기능을 확보하여 도심부의 활력을 유지한다. (청계천복원, 도심광장 조성, 도심교통체계 개편, 도심부 특별관리지구 지정 등)

목표3 환경요소를 중시한 친환경적 도시구조

개발·성장시대에 경시되고 파괴되었던 자연환경과 생태요소를 적극 회복하는 친환경적 도시구조를 구현함으로써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도시개발을 계획적으로 유도하며 체계적인 관리능력을 강화한다.

과제1 지형지세와 도시경관을 고려한 공간구조

전략 1. 외4산, 내4산, 주요 하천 복원 등을 연결할 수 있도록 생태·녹지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전략 2. 한강 등 주요 하천의 수변경관축을 지정하여 자연성을 회복하고 지형지세를 최대한 살리도록 한다.

과제2 도시개발의 계획적 유도 및 관리 강화

전략 1. 신규개발 수요는 가능한 대중교통의 결절점에 입지를 유도한다.

전략 2. '선계획 후개발'의 원칙에 의해 무분별한 개발을 제어하여 친환경적 도시구조를 유도한다.

목표 4 도시복합체가 유기적으로 살아 움직이는 서울대도시권

실제 광역생활권에 속하는 도시복합체가 철도 등 대중교통망을 중심으로 연계되며 도시간 상호보완적인 기능 및 역할분담에 의해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서울대도시권의 공간구조를 구축한다.

과제1 광역철도망계획과 서울시 중심지간의 정합성 추구

전략 1. 전략개발거점으로써 고속전철, 광역전철 등 광역철도의 결절점에 위치한 부도심의 기능 강화 및 도시환경정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한다.

전략 2. 도시철도의 역세권에 해당하는 중심지육성에 우선순위를 두어 대중교통의 역할을 강화한다.

과제2 서울대도시권내 도시간 기능 및 역할 분담

전략 1. 서울에 중추기능, 국제기능, 지식정보 등 고부가가치산업의 기능 및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집적효과를 극대화한다.

6. 공간구조 구상 및 중심지체계

1) 공간구조 구상

• 기존 중심지체계의 존중으로 정책일관성 유지

- 공간구조구상은 장기적 안목에서 지속적으로 일관성있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존의 중심지체계를 바탕으로 이미 다양한 도시계획사업 및 개발사업이 추진 중인 곳이 많아 단기간 내 잦은 개편은 현실적으로 많은 부작용이 예상된다. 따라서 본 구상에서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2011년 계획에서 제시된 공간구조 개편구상의 핵심취지를 가능한 살려서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한다.

• 서울 대도시권의 광역생활권에 부응하는 중심지기능 강화

- 서울내부로 보면 서울은 한강과 남북종단 산악지형으로 도심과 4개의 대생활권으로 구분될 수 있다. 그러나 대도시권의 광역화에 따라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생활하는 통근패턴 등을 고려할 때 서울의 대생활권은 행정구역 범위를 벗어나 주변 도시들을 포함하는 광역생활권이므로 직주근접형 도시구조를 실현하기 위해 이러한 광역 대생활권은 장기적으로 구심점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도심, 영동, 영등포, 왕십리-청량리, 용산, 상암·수색 부도심을 중심으로 하는 광역 생활권 체계를 구축하고 광역생활권의 중심지로써 부도심 기능을 지속적으로 육성·보강한다.

• 세계화, 정보화 및 남북교류진전에 대응한 전략거점 육성

- 상암·수색지역은 인천국제공항과 직접 연계되는 국제업무축상에 있으며 고속전철과 경의선이 직결되는 교통결절점으로 입지여건상 남북교류의 전략거점에 해당한다. 또한 월드컵공원, DMC개발이 예상되는 바 서북생활권의 신부도심으로써 역할 및 기능을 전략적으로 육성한다.

• 향후 공간구조상 중요한 전략거점 육성 및 생활권별 중심기능 강화와 낙후지역의 재정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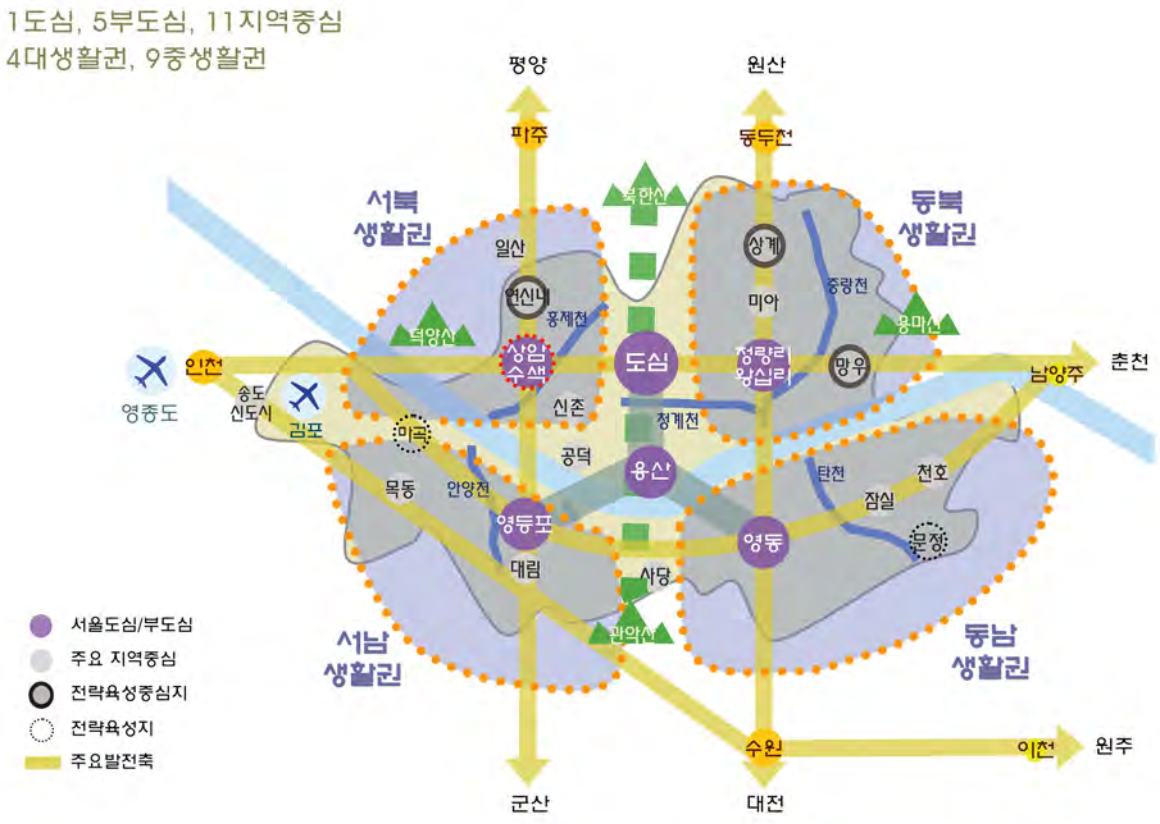
- 동북·서북생활권 및 서남생활권 일부지역의 외곽에 입지한 중심지를 전략적으로 육성하여 서울 내부에서 구조적으로 발생하는 장거리 통근구조를 바꾸어 나가는 한편, 수도권 인근지역에서 서울로 유입하는 통근인구를 흡수하여 장거리 및 교차통근의 구조적인 발생요인을 줄여간다.
- 생활권별 중심기능 및 고용기반 강화로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낙후지역의 주거환경 여건을 체계적으로 개선해 간다.

• **장기적인 안목으로 친환경적인 도시공간구조 구축**

- 광역도시철도체계와 서울의 다핵공간구조를 연계하여 대도시권을 보다 자원절약형인 공간구조로 유도한다.
- 장기적 관점에서 서울의 외4산, 내4산 등 외곽의 녹지거점 및 한강의 수경축과 시가지내 녹지공간을 서로 연계하여 생태녹지 네트워크를 구축해간다.
- 청계천 복원사업을 계기로 고도의 역사문화를 간직한 도심기능을 살려나가고 대중교통중심체계로의 대전환을 추구해간다.

• **중생활권별 지역중심의 기능 강화**

- 대중교통수단의 결절점 및 역세권에 입지한 지역중심의 기능을 강화하여 부도심기능을 보완함과 동시에 생활권별로 대중교통 지향적인 직주근접형 도시구조를 구축해간다.



[그림 III-10] 서울시 공간구조구상 개념도

2) 생활권 구분 및 중심지체계 계획

(1) 생활권 구분

- 서울은 한강과 남북종단 산악지형에 도심권과 4개 대생활권으로 구분된다.
- 대생활권은 한강과 주요 산악에 의한 지형, 통행패턴에 의한 활동구조의 연계 등을 고려하여 도심권과 함께 동북생활권, 동남생활권, 서북생활권, 서남생활권으로 구분한다.
- 이러한 대생활권은 공간적으로는 서울시를 중심으로 구획한 권역이나 기능적으로는 수도권의 도시들과 통근연계 등 실질적인 주민활동 영역을 고려하면 서울시뿐만 서울대도시권의 광역생활권으로써 의미를 갖는다.
- 중생활권은 일상생활이 상호 연계된 공간범위로써 대생활권을 세분하여 2~4개의 자치구(학군중심)를 하나의 범위로 하여 도심권과 8개 생활권으로 구분된다.

[표 III-3] 생활권 구분

대생활권	중생활권	자치구
도 심 권	도심권	중구, 종로구, 용산구
동북생활권	동북1생활권	동대문구, 성동구, 광진구, 중랑구
	동북2생활권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서북생활권	서북생활권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서남생활권	서남1생활권	강서구, 양천구
	서남2생활권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서남3생활권	동작구, 관악구
동남생활권	동남1생활권	서초구, 강남구
	동남2생활권	송파구, 강동구

(2) 중심지체계 계획

- **기본 전략**
  - 2011년 도시기본계획의 중심지체계는 지구중심이 다소 과도하게 설정되었다는 등 문제점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중심지체계를 대상으로 이미 많은 도시계획사업이 추진 중이거나 결정된 바 있을 뿐만 아니라, 중심지 육성은 장기적 시각에서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
  - 따라서 정책일관성의 유지를 위해 기본적으로 기존 중심지체계를 수용하되 상암/수색지역은 DMC 건설이 추진 중이므로 서북생활권의 중심으로써 신부도심으로 승격하여 1도심 5부도심 11지역중심 53지구중심의 중심지체계로 구성한다.

- 또한 “전략적 육성중심지” 개념을 도입하여 강북지역의 중심지 육성에 우선권을 부여하고 다핵화 및 직주근접화 실현을 위하여 생활권별 중심지 육성을 위한 장기전략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다.

• **도심**

- 도심은 600년의 역사를 지닌 4대문을 중심으로 한 기존의 도심지역이 해당된다. 도심은 국가중추기관이 밀집된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국심일 뿐만 아니라 서울대도시권의 주핵으로써 역사·문화 자원이 풍부하고 제1금융권, 기업본사 등 현대적인 업무 및 상업기능이 집적되어 있다.
- 도심은 특유의 역사성과 입지매력을 살려가도록 현재의 규제중심에서 탈피하여 공공의 재정투입 및 민간투자를 유도하여 환경의 질을 개선하며 동북아 중심의 국제도시 서울의 얼굴로써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국제금융센터, 업무상업, 도시형산업 기능을 유지·보강하고 국심으로써 중추기능 역할을 담당한다.
- 청계천 복원사업을 계기로 600년 고도의 역사·문화가 잘 보존되고 친환경적인 공간을 조성하며, 대중교통중심체계로 전환하여, 걷고 싶고 인간적인 분위기를 간직하도록 한다. 또한 도심 주거기능을 보완하여 24시간 움직이는 매력있고 활력이 넘치는 거리로 발전하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 **부도심**

- 부도심은 서울시를 도심과 4개의 대생활권으로 구분할 때 대생활권역별 핵에 해당하며 서울대도시권의 도심의존도를 완화하고 다핵분산형 공간구조로 개편하기 위해 서울시 생활권은 물론 서울대도시권 배후도시의 중심지 역할을 수행한다.
- 부도심은 국제화 및 정보화에 대응하여 국제업무기능, 고차서비스 기능 등 도심기능의 일부를 분담하고, 대생활권역 및 수도권 배후도시의 고용중심지로써 역할을 강화하며, 수도권에서 도심으로 유입되는 교통을 흡수함으로써 직주근접화를 실현한다.
- 부도심 대상지는 대생활권역의 중심 역할과 대중교통 결절점을 고려하여 도심권은 용산, 동북생활권은 청량리·왕십리, 동남생활권은 영동, 서북생활권은 상암·수색, 서남생활권은 영등포로 한다.

용산구의 역사주변 및 미군부지 일대

도심, 영동, 여의도의 3핵을 연결하는 중심축상의 전략요충지로써 고속전철의 중앙역사가 입지하게 되어 서울역, 인천국제공항과도 직결되는 곳이다. 또한 용산역사는 서울역과 바로 인접해 있으므로 도심기능과 연계하여 서울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거점 역할을 수행하고 국제첨단정보업무기능을 확충하여 도심의 기능을 상호 보완한다. 이를 위해 고속철도의 중앙역사, 신공항철도, 광역철도를

일체화하여 3핵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그 일대를 용산공원 및 한강의 자연요소와 연계된 국제 업무기능 중심의 쾌적한 신 부도심으로 조성한다. 용산부도심은 국제업무기능을 주용도로 하여, 회의·호텔·상업·편익· 문화 및 주거기능 등 복합개발로 유도하고 24시간 활동이 가능한 중심지로 육성한다. 특히, 미8군 기지는 장래 이전시 이전 부지의 합리적인 활용을 위해 장기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한다. 계획수립시 북한산-남산-용산-한강-관악산을 연결하는 생태녹지축을 반드시 고려하여 도심의 공원·녹지 기능을 주용도로 설정하여 장기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한다.

청량리·왕십리 부도심 일대

서울시 다핵화 정책의 방향에 따라 동북생활권의 부도심으로써 역할을 강화한다. 현재 개발가능지가 부족한 현실을 반영하여 이전적지 등 개발가능지가 아파트 등 주거기능 위주로 개발되는 것을 가능한 지양하고 미약한 부도심 기능의 입지를 적극 유도한다. 특히, 남북발전축상에 위치한 청량리 일대에는 도시철도의 결절점으로써 경원선, 수도권 광역철도 및 경전철과 연계하고 고용중심지로써의 기능을 강화하되 장래 통일을 대비한 남북교류의 거점기반으로써 역할도 담당한다.

마포구의 상암·은평구 수색 일대

서북생활권의 중심지로써 미래지향적 신 부도심으로 승격하되 국제업무축상의 입지특성을 고려하여 첨단 디지털 멀티미디어 기능으로 특화한다. 경의선 복원과 개발계획이 수립중인 개성공단과 연계 강화 등 일련의 국책사업과도 연계하여 남북교류의 전략거점으로써 역할도 반드시 고려하도록 한다.

영등포의 부도심 일대

서남생활권의 중심으로써 수도권 서남부지역의 산업기반을 지원하는 부도심 역할을 담당한다. 여의도에는 증권·보험 등 제2금융권 및 업무기능이, 영등포역 주변에는 상업기능이 집적되어 있다. 또한 배후지인 준공업지역에는 산업생산 기반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상업기능이 다양한 장소에 분산되어 입지하는 지역 특성을 보이므로 서울시 및 수도권의 도시형 산업을 지원하는 역할을 유지·강화하여 서울시의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한다. 특히, 오랜기간 구축되어 온 산업집적기반을 유지하고 민원을 야기하는 주공혼재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준공업지역의 공장 이전적지가 대규모 주거단지로 무분별하게 전환되는 것을 제어하도록 한다.

영동 부도심 일대

서울의 동남권과 수도권 남부지역을 영향권으로 하는 광역생활권의 부도심 역할을 담당한다. 영동지역은 1990년대에 도심을 능가하는 수준의 국제업무, 첨단정보산업, 전시·숙박 등 고차서비스업의 중심지로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 따라서 주변의 잠실, 천호 등지의 성장추세에 따라 지속가능한 발전은 유지하되 교통혼

잡 등을 고려하여 향후 개발의 밀도나 속도는 주변지역의 기반시설과 연동하여 도시성장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간다. 개발압력이 테헤란로와 강남대로를 중심으로 한 주요 업무 핵지역으로 집중되도록 유도하여 집적경제의 이점을 도모하되 개발제한구역 등 주변지역으로 과도하게 확산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또한 주요 간선가로변 상업기능이 내부에 위치한 주거지역으로 침투하여 양호한 주거환경을 훼손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 **지역중심**

- 지역중심은 중생활권의 중심으로써 대생활권의 중심인 부도심보다는 위계가 낮지만 부도심의 일부 기능을 분담하여 그 영향권이 자치구를 넘어 서울대도시권의 배후도시까지 미친다.
- 지역중심은 서울시 다핵화정책의 방향에 부합하며 서울시 교통문제의 해소 등을 위해 중생활권의 중심지로 역할 부여가 바람직한 곳에 제한적으로 지정하며 부도심을 위치적으로 보완한다.
- 지역중심의 검토후보지는 대상지의 통근 영향력이 중생활권 차원에 미치는 곳, 주요 개발축상에 위치하고 있어 성장잠재력이 높은 곳, 전철 환승역 등 대중교통의 주요 결절점에 위치한 곳, 장거리통근의 해소를 위해 고용기반의 조성이 필요한 전략적 요충지 중에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2011년 도시기본계획상 중심지체계는 가능한 유지하도록 한다.
- 중생활권별로 지역중심의 대상지는 다음과 같다.
    - 동북1생활권 : 망우(전략육성중심지)
    - 동북2생활권 : 상계(전략육성중심지), 미아
    - 서북생활권 : 연신내(전략육성중심지), 신촌, 공덕
    - 서남1생활권 : 목동
    - 서남2생활권 : 대림
    - 동남1생활권 : 사당·남현
    - 동남2생활권 : 잠실, 천호·길동

• **지구중심**

- 자치구단위의 중심지에 해당하는 곳으로써 주민의 일상생활 편의를 지원하기 위한 근린생활 기반의 조성이 바람직한 곳에 기존의 중심성과 역사성, 장래 발전잠재력, 대중교통에 의한 접근성, 자치구간 형평성, 지역균형발전, 타 중심지와의 인접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한다.
- 기존의 지구중심은 다소 과도하게 설정되었으나 이미 도시계획사업이 추진 중인 곳

이 많고 정책의 일관성 차원에서 2011년 도시기본계획상 중심지체계를 유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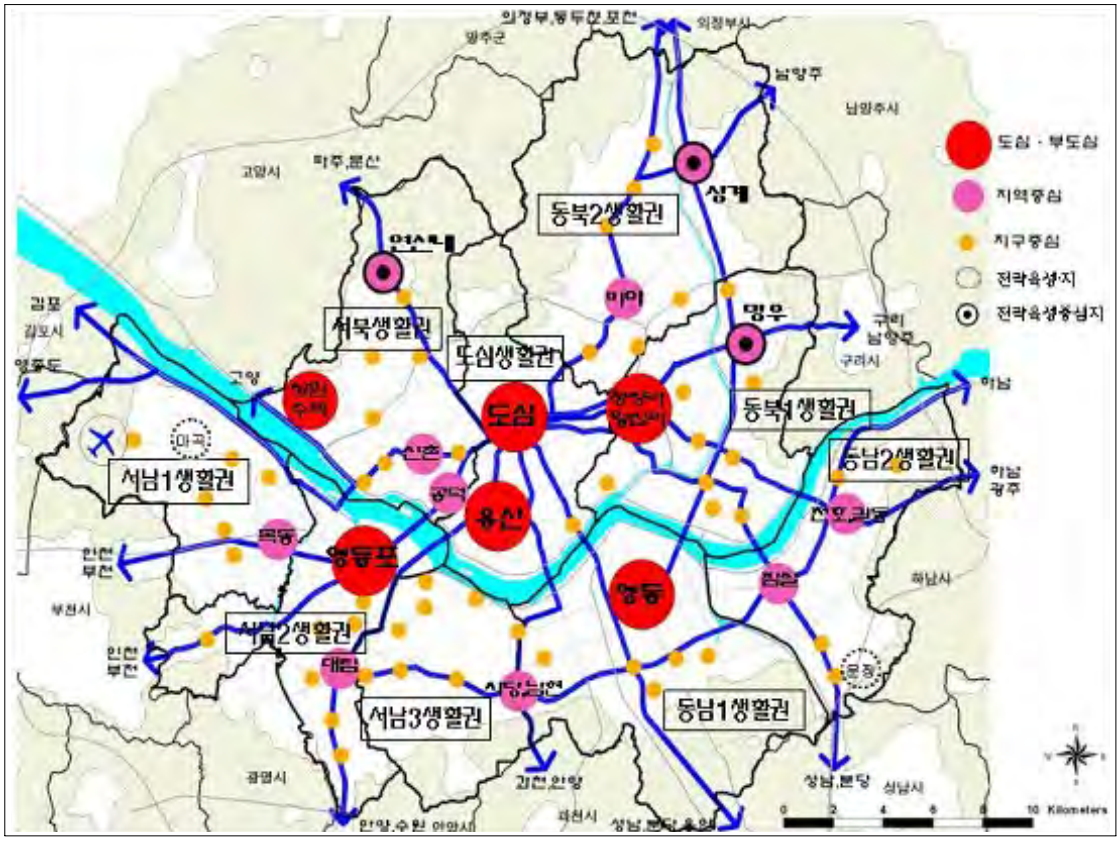
- 도시철도의 주요 역주변 등 간선교통망의 결절점 중에서 지정하되 타 중심지의 분포를 고려하여 자치구별로 1～2개소 지정을 원칙으로 한다.

- 중생활권별로 지구중심의 대상지는 다음과 같다.

  · 도　심　권 : 한남
  · 동북1 생활권 : 묵동, 전농, 면목, 군자, 중곡, 화양, 건대입구, 구의, 금호
  · 동북2 생활권 : 방학, 쌍문, 수유, 동선, 종암, 석관
  · 서북　생활권 : 불광, 응암, 홍제, 남가좌, 합정, 서교, 아현
  · 서남1 생활권 : 공항, 화곡, 등촌, 신월, 신정, 신정사거리
  · 서남2 생활권 : 오류, 신길, 신풍, 구로, 가리봉, 독산, 시흥
  · 서남3 생활권 : 노량진, 상도, 신대방, 흑석, 난곡사거리, 신림, 봉천
  · 동남1 생활권 : 방배, 양재, 이수, 개포, 도곡, 수서
  · 동남2 생활권 : 가락, 문정, 암사, 고덕

[표 III-4] 중심지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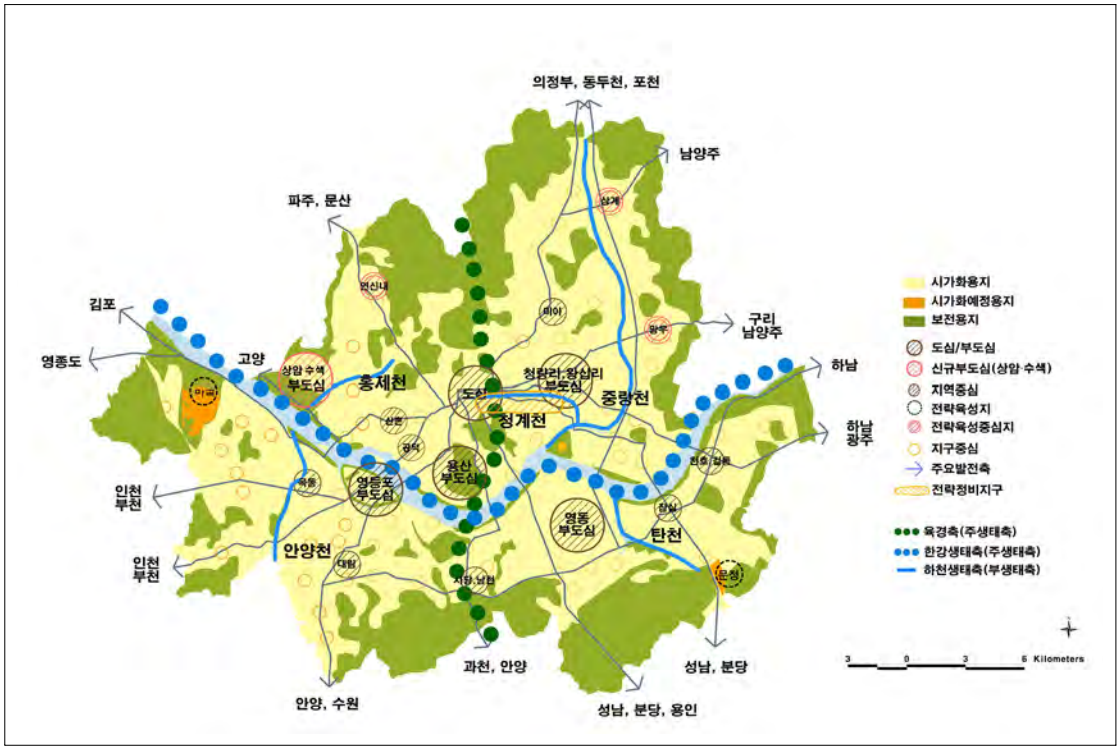
구 분	도심	부도심	지역중심	지구중심	자치구
도심권	도심	용산		한남	종로구 용산구 중구
동북권		청량리·왕십리	망우 미아 상계	전농, 군자, 금호,화양, 중곡, 구의 건대입구 묵동, 면목 종암, 동선, 석관 수유, 방학, 쌍문	동대문구 성동구 광진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서북권		상암·수색	연신내 신촌 공덕	불광, 응암 남가좌, 홍제, 아현, 서교, 합정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서남권		영등포	목동 대림	신정4거리, 등촌 신월, 신정, 화곡, 공항, 오류, 구로, 가리봉, 독산, 시흥, 신길, 신풍 상도, 노량진, 신대방, 흑석 신림, 봉천 난곡사거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동남권		영동	사당·남현 잠실 천호·길동	방배, 양재, 이수 도곡, 개포, 수서 가락, 문정 암사, 고덕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계	1	5	11	53	25



[그림 III-11] 서울시 중심지체계도

3) 용도지역의 조정 방향

- 용도지역은 공간구조상 중심지체계에 적합하도록 지정하되 2011년 계획에서 제시된 중심지 위계별 획일적인 조정방안은 지양하도록 한다.
- 용도지역의 조정은 도시기본계획의 정책방향 및 기본취지와 잘 부합되도록 한다. 즉, 도시기본계획의 중심지체계상 위계를 적극 참고하되, 주변지역의 기반시설 여부, 적정개발 수용량 등 주변지역의 여건을 동시에 고려하여 용도지역 조정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조치하고 지역별 특성화를 유도한다.
- 용도지역의 조정은 타당한 근거가 제시될 경우에 한하여 도시계획 절차에 의해 조정한다. 이때, 공간구조상의 기본취지에 맞추어 개발잠재력과 기반시설 수용용량의 검토, 용도지역의 조정이 대상지 및 주변지역에 미칠 영향과 저감방안, 대상지의 환경친화적 정비방안 등을 근거자료로 제시하도록 한다.
- 기성시가지의 도시경관과 개발밀도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서울시 상업지역의 '주요 간선가로구역을 가능한 가로구역별 높이기준'을 반영하도록 한다.



[그림 III-12] 서울시 도시기본구상도

제2부 부문별 기본계획

Ⅰ. 생활권계획
Ⅱ. 토지이용계획
Ⅲ. 재건축 · 재개발계획
Ⅳ. 교통 및 물류계획
Ⅴ. 정보통신계획
Ⅵ. 산업경제계획
Ⅶ. 주택계획
Ⅷ. 환경보전계획
Ⅸ.공원녹지계획
Ⅹ.경관계획
Ⅺ. 사회개발계획
Ⅻ. 방재계획

Ⅰ. 생활권계획



1. 생활권계획의 필요성
2. 생활권의 설정 및 구분
3. 생활권별 계획방향
4. 생활권별 기본구상

1. 생활권계획의 필요성

1) 생활권계획의 성격

- 생활권이란 특정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활동범위로써, 통근·통학·쇼핑·여가·친교활동 등을 위한 공간적 범위를 말한다. 생활권의 공간적 범위는 도시 및 중심지의 위상과 영향력, 활동의 목적과 성격, 이용하는 시설의 서비스권역에 따라 각각 다르게 나타난다.
- 일반적으로 생활권은 그 위계와 공간적 범위에 따라 근린 또는 행정동 단위의 소생활권, 일정 규모의 상업·업무기능을 갖춘 중생활권, 그리고 자치구 혹은 부도심 이상의 기능을 수행하는 대생활권 등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생활권별 공간범위와 인구규모는 도시의 여건과 규모에 따라 달라진다.
- 이렇게 볼 때, 생활권계획이란 일정한 공간적 범위를 갖는 생활권역을 대상으로 그 지역의 자연적·물리적 생활환경의 특성을 고려하고 지역주민들의 연령·계층·문화적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해당 권역의 발전방향과 정책목표, 추진전략 등을 제시하는 계획이라고 할 수 있다.

2) 생활권계획의 필요성

중간적인 차원의 공간계획 필요

현행 도시계획체계는 계획의 공간범위와 구체성에 따라 광역도시계획-도시기본계획-도시관리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의 체계로 이루어져 있다. 서울과 같은 거대도시의 경우,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한 광역적이고 종합적인 계획내용을 생활권 단위에서 구체화하고, 법적 구속력을 갖는 도시관리계획과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해당 권역 및 주변 지역의 발전방향과 정책목표를 제시해줄 수 있는 중간적 차원의 공간계획이 필요하다.

자치구별 구상을 조정하는 계획 필요

서울은 25개 자치구로 이루어진 광역단위의 행정복합체이다. 이에 따라 각 자치구들은 자신들의 행정구역을 대상으로 자치구 발전구상을 수립하여 보다 나은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자치구간에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특정 시설의 입지에 대해 중복 투자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인접한 자치

구별 발전구상을 생활권 차원에서 조정·보완하는 계획이 필요하다.

지역특성을 반영한 관리체계 마련 필요

서울은 생활권 혹은 지역별로 서로 다른 물리적·자연적 특성과 시가지 여건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일률적인 조례와 기준 등에 의해 획일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향후에는 지역별 특성과 여건에 따라 물리적 환경을 보다 세심하게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고, 생활권 차원에서 해당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적절하게 반영하는 관리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3) 생활권계획의 역할

-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부문별 계획과제를 각 생활권별로 종합하여 재구성함으로써, 향후 자치구의 미래상과 주요 계획과제를 설정하는데 방향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을 자치구 계획이나 발전구상에 체계적으로 반영시켜 추진할 수 있게 된다.
- 자치구 계획이나 발전구상에서 제기된 주요 계획과제 중 서울의 전체적인 계획방향과 일치하는 내용을 도시기본계획의 생활권계획에 반영하여 서울시와 관련부서, 그리고 자치구간에 추진해야 할 목표를 분명하게 함으로써, 계획의 실현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
- 점차 심화되고 있는 서울시 지역간 불균형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생활권의 문제를 심층적으로 파악하여 전략적인 공공투자와 중점정비의 기회를 부여하고, 지역별 특성을 살려갈 수 있는 특화사업을 발굴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2. 생활권의 설정 및 구분

• 생활권의 공간범위는 지형·지세, 하천, 도로 등의 자연적·물리적 환경뿐만 아니라 도시의 성장과정과 영향권, 중심지 기능과 토지이용 특성, 행정구역과 교육학군, 주거지와 거주인구의 특성, 관련계획 등을 고려하여 설정한다.

[표 I-1] 생활권 설정의 기준요소

구 분	분석항목	관련자료 및 지표
자연·물리적 환경	- 지형, 지세, 주요 하천 - 철도, 도시고속도로, 도시간선도로	
도시성장·영향권	- 시가지의 형성과정 - 도시간선도로축 - 통근OD에 의한 이용권역 분석	- 도시개발사업 현황 - 도로망, 철도망 통행량 - 통근OD
중심지 기능 및 토지이용 특성	- 교통특성 분석을 통한 중심성 - 건축물의 용도별 구성	- 건축물 재산세 과세자료 - 목적통행자료 등
행정구역·교육학군	- 행정구역의 변천과정 - 교육학군	- 자치구·행정동 변화 - 중고교 학군현황
주거지 및 거주인구 특성	- 인구·가구 및 주거지 특성 - 생활환경수준의 분석	- 연령, 학력별 인구구조 - 가구특성 - 1인당 주거면적, 주택유형, 주택건축년도 - 소득수준 등
관련계획	- 광역계획 등	

• 서울은 한강 수변축을 기준으로 강남·강북으로 구분되며, 북한산·남산·관악산 등 남북 종단의 지형과 행정구역 등을 기준으로 도심권과 4개 대생활권, 그리고 9개의 중생활권으로 구분된다.

• 대생활권은 한강과 주요 산에 의한 지형조건, 교통 및 행정구역 등에 의한 지역간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도심권과 동북생활권, 동남생활권, 서북생활권, 서남생활권 등 5개 대생활권으로 구분된다.

• 대생활권에는 적게는 3개에서 많게는 8개의 자치구를 포괄하고 있는 등 공간범위가 광범위하므로, 행정구역과 교육학군 등을 고려하여 대생활권내 2-4개의 자치구를 하나의 공간범위로 세분하는 중생활권을 설정한다. 중생활권은 도심권, 동북 1·2권, 서북권, 서남 1·2·3권, 동남 1·2권 등 9개로 구분된다.

[표 I-2] 생활권 구분

대생활권	중생활권	면적(㎢)	인구(명)	자치구
도 심 권	도 심 권	55.75	583,923	중구, 종로구, 용산구
동북생활권	동북1생활권	66.62	1,567,348	동대문구, 성동구, 광진구, 중랑구
	동북2생활권	104.39	1,826,767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서북생활권	서북생활권	71.19	1,222,753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서남생활권	서남1생활권	58.80	1,009,637	강서구, 양천구
	서남2생활권	57.68	1,090,434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서남3생활권	45.92	937,534	동작구, 관악구
동남생활권	동남1생활권	86.70	944,021	서초구, 강남구
	동남2생활권	58.46	1,148,827	송파구, 강동구
서 울 시		605.52	10,331,224	

자료 : 서울시, 서울통계연보, 2002.



[그림 I-1] 생활권의 구분(5개 대생활권, 9개 중생활권)

3. 생활권별 계획방향

- 서울의 생활권을 도심권과 4개 대생활권 등 5개 대생활권으로 구분하여 수립하되, “지역특성과 균형발전이 구현된 도시”의 조성을 정책목표로 한다.
- 이를 위해 첫째, 생활권별 중심기능을 강화하면서 지역간 균형잡힌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둘째, 지역별 특성화를 통해 정체성 확보와 지역 이미지 제고에 주력하며, 셋째, 지형과 자연환경을 고려한 친환경적 도시정비를 추진하는 것을 계획의 기본방향으로 삼는다.

계획방향

지역간 균형잡힌 생활환경 조성과 생활권별 중심기능 강화

점차 심화되고 있는 서울의 지역간 불균형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생활권별 균형발전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생활권별로 중심지 기능을 체계적으로 육성**하여 고용기반을 확충하고, 낙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문화복지시설 등 생활권별 **커뮤니티시설을 생활권의 규모와 특성에 맞게 확충**해감으로써, 시민들이 다양한 문화체육활동과 사회복지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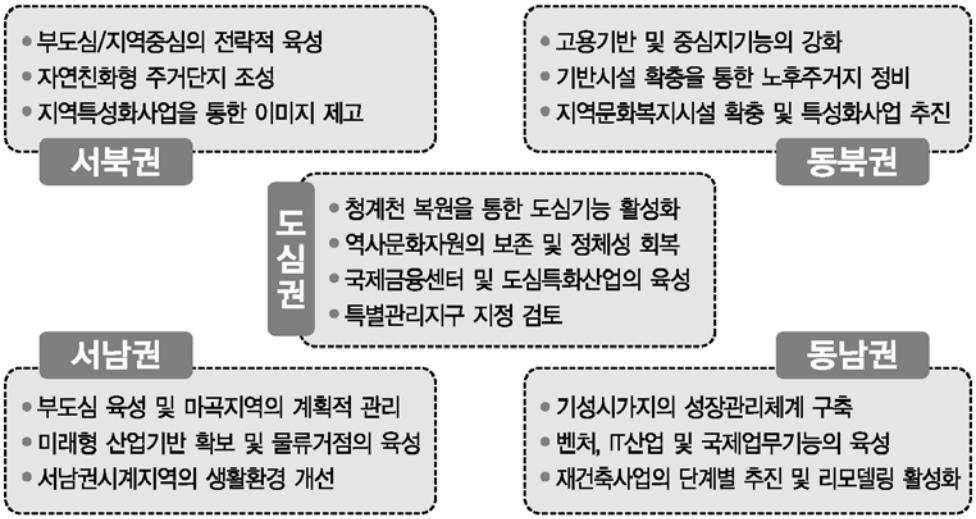
지역별 특성화를 통한 정체성과 이미지 제고

서울은 지역별로 다양한 특성과 역사문화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활용하여 지역별 특성을 강화하고 지역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소홀히 해왔다. 서울의 지역별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해 **역사문화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지역의 이미지를 대표할 수 있는 특성화전략**을 마련한다.

지형과 환경을 고려한 친환경적 도시정비 추진

서울은 외4산과 내4산 등의 산지와 구릉지, 한강·청계천·중랑천 등 수려한 자연환경을 지닌 기성시가지이다. 지형적 조건과 자연환경을 고려한 친환경적인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쾌적하고 지속가능한 생활환경을 조성해가도록 한다.

지역 특성과 균형발전이 구현된 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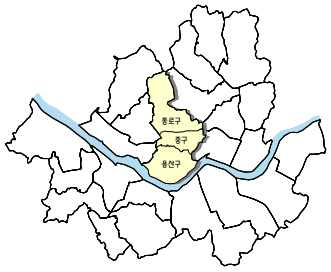
[표 I-3] 생활권별 특성과 계획방향

대생활권	중생활권	자치구	생활권별 특성과 과제	계획방향
도심권	도심권	중 구 종로구 용산구	• 국가행정, 외교, 경제 등 중추기능 집중 • 600년 전통의 역사문화유산 집중 • 전통과 현대문화가 공존하는 공간 • 도심부 거주인구의 지속적인 감소 • 구시가지로써 물리적 환경의 노후화	• 청계천 복원을 통한 도심기능 활성화 • 역사문화자원의 보존 및 정체성 회복 • 국제금융센터, 도심특화산업의 육성 • 특별관리지구 지정 검토
동북권	동북1생활권	동대문 성동구 광진구 중랑구	• 도심과 동북부 시외지역을 연결하는 관문 • 수려한 자연경관 보유 • 대규모 아파트단지와 기성시가지내 노후주거지 혼재 • 교통기반시설 및 각종 생활편익시설 부족 • 대학 등 교육기관과 연구기관 산재	• 고용기반 및 중심지기능 강화 (청량리-왕십리, 상계·망우, 미아 등) • 기반시설 확충 및 노후주거지 정비 • 지역문화복지시설 확충 및 특성화사업 추진
	동북2생활권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서북권	서북생활권	은평구 서대문 마포구	• 도심과 서북부 외곽지역을 연결하는 관문 • 풍부한 자연녹지 보유 • 저층위주의 노후한 기성시가지 • 상업문화기능 및 대학 집중	• 부도심/지역중심의 전략적 육성 (상암 부도심, 연신내 지역중심 등) • 자연친화형 주거단지 조성 • 지역특성화사업을 통한 이미지 제고
서남권	서남1생활권	강서구 양천구	• 도심과 외곽 남서부를 연결하는 교통요충지 • 여의도 : 정치, 금융, 언론기관 집중 • 권역내 산업기반 잠식 및 소규모 공장 등 산재 • 기반시설 미비, 노후불량주택 밀집, 주거·상업·공업기능 혼재와 생활편익시설 부족	• 부도심(영등포) 육성 • 마곡지역의 계획적 관리 • 미래형 산업기반 확보 및 물류거점의 육성 • 서남권 시계지역 및 주공혼재지역의 생활환경 개선
	서남2생활권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		
	서남3생활권	동작구 관악구		
동남권	동남1생활권	서초구 강남구	• 도심과 서울 남부지역을 연결하는 요충지 •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을 통해 계획적으로 개발된 시가지 • 국제업무 및 IT·벤쳐기능 급성장 • 대규모 중·저층아파트의 재건축시기 도래 •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 및 생활수준	• 계획적인 성장관리체계 구축 필요 • 벤쳐, IT, 국제업무기능의 체계적 육성 • 재건축 단계별추진 및 리모델링 활성화 • 다양한 문화활동의 기회 확대
	동남2생활권	송파구 강동구		

4. 생활권별 기본구상

도심권

서울 도심부 특유의 자연환경, 역사성, 문화자원 등 "서울의 정체성"을 회복해가면서 도심부의 "경제적 활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심부 개발을 세심하게 관리·유도한다. 또한 장래 용산 부도심과의 연계 및 기능분담에 대비한다.



1) 지역현황과 특성

도심권의 기능과 위상

- 도심권은 종로·중구·용산구 등 도심 3구를 포함하는 권역으로, 2000년 현재 상주인구는 약 58만여명(서울시 전체의 5.6%), 주간인구는 약 102만명에 달한다. 상주인구 대비 주간인구의 비율을 나타내는 주간인구비율이 198%로(서울시 평균 105%) 5개 대생활권 중 가장 높은 고용중심지이다.
- 사대문안 도심부는 1394년 조선 왕조의 도읍으로 정해진 이래 지금까지 600여년 동안 우리나라의 수도(首都)로 기능해 온 중심지이다. 정부기관과 기업본사가 모여 국가의 경제성장을 주도하는 경제활동의 중심지이자, 1천만 서울시민의 생활중심지이기도 하다. 또한 역사문화유산 등 풍부한 관광자원이 입지해 있어 세계와 교류하는 관문으로써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도심부에는 창덕궁, 종묘와 같은 세계문화유산을 비롯해 경복궁, 남대문 등 국가 및 시 지정문화재, 근대건축물 등 역사유적이 산재해 있다. 또한 공연장, 영화관, 화랑, 박물관 등 다양한 문화공간이 밀집해 있는 역사와 문화의 중심지이기도 하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 시행된 도심집중억제정책과 강남개발촉진정책 등으로 인해 강남과 여의도지역이 업무·금융 중심지로 부각되면서 도심부의 경쟁력과 위상은 점차 약화되고 있다.
- 한편, 용산지역은 중심부에 위치해 있으면서 미군기지, 철도공작창 부지 등으로 인해 낙후된 저밀지역으로 존속되어 왔다. 그러나 경부고속전철 중앙역사가 입지하고 인천공항철도와 연계되는 것을 계기로 국제업무기능을 담당할 부도심으로 육성될 예정이며, 향후 용산미군기지가 반환되면 대규모 도시공원을 조성하여 서울의 남북 녹지축을 연결하도록 계획하여야 할 것이다.

지형지세와 특성

- 도심부는 주변이 북악산(342m), 남산(262m), 인왕산(338m), 낙산(110m) 등 내4산(內四山)으로 둘러싸인 분지형 구조로 되어 있다. 1920년대까지만 해도 도심부에는 청계천을 비롯한 14개 물길과 76개의 다리가 있었으며, 도심부의 길도 옛 구조를 간직하고 있었다.
- 이에 따라 도심부는 전통적인 토지이용과 현대적인 토지이용이 혼재되어 다양하고 혼합적인 특성을 보이고 있다. 옛 도시조직을 바탕으로 규모가 작고 상호보완적인 업종과 기능들이 밀집된 특화지역과 정부기관, 기업본사, 서비스업 등 현대적인 기능들이 혼재된 특성을 보이고 있다.

2) 현안문제

도심부의 정체성과 특성 소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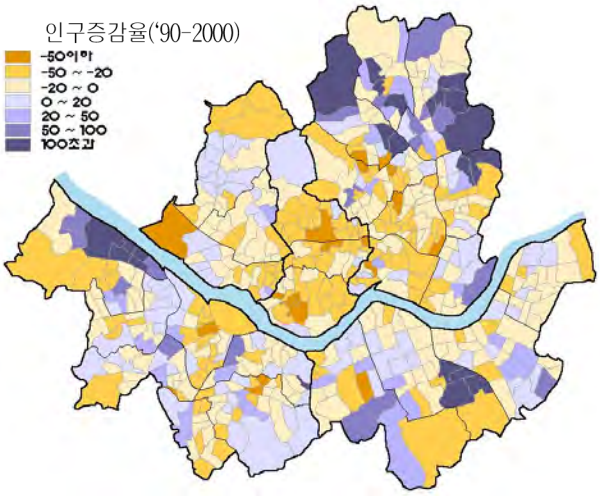
- 1970년대 이래 도심기능의 현대화라는 목표아래 추진된 전면철거 위주의 도심재개발은 도심부의 역사문화자원과 정취있는 장소를 소멸시켜 서울 고유의 정체성을 사라지게 했다. 또한 다양하고 인간적인 물리적 환경과 활력있는 가로환경을 소멸시킴으로써 서울의 도심부는 매력없는 업무중심지로 변해가고 있다.

물리적 환경의 쇠퇴와 개발 정체

- 도심부는 소규모 필지와 좁은 가로망 등 옛 도시구조로 인해 건물신축이 어려운 상태여서 개발이 정체되고 있으며, 도심재개발 미시행지구는 사업시행이 장기화되면서 건물 신축과 개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아 쇠퇴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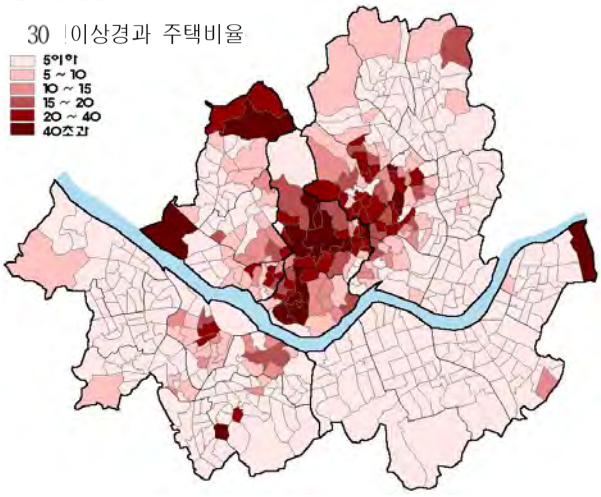
거주인구의 감소 및 도심부의 경쟁력 약화

- 1970년 이후 시행된 도심집중억제와 강남개발시책, 명문고교의 강남이전 등으로 인해 1990년 이후 10년간 사대문안 도심부 인구는 약 4만여명 감소하였으며, 같은 기간 동안 도심부 고용은 약 8만명 감소하였다. 도심부 거주인구 감소와 함께, 주거환경의 질과 주거지로써의 매력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 한편, 금융·보험기능을 비롯한 업무기능도 강남과 여의도지역으로 이전하거나 집적하여 1990년 이후에는 강남지역이 업무중심지로 부상하는 등 경제중심지로써의 도심부 경쟁력과 위상도 약화되고 있다.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1990, 2000.

[그림 I-2] 인구증감율 (1990-2000)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000.

[그림 I-3] 30년이상 경과 주택비율 (2000)

3) 여건변화 및 계획과제

청계천 복원에 따른 도심부의 역사문화·환경성 회복

- 청계천 복원은 고가도로를 철거하고 청계천을 복원한다는 물리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일제강점기와 개발의 시대를 거치면서 사라진 우리 고유의 역사자원과 문화적 흔적들, 그리고 자연환경을 되살려서 시민들에게 돌려준다는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측면에서 청계천 복원사업을 서울 도심부의 역사문화적 정체성과 환경성을 회복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도심부의 경제활력 제고를 통한 강북지역 활성화

- 1970-80년대 시행된 도심집중억제책과 강남개발촉진책은 도심부에 집중해 있던 공공기관과 학교 등을 강남으로 이전시켜 도심부에 대한 민간투자와 경제적 활력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청계천 복원을 계기로 도심부의 경제적 활력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도심부 개발에 민간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개별 토지소유주들의 자율적인 갱신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도심부 개발의 세심한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도심부의 역사성을 보존하면서 주변 내4산과 어울리는 스카이라인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도심부 개발밀도와 건물높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역특성에 적합한 정비수법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도심부의 역사성 보존과 경제적 활력 제고라는 두 가지 서로 다른 가치를 상호 존중해가면서 지역특성에 따라 보다 세밀하게 도심부를 관리해 갈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용산 부도심의 육성 및 녹자수변공간 연계

- 용산 부도심지역은 고속전철 중앙역사가 입지하는 것을 계기로 도심부와 연계된 국제업무기능으로 특화되도록 유도한다. 특히, 장래 용산 미군기지 반환에 대비한 공원화계획을 수립하여 서울의 남북녹지축을 연결하고, 한강 수변축과도 연계될 수 있도록 기본방향을 설정한다.

4) 미래상

600년 역사도시의 품격과 경제활력을 지닌 국제교류의 중심지

- 600년 역사도시로써의 독특한 매력과 품격을 가진 도심권은 서울과 국가의 중추관리공간으로써 1천만 서울시민의 생활중심지이자 고용 중심지이며, 한국이 세계를 맞이하고 보여주는 국제교류의 접점이다.
- 따라서 서울 도심부의 미래상을 600년 역사도시의 품격과 문화가 느껴지고, 경제적 활력과 다양성·생동감이 넘치며, 보행자 위주의 시민생활공간이자 세계와 교류하는 접점으로 설정하고, 서울의 정체성을 간직한 매력 있고 활력 있는 도심부로 발전시켜 나간다.

5) 정책목표 및 추진전략

목표

서울 도심부 특유의 자연환경, 역사성 문화자원 등 "서울의 정체성" 을 회복해가면서 도심부의 "경제적 활력" 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심부 개발을 세심하게 관리·유도한다. 또한 장래 용산 부도심과의 연계 및 기능분담에 대비한다.

과제1 도심부 개발의 세심한 관리

전략 1. 도심부의 지역특성을 고려한 관리틀 마련

도심부를 보존해야 할 지역과 개발·정비해야 할 지역 등 지역특성에 따라 구분하여 보다 세심하게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시책 1. 도심부의 지역특성에 따른 관리유형 마련
(특성보존지구, 자율갱신지구, 재개발지구, 종합정비지구 등)
시책 2. '도심부 특별관리지구'로 지정하여 사대문안 도심부를 특별 관리

전략 2. 내4산(內四山)과 어울리는 스카이라인 형성

내4산(內四山)으로 둘러싸인 자연경관을 보전하면서 도심부의 역사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고층개발을 억제하되, 변화 있는 스카이라인을 형성한다.

시책 1. 지역특성과 정비방식에 따라 높이기준을 강화하거나 조건부 완화
시책 2. 건물 고층부의 폭원과 형태 제한

전략 3. 도심부 개발밀도의 적정한 관리

도심부 기반시설의 개발수용 용량과 청계천 복원 후 교통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도심부의 용적률을 관리해가고, 도심부 건축물의 특성을 감안하여 계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시책 1. 현행 용적률 수준을 유지하되,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 및 균형발전
촉진지구에 대해서는 다양한 인센티브 부여
시책 2. 노후건물의 자율갱신과 수복형 정비 활성화

전략 4. 도심부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도시정비수법의 적용

도심부의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정비수법을 적용하고, 도심재개발 미시행지구의 사업 활성화를 위해 공공지원을 확대하며, 공익성 있는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개발유도기준을 마련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시책 1.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도시정비수법 적용
시책 2. 미시행지구 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 지원 확대
시책 3. 공익성 있는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개발유도기준 설정 및 인센티브 부여

과제2 청계천변 주변지역의 계획적 정비와 관리

전략 1.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정비수법 적용

청계천 주변지역은 지역별로 도심업무, 도심형 산업, 판매 등 다양한 도심기능이 집적되어 있으므로, 공공과 민간의 협력을 통해 지역특성에 맞는 정비수법을 적용한다.

시책 1. 인위적이고 과도한 정비계획 지양
시책 2. 공공과 민간의 협력을 통한 정비사업 추진
시책 3. 청계천 주변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정비수법 개발

전략 2.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유도지침 마련

청계천 주변지역의 계획적 관리를 위해 지역특성을 고려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인접 건축물에 대한 관리·유도지침을 마련하여 세심하게 관리하도록 한다.

시책 1. 지역특성을 반영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관리
시책 2. 청계천변 건축물의 관리·유도지침 마련

과제3 도심부의 역사문화적 정체성 회복

청계천 복원을 계기로 서울 도심부의 역사문화적 특성을 재인식하여 서울의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옛 도성(都城)구조의 회복과 역사문화자원의 복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전략 1. 서울 도성(都城)의 구조 회복

일제 강점기와 한국전쟁, 경제성장시대를 거치면서 사라진 서울 성곽의 흔적을 찾아 복원하고, 남북녹지축과 사직단 복원 등을 통해 옛 서울 도성의 구조를 회복한다.

시책 1. 서울 성곽 복원 및 정비사업의 단계적 추진

시책 2. 사대문안 남북녹지축과 환상녹지축의 연결

- 남북녹지축 : 창덕궁–종묘간 녹지축, 종묘–세운상가–남산구간
- 환상녹지축 : 서울성곽 복원사업과 연계, 동대문–광화문, 남대문–경희궁

시책 3. 사직단 제 모습 찾기 사업 시행

전략 2. 역사문화자원의 보존·복원 및 활용

사대문안 도심부의 거점별 역사문화자원을 연계하여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역사문화 관광벨트를 조성하고, 근대역사유산을 보존하는 등 역사문화자원의 보존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한다.

시책 1. 사대문안 역사문화거점을 연결하는 역사문화관광벨트 조성

시책 2. 북촌·인사동 가꾸기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시책 3. 근대역사유산 보존·복원사업의 적극적인 시행

전략 3. 문화지구 및 관광특구 육성·지원

문화예술과 관광산업을 지원하는 문화지구 또는 관광특구의 지정을 통해 문화산업 및 활동을 육성·지원하고, 지역별로 특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시책 1. 문화지구의 지정관리 (인사동 및 대학로 등)

시책 2. 관광특구의 지정 및 지역별로 특화된 프로그램 개발 (이태원, 명동·남대문·북창동, 동대문 일대 등)

시책 3. 전통문화행사 등 특화된 프로그램 상설 운영

과제4 도심주거기능 확충 및 활성화 방안 강구

도심주거기능의 도입을 권장하고, 노후주거지의 생활환경을 개선함으로써 도심부에 주거기능을 확충하고, 경제적 활력이 유지될 수 있도록 도심업무기능과 도심형 산업에 대한 활성화방안을 강구한다.

전략 1. 도심주거기능 확충 및 커뮤니티의 회복

점차 심화되고 있는 도심공동화 현상을 완화하고, 중산층과 전문직 종사자, 외국인 등 다양한 계층이 거주할 수 있도록 도심주거기능의 도입을 권장하고, 도심부 노후주거지의 생활환경을 개선함으로써 도심부의 거주매력도를 증진시켜 나간다.

시책 1. 도시환경정비사업(도심재개발)에서 주거기능의 도입 유도
시책 2. 도심부 노후주거지의 생활환경개선을 위한 도심 마을가꾸기사업 전개
시책 3. 도심부 및 인접주거지내 주거용 건축물의 타 용도변경 관리
시책 4. 도심부 노후학교의 시설개선사업 추진

전략 2. 도심산업의 고도화 및 활성화

도심부를 국제적인 중심업무기능과 문화IT·관광·영상·광고·패션·유통산업이 복합된 21세기 신산업지구로 육성한다.

시책 1. 청계천변 대규모 재개발지역에 도심복합타운 조성
(예 : 국제금융·비즈니스, 문화·IT·관광·주거 등 복합타운 조성)
시책 2. 도심형 산업(인쇄출판, 의류패션 등)의 지원을 통해 다양하고 적응력 높은 경제기반의 유지·강화
시책 3. 도심형 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도심환경개선사업 추진

전략 3. 도심교통체계 개편과 보행환경 개선

도심부의 교통체계를 대중교통 위주로 개편하고, 도심광장 및 보행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등 중장기 도심교통체계 개편구상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시책 1. 도심의 광역접근성 강화(예 : 도심–용산–강남 직결노선) 및 내부순환노선(예 : 서울역–도심–동대문 순환노선) 운영
시책 2. 횡단보도 확충 및 주요가로의 보행환경 개선사업 실시
시책 3. 도심광장 보행화 및 서울시민가로 조성

과제5 용산 부도심 육성 및 녹지·수변공간 연계

전략 1. 용산 부도심의 육성 및 도심과 연계된 업무회랑 조성

고속전철 중앙역사가 입지하는 용산 부도심지역은 도심기능을 분산·수용할 수 있도록 국제업무단지를 조성하고, 도심과 연계되는 업무회랑으로 육성해간다.

시책 1. 용산 부도심지역을 국제업무지구로 육성

시책 2. 서울역–삼각지–용산지역을 도심과 연계된 업무회랑으로 육성

시책 3. 용산역 주변지역 및 배후 노후주거지의 정비

전략 2. 서울의 육경축 및 녹지체계 연결

장차 반환될 미군 부지를 대규모 공원으로 조성하여 북한산–남산–용산–한강–관악산으로 연결되는 서울의 남북녹지축을 완성하고, 한강 수변공간과의 연계방안을 마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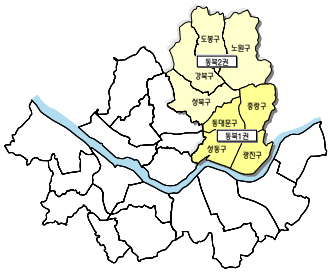
시책 1. 용산 미군기지를 공원화하여 서울의 남북녹지축 연결

시책 2. 용산역–용산공원–한강로를 연계하는 녹지체계 구축

시책 3. 한강 수변공간과의 연계성 확보

동북권

청량리-왕십리 부도심을 중심으로 고용기능과 중심지 기능을 강화하고, 권역 내 산재 해 있는 노후주거지의 지속적인 정비, 기반시설과 문화 복지시설 등을 확충해감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해간다.



1) 지역현황과 특성

동북권의 기능과 위상

- 동북권의 상주인구는 2000년 현재 340여만명으로 서울시 인구의 32.8%를 차지하고 있다. 동북권은 동북1권(동대문·성동·중랑·광진구)과 동북2권(성북·강북·도봉·노원구)의 2개 중생활권으로 구분된다.
- 동북1권은 1950-60년대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통해 형성된 지역과 구릉지 주변에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시가지가 혼재되어 있으며, 동북2권의 노원·중랑구는 1980년대 택지개발사업을 통해 조성된 주거지 위주로 개발되어 있어서 권역 내 고용기반이 취약한 실정이다.
- 동북권은 주변이 북한산, 도봉산, 아차산 산지와 구릉지로 둘러싸여 있으나, 생활권 내 고용기반과 중심지의 발달이 취약한 문제를 안고 있으며, 동부간선도로의 과부하문제, 개별 사업단위로 이루어지는 재개발·재건축사업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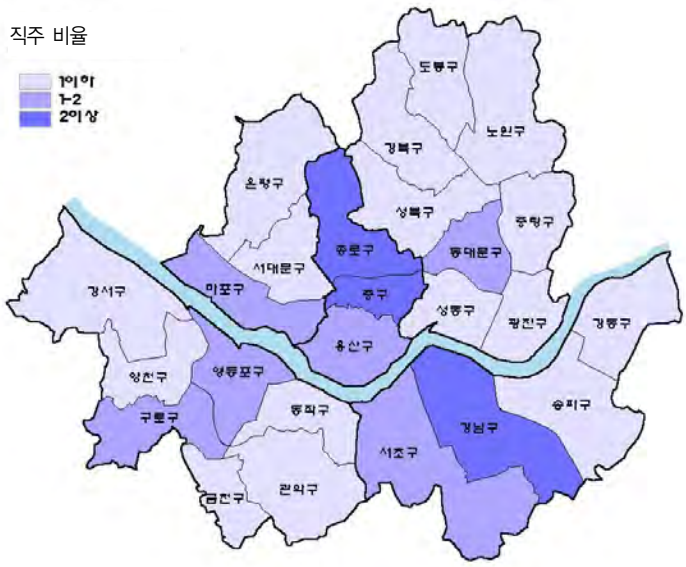
지형지세와 특성

- 동북권 주변에는 북한산, 도봉산, 수락산, 불암산, 아차산 등 수려한 자연환경이 위치하고 있으며, 그 사이로 중랑천이 흐르고 있다. 이러한 지형적 조건으로 인해 중랑천을 따라 흐르는 바람의 흐름은 도봉산·아차산·수락산에서 형성된 산골바람과 만나 상계동지역에서 와류되는 현상을 보이기도 한다.
- 동북권은 시가지가 정비된 상황에 따라 기성시가지와 신시가지로 구분된다. 1950-60년대에 형성된 성북, 성동, 동대문구 등 기성시가지는 도로 등 기반시설이 취약한 상태에서 단독 및 다세대주택 등이 밀집해 있으며, 노원·중랑구 등은 1980년대 이후 택지개발사업 등을 통해 중대형 아파트단지가 입지해 있는 등 서로 다른 주거지 특성을 보이고 있다.

2) 현안문제

고용기반 및 중심지기능 취약

- 동북권의 고용밀도는 2000년 현재 ha당 102명으로 서울시 평균(161명/ha)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직주(職住) 비율 또한 0.80으로(서울시 평균 1.13) 5개 대생활권 중 고용기반과 중심지 기능이 가장 취약한 상황이다. 특히, 부도심으로 설정되어 있는 청량리·왕십리지역은 도심의 영향권에 속해 있어 아직까지 부도심으로써의 역할이 미약한 실정이다.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000

[그림 I-4] 자치구별 직주(職住) 비율(2000)

동북권 지역의 교통난 심화

- 서울 동북부 외곽지역에 조성된 대규모 아파트단지와 경기 북부지역에서 진입하는 차량이 증가하고 있으나, 서울 여타지역에 비해 도로 등 기반시설 여건이 취약한 편이어서, 동부간선도로의 교통혼잡 등 교통난이 심화되고 있다.

노후주택 밀집지역의 거주환경 취약

- 서울시 인구의 33.1%를 차지하고 있는 동북권은 인구밀도가 ha당 472명(서울시 평균 410명)으로 대생활권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성북구·성동구·동대문구·강북구 등 기성시가지와 구릉지에는 도로 등 기반시설이 취약한 상태에서 노후한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이 밀집해 있어 주거환경이 취약한 편이다.

• 동북권에는 2000년을 기준으로 건축된지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주택의 비율이 5.2%(서울시 평균 4.5%)로 도심권 다음으로 높으며, 성북구와 동대문구(각각 15%, 11%)에서 특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기반시설이 취약하고 노후주택이 밀집한 기성시가지를 중심으로 주거환경개선에 대한 요구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개별사업단위 개발로 인한 난개발 문제

• 종전의 도시개발·주거지정비사업은 개발규모에 관계없이 개별사업단위로 개발이 이루어져 도로 등 기반시설의 미비, 주변지역과의 교통 및 보행동선의 단절, 스카이라인의 부조화 등의 문제를 양산해 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별사업단위가 아닌 일정한 지역을 단위로 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3) 여건변화 및 계획과제

청량리·왕십리 부도심 육성과 고용기반의 확충

• 동북권은 청량리·왕십리 부도심의 기능이 미약한데다가 주거지 위주로 개발되어 있어서 고용기반이 취약하며, 이로 인해 타 지역으로 통근하는 장거리 통근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다. 청량리·왕십리 부도심을 비롯하여 미아·망우·상계 등 기존의 지역중심지를 전략적으로 육성함으로써 고용기반을 확충해가는 것이 필요하다.

• 청량리·왕십리 부도심은 중앙선·경원선과 함께 장래 동서고속전철의 출발역으로써, 주변 지역의 정비를 통한 부도심 기능의 강화가 필요한 지역이다. 동북권의 실질적인 부도심으로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개발을 적극 유도하여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경제 활력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낙후된 기성시가지의 정비를 통한 지역균형발전

• 동북권에는 기반시설이 취약한 상태에서 노후된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이 상당수 있다. 따라서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공공투자를 통해 낙후된 주거지를 정비하고, 생활편익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연환경 및 기반시설을 고려한 개발유도

• 동북권은 북한산·도봉산·아차산등 산지와 구릉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그 사이로 중랑천이 흐르고 있다. 또한 생활권내 도로 등 기반시설이 전반적으로 취약한 상태이므로, 지역정비시 주변 자연환경과 도로 등 기반시설을 고려하여 개발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4) 미래상

활기차고 다양한 중심지와 생활환경을 갖춘 동북권

- 서울의 지역간 균형발전 차원에서 동북권의 취약한 중심지 기능과 고용기반을 강화한다. 또한 중생활권 단위의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노후주거지를 체계적으로 정비하면서 생활권내 취약한 교통기반시설과 문화복지·생활편익시설을 확보함으로써, 활기차고 다양한 도시기능을 담을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해 간다.

5) 정책목표 및 추진전략

목표

청량리-왕십리 부도심을 중심으로 고용기능과 중심지 기능을 강화하고, 권역내 산재해있는 노후주거지의 지속적인 정비, 기반시설과 문화복지시설 등을 확충해감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해간다.

과제1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중심지 육성과 고용기반의 확충

서울의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 동북권의 부도심과 지역중심 등 중심지 기능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산업기능의 고도화 등을 통해 취약한 고용기반을 확충해간다.

전략 1. 부도심(청량리·왕십리)과 지역중심 기능의 강화

동북권의 취약한 부도심(청량리·왕십리)과 지역중심(미아, 상계, 망우)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시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하여 종합적인 지역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시설을 유치한다.

시책 1. 청량리지역을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하여 부도심 기능 육성

시책 2. 청량리의 지역특성을 고려한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

시책 3. 미아·상계·망우 등 지역중심지를 전략적으로 육성(미아 지역중심을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하여 종합적인 지역정비사업 추진)

전략 2. 산업기능 고도화와 고용기반의 확충

동북권내에 위치하고 있는 대학교와 홍릉 연구단지 등 R&D 기능을 활용하여 강북지역의 산·학·연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제조업 밀집지의 디지털화, 산업특화단지의 조성 등을 통해 산업기능을 고도화하면서 고용기반을 확충해간다.

시책 1. 강북지역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
(공릉동 NIT단지, 대학·홍릉연구단지의 R&D기능 활용)
시책 2. 차세대 성장유망산업과 연계한 산업특화단지 육성
(의료, 정밀·광학기기 등)
시책 3. 제조업체 밀집지역의 디지털화를 통한 산업기능 고도화 유도
시책 4. 준공업지역내 벤처기업 육성촉진지구 지정 및 산업개발진흥지구 지정 검토

과제2 교통기반시설의 확충과 대중교통체계 강화

전략 1. 교통기반시설 확충과 상습정체구간 개선

동북권의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부간선도로를 비롯하여 생활권내 주요 간선도로 등 취약한 교통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상습정체·병목구간에 대한 개선사업을 시행한다.

시책 1. 생활권내 주요 간선도로(동부간선도로 등)의 기능 확충 및 보완
시책 2. 상습정체 및 병목구간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사업 시행

전략 2. 신교통수단 도입 및 대중교통 우선정책의 확대 실시

대중교통 취약지역에 신교통수단을 도입하거나, 버스·지하철의 환승체계 개선, 중앙버스차로제 확대 등 대중교통 우선정책을 실시한다.

시책 1. 대중교통 우선정책 실시(버스·지하철 환승체계 개선, 중앙버스차로제 확대, 버스우선처리시스템 등)
시책 2. 대중교통 취약지역에 신교통수단(경전철 혹은 BRT)의 도입 검토

과제3 노후기성시가지 생활환경의 체계적 정비와 관리

동북권내 노후한 기성시가지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중생활권 단위의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종합적인 지역정비사업을 추진한다, 친환경적인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공원 및 녹지공간을 확충하고, 주변 자연환경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한다.

전략 1. 중생활권단위의 종합정비계획 수립을 통한 지역정비 추진

개별사업단위로 추진되던 기존 정비사업에서 탈피하여 중생활권단위의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시설의 유치, 노후주거지 정비, 교통기반시설 및 문화복지시설의 확충 등이 일관된 계획 하에서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시책 1. 중생활권단위의 종합정비계획 수립

시책 2. 공공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을 통한 정비사업 추진

시책 3. 지역특성을 고려한 노후 기성시가지 정비모델의 개발

전략 2. 생태공원 및 녹지공간의 지속적 확충

공원 및 녹지공간의 지역간 균형 있는 배치를 위해 동북권에 대규모 여가·생태공원을 조성하고, 다른 생활권에 비해 취약한 녹지 및 자연친화형 시민공간을 확충한다.

시책 1. 대규모 여가 및 생태공원 조성 (뚝섬)

시책 2. 중소형 생활공원 및 녹지공간의 지속적인 확충

전략 3. 자연특성을 강화하는 경관계획 수립

중랑천을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하면서 주변지역을 정비하고, 주요 산 주변을 자연경관지구로 지정하여 동북권의 자연환경 특성을 보존·강화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시책 1. 중랑천을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

시책 2. 주요 산 주변 자연 경관지구 지정을 통한 계획적인 경관관리

과제4 문화복지시설의 확충 및 특성화사업 추진

문화체육시설 및 사회복지·기초생활서비스시설의 지역간 균형배치 차원에서 동북권 내에 부족한 시설을 우선적으로 확충하고, 지역특성 강화와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특성화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한다.

전략 1. 부족한 문화복지체육시설의 우선적인 확충

동북권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전용공연장, 체육시설 등 문화체육시설을 비롯하여 보육·청소년시설 등 사회복지·기초생활서비스시설을 우선적으로 확충한다.

시책 1. 전용공연장 및 문화체육시설의 확충

시책 2. 부족한 사회복지·기초생활서비스시설의 공급 (보육·청소년시설 등)

시책 3. 중랑천 등 수변공간을 활용한 자연학습공간 조성

전략 2. 지역특성 강화를 위한 특성화사업 추진

경동 약령시장, 노유동 패션거리, 능동로 대학문화거리 등 특색 있는 거리와 장소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특성화사업을 추진하여 지역특성과 이미지를 강화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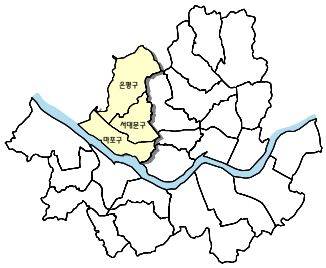
시책 1. 서울 약령시장 육성 (한방백화점, 전시관 등)

시책 2. 지역특성화사업 발굴·추진 (노유동 패션거리, 능동로 대학문화거리 등)

시책 3.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추진

서북권

국제업무, 첨단미디어 및 남북교류의 거점으로써 상암·수색 부도심과 지역중심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자연환경의 특성을 고려하여 친환경적이고 매력적인 도시공간으로 조성해 간다.



1) 지역현황과 특성

서북권의 기능과 위상

- 마포구, 서대문구, 은평구를 포함하는 서북생활권은 2000년 현재 상주인구가 123만 여명으로, 서울시 인구의 약 11.9%를 차지하고 있다. 서북권은 인천공항과 연결되는 지역으로, 남북교류 및 국제교류의 거점으로 성장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 서북권은 월드컵경기장과 난지도·선유도공원 등의 건설을 계기로 지역 이미지가 제고되고 있으며, 마포로 주변과 신촌·홍대앞 등 기존의 업무·상업·문화기능 밀집지역 외에 공덕, 합정지역 등이 새로운 교통 결절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 서북권의 새로운 중심지인 상암·수색 부도심은 서울의 도시환경과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미래지향적 신부도심이다. 장래 경의선 복원이 완료되면 개성공단과의 연계 등 남북교류의 거점 역할을 할 것이며, 인천국제공항과 연계되는 국제업무축상에 위치하고 있어서 서북권의 신부도심 기능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형지세와 특성

- 경기 서북부지역(고양, 파주)과 경계를 이루고 있는 서북권에는 안산, 백련산, 북한산과 홍제천, 불광천 등이 위치하고 있어 자연환경은 양호한 편이지만, 일부 산 주변과 구릉지 일대에 무분별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 서북권의 대부분은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으며, 생활권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부도심과 지역중심지가 형성되지 못한 상황이어서 도심권에 의존적이다.

2) 현안문제

고용기반이 취약하여 도심권에 의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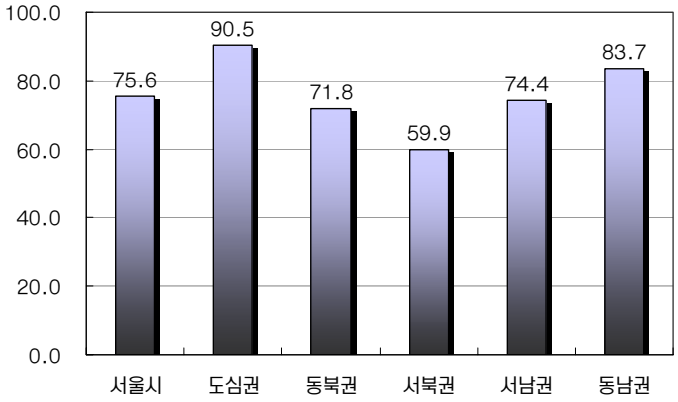
- 2001년 현재 서북권의 사업체수와 종사자수가 서울시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각각 9.4%, 7.8%로 5개 대생활권 중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서북권내에서도 전체 종사자 중 약 50%가 마포구에 집중되어 있는 등 지역간에도 편차를 보이고 있다.
- 서북권의 대부분 지역은 녹지 혹은 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상업·업무 등 고용기반이 취약한 상황이다. 마포로, 신촌 일대에 업무 및 상업기능이 밀집해 있으나, 그 기능이 미약하여 도심권에 의존적이다.

기성시가지 노후화에 따른 주거환경 악화

- 서북권의 주택유형을 보면, 아파트 보다 단독주택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2000년 현재 건축한 지 30년 이상 경과한 주택비율이 7%(서울시 평균 4.5%)를 차지하고 있으며, 서대문구, 마포구 등 도심 주변 기성시가지를 중심으로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저층주거지 주변에 고층아파트가 건립되어 도시경관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형적 영향으로 인한 도시기반시설 취약

- 서북권은 자연적으로 형성된 시가지구조로 인해 차량통행이 불가능한 필지의 비율이 25.5%로써 도심권 다음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주차장 확보율은 59.9%로 다른 생활권과 비교할 때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는 등 기반시설이 취약한 상황이다.



주) 비율(%)=주차면수/자동차등록대수, 자료: 서울시 주차기획과, 2001

[그림 I-5] 주차확보율

3) 여건변화 및 계획과제

남북교류 및 국제교류의 관문으로써 상암·수색 부도심 육성

- 상암·수색 부도심은 경의선 복원과 개성공단과의 연결 등 남북교류의 전략거점이자 인천국제공항과 직접 연계되는 국제업무축상에 위치하고 있으며, 월드컵 경기장과 난지도 공원의 건설, DMC(Didital Media City)사업 등 개발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 이 지역은 서울의 21세기를 선도하는 미래형 멀티미디어 신도시로써, 경제·문화·환경 친화적 발전을 선도하는 최첨단 정보도시로 육성될 예정이다. 특히 국제화, 남북통일 등의 여건변화에 대응한 국제업무단지, 문화·예술정보의 발신지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중심지의 육성

- 서북권은 주거지 비율이 높고, 도심권에 의존적인 구조를 갖고 있는 등 고용기반이 취약한 실정이다. 따라서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서북권에 중심지 기능(상암·수색 부도심, 연신내 지역중심, 합정 지구중심 등)을 적극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연환경을 고려한 주거지정비 및 생활환경 개선

- 서북권은 주택유형 중 아파트 보다 단독주택 비율이 높고, 건축한 지 30년 이상 경과한 주택비율도 높게 나타나는 등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어 주거지 정비가 필요하다. 생활권역내에 안산, 백련산, 북한산과 홍제천, 불광천 등이 위치하고 있으므로, 지역 정비시 주변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역특성화 및 환경친화적 지역 이미지 제고

- 월드컵 경기장과 난지도 및 선유도공원, 상암 DMC는 서북권의 새로운 명소로 자리 잡고 있으며, 신촌·홍대 앞은 새로운 문화의 발신지가 되고 있다. 이러한 지역들을 한강 수변공간과 연결하여 관광코스화하고 문화지구 등으로 육성함으로써, 지역 이미지를 제고하도록 한다.
- 쓰레기 매립지였던 난지도를 미래지향적이고 친환경적인 생태공원으로 재생한 것을 계기로 환경친화적인 지역 이미지를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

4) 미래상

남북교류의 거점으로써 첨단정보화시대를 이끌어가는 서북권

- 국제업무 및 남북교류의 전략거점에 위치해 있는 서북권은 첨단 디지털산업이 집적된 상암·수색 부도심을 육성하고, 자연친화적인 주거공간을 조성하여 미래지향적이고 쾌적한 생활공간으로 구축해간다.

5) 정책목표 및 추진전략

목표

국제업무, 첨단미디어 및 남북교류의 거점으로써 상암·수색 부도심과 지역중심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자연환경의 특성을 고려하여 친환경적이고 매력적인 도시공간으로 조성해 간다.

과제1 서북권 중심지 기능의 전략적인 육성

서울의 지역간 균형발전 차원에서 상암·수색지역을 국제업무 및 남북교류의 거점역할을 하는 부도심으로 육성하고, 연신내 등 지역중심을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등 서북권의 중심지 기능을 강화한다.

전략 1. 국제업무 및 남북교류의 거점으로 상암·수색 부도심 육성

인천국제공항과의 연계, 경의선 복원 등을 계기로 상암·수색지역을 국제업무 및 남북교류의 거점 역할을 하는 서북권의 부도심으로 육성한다. 특히, 상암 부도심은 정보화시대를 선도해가는 첨단 소프트웨어 및 멀티미디어산업으로 특화된 디지털미디어시티(DMC)로 육성한다.

시책 1. 상암·수색 부도심을 국제업무 및 남북교류의 거점으로 육성

시책 2. 디지털 컨텐츠 산업기반(DMC)의 전략적 육성

전략 2. 생활권내 지역중심지의 육성

경기 서북부지역에서 서울로 유입하는 인구를 흡수하가 위해 연신내를 전략적 지역중심으로 육성하고, 균형발전촉진지구 등의 지정을 통해 상업·업무기능의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한다.

시책 1. 연신내를 전략적 지역중심으로 육성

시책 2. 균형발전촉진지구의 지정을 통한 생활권내 중심기능 육성

과제2 서북권 광역교통체계의 구축

수도권 공간구조 개편과 남북간 교류확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교통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등 서북권의 광역교통체계를 구축한다.

전략 1. 서북권 광역교통체계 구축

시책 1. 수도권 서부지역의 교통네트워크 보완을 위한 고속도로 신설 추진
(시흥-고양, 강매-원흥간)

시책 2. 광역간선도로의 순환체계를 보완하고, 동서간의 통행흐름을 보완하기 위해 강변북로의 확장 검토

시책 3. 남북교류에 대비한 터미널시설의 신설 검토

시책 4. 대중교통 취약지역에 신교통수단(경전철/지하 BRT) 도입 검토

과제3 친환경적 주거지 조성 및 자연경관의 특성 강화

기성시가지내 노후한 주거지를 정비하여 생활환경을 개선하되, 자연친화형 주거지로 정비하고, 주요 산과 하천변에 대한 계획적 관리를 통해 양호한 자연환경의 특성을 보전한다.

전략 1. 자연친화형 주거지로 정비·조성

개발제한구역 및 기성시가지내 노후주거지를 정비하여 생활환경을 개선하되, 선계획을 통하여 저층저밀의 개발을 유도하고 자연친화형 주거지로 조성한다.

시책 1. 개발제한구역 및 낙후된 기성시가지를 자연친화형 주거지로 정비

시책 2. 서민 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건립

시책 3. 뉴타운사업을 통한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

전략 2. 자연환경의 특성 강화와 관리체계 마련

생활권내 주요 산과 하천변의 경관특성을 보전하기 위해 경관지구의 지정과 주변 지역의 관리방안을 체계적으로 마련한다.

시책 1. 수변공간의 관리체계 마련 (홍제천, 불광천 등)
시책 2. 주요 산 주변에 대한 경관지구 지정 및 관리계획 수립

과제4 지역특성화 사업을 통한 이미지 제고

서북권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생활권 단위의 다양한 문화공간과 부족한 기초생활서비스시설을 확충하고, 서북권의 지역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특성화 사업을 추진한다.

전략 1. 문화공간 및 기초생활서비스시설의 확충

서북권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공간을 조성하고, 생활권 및 동네단위의 복지증진 복합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며, 각종 문화프그램의 효율적인 운영체계를 구축한다.

시책 1. 상암DMC를 대중문화예술산업지구로 지정·개발 검토
시책 2. 생활권 및 동네단위의 복지증진 복합시설 지속적으로 확충
(사회복지 및 노인, 의료, 체육시설 등)
시책 3. 문화시설간 네트워크체계 구축을 통한 효율적인 문화프로그램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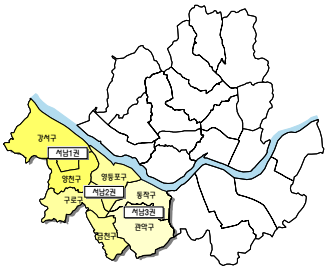
전략 2. 지역특성화 사업의 추진

서북권의 지역특성 강화 및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한강 수변과 난지도 및 선유도공원, 대학 밀집지역과 연계한 지역특성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시책 1. 문화지구 확대지정 검토 (신촌일대, 홍대앞 지역)
시책 2. 한강 수변공간과 연계한 관광루트 조성
(한강변과 월드컵공원, 선유도 공원 등을 연계한 관광코스 등)
시책 3. 대학 밀집지역과 연계한 문화디자인관련 산업기반 조성

서남권

영등포 부도심의 기능강화와 마곡지역의 계획적 관리를 통해 서남권의 균형발전을 유도하고, 미래형 산업기능의 적극 유치와 물류거점으로 육성한다. 또한 낙후지역의 개발 등 생활환경을 개선한다.



1) 지역현황과 특성

서남권의 기능과 위상

- 서남권의 상주인구는 2000년 현재 304만명으로 서울시 인구의 29.3%를 차지하고 있다. 이를 중생활권으로 구분해보면, 일부가 택지개발을 통해 조성된 서남1권(강서·양천)과 서울의 산업기반이 되고 있는 서남2권(영등포·구로·금천구), 주거 중심의 서남3권(동작·관악구) 등으로 구분된다.
- 서남권은 서해안시대의 중심축으로 서울의 도심과 경기·인천 서남부 지역을 연결하는 축상에 위치하고 있으며, 최근 서해안고속도로의 개통과 신공항 건설, 지하철 5호선과 9호선이 개통되는 등 수도권 물류의 요충지로 자리 잡고 있다.
- 수도권 서남부지역의 산업기반을 지원하고 부도심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영등포와 여의도지역은 증권·보험 등 금융업무기능과 상업유통기능이 집적되어 있다. 한편, 대규모 미개발지로 남아있는 마곡지구는 인천국제공항·김포공항과 인접하여 국내외 물류거점으로써의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지형지세와 특성

- 서남권은 관악산(629m)을 중심으로 수도권 남부지역 및 서초구와 경계를 이루고 있으며, 서남권의 서부지역은 인천·부천·김포 등과 경계를 이루고 있다. 서남권 지역 남북으로는 안양천이 흐르고 있다.
- 서남권은 일부 택지개발사업을 통해 조성된 서남1권(강서구, 양천구), 준공업지역이 대부분인 서남2권(영등포구, 구로구, 금천구), 경사지형의 구릉지와 분지에 자연적으로 형성된 시가지를 이루고 있는 서남3권(관악구, 동작구)으로 이루어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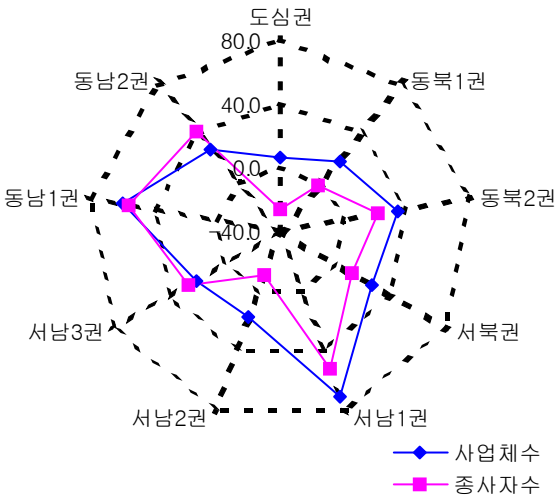
2) 현안문제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시가지로써 도시기반시설 취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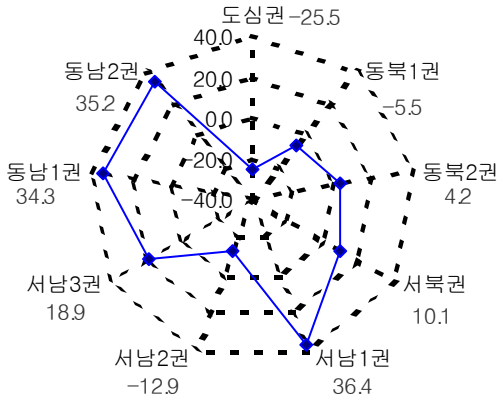
- 서남권은 일부 택지개발사업을 통해 조성된 지역을 제외하면 대부분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시가지로써 도로 및 교통기반시설이 취약한 실정이다. 서남3권(동작, 관악구)의 도로율은 18.6%로 서울시 평균(22.2%)보다 낮은 수준이며, 영등포구와 구로구 일대에도 소규모 부정형 필지가 밀집한 지역이 산재해 있다.
- 금천구·구로구 일대의 시계(市界) 경관지구와 개발제한구역 등으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은 상대적으로 기반시설이 취약하고, 개발이 정체되어 있는 등 낙후되어 있다.

산업활동기반의 쇠퇴

- 서남권은 1960년대 이래 서울의 산업중심지로 수도권 산업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 왔다. 서남권에 지정되어 있는 준공업지역(영등포·구로·금천·강서구 일부)은 서울시 전체 준공업지역의 81%를 차지하고 있으나, 1990년대 이후 탈공업화 경향과 땅값 상승 등으로 이 지역 대규모 제조기능의 상당 부분은 경기·인천지역 등으로 이전하였다.
- 대규모 제조공장의 이전으로 인해 2001년 서남2권(구로·금천·영등포구)의 고용밀도는 1991년에 비해 12.9%가 감소하는 등 이 지역의 산업활동 기반이 쇠퇴하고 있다.



[그림 I-6]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증감율 (1991~2001)



[그림 I-7] 고용밀도 변화율 (1991~2001)

주) 증감율은 행정구역을 감안하여 재계산하였음. 자료 : 통계청, 사업체기초통계조사, 1991, 2001

각종 규제로 인한 낙후된 주거환경

- 서남권내 시계(市界)경관지구와 개발제한구역 등으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은 도시계획규제로 인해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개발이 정체되어 있는 등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다. 따라서 이들 지역에 대한 생활환경 개선노력이 필요하다.

3) 여건변화 및 계획과제

서남권 주변지역의 개발과 연계한 중심성 강화

- 인천국제공항 개항과 장래 신공항철도 개통, 상암DMC 개발 등 서남권을 둘러싼 주변지역에서는 대규모 물류 및 기반시설, 첨단업무기능이 확충되고 있으므로, 이들과 연계를 하여 서남권의 중심지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첨단산업 및 물류중심지로써의 기능 부여

- 인천국제공항, 김포공항 등과의 인접성을 감안할 때 서남권은 수도권 서남부지역의 물류거점으로써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들간의 연계강화를 통해 첨단산업과 R&D기능을 지원·육성토록 한다.

낙후된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 및 기반시설 확충

-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시가지로써 도시기반시설이 취약하고, 개발제한구역·시계경관지구로 지정되어 있어 개발이 정체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등 생활환경을 개선한다.

4) 미래상

첨단산업의 중심지로써 주거와 산업이 공존하는 서남권

- 기존 산업집적기반의 고부가 가치화를 유도하여 첨단산업 중심지로 탈바꿈해가고, 주거와 공업기능의 공존 모색, 낙후된 주거지의 생활환경 개선을 통하여 서남권의 균형발전을 도모한다.

5) 정책목표 및 추진전략

목표

영등포 부도심의 기능강화와 마곡지역의 계획적 관리를 통해 서남권의 균형발전을 유도하고 첨단 산업기능의 적극 유치와 물류거점으로 육성한다. 또한 낙후지역의 개발 등 생활환경을 개선한다.

과제1 중심성 강화를 통한 서남권 균형발전 유도

영등포 부도심과 지역중심, 마곡지역 등을 중심으로 서남권의 중심지기능을 강화하고, 산업집적지와의 원활한 연계를 위한 간선교통체계를 확충하여 서남권의 균형발전을 유도한다.

전략 1. 영등포 부도심과 지역중심 등 중심지기능 강화

여의도에 집적되어 있는 금융보험 등 업무기능과 연계하여 IT 및 첨단정보산업, 상업유통의 중심지로 영등포 부도심을 육성하고, 지역중심 및 역세권지역의 복합개발 등을 통해 서남권의 중심지 기능을 강화한다.

시책 1. 영등포-여의도 부도심을 금융보험, IT 및 첨단정보산업, 상업유통의 중심지로 육성

시책 2. 서남권의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중심 기능 강화(목동, 대림)

시책 3. 구로 및 신도림 역세권지역의 복합개발 유도

전략 2. 전략적 지역중심지의 육성

대규모 미개발지에 대한 개발압력과 난개발의 방지를 위해 마곡지역을 서남권의 전략적 지역중심지(첨단산업단지)로 설정하고,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개발한다.

시책 1. 마곡지역을 전략육성 중심지로 설정, 종합개발계획 수립
(기술융합 R&D단지로 조성하여 상암 DMC와 연계)

전략 3 수도권 서남부지역의 산업집적지와의 연계를 위한 간선교통체계 확충

수도권 서남부지역의 산업집적지와의 연계강화를 위하여 서남권 시계(市界) 환승센터를 설치하고, 지역간선도로 및 신교통수단의 확충을 검토하는 등 대중교통체계를 확충해간다.

시책 1. 서남권지역의 대중교통결절 체계 구축(시계환승센터, 터미널 등)
시책 2. 수도권 광역간선도로와 연계된 서남권의 지역간선도로 확충
시책 3. 대중교통 취약지역에 신교통수단(경전철/지하 BRT)의 도입 검토

과제2 첨단산업기반 확충 및 물류거점의 육성

기존 산업기능의 첨단화를 유도하여 경쟁력 있는 산업기반을 확충하고, 물류증가에 대비하여 서남권의 물류·유통중심센터를 육성한다.

전략 1. 미래형 산업기능의 유치 및 산업집적기반 활성화

구로 디지털산업단지, 신산업 집적지역과의 연계망 구축, 첨단산업벨트 구축 등을 통하여 기존 산업의 첨단화, 고부가 가치화를 유도·지원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산업공간을 조성한다.

시책 1. 구로 디지털산업지역을 전략적 IT산업 중심지로 육성
시책 2. 신산업집적지역간의 연계망 구축

전략 2. 산업개발진흥지구 지정 및 산업네트워크 구축

기존 산업집적지역을 산업개발진흥지구 등으로 지정하여 활성화하고 미래형 산업입지를 유도하여, 관악지역의 대학과 영등포의 벤처기업, 구로지역의 정보통신산업, 강서지역의 중소기업지원센터 등을 연결하는 산업네트워크화를 구축한다.

시책 1. 기존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산업개발진흥지구 지정·육성 검토
시책 2. 권역내 산업발전협의체 구성과 지원
시책 3. 관악지역의 대학과 벤처기업, 정보통신산업, 중소기업지원센터 등을 특화산업 집적지로 육성

전략 3. 서남권 물류·유통 중심센터의 조성·육성

서해안고속도로, 수도권 서부지역 개발, 인천공항 건설 등에 따른 물류 증가에 대처할 수 있도록 서남권 복합물류·유통센터를 조성하고, 서남권 도매시장 기능을 활성화하여 원활한 농수산물 유통망을 구축한다.

시책 1. 서부지역의 복합물류 및 유통센터 조성

시책 2. 서남권 도매시장 활성화를 통하여 가락동 도매시장 기능을 분담하고 농수산물 유통거점으로 육성

전략 4. 공장 이전적지에 미래형 산업입지 유도와 낙후된 공업지역 정비 추진

영등포 일대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대규모 공장이전적지에 미래형 산업의 입지를 유도하고, 낙후된 공업지역은 공장재개발 시범지구로 지정하여 정비해간다.

시책 1. 준공업지역내 대규모 공장이전적지에 첨단산업 입지 유도

시책 2. 첨단산업의 창업활성화를 위한 공공임대 아파트형 공장입지 유도

시책 3. 낙후되고 영세공장이 밀집된 준공업지역은 공장재개발(도시환경정비사업)등으로 정비 추진

과제3 낙후지역 정비와 생활환경 개선

시계(市界)경관지구, 개발제한구역 등 각종 도시계획 규제로 인해 생활환경이 낙후된 지역과 주공(住工) 혼재지역에 대한 생활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지역특성과 수요를 반영하여 부족한 기초생활서비스시설을 확충한다.

전략 1. 낙후된 시계(市界)지역의 종합발전 추진

시계(市界)경관지구, 개발제한구역 등 각종 규제로 인해 생활여건이 낙후된 지역에 대해서는 기존 도시계획규제의 유지 필요성을 검토하고, 부족한 기반시설 및 주민편의시설의 단계적 확충방안을 마련한다.

시책 1. 서남권 시계지역의 종합발전구상 마련(구로·금천구)

시책 2. 기반시설·주민편의시설의 단계적 확충 및 정비

전략 2. 준공업지역내 주공혼재지역의 주거환경 정비

준공업지역내 주공혼재지역에 대해서는 도시형 산업시설의 선별입지를 유도하여 주거와 공업기능의 공존방안을 모색하고, 노후주거지에 대한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주거환경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시책 1. 준공업지역내 비공해형·도시형 산업시설의 선별입지 유도

시책 2. 주공혼재지역내 노후주거지에 대한 주거환경정비사업 추진

전략 3. 지역주민의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문화복지 및 생활편익시설 확충

거주인구의 특성과 수요를 반영하여 부족한 기초생활서비스시설을 확충하고, 다양한 문화공간을 조성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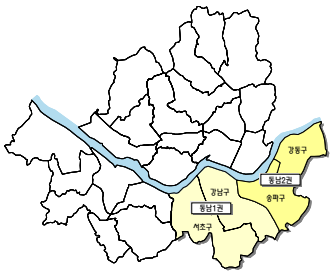
시책 1. 거주인구의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기초생활서비스시설 확충
(공연 및 전시시설, 청소년시설, 공공도서관 등 문화복지시설)

시책 2. 문화공원 및 특화거리 조성, 지역문화축제 활성화

시책 3. 한강 수변공간을 이용한 생태공원 조성 및 이용 활성화

동남권

기성시가지의 계획적인 관리를 통해 국제적으로 경쟁력있는 업무환경을 조성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유지하며, 시민들의 문화활동 촉진과 향유 기회를 확대한다.



1) 지역현황과 특성

동남권의 기능과 위상

- 2000년 현재 동남권의 상주인구는 약 212만명(서울의 20.4%)이며, 주야간인구 비율은 116%로(서울시 평균 105%) 주거기능보다 업무기능이 우세하다. 동남권은 동남1권(강남·서초구)과 동남2권(송파·강동구) 등 2개의 중생활권으로 이루어진다.
- 동남권은 1970년대 이후 대단위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을 통해 중·대규모로 필지가 분할되고, 도로 등 기반시설과 공공시설이 잘 갖추어진 시가지로 성장해왔다. 그러나 강남개발촉진책으로 인한 이 지역의 집중투자로 인해 서울의 지역간 격차가 심화되는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 동남권은 도시기반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고 서울의 여타 자치구보다 주민생활수준이 높은 편이다. 예술의 전당, 국립중앙도서관, 올림픽 경기장과 공원 등 예술·문화·체육시설이 입지하고 있으며, 테헤란로의 벤처·첨단산업 밀집지역과 패션가·화랑가 등 특화거리가 위치하고 있다.
- 1990년대 이후 도심을 능가하는 국제업무, 첨단정보산업 등 고차서비스업의 중심지로 성장한 영동 부도심은 서울의 동남권과 수도권 남부지역을 영향권으로 하는 광역생활권의 부도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 동남권내 대규모 미개발지인 문정·장지지구는 서울과 성남간 도시의 연담화를 방지하고 바람길의 확보 등 쾌적한 도시환경의 유지에 이바지해 왔는바, 장기적인 관점에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단계적 대응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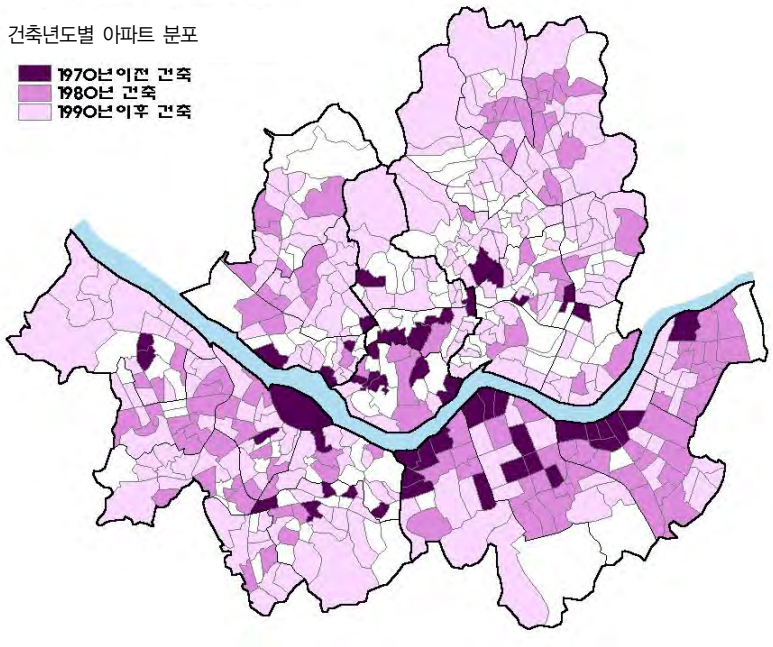
지형지세와 특성

- 동남권 남측으로 우면산과 대모산이 있고, 탄천과 양재천이 통과하고 있으며, 양재시민의 숲과 올림픽공원, 길동생태공원 등의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다.

2) 현안문제

노후아파트의 재건축시기 일시 도래

- 동남권은 1970년 이후 시행된 대규모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통해 계획적으로 개발된 시가지이다. 이에 따라 도시기반시설은 비교적 잘 갖추어져 있으나, 같은 시기에 개발된 아파트가 상당수 밀집해 있다. 동남권 아파트 중 29.2%가 1970년 이전에 건축되었으며, 1980년 이전에 건축된 아파트 비율은 49.6%를 차지하고 있다.
- 이에 따라 건축된 지 20년 이상 경과하여 재건축시기가 도래한 아파트가 상당수를 차지함으로써, 강남권의 주택가격 폭등과 주변지역의 가격상승을 야기하고 있다.



주 : 행정동별로 해당 건축년도의 60%이상 차지하는 지역을 표시
자료: 부동산114, 2002년 아파트 현황

[그림 I-7] 건축년도별 아파트 분포현황

통근영향권의 광역화로 인한 교통혼잡 가중

- 1990년대 이후 영동 부도심의 성장과 함께 수도권 거주자들의 통행은 직주원격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경기·인천에서 강남으로 유입되는 도착통행량은 1980년 7만 통행에서 1990년 31만 통행, 2000년 56만 통행으로 급격히 증가했으며, 이에 따라 강남 전역, 특히 테헤란로의 상업·업무기능 밀집지역은 상습적인 교통혼잡과 체증이 일어나고 있다.

상업·업무기능의 주거지 침투

- 1991-2001년간 상업업무용도 건축물의 연상면적은 서울시 전체적으로 76.3% 증가한 반면, 동남권은 107.1% 증가하였고, 동남1권(강남·서초구)은 117%나 증가하였다. 강남권의 일반상업지역은 강남대로와 테헤란로를 중심으로 선형으로 지정되어 있는 바, 상업지역과 인접한 일반주거지역내에 업무·상업용도가 침투함으로써 주거환경이 악화되는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3) 여건변화 및 계획과제

기성시가지에 대한 계획적인 관리 필요

- 동남권은 전체 주택의 80%가 아파트 및 연립주택이며, 토지구획정리사업 및 택지개발사업을 통해 단기간에 대량공급되어 주택의 건축년도가 비슷한 특성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노후아파트의 재건축사업이 일시에 예상되므로, 주변 기반시설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고려한 계획적인 관리가 요구된다.

경쟁력 있는 국제업무환경의 조성

- 동남권에는 테헤란로, 강남대로를 중심으로 벤처·IT산업·국제업무기능 등이 집적해 있으므로 이들 간의 시너지효과를 높이고, 인천국제공항과의 접근성을 높여 경쟁력 있는 국제업무 환경을 조성해간다.

문화소비환경 변화 및 여가에 대한 관심 증가

-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문화소비부문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며, 주 5일제 근무의 확산으로 여가시간이 늘어나면서 문화와 여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문화소비환경의 변화와 여가에 대한 관심증가에 대응하여 다양한 문화계층의 수요를 수용할 수 있도록 동남권의 다양한 문화관련 기반시설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4) 미래상

계획적인 성장관리와 풍부한 생활환경을 지닌 동남권

- 기성시가지의 계획적인 성장관리를 통해 국제업무기능과 풍부한 문화자원, 쾌적한 주거기능이 결합된 생활환경을 구축한다.

5) 정책목표 및 추진전략

목표

기성시가지의 계획적인 관리를 통해 국제적으로 경쟁력있는 업무환경을 조성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유지하며, 시민들의 문화활동 촉진과 향유기회를 확대한다.

과제1 기성시가지의 계획적인 관리방안 마련

동남권에 밀집한 노후아파트 재건축사업의 허용기준을 강화하고, 사업시기를 조정하여 관리하며, 리모델링사업을 지원함과 동시에 대규모 미개발지의 관리, 주거지역의 용도침투 및 난개발 방지 등 기성시가지의 계획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한다.

전략 1. 노후아파트 재건축사업의 합리적인 추진

동남권에 밀집한 노후아파트 재건축의 허용기준을 강화하고, 총량적인 관리를 통해 사업의 시행시기를 조정하며, 고층고밀 재건축에 대비하여 적정개발 밀도를 유지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친화적인 재건축을 유도한다.

시책 1. 재건축의 안전진단 기준 강화, 재건축 허용연한 확대

시책 2. 고밀아파트 재건축에 대비한 친환경적 개발기본계획 수립 및 단계별 추진

시책 3. 고밀도 아파트지구의 재건축 용적률 제한

전략 2. 노후아파트 리모델링사업 지원

무분별한 재건축으로 인한 고층고밀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노후아파트의 리모델링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시책 1. 노후아파트 리모델링에 관한 지원방안 마련

전략 3. 대규모 미개발지의 계획적 관리

동남권의 미개발지인 문정·장지지역은 장기적 안목에서 계획적으로 관리하되, 문정지역은 공공성이 높은 개발수요에 대응하도록 하고, 장지지역은 일부 공공임대주택 건립 등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환경친화적인 개발을 유도한다.

전략 4.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를 위한 관리체계 마련

동남권은 비교적 양호한 주거환경과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으므로, 주거환경을 유지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다만 일부 낙후화 지역이나 개발제한 구역의 해제가 예상되는 지역은 계획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시책 1. 주거지역내 타용도 침투방지를 위한 방안마련

시책 2. 일부 낙후지역이나 개발제한구역의 해제가 예상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계획적 관리방안 수립

과제2 국제업무거점으로써의 경쟁력 유지

동남권 테헤란로 일대를 IT전략산업지역으로 육성하고, 국제업무기능의 집적화를 유도하며, 업무중심지간 연계강화, 첨단 대중교통체계의 구축 등을 통해 국제업무거점으로써의 경쟁력을 유지한다.

전략 1. 국제업무거점 및 전략산업지역으로 육성

테헤란로, 강남대로에 집적한 벤처·IT산업기능을 강화하면서 국제업무기능의 집적화를 유도하여 시너지 효과를 높이고, 인천국제공항과의 접근성을 높여 국제경쟁력을 강화한다.

시책 1. 테헤란로·강남대로 일대를 IT전략산업지역(IT Rectangular)으로 육성

시책 2. 국제업무거점(도심, 용산, 강남, 상암, 여의도)간 분담체계 마련

전략 2. 도시물류체계 및 첨단 대중교통체계 구축

물류거점의 확보 및 유통단지 개발을 통해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업무집적지역에 신교통수단을 도입하여 편리한 첨단 대중교통체계를 구축한다.

시책 1. 동남권 유통단지 건립 검토

시책 2. 신교통수단 도입을 통한 첨단 대중교통체계 구축

과제3 친환경적 경관관리 및 다양한 문화활동 촉진

동남권의 자연환경과 어울릴 수 있는 친환경적인 경관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시민들의 다양한 문화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문화서비스를 제공한다.

전략 1. 친환경적인 도시경관체계 구축관리

동남권의 주요 산·하천 주변에 대한 친환경적 경관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해가고, 테헤란로 등 주요 간선가로변을 대상으로 가로구역별 높이기준을 설정하여 건축물의 스카이라인을 관리한다.

시책 1. 주요 수변지역에 대한 관리계획 수립(탄천, 양재천)

시책 2. 주요 산 주변을 경관지구로 지정, 관리계획 수립

시책 3. 주요 간선도로에 대한 가로구역별 높이계획 수립

전략 2. 다양한 문화활동의 기회 및 서비스 제공

문화관련 기반시설이 풍부한 동남권에는 이들 문화자원의 활용도를 높여 문화적 다양성과 수용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의 문화활동 촉진 및 향유 기회를 확대한다.

시책 1. 예술의 전당을 현대문화 예술 축으로 설정

시책 2. 문화의 거리 활성화 및 특화거리 조성
(패션가, 화랑, 가구거리 등)

시책 3. 평생학습의 기회 및 서비스 제공

II. 토지이용계획



1. 현황과 문제점
2. 여건변화 전망
3. 미래상
4. 계획방향
5. 목표체계
6. 장래 서울시 용도지역별 소요면적 추정
7. 용도지역별 관리방향
8. 대규모 개발가능지의 관리방향

1. 현황과 문제점

1) 토지이용실태와 용도지역 현황

(1) 용도지역의 지정현황

- 용도지역별로 지정된 면적 구성비를 2003년 말 기준으로 보면, 주거지역 49.9%, 녹지지역 41.6%, 공업지역 4.6%, 상업지역 3.9%의 순이다. 그러나 이것을 시가지 면적대비로 보면 주거지역이 85% 이상으로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
- 종전 도시기본계획(1995.1)과 비교해서 상업지역은 3.5%에서 3.9%로, 주거지역은 49.8%에서 49.9%로 증가하였고, 나머지 용도지역의 면적은 감소하였다. 이것은 자치구에서 그 동안 상세계획을 비롯한 지구단위계획 등의 수립을 통해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의 상향조정을 추진해왔기 때문이다.

[표 II-1] 서울시 용도지역의 면적과 구성비

구 분	면 적(㎢)		구 성 비(%)	
	1995년	2003년	1995년	2003년
주거지역	301.8	302.3	49.8	49.9
상업지역	21.5	23.9	3.5	3.9
공업지역	29.0	27.9	4.8	4.6
녹지지역	253.6	251.8	41.9	41.6
계	605.9	605.9	100.0	100.0

주 : 2011 도시기본계획(1997년)당시 자료는 1995년 1월 현재임
자료 : 서울시, 서울통계연보, 2004년 (2003년 12월말 현재임)

- 용도지역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주거지역은 크게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그리고 준주거지역으로 구분되며, 일반주거지역은 제1종, 제2종, 제3종으로 세분되었다. 서울시는 그동안 자치구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2003년도에 일반주거지역 세분화계획을 서울시 전역에 적용하기에 이르렀다.
- 서울시는 2003년도에 도입된 일반주거지역의 세분화를 실시하여 공공시설의 확보와 정비사업의 촉진을 위해 지구단위계획과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수립 등을 통해 선별적으로 계획밀도의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 서울시의 상업지역은 주로 도심부에 넓게 지정되어 있는 반면에 그 외 지역에서는 주로 중심지의 간선도로변을 따라 선형으로 지정된 경우가 많다. 상업지역은 앞에서 서술한 것처럼 상세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등의 영향을 받아 그 지정면적이 증가되어왔다.

- 종전 도시기본계획수립(1997년) 당시에는 지정되지 않았던 유통상업지역(1㎢)과 근린상업지역(0.7㎢)이 새롭게 지정되었는데 이것은 특히 녹지지역의 일부가 대규모 유통상업지역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이다.
- 서울시의 공업지역은 준공업지역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그 대상은 영등포구와 구로구의 안양천 변, 성동구 성수동 일대, 강서구 가양동 일대, 도봉구 중랑천 일대에 지정되어 있다.
- 준공업지역은 종전 서울도시기본계획과 비교해서, 0.9㎢가 타용도지역으로 변경되었는데 이것도 상세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등을 통해 대부분이 일반상업지역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용도지역의 변경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 녹지지역의 지정 현황을 보면 서울시가지 외곽지역에 지정된 개발제한구역과 국립공원, 도시자연공원 등의 주요 산과 농경지 등이 포함되어 도시의 녹지벨트를 형성하고 있다. 반면에 시가지 내측은 도시공원 등이 포함되어 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 녹지지역이 타용도지역으로 변경되는 사례는 앞으로 증가될 전망이다. 특히 현재 서울시와 정부가 추진 중인 개발제한구역의 조정과 관련된 집단취락의 우선해제와 국민임대주택의 건설, 신규 공공시설의 입지허용, 그리고 마곡과 문정·장지지구 등 대규모 미개발지에 대한 공공주도의 개발 등의 영향을 받아 기정 녹지지역의 대폭적인 감소가 예상된다.

(2) 용도별 토지이용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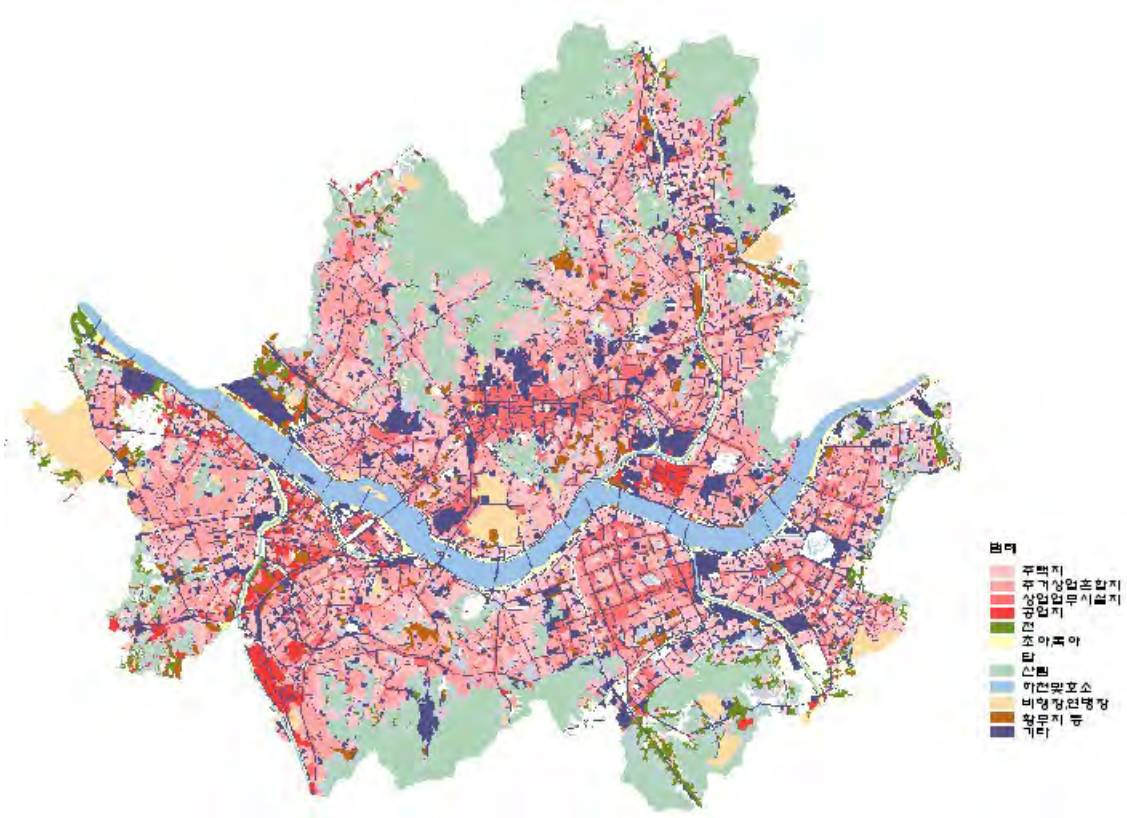
- 서울시의 토지특성자료(2002년)를 이용하여 서울시 토지이용현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표 II-2] 서울시 용도별 토지이용현황

토지이용구분	면 적(㎢)		구성비(%)	
	1997년	2001년	1997년	2001년
주 거 용 지	275.1	319.4	45.4	52.8
상 업 용 지	62.8	53.7	10.4	8.9
공 업 용 지	18.8	7.4	3.1	1.2
녹지 및 기타	248.6	224.9	41.1	37.2
합 계	605.3	605.4	100.0	100.0

주 : 1997년도 자료는 2011 도시기본계획(1997년)상의 데이터임
자료 : 서울시, 토지특성조사, 2002년

- 토지이용특성조사에 의하면 주거용지가 319.4㎢(52.8%)으로 가장 많고, 공업용지가 7.4㎢(1.2%)로 가장 적다. 특히 주거용지는 종전 도시기본계획(1997년)과 비교하여 44.3㎢가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서울시의 인구가 감소 추세에 있으나, 가구수의 증가와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인한 1인당 주거면적 증가가 주요인이다. 특히 1인당 주거면적의 증가에 있어 주택재개발 및 주택재건축사업 등을 통한 아파트 건설과 단독주택지내 다세대 · 다가구주택의 건립에 의한 영향이 크다.
- 녹지면적은 그동안 23.7㎢정도가 감소하였다. 서울시 녹지면적과 개발제한구역의 범위는 상기한 바와 같이 공공주도의 대규모 현안 사업의 영향을 받아 더욱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 도시계획상 준공업지역의 면적은 27.9㎢이지만 실제로 이용되고 있는 공업용지는 7.4㎢로 상당히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산업구조의 변화와 수도권 집중에 대한 신규 입지규제, 지가의 상승으로 인해 기존 공장의 운영이 곤란하여 수도권 밖으로 공장이 이전된 후 공장이전부지가 아파트단지나 상업시설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그림 II-1] 서울시 토지이용현황

(3) 개발밀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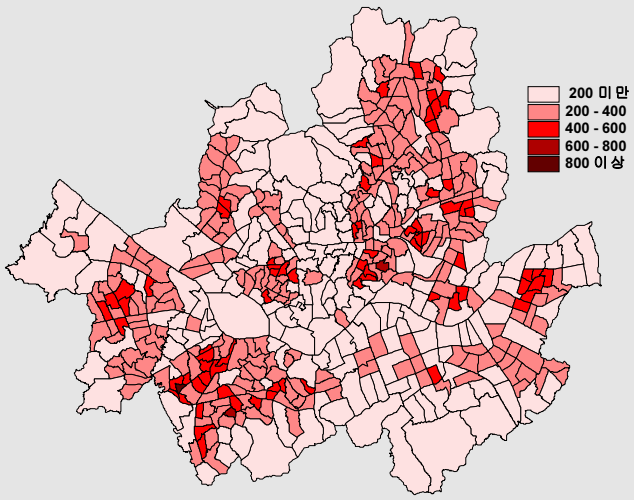
• 서울시의 인구밀도는 2003년 말 현재 종전 도시기본계획(1997년)과 비교하여 2.3% 감소된 170.0인/ha이다. 이것은 인구의 자연증가율이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서울시 인구밀도를 동별로 보면, 20평 내외의 소형아파트가 많은 노원구를 포함한 동북지역과 다세대·다가구주택이 밀집된 은평구 등의 서남지역과 중랑구 등의 동북지역이 높다. 그리고 인구밀도의 변화를 보면 중구 등의 도심지역에서는 감소한 반면에 강서구 등의 시외곽 지역에서는 현저하게 증가하였다.

[표 II-3] 자치구별 개발 밀도 현황 (2004년 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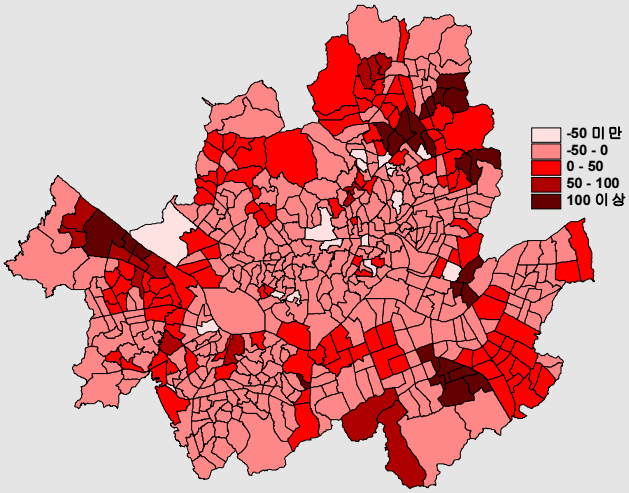
구 분	총면적 A (㎢)	기개발지 B (㎢)	인 구 C (인)	대지면적 D (㎢)	연상면적 F (㎢)	총인구밀도 ((C/A)×100) (인/ha)	순인구밀도 ((C/B)×100) (인/ha)	용적률 ((F/D)×100) (%)
서울특별시	605.4	315.1	10,287,847	215.6	394.6	169.9	326.5	183.0
강 북 계	298.0	156.2	5,160,960.0	108.9	187.6	173.2	330.5	172.3
종 로 구	23.9	11.4	178,574	8.3	12.7	74.7	156.7	153.6
중 구	10.0	7.8	136,585	5.3	16.9	137.1	174.7	315.3
용 산 구	21.9	12.8	239,070	9.9	11.3	109.3	186.9	113.9
성 동 구	16.8	9.9	343,992	6.4	12.5	204.2	346.5	193.9
광 진 구	17.1	10.5	384,681	7.1	12.8	225.6	366.4	181.1
동대문구	14.2	11.4	383,896	7.9	13.4	270.0	337.0	169.7
중 랑 구	18.5	9.9	436,063	6.8	12.2	235.7	438.8	180.2
성 북 구	24.6	14.4	455,041	10.3	14.2	185.2	316.5	137.7
강 북 구	23.6	9.2	362,275	6.7	10.7	153.5	395.9	158.0
도 봉 구	20.8	8.9	383,611	6.2	11.9	184.4	431.5	190.6
노 원 구	35.4	14.3	630,555	9.1	18.6	178.0	442.3	205.1
은 평 구	29.7	12.5	480,320	9.2	13.4	161.6	385.5	145.6
서대문구	17.6	11.7	358,186	7.5	13.3	203.3	306.9	178.7
마 포 구	23.9	11.6	388,111	8.2	13.8	162.6	335.0	169.1
강 남 계	307.5	158.9	5,126,887	106.7	206.9	166.8	322.6	194.0
양 천 구	17.4	12.1	497,642	8.4	15.8	286.0	411.4	187.8
강 서 구	41.4	14.6	544,762	9.9	17.2	131.6	372.0	174.1
구 로 구	20.1	11.5	424,725	8.0	15.5	211.2	369.6	195.1
금 천 구	13.0	8.6	266,047	5.1	10.6	204.6	310.5	208.4
영등포구	24.6	14.6	415,889	9.6	20.0	169.2	284.7	208.6
동 작 구	16.4	11.1	414,199	8.0	12.6	253.2	372.6	157.7
관 악 구	29.6	11.3	535,688	7.8	15.0	181.2	476.0	191.1
서 초 구	47.0	19.1	406,752	12.4	23.3	86.5	213.1	188.1
강 남 구	39.5	23.3	539,333	15.5	37.1	136.4	231.9	240.3
송 파 구	33.9	20.0	608,439	13.4	24.5	179.6	304.8	182.6
강 동 구	24.6	12.8	473,411	8.6	15.2	192.6	368.6	176.4

주 : 기개발지는 대지, 학교용지, 공장부지, 도로면적의 합임
자료 : 서울시, 서울통계연보, 각년도
서울시, 건물분 과세자료 2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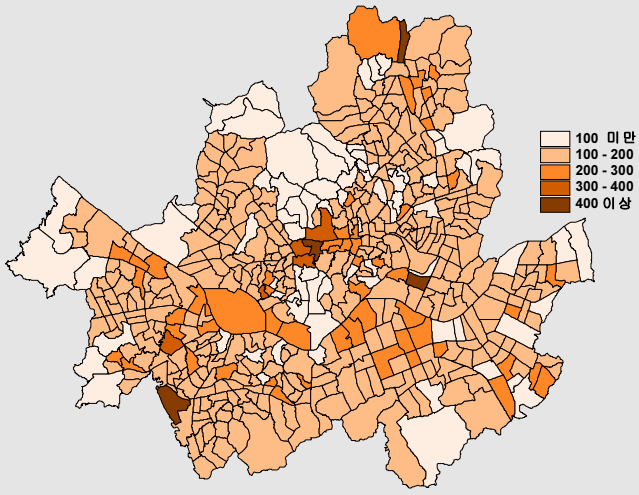
- 서울시의 평균개발용적률 현황을 보면 종전 도시기본계획(1997년) 수립 당시는 110.3% 이었지만 2004년도 현재는 183.0%로 나타났다. 이것은 주택 200만호 건설 이후 용적률 등 건축규제 완화에 의한 영향을 받아 서울시 전역에서 재개발 및 재건축사업에 의한 대규모 아파트 건설과 다세대·다가구 주택의 건립이 광범위하게 실시되었기 때문이다. 강남·북 지역을 비교해보면, 여전히 강남지역의 1인당 주거면적이 강북지역 보다 넓고 평균개발용적률 역시 높다. 이것은 강남지역에서 대규모 재건축 아파트 건설이 활발했고, 도시기반시설 정비가 잘 되어있어 고밀도 개발이 유리했기 때문이다.
- 평균개발용적률을 지역별로 보면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입지한 곳과 도심 및 부도심에 해당되는 곳이 높다. 반면에 용산 미군부지와 북한산 자락의 자연경관지구일대는 용적률이 낮다. 용적률의 변화를 보면, 강남구와 서초구, 강서구, 노원구 일대에서 개발용적률의 증가가 현저하다. 이곳은 최근에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주택재개발 및 재건축사업 등을 통해 고층아파트 건설이 활발하였던 곳이다.
- 서울시 비주거용 건물의 평균용적률은 도심과 영등포 부도심, 영동 부도심지역이 월등히 높다. 그리고 지하철 2호선 주변과 준공업지역인 영등포와 구로구 일대, 성수동 일대가 높다. 그리고 비주거용 건물의 용적률의 변화를 보면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에서 평균용적률의 증가가 가장 두드러지며, 노원구 상계동 및 중계동 일대와 양천구 목동 일대도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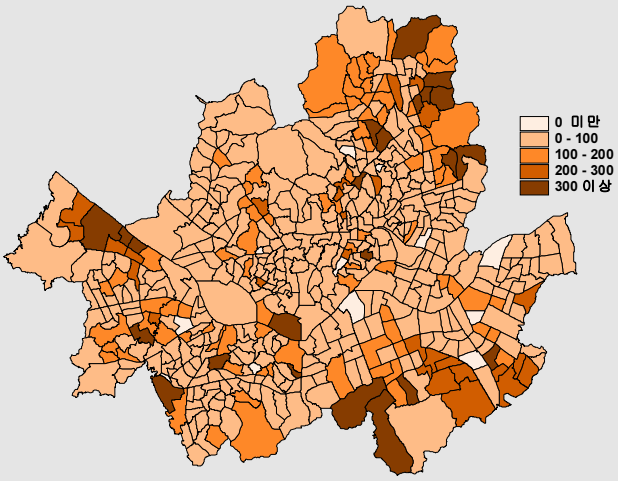
[그림 II-2] 총인구밀도 분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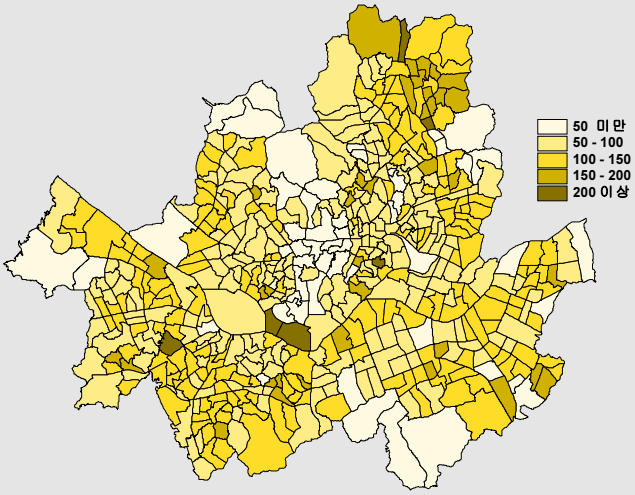
[그림 II-3] 총인구밀도 변화(1990-20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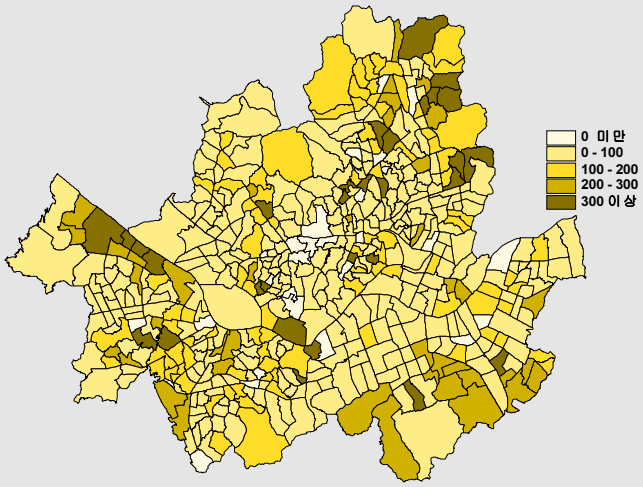
[그림 II-4] 용적률 분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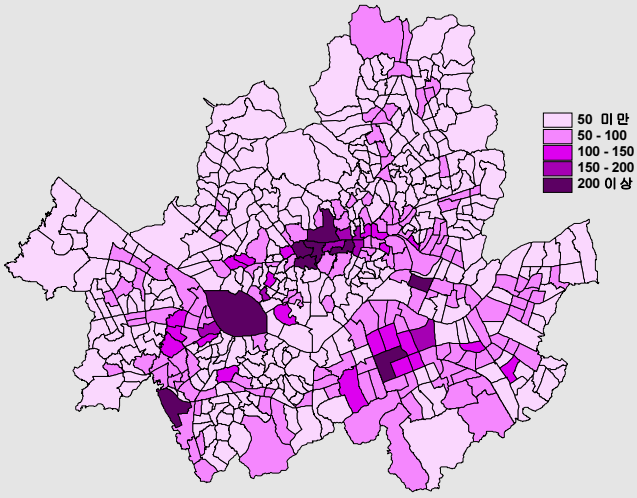
[그림 II-5] 용적률 변화(1990-20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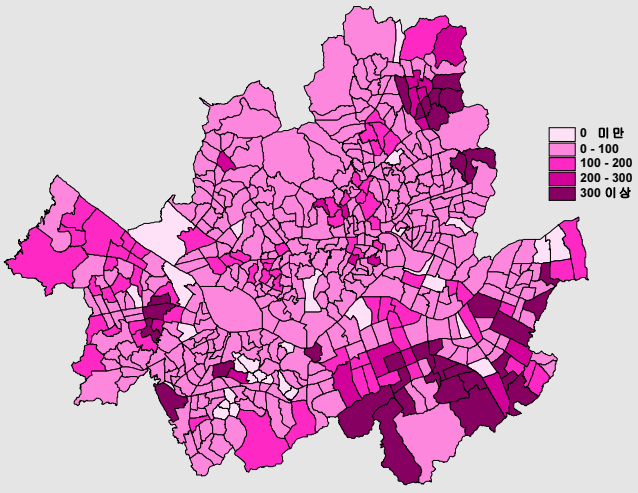
[그림 II-6] 주거용 건물 용적률 분포 현황



[그림 II-7] 주거용 건물 용적률 변화(1990~2003)



[그림 II-8] 비주거용 건물 용적률 분포 현황



[그림 II-9] 비주거용 건물 용적률 변화(1990~2003)

(3) 가용토지자원 현황

- 각 자치구별로 토지자원 현황을 종합하여 보면, 2003년 말 현재 서울의 기개발지 및 개발 가능지의 면적은 전체의 약 61%인 369.02㎢이다. 이는 종전 도시기본계획(1997년) 수립시의 355.19㎢ 보다는 약 3.9%(13.83㎢) 증가한 것이다. 그러나 서울시는 시가지면적의 85%에 해당하는 315.09㎢가 이미 개발된 상태이므로 도시관리상 기성시가지의 계획적인 정비가 중요하다.
- 자치구별 기개발지의 면적비율을 보면 동대문구 80.12%, 중구 78.48%로 높은 반면에 상대적으로 강북구, 강서구, 관악구의 경우는 주변에 국립공원 및 도시자연공원이 입지하여 기개발지의 비율이 낮다.
- 또한 자치구별 개발가능면적은 강남구, 송파구, 서초구 등이 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넓은 반면에 중구와 도봉구의 경우는 개발가능지의 절대면적이 타구에 비해 좁다.

[표 II-4] 자치구별 토지자원 현황 (단위 : ㎢)

구 분	총면적	개발 및 개발 가능지			개 발 불능지
		소 계	기개발지	미개발지	
서 울 시	605.41	369.02	315.09	53.93	236.39
강 북 계	297.96	183.29	156.15	27.14	114.67
종 로	23.91	12.82	11.40	1.42	11.09
중 구	9.96	8.56	7.82	0.74	1.40
용 산	21.87	12.79	12.79	0.00	9.20
성 동	33.90	22.83	20.43	2.40	11.07
동대문	14.22	13.91	11.39	2.52	0.31
중 랑	18.50	11.01	9.94	1.08	7.49
성 북	24.57	16.32	14.38	1.94	8.25
도 봉	23.60	20.72	9.15	11.57	2.88
강 북	20.80	8.89	8.89	0.00	12.00
노 원	35.42	14.26	14.26	0.01	21.16
은 평	29.72	13.67	12.46	1.21	16.05
서대문	17.61	12.96	11.67	1.30	4.65
마 포	23.87	14.75	11.58	3.17	9.12
강 남 계	307.45	185.73	158.94	26.79	121.72
양 천	17.40	14.16	12.10	2.06	3.24
강 서	41.40	18.66	14.64	4.01	22.74
구 로	33.12	23.17	20.06	3.11	9.95
영등포	24.57	16.41	14.61	1.80	8.16
동 작	16.36	11.78	11.12	0.66	4.58
관 악	29.57	15.87	11.25	4.62	13.70
서 초	47.03	20.58	19.09	1.49	26.45
강 남	39.54	26.48	23.26	3.22	13.06
송 파	33.89	25.85	19.96	5.88	8.04
강 동	24.58	12.84	12.84	0.00	11.80

주 : 기개발지는 대지, 학교용지, 공장부지, 도로면적의 합임
자료 : 서울시, 서울시 통계연보, 2004년

2) 문제점

(1) 고밀개발로 기성시가지의 주거환경 악화와 지역간 격차 심화

- 도시기반정비가 취약한 강북지역의 구릉지와 불량주택 밀집지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을 통해 대규모 고층·고밀 아파트가 집단적으로 건립됨에 따라 지구내 교통환경의 악화는 물론 학교시설 부족과 도시경관 훼손, 주변주택에 대한 일조권 침해 등 도시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그리고 기존 단독주택지의 상당수는 다세대·다가구 주택으로 변모되어 단기적으로 주택 공급효과는 있었지만 공공시설 확보 미흡으로 인한 지구내 교통환경 악화와 주차난 가중, 과밀개발에 따른 일조권 및 프라이버시 확보곤란 등으로 주거환경이 총체적으로 악화되었다. 이러한 개발양태는 서울시 강남북지역간 생활환경수준의 격차를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2) 수려한 자연환경과 도시경관의 훼손

- 서울시는 세계 유수 대도시와 비교하여 수려한 자연환경을 갖고 있다. 그래서 도시계획상에서 저층·저밀개발 등의 형태로 특별관리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요 산 주변과 한강변에 대해 도시계획상에서 층고 제한 없이 용적률 400%까지 허용하여 온 까닭에 고층·고밀 아파트 단지가 집단적으로 들어서는 빌미를 주었다. 그 결과 주요 산과 하천 변 주변에 대규모 아파트가 병풍처럼 건립됨으로써 서울시민이 공동으로 향유하여야 할 자연환경과 도시경관이 심하게 훼손되었다.

(3) 중심지 위계에 부적합한 개발과 개발가능지 관리 필요

- 주택지내 지구중심에 대해 대규모로 상업지역으로 지정하여 60층 이상의 대규모 고층·고밀의 주상복합건물 건립을 허용하는 등 중심지 위계를 무시한 개발허용으로 인해 새로운 교통·환경 문제가 야기되어 도시관리상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 상업지역 지정시 개발의 잠재력이 부족한 곳에 대해 과도하게 범위를 지정하여 중심지 육성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경우도 있다. 이때 상업지역의 범위가 필요 이상으로 넓게 지정될 경우 지가상승이 앞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구 내에 추가로 필요한 공공시설 확보시 용지매입비의 증가가 수반되므로 공공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다.
- 해당 중심지의 장래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핵심 도시기능의 도입·적용을 위해서는 대규모 개발가능지의 확보가 필수요건이다. 그러나 왕십리·청량리 부도심과 영등포 부도심의 경우는 대규모 개발가능지에 대해 토지이용계획상 관리소홀로 발전 잠재력을 많이 잃었다. 이는 공장 및 저탄장 등의 대규모 이전적지가 주상복합건물, 아파트단지로 개발됨에 따라 장래 중심지 육성을 위한 발전적 공간구조 형성과 도시기능 유치가 어렵게 되었기 때문이다.

(4) 느슨한 준공업지역 관리로 산업기반 약화

- 준공업지역은 용도규제가 타용도지역에 비해 상당히 느슨하다. 그래서 준공업지역의 토지이용은 산업구조의 변화와 부동산 시장의 영향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변모하여왔다. 특히 서울시는 만성적인 주택난과 개발가능지의 고갈로, 1990년대 이후 대규모 공장이전적지의 상당부분이 아파트 단지로 잠식되어 산업기반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 준공업지역의 면적은 지정 당시 시가지면적의 12.3%를 차지하였던 것이 현재는 4.8%로 감소하였다. 한편 준공업지역내 토지이용을 연면적 대비로 보면 주거계 용도가 약 48%, 공업계 용도가 24%를 차지하고 있다

(5) 도시 주변부 녹지지역의 용도관리 소홀

- 도시 주변부의 녹지지역은 개발제한구역과 국립공원, 도시자연공원 등의 각종 규제가 중첩된 형태로 지정된 경우가 많다. 특히 개발제한구역과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곳은 중앙정부가 관리하고 있어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그 결과 이들 지역의 상당부분이 지정 목적과는 달리 건축 적치물 공간과 재활용물 분류소, 공장, 창고 등의 용도침투가 현저하여 환경을 악화시키고 요인이 되고 있다.
- 또한 서울시는 도시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개발제한구역 내에 지하철 차량기지와 하수도 처리장, 학교 등 대규모 공공시설과 비선호 시설을 입지시켜 왔다.
- 녹지지역에 대한 용도규제도 느슨하여 지정취지와는 달리 주거지역 등으로 전환해가는 중간단계의 용도지역으로 활용되고 있다. 개발제한구역은 토지관리가 어려워 허용용도와는 달리 다양한 형태의 용도가 침투하고 있어 환경이 열악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녹지지역의 지정취지를 살릴 수 있는 토지이용 관리체계 확립이 시급하다.

(6) 교통계획과 연계성이 부족한 토지이용

- 중심지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중심지내에 적정한 도시기능의 도입과 많은 사람을 끌어들일 수 있는 흡인력의 강화가 필요하다. 전자는 토지이용과 후자는 교통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즉 중심지 육성을 위해서는 도시기능의 유치는 물론 주요 교통망의 결절점 확보와 타 연계 교통수단의 유치를 위한 용지확보가 도시계획상에서 선행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대응이 미흡하다. 특히 인구 및 교통유발시설이 시차를 두고 동일한 지역에서 대규모로 건립되고 있을지라도 개별사업단위의 교통영향평가 결과에 의존하고 있을 뿐 광역적 토지이용의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대응하고 있지 않아 교통문제 해결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7) 주거지역내 소음공해와 유해용도 난립

- 최근 차량 보급률의 증가와 더불어 주요 간선도로변에서는 교통량의 폭증으로 인해 소음피해로 인한 민원이 늘고 있다. 또한 주택 내에서는 인쇄소와 공장 등의 용도가 혼재된 도심 및 준공업 지역주변에서도 소음공해가 심각하다. 최근에는 주택지내에 단란주점, 노래방 등의 용도가 침투하여 주거환경을 저해하고 있으며 러브호텔 및 유흥업소가 주택가와 학교주변에 난립하여 주거환경과 교육환경을 악화시키고 있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주거환경과 교육환경을 저해하는 용도들이 난립하고 있는 것은 토지이용계획상 느슨한 용도규제와 관련성이 있는 만큼 개선이 필요하다.

(8) 대기오염완화를 위한 계획적 조치 미흡

- 서울시의 대기오염은 매년 증가 추세로 오존주의보 발령 횟수가 늘고 있다. 이것은 서울시가 분지형 도시여서 차량증가에 따른 대기오염을 개선하는데 지리적으로 불리한 입지조건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선진외국의 도시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토지이용계획을 통해 바람길 확보를 위한 녹지공간 및 오픈스페이스의 확보와, 건물의 높이규제 등을 실시하여 성과를 거두고 있다. 서울시는 바람의 길목에 해당되는 한강과 주요 하천, 그리고 북한산과 주요 산 주변에 이미 고층아파트가 병풍을 두른 듯이 난립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

(9) 무분별한 특별법 적용으로 도시관리상 혼란 초래

- 용도지역지구제는 도시공간관리계획상에서 각종 정비사업과 정비계획보다 상위계획에 해당된다. 도시관리상 도시정비사업은 용도지역보다 하위개념에 속하지만 특별법의 적용을 받아 예외적으로 무분별하게 남용되어 왔기 때문에 도시관리상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예를 들면 구릉지에 입지한 자연경관지구는 높이 3층 이하로 규제를 받고 있지만 바로 상단 부에 입지한 주택재개발사업지구에서는 15층 이상의 고층아파트가 특별법의 적용을 받아 건립이 허용되고 있는 등 도시관리상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2. 여건변화 전망

1) 기성시가지의 생활환경에 대한 질적 개선 요구 증대

• 일반주거지역 세분화의 정착으로 리모델링사업에 대한 관심 고조

- 일반주거지역의 세분화가 정착됨에 따라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밀도계획수립을 통해 구릉지는 저층·저밀도, 평지는 중층·중밀도, 역세권 및 중심지는 고층·고밀도로 차등 적용이 가능해져 과도한 개발로 인해 야기되었던 도시 문제들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 지역특성을 반영한 용적률의 세분화와 하향조정으로 인해 현재와 같은 고층·고밀 개발은 어렵게 될 것이다. 이와 함께 정부에서는 무분별한 재건축을 억제하기 위해 중소형 평형의 확보비율과 안전진단 기준을 강화하였고 이러한 영향을 받아 기존아파트에서는 새롭게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기보다는 기존 주택을 재활용하는 형태의 리모델링(remodeling)사업이 활발할 것으로 보인다.

• 주거환경의 질적 개선에 대한 요구 증대

- 서울시는 시민들이 소득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고밀개발을 통한 개발이익의 증대보다는 적정밀도 개발을 통한 쾌적한 주거환경 구축에 한층 관심을 갖게될 것이다. 이미 이러한 개발 양태와 요구가 서울시 전역에서 나타나고 있다.
- 쾌적한 주거환경의 확보를 위해 지구내 교통환경 및 주차환경의 개선, 일조권 및 조망권 침해 등의 개선을 위해 토지이용규제와 관련된 사항이 한층 강화될 것이다.

2) 환경친화형 도시계획의 보편화

• 녹지공간 확충에 대한 요구증대

- 서울시는 그 동안 개발의 논리가 우선시되어 각종 도시계획 사업들이 실시되어 왔고 이에 따라 기성시가지내에 입지한 기존의 녹지공간과 오픈스페이스가 콘크리트와 아스팔트 등으로 바뀌어 삭막한 도시공간으로 전락하였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자연친화형 도시공간을 확대하기 위해 녹지·공원의 확충과 자연친화형 도시계획사업의 확대를 실시하고 있고 앞으로 그 범위와 대상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대기오염이 날로 심화되고 있는 서울시 고밀도 시가지 내에서는 녹지공간의 확대에 대한 요구가 더욱 거세질 것이다.

• 대기오염 완화를 위한 도시계획적 시도 구체화

- 서울시는 대기오염에 취약한 입지적 여건을 극복하기 위해 바람의 길목에 해당되는 한강 및 중랑천, 탄천, 안양천 등의 주요 하천변과 북한산, 관악산 등의 주요 산 주변지역에 대해 바람길 확보 차원에서 토지이용을 규제한다. 즉 바람의 길을 확보하기 위해 앞으로 건물의 높이규제와 녹지공간 및 오픈스페이스의 확보 등이 추진될 것이다. 특히 서울시는 서울숲 조성과 청계천복원사업을 통해 바람의 길을 확보하여 도심지역의 열섬현상을 완화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 에너지 절약형 도시계획에 대한 요구증대

- 서울시는 교통 및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적극적인 수단의 하나로 지하철과 버스중심의 대중교통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토지이용계획상에서 중심지 및 역세권 지역에 대해 고층·고밀 개발을 유도하고, 지하철의 이용증진을 위해 연계교통시설을 도입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입체적 토지이용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보행 환경개선을 위한 용도지구의 신규지정과 지구단위계획수립 대상지도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 상업중심지에 대한 도시미관의 증진과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의 적용과 함께 가로구역별 높이규제도 확대 적용될 것이다.

3) 서울의 역사성과 정체성에 대한 관심 고조

• 역사·문화 환경에 대한 관심 고조

- 서울은 600년 도읍지로써 경복궁, 창덕궁 등의 고궁과 가회동, 인사동 등 보존되어야 할 귀중한 역사 문화 유적이 많이 남아있다. 그러나 지난 반세기에 걸친 고도성장을 위한 개발논리에 밀려 역사·문화 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주변지역에서 조차 과도한 개발이 허용되어 서울의 역사성과 정체성 확보에 있어 중요한 곳이 심하게 훼손되었다. 앞으로 서울시는 동북아의 거점도시로써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서울의 정체성과 역사성을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공공과 시민이 함께 더욱 노력해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4) 정보화 사회의 도래와 물류시스템 변화

• 정보화의 진전에 따른 토지이용의 변화

- 정보화 사회의 도래로 사이버 쇼핑몰의 이용자가 날로 증가하면서 택배의 물동량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다. 이것은 기존 유통시장의 변화는 물론 기존 상업기능의 약화를 초래하여 기존의 토지이용에 큰 변화를 줄 것이다. 특히 재래시장과 기존 주택지 내 소규모 점포들이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
- 정보화 사회로의 급속한 이행(移行)은 기존 산업구조의 재편과 이에 따른 토지이용의 변화를 요구하게 될 것이다. 특히 도심지역 및 준공업지역에서의 업무·상업·공업 기능의 변화는 물론 재택 근무형태의 증가로 교통환경에 있어서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 물류 시스템의 변화와 토지이용의 변화

- 소득수준의 향상과 함께 자가용의 보급률 증가로 인해 백화점 및 대형 할인점의 매출은 매년 늘어나고 있다. 반면에 아파트단지 및 일반주택지내 상가와 소형점포, 재래시장은 쇠퇴의 길을 걷고 있다. 이러한 환경변화 속에서 대형 할인점과 백화점은 이용객과 매출액이 계속 증가하는 방향으로 상권이 재편되고 확대될 것이며 이와 함께 토지이용상 큰 변화가 예상된다.

5)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요구 확대

•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대한 개발밀도 상향조정 요구압력 증대

- 서울시는 개발제한구역에서 우선 해제되는 곳에 대해 자연환경의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저층저밀도로 계획밀도를 설정하였다. 그러나 정부에서 추진하는 국민임대주택 사업에 대해서는 중층·중밀 개발을 허용하고 있어 향후 우선해제지역의 주민들이 이곳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정비사업시 완화해 달라는 요구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므로 이에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 국책사업 및 지역현안사업의 입지 가능성 확대

- 정부에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사유의 하나로 정부의 국책사업과 서울시의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가능하도록 허용하였다. 서울시와 같이 신규 개발가능지가 고갈된 도시에서는 향후 개발제한구역을 일부 해제하여 국책사업과 지역 현안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특히 국가에서 추진 예정인 서민계층을 위한 국민임대주택의 건립과 서울시 현안사업의 추진, 도시계획시설의 입지에 대해서는 자연환경의 훼손을 최소화하는 범위내에서 적절히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6) 대형 국책사업과 대규모 개발가능지 계획 구체화

(1) 경부고속전철 개통, 신공항철도의 건설, 행정중심복합도시 및 공공기관 이전 가시화

- 용산역은 서울역과 함께 경부고속전철의 개통에 즈음하여 대규모 민자역사 개발이 완료됨에 따라 서울의 중앙역사로써의 기능을 견고히 다져가고 있다. 특히 용산역은 현재 건설중인 인천국제공항선과 신분당선의 시발역으로 향후 교통의 주요 결절점으로써 그 기능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이러한 영향을 받아 주변지역에서는 대규모 주상복합건물의 건립이 활발하다. 그리고 용산역 조차장의 이전이 가시화되면서 국제업무단지 조성사업이 착수되면 강북도심일대의 도시공간구조 및 토지이용에 큰 영향을 줄 것이다.
- 일부행정부처와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가시화될 경우를 대비하여 계획적 관리방안을 미리 마련할 필요가 있다.

(2) 대규모 미개발지에 대한 개발계획의 구체화

- 그동안 대규모 미개발지로 남겨졌던 마곡지구와, 용산 미군기지 부지, 문정· 장지지구 등은 공공의 목적을 위해 토지이용 및 도시관리를 위한 큰 방향이 정해진 상태이다. 그러나 이 대규모 미개발지구에서 정비사업이 추진될 경우 도시공간구조상의 변화는 물론 주변지역의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 특히 문정·장지지구는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청계천 복원사업과 관련한 도심기능의 이전수용, 대규모 공공임대주택의 건립, 법원 단지 및 물류유통단지의 조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정비사업을 추진중에 있다. 이와 함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국책사업의 일환으로 대규모 서민주택의 건설이 광범위하게 추진중에 있는데 자칫하면 자연환경의 훼손이 우려되므로 도시관리차원에서 계획적으로 대응한다.

3. 미래상

“지역특성을 살린 친환경 도시”

• 지역의 특성과 개발여건을 반영한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을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의 구현과 기존 토지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한다.

1. 서울시는 이미 대규모 신규개발지가 고갈된 상태이며 “기개발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한정된 토지자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신규개발시 인프라시설을 고려한 적정밀도 개발에 역점을 두고 도시의 성장관리를 구현해 나간다.

2. 기성시가지에 대해서는 토지이용의 계획적 관리와 일정수준의 주거환경 확보, 그리고 준공업지역 내에서의 미래산업기반 유지를 위해 용도지역의 지정취지에 부합하는 적정 밀도 설정과 적정용도의 도입이 가능하도록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고 운용방법에 있어서도 내실화를 기한다.

3. 서울시 및 지구차원의 특성을 반영해 수려한 도시경관을 보호하고 훼손된 자연환경을 복원할 수 있도록 규제적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한다. 한편 역세권 및 간선도로변에 대해서는 대중교통의 이용증진을 위해 효율적 토지이용을 통해 에너지 절약형·환경친화형 도시를 구현해 나간다.

4. 서울시는 대규모 “개발가능지”가 매우 한정되어 있으므로 도시의 장래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정한 도시기능의 도입과 공공성 확보가 가능하도록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적으로 대응한다.

5. 보존의 가치가 높은 “개발억제지”, 예를 들면 도시공원 및 주요 녹지축에 대해서는 쾌적한 도시환경 확보를 위해 규제적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한다. 그리고 “개발불가능지”는 주로 지형지물과 하천 등이 해당되지만 이곳에 대해서는 토지이용계획상 공원 및 녹지지역 등으로 지정하여 계획적으로 관리한다.

4. 계획방향

• 토지이용계획의 기본방향은 2011 도시기본계획 내용과 정책적으로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여건변화에 유연하게 대응 할 수 있도록 계획내용을 수정·보완한다. 따라서 계획목표를 새롭게 수립하여야 하며 2011 도시기본계획의 보완사항은 다음과 같다.

- 장래 도시발전방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규모 개발가능지에 대해서는 토지이용의 관리방향을 여건변화에 맞게 재설정하고, 한정된 토지자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교통환경 개선계획과 연계시켜 입체적 토지이용을 확대 실시토록 한다.
-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대상지에 대하여 계획적 관리와 자연친화형 토지이용계획을 추진해 나간다.

• 토지이용계획의 기본방향은 미래상을 구현하면서 현안과제를 해결하고 장래의 새로운 변화 요구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정한다.

- 지역의 특성과 현안과제 개선을 반영한 토지이용계획의 수립을 통해 건전한 방향으로 도시의 발전을 유도한다. 또한 적정밀도계획의 적용을 통해 서울시 주거환경의 질이 일정수준이상으로 확보되도록 유도하여 생활수준 향상에 따른 생활환경 개선에 대한 시민 요구증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한다.
- 양호한 도시환경의 구축을 최우선 과제로 정해서 자연환경을 활용한 대기의 원활한 흐름 확보를 통해 대기오염을 개선하고, 삭막한 도시공간이 녹지·공원 확충을 통해 자연친화형 도시공간으로 바뀌도록 노력한다.
- 자연경관의 보호가 필요한 곳과 역사가 깃든 지역에 대해서는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서울의 정체성 확보는 물론 도시경쟁력 강화에도 이바지하도록 한다.
- 한정된 토지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대규모 미개발지 및 개발가능지에 대해서는 계획적 관리를 실시하고 특히 중심지에 대해서는 교통시설확충과 연계된 입체적 토지이용계획과 지하공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토록 한다.
- 서울시 대기오염의 개선과 개발제한구역의 계획적 관리, 삭막한 도시공간의 환경개선을 위해 자연친화형 토지이용계획을 시가지전역으로 확대 적용해 나간다.

5. 목표체계 "지역특성을 살린 친환경 도시"

목 표	과 제	전 략	시 책	단기	중장기
1. 자연친화형 토지이용계획	개발제한구역 내에 입지할 도시계획시설 및 공공사업	• 개발제한구역의 훼손 최소화 유도	- 집단취락의 해제기준을 지침상 최대기준으로 설정 - 해제범위를 주택이 밀집한 범위내에서 설정 - 불가피하게 포함된 공지는 공공시설로 우선 활용	✔	
		• 국책사업 및 지역 현안 사업의 제한적 실시	- 영세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건립 - 국민임대주택에 국한하여 제2종일반주거지내 조정검토 - 개발제한구역 내에 입지할 도시계획시설 및 공공사업	✔	
	자연환경을 활용한 대기오염 완화	• 바람의 길 확보	- 주요 하천 및 주요 산 주변에 대해 고도 관리 - 오픈스페이스 확보와 건물배치 조정		✔
	쾌적한 도시환경 구현을 위해 녹지공간 확충	• 녹지 지역의 점진적 확대	- 녹지 지역과 공원의 확대 지정 - 개발제한구역의 녹지 총량제 도입 - 기성시가지내에 거점공원 녹지의 지속적 조성 - 개발제한구역내 훼손지역에 녹지복원	✔	
		• 수경녹지축의 복원	- 역사성 회복과 쾌적성 증진을 위한 청계천 복원 - 홍제천, 탄천 등 지천의 복원		
2. 도시경관 관리체계의 구축	주요 지역의 도시 경관 관리	• 주요 하천과 산 주변의 특별관리	- 주요 하천 주변에 대해 경관규제 - 주요 산 주변에 대해 고도규제	✔	
	역사문화환경 보전	• 주요 문화재 주변 지역의 특별관리	- 유형문화재 주변지역의 고도관리 - 역사환경 저해 용도의 침투 규제	✔	
	중심지의 도시경관 관리	• 지역 특성을 반영한 고도 관리	- 중심지에 대한 가로구역별 높이기준 적용 -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고도규제 보완		✔
3. 낙후지역의 생활환경정비	지역균형발전	•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전략 사업 추진	- 중생활권 단위로 기반시설정비 계획 수립 - 균형발전촉진지구 지정·육성 - 낙후지역에 뉴타운 사업 실시 - 낙후지역 개발의 견인을 위한 민간부문 활력의 도입	✔	✔
	도심부의 특별 관리	• 도심부(사대문안) 지역을 "특별관리지구" 로 지정	- 역사성 및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세심한 개발관리 장치 마련 - 행재정 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		✔
	일정수준이상의 주거환경 확보	• 적정한 계획밀도 적용	- 일반주거지역 세분화의 정착과 보완 - 일조권, 주차장 기준 강화	✔	
		• 지역특성을 반영해 계획밀도 차등적용	- 지역 특성별로 계획밀도 차등 적용 - 세대밀도의 도입 검토		✔
		• 단독주택지 및 집단불량취락지의 계획적 관리	- 도시기반시설의 적정수용용량 수준에서 정비 추진 - 단독주택지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공공투자 및 지원 강화 - 집단취락지(공원, 녹지지역) 이주 또는 현지 저밀도 주거개선사업 시행	✔	
4. 용도지역의 지정취지 강화	용도지역 조정원칙 재조정	• 중심지위계와라 지역특성을 살리는 용도지역 구현	- 중심지의 성격부여와 지역여건별 공간수용가능성을 고려하여 조정	✔	
	준공업지역내 산업집적기반 유지	• 산업기반 유지와 주공혼재 완화	- 산업집적기반의 활성화 및 미래형 산업입지 유도 - 대규모 주거입지의 선별 허용 및 주공혼재 문제 개선	✔	
	상업지역의 지정취지 견지	• 지역별로 중심지 육성을 도모하는 개발 유도	- 상업지역 토지이용의 업무·상업용도로 개발유도 - 중심지내 개발가능지의 계획적 관리	✔	
5. 토지자원의 효율적 이용	대규모 개발가능지의 계획적 관리	• 장래 발전을 위해 용지 확보 및 계획적 관리	- 계획적인 관리와 보전 중시의 토지 이용 - 공공성이 강한 국책 사업 등은 제한적으로 허용		✔
	입체적 토지이용과 지하공간의 체계적 관리	• 지상과 지하공간의 통합적 관리 실시	-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입체적 토지이용 의무화 - 지하공간 종합관리 기본계획 수립		✔
	지역여건을 반영한 적정개발 유도	• 도시기반시설의 수용용량을 반영한 개발밀도 설정	- 도시기반시설 연동제 도입 - 블록 단위 교통영향평가제 도입 - 기준용적률의 도입과 적용 - 공공시설 확보시 용적률 할증 검토	✔	
	중심지 위계를 고려한 적정개발 유도	• 중심지 위계와 연동한 상업지역의 계획 밀도설정	- 용도용적제의 지속적 적용 - 중심지 위계별로 개발 밀도 차등 적용	✔	

목표1 자연친화형 토지이용계획

서울시 대기오염의 개선과 생활환경의 정비 및 도시환경의 질을 한단계 높이기 위해 개발제한구역의 계획적인 관리와 바람길의 확보, 녹지 공원의 확충 등이 가능하도록 자연친화형 토지이용계획을 적극 확대해 나간다.

과제1 개발제한구역의 조정 및 계획적 관리

개발제한구역 해제 대상지는 도시의 녹지벨트를 형성하는 중요한 지점에 위치하고 있는 만큼 자연친화형 정비를 유도하고 계획적으로 관리한다. 개발제한구역은 과밀한 환경인 서울시로 보아 오픈스페이스와 녹지공간을 제공하는 역할하고 있다.

전략 1. 개발제한구역의 훼손 최소화 유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집단취락의 선정 기준을 우선해제지침상 최대기준인 "주택호수밀도 20호/ha 이상이면서 주택호수 100호 이상인 집단취락" 으로 하며 해제경계선도 주택이 밀집한 범위로 한정하여 엄격하게 설정하여 외곽의 전·답 등 녹지가 포함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이 최소화되도록 한다.

시책 1. 집단취락의 해제기준을 지침상 최대기준으로 설정함
시책 2. 해제범위를 주택이 밀집한 범위 내에서 엄격하게 설정함
시책 3. 불가피하게 포함된 공지는 공원 등 공공시설로 우선 활용함

전략 2. 국책사업 및 지역현안사업의 제한적 실시

개발제한구역 해제의 대상으로 국책사업과 지역현안사업이 추가됨에 따라 이것이 자칫하면 남용되어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이 우려되므로 공공성이 강한 용도로 이용되는 경우로 제한한다.

시책 1. 영세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건립
시책 2. 국민임대주택에 국한하여 제2종일반주거지내 조정검토
시책 3. 개발제한구역 내에 입지할 도시계획시설 및 공공사업

과제2 자연환경을 활용한 대기오염 완화

서울과 같이 수려한 자연환경으로 둘러싸인 도시일수록 산과 하천, 바람 등을 이용하여 대기질을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많으므로 기존의 자연지형을 이용하여 바람의 길을 확보토록 한다. 바람길 확보를 위해 중요한 지점에 대해서는 전략적으로 토지이용을 규제한다.

전략 1. 바람의 길 확보

바람의 길 확보는 주요 하천과 산을 중심으로 설정하되 장기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대응한다. 이때 주요지점에 대해서는 건물배치와 높이규제를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건조물의 철거와 복원사업도 병행하여 실시한다.

시책 1. 주요하천 및 주요 산 주변에 대해 고도관리
시책 2. 오픈스페이스 확보와 건물배치 조정

과제3 쾌적한 도시환경 구현을 위한 녹지공간의 확충

그 동안 개발시대에 훼손된 녹지·공원을 관민협동으로 다양한 정비사업을 통해 전략적으로 확충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계획수립에 적극 반영하도록 한다.

전략 1. 녹지지역의 점진적 확대

기존의 녹지지역에 대해서는 타용도로의 변경을 억제하기 위해 토지이용계획상 규제를 강화한다. 기성 시가지 내 녹지지역에 대해서는 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전략적으로 확대해 나간다.

시책 1. 신규개발이나 재개발·건축시 녹지지역과 공원의 확대지정
시책 2. 기성시가지와 연계한 개발제한구역의 녹지 총량제 도입
시책 3. 서울 숲, 마을공원 등 기성시가지 내에 거점 공원녹지의 지속적 조성
시책 4.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지역에 생태자연학습장 조성 등 녹지 복원

전략 2. 수경 녹지축의 복원

도심지역에서 쾌적한 도시환경의 확보와 역사성의 회복을 위해 청계천 복원사업과 주변지역의 정비사업을 체계적이며 일체적으로 추진하여 서울의 남북녹지축을 복원하고 청계천 등 지천을 복원하여 수경축을 구축한다.

시책 1. 역사성 회복과 도심 쾌적성 증진을 위한 청계천 복원
시책 2. 홍제천, 탄천 등 지천의 복원

목표2 도시경관 관리체계의 구축

수려한 도시경관 및 역사·문화 환경의 보호를 위해 특별관리가 필요한 곳에 대해서는 계획수립과정에서부터 공공의 역할을 강화하여 과도한 개발에 인해 훼손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한다. 그리고 그 동안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도시경관과 자연환경이 훼손된 곳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복원계획을 수립하여 대응한다.

과제1 주요지역의 도시경관관리 강화

서울의 아름다움을 잘 나타내는 한강과 북한산 등의 주요 하천과 산은 서울시민들이 공유하여야 하는 귀중한 자산이므로 그 주변지역에 대해서는 고도규제를 수반하는 토지이용계획수립 등을 통해 특별관리를 실시한다.

전략 1. 주요 하천과 산 주변의 특별관리

서울시의 도시경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한강, 중랑천, 탄천, 안양천, 양재천 등의 주요 하천과 북한산, 도봉산, 아차산, 관악산 등의 주요 산 주변에 대해서는 도시경관관리구역으로 지정하여 특별관리를 실시한다.

시책 1. 주요 하천주변에 대해 경관규제
시책 2. 주요 산 주변에 대해 고도규제

과제2 역사문화환경 보전

역사적으로 귀중한 유형 문화재가 입지한 지역은 서울시민 모두가 공유하여야 할 중요한 역사 문화유산이므로 주변지역까지 포함하여 토지이용계획 수립 등을 통해 특별관리를 실시한다.

전략 1. 주요 문화재 주변지역의 특별관리

주요문화재가 입지한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종묘 등의 주변지역에 대해서는 토지이용을 통해 특별관리를 한다. 이곳은 건물의 고도는 물론 건물의 용도와 색채도 역사환경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지구단위계획 등을 수립하여 특별 관리한다.

시책 1. 유형문화재 주변지역의 고도관리
시책 2. 역사환경 저해 용도의 침투 규제

과제3 중심지의 도시경관 관리

중심지 내 고층빌딩은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토지이용계획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시가지 내에서의 도시경관관리는 토지이용상 중심지와 주거지로 구분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때 시가지전체 차원에서 높이관리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시경관관리계획을 수립한다.

전략 1. 지역특성을 반영한 고도관리

도시경관관리계획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주거지역 세분화에 대한 종별 층고규제의 보완과 기정 상업지역의 가로구역별 높이규제 대상지의 확대가 필요하다. 그러나 제3종 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 그리고 준공업지역은 높이규제가 없어 과도한 고층개발로 인한 새로운 도시문제 발생이 우려되므로 경관관리계획의 관점에서 이에 대한 보완기준을 마련한다.

시책 1. 중심지에 대한 가로구역별 높이기준 적용
시책 2.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고도규제 보완

목표3 낙후지역의 생활환경정비

기성시가지내 낙후지역은 열악한 기반시설로 인하여 생활환경의 질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있다. 따라서 심화되는 지역간 불균형격차를 줄이기 위하여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전략사업을 추진한다.

과제1 지역균형발전

주로 1970년대 이전에 형성된 구시가지와 신시가지간에 심화되고 있는 주거환경과 교육환경, 교통인프라 정비수준 등의 지역간 불균형 격차를 줄이기 위하여 장기적 관점에서 전략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간다.

전략 1.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전략사업 추진

서울시는 지역 균형발전의 관점에서 미래의 중심지 육성과 낙후지역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민관협력형 전략사업을 추진한다.

시책 1. 중생활권단위로 생활환경종합정비계획 수립
시책 2. 낙후지역 생활권의 중심지 육성을 위한 균형발전촉진지구의 지정
시책 3. 낙후된 주거지역을 대상으로 뉴타운 시범사업 추진
시책 4. 낙후지역 개발의 견인을 위한 민간부문 활력의 도입

과제2 도심부(사대문안) 특별관리

600년 역사도시의 역사성과 다양한 문화유산을 보유한 도심부(사대문안) 지역을 "특별관리지구"로 지정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전략 1. 도심부(사대문안) 지역을 "특별관리지구"로 지정

도심부관리계획의 내실화를 통해 600년 고도의 역사성을 간직한 도심부를 대상으로 보존과 개발을 조화시킬 수 있는 세심한 개발관리 장치를 개발하고, 공공투자 및 행정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

시책 1. 역사성 및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세심한 개발관리 장치도입 및 법적 근거 마련
시책 2. 도심 주거기능 확보를 위해 상업지역에 적용되는 용도용적제에 대한 별도기준 마련

과제3 일정수준이상의 주거환경 확보

주거지역 세분화의 도입·적용과 더불어 지역의 특성과 주택유형을 고려하여 일정수준 이상의 주거환경 확보가 가능하게 되었다.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 일조권과 통풍, 오픈스페이스 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제도를 재정비하여 계획밀도를 적정한 범위까지 조정한다.

전략 1. 적정한 계획밀도 적용

일반주거지역의 세분이 2003년 7월부터 적용됨에 따라 각종 정비계획상 밀도계획은 이것과 정합성을 갖도록 한다. 이와 함께 서울시도시계획조례 및 건축조례 등을 개정하여 일조권 및 사선제한, 주차장기준 등을 강화해 나간다.

시책 1. 일반주거지역 세분화의 정착과 보완
시책 2. 일조권 및 주차장 기준강화

전략 2. 지역특성을 반영해 계획밀도 차등적용

각종 정비계획수립시 주거지역 세분의 취지를 살려 지역특성과 주택유형 등을 반영한다. 이와 함께 주택재개발 및 재건축사업과 관련된 정비기본계획 수립시 세대밀도 기준도 도입하여 과밀개발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소형평형 위주의 재개발 사업이 많이 실시되고 있는 곳에 대해서는 용적률보다는 세대밀도가 공공시설의 이용에 부담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시책 1. 지역특성별로 계획밀도 차등적용
시책 2. 세대밀도의 도입 검토

전략 3. 단독주택지 및 집단불량취락지의 계획적 관리

주거환경이 양호한 단독주택지는 입지특성과 개발밀도 등을 고려하여 제1종 전용주거지역 또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한다. 그러나 노후단독주택지에 대해서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주택재개발 또는 주택재건축의 정비예정구역에 포함시켜 지구내 공공시설의 효율적 확보를 위해 조건부 용적률 완화도 실시한다. 이와 함께 용도지역·지구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인접 지역과 조화되도록 조정한다.

시책 1. 노후한 단독주택지에 대해서는 도시기반시설의 확보와 연동해서 용적률의 완화 실시
시책 2. 단독주택지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공공투자 및 지원 강화
시책 3. 공원 또는 녹지지역의 집단불량취락지는 이주 또는 현지 저밀도 주거 개선사업 시행(예 : 헌인마을 등)

목표 4 용도지역의 지정취지 강화

산업구조의 변화와 주택개발의 압력으로 인해 상업지역과 준공업지역 내에서는 타용도로 전환되는 사례가 많은 만큼, 중심지의 육성과 산업기반의 유지를 위하여 용도지역 본래의 지정취지를 살린다.

과제1 용도지역 조정원칙의 재조정

2011 도시기본계획에서는 중심지 위계별로 획일적인 용도지역 조정원칙을 제시하고 있으나, 지역특성에 맞는 용도지역 설정을 위해 재조정하도록 한다.

전략 1. 중심지 위계와 지역특성을 살리는 용도지역 구현

현재 용도지역조정은 주로 중심지 위계에 따라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동일한 중심지 위계라 할지라도 지역의 여건에 따라 수용가능한 용량이 다를 수 있으므로 용도지역 조정시 지역특성을 동시에 고려하여 조정한다.

시책 1. 2011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중심지 위계별 용도지역 조정방안을 참고하되 중심지 성격부여와 지역여건별 공간적 수용 가능성을 고려하여 조정

과제2 준공업지역 내 산업집적기반 유지

기존 준공업지역 내에 그동안 집적해온 공업기능은 지역의 산업기반을 유지하고 타 용도로의 무분별한 전환 억제와 주공혼재도 제어한다.

전략 1. 산업기반 유지와 주공혼재 완화

준공업지역내 기존 공장부지의 총량은 가능한 현상 유지토록 한다. 특히 장시간에 걸쳐 이루어진 산업기능 집적지역에 대해서는 타 용도의 침투를 억제하고 활성화를 도모하여 미래형 산업입지를 유도한다. 또한 무분별한 주거용도 침투로 인한 주공혼재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대규모 주거입지는 선별적으로 허용한다.

시책 1. 산업집적기반의 활성화 및 미래형 산업입지 유도
시책 2. 입지의 선별 허용 및 주공혼재 문제개선

과제3 상업지역의 지정취지 견지

기정 상업지역내에서는 중심지의 육성과 관련성이 있는 도시기능 위주로 신규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토지이용계획상에서 허용용도 도입을 장려한다. 그리고 지구내 이전적지 및 개발가능지에 대해서도 정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계획적으로 관리하여 지역별로 중심지 육성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토록 한다.

전략 1. 지역별로 중심지 육성을 도모하는 개발 유도

상업지역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의 내실화를 통해 타용도로의 전환을 억제한다. 특히 주거기능의 개발을 목적으로 한 주상복합건물 및 아파트 건립을 가급적 지양토록 한다. 중심지에 대해서는 본래 지정취지를 살려 업무·상업용도가 주용도로 개발되도록 유도하고 지역별로 중심지 육성을 실시하여 함께 장거리 통근 및 교차 통근을 줄이는 직주근접형 도시를 구축해 나간다.

시책 1. 상업지역 토지이용의 업무·상업용도로 개발유도
시책 2. 중심지 내 개발가능지의 계획적 관리

목표 5 토지자원의 효율적 이용

서울시는 대규모 개발가능지가 고갈된 상태이므로 장래 도시발전을 위해서 교통의 편리성 증진과 도시환경 개선, 장래의 발전잠재력에 역점을 두고 한정된 토지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한다.

과제1 개발가능지의 계획적 관리

대규모 개발 가능지는 도시발전을 위해 귀중한 토지자원이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계획을 수립하여 도시의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략적인 공간으로 활용토록 한다. 대규모 미개발지는 전략적으로 개발해야 할 곳과 개발유보지, 보전지역으로 나누어 관리방향을 제시한다.

전략 1. 장래발전을 위해 용지확보 및 계획적 관리

대규모 개발 가능지 중에서 장래 도시발전을 위해 당장의 개발보다는 유보가 필요한 곳에 대해서는 장기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적으로 관리한다. 이러한 곳에 대해서는 향후 남북통일과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해서 장래 귀중한 토지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계획적으로 관리한다.

시책 1. 대규모 미개발지의 계획적 관리와 보전중시의 토지이용
시책 2. 공공성이 강한 국책사업 등은 제한적으로 허용

과제2 입체적 토지이용과 지하공간의 체계적 관리

한정된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지상공간과 지하공간을 통합적으로 활용·관리한다. 특히 지하공간은 한 번 잘못 개발되면 원상복구가 어려우므로 장기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무분별한 개발을 억제한다.

전략 1. 지상공간과 지하공간의 통합적 관리 실시

지구단위계획 등을 통해 지상공간과 지하공간을 함께 고려한 입체적 토지이용을 도모하여 지구 내 필요한 공공시설의 확충과 새로운 도시기능의 유치 및 보행공간의 확보 등을 위해 노력한다. 이와 함께 지하 매설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장기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한다.

시책 1. 지구단위계획수립시 입체적 토지이용 의무화
시책 2. 지하공간종합관리기본계획 수립

과제3 지역여건을 반영한 적정개발 유도

각종 정비계획을 수립하거나 사업을 인·허가할 때부터 중심지의 위계, 간선도로와 지구내 도로의 수용 용량과 대중교통으로의 접근성,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정 밀도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한다.

전략 1. 도시기반시설 수용용량을 반영한 개발밀도설정

지역차원에서 장래의 개발수요를 예측한 후 기존도로의 수용용량과 도로의 개설가능성 등 기반시설 여건을 함께 고려하여 계획밀도를 설정한다. 이때 기성시가지 내에서 추가로 도로의 확충이 곤란하다면 계획밀도를 계획수립단계에서부터 낮게 적용한다.

시책 1. 도시기반시설 연동제 도입
시책 2. 블록단위 교통영향평가제 도입
시책 3. 기준 용적률의 도입과 적용
시책 4. 공공시설확보 시 용적률 할증 검토

과제4 중심지 위계를 고려한 적정개발 유도

해당중심지의 성격과 중심지 위계에 적합하도록 적정밀도의 개발과 적정용도의 도입을 토지이용계획수립을 통해 계획적으로 유도하여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토록 한다.

전략 1. 중심지위계와 연동한 상업지역의 계획밀도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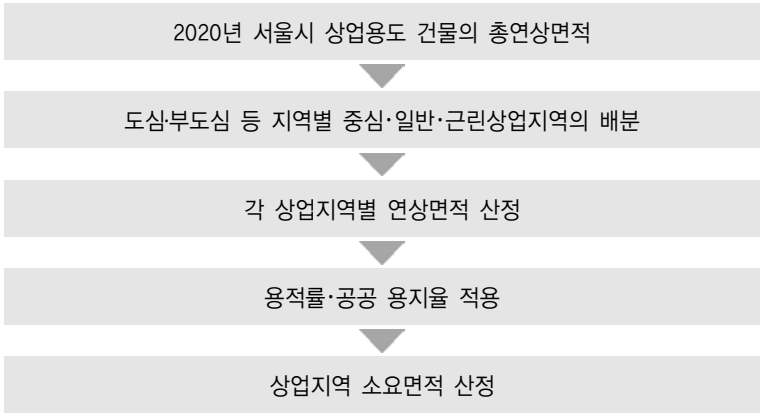
해당 중심지의 성격과 위계, 도시기반 정비실태를 함께 고려하여 지역별로 개발가능한 밀도의 범위를 정한다. 그리고 중심지의 계획적인 육성과 관리를 저해하는 용도침투와 난개발은 지양토록 한다.

시책 1. 상업지역의 용도용적제의 지속적 적용
(단, 도심부는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여 대응)
시책 2. 중심지 위계별로 개발밀도 차등 적용

6. 장래 서울시 용도지역별 소요면적 추정

1) 상업지역

(1) 소요면적의 산정절차



(2) 산정방법 및 기준

- 2020년 상업지역 소요면적을 산정하기 위하여 먼저 2020년 3차 산업 종사자수와 2020년 3차 산업 종사자 1인당 상업계 연상면적을 추계한다.
  - 서울의 경우 2020년 종사자수는 5,672천명으로 전망된다. 이 중 3차 산업에 종사하는 종사자수는 전체 종사자수의 81.9%인 4,645천명이다. 여기에 더하여 2020년 2차 산업(제조업) 종사자중 약 80%(1991년에는 약 76%)인 817천명이 상업을 겸한 제조(예: 중구의 인쇄출판사, 용산의 컴퓨터 조립사 등) 및 기획, 영업 및 기타업무 등 사무에 종사할(오피스에서 근무. 예 : 삼성전자 및 엘지 석유화학 사옥 등) 것으로 추정되며, 이들을 합한 5,462천명이 상업용도 건물에서 근무할 것으로 전망된다.
  - 2020년 3차 산업 종사자 1인당 상업계 연상면적은 과거의 인당 연상면적(1991년 16.5㎡, 2000년 19.6㎡) 추세와 외국 대도시의 1인당 상업계 연상면적 (1990년 동경은 18.8㎡, 뉴욕은 23.2 ~ 27.9㎡)을 고려하여26.13㎡로 산정 한다.
    (* 종전 도시기본계획(1997년)의 2011년 서울시 3차 산업 종사자 1인당 상업계 연상면적을 24.45㎡로 산정하고 있다.)

• 2020년 서울시 상업용도 건물의 총 연상면적은 2020년 3차 산업 종사자수와 2020년 3차 산업 종사자의 1인당 상업계 연상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 2020년의 서울시 3차 산업 종사자수 5,462천명과 2020년 3차 산업 종사자 1 인당 상업계 연상면적 26.13㎡를 곱한 2020년 서울시 상업용도 건물의 소요면적(연상면적 기준)은 서울시 전체적으로 142,722,060㎡이고, 도심과 부도심 등 주요 중심지역에는 90,977,818㎡인 것으로 추정된다.
- 여기서는 주요 중심지역에 도심, 부도심 외에 지역·지구중심을 포함시켰으며, 그 나머지 상업용도는 주택시가지 등 여타 지역에 분포하는 것으로 본다.
- 서울시 전체 : 142,722,060㎡
- 도심, 부도심, 지역·지구중심 : 90,977,818㎡
- 주택시가지 등 기타지역 : 51,744,242㎡

• 도심, 부도심, 지역·지구중심 등 각 지역별로 상업용도의 연상면적을 배분한다.

- 도심, 부도심, 지역지구중심의 상업지역의 주거용도는 26,076,478㎡(주거지역 소요면적 추정 참조)이며, 이를 이들 지역의 상업용도 90,977,818㎡와 더하면 이들 지역의 총 연상면적은 117,054,396㎡이다
- 도심지역의 상업+주거용도 연상면적은 33,660,000㎡를 적용한다.
- 중심지역의 상업과 주거용도의 연상면적 117,054,396㎡ 중 도심지역의 33,660,000㎡를 제외한 83,394,396㎡에 대한 부도심과 지역·지구중심의 상업과 주거용도 연상면적비는 70:30비율로 배분한다.
- 도 심 : 33,660,000㎡
- 부도심 : 58,376,078㎡
- 지역·지구중심 : 25,018,318㎡

• 도심, 부도심, 지역·지구중심 각각에 대해 중심·일반·근린상업지역별로 상업+주거용도의 연상면적을 배분한다.

- 상업 + 주거용도를 중심지 위계에 따라 중심상업, 일반상업, 근린상업지역으로 나누고, 도심, 부도심, 지역·지구중심의 상업+주거용도에 대한 각각의 구성비를 다음과 같이 배분한다.

[표 II-5] 2020년 서울시 상업지역 연상면적의 지역별 배분

구 분	상업+주거용도 연상면적	상업+주거 연상면적의 지역별 배분		
		중심상업	일반상업	근린상업
도 심	33,660,000㎡	20,196,000㎡(60%)	13,464,000㎡(40%)	-
부 도 심	58,376,078㎡	29,188,039㎡(50%)	29,188,039㎡(50%)	-
지역·지구 중심	25,018,318㎡	-	7,505,495㎡(30%)	17,512,823㎡(70%)
계	117,054,396㎡	49,384,039㎡	50,157,534㎡	17,512,823㎡

- 상업지역별 연상면적에 대해 용적률과 공공 용지율을 적용하여 2차원적으로 토지면적을 산출한다.
- 위에서 산출한 상업지역별 연상면적을 2차원의 토지면적으로 산정하기 위해, 용적률 및 공공 용지율을 중심·일반·근린상업지역별로 다음과 같이 적용하였다.

중심상업지역 : 용적율 900%, 공공공지율 45%
일반상업지역 : 용적율 700%, 공공공지율 40%
근린상업지역 : 용적율 400%, 공공공지율 30%

[표 II-6] 2020년 서울시 상업지역 면적의 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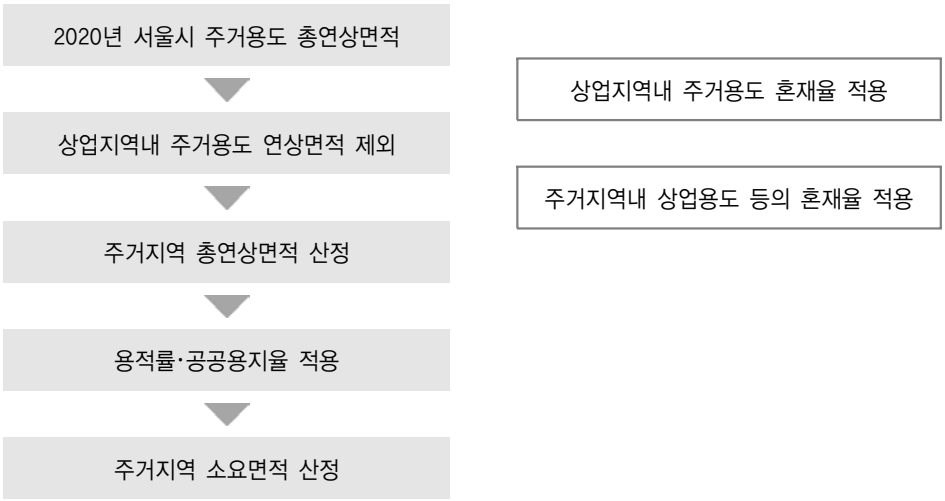
구 분	적용기준 (%)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계(㎢)	
	용적률	공공 용지율	상면적	면 적	상면적	면 적	상면적	면 적	상면적	면 적
도 심	900	45	20.2	4.1	13.4	3.2	-	-	33.6	7.3
부 도 심	700	40	29.2	5.9	29.2	6.9	-	-	58.4	12.8
지역·지구중심	400	30	-	-	7.5	1.8	17.5	6.2	25	8
계	-	-	49.4	10.0	50.1	11.9	17.5	6.2	117.0	28.1

주 : 용적률 산정은 중심상업지역은 도심재개발 기본계획을, 일반상업지역은 용산부도심 지구단위계획을 참조

- 이를 토대로 하여 2020년 상업지역의 공간소요면적을 결정한다.
  - 이상과 같은 절차와 기준에 따라 2020년 서울시에 필요한 상업지역의 면적을 산정해 보면 28.1㎢로, 이는 2011 도시기본계획에서 추계했던 28㎢와 거의 같다. 또한 2001년의 1월 상업지역면적 22.92㎢보다는 5.18㎢가 많으며, 2004년 24.1㎢ 보다는 4㎢ 많다.

2) 주거지역

(1) 소요면적의 산정절차



(2) 산정방법 및 기준

- 2020년 주거지역 소요면적을 산정하기 위하여 먼저 2020년 서울시 1인당 주거연상면적을 추계한다.
  - 2020년 1인당 주거연상면적은 과거의 1인당 연상면적 (1989년 10.6㎡, 1995년 15.2㎡, 2000년 19.5㎡)의 추세를 고려하여 27.83㎡(8.44평)로 산정한다.
    (* 종전 도시기본계획(1997년)의 2011년 서울시 인구 1인당 주거 연상면적은 14.59㎡(4.42평)로 산정되었다.)
- 2020년 서울시 주거용도 건물의 총 연상면적은 2020년 서울시 인구와 2020년 서울시 인구 1인당 주거 연상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 2020년의 서울시 인구 9,798천명과 2020년 서울시 1 인당 주거 연상면적 27.83㎡를 곱하여 2020년 서울시 주거용도의 소요연상면적은 272,738,278㎡ 인 것으로 추정된다.
- 상업지역내에 포함되어 있는 주거용도의 연상면적을 제외시킨다.
  - 위의 주거용도 연상면적 중 상업지역내에 포함되어 있는 주거기능 면적을 중심지 위계에 따른 상업지역별 주거혼재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표 II-7] 2020년 서울시 상업지역내 주거연상면적의 산정

구 분	중심상업	일반상업	근린상업	계
상업지역연상면적(㎡)	49,384,039	50,157,534	17,512,823	117,054,396
주거혼재율(%)	15	25	35	-
상업지역내주거연상면적(㎡)	7,407,606	12,539,384	6,129,488	26,076,478

- 주거지역내 주거용도의 연상면적은 서울시 총 주거연상면적(272,738,278㎡)에서 상업지역내 주거연상면적(26,076,478㎡)을 제외시킨 246,661,800㎡ 이다.

• 다음으로, 주거지역내에 입지한 주거관련 용도의 연상면적을 산정한다.

- 주거지역내에 입지하는 상업용도 등 타용도의 혼재율을 30%로 설정하여 주거관련용도의 총 연상면적을 산정한다.
- 주거지역내 상업 등 타용도의 혼재율 : 30%
- 주거지역내 상업 등 타용도의 연상면적 : 105,712,200㎡
- 주거지역의 총 연상면적 : 352,374,000㎡

• 위에서 산출된 주거지역의 총 연상면적을 2차원의 토지면적으로 산정한다.

- 주거지역의 총 연상면적을 2차원의 토지면적으로 산정하기 위해 용적률 190%, 공공용지율 40%를 적용한다.
- 용 적 률 : 190%
- 공공용지율 : 40%
- 주거지역 면적 : 309,100,000㎡

• 따라서 2020년 서울시에 필요한 주거지역 면적은 309.1㎢로 2001년 1월 현재 주거지역면적 300.7㎢보다 8.4㎢ 더 많이 필요하며, 2004년 303.8㎢보다도 5.3㎢ 더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

3) 공업지역

• **기본방향과 산정기준**

- 안정된 산업기반의 유지와 고부가가치의 도시형 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준공업지역의 공간 확보가 필요하다는 전제하에, 기존 준공업지역 면적의 존치를 원칙으로 하였다.
- 따라서 2020년 서울시 준공업지역의 지정면적은 현재 지정면적 28㎢으로 설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4) 녹지지역

• **기본방향과 산정기준**

- 녹지지역은 서울의 자연환경 보전과 도시환경의 개선, 그리고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여가와 휴식공간을 제공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능한 한 면적의 감소를 최소화하였다.
- 즉, 녹지지역 면적의 감소는 타용도로의 전환이 불가피한 경우로 한정하였는데, 예컨대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임대주택 건립을 위한 택지개발사업, 마곡·문정·장지지역의 대규모 미개발지의 개발계획 등과 관련되는 지역이다.
- 이상과 같은 기본방향에 따라 2020년 서울시 녹지지역의 면적은 240.7㎢로 2001년 253.2㎢보다 12.5㎢, 2004년 250㎢ 보다 9.4㎢ 감소하게 된다.

5) 용도별 소요면적 총괄

• 2001년 현재의 서울시 용도지역별 지정현황과 2020년 서울시 용도지역별 지정 소요면적은 다음과 같다.

[표 II-8] 2020년 서울시 용도지역별 지정 소요면적 **(단위 : ㎢)**

구 분	2001년	2020년 계획	2004년 기준	증감	
				2001년 기준	2004년 기준
주거지역	301.1	309.1	303.8	증) 8.0	증) 5.3
상업지역	23.5	28.1	24.1	증) 4.6	증) 4.0
공업지역	28.1	28.0	28.0	감) 0.1	-
녹지지역	253.2	240.7	250.0	감) 12.5	감) 9.3
계	605.9	605.9	605.9	0.0	0.0

주 : 면적증감은 2020년 계획면적과 비교한 것임.
자료 : 2001년, 2004년 자료는 서울시 도시계획과 내부자료.

7. 용도지역별 관리방향

• **용도지역의 관리원칙**

- 용도지역의 변경은 서울시가 지역균형발전의 도모와 생활환경의 개선, 불합리한 용도지역 부분의 해소차원에서 실시토록 한다.
- 용도지역의 본래 지정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서울시도시계획조례의 내실화 등 공공의 역할을 강화하여 귀중한 토지자원의 낭비를 최소화한다.
- 용도지역간 밀도격차에 따른 형평성 문제의 해소를 위해 설정기준과 기본원칙을 보다 명확하게 하도록 한다.
- 용도지역의 본래 지정취지를 살리면서 효율적으로 도시환경정비를 추진하기 위해 기준용적률 개념을 도입 적용하고 도시계획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해서 공공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밀도계획을 완화할 수 있다.

1) 상업지역

• **상업지역의 세분과 지정방법**

- 상업지역은 서울시도시기본계획상 공간구조개편구상에서 제시한 중심지 위계에 의거하여 상업지역의 위계설정은 물론 밀도계획 수립 시에도 차등 적용토록 한다. 밀도계획은 서울시도시계획조례에서 중심지의 위계와 상업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한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으로 구분하여 대응토록 한다.

[표 II-9] 중심지별 상업지역의 면적배분율

구 분	상업지역면적비	중심상업	일반상업	근린상업
도 심	100%	60%	40%	
부 도 심	100%	50%	50%	
지 역	100%		30%	70%
지 구	100%		30%	70%

• **상업지역에의 용도지역 조정원칙**

- 가능한 한 기지정되어 있는 상업지역의 활성화를 유도하여 지역개선을 도모하되, 타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상향조정이 필요한 경우는 공공이 해당 중심지의 육성과 발전전략이 서울시 지역균형발전과 해당지역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 한해서 허용토록 한다.
- 이 때 밀도계획이 상향조정됨에 따라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의 부족이 우려되는 만큼, 이들 지역에 대해서는 공공이 주도적으로 지구단위계획 등을 수립하여 대비하여야 하며, 지구내 필요한 공공시설 부담은 개발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대규모 인구유발시설인 백화점 등과 같은 용도는 지하철역사 주변부에 입지하도록 유도하며 대중교통이용을 증진토록 유도한다.
- 중심상업지역의 지정은 도심 및 부도심 내에서 고층업무시설 및 환승교통시설, 호텔, 백화점 등의 확보가 필요한 경우로 제한한다. 도심의 경우 역사성이 있는 고궁주변지역에 대해서는 역사환경보전을 위해 계획밀도가 낮은 상업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 일반상업지역의 지정은 가능한 지역중심과 지구중심에서 백화점 등 대규모 상업시설 및 업무시설, 환승교통시설 등의 입지가 필요한 경우로 제한토록 한다.

• **상업지역에 대한 관리방향**

- 상업지역내에서 과도한 주거용 개발, 즉 주상복합형 고층아파트건설과 민간아파트의 건립은 중심지의 개발잠재력을 소진시킬 우려가 있다. 이는 본래 지정취지와도 맞지 않으므로 억제하도록 한다. 이같은 개발이 상주인구가 감소하는 도심지역에서는 도심공동화 방지에는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학교 등 공공시설 부족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 상업지역의 지정형태는 노선형을 지양하고 역세권 및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가급적 면적형태로 지정하여 중심성을 갖도록 한다.
- 역세권지역에 대해서는 토지의 고도이용을 통해 대중교통이용의 증진을 유도하기 위해 환승교통시설의 입지와 대규모 인구유발시설이 입지토록 한다.

2) 주거지역

• 주거지역의 세분과 지정방법

- 주거지역의 관리는 도시계획법시행령과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한 주거지역 세분의 기본원칙과 지정취지를 최대한 살리도록 한다.
- 전용주거지역의 경우 기존 공동주택지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도시관리상의 혼란이 없도록 제2종전용주거지역은 최소화하여 지정 운용한다.
- 일반주거지역의 세분화는 서울시의 지역특성과 기존개발밀도(용적률, 층수), 주택유형 등을 고려 반영하여 제1종·제2종·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구분하여 대응하였다. 특히 저층주택지의 주거환경보호를 위해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는 7층 이하와 12층이하로 구분하였다.
- 또한 쾌적한 주거환경 확보와 획일적인 도시경관 개선을 위해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 등 계획적 정비계획을 수립한 경우에 한해서 선별적으로 평균층수 10층, 평균층수 15층까지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표 II-10] 일반주거지역 종세분 : 서울시도시계획조례

구 분	주요대상지	용적률	층고
제2종일반주거지역	구릉지, 경사지 등	150%이하	4층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평지, 저층주택지	200%이하	7층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평지, 공동주택지	200%이하	12층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	역세권, 중심지 등	250%이하	층고제한없음

주 : 지구단위계획등 구체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한 경우 선별적으로 평균층수의 적용이 가능

• 주거지역에 대한 용도지역의 조정원칙

- 주거지역상에서 용도지역의 상향조정은 용적률 상승과 높이완화로 이어져 주변지역의 주거환경의 악화와 도시기반시설의 과부하라는 문제를 야기시킬 우려가 있다. 따라서 지구단위계획 및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기본계획을 통해 실시되도록 한다.
- 주거지역상에서의 용도지역 상향조정이란 주거지역 종간의 용적률 및 높이의 상향조정을 포함하는 것이다.
- 용도지역의 상향조정은 공공성이 확보된 경우로 한정하도록 한다. 예를 들면 (1) 주택공급을 전략적으로 확대하여야 할 곳, (2) 블록단위로 도시계획도로 및 학교시설등 공공시설 확보를 위해 밀도계획의 상향조정이 필요한 곳, (3) 공공임대주택의 추가 확보가 가능한 곳이 해당된다.

- 밀도계획의 완화는 사업지구 내에서 확보하여야 할 공공시설과 기반시설 확보와 연동하여 실시하도록 한다. 이미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재개발분야)에서는 사용하고 있는 계획용적률 개념이다. 이 때 인센티브 용적률을 적용하더라도 완화범위는 일정수준이상의 주거환경유지를 위해 용적률 250%이상을 초과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다. 단 주택재건축사업시 증가된 연면적의 25%에 건립되는 공공임대주택 연면적에 상응하여 받는 보너스용적률은 법상용적률 250%를 초과하여 적용할 수 있다.

• 주거지역에 대한 관리

- 현재 주거지역내에서 정비와 관련된 용도지역 상향조정에 대한 기준과 원칙에 있어 정비수법간에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즉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과 지구단위계획 등이 서로 유사한 곳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에도 적용기준이 서로 달라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이 시급한 실정이다.
- 도시기반시설의 확보와 연동된 계획용적률 적용을 통해 지역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사업지구내 공공시설의 확보를 용이하게 한다.
- 서울시는 개발가능지의 고갈과 주거환경에 대한 관심고조, 그리고 재산증식의 기대 등으로 인해 초고층아파트 건립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이에 계획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제3종일반주거지역에 대해 도시경관 관리차원에서 높이관리가 필요하다.

3) 준공업지역에 대한 관리

- 준공업지역은 영등포구, 구로구, 금천구, 강서구, 성동구, 도봉구 등에 지정되어 있지만 산업구조의 변화와 수도권정비계획의 영향, 개발압력 등으로 인해 타용도로 전환이 일어나 산업기반이 취약해지고 있다. 특히 공장이전적지의 상당수가 아파트로 변모됨에 따라 새로운 산업기능을 도입·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소멸되어 가고 있다. 따라서 준공업지역은 적어도 현재 규모는 유지할 수 있도록 계획적 관리가 필요하다.
- 서울시는 준공업지역 밖에 입지한 공장부지도 상당히 많아 이에 대한 계획적 관리도 필요하다. 이들 지구역시 상당수가 아파트단지로 변모되었지만 지구내 추가로 필요한 도로 공원 학교 등의 시설확보가 불충분하여 지구내 주민은 물론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 부득이하게 주거용의 건물이 건립될 경우에는 이에 대한 부담을 개발자가 하도록 한다. 그리고 타용도로 전환이 불가피할 경우 계획밀도를 낮추는 등 주변 도시기반시설의 수용용량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개발을 유도한다.

- 최근에는 준공업지역내에 아파트형공장의 건립이 활발하지만 가급적 준공업지역의 산업집적기반을 활성화하고 산업개발진흥지구 지정 등으로 미래형 산업이 입지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유도한다.

4) 녹지지역에 대한 관리

- 기존의 녹지지역은 타 용도로의 변경을 억제한다. 다만, 타 용도로의 전환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장기적인 계획을 바탕으로 저층·저밀위주의 친환경적인 도시환경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 서울시 녹지지역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던 개발제한구역이 집단취락 우선해제와 국책사업·서울시 현안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해제됨으로써 그만큼 녹지지역의 면적이 감소되었다.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 해제되는 곳에 대해서는 신규개발시 녹지 확보율을 높게 설정하여 훼손된 녹지를 보완토록 한다.
- 또한 공공정책상 녹지지역의 일부를 해제하여 국민임대주택을 건설할 경우 가급적 건폐율을 낮추고 녹지율을 높게 설정하여 총량적으로 녹지 감소를 최소화한다.

8. 대규모 개발가능지의 관리방향

• 서울시는 장래 도시발전을 위해 필요한 대규모 개발가능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현재 대규모 개발가능지는 용산지구, 뚝섬지구, 상암·수색지구, 마곡지구, 문정·장지지구 등 손에 꼽을 정도이다. 이 곳은 개발압력이 매우 높지만 장래 도시발전과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 남겨진 귀중한 토지자원이라는 점에서 장기적 안목에서 공공성 확보 및 지속가능한 개발에 역점을 두고 계획적으로 관리하도록 한다.

• 용산구의 역사주변 및 미군부지 일대

용산지구는 서울역과 함께 경부고속전철의 중앙역사가 입지하여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가지는 교통중심이면서 인천국제공항 철도역의 시발역으로 국제업무기능을 담당하는 부도심으로 육성한다. 주요 유치기능으로는 국제업무, 첨단 정보업무단지의 조성과 더불어 기존의 전자유통단지 기능의 활성화, 역주변의 정비에 역점을 둔다. 도입될 도시기능의 성격은 기존의 도심부와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갖도록 설정한다. 현 미군부지에 대해서는 향후 이전시 “민족공원” 조성을 목표로 장기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한다. 이곳을 공원녹지로 보존하여 북한산·도심부 녹지축과 남산, 한강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구상하며, 이와 함께 주변지역도 계획적으로 관리한다.

• 성동구의 뚝섬일대

이곳은 서울동북지역을 흐르는 중랑천과 한강이 만나는 곳으로 중요한 바람길목에 해당되므로 생태공원지역으로 관리한다. 특히 동북생활권에서 대규모 도시녹지를 조성하기 어려운 만큼 생활권별 공원녹지 면적 확보 차원에서 접근하도록 한다. 그러나 계획수립과정에서 공원녹지·오픈스페이스 확보에 역점을 두되 동시에 일부지역은 시가화예정용지로 분류하여 주변 주거지역 주민들에게 편의성을 제공할 수 있는 일부 도시기능의 입지를 유도하고 접근로를 확보토록 한다.

그리고 청계천과 중랑천, 한강이 합류되는 뚝섬까지 청계천복원사업이 연계성을 갖도록 한다.

• **마포구의 상암 및 은평구 수색일대**

상암·수색지구는 경의선과 직결되는 남북교류의 거점이자 국제공항으로의 접근성이 용이하다. 최근에 이 지역은 월드컵경기장 건설을 계기로 서울의 21세기를 선도하는 미래형 멀티미디어 신부도심을 건설하여 서북생활권의 중심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동시에 이곳은 남북교류의 교통 결절점에 해당하므로 남북교류 거점으로써 역할도 담당하도록 유도해간다. 또한 이곳은 대상지내에 쓰레기 처리장이었던 난지도가 입지하고 있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환경친화형 도시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간다.

• **강서구 마곡일대**

마곡지구는 인천국제공항과 직결되는 서울의 관문인 동시에 김포공항과 인접하여 국내외 물류거점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 전략적으로 육성해 나가야할 요충지역이다. 또한 서남생활권에 남아있는 대규모 미개발지로써 향후 9호선 전철역사 입지, 신공항철도 노선 통과 등 개발압력이 예상되므로 시가화 예정용지로 분류하고 수도권 서남부의 개발여건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한 후에 단계적으로 대응한다. 주요 기능으로써는 원칙적으로 환경보전에 역점을 두고 토지를 관리하되, 필요시 공공성이 높고 서울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능을 전략적으로 유치하여 단계별 계획에 따라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 **송파구 문정·장지일대**

문정·장지지구는 동남권의 교통요충지에 입지하고 있어 개발의 압력이 다른 곳에 비해 높지만 이곳은 서울시와 성남시간의 도시 연담화 방지와 바람길 확보를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유지에 이바지해왔다. 이러한 취지를 살려 나가되 문정지역은 서울에서 얼마 남지 않은 대규모 개발가능지로써 교통 결절점에 해당한다. 따라서 방치할 경우 난개발이 예상되므로 시가화예정용지로 분류하고 당해 지역뿐 아니라 서울시 전체 차원에서 청계천 복원사업 등 대규모 도시환경정비사업과 연계하여 전략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단계별로 대응한다. 장지지역은 공공임대주택 건립과 물류단지 조성 등을 위해 택지개발을 추진 중에 있다. 즉 공공성이 높은 용도에 국한하여 개발을 허용하되 환경친화형 개발이 가능하도록 시가화예정용지로 지정해서 계획적으로 관리한다. 이 곳에 대한 중심지 위계는 향후 개발사업이 가시화될 시점에서 조정하도록 한다.

Ⅲ. 재건축 재개발계획



1. 현황과 문제점
2. 여건변화 전망
3. 미래상
4. 계획방향
5. 목표체계
6. 목표별 정책지표

1. 현황과 문제점

1) 개발실태와 현황

(1) 서울시 주택건설 현황

- 1990년 이후 주택건설수가 급격하게 증가한 것은 주택 200만호 건설정책과 정부의 건설경기 활성화 정책에 의한 영향이 크다. 그러나 1997년 IMF 이후 건설경기의 침체로 인해 주택건설 물량이 매우 감소하였지만, 2000년 이후 들어 경기회복과 함께 정부의 건설경기 활성화 정책의 영향을 받아 다시 증가 추세에 있다.
- 건립된 주거형태를 살펴보면, 1980년에는 단독주택이 전체 주택수의 약 47%를 차지했지만 2004년에는 1.1%로 크게 감소하였다. 1990년 이후 단독주택의 건립실적 감소는 단독주택건설의 감소와 함께 단독주택이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으로 세분화되면서 수치상 건립실적의 감소를 더욱 크게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2004년에는 아파트가 약 73.8%, 다세대가 약 19.0%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아파트 건설의 증가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활성화 정책에 의한 영향이 크다.
- 이처럼 주거형태가 점차 아파트 및 다세대 주택으로 바뀌어가고 있다. 이러한 개발양태는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이므로 주거밀도 증가로 인한 도시기반시설의 과부하와 주거환경의 악화에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표 III-1] 서울시 주택건설 실적

년 도	건설 주택수	건설실적(호)					구성비(%)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1980	53,375	24,8691	-	-	5,715	22,791	46.6	-	-	10.7	42.7
1985	33,556	9,081	-	3,589	6,265	14,621	27.1	-	10.7	18.7	43.6
1986	94,552	8,138	-	33,521	4,788	48,105	8.6	-	35.5	5.1	50.9
1987	47,354	11,487	-	5,525	5,278	25,064	24.3	-	11.7	11.1	52.9
1988	50,530	16,066	-	9,786	4,627	20,051	31.8	-	19.4	9.2	39.7
1989	68,594	18,966	-	8,911	5,034	35,683	27.6	-	13.0	7.3	52.0
1990	134,542	17,054	48,537	26,540	5,786	36,625	12.7	36.1	19.7	4.3	27.2
1991	176,786	2,725	96,332	35,759	5,543	36,427	1.5	54.5	20.2	3.1	20.6
1992	141,583	9,994	73,134	17,772	2,899	37,784	7.1	51.7	12.6	2.0	26.7
1993	171,549	886	91,523	25,834	4,564	48,742	0.5	53.4	15.1	2.7	28.4
1994	86,997	444	45,932	6,079	5,560	28,982	0.5	52.8	7.0	6.4	33.3
1995	129,998	745	68,839	9,066	7,186	44,162	0.6	53.0	7.0	5.5	34.0
1996	136,867	1,024	85,762	9,825	7,902	32,354	0.7	62.7	7.2	5.8	23.6
1997	55,021	1,170	18,615	4,328	6,656	24,252	2.1	33.8	7.9	12.1	44.1
1998	22,234	405	2,852	1,220	1,086	16,671	1.8	12.8	5.5	4.9	75.0
1999	37,107	672	2,686	4,727	1,468	27,554	1.8	7.2	12.7	4.0	74.3
2000	51,703	726	7,447	17,055	1,881	24,594	1.4	14.4	33.0	3.6	47.6
2001	106,334	819	15,668	70,694	2,714	16,439	0.8	14.7	66.5	2.6	15.5
2002	170,967	1,103	15,507	100,342	2,827	51,188	0.6	9.1	58.7	1.7	29.9
2003	125,403	734	8,592	41,985	2,365	71,727	0.6	6.9	33.5	1.9	57.2
2004	50,540	555	2,804	9,604	295	37,282	1.1	5.5	19.0	0.6	73.8

자료 : 각년도 인구주택센서스

(2) 도시재개발의 현황

• 도심재개발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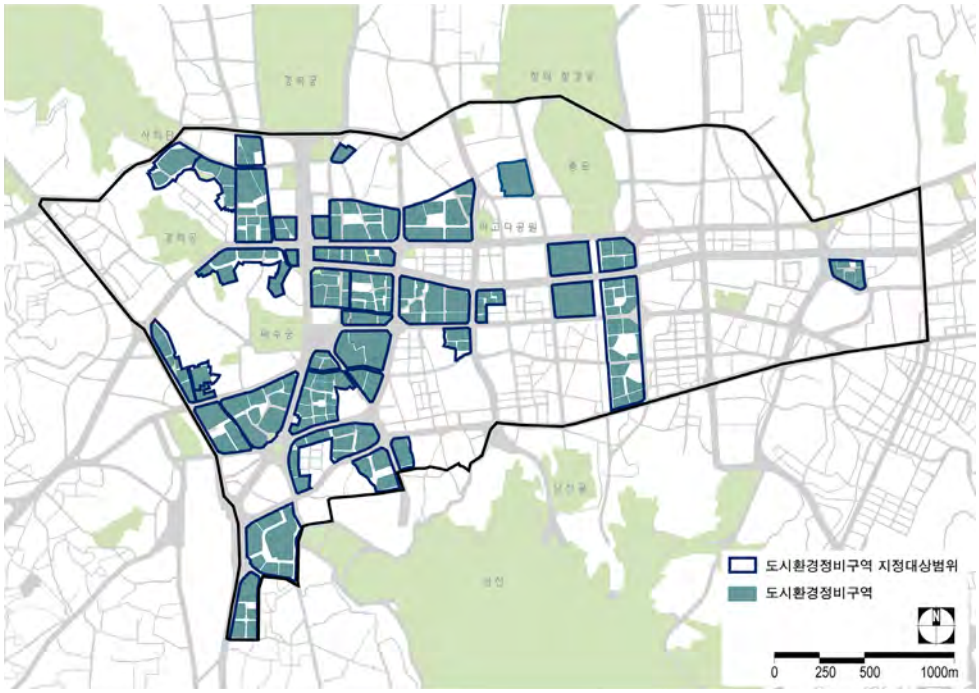
- 도심재개발구역은 1973년에 처음으로 11개 구역이 지정된 이후 2004년 12월말 현재 43구역으로 늘어났다.

[표 III-2] 서울시 연도별 도심재개발구역 지정현황

구 분		합 계	70 ~ 79년	80 ~ 89년	90 ~ 99년	2000년이후
구역지정	구 역 수 (%)	43 (100.0)	28 (65.1)	6 (14.0)	4 (9.3)	5 (11.6)
	지 구 수 (%)	489 (100.0)	339 (69.3)	91 (18.6)	31 (6.3)	28 (5.7)
	면적(천㎡) (%)	2,130 (100.0)	1,444 (67.8)	374 (17.6)	129 (6.1)	183 (8.6)

자료 : 서울시, 서울시 도시 ·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환경정비사업부문), 2004년

- 2004년 12월 현재, 지정된 구역수는 43개이며 지구수는 489개이다. 이중 '70 ~ '79년에 지정된 구역은 28개소 (65.1%), 지구는 339개소(69.3%), 지정 면적은 144.4ha(67.8%)에 이른다. '90년 이후에 지정된 것은 약 20%에 달한다.
- 1980년대는 도심재개발이 가장 활발하게 추진되었던 시기이다. 이 시기는 고도의 경제성장으로 대기업이 생겨나고 산업구조가 3차 산업 위주로 재편되면서 도심부의 업무공간 수요가 급증하였을 뿐만 아니라, 1986년 아시안게임과 1988년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도심재개발이 정책사업으로 추진됨에 따라 활발히 진행되었다.
- 서울시에서는 도심재개발의 내실화 도모와 도심부를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도심부관리기본계획(1998년)을 수립하였고 이것을 토대로 도심재개발기본계획이 재정비(2000년)되었다. 이것은 도심부 전역뿐만 아니라 마포로 일대의 도심재개발 구역을 포함한 주변지역에 대해서도 도시정비와 도시설계의 관점에서 관리방향을 제시하였다.
- 그 이후 서울시는 청계천복원사업과 관련해서 2004년도에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환경정비사업부문)」을 재정비 하였다.



자료 : 서울시, 『서울시 도시 ·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환경정비사업부문)』, 2004년

[그림 III-1] 서울시 도심재개발구역 지정현황

• **주택재개발의 현황**

- 서울시 주택개량사업은 1973년 12월부터 2003년 12월 현재까지 지정된 342개 지구 중 243개 지구(71.1%)의 사업이 완료되었다. 이중에 70개 지구(20.5%)가 현재 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며 미시행지구도 29개 지구(8.4%)에 이른다.
- 주택개량재개발사업은 1973년부터 도입되었지만, 사업이 활성화된 것은 합동재개발이 도입된 1983년 이후부터이다. 특히 1990년 건축법의 대폭적인 완화조치와 관련한 용적률 및 건물간 인동간격 완화 등의 영향을 받아 기성시가지 내에서는 주택재개발사업이 활발했다.
- 한편, 사업기간이 20년 이상 된 곳도 10여개 지구로 8천여 호에 이르고 있다. 이들 지역은 공공시설은 정부가 지원해주고, 주택건립은 주민 자력으로 건립하는 자력재개발지구가 대부분이다.

[표 III-3] 서울시 연도별 주택재개발구역 지정현황

구 분			합 계	73 ~ 79년	80 ~ 89년	90 ~ 99년	2000년이후
구역지정	구역지정	구 역 수 (%)	342 (100.0)	154 (45.0)	57 (16.7)	93 (27.2)	38 (11.1)
		면적(ha) (%)	1493.7 (100.0)	862.8 (57.8)	189 (12.7)	342.7 (22.9)	99.2 (6.6)
	사업완료구역수 (%)	구 역 수 (%)	243 (100.0)	6 (2.5)	72 (29.6)	94 (38.7)	71 (29.2)
		면적(ha) (%)	1007.1 (100.0)	17.8 (1.8)	219 (21.7)	367.5 (36.5)	402.8 (40.0)
	시행인가구역수 (%)	구 역 수 (%)	313 (100.0)	52 (16.6)	86 (27.5)	124 (39.6)	51 (16.3)
		면적(ha) (%)	1423.5 (100.0)	287.9 (20.2)	311.6 (21.9)	667.9 (46.9)	156.1 (11.0)

자료 : 서울시, 서울시 도시 ·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환경정비사업부문), 2004년

•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재개발 부문)의 수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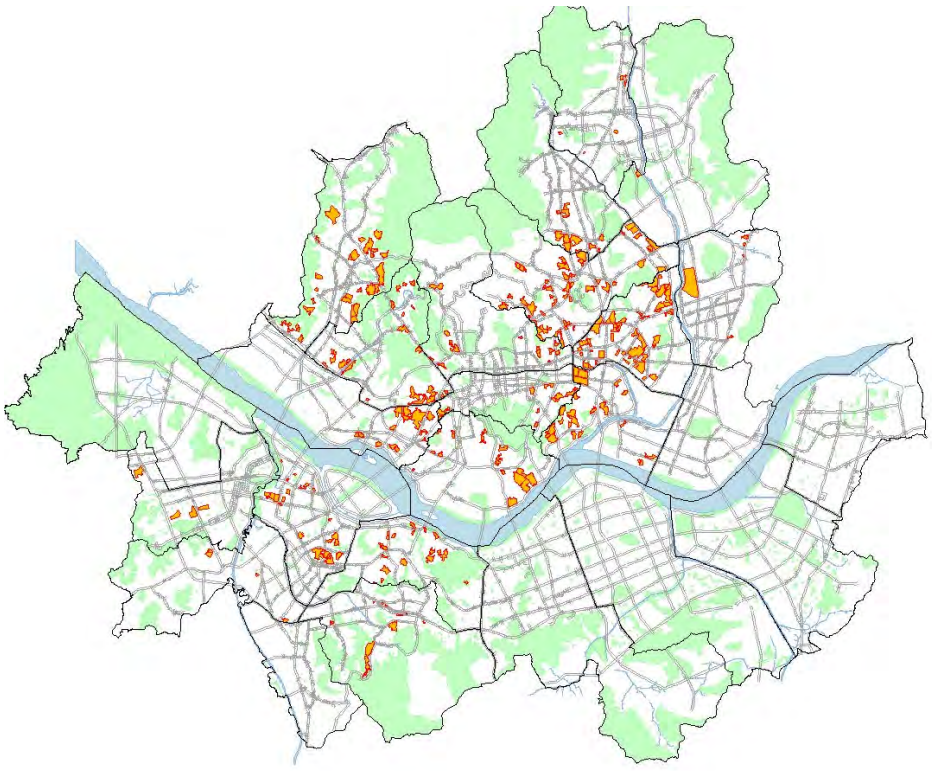
-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재개발부문, 2004년)수립으로 주택재개발정책은 일대 전환기를 맞게 되었다. 일반주거지역에서 법상용적률 250%이었던 것을 본 기본계획에서는 공공시설 확보용지를 포함한 계획용적률 개념을 적용하고 지역특성을 반영하여 170%, 190%, 210%로 차등적용 하였다.

- 또한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도 구릉지 중심에서 평지, 역세권 지역까지 확대 적용하였다. 그리고 향후 재개발사업이 일어날 것을 고려해서 지구 내에 추가로 필요한 학교, 도로, 녹지 등의 공공시설을 도시 ·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재개발 부문)에서 미리 확보하도록 하였다.

-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재개발 부문)에서 정한 정비예정구역의 분포를 살펴보면 총 299개구역중에서 강북지역이 238구역(79.6%)로 강남지역 61개 구역(20.4%)에 비해 4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주택재개발정비예정구역을 자치구별로 보면, 강북에서는 동대문구 50개 구역(16.7%), 성북구 45개 구역(15.1%), 은평구 27개 구역(9.0%), 서대문구 23개 구역(7.7%), 성동구, 마포구, 용산구, 종로구, 강북구, 중구 등의 순으로 나타난다. 강남지역은 영등포구 25개 구역(8.4%), 동작구 18개 구역(6.0%), 관악구 10개 구역(3.3%), 구로구, 양천구 등으로 강북지역에 비해 그 수가 적다.

- 이와 같이 강북지역이 강남지역보다 재개발정비예정구역이 많은 것은 도시성장과정에서 도심주변에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노후 주택시가지가 강북지역에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고, 녹지축에 해당하는 북한산, 북악산, 남산 등의 구릉지 주변에도 무허가 불량촌이 집단적으로 분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료 : 서울시, 2010 서울특별시 도시 ·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재개발부문), 2004년

[그림 III-2] 서울시 주택재개발정비예정구역 지정현황

(3) 서울시 재건축사업 추진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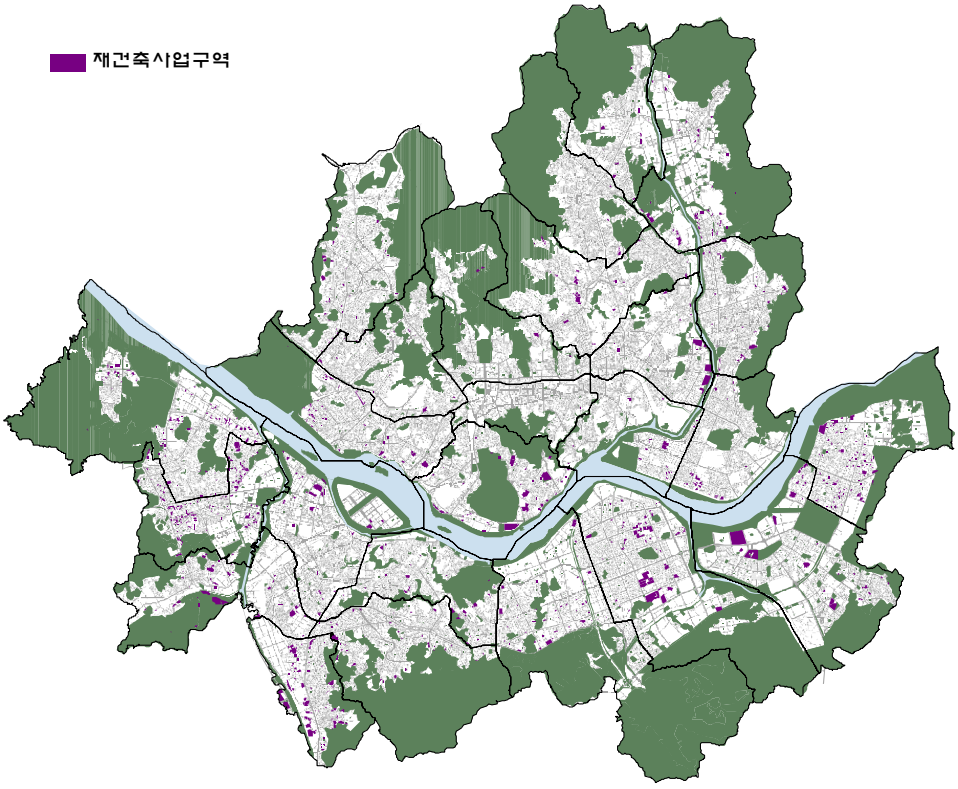
- **개발현황**
  - 주택재건축사업은 1987년 12월 행정법규인 주택건설촉진법을 개정하여 재건축사업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그 이후 재건축사업은 서울시의 주요 주택공급 수단으로 자리매김 하였다. 특히 1993년 재건축사업 허용기준의 완화와 1994년 주택의 규모별 공급비율적용 제외 조치 이후 승인 받은 조합들이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 재건축사업은 1997년 IMF의 영향을 받아 1998년 이후 현저하게 감소하였다가 최근 들어 정부의 건설경기 활성화 정책 등으로 인해 차츰 활기를 되찾고 있다. 더욱이 정부의 환경친화적인 정책의 영향을 받아 기정 용적률의 하향조정이 가시화되면서 주거지역세분화계획 적용 이전에 유리하게 건축 인·허가를 받기 위해 노력한 결과로 2003년도에 접어들면서 재건축사업의 실적이 매우 두드러지게 증가하였다.

- 최근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재건축부문)의 대상이 된 곳은 종전에 지구단위계획의 대상요건에 해당되는 곳이다. 즉 정비구역의 규모가 10,000㎡이상이거나, 300호 이상을 건립할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그러나 주택재건축 대상지의 약 80%이상이 1ha미만의 규모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어 도시계획적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

[표 III-4] 서울시 재건축사업 추진실적

구 분	사업완료		시행중		미시행	
	조합수	건설실적(호)	조합수	건설계획(호)	조합수	기존주택(호)
1988	0	0	0	0	4	1,245
1989	0	0	0	0	1	982
1990	0	0	5	779	8	4,643
1991	1	45	3	1,928	18	8,225
1992	1	40	14	4,863	37	12,709
1993	5	292	37	8,184	80	23,376
1994	5	1,058	55	12,087	105	24,679
1995	27	4,578	78	24,045	131	36,981
1996	24	2,812	92	24,176	107	27,589
1997	47	9,937	75	24,511	110	21,901
1998	66	16,591	41	9,398	63	15,333
1999	73	23,618	80	25,726	33	9,821
2000	50	17,046	202	34,731	230	37,716
2001	68	13,331	102	16,983	85	18,534
2002	105	17,678	101	17,682	116	16,873
2003	149	27,244	251	43,589	228	30972

자료 : 서울시 주택기획과, 2004년 12월



자료 : 서울시 주택기획과, 2004년 12월

[그림 III-3] 서울시 재건축사업 지정현황

•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재건축 부문) 수립 중**

- 자치구별 재건축 사업실적을 사업시행인가 현황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총 888개 구역 중 강남지역이 609개, 503.9ha로써 사업시행인가 구역 전체의 68.6%(전체 면적 대비 70.7%)를 차지하여 강북지역 279개, 209.3ha의 약 2.5배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면적대비로는 송파구가 14.1%(100.7ha, 24개)로 가장 높았고, 강남구가 9.3%(85.6ha, 66개) 그 다음으로 높았다. 한편 구역수대비로는 양천구가 12.4%(54.9ha, 110개)로 가장 높았고, 강서구가 11.4%(61.9ha, 101개)로 두 번째로 높았다.

- 주택재건축사업은 이상과 같이 재개발사업과는 달리 강남지역에서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이것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실시되었던 곳에서 비교적 도시기반정비가 잘 이루어진 대단위 노후 공동주택이 강남지역에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 서울시에서는 현재 노후단독주택지와 노후공동주택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기 위해서 재건축사업을 도시 ·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포함시켜 주택재건축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표 III-5] 자치구별 재건축사업 추진실적

구	면적(ha)		구역수(개)	
	면적	면적비(%)	구역수	개수비(%)
종 로 구	2.64	0.37	4	0.45
중 구	2.10	0.29	2	0.23
용 산 구	5.07	0.71	9	1.01
성 동 구	15.41	2.16	17	1.91
광 진 구	3.58	0.50	8	0.90
동 대 문 구	45.54	6.39	42	4.73
중 랑 구	19.31	2.71	31	3.49
성 북 구	6.32	0.89	11	1.24
강 북 구	5.81	0.81	4	0.45
도 봉 구	8.90	1.25	12	1.35
노 원 구	44.61	6.25	46	5.18
은 평 구	13.43	1.88	31	3.49
서 대 문 구	9.64	1.35	13	1.46
마 포 구	26.92	3.77	49	5.52
강 북 합 계	209.27	29.34	279	31.42
양 천 구	54.90	7.70	110	12.39
강 서 구	61.86	8.67	101	11.37
구 로 구	36.60	5.13	30	3.38
금 천 구	12.24	1.72	24	2.70
영 등 포 구	20.96	2.94	21	2.36
동 작 구	24.56	3.44	32	3.60
관 악 구	24.48	3.43	41	4.62
서 초 구	43.44	6.09	62	6.98
강 남 구	85.64	12.01	66	7.43
송 파 구	100.73	14.12	24	2.70
강 동 구	38.53	5.40	98	11.04
강 남 합 계	503.94	70.66	609	68.58
서 울 시	713.20	100.00	888	100.00

자료 : 서울시 주택기획과, 2004년 12월

2) 문제점

(1) 도시관리계획·정책의 미흡으로 도시문제 양산

• 기성시가지에 대한 관리 소홀로 도시문제 누적

- 서울시는 1980년대 까지만 해도 도시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주택난 해소를 위해 토지구획정리사업과 택지개발사업 등 신시가지 개발사업에 역점을 두고 이러한 사업을 공공주도로 추진하여왔다. 반면에 기성시가지에 대한 정비와 관리는 상대적으로 소홀하였다. 정비된 범위를 살펴보면 신시가지개발에 의한 것은 시가지면적의 약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기성시가지 내에서 실시된 도시계획사업, 즉 도심재개발과 주택재개발사업을 통해 정비된 범위는 시가지면적의 약 5%에 불과하다.
- 1990년 이후 정부의 200만호 건설계획과 관련한 대폭적인 건축법 완화조치의 영향을 받아 도시기반시설이 취약한 기성시가지에서 건축붐이 일어났지만 대부분이 민간개발에 의한 것이었다. 개발양태를 보면 단독주택지에서는 다세대 · 다가구주택, 노후 연립주택지에서는 재건축아파트의 건설이 활발했다. 이러한 개발은 과도한 고층·고밀개발로 새로운 도시문제를 양산시키는 요인이 되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 기성주택지의 노후화 진행 우려

- 1990년 이후 기성 시가지내 단독주택지내에서 건립이 활발했던 다세대 · 다가구 주택밀집지는 과밀 개발로 인한 주거환경의 악화와 지구 내 주민간 주차분쟁의 속출과 일조권문제로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다. 이 지역은 가까운 장래에 노후화 진행이 우려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 저밀도 아파트지구와 공동주택의 일부에서는 재건축 시기가 도래하여 사업시행과 관련해 주변지역에서는 소형주택의 품귀로 인한 전세가 파동이 일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도 시급하다.

• 동일한 공간 내 계획과 사업들간에 연계성 부족

- 동일한 공간에서 여러 도시계획사업과 민간개발사업들이 시행되고 있지만 별개의 사업으로 취급되고 있어 지구 내에서 추가로 필요한 공원과 학교, 도로 등의 공공시설 확보가 어렵다.
- 특히 도심재개발사업과 주택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단위계획 등 정비수법이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근거법이 다르다는 이유로 따로 운영되고 있어 지역차원에서 볼 때 정비효과가 낮았다.

• **대규모 민간개발에 대해 공공성 확보 미흡**

- 대규모 재건축사업과 개별건축에 대해 도시계획적 장치가 미흡한 가운데 개별사업단위로 인허가가 이루어지고 있어 개발 후 생활권단위의 학교 등 공공시설이 부족하여 지역주민들은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다. 즉 재건축사업은 개발규모에 관계없이 도시계획사업보다 공공시설 확보기준이 느슨한 주택건설촉진법에 준하여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업 후 이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여 왔다.

(2) 일시에 대규모 개발허용으로 지역사회의 변질 초래

• **일시에 대규모 개발허용으로 인해 전세대란 야기와 지역사회 붕괴**

- 일정한 범위 내에서 재건축사업과 재개발사업이 집단적인 형태로 대규모로 실시될 경우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재개발 및 재건축사업을 위해 원거주민이 사업기간 중에 인근 또는 타지역으로 이사함에 따라 주변지역의 전세가는 급등해 서민들의 생활비 지출이 증가하게 되고 지구 내에 남은 상가도 고객이 줄어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 이와 더불어 원거주민들도 사업기간 중에 타지역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되어 기존의 커뮤니티는 붕괴되어 버린다.

• **구릉지주변에서 과도한 개발 허용으로 인해 자연환경 훼손**

- 대개 구릉지변에 입지한 불량주택지에서 대규모 재개발사업이 실시된 사례가 많다. 이때 녹지 및 공원 등의 자연환경을 훼손하거나 자연지형을 절개하여 옹벽을 높게 쌓아 재개발아파트를 건설한 예가 많다. 장기적으로 보면 붕괴의 위험까지 있어 자연환경의 훼손은 물론 주민의 안전성 확보에도 불리하다.

(3) 지구 내 공공시설 확보 문제

• **도심재개발구역 내 공공시설 확보 문제**

- 도심재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부터 재개발구역 내에 추가로 필요한 도로, 주차장, 공원 등의 공공시설을 제시하여 사업 추진시 공동으로 확보토록 유도하고 있지만 그 실적은 저조하다. 즉 구역 내 필요한 공공시설의 확보는 구역 내에서 재개발사업이 모두 완료된 후에나 가능하므로 실제로 사용하는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 **주택재개발기본계획과 공공시설 확보**

- 주택재개발 대상지 중에는 도로망 체계가 불량한 구릉지에 입지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업이 완료되어도 지구 내 진입로가 제대로 정비되지 않아 생활상 불편을 겪게 된다. 주택재개발기본계획에서도 진입로 확보는 재개발의 대상 범위 내

에 충분히 포함시키지 못했다. 그리고 재개발사업이 완료되어도 주변지역과 함께 도로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아 정작 지구 내 필요한 진입로 확보가 불충분하여 새로운 교통 문제를 야기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 주택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 시 학교시설 확보는 교육청과 사전에 협의하여 확보토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사업단위로 학교시설의 용지를 확보하는데는 한계가 있고 설령 용지가 확보되었다고 하더라도 교육청이 용지를 매입할 비용이 없어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주택재개발 및 재건축사업이 집단적으로 실시된 곳에서는 학교의 부족 문제가 심각하다.

• 다세대·다가구 주택지 내에서 공공시설 부족 심각

- 기존 단독주택은 1990년에 실시된 건축법의 대폭적인 완화 조치로 인해 용적률과 건폐율 등이 대폭 완화됨에 따라 상당수의 단독주택이 다세대 · 다가구 주택으로 바뀌었다. 그 과정에서 지구 내 도로와 공원, 주차장, 학교 등이 추가로 확보되지 않고 세대수만 급증하는 형태가 되었다. 특히 1990년 이후 자가용 보급률이 급격히 높아짐에 따라 지구 내 도로는 노상 주차장으로 변했고 주차난은 날로 심화되어 이웃간에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리고 건폐율의 대폭적인 완화(60%이하)로 인해 주택지내 정원과 오픈스페이스는 거의 소멸되었다. 특히 골목길이 주차장으로 바뀌면서 어린이들이 교통사고의 위험에 노출되게 되었다.

(4) 개발이익위주의 개발로 새로운 도시문제 야기

• 대형평형 선호로 소형주택 시장의 왜곡 심화

- 주택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시 토지소유자는 자기의 생활수준 보다는 개발이익의 확보가 유리한 30평 이상의 중대형 개발을 선호하고 있다. 그 결과 소형평형 주택수는 주택재개발과 재건축사업을 하면 할수록 감소되어 저소득계층을 위한 10평대의 주택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게 되었다. 이러한 영향으로 인해 현재 소형주택의 전세가격 파동이 야기되고 있다.

• 원주민의 재정착률 저조로 재개발취지 탈색

- 주택재개발 및 주택재건축시 조합원들의 대부분은 내집 마련보다는 개발이익을 우선으로 해서 중대형평의 개발을 선호한 까닭에 사업 후 과도한 건축비와 관리비 부담으로 재입주를 포기하는 사례가 많아 재정착률이 낮다. 그리고 사업기간 중 이주 대책을 주민 스스로 해결토록 하면서 재개발 및 재건축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그래서 사업기간 중에 타지역으로 임시 이주해 있는 동안에 자녀들의 학교문제 등으로 인해 전출해 버리거나 사업초기단계에 타인에게 전매하는 경우도 많다.

• **양호한 건물까지 재건축대상으로 자원낭비 초래**

- 양호한 주택지까지 철거하면서까지 개발이익 위주의 주택재개발 및 재건축사업이 추진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재건축사업은 이러한 경향이 더 심해서 다량의 건축폐기물 발생으로 인해 건축폐기물의 처리 곤란은 물론 국가적 자원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공공이 주도적으로 해야 할 일을 조합에게 위임하는데서 비롯된다. 즉 재건축사업시 조합이 원하는 기관에 의뢰하여 안전진단을 받도록 허용하고 있어 안전진단결과에 대한 객관성 확보가 어렵다.

(5) 공공의 지원 부족으로 사업추진 곤란

• **허술한 주민참여방법으로 사업과정에서 분쟁 속출**

-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의 대부분은 그동안 공공의 지원이 미흡한 가운데 개발의 경험이 전혀 없는 조합에 일임한 형태로 추진되어 왔다. 따라서 조합은 시공업체에 의존한 형태로 개발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었으며 그 결과 개발이익의 확보가 유리한 중대형 평형 위주로 개발된 사례가 많다.

- 주민 참여 실태를 살펴보면 사업초기부터 조합원 전원의 동의하에 합리적으로 이루어진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사업초기에서는 대개 몇몇 조합원과 시공업자가 중심이 되어 사업이 추진되다 보니 사업추진과정에서 나머지 조합원간의 분쟁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다.

• **공공참여 부족으로 재개발사업 추진 저조**

- 시가지 전역에 대해 민간개발에 의존한 형태로 주택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특히 공공의 복리가 우선 시 되어야 할 재개발, 예를 들면 역세권 내에서 환승교통시설 및 교통광장을 확보하기 위한 재개발, 저소득계층이 밀집한 영세규모의 노후주택지를 대상으로 한 재개발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러한 지역은 민간개발에 의존한 방식으로는 개발이익의 채산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공공성 확보차원에서 공공이 사업의 시행주체가 되어야 하는데 이제까지는 매우 소극적이다.

• **구역지정 후 공공지원 부족으로 사업추진 실적저조**

- 도심재개발과 주택재개발의 경우 재개발구역지정까지는 공공이 계획을 수립하여 대응하고 있지만 사업시행은 해당주민에게 의존한 형태로 추진되어 왔다. 그 결과 재개발구역이 지정된 지 10년 이상 경과한 곳도 많고 재개발사업이 지연되어 지구 내 건물의 상당수가 노후되어 생활자는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 따라서 재개발구역지정과 함께 사업이 조속히 이어질 수 있도록 공공의 지원확대가 필요하다.

(6) 주거지역세분의 내실을 위해 계획적 관리 시급

• 규모별 규제로 인해 나홀로 아파트 건립 조장

- 서울시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재건축)이 수립되기 전까지 나홀로 아파트 건립을 막기 위해 1ha 이상 또는 30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였다. 하지만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을 피하기 위해 그 이하의 규모로 축소하거나 분할·개발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이것은 오히려 나홀로 아파트 건립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책마련이 시급하다.

• 주택지에 대한 고도규제 미흡으로 인접지역 주민들과 분쟁 속출

- 주택재개발과 주택재건축시 인접 주택지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가운데 고층고밀 개발이 무분별하게 허용되고 있어 인접지역의 주민들로부터 일조권 및 조망권 침해, 프라이버시 침해 등으로 인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현행 주택재개발 기본계획과 지구단위계획에서도 사업구역에 대해 주변지역의 주거환경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마련이 시급히 요구된다.

2. 여건변화 전망

1) 기성시가지의 계획적 관리 필요성 대두

• 다세대·다가구주택과 기존아파트단지의 노후화 진행

- 서울시는 신규개발 가능지의 고갈로 기성시가지 내에서 개발 압력은 점차 높아질 것이다. 이와 함께 그 동안 도시발전과정에서 누적된 도시문제를 해결하여야 하는 현안 과제들이 있다. 이때 다세대·다가구주택의 밀집지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중 현지개량 대상지는 다른 지역보다 빨리 노후화가 진행 중에 있어 재건축의 필요성이 대두될 것이다. 그리고 노후된 연립주택단지와 아파트단지에서도 재건축사업의 움직임이 활발하게 전개될 것이다.

•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도입과 적용

- 정부에서는 현재 도시기능의 회복과 노후불량주택의 환경개선을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2003년 7월1일부터 적용하게 되었다. 이와 함께 3년이내에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이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기존의 도심재개발과 주택재개발, 주택재건축, 주거환경개선사업, 공장재개발을 통합 관리하게 되어 기성시가지 전역을 계획적으로 관리하는 기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2) 환경친화형 도시계획에 대한 관심 고조

• 주거지역 세분화의 정착으로 고층건물의 리모델링 활발

- 주거지역세분화가 정착되면서 계획밀도가 종전 보다 하향 조정되어 무분별한 고층고밀재건축사업은 어렵게 될 것이다. 특히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대책의 영향으로 공공임대주택의 건립 의무화와 소형주택건설 의무비율 강화 등으로 중대형 평형위주의 아파트에서 리모델링사업이 활발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의 영향으로 8층 이상의 노후아파트단지에서도 기존주택을 재활용한 리모델링사업이 활발해질 것이다.

• **공동주택건설 시 외부공간 활용중시**

- 공동주택 건설 시 지상공간의 대부분은 보행자를 위한 전용공간으로 활용될 것이다. 반면에 차량은 지하주차장을 이용하는 형식이 되어 보차 분리가 보편화될 것이다. 그리고 공동주택건설 시 외부공간 활용에 있어 가급적 많은 녹지공간과 휴식공간의 확충을 위해 노력하게 될 것이다.

3) 도시관리에 있어 공공의 역할강화 증대

• **사업추진에 있어 공공지원의 강화**

- 주택재건축 및 주택재개발사업의 대부분은 그 동안 공공의 역할이 부족한 가운데 사업성 확보를 용적률 상승에 의존하여야 했다. 그 결과 초과밀 주택지로 전락하여 주거환경의 악화는 물론 공공시설의 부족 문제를 야기하였다. 앞으로는 주거지역세분과 지구단위계획이 확대 적용됨에 따라 용적률 완화를 통한 사업성 확보가 예전보다 어렵게 되었다. 따라서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형태의 행정지원에 대한 요구가 더욱 많아질 것이다.

• **한정된 공공재원의 효율적 이용에 대한 요구 증대**

- 서울시는 그 동안 주택재개발사업의 활성화 차원에서 사업지구 내에 세입자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건립토록 하여 서울시가 일괄 매입해 왔다. 이 때문에 재정 부담액이 막대하여 어려움이 많았고 재개발사업구역을 확대 지정하는 데에도 제약이 되곤 했다. 앞으로 주택재개발 대상지를 시가지전역으로 확대 지정하려면 한정된 공공재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지구특성과 거주자의 소득수준 등을 고려해 선별적으로 차등지원하는 조치가 보편화될 것이다.

• **대단위 개발시 사업시기 조정**

- 대단위 주택재개발 및 주택재건축사업이 추진될 경우 주변지역의 주택가격과 전세가격의 상승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앞으로 이러한 개발이 서울시 전역에서 동시에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대단위 주택재건축 및 주택재개발정비예정구역에 대해서는 공공주도의 사업시기 조정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 **안전진단에 대한 객관성 요구 증대**

- 주택재건축사업을 위한 안전진단 실시비용은 현재 개발자가 비용을 부담하여 공공이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형식으로 실시되고 있어 객관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 건물구조상 양호한 건물들까지 재건축사업에 포함되는 모순까지 보여 자원을 낭비하고 다량의 건축폐자재를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 안전진단의 객관성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거세고 서울시 차원에서 2002년 3월 부터는 안전진단 평가단을 운영하여 무분별한 재건축을 방지하였으며, 정부에서도 안전진단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향후 무분별한 재건축은 어렵게 될 것이다.

4) 지역균형발전차원에서 도시정비 추진

• **지역균형 발전차원에서 낙후지역의 계획적 정비**

- 서울시는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관점에서 지역 격차문제의 해소를 위해 낙후지역을 중심으로 뉴타운사업지구와 균형개발촉진지구를 확대 적용하여 나갈 것이다. 그 대상지로 기존의 주택재개발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대상지가 포함될 것이다. 이와 함께 강북지역의 정비활성화 차원에서 노후 단독주택지의 계획적인 정비를 위해 도시 ·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에서 주택재개발과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을 확대 지정해 나갈 것이다.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의 도입으로 저소득층밀집지역 정비 유리**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의 도입으로 사업성확보가 어려운 곳에 대해서는 공공의 지원 및 투자가 강화되고, 개발이익의 창출이 가능한 곳에 대해서는 개발이익의 사회환원 차원에서 개발자가 공공시설을 확보하는 등의 형태로 발전해 나갈 것이다.

3. 미래상

“쾌적한 생활환경의 도시”

- 서울시의 주택재개발사업과 주택재건축사업은 그동안 주택의 양적공급과 주거환경의 물리적 개선, 공공시설의 확충 등에 있어 기여한 바가 컸다. 특히 그동안 주택재개발과 주택재건축사업은 민간개발에 의존한 용적률 완화를 통한 고층고밀개발이 주류를 이루었다면 이제부터는 시민의 생활수준 향상과 더불어 주거환경의 질적 향상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이미 이에 대한 시민의 요구가 날로 높아지고 있어 이에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에서는 “쾌적한 생활환경의 도시”를 구현해 나간다.

- 주택재개발과 주택재건축사업에서는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부터 공공의 역할을 강화하고 주민참여를 활성화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사업을 촉진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어 나간다. 이와 함께 기존주택의 노후화를 방지하고 과밀개발을 억제할 뿐만 아니라 신규개발 시 자연환경의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도시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생활환경이 쾌적한 도시를 만들어간다

4. 계획방향

- 재개발 및 재건축사업은 도시계획법시행령이 2000년 7월에 개정되면서 새롭게 도시기본계획상 부문별계획의 하나로 자리잡게 되었다. 이것을 도시발전과정에서 보면 성장단계에서 성숙단계로 이행되면서 재개발 및 재건축사업이 기성시가지의 계획적 관리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 특히 2003년 7월부터 도입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도시 ·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의무화는 기성시가지의 계획적 관리를 위한 기틀을 마련한 계기가 되었다. 여기서는 종전의 주택재개발사업과 도심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공장재개발사업을 포함하여 새롭게 일정규모 이상의 재건축사업도 도시계획사업에 포함시킨 것이 특징이다.
- 재개발 및 재건축에 대한 계획방향은 장래 시가지의 변화에 계획적으로 대응하면서 현 정비사업과 제도의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하여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는데 역점을 둔다.
  - 재개발 및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계획수립과정에서부터 공공의 역할을 강화하여 난개발을 억제한다. 특히 대규모 민간개발에 대해서는 공공성 확보와 안전진단의 객관성 확보, 대규모 개발의 지양, 주민참여 활성화 유도에 역점을 둔다.
  - 지역균형발전의 관점에서 공공지원을 강화해서 노후화가 진행 중인 주택에 대한 계획적 관리를 위해 다양한 정비수법의 발굴과 적용을 추진한다.
  - 원활한 사업추진과 개발이익의 환수를 위해 사업단위별로 공공시설의 부담방법을 강구한다.
  - 자연환경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친환경적 도시계획을 구현하기 위해 개발 시 물길 확보와 기존지형의 훼손억제, 투수면적 및 녹지면적의 확대를 위해 노력한다.
  - 한정된 공공재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자 저소득층 밀집지에 대해서는 공공지원을 강화하고, 일반지역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기능을 강화하는 등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공공지원 방법을 차등 적용해 나간다.

5. 목표체계

"생활환경이 쾌적한 도시"

목표	과제	전략	시책	단기	중장기	정책지표
1. 공공의 역할강화	재건축안전진단기준의 객관성 확보	• 재건축에 대한 안전진단 강화	- 안전진단 기준·운용방법 개선	✔		지표 1. 주변지역 피해대책 마련 실적
			- 안전진단비용 절감대책 강구			
	주변지역과 조화로운 개발 유도	• 신규개발 시 주변지역의 피해 최소화 유도	- 사업인허가시 인접지역 환경피해 최소화 대책 마련		✔	
			- 사업단위로 경관관리계획 수립의무화			
	지역사회구조의 급격한 변화 최소화	• 대규모 개발예정지에 대한 개발시기조정	- 객관적 평가기준 마련으로 시기조정 실시	✔		
			- 시기조정위원회 설치와 운영			
		• 블록단위로 재개발·재건축사업 유도	- 노후주택지 내 도로정비 우선 추진		✔	
	주민참여 활성화 촉진	• 계획수립과 사업추진시 주민참여 지원 확대	-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비용 행정지원		✔	
			- 컨설턴트 파견제도 도입과 활용			
2. 도시관리 차원에서 환경개선	기성시가지의 계획적 관리	•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수립	- 역세권·지구중심까지 확대 지정	✔		지표 2. 사업단위 경관계획 수립 실적
			- 재건축 및 지구단위계획까지 확대 지정			
			- 준공업지역에 대해서도 확대 지정			
		• 다양한 정비수법의 발굴과 적용	- 리모델링 활성화 유도		✔	지표 3. 사업시기조정 실적
			- 수복형, 개선형 정비수법의 확대 적용			
			- 관민의 상호 역할 분담			
		• 다세대·다가구주택의 주거환경기준 강화	- 건물간 이격거리 및 주차기준의 강화	✔		지표 4. 행정지원 실적
			- 반지하층을 용적률 산정 시 포함			
3. 지구내 필요한 공공시설 확보	공공시설 부담방법 명시	• 공공시설 확보기준마련	- 사업단위별 계획용적률 적용	✔		지표 5. 투수면적 확대 실적
			- 세대당 공공시설 부담방법 적용			
4. 자연환경 훼손 최소화	자연지형 훼손 억제	• 구릉지변에서 대규모 개발억제	- 사업 시 성·절토량 최소화 유도	✔		
			- 옹벽 및 축대의 설치 높이기준 강화			
	개발 시 물길 확보	• 계획수립 과정에서 물길 확보	- 각종 사업시행 전에 물길확보 의무화	✔		지표 6. 세입자용 공공임대주택 건설실적
			- 기존지형과 물길을 살린 개발지침 마련			
5. 친환경적 도시계획 구현	삭막한 주거환경 개선	• 오픈스페이스와 녹지공간의 확대	- 세대당 녹지면적 확보 기준 강화		✔	지표 7. 재건축시 소형주택확보 실적
			- 공동주택개발 시 건폐율 강화			
	자연친화형 개발유도로 수해피해 최소화	• 투수면적의 전략적 확대 실시	- 각종 사업 시 투수면적의 확대		✔	
			- 공공시설과 유휴공간을 활용해 투수면적 확대			
6. 지구여건 반영해 공공지원 차등화	저소득층 주택 밀집지 공공지원 확대	• 주택정책차원에서 저소득층 주택지 정비 지원	- 세입자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건설	✔		
			- 지구 내 공공편익시설 설치			
7. 서민주택난 해소를 위해 소형주택 확보	서민용 소형주택 전략적 확보	• 재건축시 소형주택 및 공공임대 주택확보	- 재건축시 소형주택은 건립세대수의 20%이상 확보	✔		
			- 증가된 연면적의 25%이상 임대주택 확보			

목표1 공공의 역할강화

서울시는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공공의 역할을 강화하여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한다. 한편으로는 각종 정비계획들이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행정지원책을 마련한다.

과제1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의 객관성 확보

건축수명과는 관계없이 개발이익 우선으로 재건축사업이 추진되는 것을 억제하고자 서울시가 중심이 되어 재건축 안전진단이 제대로 실시되도록 운용방법을 개선한다. 이와 함께 재건축사업과 관련해 발생하는 건축폐기물의 재활용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활용방안을 강구한다.

전략 1. 재건축에 대한 안전진단 강화

재건축 안전진단은 공공이 주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객관성을 확보토록 하고 이와 함께 안전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조치도 함께 강구한다.

시책 1. 안전진단 기준·운용방법 개선

시책 2. 안전진단비용 절감대책 강구

과제2 주변지역과 조화로운 개발 유도

저층주택지내에 재건축과 재개발사업 등을 통해 고층아파트가 들어설 경우 일조권 및 조망권 침해, 프라이버시 침해 등으로 인접한 주민들과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근본 대책을 사업초기부터 마련토록 한다.

전략 1. 신규개발 시 주변지역의 피해 최소화 유도

신규사업과 관련하여 주변지역에 대한 일조권 및 조망권, 프라이버시 문제를 사전 검토한 후에 사업을 허가하도록 의무화한다. 그 일환으로 사업단위로 경관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주변지역과 조화로운 개발이 유도되도록 한다. 이때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의견이 사업계획에 제대로 반영되었는지의 여부를 명시토록 한다.

시책 1. 사업인허가시 인접지역 환경피해 최소화 대책 마련

시책 2. 사업단위로 경관관리계획 수립의무화

과제3 지역사회구조의 급격한 변화 최소화

대규모 재건축사업 및 재개발사업의 추진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지역사회구조의 급격한 변화와 전세가격 상승을 억제할 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한다.

전략 1. 대규모 개발예정지에 대한 개발시기조정

대규모 재건축 및 재개발이 예상되는 곳에 대해서는 공공 주도로 개발 시기를 조정토록 한다. 특히 사업규모가 작아도 일정한 범위 내에서 집단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곳에 대해서는 공공이 단계별 계획을 수립하여 시기를 조정토록 한다. 그리고 사업규모가 대규모인 경우에는 순환개발을 적극 도입 · 적용하여 사업지구내에서 사업시기를 조정하도록 한다.

시책 1. 객관적 평가기준 마련으로 시기조정 실시

시책 2. 시기조정위원회 설치와 운영

전략 2. 블록단위로 재개발·재건축사업 유도

노후주택이 밀집한 곳에 이미 지정된 지구내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는 공공이 우선적으로 투자하여 도로를 확보토록 하여 소단위 공동개발이 원활히 실시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시책 1. 노후주택지 내 도로정비 우선 추진

과제4 주민참여 활성화 촉진

지금까지 공공은 재개발정비예정구역을 지정한 후 정비사업을 민간에 일임하여왔기 때문에 사업실적은 매우 저조하였다. 공공은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계획수립단계에서부터 주민참여를 유도하여 정비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로 행정지원을 확대해 나간다.

전략 1. 계획수립과 사업추진시 주민참여 지원 확대

정비사업추진과 계획수립과정에서 주민참여 촉진을 위한 행정지원을 확대해 나간다. 그 일환으로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를 위한 비용의 일부를 공공이 지원한다. 그리고 컨설턴트 파견제도를 도입하여 공공과 주민간에 조정자 역할을 하면서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강화한다.

시책 1.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비용 행정지원

시책 2. 컨설턴트 파견제도 도입과 활용

목표2 도시관리차원에서 환경개선

서울시 기성시가지 전역을 대상으로 도시 ·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기능의 회복과 주거환경의 정비를 위해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 등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 도시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공공성을 확보토록 한다.

과제1 기성시가지의 계획적 관리

재개발 및 재건축사업은 다양한 형태로 시가지전역으로 확대될 전망이므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도시계획시스템을 구축한다. 주택정책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해 주거환경개선과 주택공급을 같이 고려할 수 있는 주택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이때 기존주택의 재고 활용을 통한 주택정책의 추진도 중요한 과제이다.

전략 1.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 2003년 7월 1일부터 도입됨에 따라 기성시가지를 계획적 정비·관리하기 위해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토록 한다. 이때 중심지 육성 및 정비, 주거환경정비 및 주택공급이라는 관점에서 다양하게 재개발 과제를 도출하고 정비구역을 선정한 다음, 이에 적정한 정비수법을 적용하여 공공성을 높여나가도록 한다. 이 정비사업의 대상으로는 종전의 도심재개발, 주택재개발,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건축사업, 지구단위계획 등이 해당된다.

시책 1. 역세권 및 지구중심까지 정비예정구역으로 확대 지정

시책 2. 재건축 및 지구단위계획까지 정비예정구역 확대 지정

시책 3. 준공업지역내에 대해서도 정비예정구역 확대 지정

전략 2. 다양한 정비수법의 발굴과 적용

주거지역 세분화계획의 수립과 주택재건축 안전진단의 강화로 인해 전면철거에 의존한 정비에서 수복형 및 개선형 정비, 기존 주택의 리모델링 사업이 활발해질 것이다. 이것에 대비한 제도 개선과 공공시설 확보를 위한 관민 역할분담을 한층 명확히 한다.

시책 1. 리모델링 활성화 유도

시책 2. 수복형, 개선형 정비수법의 확대 적용

시책 3. 관민의 상호 역할 분담

전략 3. 다세대·다가구주택의 주거환경기준 강화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장설치기준을 세대당 1대 이상으로 강화한다. 일조권 확보를 위해 건물의 인동간격과 건물간 이격 거리도 한층 강화한다. 그리고 반지하층의 수해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신규 주택 건립 시 반지하층은 용적률 산정에 포함시킨다.

시책 1. 건물간 이격 거리 및 주차기준의 강화

시책 2. 반지하층의 면적을 용적률 산정 시 포함

목표3 지구 내 필요한 공공시설 확보

새로운 개발과 관련하여 세대수와 용적률의 증가로 인해 공공시설의 수요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응하여 계획수립단계에서 장래수요를 예측하여 지구 내 필요한 공공시설을 충분히 확보토록 한다.

과제1 공공시설 부담방법 명시

신규개발로 인해 세대수가 증가함에 따라 지구 내 추가로 필요한 학교, 공원, 도로 등의 공공시설 확보는 개발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생활권차원에서 확보하여야 할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공공과 민간간의 역할분담 방법을 제시하여 협의조정을 통해 결정한다.

전략 1. 공공시설 확보기준마련

사업단위별로 공공시설의 확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주택재개발기본계획(1997년)에서 이미 사용하였던 계획용적률의 개념을 적용한다. 여기서 계획용적률이란 사업지구 내 기존의 공공시설용지를 포함한 용적률을 가리키는 것으로 사업과 관련하여 지구 내 필요한 공공시설 용지를 추가로 부담하더라도 개발가능한 용적률은 변함이 없다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공공시설 부담 시 사업규모보다는 세대당으로 부담토록 하여 형평성을 유지토록 한다.

시책 1. 사업단위별 계획용적률 적용

시책 2. 세대당 공공시설 부담방법 적용

목표 4 자연환경 훼손 최소화

구릉지 및 경사지에 입지한 재개발 및 재건축 아파트 단지는 높은 옹벽과 지형절개 등의 영향으로 인해 다른 지역에 비해 붕괴의 위험성이 있는 만큼 주민의 안전성 확보에 역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토록 유도한다.

과제1 자연지형 훼손 억제

자연지형을 절개하여 대규모로 개발을 하면서 높이 쌓은 축대 및 옹벽은 향후 붕괴의 위험이 있어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계획수립단계에서부터 사업에 이르기까지 안전대책을 마련토록 한다.

전략 1. 구릉지변에서 대규모 개발억제

구릉지변에 대해서는 자연지형의 훼손을 막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각종 정비사업 계획 수립 시 지반조사결과의 반영, 경사도와 표고개념의 적용을 통해 대규모 개발의 억제는 물론 새로운 개발로 인한 붕괴사고를 미연에 방지토록 한다.

시책 1. 사업시 성·절토량 최소화 유도

시책 2. 옹벽 및 축대의 설치 높이기준 강화

과제2 개발 시 물길 확보

재개발 및 재건축사업이 그동안 기존의 지형을 훼손하면서까지 대규모의 구릉지에서 추진된 까닭에 집중 호우 시 물길이 차단되거나 협소해져 주변지역에 상당한 수해 피해를 주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계획수립단계에서부터 사업에 이르기까지 수해대책을 마련토록 한다.

전략 1. 계획수립 과정에서 물길 확보

신규개발에 대해서는 계획수립 과정에서부터 물길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노력하여 집중 호우 시 주변지역에 대한 수해피해를 최소화한다.

시책 1. 각종 정비사업시행 전에 물길 확보 의무화

시책 2. 기존지형과 물길을 살린 개발지침 마련

목표5 친환경적 도시계획 구현

과도한 개발로 인해 지구 내 오픈스페이스의 감소와 녹지공간의 훼손, 지구 내 골목길의 주차공간화가 야기되고 자연환경과는 동떨어진 삭막한 도시공간으로 전락하고 있다. 이것을 극복하고 복원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계획수립단계에서부터 자연친화적인 도시계획이 되도록 노력한다.

과제1 삭막한 주거환경 개선

일반주택지와 아파트단지 내 실외공간의 대부분은 고층·고밀개발로 인해 주차장과 도로 등으로 사용되고 있어 생활자 입장에서 보면 자연과 동떨어진 삭막한 공간에서 생활을 하고 있어 정서상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 점을 개선하기 위해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을 통해 자연친화형 도시계획을 적극 추진해 나간다.

전략 1. 오픈스페이스와 녹지공간의 확대

재건축 및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공동주택을 개발하고자 할 경우에는 평균층수개념을 도입·적용하여 녹지공간과 오픈스페이스의 확보비율을 강화해 나간다.

시책 1. 세대당 녹지면적 확보기준 강화

시책 2. 공동주택개발 시 건폐율 강화

과제2 자연친화형 개발유도로 수해피해 최소화

서울시는 시가지의 대부분이 아스팔트나 콘크리트로 덮여있어 집중호우가 내릴 경우 지하로 투수가 되지 않고 그대로 방류되어 수해 대상범위가 시가지전역으로 확산되는 양태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대폭 개선하기 위해서는 시가지전역을 대상으로 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투수면적을 확대해 나간다.

전략 1. 투수면적의 전략적 확대 실시

투수면적의 확대는 침수피해지역과 공공사업지구부터 우선적으로 도입하여 적용해 나간다. 각종 민간개발사업에 대해서도 투수면적의 확대를 위한 유도책을 강구한다.

시책 1. 각종 사업 시 투수면적의 확대

시책 2. 공공시설과 유휴공간을 활용해 투수면적 확대

목표6 지구여건에 반영하여 공공지원 차등화

재개발사업을 할 때 저소득층 주택 밀집지로 공공의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는 곳과 민간 스스로 개발이 가능한 곳을 구분하여 공공지원을 차등 적용하여 한정된 공공 재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한다.

과제1 저소득층 주택 밀집지 공공지원 확대

저소득층주택 밀집지는 공공의 도움이 없이는 주거환경개선이 거의 불가능하므로 사회복지와 주택정책차원에서 공공이 적극 지원한다.

전략 1. 주택정책차원에서 저소득층 주택지 정비지원

저소득계층 주택 밀집지에 대해서는 공공이 가급적 시행주체가 되어 주거환경을 개선한다. 그리고 공공은 저소득층주택지에 대해서 지구 내에 추가로 필요한 공공시설과 사회복지시설의 확보를 위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정비사업지구내 세입자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의 건립과 알선도 함께 실시한다.

시책 1. 세입자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건설
시책 2. 지구 내 공공편익시설 설치

목표7 서민주택난 해소를 위해 소형주택 확보

재건축사업시 중대형평형의 선호로 기존 10평대 소형주택의 멸실이 두드러져 서민주택난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으며 원거주민의 재정착율도 낮다.

과제1 서민용 소형주택의 전략적 확보

대규모 재건축아파트 대상지의 대부분이 강남지역에 분포하고 있으며 이중 10평대 아파트가 과반수를 차지고 있고 해당 가구수만 5만여 세대에 이르고 있다. 재건축시 중대형평형을 선호하고 있지만 개발밀도 증가분의 일부를 활용하여 서민용 임대주택을 전략적으로 확보토록 한다.

전략 1. 재건축시 소형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확보

서울시에서는 주택재건축사업을 통해 소형주택을 확보하여 고령화 및 소자화 시대의 주택수요에 대응한다. 이와 함께 재건축시 증가된 연면적의 일정부분에 대해서는 공공임대주택을 건립토록 한다.

시책 1. 재건축사업시 소형주택은 건립세대수의 20% 이상 확보
시책 2. 증가된 연면적의 25% 이상 임대주택 확보

6. 목표별 정책지표

목표1 공공의 역할 강화

[지표 1] 주변지역 피해대책마련 실적

구 분	2000	2001	2006	2010	2015	2020
대책마련 실적	–	–	60%	80%	90%	100%

• 신규사업과 관련하여 사업 전에 주변지역에 대한 피해여부를 면밀히 파악하여 계획에 반영하였는지 여부를 가지고 판단함. 산정방법은 사업 전에 지역주민들로부터 제기되었던 사안에 대해 조치가 이루어졌으면 달성된 것으로 보며, 그러하지 못한 경우에는 달성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여 건당으로 산정함.

[지표 2] 사업단위별 경관계획수립 실적

구 분	2000	2001	2006	2010	2015	2020
계획수립 실적	–	–	70%	80%	90%	100%

• 사업단위로 경관관리계획이 수립되었는지 여부를 가지고 판단함. 산정방법은 사업대상지에 대해 경관관리계획수립 여부를 건수대비로 나타냄.

[지표 3] 사업시기조정 실적

구 분	2000	2001	2006	2010	2015	2020
시기조성 실적	–	–	70%	85%	90%	100%

• 공공이 1000세대이상의 공동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대상지에 대해서는 주변지역으로의 영향을 고려하여 사업시기를 조정하였는지 여부를 가지고 판단함. 산정방법은 해당 신규 사업 시 시기조정을 실시하였는지 여부를 건수대비로 나타냄.

[지표 4] 행정지원 실적

구 분	2000	2001	2006	2010	2015	2020
행정지원 실적	–	–	4회	6회	8회	8회

• 재개발 및 재건축사업 대상지에 대한 공청회 및 설명회 등 행정지원 횟수를 가지고 판단함. 산정방법은 사업대상지에 대한 행정지원 횟수를 가지고 나타냄.

목표5 친환경적 도시계획 구현

[지표 5] 투수면적 확대 실적

구 분	2000	2001	2006	2010	2015	2020
확대 실적	–	–	70%	90%	100%	100%

• 공공사업과 민간개발 등 신규사업 시 투수면적 확보를 했는지 여부를 가지고 판단함. 산정방법은 사업건수대비 투수면적 확보 여부로 달성도를 나타냄.

목표6 지구여건 반영해 공공지원 차등화

[지표 6] 세입자용 공공임대주택 건설 실적

구 분	2000	2001	2006	2010	2015	2020
건설 실적	–	–	80%	85%	90%	100%

• 사업 전 거주세입자에 대한 정책적 배려를 나타내는 지표이므로 원세입자수 이상으로 공공임대주택을 건립하였는지 여부를 가지고 판단함. 산정방법은 원세입자수 대비 건설된 공공임대 주택수를 가지고 달성도를 나타냄.

목표7 서민주택난해소를 위해 소형주택확보

[지표 7] 재건축시 소형주택 확보 실적

구 분	2000	2001	2006	2010	2015	2020
건설 실적	·	·	80%	85%	90%	100%

• 재건축사업전 10평대의 소형평형을 확보하였는지 여부와 총건립세대수의 20% 이상 소형주택 확보 여부, 그리고 증가연면적의 25% 이상 공공임대주택의 건립여부를 가지고 판단함. 여기서 그 달성도를 100%로 보고 각 정비사업건수별로 집계한 총량을 평균치로 환산하여 산정함.

Ⅳ. 교통 및 물류계획



1. 현황과 문제점
2. 여건변화 전망
3. 미래상
4. 계획방향
5. 목표체계
6. 목표별 정책지표

1. 현황과 문제점

1) 교통혼잡의 심화

(1) 수도권 등록차량대수의 증가와 높은 차량 평균주행거리

• 수도권 차량등록대수의 지속적인 증가

- 수도권 자동차 등록대수 변화 추이를 보면 승용차, 버스, 화물차 모두 꾸준한 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승용차의 구성비율이 70%대로써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서울시 자동차 등록대수는 96년 217만대에서 2001년 255만대로 약 38만대가 증가하였다. 특히 승용차 등록대수가 96년 170만대에서 2001년 191만대로 약 21만대 증가하였으며, 2002년에는 등록대수 200만대를 돌파하였다.
- 경기도의 경우는 96년 181만대에서 2001년 274만대로 약 93만대가 증가하였으며, 이중 승용차 등록대수는 96년 134만대에서 2001년 192만대로 약 58만대가 증가하여, 서울시보다 더 높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 한편, 차종별 등록대수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소형차 등록대수는 감소한 반면, 상대적으로 값이 싼 디젤 연료를 주로 이용하는 기타차량은 주5일 근무제의 시행 확대에 따른 여가시간 증가 및 소득수준향상 등에 힘입어 2000년에서 2001년 사이에는 거의 2배나 증가하였다.

[표 IV-1] 수도권 자동차 등록대수 변화 추이

지역	년도	승용차		버스		화물차		특수차		총계	
수도권	2001	4,321,049	72.2%	617,968	10.3%	1,032,338	17.3%	11,791	0.2%	5,983,146	100%
	1999	3,791,068	73.8%	484,072	9.4%	851,368	16.6%	10,342	0.2%	5,136,850	100%
	1996	3,408,067	76.0%	315,831	7.0%	746,765	16.7%	10,788	0.2%	4,481,451	100%
서울	2001	1,917,947	75.2%	251,834	9.9%	378,287	14.8%	2,373	0.1%	2,550,441	100%
	1999	1,762,927	76.7%	204,638	8.9%	328,018	14.3%	2,143	0.1%	2,297,726	100%
	1996	1,704,493	78.6%	142,366	6.6%	319,138	14.7%	2,185	0.1%	2,168,182	100%
인천	2001	481,900	69.1%	76,091	10.9%	135,456	19.4%	3,460	0.5%	696,907	100%
	1999	423,051	71.3%	57,295	9.7%	110,030	18.5%	3,004	0.5%	593,380	100%
	1996	367,216	72.9%	38,780	7.7%	94,426	18.7%	3,223	0.6%	503,645	100%
경기	2001	1,921,202	70.2%	290,043	10.6%	518,595	19%	5,958	0.2%	2,735,798	100%
	1999	1,605,090	71.5%	222,139	9.9%	413,320	18.4%	5,195	0.2%	2,245,744	100%
	1996	1,336,358	73.8%	134,685	7.4%	333,201	18.4%	5,380	0.3%	1,809,624	100%

자료 : 건설교통부, 건설교통통계연보, 각년도

[표 IV-2] 서울시 년도별 승용차 등록대수 (단위 : 대)

구 분			1998년	2000년	2001년
소 계			1,656,730	1,713,540	1,830,931
승용차	일반형	계	1,584,937	1,641,800	1,673,465
		소형	873,932	874,024	857,474
		중형	620,041	641,875	667,718
		대형	90,964	125,901	148,273
	기타형 (승용차겸 화물 및 다목적형)	계	71,793	71,740	157,466
		소형	2,039	2,634	3,131
		중형	9,868	10,157	51,506
		대형	59,886	58,949	102,829

주 : 세부차종 구분은 소형 1500cc미만, 중형 2000cc미만, 대형 2000cc이상(관용, 자가용 포함)
자료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주행거리 실태조사 연구, 각년도

• **선진국에 비해 높은 자동차 평균주행거리**

- 2001년 12월 말을 기준으로 서울시 등록차량의 1일 평균 주행거리는 57.9km로 나타났다. 승용차의 경우는 97년 IMF이후 감소하였으나 2001년 자료를 보면 다소 증가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표 IV-3] 서울시 차종별 일평균 주행거리 추이 (단위 : km/대)

차 종	구 분		1997년	1998년	2000년	2001년
승 용[1]	소 계		51.2	42.9	40.6	41.0
	일반형	계	-	42.6	40.6	40.4
		소 형	-	39.1	37.5	38.2
		중 형	-	42.5	38.6	41.6
		대 형	-	48.5	43.0	47.5
	기타형[2]	계	-	50.2	43.5	54.1
		소 형	-	45.5	-	46.2
		중 형	-	45.2	43.6	50.8
		대 형	-	50.7	-	55.2
	법인택시		318.7	-	348.5	353.5
	개인택시		168.5	163.2	162.6	173.5
	렌 터 카		-	-	77.0	78.2
승 합[3]	소 계		68.1	51.6	62.9	62.6
	소 형		68.4	47.8	63.3	62.9
	중 형		58.0	-	49.9	52.8
	대 형		-	55.1	50.9	54.7
	특 수 형		62.1	45.0	44.8	41.8
화 물[4]	-		79.4	62.5	64.6	62.1
특 수[5]	-		102.1	69.5	73.1	93.1
전 체	-		67.9	61.4	62.8	57.9

주 : 1) 승용차의 경우 97년도 자료는 소형/중형/대형으로 구분하고 있지 않음
2) 승용차의 기타형은 승용차겸 화물, 다목적형을 포함
3) 승합차량의 경우 영업용은 제외(시내, 시외, 고속, 전세버스 등 제외)
4) 화물차량의 경우는 관용, 자가용, 영업용 모두를 포함한 평균
5) 특수차량의 경우는 관용, 자가용, 영업용 모두를 포함한 평균
자료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주행거리 실태조사 연구, 각년도

- 일평균 주행거리의 경우 국가 별로 비교해보면 한국이 58.2km, 미국 55.6km, 일본 28.0km, 영국45.2km인데, 서울시의 경우는 57.9km로 우리나라 전체 일평균 주행거리와 유사한 수치이나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표 IV-4] 국가별 일 평균 주행거리 (단위 : km/대)

국가명 / 구 분	서울 (2001년)	한국 (2001)	미국 (2000년)	일본 (2001년)	영국 (2000년)
1대당 1일 평균 주행거리	57.9	58.2	55.6	28.0	45.2

자료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주행거리 실태조사 연구, 2002

(2) 통행량의 증가와 통행속도의 저하

• 자동차 통행의 증가

- 자동차대수의 증가로 '95년에서 '96년까지 서울시내 교통량이 꾸준히 증가하였고, '97년, '98년 이르러서는 IMF의 영향으로 각각 1.3%, 3.9% 감소하였다. 그러나 '99년부터 경기회복으로 인해 다시 교통량이 증가하여 2001년의 경우 전년에 비해 1.7% 증가를 나타내고 있다. 반면에 대부분 장거리통행에 해당하는 시계유출입교통량은 '98년까지 꾸준히 감소추세를 보이다가 '99년부터 다시 증가추세로 전환되어 2001년에는 전년대비 3.9% 증가율을 나타냈다.

[표 IV-5] 서울시 교통량 변동 추이

구 분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계	2.70%	2.90%	- 1.30%	- 3.90%	2.10%	- 0.02%	1.70%
도 심	0.00%	- 1.30%	- 4.20%	- 6.80%	- 0.10%	- 0.14%	- 3.50%
교 량	4.30%	3.60%	- 5.60%	- 6.90%	4.40%	- 1.43%	2.40%
간 선	- 0.20%	2.50%	- 0.50%	- 2.80%	2.60%	- 1.96%	0.60%
시 계	6.20%	5.80%	2.70%	- 1.40%	1.30%	3.25%	3.90%
차량등록 증가율	5.80%	6.10%	3.60%	- 2.20%	4.50%	6.80%	5.00%

자료 : 서울특별시, 교통통계, 각년도

- 한편, 도심 교통량 변동 추이를 보면 매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서울시의 주차상한제, 주차요금인상,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징수 등의 꾸준한 수요관리 정책 때문인 것으로 판단 된다.

[표 IV-6] 서울시 도심 교통량 변화추이 (단위 : 대/일, %)

구 분	2000년	2001년	증감	
			대수	비율(%)
계	1,517,504	1,474,362	-53,132	-3.5
삼청터널	19,707	17,185	-2,522	-12.8
자하문터널	41,000	38,838	-2,162	-5.3
사직터널	112,659	122,173	9,514	8.4
정동 MBC	100,576	105,827	5,251	5.2
서소문(삼성빌딩앞)	103,610	93,732	-9,878	-9.5
칠패길(봉래빌딜앞)	24,292	23,930	-362	-1.5
서울역	140,115	130,552	-9,563	-6.8
퇴계로	109,552	106,561	-2,991	-2.7
소월길(힐튼호텔앞)	30,824	28,575	-2,249	-7.3
남산3호터널	71,496	68,862	-2,634	-3.7
소파길(동보성앞)	33,476	32,510	-966	-2.9
장충체육과	91,602	91,911	309	0.3
장충단길	58,936	64,130	5,194	8.8
성동여상	71,566	73,103	1,537	2.1
청계고가	121,272	102,746	-18,526	-15.3
청계천로	73,936	65,810	-8,126	-11
동대문	104,439	104,003	-1,436	-1.4
혜화전화국	55,356	58,758	3,402	6.1
창경궁로	84,772	85,140	368	0.4
남산1호터널	77,308	60,016	-17,292	-22.4

자료 : 서울특별시, 교통통계, 각년도

• 서울시 통행속도의 저하

- 자동차대수의 증가 및 교통량의 증가로 인해 서울시 교통상황은 급속하게 악화되고 있다. 서울시 전체 승용차 속도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93년 23.5Km/h에서 매년 조금씩 감소하였으나 '98, '99년의 경우 IMF관리 이전인 '97년보다 전체적으로 속도가 4Km/h 이상 증가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현상은 경제위기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으로 2001년에 이르러 내부순환도로 및 청담대교 개통에도 불구하고 다시 21.7Km/h로 하락하였다. 서울지역의 차량 증가 등으로 2001년 시내도로 전일 평균차량속도는 시속 21.7Km/h로, 2000년 시속 22.9Km/h 비해 5.3% 감소하였다. 승용차의 경우 도심지역은 2000년 18.5Km/h에서 2001년 16.6Km/h로 10.2%감소, 외곽지역은 2000년 23.2Km/h에서 2001년 22.Km/h로 4.7% 감소하였다.
- 서울시 전체구간의 버스통행속도는 '93년 17.02Km/h에서 2001년 19.Km/h로 약 2.1Km/h 증가하였으나, 승용차(21.Km/h)보다 2.6Km/h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7] 서울시 연도별 승용차 속도변화 추이 (단위 : km/h)

구 분	'93년	'94년	'95년	'96년	'97년	'98년	'99년	2000년	2001년
서울시전체	23.53	23.18	21.69	20.09	21.06	25.41	25.41	22.92	21.7
도 심	19.97	20.04	18.25	16.44	16.85	17.72	21.19	18.54	16.6
외 곽	23.79	23.40	21.92	21.23	21.33	25.90	25.68	23.21	22.1
버 스	17.02	18.42	18.79	18.35	18.69	20.07	19.21	18.99	19.1

주 : 1) 버스전용차로외의 구간까지 포함하는 전체구간의 버스통행속도임
2) 서울시 버스전용차로는 2001년 8월 현재 60개구간 218km가 설치 운영
3) 버스전용차로의 버스통행속도는 2000년 21.4km/h이고 중앙버스 전용차로의 버스통행속도는 2000년 32.2km/h
4) 2000년을 기준으로 시간대별로는 오전이 22.6㎞/h에서 20.5㎞/h로 9.3%, 낮 시간은 25.6㎞/h에서 20.2㎞/h로 21.1%, 오후는 21.0㎞/h에서 17.2㎞/h로 18.1% 속도가 느려짐(서울시 보도자료, 2002.09.01)

자료 : 서울특별시, 교통통계, 각년도

(3) 수도권에서 대중교통이용의 감소

- 수도권에서 대중교통 이용율은 감소하는 반면에 승용차대수의 증가로 승용차통행량과 승용차 분담율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하철 분담율의 경우 '96년 17.0%에서 2002년 19.0%로 약 2.0% 증가에 그쳤으며, 일반/좌석/고속버스의 경우는 '96년 19.8%에 이르던 분담율이 2002년에는 15.4%로 하락하였다. 그러나 , 마을버스 분담율은 '96년 3.4%에서 2002년 4.2%로 약 0.8% 증가하여 대중교통 수단으로써의 고유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고 분석할 수 있다.

[표 IV-8] 수도권 수단 통행량 분포 (단위 : 통행/일, %)

구 분	1996년		2002년	
	통행량	비율	통행량	비율
도보/자전거	9,031,741	17.9	11,292,016	19.1
승 용 차	12,123,358	24.0	15,740,902	26.6
통근/통학/기타버스	1,844,302	3.6	2,311,082	3.9
일반/좌석/고속버스	10,011,802	19.8	9,072,090	15.4
마 을 버 스	1,715,092	3.4	2,481,463	4.2
지하철·철도	8,552,420	17.0	11,254,851	19.0
택 시	4,211,508	8.4	4,000,108	6.8
오토바이/기타	2,950,359	5.9	2,929,230	5.0
합 계	50,440,582	100	59,081,742	100

주 : 지하철·철도는 환승포함

자료 : 서울특별시, 2002 서울시 가구통행실태조사, 2003

- 서울시 지하철 운행실태 분석에 의하면 해마다 수송인원이 증가하여 2001년 9월말 기준으로 하루 평균 지하철 이용 승객이 2000년의 515만9000명에 비해 12.4% 증가한 580만명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지하철 승객의 증가요인으로, 2000년 서울시 상주인구의 5만2000명 증가, 당산철교 재개통, 7호선 완전개통, 지하철·버스환승 요금할인, 백화점 셔틀버스 운행 중단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2기 지하철 완전개통으로 지하철 혼잡도가 점차 낮아지고 있으며 9호선이 건설되면 보다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서울시 보도자료, 2001.11.28)

(4) 교통시설 신설확장의 어려움

• 도로공급의 어려움

- 도로교통혼잡을 완화시키기 위해 서울시는 매년 상당액의 도로시설투자를 시행하고 있으나, 도로사업은 기본적으로 예산부담이 막대하고(토지보상비가 전체공사비의 90%를 상회) 가용토지의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94년 도로율 19.59%에서 2001년 21.19%로 불과 1.6% 증가에 그치고 있다.

[표 IV-9] 서울시 연도별 도로율

구 분	'94	'95	'96	'97	'98	'99	2000	2001
도로연장(㎞)	7,621	7,675	7,689	7,737	7,801	7,843	7,888	7,935
도로면적(㎢)	73.35	74.38	75.65	76.49	77.4	78.12	78.69	79.36
도로율(%)	19.59	19.85	20.19	20.42	20.66	20.86	21.01	21.19

주 : 도로율 산출 = 도로면적 ÷ 시가화면적(374.55㎢)X100%
자료 : 서울특별시, 교통통계, 2002

• 지속적 지하철 투자의 어려움

- 서울시는 현재 의욕적인 지하철 투자사업을 통해 그 연장을 2000년말 286.9km로 확장하였다. 하지만, 공사기간이 길고 재원확보도 용이하지 못하여, 지하철 1,2기 건설시 중앙정부의 보조율이 1기 3% 미만, 2기 21%에 불과해 막대한 건설부채를 남기게 되었다. 2기 지하철이후의 건설 역시 중앙정부의 보조가 건설비의 40%에 불과해서 막대한 건설재원을 확보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2001년말 현재 서울시 지하철 건설관련 부채는 4조6383억원(시기금 3094억원 포함)으로 서울시 전체 부채의 75%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서울시 지하철 부채 현황 연구, 중간보고서, 2002.9)

2) 심각한 주차난

- 서울의 자동차는 '65년 16,624대에서 '70년에 약 4배 증가하였고, '80년도에 20만대 돌파, '90년에 100만대, 2001년에 255만대로 급속하게 증가하였으나, 주차시설 증가는 이에 미치지 못하였고, 주택가 이면도로는 전부 주차장화 되어 도시기능의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
- 한편, 서울시의 지속적인 주차장 확보노력으로 주차장 확보율이 '93년 48.5%에서 2001년 83.6%로 크게 높아지긴 했으나 여전히 부족하며, 현 상태가 지속되면 향후 자동차 증가로 인한 주차장 부족현상은 더욱 심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 또한, 조업주차장의 부족과 불법 주정차의 성행으로 보행 및 차량소통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표 IV-10] 서울시 자동차대비 주차장 공급현황 (단위 : 천대, 천면)

구 분	'93	'94	'95	'96	'97	'98	'99	2000	2001	연평균
자동차(A)	1,751	1,932	2.043	2,168	2,249	2,199	2,298	2,441	2,550	5.10%
주차장(B)	849	1,021	1,124	1,311	1,449	1,566	1,581	1,658	2,132	16.30%
B / A(%)	48.5	52.8	55	60.5	64.4	71.2	68.8	67.9	83.6	-

자료 : 서울특별시, 교통통계, 2002

3) 물류기반시설의 미흡

- 교통혼잡과 물류기반시설 부족은 화물운송효율 저하 및 물류비 과다로 나타나고 있다.
- 서울시 1일 물동량의 경우 2001년을 기준으로 87만톤에서, 향후 2011년에는 105만톤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나, 서울시내 물류시설의 경우 공용터미널 3개소(서부, 동부, 한국터미널)에 불과한 실정이다.
- 기존물류시설의 입지를 살펴보면, 화물터미널, 농수산물 도매시장 등이 개발당시와는 달리 주변 개발이 이루어져, 교통체증을 가중시키는 주민혐오시설로 전락함으로써, 현상태에서 확장도 어려운 실정에 처해있다.

4) 차량중심의 교통체계

- 교통체계가 자동차 위주로 조성, 운영되어 보행환경이 열악한 실정이다. 보행자는 불과 몇 백 미터를 걷는 데에도 열악한 보행환경으로 인하여 많은 시간이 소요됨은 물론 각종 안전사고에 노출되어 있다.
- 또한, 교통체계 및 공공시설이 차량 위주로 되어있으며, 교통약자(노령자, 장애인

등)의 안전 확보와 이동편의시설이 부족한 실정이다.

- 보행에 의해 이루어지는 통행은 평균거리 2km에 이르나, 쾌적함과는 거리가 먼 보행환경을 감수하고 있다.
- 지하철 환승과 승강편의 시설의 경우 지하철 정거장내 환승거리가 멀고, 승강시설 부족으로 장애인·노약자들의 이용권을 보장해주지 못하고 있다. 비록 엘리베이터 168대, 에스컬레이터 799대, 휠체어리프트 434대, 수평자동보도 16대가 현재 설치되어 운영중에 있으나 이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서울특별시, 서울시정 4개년 계획, 2002)

[표 IV-11] 이면도로 보행환경 실태

구 간	소요시간	차량과의 마찰	주차대수	통과차량대수 (보행시)	공사장 및 노상적체물
강남 (250m)	3분50초	8회	56대	8대	7개소
강남 (250m)	4분	16회	50대	13대	8개소

자료 : 녹색교통, 보행환경의 실태와 문제점, 2001

[표 IV-12] 통행목적별 하루평균 보행시간·보행거리

구 분	하루평균 보행시간		하루평균 보행거리(m)
	평균보행시간(분)	하루통행시간과의 비율(%)	
출 퇴 근	28.7	37.9	1,722
통 학	35.8	47.2	2,148
쇼 핑	21.0	27.7	1,260
운동·산책	35.8	47.2	2,148
전체평균	33.3	43.9	1,998

자료 :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교통정비중기계획, 2000

5) 비효율적인 교통행정체계

- 서울시 교통행정 당국은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소득증대, 고밀도 개발, 높은 토지가격 및 가용토지의 부족, 자동차 보유의 급증 등 다양한 이유로 다른 선진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심각한 교통문제를 떠안고 있다.
- 그러나, 교통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철학의 미흡함과 교통행위 내부의 갈등구조로 인하여 문제해결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교통정책의 기본목표는 개개인의 이동성(mobility)을 향상시켜 도시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편의를 효율적으로 제공하는데 있어야 하며, 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세부적인 정책방향이 제시되어야 한다.
- 그러나 이러한 세부전략 및 방법들은 대부분 서로 상쇄되는 효과를 가져오는 대안들이 많으며, 정책목표간의 우선순위가 불명확하여 그 갈등구조가 더욱 심화되곤

한다. 이러한 내부 우선순위의 갈등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로 및 고가도로의 증설, 도시철도의 추가건설, 신규시설공급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접근과 기존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승용차와 같은 개인교통수단에 대한 수요억제를 우선 또는 병행해야 하는가와 같은 공급적 해결방법과 관리적 해결방안의 갈등이 발생한다. 특히 이러한 갈등은 서울과 같이 흡인력이 높은 도시에서 교통시설공급에 따른 새로운 수요의 창출 및 잠재수요에 대한 인식부족 때문에 발생한다.
- 횡단보도의 설치나 도로 폭 축소와 차량소통, 보도상 불법주차단속과 상권보호, 이면도로 주차허용과 생활공간 확보 등 자동차와 인간간의 우선순위의 갈등이 발생한다.
- 버스전용차로와 승용차량 지체, 혼잡통행료 징수와 대중교통에 대한 면제특혜, 저렴한 대중교통비용과 비싼 승용차 과세 등을 둘러싼 대중교통수단과 승용차와의 갈등이 발생한다.
- 지하철 확대에 따른 버스승객 감소, 지하철 노선과 중첩된 버스노선, 버스노선과 마을버스간의 기능 혼재 등은 대표적 대중교통수단들 간 갈등의 사례이다.
- 화물집중발생지구에서의 장기승용차주차와 화물차량 주정차 공간 확보 문제, 화물차량의 도심진입규제 및 운행규제 등은 사람통행과 화물통행 간의 우선순위에 대한 갈등의 예이다.

• 내부갈등에 더하여 교통문제를 심각하게 만드는 것은 유사분야간, 유관행정조직간, 여론형성기관간 등의 외부적 갈등에 있다. 이러한 갈등의 예는 다음과 같다.

- 도시계획, 환경, 물류, 첨단정보기술 등 관련학문간의 활발한 교류를 통한 시너지 보다는 사업 추진시 서로의 지분만을 확보하는데 급급하다.
- 행정에 있어서 신호기, 안전표지판, 도시고속도로 운영 등은 경찰, 교통관리 및 대중교통은 교통국, 도로건설 및 운영은 건설국, 지하철건설은 지하철건설본부, 운영은 2개의 지하철공사, 이면도로 사업은 구청, 광역교통시설사업은 건설교통부, 경기도, 인천시 등으로 건설, 관리, 운영이 각각 분리되어 통합적 시각에서 신속하게 교통문제에 접근하여 효율적으로 해결하기에는 어려운 구도이며 지자체간 협의 기능 미흡 등으로 갈등구조가 심화되곤 한다.
- 성안된 정책은 언론, 시의회, 시민단체, 이해당사자 주민, 업계 등의 이해관계조정에 필요한 교통행정철학의 부재로 인해 환경, 생명, 혼잡완화와 같은 필수적 규제마저도 실천에 옮겨지기 어렵다. 특히 가격규제정책의 경우 전문가들조차도 무조건적인 반대로 일관하는 경우가 많고 이에 대한 서울시의 대응은 피해가기로 일관하고 있다.

2. 여건변화 전망

1) 서울시 교통 여건 변화 전망

(1) 단기전망(2005년)

- 서울시를 중심으로 한 수도권 광역교통체계가 강화됨에 따라, 광역간선도로 및 광역철도의 건설과 외곽 환승시설의 설치가 요구되어지고, 광역버스, 택시 등 수도권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연결시키는 통합교통서비스가 필요하게 될 것이다. 교통수단간 효율적인 연계를 위하여 대규모 복합환승센터의 개발이 요구되며 여객터미널의 시설개선이 필요하다.
- 2기지하철의 완공에도 불구하고 체계미흡 등 다양한 이유로 지하철수단분담율의 증가는 예상보다 둔화될 것이다.
- 시내버스 경영악화는 심화될 것이며, 이에 따른 경영합리화가 제기될 것이고, 고급버스서비스와 다양한 택시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아질 것이다.
- 도심부 하천복원, 도심부 광장조성 등의 사업추진과 이에 따른 도심교통체계의 개편이 요구될 것이며, 이는 대중교통체계의 개편으로 이어질 것이다.
- 차량증가로 인한 주차문제 심화로 주택가 주차장시설의 대폭확충 및 도심·부도심의 주차수요관리가 필요할 것이다.
- 보행, 자전거와 같은 환경친화적 교통수단에 대한 시설 보완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며,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및 특별 교통수단의 확대가 요구될 것이다.
- 주5일근무제의 단계적 실시로 인한 주말 수도권광역통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2) 중기전망(2010년)

- 환경오염과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환경 친화적인 교통시설과 안전시설 확충에 대한 욕구가 증가될 것이다.
- 불필요한 통행시간과 교통혼잡을 완화시키기 위한 과학적인 교통운영 관리기법(ITS 등)의 도입이 꾸준히 확대될 것이다.
- 삶의 질 향상과 함께 시간가치가 중요시됨에 따라 정시성 있는 고급교통수단이 특히 선호될 것이다.

- 텔레워크 등이 보편화되면서 통근통행은 감소하고, 여가통행은 증가할 것이며, 전자상거래활성화에 따른 쇼핑패턴의 변화 등이 예상되며, 통행패턴 자체가 더욱 복잡다양해질 것이다.
- 도시화물의 물동량이 증가할 것이며, 이에 따른 물류기반시설의 확충 및 효율적인 물류정보체계구축이 요구될 것이다.
- 터미널 기능이 강화될 것이며, 이에 따른 시설입지의 재조정이 요구되고 주차정책에 대한 획기적인 관리, 운영제도의 시행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 남북교류 확대와 통일을 대비한 교통체계개편의 필요성이 증대되어, 남북간 연결도로 및 철도이용 수요에 대비한 남북연계 교통기반시설의 정비가 요구될 것이다.
- 환경 친화적인 교통수단에 대한 요구가 절정에 달할 것이며 도로·교통분야의 정보화가 성장기에 접어들 것이다.

(3) 장기전망(2020년)

- 첨단기술의 발전으로 저공해 고효율 차량이 실용화되고, 전자동화된 자동차와 자동화 도로의 도입이 시도될 것이다.
- 고속교통수단의 도래로 전국이 통근생활권이 될 것이며 고속항공수단의 발달로 전세계가 하루생활권이 될 것이다.
- 항공운행 수단의 발달과 함께 개인항공운행수단이 도입될 것이다.
- 삶의 질 향상으로 대형 대중교통수단에서 접근성이 좋은 중·소형 고급대중교통수단이 선호될 것이다.

2) 서울시 교통수요 변화 예측

(1) 장래 자동차 보유대수 예측

• 서울시 장래 자동차 보유대수를 추정하기 위한 예측 모형식으로는 자동차 보유대수(천대)의 과거자료(1984년 ~ 2000년)를 이용한 로지스틱모형을 적용하였다.

[표 IV-13] 자동차 보유대수 예측결과 (단위 : 천대, %)

구 분	2001	2005	2010	2015	2020	연평균증가율
서울시	2,550	2,779	3,009	3,238	3,468	1.8
수도권	5,983	6,611	7,239	7,868	8,496	2.1

자료 : 서울특별시, 교통통계, 2002

• 2020년 서울시 자동차 보유대수는 자가용 보유대수의 증가와 함께 소형화물차량의 증가로 인해 약 350만대 연평균증가율 1.8%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수도권 전체의 경우 연평균증가율 2.1%로 2020년 약 850만대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2) 총 통행량 예측

• 서울시의 장래 총 통행수요는 광역화에 따른 도로 및 철도시설 그리고 결절점의 보완으로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측된다. 서울시 내부통행간 1일 목적통행량은 2002년 19,745천 통행에서 2020년 24,397천 통행으로 연평균 1.23%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1인당 목적통행비가 2002년 1.92통행/인에서 2020년 2.49통행/인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단통행의 경우 도보제외, 지하철 내 환승 포함시 2002년 20,914천 통행에서 2020년 23,711천 통행으로 연평균 0.71%의 증가율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서울시 인구 1인당 수단 통행비는 2002년 2.03통행/인에서 2020년 2.42통행/인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IV-14] 총 통행수요 예측

구 분	2002	2005	2010	2015	2020
인구 (천인)	10,281	10,216	10,037	9,913	9,798
목적통행 (천명통행/일)	19,745	20,738	21,881	23,196	24,397
수단통행 (천명통행/일)	20,914	21,658	22,182	22,899	23,711
1인당 목적통행 (통행/인·일)	1.92	2.03	2.18	2.34	2.49
1인당 수단통행 (통행/인·일)	2.03	2.12	2.21	2.31	2.42

주 : 1) 인구는 내외국인별 주민등록 총인구
2) 서울시 내부통행간 통행량
3) 수단통행은 도보제외, 지하철철도 환승포함
자료 : 서울특별시, 2002 서울시 가구통행실태조사, 2003

(3) 목적통행 예측

- 장래 목적별 통행 발생량을 살펴보면 쇼핑통행량이 2002년 1,056천 통행에서 2020년 2,165천 통행으로 연평균 증가율 3.34%의 가장 높은 증가율이 예상되며, 통근통행이 2002년 3,215천 통행에서 2020년 4,527천 통행으로 연평균 2.12%의 증가가 예측되었다.
- 특히 소득수준의 향상에 따른 여가활동과 생활욕구의 다변화로 쇼핑 및 기타통행의 증가가 두드러질 것으로 예측되었다. 통행목적이 등교인 경우 연평균 증가율이 -0.31%로 감소될 것으로 예측되며, 이는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학생수의 급격한 감소에 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장래에는 직업이 보다 다양해지고, 신속한 교통수단의 발달로 통근시간이 단축되면서, 장거리 출근이 많아짐에 따라 통근통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통신 및 정보기술의 발달로 상당수준의 재택근무로 흡수되어 업무통행은 그리 큰 증가를 보이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표 IV-15] 서울시 총 목적별 통행수요 예측 (단위 : 천명통행/일, %)

구 분	2002	2005	2010	2015	2020	연평균 증가율
등 교	1,789(9.1)	1,782(8.5)	1,796(8.1)	1,777(7.6)	1,747(7.1)	-0.31
통 근	3,215(16.3)	3,626(17.3)	4,102(18.5)	4,467(19.1)	4,527(18.4)	2.12
귀 가	7,797(39.5)	8,027(38.3)	8,271(37.3)	8,513(36.4)	8,635(35.1)	0.50
쇼 핑	1,056(5.3)	1,132(5.4)	1,286(5.8)	1,473(6.3)	2,165(8.8)	3.34
업 무	1,986(10.1)	2,117(10.1)	2,173(9.8)	2,269(9.7)	2,386(9.7)	0.90
기 타	3,902(19.7)	4,276(20.4)	4,546(20.5)	4,888(20.9)	5,142(20.9)	1.84
계	19,745(100)	20,959(100)	22,174(100)	23,388(100)	24,602(100)	1.23

주 : 1) 서울시 내부통행간 목적통행량
2) 기타는 배웅, 친교·개인, 학원 등이 포함된 값임
자료 : 서울특별시, 2002 서울시 가구통행실태조사, 2003

(4) 수단통행 예측

- 도보수단을 제외하고 지하철간 환승을 포함한 2002년 서울시 내부통행간 총수단 통행량은 20,194천 통행이고, 이중 승용차와 버스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각각 24.1%, 28.6%이다. 최종 목표연도인 2020년에는 총수단 통행량이 24,553천 통행이 될 것으로 예측되며, 이중 승용차는 24.7%로 2002년에 비해 약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버스는 19.6%로 분담율이 상당히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택시의 경우 2020년에 총수단 통행량 중 분담율이 6.6%를 차지해 2002년에 비해 약 2.4%정도의 감소가 전망된다. 하지만, 지하철의 경우는 2002년 분담율 34.3%에서 2020년 47.1%로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표 IV-16] 서울시 총 수단통행량 예측 (단위 : 천통행/일, %)

구 분	2002	2005	2010	2015	2020	연평균 증가율
승용차	5,033(24.1)	5,456(25.0)	5,843(25.7)	6,171(26.1)	6,065(24.7)	1.04
택시	1,872(9.0)	1,768(8.1)	1,705(7.5)	1,679(7.1)	1,621(6.6)	-0.33
버스	5,977(28.6)	5,303(24.3)	5,161(22.7)	4,871(20.6)	4,812(19.6)	-1.29
지하철·철도	7,178(34.3)	8,424(38.6)	9,321(41.0)	10,096(42.7)	11,564(47.1)	5.19
기타/오토바이	854(4.1)	873(4.0)	705(3.1)	827(3.5)	491(2.0)	-0.034
계	20,914(100)	21,824(100)	22,734(100)	23,643(100)	24,553(100)	0.87

주 : 1) 서울시 내부통행간 수단통행량
2) 도보제외, 환승통행 포함
자료 : 서울특별시, 2002 서울시 가구통행실태조사, 2003

(5) 화물수요 예측

- 2001년 수도권 총 화물자동차 통행은 1일 1,875천대이며 2020년에는 약 1.8배인 3,394천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2001년 대비 연평균 3.68% 증가한 것이다. 서울의 경우 2001년 전체 수도권 화물발생통행량의 29.6%를 차지하며, 2020년에는 전체의 27.9%로 전망되어 2001년에 비해 그 비중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평균증가율을 살펴보면 수도권 전체 평균 3.68%에는 못 미치지만 약 3.22%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 수도권 물동량의 경우 2001년 1,674(천톤/일)에서 2020년 2,499(천톤/일)로 연평균 증가율이 3.22%를 나타낼 것으로 예측되며, 서울시의 경우는 2001년 873(천톤/일)에서 2020년 1,251(천톤/일)로 연평균증가율이 3.21%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표 IV-17] 화물자동차 발생통행량 예측 (단위 : 천대/일)

구 분	2001	2005	2010	2015	2020	연평균 증가율(%)
서울시	554	645	689	774	947	3.22
수도권	1,875	2,199	2,402	2,742	3,394	3.68

자료 : 건설교통부, 수도권 종합교통체계조사, 2000

[표 IV-18] 서울시 및 수도권 물동량 예측 (단위 : 톤/일)

구 분	2001	2005	2010	2015	2020	연평균 증가율(%)
서울시	873,713	942,401	1,035,905	1,138,686	1,251,665	3.21
수도권	1,674,851	1,822,173	2,024,679	2,249,691	2,499,709	3.22

자료 : 서울특별시, 물류조사 및 물류종합계획수립 구상, 1998

3. 미래상

"교통흐름이 원활한 환경친화형 교통체계"

- 저렴한 투자로 최적의 교통기반시설을 구축하기 위한 효율적인 교통정책을 추진한다.
- 지역간, 정책간 균형을 고려한 인간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한다.
- 자동차수요 저감, 사회적 비용 경감, 대중교통중심의 환경 친화적 분산형 광역교통체계를 구축한다.
- 문제를 진단하는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과학적인 지능형 교통체계를 구축한다.
- 물류의 효율적 이동을 보장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 수익자/원인자 부담원칙을 철저히 적용하고 교통행정체계의 일원화 및 효율화를 추진한다.

4. 계획방향

서울시 교통 및 물류현황, 여건변화, 향후전망 등을 토대로 효율성, 다양성, 형평성이 조화될 수 있도록 한다.

계획의 우선순위 결정시에는 효율보다는 형평에 보다 더 비중을 두고 결정하고, 자동차보다는 사람, 승용차보다는 대중교통수단, 교통수요가 많은 축에서는 지하철이 버스에 우선하도록 한다.

또한 도시경제를 지탱하는 물류의 원활한 이동이 보장되도록 하며 공급보다는 과학적인 운영을 중시한다.

5. 목표체계 "흐름이 원활한 환경친화형 교통체계"

목 표	과 제	전 략	시 책	정책지표
1. 편리하고 안전한 대중교통 체계 구축	대중교통의 통행속도 개선	• 지속적이고 과감한 시설 공급과 체계 정비, 대중교통체계 정비를 통한 통행속도 개선	- 시계 유출입 교통체계는 대중교통위주로 구축 - 도시의 중추적 교통수단으로써의 도시철도망 구축 - 광역도로 및 광역철도체계 정비 - 대중교통 전용몰(Transit Mall)조성 - 버스노선체계를 간선-지선의 2원 체계로 전환 - 지하철과 연계된 버스노선조정 - 고속도로 시내구간 버스전용차로 전일제 추진 - 중앙버스 전용차로 운영	지표 1. 서울시 대중교통 수송분담율
	대중교통 결절점 체계 구축 및 통합운영을 통한 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 대중교통수단의 위계를 고려한 결절점 체계를 구축과 통합운영을 위한 기관 설립	- 서울시 공간구조의 다핵화를 고려한 대중교통 결절점 체계를 정비하고 시설투자시행 - 동북부지역 간선도로망 확충 및 교통체계 개편사업추진 - 결절점 시설과 교통수단간 기능통합 - 대중교통 환승 센터 건설 - 여객자동차 터미널 재조정 - 환승 주차장 건설 - 고속철도역사 추가 선정을 통한 서울시 접근성 강화	지표 2. 수도권 도시철도의 총연장 지표 3. 대중교통 전용몰 지표 4. 서울시내 버스의 정시성
	대중교통서비스의 고급화	• 대중교통 안내체계 강화, 운행질서 확립 및 합리적인 요금조정체계 실현으로 대중교통 서비스 환경의 획기적인 개선	- 버스운영체제 개편 - 실시간 버스운행정보 제공을 통한 배차 효율화와 정시성 확보 - 대중교통 배차간격 자율성 부여 - 버스운행관리시스템 도입 및 버스우선처리 시스템 확대 - 대중교통 노선 안내체계 정립 - 실시간 버스 안내시스템(BIS)도입 - 버스의 공공기반 확충 및 공영차고지 조성 - 버스의 합리적인 요금 조정 및 노선 입찰제 실시 - 시내버스서비스 평가 실시 - 교통카드 호환시스템 추진 - 대중교통 환승 요금체계 통합추진 - 대중교통 운수종사자 복지 증진 - 도시철도 환승 및 승강 편의시설 확충 - 지하철 차등요금제 도입 - 통근셔틀버스 도입 - 지하철 연장운행 - 속도향상 및 통행시간 단축을 위한 급행화 추진 - 시내버스의 편의설비 개선 - 지하철의 출퇴근시 과도한 혼잡구간 해소 - 지하철 노후시설의 지속적 개량 - 도시철도 역사 오염개선대책 추진 - 도시철도 방재관리시스템 구축	지표 5. 서울시 간선버스속도 지표 6. 교통카드 이용율 지표 7. 서울시내 도시철도의 혼잡율 지표 8. 서울시 도시철도역의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등의 설치율

목 표	과 제	전 략	시 책	정책지표
1. 편리하고 안전한 대중교통	고급 교통수단으로써의 택시 본래기능 회복	• 택시운영제도의 근본적인 개선 및 고급 대중교통수단으로써 자리 매김 실현	- 개인택시 관리제도 개선 - 택시업계 운영체계 개편 - 운수종사자 복지증진 - 택시요금제도 개선 - 택시요금 카드 결재시스템 구축 - 택시사업구역 통합 및 확대 - 택시 콜기능 정착 - 다양한 택시수단 도입	
	새로운 교통수단 도입 및 대중교통수단 다양화	• 매력적인 신 교통수단을 도입하고 주운과 항공교통의 활용강화 준비	- 대중교통이용제고를 위한 새로운 교통수단 도입 검토 - 한강 주운 검토 - 항공 네트워크 구상	
2.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도로 운용	기존 도로시설의 기능 극대화	• 기존시설의 기능향상과 노후시설의 정비, 도로시설의 정보화 및 도로교통망의 연계성을 강화한 효율적인 망체계 구축	- 도시고속도로의 진출입연계망 확충 - 결절점 정비를 통한 도시고속도로 및 간선도로 기능향상 - 안전과 유지관리의 어려움이 있는 노후 도로시설의 개선 및 철거 검토 - 병목구간 개선사업의 지속적 추진 - 도로시설의 첨단정보화	지표 9. 서울시 간선도로 총연장 지표 10 서울시 도로율 지표 11. 광역간선도로 총 연장 지표 12. 첨단교통관리시스템 도입 도시고속도로 비율
	도로시설의 효율적 공급	• 시설 용량과 수요관리 목표치에 따른 신규시설 공급 • 서울통과교통량의 우회처리를 위한 광역 교통망을 완성	- 장래 증가가 예측되는 교통량의 10~20%는 수요관리를 통해 해결 - 강남 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 - 광역간선도로와 서울시 간선도로의 연계 강화를 고려한 광역간선도로망 계획 수립 - 서울시계 및 서울외부지역간 교통처리를 위한 우회도로망 구축	
	지역 균형발전 추구	• 지역의 균형된 발전을 추구하는 교통체계를 구축	- 대규모 환경 친화적 투자를 강북에 우선검토 -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고가구조에 대한 개선방안 혹은 지하화 검토 - 한강교량 확충 및 정비를 통한 강남·북간 소통원활화 모색	
	첨단교통기술 ITS)을 통한 효율적인 도로교통시스템 구축	• 첨단교통기술(ITS)을 통한 효율적인 도로교통관리를 구현하고 시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ITS의 효과 및 편의성 창출	- 서울시 ITS 세부계획 수립/추진 - 실시간 교통상황 모니터링 및 통합교통관리 시스템 구축 - 종합교통정보센터 구축 및 수도권 종합교통 정보센터간 연계체계구축 - 방사형 간선축의 정보화 적극추진 - 논스톱 자동 통행료 징수시스템을 도입하고 대중교통 통합지불체계 구축 - 첨단 여행자 및 보행자 안내체계를 도입하고 첨단교통정보사업을 추진 - 장대터널, 유료도로 구간, 상습정체지점에 정보시스템 도입 - 서울시 ITS 전담조직구성 및 운영 - 서울시 ITS사업을 위한 기획·평가센터 운영 - 서울시 ITS 사업의 평가 및 기능개선 수행	

목 표	과 제	전 략	시 책	정책지표
2.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도로 운용	신호체계 개선 및 전문적 신호관리	• 신호체계 개선을 통한 교통시설 운영효율 극대화	- 신호 시스템 개선 - 신호관리요원의 대폭확충과 교육을 통한 전문화	지표 13. 간선도로 실시간 신호 시스템 설치비율
	지속적인 도로교통 환경 개선	• 기존 교통체계개선(TSM)사업의 문제점 보완 • 지역 특성에 맞는 개선사업의 추진으로 지속적인 교통환경개선	- 간선도로 패키지화 개선사업 지속적 수행 - 도로표지의 단계적 정비 - 이면도로 정비 - 간선도로 및 이면도로 일방통행제 검토 - 종합적/체계적 블록단위 교통개선사업 지속적 수행 - TSM 사업 사후 평가과정 체계화 - 도로공사장 교통관리 실천방안 수립 시행	
	통일대비 교통체계 확보	• 향후 통일을 대비한 교통체계계획 수립	- 통일대비 수도권 종합교통망 수립 - 남북교류 및 통일을 대비하여 남·북간 미연결 교통망을 정비하고 도로투자는 서울시를 가능한 우회 설정	
3. 환경 및 인간 중심적인 교통체계 구현	안전하고 접근이 편리한 대중교통 및 보행자 공간 조성	• 보조간선이하도로는 안전하고 접근이 편리한 대중교통과 보행자중심의 공간으로 정비	- 교차로 횡단보도 복원 및 확충 - 보행사고 다발지점 개선 - 안전한 동네 골목길 조성 - 안전시설 확충 및 적극적인 유지관리시행 -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대책 수립 · 실행	지표 14. 교통사고건수 지표 15. 보행자 교통사고비율 지표 16. 자전거의 수단분담율 지표 17. 전체도로에서 보행자전용로가 차지하는 비율
	자전거의 생활화 유도	• 기반시설 확충 및 정비를 통해, 무공해 통행수단인 자전거이용 활성화 유도 • 자전거관련 법 제도를 정비하고 안전교육 강화	- 자전거이용시설 정비 및 다양화 - 자전거노선계획 수립 - 자전거간선도로망 구축 - 지하철과 자전거 환승체계 구축 - 주요 한강 교량부 자전거 연결로 설치 - 한강변 자전거 도로 확충 및 정비 추진 - 자전거이용 코스의 개발 및 시민홍보 - 자전거관련법 정비 및 안전교육 강화 - 지하철일정부분 자전거탑승 허용 - 자전거 대여제 도입	
	걷고 싶은 거리 조성	• 돈화문로와 청계천로를 중심 십자축으로 차 없는 거리 조성계획 수립 • 도심부 보행공간 질적 개선을 통한 안전 향상과 자유공간 확보	- 청계천 오픈 스페이스화 타당성 검토 - 도심광장 조성 및 도심하천 복원 - 걷고 싶은 거리 만들기 - 차 없는 날 추진 - 녹화거리 조성 및 보도정비	
	환경, 문화 등과 조화를 이룬 도시교통 추구	• 환경, 문화와 조화로운 교통관리 및 시설공급 추구	- 친환경 공공교통수단 정착을 위한 강력한 인센티브제공 - 대기오염지수제도 도입방안 모색 - 디젤 가격의 지속적 상향 - 보행환경 시민 감시제 도입 - 교통 사고가해자 사회봉사 의무화 - 외국인을 위한 교통안내체계 및 여행환경개선 - 대중교통관련시설의 문화공간화 조성	

목 표	과 제	전 략	시 책	정책지표
3. 환경 및 인간 중심적인 교통체계 구현	교통약자 이동편의 제고	• 노령자, 장애인 등 보행약자들이 안전하고 쉽게 이용 할 수 있는 보행여건 조성	- 주요 이용시설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특히 공공시설 이용시 불편이 전혀없도록 시설개선 - moving belt 확충 - 무장애 가로의 조성 - 시각장애자를 위한 특수보도시설 개발 - 장애인의 대중교통수단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개선 -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수단확대 제공(장애인 무료 셔틀버스, 전용 콜택시 등)	
4. 효율적인 물류체계의 구축	물류기반시설의 확충	• 향후 물동량 증가에 대비한 물류기반시설 확충	- 생활권역별 도시지원형 물류유통단지 개발 - 소화물집배송센터 건립 - 기존 물류시설 개선 - 물류거점 확보 및 화물수송체계와 연계강화	지표 18. 트럭의 적재 효율
	효율적인 화물수송체계 구축	• 효율적 화물수송체계 구축으로 물류의 원활한 흐름을 보장 • 물류관련제도 개선	- 도심 물류 혼잡지구 개선사업 추진 - 화물차량의 적정통행기준 및 완화방안 수립 - 다양한 신 물류시스템의 구축방향 및 도입방안모색 - 이륜차 택배업 양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 차고지 증명제의 실효성 검토 - 대형건축물내 화물하역시설 설치 의무화 - 화물차등록 및 차고지증명의 공동관리 시스템 구축사업	
	물류정보체계의 구축	• 물류시설 및 차량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물류정보체계 구축으로 단말물류의 효율성 제고	- 물류정보체계 구축 및 물류 DB관리 - 서울시내 화물차량 대상 최적경로 정보제공 - 각 단위지구간 화물운송안내센터 및 트럭대기주차장 연계강화 - 종합물류정보전산망과 지능형 교통시스템(ITS)과의 연계구축	
5. 합리적인 수요관리 정책 수립 및 편리한 주차환경 조성	형평성에 기초한 합리적인 교통수요관리 시행	• 수익자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른 합리적인 혼잡관리 방안 마련 및 시행검토	- 도시고속도로 유료화 검토 - 과밀지역에 대한 합리적인 혼잡통행료 징수방안의 개발 및 시행검토 - 시계부근 혼잡통행료 징수여부 검토 - 자동차관련 과세의 이용과세로의 통합	지표 19. 서울시 주택주차장 확보율 지표 20. 서울시내 자동차의 전일 평균통행속도 지표 21. 서울시 도로연장 대비 불법주차대수
	도심·부도심 주차수요관리 강화	• 주차상한제 시행지역 확대 및 제한기준 강화 • 주차요금 관리시책의 개선추진	- 주차상한제 확대보완 - 교통혼잡지역 부설주차장 설치제한 추진 - 교통혼잡특별관리구역 지정 검토 - 강력한 불법주차단속의 시행 - 교통수요 유발 밀도에 따른 주차요금 체계 조정 - 기업체수요관리 참여율 개선 - 텔레워킹(원격근무)의 활성화	
	편리한 주차환경 조성	• 단순주차정책에서 벗어나 계획적인 주차 시설공급 및 정책 추진 • 주차제도 보완 및 개선 • 기존의 주차제도 활성화	- 블럭별 공영개념으로 주차수요관리 - 새로운 시설 도시 입주시 주차공간수 제한 - 주차시설초과지역 감축명령제 실시검토 - 공공·민영주차장 건설의 활성화 - 차고지 증명제 도입검토 - 이면도로주차장 유료화 -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기준 및 방법개선 - 첨단 주차안내 정보시스템 도입 - 녹지주차공간 조성	

목 표	과 제	전 략	시 책	정책지표
6. 효율적인 교통행정의 구현	토지이용과 환경을 통합한 교통계획 수립	• 새로운 시책들이 힘을 받아 추진되기 위한 토지이용과 환경을 통합한 교통계획 수립	- 교통과 토지이용·환경을 통합한 종합적인 계획 및 영향평가제도로의 개선 - 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 향상 - 역세권 병행개발 제도 추진 - 도시개발 사업시 교통시설의 적정공급계획 수립 의무화 - 대중교통 시설 및 결점점(환승역, 환승센터, 전철역 등) 주변토지의 우선적 개발과 개발 인센티브를 제공	-
	체계적인 서울시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조직체계 구성 및 전문 리서치센터 운영	• 서울시 교통행정의 통합조정기능 강화 • 수도권 광역문제의 체계적 접근을 위한 기구 설립	- 교통조직체계 일원화 추진 - 도로교통 행정업무의 간소화, 정보화 적극 추진 - 교통센서스 정례화 및 전담 조사기구운영 - 공공투자, 민자유치 전담기구 설치/운영 - 교통계획/정책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교통지식 저변확대를 위한 외부여건 정비	• 시민대상의 교통관련 프로그램을 개발 추진하여 바람직한 교통환경 마련 • 초중고 교과의 교통관련 교육 활성화를 통해 교통지식의 저변확대 등 외부여건 정비	- 시민대상의 교통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 교통관련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 강화 - 공무원 교통교육 프로그램의 강화 - 초중고 교과에서 교통관련 교육 활성화	

목표1 편리하고 안전한 대중교통체계 구축

승용차만큼 빠르면서 편리하고 안전한 대중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불편한 환승 체계 개선, 대중교통이용자에 대한 통합정보제공, 대중교통수단의 환경개선 및 다양화를 이룩한다. 또한 대중교통 공공성을 강화하여 대중교통 수단간 통합운영체계를 구축하여 생활권 단위의 대중교통서비스를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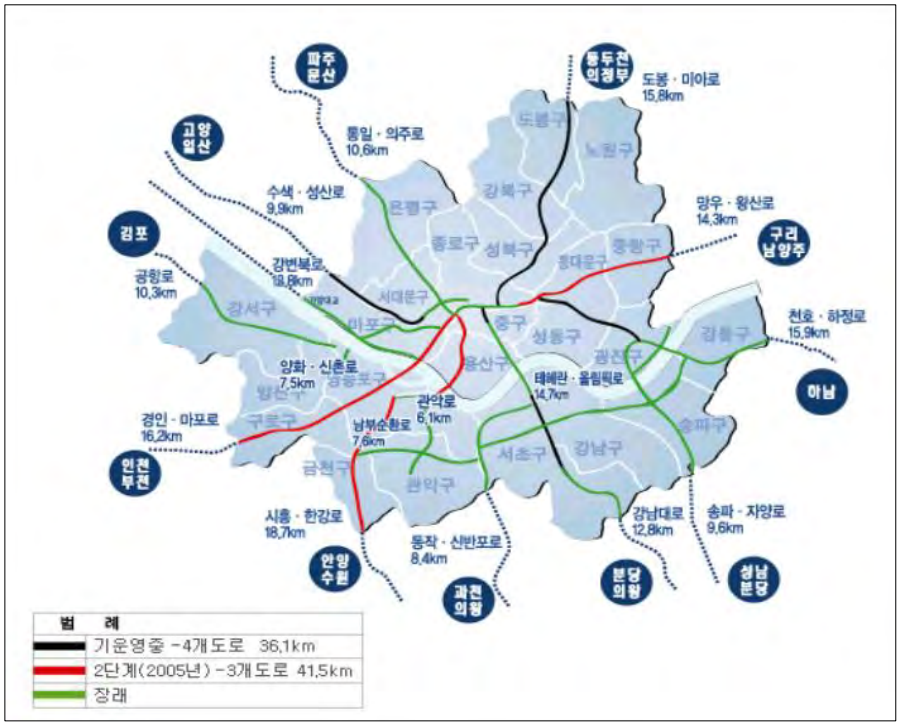
과제1 대중교통의 통행 속도 개선

전략

지속적이고 과감한 대중교통체계정비를 통한 승용차만큼 빠르면서 편리하고 안전한 대중교통체계를 구축하여 과다한 승용차통행을 대중교통으로 유도한다.

시 책

- 서울시 외곽에서 시내로의 진입은 환경 친화적 대중교통이 원칙이 되도록 교통체계를 구현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한다.
- 서울시의 도시철도망계획은 도시철도가 중추적 수송수단으로써의 기능을 정립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기존선 개량으로 속도향상을 실현하며, 기존전철, 지하철간 네트워크 효과제고 및 상호수요를 증진시킨다. 장래 도시공간구조 개편방향에 부합되는 도시철도 노선망을 구현하여 주거밀집지역 대중교통난 해소 및 도시철도 서비스 취약지역을 해소한다.
- 주5일 근무제 도입에 따라 광역도로와 광역철도체계를 정비하고, 수도권 개발계획 및 주요교통시설에 대한 연계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한다.
- 대중교통 전용몰(Transit Mall)을 조성하여 승용차 통행을 억제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며, 보행자 우선의 가로공간을 조성한다.
- 청계천 복원사업을 계기로 합리적 기준에 따라 시내버스노선을 간·지선의 2원 체계로 전면 개편하며, 지하철과 연계된 버스노선 조정을 통해 대중교통의 주축을 담당토록 하고, 시민이 필요로 하는 지역에 버스노선을 적절히 배치하여 교통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 고속도로 시내구간 버스전용차로 전일제를 추진하고, 중앙버스전용차로 운영 등 획기적 개선을 통한 버스 정시성을 향상토록 한다.



[그림 IV-1] 서울시 중앙버스전용차로 노선계획

과제2 대중교통 결절점 체계 구축 및 통합운영기관을 통한 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전략

대중교통수단의 위계를 고려한 합리적인 결절점 체계를 구축하고, 통합운영기관을 설립하여 대중교통서비스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생활권 단위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 책

- 결절점 시설입지에 있어 지역적 불균형 해소와 서울시 공간구조의 다핵화 개편에 따른 도시기능 분산 및 수요의 균형적 배분을 고려한다. 또한, 교통체계상 대중교통을 중심으로 체제 개편을 유도하며, 동북부 지역 간선도로망 확충 및 교통체계 개편사업 추진을 모색한다.
- 결절점 시설의 상호간, 교통수단간 연계체계의 미흡에서 오는 비효율성을 극복하기 위해 분산된 기능을 통합하도록 하며, 개인교통수단의 대중교통 환승으로 도심 승용차 교통량 감소를 유도한다.

- 서울시를 시계유출입권, 시내 외곽권, 도심/부도심권 등 3개의 권역으로 분류하여, 경인축, 안양축, 성남축 등 주요 시외유출입 축이 교차하는 통행 빈번 지역에 환승센터 건설계획을 수립하고, 단계별로 입지시켜 각기 차별화 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도록 계획한다. 또한, 주요지역에 도시철도 역사와 버스정류장을 연계하는 Bus & Ride를 비롯해 Kiss & Ride, Bike & Ride, Taxi & Ride 등을 수용하는 편리한 대중교통 환승센터를 건설한다.
- 여객자동차 터미널 재조정을 통해 터미널 접근시간 단축 및 수도권 공간구조 개편방향에 부응하는 시설체계 정립을 통해 서울시내 터미널 입지의 공간적 불균형을 해소하고, 서해안 고속도로 개통 등 광역교통체계 변화 및 통일에 대비한 터미널 시설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또한, 환승주차장 건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 고속철도 역사의 추가 선정을 통해 서울시의 접근성을 강화한다.

과제3 대중교통서비스의 고급화

전략

대중교통 안내체계 강화, 운행질서 확립 및 합리적인 요금조정체계 실현으로 대중교통 서비스를 향상시켜 승용차의 door-to-door 서비스에 필적하는 대중교통서비스 환경을 마련한다.

시 책

- 통행권 광역화 및 24시간 도시활동체계 형성에 따른 다양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모색한다. 또한, 실시간 버스운행정보제공을 통한 배차효율화와 정시성을 확보하고 수요변화에 의한 대중교통 배차간격의 자율성 부여로 경영적자 완화 및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 구조조정을 포함한 버스운영체제 개편을 통하여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고하고 경쟁력을 강화한다.
-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버스운행관리시스템(BMS)의 도입 및 버스우선 처리시스템을 확대하여 승용차에 우선하는 편리하고 안전한 대중교통체계기반을 마련한다.

- 이용자 중심으로 표준화된 도시철도 및 버스의 노선별 안내체계를 정립하고 시민들이 만족할만한 수준으로 조기에 개선한다. 또한, 버스안내시스템(BIS)과 같은 대중교통 안내시스템을 도입하여 대중교통 정보제공을 통한 서비스개선으로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한다.
- 중앙버스전용차로제 확대와 함께 간선버스 운영에 준공영제를 도입하며, 공영차고지 조성 등을 통해서 편리하고 빠른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리고 지선버스 운영은 민간자율운영체계로 지역특성과 교통수요에 탄력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자율성을 부여하여 시민의 대중교통이용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 버스 운임·요율의 결정 및 조정원칙을 통해 이에 기초한 요금결정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기초로 탄력적인 요금조정을 통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요금결정을 추진하여 버스업계의 경영난을 완화하고 서비스를 개선하도록 한다. 또한, 경영여건이 어려운 버스업계에 세제지원 등을 통해 경영개선을 도모하고, 시내버스 서비스 평가제도를 마련하여 시내버스 서비스 향상을 통한 버스이용률의 제고를 도모한다.
- 교통카드 호환시스템을 완비하여 대중교통이용의 편의를 높이고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의 환승 및 요금체계의 통합을 추진하며, 수도권 요금지불수단 통합도 추진토록 한다.
- 대중교통 운수종사자의 직업에 대한 긍지와 안정적인 직장으로써의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복지증진대책을 마련하고 운수종사자의 자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 지하철 이용시 가장 불편한 “승강장 협소 및 환승거리 과다”에 대한 환승 및 승강 편의 시설 확충 등과 같은 개선대책을 강구하여 타교통수단 이용자를 지하철로 유인토록 한다.
- 지하철 차등요금제 도입과 도시활동인구의 활동시간 연장에 발맞추어 지하철 연장운행을 실시하며, 지하철 속도향상과 통행시간 단축을 위해 급행화를 추진하고, 통근셔틀버스도입 등을 시행토록 한다.
- 그동안의 시내버스 고급화에 이어 편의시설 개선을 추진하고 지하철 노후시설의 지속적인 개량도 실시하여 쾌적한 대중교통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지하철의 출퇴근시 과도한 혼잡구간에 대한 해소방안을 강구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 지하철역내 환기방식 개선, 먼지제거 성능 향상, 분진 발생원 제거 등 역사 오염 개선대책 추진을 통해 승객이 지하철을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또한, 지하철차량의 운전장애, 침수, 화재, 지진 및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지하철내 범죄예방 설비를 확충하는 등의 방재 관리시스템을 강화한다.

과제4 고급 교통수단으로써의 택시 본래기능 회복

전략

운영제도의 근본적인 개선 및 대중교통체계 개편과 연계하여 고급교통수단으로써의 택시 본래기능을 회복시킨다.

시 책

- 택시업계의 경쟁력 강화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해 택시업계 운영체계 개편 및 개인택시 관리제도를 개선한다.
- 실질적인 운수종사자의 복지증진을 통해 운수종사자의 직업에 대한 긍지를 높임으로써 자연스런 승객서비스 개선을 도모한다.
-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제고를 위해 신용카드 지불방법을 병행 사용하는 등의 택시요금 카드결재시스템을 구축하여 택시교통문화의 세계화를 실현시키며, 다양한 택시 요금제도 개선을 통해 승객 편의제공 및 택시 교통문화의 선진화를 실현시킨다.
- 택시 사업구역의 통합·확대와 같은 택시의 광역 단일서비스 도입을 검토하여 이용자의 편의제공 및 서비스확대를 도모한다.
- 개인·법인택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단계별 택시 콜기능을 확대·정착시켜 문전운행(door - to - door)서비스의 향상을 도모한다.
- 택시 본래의 기능인 고급교통수단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모범택시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장애인, 노약자, 유아 동반자 등 이용자의 선택권 확보 및 시민의 편익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다양한 택시수단의 도입을 검토한다.

과제5 새로운 교통수단 도입 및 대중교통수단 다양화

전략

신교통수단 도입 및 대중교통수단의 다양화 등을 통하여 시민들의 수단선택 폭을 넓힌다.

시 책

- 기존 지하철의 이용율을 제고시키기 위한 지선·순환노선의 새로운 대중교통수단과 교통 혼잡 지역내 대중교통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매력적인 신교통수단의 우선 도입을 추진하되, 타당성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민자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때, 지하철 건설보다는 투자비가 저렴하고 대량수송이 가능한 새로운 교통수단의 도입을 검토한다.

- 기존 대중교통 서비스가 취약한 신림난곡, 미아삼양, 목동, 월계청량, 은평, 면목 지역 등에 신교통수단(경전철, GRT 등)을 도입하여 빠르고 편리한 고급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한강 주운 등을 검토하고, 향후 통행시간가치 증가에 따른 신속한 통행수단으로써의 항공 네트워크를 구상 계획한다.



[그림 IV-2] 신교통수단 도입 검토 지역

목표 2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도로 운용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교통관리체계를 수립하고 저렴한 투자대안 및 교통수요를 저감하는 대안을 우선 고려한다. 또한, 정보화, 지능화된 교통체계 구축을 통하여 기존 시설의 기능을 극대화하고 쾌적한 통행서비스를 제공하며, 효과적인 교통관리를 실현하도록 한다.

과제1 기존 도로시설의 기능 극대화

전략

투자대비 효율이 높은 곳부터 기존시설 기능 향상을 꾀하며, 불필요하거나 구조물의 안전에 문제가 있는 도로 및 시설은 철거하는 대안도 모색해보며, 도로시설의 정보화를 통한 유지관리의 효율적 체계를 구축하고 도로교통망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효율적인 망체계를 구축한다.

시 책

- 도로는 새로운 구간을 신설하는 것보다는 도시고속도로의 진출입 연계망 확충 및 개선사업을 통한 기존 도로의 기능을 극대화하는데 전력한다. 결절점 정비를 통한 도시고속도로 및 간선도로 기능 향상시키고 또한, 노후화 되거나 구조물의 안전에 문제가 있는 도로나 고가구조물은 구조를 변경 혹은 철거하거나,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안을 검토한다.
- 도로유자관리의 효율적인 체계구축을 통해 병목구간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도로시설의 첨단정보화를 통해 도로정보 전달체계를 구축한다.

과제2 도로시설의 효율적 공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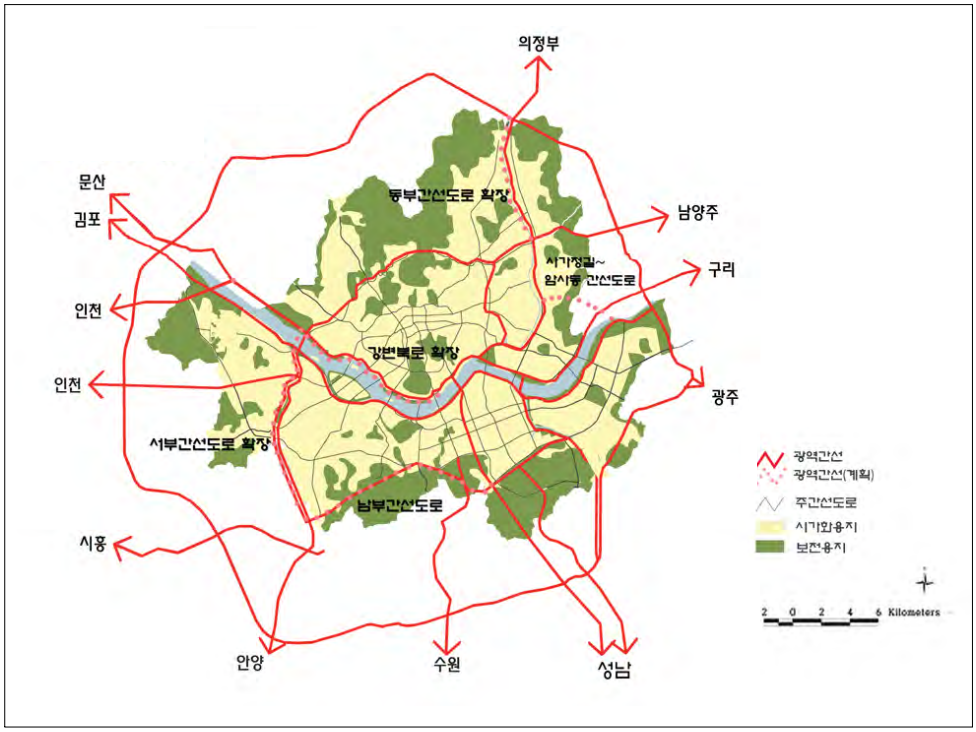
전략

기존 교통시설의 개선을 통해 처리 가능한 교통량과 수요관리를 통해 감축 가능한 교통량 목표치를 사전에 설정하고 부족한 만큼만을 신규시설공급으로 처리하며, 서울통과 교통량의 우회처리를 위한 교통망을 완성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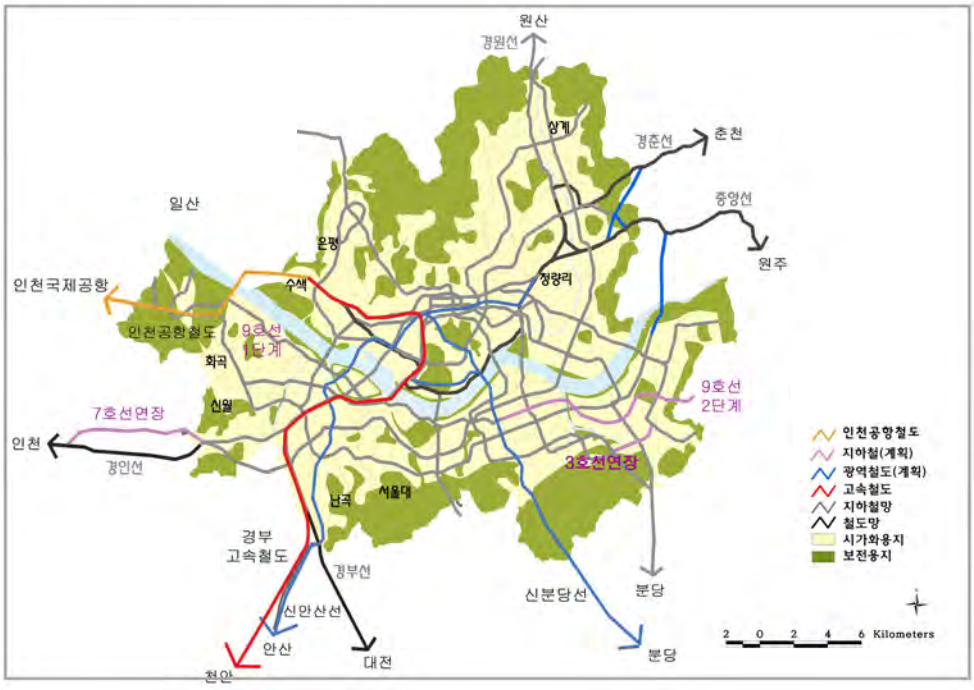
시 책

- 교통관련 계획 수립시 시설공급에 앞서 장래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 교통량에 대해 10～20%는 수요관리 및 시설이용 효율향상을 통해 해결하도록 하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만 신규 시설을 공급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 외곽·내부순환도로에 이어 서울 남부지역의 동서간 통행속도 제고를 위해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를 건설한다.
- 시계간의 유출입은 도시철도망과 버스노선 확충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으로 유도하고, 도로망은 서울시로의 유출입을 우회시킬 수 있는 계획을 구축한다. 단, 시계구간 미연결도로 및 서울 진입도로가 1~2개밖에 없어 상시 정체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대중교통위주의 시스템을 제공하되 부득이한 경우 대체도로 건설 및 확장 계획을 검토하도록 한다.

- 수도권 다핵 분산형 도시공간 구조변화에 대응 가능한 서울시 도로망을 구축한다. 현재의 도심지향 방사형 도로망을 서울시로의 유입을 우회시킬 수 있는 순환격자 형체계로 조기 구축하고, 도시고속도로와 간선도로의 연계성을 높여 전체가로의 소통을 증진시키도록 한다.
- 도로망은 서울시의 골격을 형성할 수 있도록 크게 도시고속도로를 중심으로 하는 상위차원의 광역간선도로 네트워크망과 주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하는 하위차원의 서울시 간선도로 네트워크망으로 나누어 계획하도록 한다.
- 광역간선도로망 계획은 도시기능이 도심에 지나치게 편중되는 것을 막고, 장거리 광역물류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보장하는 환경 친화적 도로체계를 지향하도록 한다. 또한, 통행수요의 균형적 지역배분을 지향하고, 가능한 한 3~4km의 적정간격을 유지하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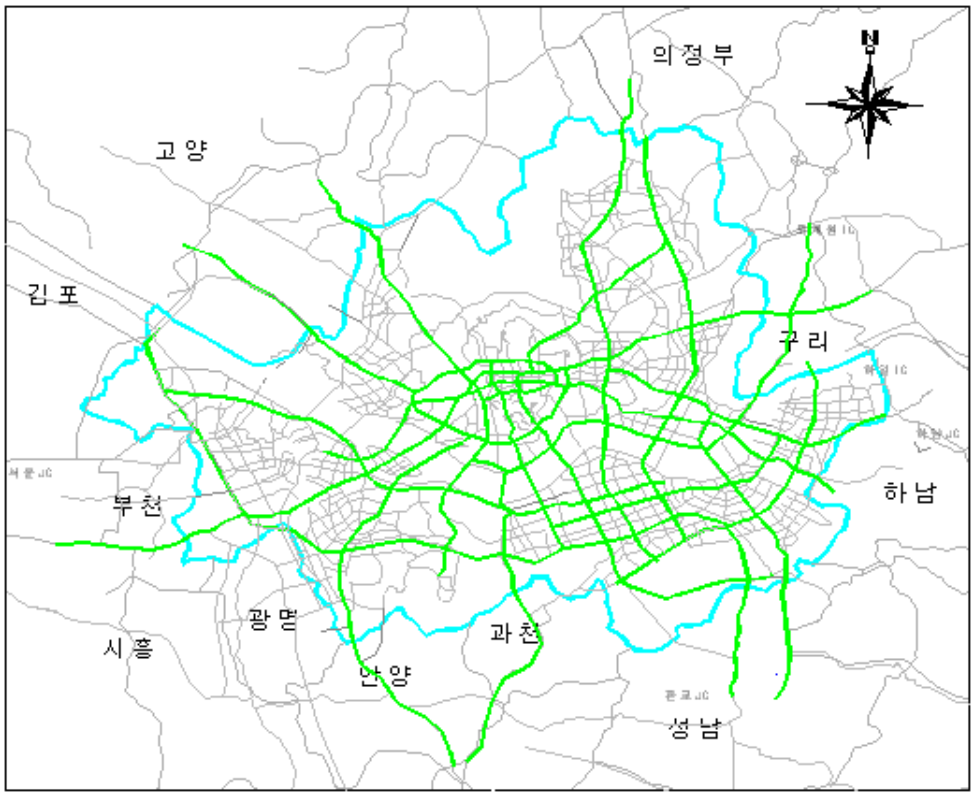


[그림 IV-3] 교통계획 간선도로망도



[그림 IV-4] 교통계획 철도망도

• 서울시 간선도로망 계획은 광역간선도로 네트워크와 연계하여 지역중심과 교통결절점 간을 효율적으로 연결하는 네트워크로 구성하되, 우선 물리적 재원이나 기능적 측면에서 모두 주간선도로 기능을 갖는 서울시 간선도로 네트워크를 설정한 후, 선정된 네트워크를 토대로 미연결구간의 신설과 병목구간의 정비를 통해 간선도로의 연결성을 확보하고, 추가적인 간선도로 신설을 통해 격자형 도로망 체계를 구축하도록 한다.



자료: 건설교통부, 수도권 종합교통체계조사, 2000

[그림 IV-5] 서울시 간선도로 네트워크 노선도

과제3 지역 균형발전 추구

전략

지역의 균형된 발전을 추구하는 교통체계를 구축한다.

시 책

- 강북의 경제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의 투자에 상응하는 대규모의 환경 친화적 투자를 강북에 우선 검토할 필요가 있다.
-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고가구조물에 대하여 획기적인 개선방안이나 지하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도록 한다.
- 한강교량 이용차량 증가로 인한 속도저하 및 교량과 연결된 도시고속도로 진출입 교통정체를 경감시키고 강남·북간 소통을 원활화하기 위한 한강교량확충 및 정비를 시행한다.

과제4 첨단교통기술(ITS)을 통한 지속 가능한 교통시스템 구축

전략

도로교통 기반시설 및 차량에 정보·통신·전자·제어 등을 응용한 첨단교통기술(ITS)을 지속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저비용 고효율의 지속 발전 가능한 교통시스템을 구축한다.

시 책

- 부분적인 ITS도입에서 벗어나 단계별 정책목표에 의한 체계적이며 효율적인 서울시 ITS사업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고, ITS 도입에 따른 교통여건 개선효과 및 편의성을 서울시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한다.
- ITS시설 도입시 교통 제반시설인 도로 및 교통시설 공급계획과 조화와 균형을 이루면서 추진되도록 하고, 교통기술의 개발과 지원, 표준화를 통해 교통시설 투자의 효율화를 도모하도록 한다. 교통 및 전자통신분야의 다양한 기법을 응용하여 도로를 지능화하며, 서울시 주요 간선도로 및 도시고속도로에 대한 실시간 교통상황 모니터링 및 통합교통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이동성을 향상시키고, 교통정체를 최소화한다.
- 주요 도로 및 교통시설물에 대한 운영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교통정체관리, 유고관리(교통사고, 도로공사 등), 유지·보수, 순찰, 견인, 소방, 의료서비스 등을 종합관리하여 도로의 기능을 향상하도록 한다.
- 서울시 종합교통정보센터 구축 및 수도권 종합교통정보센터간 연계체계 구축을 통해 대상 도로상에서 수집된 모든 관련정보를 일괄적으로 관리하고, 신속한 사후조치를 위한 책임 부서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이룩한다.
- 통행자에게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의 최단경로, 소요시간, 주차장 상황 등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첨단 여행자 안내체계를 도입한다. 장대터널, 유료도로 구간 및 상습정체지점에 교통정보시스템을 도입하고 화물운송 및 첨단대중교통정보체계를 통해 대중교통 및 화물교통 운영을 최적화하며, 최대의 이용자 편익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일반 보행자와 장애인을 위한 첨단보행안내체계를 구축하여 보행권을 확보하고, 통행복지를 실현한다.
- 방사형 간선축의 정보화를 적극 추진하고 동시다발보다는 단계별로 추진하되 반드시 평가 후 확대추진하며 발전 계획과 기능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 논스톱 자동 통행료 징수 시스템을 도입하고, 대중교통 통합지불체계를 조속히 구축한다.
- 관, 민간, 학계, 연구소 등이 함께 발전하여 성공 할 수 있는 첨단교통정보사업모델을 구축하고 이를 기초로 정보사업을 추진하도록 한다.
- 자동차 관련기술의 지능화를 통해 환경 친화적인 자동차를 도입하고 차량에 고성능 센서와 자동제어장치 등을 부착하여 운전자동화 및 교통사고예방, 도로소통능력 향상 등을 도모하도록 한다.
- ITS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총괄추진 전담조직을 구성하여 전반적인 사업기획 및 사업추진업무를 수행하며 ITS에 관련된 모든 법규에 대해 세부적이며 구체적인 항목을 수정하고 추가하여 향후 ITS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 서울시 ITS사업의 평가 및 기능개선, 운영 최적화를 위한 전문적인 기획·평가 센터를 설립하고 운영함으로써 기술 축적을 통한 지속적인 개선효과를 창출하여 21세기 첨단교통체계 실현의 기반을 조성한다.

과제5 신호체계 개선 및 전문적 신호관리

전략

신호체계 개선 및 전문적인 신호관리를 통해 기존 교통시설의 운영효율을 극대화하고, 도로망의 교통소통능력을 향상한다.

시 책

- 서울시 도로교통체계 특성에 입각한 교통신호제어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기초로 시스템하드웨어, 교통관리운영, 시스템 지원 및 추진 등으로 나누어 교통신호제어시스템 정비사업을 추진하도록 한다.
- 신호관리요원의 대폭확충과 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확보하고, 경찰서별, 지역별 신호관리 업무를 민간으로 위탁 추진하여 전문적인 신호관리가 유지되도록 한다.

과제6 지속적인 도로교통환경 개선

전략

기존 교통체계개선(TSM)사업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교통체계개선사업의 추진을 통해 교통소통증진, 교통사고 감소 등 지속적인 교통환경 개선을 실현한다.

시 책

- 도시간선도로에 대해 교차로 및 도로구조개선, 신호운영개선, 접근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패키지화하는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한다. 또한, 교통축별 병목, 단절구간 및 정체교차로에 대해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기하구조 개선을 통해 도로교통용량을 지속적으로 증대하도록 한다.
- 도로표지의 단계적 정비를 통해 주행경로에 대한 연계성·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한다. 그리고 교통규제와 표지문안의 일치를 통해 시인성을 확보하고 외국인에게 통용될 수 있는 국제적 기준으로 개선하여 길 찾기 쉬운 도로안내체계를 구축한다.
- 버스노선의 간·지선체계 개편에 따라 지선버스의 운행이 원활하도록 이면도로를 정비한다.
- 간선도로 및 이면도로 일방 통행제를 면밀히 검토하여 교통흐름간의 상충을 최소화하고 도로이용효율을 극대화한다. 또한, 교통사고의 위험율이 높은 이면도로 등에 대해 보행환경개선, 교통안전강화 및 통과교통억제를 목표로 정비를 시행한다. 그리고 주거지 교통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블록단위의 교통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한다.
- TSM 사업에 대한 효과분석을 통해 도출된 결과가 새로운 TSM 사업추진과정에서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사후 평가과정을 체계화한다.
- 통과차량 및 보행자에 대한 배려가 없는 도로점용공사에 대해 도로공사장 교통관리 실천방안을 수립하고 이를 준수할 수 있는 기반 및 환경을 조성하도록 한다.

과제7 통일대비 교통체계 확보

전략

향후 통일시대를 맞아 남북교류 증대를 수용할 수 있는 교통체계 계획을 수립한다.

시 책

- 남북교류 및 통일을 대비하여 남북간 미연결 교통망(도로, 철도)을 정비한다. 이를 기초로 향후 통일을 대비한 수도권 종합교통망을 추진하되, 동북아 교류확대까지 감안한 교통망 계획을 수립하며, 광역적인 도로투자의 경우 서울시를 가능한 우회하도록 노선을 설정한다.

[표 IV-20] 통일대비 단계별 교통망 계획

단 계		계 획
통일전교류단계	교 류 초 기	• 한반도 종합도로망 구상 및 주요노선 구상
	교 류 활성화	• 남북 연계 간선도로망 확충계획 • 북한 경유 동북아 육상교통망 및 노선구상
	교 류 본격화	• 북한지역내 특정투자지역 도로망 정비 및 사업계획 수립 - 노선별 도로의 등급 - 도로시설확충계획
통일후	초 기 (Y+5)	• 통일한반도 도로망 확충 - 간선도로계획 확정 - 남북연계도로계획 확정 • 1, 2단계 사업 실시설계
	중 기 (Y+10)	• 북한지역내 도로망 확충 - 지역내 도로계획 확정 • 3단계 사업 실시설계
	장 기 (Y+10이후)	• 일본, 한반도, 중국 및 러시아를 포함한 종합교통계획 수립

주: Y는 통일이 된 년도

목표3 환경 및 인간 중심적인 교통체계 구현

자동차에서 인간중심의 도시교통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며 무공해 통행수단인 자전거의 생활화를 유도하여 교통난 해소, 대기오염방지 및 시민건강 증진을 도모한다. 차 없는 거리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도심부 보행공간 질적 개선을 통해 안전향상과 자유공간을 확보한다.

과제1 안전하고 접근이 편리한 대중교통 및 보행자 공간 조성

전략

보조간선이하도로는 안전하고 접근이 편리한 대중교통과 보행자중심의 공간으로 정비한다.

시 책

- 교차로 횡단보도의 복원 및 확충을 통해 횡단 보행자사고 비율을 감소시키며, 보행사고 다발지점의 개선을 통해 보행환경의 안전을 제고한다.
- 자동차 위주로 조성되거나 운영되고 있는 교차로와 교통광장의 기하구조를 보행안전을 고려하여 개선한다.
- 지구내 도로의 기능체계를 정립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동네 골목길을 조성한다.
- 보행자안내표지 확대설치 및 안전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를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교통안전을 극대화한다.
- 어린이 보호구역 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어린이의 안전한 통학을 보장한다.

과제2 자전거의 생활화 유도

전략

무공해 교통수단인 자전거의 생활화를 유도하여 교통난 해소, 도시 주차난 완화, 대기오염방지 및 시민건강 증진을 도모한다. 또한 자전거관련 법제도를 정비하고 안전교육을 강화한다.

시 책

-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안전한 자전거이용을 위한 도로나 각종 시설의 정비를 통해, 단거리 교통수단으로써의 자전거를 유효하게 활용한다. 또한, 자전거보유현황 및 이용실태를 파악함으로써 자전거 관련시설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한다.
- 자치구 단위에서 무공해 교통수단으로써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며 효과적인 운행을 도모할 수 있도록 자전거 노선계획을 수립하고, 자전거 간선도로망을 구축한다.
- 자전거 및 지하철의 환승 체계를 지하철역중심으로 정비하여 단거리 교통수요를 흡수하고 대중교통 이용의 증진을 통해 지역 교통난을 완화하도록 한다. 또한, 자전거 대여제 도입을 통해 도심지역 내의 단거리 이동을 보완하고, 대중교통수단의 하나로써 자전거 정착을 유도한다.
- 도심과 주요 한강교량과의 연계체계 구축을 위해 주요 한강 교량부 자전거 연결로 설치 및 자전거 도로 확충·정비를 추진하여 시민의 자전거 이용 및 도심 자전거 접근성 향상을 촉진시킨다.
- 자전거를 위한 관광, 레저, 스포츠코스를 개발하여 자전거이용의 다양화를 촉진하고, 자전거 코스가 주요 근린공원이나 오픈 스페이스로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또한, 자전거 타기 행사 등의 활발한 홍보를 통해 교통수단으로써 자전거 이용을 장려하고, 자전거 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함으로써 시민의 자전거 이용을 보다 편리하게 한다.
- 자전거 관련법체계의 정비를 통해 자전거 위상을 높이고, 이를 기준으로 자전거 통행의 안전확보 및 자전거 주차장을 정비하며 자전거안전교육을 강화한다.
- 주말 등 비첨두 시간대를 중심으로 지하철의 일정부분(1량)에 자전거탑승을 허용하여 자전거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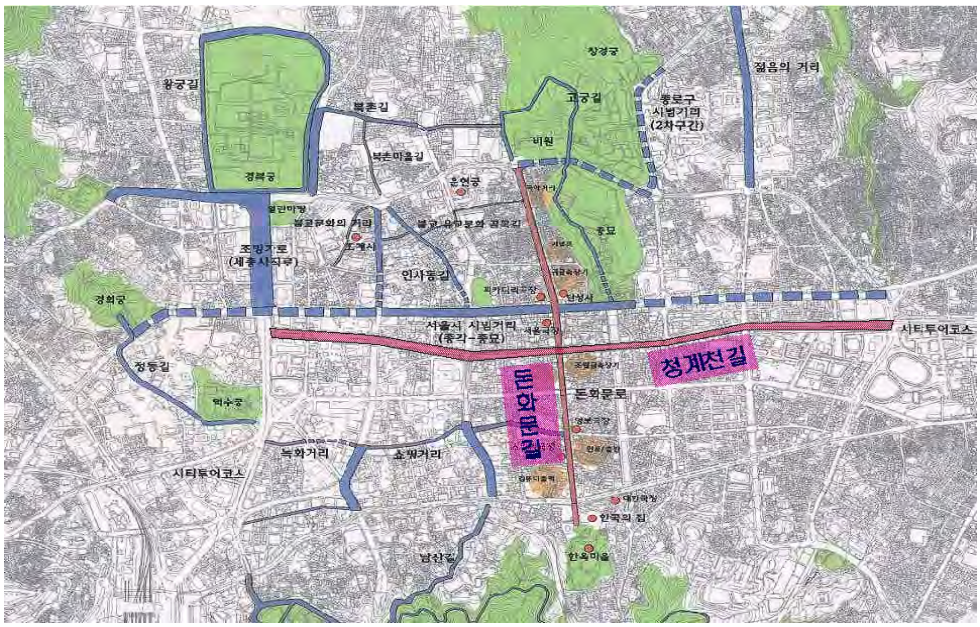
과제3 걷고싶은 거리 조성

전략

돈화문로와 청계천로를 중심 십자축으로 차 없는 거리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도심부 보행공간의 질적 개선을 통해 안전을 향상하고 자유공간을 확보한다.

시 책

- 청계천을 오픈 스페이스화하고 수변 환경 재생을 통해 친수 공간 조성 및 도심을 대표할 수 있는 보행자 공간을 마련한다. 또한, 도심부 교통광장을 시민광장으로 조성하기 위한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실현가능한 곳부터 시민에게 적극 돌려준다.
- 도심의 남북을 가로지르는 돈화문로와 동서를 가로지르는 청계천로를 중심 십자축으로 차 없는 거리를 구성하여 점차적으로 걷고 싶은 거리 조성계획을 추진하고, 보행자 공간의 질적 개선을 통해 보행자의 안전향상과 자유로운 공간을 확보한다.
- 차없는 날(Car-free day)을 추진하여 개인 승용차 이용을 억제함으로써 보행환경 개선 및 대중교통이용 활성화, 청정 대기질의 보전을 도모한다.
- 보행자 중심의 보차 공존형 도로에 대하여 교통 영향평가 후 차량일방통행이 가능하고, 차량통행로를 줄여도 큰 무리가 없는 보행량이 많은 곳에 대해 보행자 중심의 녹화거리 조성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또한, 보도상 주차를 근원적으로 막고, 보행을 방해하는 보도상 각종시설물을 정비한다.



자료 : 서울특별시, 도심부 걷고싶은 도시 만들기 사업, 1999

[그림 IV-5] 도심부 걷고싶은 거리 만들기 구상

과제4 환경, 문화 등과 조화를 이룬 도시교통 추구

전략

환경, 문화 등과 조화로운 교통관리 및 시설공급을 추구한다.

시 책

- 저공해나 무공해차량에 대한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공공교통을 환경 친화적 교통수단으로 전환토록 한다.
- 대기오염종류의 개별지수를 총량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대기오염지수제도의 도입을 통해 농도에 따라 일정기간 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하는 통행규제 도입방안을 모색한다.
- 디젤 가격의 지속적 상향조정으로 휘발류값 보다 높은 가격을 설정하여 대기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하도록 한다. 이와 병행하여 도시에서 No-diesel 운동을 시행하도록 한다.
- 보행환경 시민 감시제 도입을 통해 주택가, 생활도로의 보행환경 개선에 지역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교통사고가해자의 교통안전의식 고취 및 올바른 교통문화의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교통 사고가해자 사회봉사 의무화를 시행한다.
- 외국인 여행 지원시스템 구축을 통해 외국인을 위한 교통안내체계 및 교통여행환경을 개선한다.
- 대중교통과 관련된 건설과 재개발 프로젝트 수행시 프로젝트의 일정부분의 재원은 예술적이고 심미적인 특징을 강화하는데 지원하여 보다 편안하고, 즐겁고, 친숙한 문화공간으로 활용토록 한다.

과제5 교통약자 이동편의 제고

전략

노령자, 장애인 등 보행약자들이 안전하고 쉽게 이용 할 수 있는 보행여건을 조성한다.

시 책

- 주요 이용시설에 장애인 편의 시설 설치 및 무장애 가로 정비를 통해 고령자 및 장애인 등 보행약자들이 쉽게 접근가능하고 편안히 통행하고 활동할 수 있는 보행여건을 조성한다.

- 보행자의 이동편의를 도모하고 단거리 교통수단의 대체방안으로 보행자가 많고, 보행거리가 긴 보도를 대상으로, 특히 환승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곳을 중심으로 Moving Belt를 확충하도록 한다.
- 특히, 공공시설 이용시 고령자 및 장애인의 접근성 및 이동편의를 도모함으로써 고령자와 장애인의 취업활동 및 일상생활의 불편을 해소한다. 고령자 및 시각장애자를 위한 특수보도시설 개발 및 설치를 계획 추진한다.
- 고령자,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구조와 성능을 지닌 저상버스 도입 및 장애인 무료셔틀버스, 장애인 전용 콜택시, 그리고 지하철에서의 안전한 장애인 편의시설(휠체어리프트, 수평자동보드, 엘리베이터) 설치 등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수단을 확대 제공하여 교통복지를 실현한다.

목표 4 효율적인 물류체계의 구축

효율적인 물류운송시스템 구축으로 물류의 원활한 흐름을 보장하며, 물류시설·차량 등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물류정보체계를 구축하여 단말물류 효율성을 높이며 물류의 이동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절감한다.

과제1 물류기반시설의 확충

전략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물류체계개선 및 종합계획을 수립하며 향후 물동량 증가를 대비한 물류기반시설을 확충한다.

시 책

- 알선위주의 화물확보로 인해 대기주차장이 되어버린 화물터미널의 기능을 개선하여 운송업체의 환적기능 및 복합수송기능이 가능하도록 하며, 전국적인 광역물류거점과 도시내 단말물류거점을 연계하는 물류체계를 구축하도록 한다.
- 소비자의 다양한 욕구에 따른 적시수송 수요급증과 전자상거래, 통신판매 활성화에 따른 생활물류 운송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도시내 물류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소화물집배송센터의 건립을 통해 소화물일괄수송의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시민의 소화물 이용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서울시 물류경쟁력을 강화시키도록 한다.

- 물류시설관련 사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및 지원, 기존 화물터미널의 채산성 확보 등 물류수요의 증가 예상시 미리 도시계획으로 물류시설 부지확보 등 물류시설 확충 및 기능개선을 추진하고, 일반시민들의 물류활동에 대한 인식전환과 민간사업자에 의한 물류시설 확충을 유도하도록 한다.

과제2 효율적인 화물수송체계 구축

전략

효율적 물류운송시스템 구축으로 물류의 원활한 흐름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한다.

시 책

- 당면 물류문제 개선 및 물류정책들간의 균형되고 일관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서울시 도시물류기본계획 수립으로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한다. 물류비용이 높은 도심 유통상업지구의 화물자동차에 대한 조업주차개선 등 관련사업을 추진하고, 관리와 단속을 통해 물류비 절감, 교통환경개선, 보행자 통행권 확보를 도모한다.
- 주요 물류시설이 집중된 지구의 관통 또는 인접도로가 물류흐름상 장애가 되는 경우 화물차량에 우선권(물류우선차로제)을 주어 원활한 흐름 도모 및 물류비 감소에 기여한다. 또한, 화물수송차량 및 물동량 집중발생지역에 화물수송 공동화 및 다각화를 도모할 다양한 신물류시스템의 구축 및 도입방안을 모색한다.
- 화물차량의 운행특성을 고려한 적정한 통행제한 기준 및 완화방안을 수립하여 화물차량의 통행제한을 완화함으로써, 고비용·저효율 화물운송에서 저비용·고효율 화물운송을 도모하고, 운행 가능한 노선안내를 통해 원활한 물류활동을 도모한다.
-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제도 미비로 문제가 많은 이륜차 택배업에 대해 관련법제도를 갖추어 운영의 제반여건을 개선해주며, 준법운행을 강화하도록 한다.
- 화물차등록 및 차고지증명의 공동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장기적으로 영업용 화물차량에 대한 차고지 증명제도를 개선하여 화물차량의 불법 노상박차 행위를 일소한다.
- 또한, 대형 건축물내 하역주차시설 설치의무화를 추진하여 조업주차를 건물내로 유도함으로써 도로변 불법 조업행위를 대폭 줄이도록 한다.

과제3 물류정보체계의 구축

전략

물류시설·차량 등의 활용 극대화를 위한 물류정보체계를 구축하여 단말물류의 효율성을 향상시킨다.

시 책

- 물류관련 업무지원과 인터넷 등을 활용한 자료공개 및 정부의 종합물류정보전산망과의 네트워크구축을 위한 물류DB를 지속적으로 구축한다. 또한, 물류DB내에 화물자동차의 주 통행 경로축을 중심으로 타 수송수단과의 연계 및 기존 물류거점을 고려한 화물통행망을 구축하고, 화물자동차 노선관리를 시도하여 화물교통의 원활하고 안전한 수송을 도모하고 도시교통의 혼잡완화를 유도한다.
- 서울시내 화물차량을 대상으로 도심통행제한 및 한강교량의 중차량 통행제한 등을 고려한 최적경로 정보를 제공하여 화물차량의 운영효율화 도모 및 도로혼잡을 완화하고, 각 단위지구간 화물운송안내센터 및 트럭대기 주차장 연계강화를 통한 고객서비스 향상으로 물류경쟁력을 강화한다.
- 물류DB와의 호환통합을 위한 종합물류정보전산망과 지능형교통시스템(ITS)과의 연계구축으로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효율성을 극대화한다.

목표5 합리적인 수요관리 정책수립 및 편리한 주차환경 조성

합리적인 교통수요관리 정책을 시행하고, 도로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은 이용자들에 의해 내부화 시키며, 주차공간 확충을 위한 주차시설공급 및 정책을 추진하고 원인자 부담원칙 및 편리한 주차환경을 조성한다.

과제1 형평성에 기초한 합리적인 교통수요관리 시행

전략

혼잡통행료 징수, 교통혼잡특별관리구역 운영 등의 방법으로 승용차 수요를 관리하고, 도시고속도로를 제외한 일반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이면도로 등은 승용차보다는 대중교통과 인간 중심의 도로가 될 수 있도록 운영한다.

시 책

- 승용차 이용자들에 대해서는 수익자부담의 원칙을 철저하게 적용하여 건설 및 유지관리에 비용이 많이 드는 도시고속도로 통행 등은 유료화로 검토한다. 이러한 도시고속도로 유료화 및 교통관리시스템의 도입으로 도시고속도로의 원활한 소통과 높은 서비스 수준이 유지되도록 한다.
- 혼잡이 심한 도로를 통행할 경우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통행요금을 징수하도록 해야 하나, 혼잡통행료징수 시행 후 교통개선효과가 일시적일 수 있고 비혼잡시 징수에 따른 불만의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보완한 합리적인 방안들을 개발·시행하며, 차후 시계부근 혼잡통행료 징수 여부도 검토하도록 한다.
- 단계적으로 자동차관련 과세를 인하하고 이용과세인 주행세로 통합함으로써 교통혼잡의 주요원인인 차량의 과다한 운행거리 감소, 환경오염저감, 도로의 파손경감 등을 통해 사회비용 감소를 유도한다.

과제2 도심·부도심 주차수요관리 강화

전략

도심·부도심내의 교통혼잡지역에 대한 주차상한제 확대, 주차요금 관리시책의 개선 추진 등을 통해 주차수요관리를 강화한다.

시 책

- 주차상한제를 확대·보완하여 교통혼잡지역에 대해서도 부설주차장 설치제한을 추진하고 블록별 주차수요관리와 병행함으로써 건축물부설주차장의 지역별, 용도별 적용기준을 재정립하고 상한제 시행지역을 확대함으로써 적정 교통수요관리를 도모한다.
- 주요 혼잡지역을 교통혼잡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 검토하고 혼잡지역별로 시책사업을 통합·연계 추진하여 시행효과를 극대화함으로써 관리구역내 적정 교통량 유지로 통행시간을 감축하고, 쾌적한 보행공간을 확보하도록 한다.
- 교통수요 유발밀도에 따른 주차요금체계를 조정하여 환승 주차자와 비환승 주차자간의 주차요금 차등화 시책을 추진한다.
- 강력한 불법주차 단속을 시행하여 유료주차가 손해나는 불합리를 시정하고 도로소통의 원활화를 유도한다.

- 기업체수요관리 참여율을 제고하기 위해 유발부담금경감 방법을 완화하고, 참여도가 높은 기업체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감축프로그램을 개발 추진한다.
- 급격히 발전하는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텔레워킹(원격근무)을 활성화함으로써 통근 및 업무수요를 감축하여 교통혼잡을 완화한다.
- 서울의 적정교통수준을 초과하는 수요를 감축하기 위한 종합적 교통수요관리 시책을 마련하여 각 대안별 효과를 계량화함으로써 맞춤형 시책을 추진한다.

과제3 편리한 주차환경 조성

전략

주차공간 확충을 위한 단순 시설공급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계획적인 주차 시설공급 및 정책을 추진하고 기존 주차제도 보완 및 개선을 통해 편리한 주차환경을 조성한다.

시 책

- 블록별 주차수요관리를 통해 지역별, 용도별 주차현황 및 이용특성을 반영한 주차수요추정으로 다양한 시책을 추진 가능하게 한다.
- 새로운 시설이 도시에 입주했을 때, 주차공간의 수를 엄격히 제한하고, 건물은 대중교통으로 갈아타기 쉬운 곳에 입주하도록 유도한다. 주차시설초과 지역에 대한 감축명령제 실시를 검토하여 도심·부도심의 주차용량을 적절히 조절한다.
- 주택가 주차난 해소 및 승용차 도심진입 억제를 위한 공공주차장 및 민영주차장 건설의 활성화를 유도한다. 또한, 내집 주차장 갖기 운동을 확대하여 주택내 차고지를 확보함으로써 주택가 이면도로의 기능을 회복하고, 차고지 증명제(주차허가제) 도입을 검토하여 자동차 보관책임에 대한 인식전환으로 새로운 자동차 문화를 정착한다.
- 교통혼잡지역의 교통량 감축 및 대중교통 수단으로의 환승을 유도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주차요금체계를 개선한다. 또한, 수익자 부담원칙을 적용, 전 이면도로 주차장을 유료화하거나 주차회원제도의 도입을 추진한다. 그리고 승용차 통행량 감축 및 주차질서 확립을 도모하고, 점차적으로 노상주차장을 제한 축소하여 교통혼잡 지역의 교통수요 감축을 도모한다.

- 주택가 공동 주차장 건설기준 및 방법을 개선하며, 주차질서 정착으로 주차문화 향상 및 주차난 해소를 도모한다.
- 첨단 주차안내 정보시스템 도입을 통한 자동안내정보의 제공 및 고급화로 이용이 편리한 주차환경을 조성하고, 주차공간을 점차적으로 녹지화 된 주차공간으로 전환한다.

목표6 효율적인 교통행정의 구현

새로운 계획관련 시책의 추진을 위해 토지이용과 환경을 통합한 교통계획을 수립하고, 교통행정 통합조정기능 강화와 교통지식의 저변확대를 위한 관련분야, 행정조직, 교육 등 외부여건을 개선한다.

과제1 토지이용과 환경을 통합한 교통계획 수립

전략

새로운 계획관련 시책들의 적기 추진을 위한 토지이용과 환경을 통합한 교통계획을 수립한다.

시 책

- 기존 교통영향평가제도를 환경, 교통, 토지이용과 통합하여 종합적이고 최적화된 영향평가로 개선한다. 또한, 평가제도는 공정성과 전문성에 최우선을 두어 운영함으로써 추후 논란의 여지를 최소화한다.
- 교통량 유발이 큰 대규모 택지, 산업단지, 유통단지, 여가관광시설 등 도시개발사업시 교통시설의 적정공급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시설공급의 시기를 사업준공과 일치하며, 이에 대한 심의 및 승인절차를 강화한다.
- 공간 확보가 어려운 지하철 출입구 및 보행편의시설 설치를 위해 인접건물·토지와 연계개발을 위한 역세권 병행개발제도를 추진한다.
- 대중교통 시설 및 결절점(환승역, 환승센터, 전철역 등) 주변토지의 우선적 개발과 개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과제2 체계적인 서울시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조직체계 구성 및 전문 리서치센터 운영

전략

서울시 교통행정의 통합조정기능을 강화하고, 수도권 광역문제를 체계적으로 다루기 위한 기구를 설립하며, 교통문제해결의 기반자료를 전문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문리서치 센터를 운영한다.

시 책

- 이원화 되어있는 교통관련 권한과 조직체계를 일원화하고 통합조정기능을 강화하며 광역화에 따른 문제해결을 위한 기구설립을 중앙정부와 수도권 지자체간의 긴밀한 협의하에 적극 추진한다.
- IT기술을 활용하여 도로교통 행정업무의 간소화 및 정보화를 적극 추진한다.
- 교통센서스 조사를 정례화하고 센서스전담 조사기구를 지정, 운영토록 추진한다. 이와 병행하여 성공적인 공공투자나 민자유치의 활성화를 위한 전담기구도 설치 운영토록 한다.
- 교통계획·운영정책을 일회성으로 평가하는 것을 지양하고, 과학적이고 지속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모니터링시스템을 조기에 구축하여 활용한다.

과제3 교통지식 저변확대를 위한 외부여건 정비

전략

시민을 대상으로 한 교통관련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계몽하여 바람직한 교통환경 마련을 위한 외부여건을 정비한다.

시 책

-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 홍보, 캠페인 등을 지속적으로 활성화하고, 교통관련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한다.
- 교통관련 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이해와 관심을 끌어올리며, 업무를 의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공무원 교육프로그램을 강화한다.
- 교육부와 협의하여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정기 또는 비정기적인 교통관련 교육을 활성화하도록 한다.

6. 목표별 정책지표

목표1 편리하고 안전한 대중교통체계 구축

[지표 1] 서울시 대중교통 수송분담율 (%)

2000	2005	2010	2015	2020
64(2001)	66	67	68	70

- 대중교통 수송분담율은 버스와 지하철,철도(환승포함)의 합임.
- 「연도별 서울시 교통지표 산출」(서울시, 2005)에서 예측한 장래 서울시 대중교통수송분담률을 토대로 조정함. 이 연구에서는 2020년 서울시 대중교통수송분담률을 67.7%로 예측함.

[지표 2] 수도권 지하철, 철도의 총 연장 (km)

2000	2005	2010	2015	2020
486(2001)	520	590	640	690

- 2001년 현재 수도권 지하철, 철도의 총 연장은 486km이며(지하철 건설본부자료) 대중교통 수송분담율을 높이기 위해 2026년 690km 확보를 2020년에 조기 달성하는 것으로 목표를 제시함.
- 수도권에서 운행되는 지하철, 철도는 서울시 운영구간 286.9km와 철도청 운영구간 177.8km 그리고 인천시 운영구간 21.9km를 합한 총 연장임.

자료 : 서울특별시, 서울도시철도 중장기 기본계획수립보고, 2001

[지표 3] 대중교통 전용몰 (개소)

2000	2005	2010	2015	2020
–	5	15	20	25

- 2020년까지 대중교통 전용몰(자치구당 적어도 1개)의 지속적 설치를 통해 개인 승용차 통행을 억제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며, 보행자의 통행과 활동이 우선하는 가로공간을 지속적으로 조성.
- 시행초기에는 매년 1개소씩 설치, 이후 효과를 점검한 후 매년 2개소로 확대 설치한 후, 2010년 이후에도 매년 1개소씩 계속하여 추진.

자료 :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교통정비중기계획, 2000

[지표 4] 서울시 시내버스의 정시성 (버스가 정시에 도착할 확률, %)

2000	2005	2010	2015	2020
50%(2001)	75%	85%	90%	95%

자료 :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교통정비중기계획, 2000

[지표 5] 서울시 간선 버스 속도 (km/h)

2000	2005	2010	2015	2020
19.1(2001)	34	37	39	40

- 서울시 시내버스 속도는 버스전용차로외의 구간까지 포함하는 버스평균통행속도.
- 서울시 정기속도 조사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시내버스의 속도는 2002년 현재 19.3km/h로 나타났으며, 중앙버스전용차로제 실시 할 때 2006년에는 35km/h가 될 것으로 전망.(비전 서울 2006)

자료 : 서울특별시, 교통통계, 2002

[지표 6] 교통카드 이용율 (%)

2000	2005	2010	2015	2020
52.5(2001)	100	100	100	100

- 버스의 하루 이용객수를 기준으로 한 버스수단의 교통카드 이용율을 의미.
- 2002년 10월을 기준으로 교통카드 이용률은 68%이고 2003년까지 100% 달성 목표
- 교통카드를 통해 요금수수방식을 간소화하고, 교통운영기관의 수입금 투명성을 확보하며, 대중교통 이용자들의 요금부담 경감 및 자가용 승용차 이용의 억제에 기여.

자료 : 서울특별시, 비전 서울 2006 (서울시 시정 4개년 계획), 2002

[지표 7] 서울시내 지하철의 혼잡율 (%)

2000	2005	2010	2015	2020
173(%)	165	150	140	130

- 이 지표는 서울시내 주요 노선·구간에서의 최대 혼잡 1시간의 평균혼잡율(=수송량(실측)/수송능력×100)을 의미.
- 이 지표는 서울시 지하철 8개 노선(2000년은 7개 노선)별 최대 혼잡도의 평균치를 나타냄.
- 통상 도시철도 설계기준은 150% 혼잡도를 적용함.

[지표 8] 서울시 도시철도역의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등의 설치율 (%)

구 분	2000	2005	2010	2015	2020
엘리베이터	21%(2002)	100	100	100	100
에스컬레이터	-	80	90	100	100

- 2002년 현재 엘리베이터 설치는 76개 역사 168대 설치, 2005년 263개 전 역사에 797대 설치.
- 지하철 정거장내 환승거리가 멀고, 승강시설 부족으로 장애인·노약자 등 이용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수평자동보도 등을 설치 운영하도록 함.

자료 : 서울특별시, 비전 서울 2006 (서울시정 4개년 계획), 2002

목표2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도로운용

[지표 9] 서울시 간선도로 총연장 (km)

2000	2005	2010	2015	2020
870(2001)	960	1050	1140	1220

- 서울시 주간선도로와 보조간선도로를 합한 것 중 광역기능이 강한 고규격 주간선도로 8개 노선(시흥대로축, 한강로축, 반포로축, 언주로축, 양재대로~둔촌로축, 남부순환도로축, 천호대로축, 수색로축) 101.5km를 뺀 총 연장을 의미함.
- 서울시 도로정비기본계획에서는 "일반간선도로"라고 명칭함.

자료 : 서울특별시, 서울시도로정비기본계획, 2002

[지표 10] 서울시 도로율 (%)

2000	2005	2010	2015	2020
21.2(2001)	21.91	22.86	23.76	25

- 저렴한 교통투자대안과 교통수요 저감대책을 기초로 미 연결도로망 및 모자라는 교통시설을 보강하여 2020년까지 도로율을 25%까지 확충.
- 도로율 = 도로면적/시가지화면적

자료 : 서울특별시, 교통통계, 2002

[지표 11] 광역간선도로 총연장 (km)

2000	2005	2010	2015	2020
509(2001)	580	650	725	800

- 광역간선도로 총 연장은 서울시 외곽 순환고속도로를 기준으로 도시고속도로 14개 332.6km와 공사중 구간 75.1km 그리고 주간선 도로 중 광역기능이 강한 고규격 8개 노선(시흥대로축, 한강로축, 반포로축, 언주로축, 양재대로~둔촌로축, 남부순환도로축, 천호대로축, 수색로축) 101.5km의 합을 의미함.
- 서울시 도로정비기본계획에서는 "주요간선도로"라고 명칭함.

자료 : 서울특별시, 서울시도로정비기본계획, 2002

[지표 12] 첨단교통관리시스템 도입 도시고속도로 비율 (%)

2000	2005	2010	2015	2020
내부순환로, 올림픽대로	50	80	90	100

- 전체도시고속도로 중 첨단교통관리시스템을 도입한 도시고속도로가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
- 고속도로 이용자들에게 교통소통에 관련된 다양한 교통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교통시설물 이용에 대한 서비스를 개선.
- 2020년까지 점차적으로 서울시 전체 도시고속도로에 첨단교통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교통혼잡 및 유고발생시 고속도로의 진입 교통량을 효과적으로 관리하여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고 교통용량 및 안전성 제고함.

자료 : 서울특별시, 서울시 ITS 사업종합계획, 2000

[지표 13] 간선도로 실시간 신호 시스템 설치비율 (%)

2000	2005	2010	2015	2020
8	35	60	80	95

- 전체간선도로 대비 실시간 신호 시스템이 설치된 간선도로 비율을 의미
- 일본의 경우 실시간 신호 시스템을 도입하여 교통량 및 시간대 대응 신호제어로 통행시간의 26% 단축효과를 경험.
- 현재 추진되고 있는 실시간 신호시스템을 초기에는 국지적으로 설치해가며 기능을 검증 및 개선하고 난 후 확대 설치. 2020년까지 서울시 대부분의 광역 및 도시간선도로에 확장 설치하고, 이에 따른 신호연동화를 통해 통행속도 향상 및 쾌적한 통행서비스를 제공.

자료 : 서울특별시, 서울시 신신호 시스템체계 연구, 2000

목표3 환경 및 인간 중심적인 교통체계 구현

[지표 14] 서울시 간선 버스 속도 (km/h)

2000	2005	2010	2015	2020
217.8(2001)	180	150	125	100

- 이 지표는 차량 1만대당 년간 교통사고 발생건수를 의미.
- 교통단속시스템 개발, 안전시설의 확충 및 교통안전교육의 활성화를 통해 선진국에 비해 최하수준인 서울시 교통사고 건수를 2010년까지 차량 1만대당 150건으로, 2020년까지는 100건 이내로 감소시켜 선진국수준을 달성.

자료 : 서울특별시, 교통통계, 2002

[지표 15] 전체도로에서 보행자전용로가 차지하는 비율 (%)

1997	2000	2005	2010	2015	2020
0.09	0.12	1.5	3	4.5	6

- 보행자위주의 도로비율은 (보행자위주 도로연장(면적)/전체도로연장(면적))×100을 의미.
- 서울시의 1997년 기준 보행자도로의 총연장은 7.1km로 보행자위주의 도로비율을 0.09%로 미미한 실정.
- 2020년까지 보행자전용로의 지속적인 확충을 통해 보행자위주의 도로비율을 6%까지 확보하여 보행자 안전을 위한 보행공간 확보 및 생활환경 보호를 도모.

자료 :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교통정비중기계획, 2000

[지표 16] 자전거의 수단분담율 (%)

2000	2005	2010	2015	2020
0.5	2	3.5	5.5	6

- 서울시 자전거이용 수단분담율은 2000년 현재 약 0.5%로 외국에 비해 매우 낮고, 그 환경도 열악한 수준.
- 무공해 교통수단인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교통정책추진을 통해 2020년까지 6%로 향상하여 교통난 해소, 도시주차난 완화, 대기오염방지 및 시민건강증진 도모.
- 단일수단과 복합수단을 합한값을 전체 수단총합으로 나눈비율.

자료 : 통계청, 자전거 수단분담율 자료, 2000

[지표 17] 보행자 교통사고비율 (%)

1997	2000	2005	2010	2015	2020
52.2	50	40	30	25	20

• 보행자 교통사고비율은 전체 교통사고중에 보행자 교통사고가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며 보행자 안전과 관련된 지표임.
• 서울시 보행자 교통사고 비율을 계속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나, 외국의 10~30%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52.2%).
• 지속적인 보행자 안전시설설치를 통해 50%이상을 차지하는 보행자 교통사고비율을 2020년까지 20% 이내로 저감.
자료 :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교통정비중기계획, 2000

목표4 효율적인 물류체계의 구축

[지표 18] 트럭의 적재 효율 (%)

2000	2005	2010	2015	2020
41(2001)	45	50	55	60

• 이 지표는 서울시내 전일동안 화물자동차의 적재운행시 적재능력에 대한 실제 적재한 중량의 비율에 거리개념을 반영한 지표로써 화물자동차의 적재능력 및 총 운행거리에 대한 통행당 톤-km의 합의 비율.
• 사업용과 비사업용 화물자동차의 적재효율의 평균값을 의미함.
• 물류시설 및 물류운송시스템, 그리고 물류정보체계 개선을 통해 2020년까지 트럭의 적재 효율을 60%까지 지향.
자료 : 건설교통부, 2001년 전국교통DB구축사업 물류현황조사, 2002

목표5 합리적인 수요관리 정책수립 및 편리한 주차환경 조성

[지표 19] 서울시 주택가 주차장 확보율 (%)

2000	2005	2010	2015	2020
76(2001)	88	96.5	100	100

• 이 지표는 자가용대비 주택가 주차장 확보율을 의미.
• 2002년 현재 78.5%에서 2006년 90%, 그리고 2012년까지 주택가 주차장을 100%까지 확보.
자료 : 서울특별시, 비전서울 2006(서울시정4개년계획), 2002

[지표 20] 서울시내 자동차 전일 평균 통행 속도 (km/h)

2000	2005	2010	2015	2020
21.7(2001)	24.5	26	27	28

- 이 지표는 서울시 도로의 혼잡도를 표현하는 지표의 하나로, 서울시에서 매년 정기적으로 조사하는 속도 조사에서 서울시내 주요간선도로를 실제로 주행하여 측정한 속도의 평균치를 기준으로 함.
- 2020년에는 수도권 주요간선도로 등 골격적인 도로 네트워크의 정비나 교통 수요관리(TDM)의 추진에 의해 도로교통의 원활화를 꾀하여, 신호 대기 1회 정도(28km/h)의 정상적인 상태를 목표.
- 이를 통해 시간 손실 등에 의한 경제적 손실을 감소시키고, 연비 향상으로 대기오염 개선 도모.

자료 : 서울특별시, 교통통계, 2002

[지표 21] 서울시 도로연장 대비 불법주차대수 (대/100m)

1998	2000	2005	2010	2015	2020
5.6	5	4	3	2.5	2

- 주차질서 정착 및 단속제도 개선으로 도로연장 100m당 불법주차대수를 2020년까지 2대 이하로 저감.

자료 :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교통정비중기계획, 2000

V. 정보통신계획



1. 현황과 문제점
2. 여건변화 전망
3. 미래상
4. 계획방향
5. 목표체계
6. 목표별 정책지표

1. 현황과 문제점

1) 단위업무 중심의 시스템 구축으로 시스템간 연계 부족 및 업무 비효율성 증대

• 행정업무시스템 현황

- 현재 186종의 행정업무시스템이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개발, 보급되어 본청 및 구청에서 사용중이다. 그 중에서 자동차망, 주민등록망, 부동산망의 3대 국가 기간망과 세무종합시스템, 민원행정시스템 등이 대표적이고 최근에 본청차원에서 전자결재시스템, 전자문서시스템등을 운용하고 있다.
- 중앙정부차원에서 주택건축행정종합시스템(건교부), 시군구 민원행정시스템 21종(행자부)이 개발되어 본청 및 구청에 보급되어 사용중이다.
- 서울시나 중앙정부에서 보급된 시스템이외에도 자치구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많은 행정업무시스템이 부서별로 사용중이다.

• GIS시스템 구축 현황

- 데이터 측면 : 수치지형도(1:1,000, 1:5,000)·편집지적·항공사진 데이터 등의 전산화 작업이 완료되어 사용 중이다.
- 응용프로그램 측면 : 서울시는 시민의 안전과 효율적체계적인 지하시설물 관리를 위해 2001년 말 상하수, 전기, 통신, 가스, 난방 등 지하시설물에 대한 C/S기반의 통합정보시스템과 도로·도시계획·소방방재·새주소 사업등이 완료된 상태이며, 구청차원에서는 교통관리·개별공시지가관리 등의 시스템이 사용중이며, 중앙정부차원에서 토지관리정보체계구축사업이 개발되어 지자체에 보급중이다.

• 시민서비스를 고려한 행정정보화 현황 : 홈페이지 구축을 중심으로

- 서울시 홍보담당관을 중심으로 '서울포커스' 를 운영 중이며, 이를 통한 '민원처리 온라인공개처리방'이 시민서비스를 고려한 행정정보화의 좋은 사례로 꼽히고 있다.
- 정보화기획담당관에서는 서울시의 각 부서별 행정업무를 인터넷 포탈사이트로 수렴하여 시민에게 각종 행정정보를 서비스하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약 80여 개에 이르는 서울시 부서별 홈페이지가 구축 운영 중에 있다
- 인터넷을 통하여 민원서류 온라인 발급, 행정 및 통계자료의 정보제공, 지역생활정보 제공, 주민의견수렴, 정책결정 참여, 게시판운영 등 시민서비스를 고려한 행정정보를 구축운영하고 있다.

• **시스템의 독자적 개발 : 업무담당자의 자료 중복입력**

- 서울시나 중앙정부에서 개발하여 보급하는 시스템과 자치구에서 직접 개발하여 사용하는 시스템간 통합이 고려되지 않는 상황에서 각 업무담당자는 여러 개의 시스템에 중복 입력해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 예: 자치구청의 옥외광고물관리 업무
  - 전산정보관리소의 프로그램을 사용중이다.
  - 문서수발시스템, 서울시 민원행정 및 세외수입시스템에 별도 입력이 필요하다.
  - 향후 보급될 행자부의 시군구행정종합시스템에 유사업무가 존재한다.

- 예: 복지분야
  - 보건복지부에서 보건/복지/의료 등을 통합한 시스템을 개발하여 시군구에 보급할 예정이다.
  - 행자부의 시군구행정종합시스템(복지분야)과 서울시 민원행정시스템에도 유사 항목이 존재한다.
  - 서울시 정보화개발담당관에서는 서울시의 복지정보관리시스템을 별도로 계획 중이다.
  - 자치구청에서는 각 복지분야마다 개별 시스템[1]을 만들어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 **행정업무시스템과 GIS시스템간 연계미흡: 문서 이중 작성**

- 기 구축된 GIS시스템은 도면, 대장, 조서등의 전산화뿐 아니라 기존 행정업무를 지원하는 체계를 포함하고 있다.

- 문서결재나 문서수발 등의 기안체제 중심의 행정업무와 GIS시스템의 문서작성을 별도로 고려하고 있어 같은 사안에 대해 여러 번 문서를 작성해야 한다.

- 예: 도시계획과 관련된 여러 번의 기안문 작성(지역·지구 등의 입안, 결정, 지적, 해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시 첨부되는 내용은 서울시 도시계획정보관리시스템의 대장·조서 형태로 또 다시 입력해야 하기 때문에 전자문서를 이중·삼중으로 작성하게 된다.

• **정보 공유 마인드 부족 : 데이터 공유 미비와 중복구축**

- 기 보급된 시스템 중에는 프로그램개발과 함께 DB가 각 구청에서 유지관리되도록 하는 시스템도 있지만 3대 국가기간망에 속하는 자동차, 부동산, 교통망의 경우에는 자치구청내 소속 부서에 단말기만 설치되어 입력만 가능한 상태이다.

---

1) 강남구의 경우 사회복지과(노인교통수당지급전산화, 노령수당지원전산화, 의료보호대상자자격관리전산화), 가정복지과(부녀교실 및 여성대학 수료자관리), 의약과(결핵환자 전산관리), 보건소(진료환자 및 의료기관 전산관리, 내소환자 처방전 및 의약품 재고관리, 약업소관리, 방문간호대상자 전산관리) 등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음

- 구 입장에서는 귀중한 자료원으로 쓰일 수 있는 자동차DB, 토지DB, 주민DB 등에 전혀 접근할 수 없는 상태이다.
- 구축된 데이터에 대한 정보공유 마인드가 부족하고, 또한 공유가능한 데이터가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데이터가 중복 구축될 가능성이 높다.

• **업무재설계가 뒷받침되지 않는 정보시스템 구축**

- 정보시스템을 발주하는 개별부서나 정보화개발담당관실에서 업무 재설계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기가 실질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기존의 업무 프로세스를 유지한 채로 정보화를 수행하게 되어 효율성이 저하된다.
- 업무전산화와 함께 업무재설계(BPR)가 반드시 필요한 실정이다.

2) 과학적이며 환경친화적 도시관리를 위한 기반자료 구축 미흡

• 서울시의 데이터 구축은 주로 업무에서 발생되는 자료를 전산화하는 정도이며, 최근 NGIS사업의 일환으로 서울시 각종 GIS사업의 근간이 되는 1:1,000, 1:5,000 수치지형도, 지적도, 편집지적 등의 전산화가 완료되었으며, 상수도, 하수도 등 지하시설물 정보, 도시계획자료 등은 각 업무시스템에서 전산화가 완료되었다.

• 업무에서 발생되는 자료외에도 환경친화적이며, 과학적 도시관리를 위해 대도시관리를 위해 필요한 기초자료의 구축이 필요하나, 기반자료구축에 대한 정보화는 이제 막 시작단계이다.

- 비오톱 자료 구축시작, 그러나 대기, 수질, 동식물, 생태, 에너지, 토양등 과학적 도시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정보구축이 미흡하다.

3) 대시민 정보서비스 확대를 위한 노력 필요

•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생활정보화에 대한 정보화수준은 상대적으로 뒤지는 실정이다.

- 사회복지 및 보건분야: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원봉사정보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으며, 강남병원, 보라매병원 등 병원의 업무정보시스템 등 의료분야의 일부분, 장애인복지과가 주체가 되는 장애인편의시설집계시스템, 아동상담소에서 운영하는 보호아동관리, 구청 사회복지과가 시행하는 의료보호대불금관리시스템 등이 업무전산화수준에서 진행된 상태이다.
- 현재 문화정보, 관광정보, 공원안내, 교통정보, 주택종합정보망, 보육정보망 등의 정보화 사업이 구축완료되어 서비스중이다.

- 서울시민의 정보 접근에 대한 노력으로 현재 약 118개의 홈페이지가 운영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많은 홈페이지가 구축될 예정이다. 그러나 부서별 홍보 또는 각 업무부서에서 주관하는 업무에 대한 내용이 아닌 서울시민이 필요로 하는 시민의 시각에서 재조명 될 필요가 있다.
- 홈페이지 검색시 서울시 대표 홈페이지에서 분야별 사이트를 링크할 수 있도록 구축하며, 부서별 홈페이지에 대해서도 컨텐츠를 분석하고 역할 분담을 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공공분야에서 생성되는 정보 가운데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제공한다.

4) 정보화조직 및 기능 / 교육의 문제

- 서울시 정보화사업을 총괄 조정하는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
  - 정보화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중앙정부, 서울시, 각 구청별로 여러 가지 정보화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개별적인 정보화사업은 각 업무부서별로 담당하지만 시스템의 연계, 자료의 공동활용 등과 같은 문제는 특정부서의 업무가 아닌 정보화를 총괄하는 부서에서 관리해야 할 업무이다.
  - 현재 정보화기획단 업무 가운데 2억 이상 예산이 소요되는 정보화사업에 대한 과업지시서 검토 및 감리 업무가 포함되어 있는데, 내용적인 측면에서 실질적인 조정이 될 수 있도록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단위사업별 조정 뿐 아니라 데이터웨어하우스 구축사업 등 적극적으로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구청의 정보화조직 및 기능에 대한 적극적 고려가 필요하다. : 구청 시스템의 통합관리 기능 필요
  - 본청에서 취득되는 대부분의 자료들이 구청에서 입력된 자료가 취합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정보가 체계적으로 유지관리되도록 하는 것은 본청의 정보화를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 서울시나 중앙정부에서 업무시스템을 개발하여 구청에 보급하는 경우 서울시나 중앙정부에서는 분야별 업무분장이 명확하나, 구청에서는 한 부서에 여러 시스템을 사용하게 되는 경우도 많고, 특히 GIS시스템의 경우 여러 부서에서 도형자료를 관리하게 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구청차원에서는 여러 시스템의 자료를 공동 활용할 수 있게 만들고, 자료의 유지관리에 대해서도 일정부서에서 전체적으로 도형자료가 관리되는 체계로의 개편이 필요한 실정이다.
  - 그러나 구청의 정보화조직은 대개 기획예산과 내에서 정보화예산을 관장하는 정도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앞으로 더 많은 복잡한 시스템들이 구청에 도입된다고 볼 때 구청의 정보화조직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할 경우 시스템 도입으

로 인한 효율성 및 효과성을 얻기 힘들 것이다.

- 기존 인력에 대한 정보화 교육 및 홍보가 필요하다.
  - 본청이나 구청에 전담조직을 구성하는 것 외에도 기존 인력에 대한 정보화 교육이 필요하다. 현재전산정보관리소에서 개설되는 교육은 업무가 많은 담당자의 경우 시간을 내기가 어렵고 꼭 교육장을 방문해야하는 문제점이 있어 온라인 교육, 방문교육, 파견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한 실정이다.
  - 정보화의 추진은 중간 관리자 및 정책 결정자 급에서 필요성을 인식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마인드 형성이 매우 중요하다. 정보화에 대한 교육은 실무차원에서의 교육뿐 아니라 중간관리자, 정책 결정자들 차원에서 필요한 교육이 병행되어야 하나 이에 대한 차별화 된 교육은 전혀 없는 상태이다.

5) 정보화 촉진을 위한 제도 및 기반조성 필요

- 구축된 자료에 대한 유지관리가 필요하다.
  - 전산화가 진행되면서 많은 대장, 조서들이 전산형태로 바뀌고, 데이터들이 축척되고 있다. 각 업무담당자들이 기존의 대장, 조서에 대해 책임을 졌던 것 처럼 구축된 데이터나 자료에 대해서도 유지관리의 책임이 부여되어야 하나 현재로써는 감독하는 체계도 없고, 유지관리 업무에 대해서도 선택적으로 생각하여 데이터의 관리가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 정보공개에 대한 규정마련이 필요하다.
  - 전산화가 진행되면서 많은 데이터들이 구축되고 있으나, 정보공개에 대한 규정이 없고, 정보화를 발주한 담당부서에서만 결정하기도 어려운 사항이 발생하고 있다. 정보화기획단내에 정보공개위원회 등을 만들고 구축된 데이터의 공개여부 및 범위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정보화가 진행되면서 순기능 외에도 역기능 문제가 대두되고,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정보화의 역기능 방지를 위해 서울시 정보에 대한 등급마련 및 등급별 공개여부의 선정,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제반 여건조성 등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정비가 필요하다.
  - 정보화의 역기능
    -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문제
    - 컴퓨터범죄 및 해킹문제
    - 정보의 폭발적 공급과잉으로 인하여 질적 저하
    - 과학기술의 비약적 발달로 인한 문화적 지체현상
    - 정보의 소유 및 분배에 있어서의 불균형

• 정보화격차해소 및 정보에의 접근성 제고를 위한 여성, 장애인, 노약자 등을 위한 정보화 교육 프로그램 등 기반조성이 필요하다.

- 정보격차(digital divide) 문제 발생
  - 국내 인터넷 이용은 성, 연령, 직업, 학력, 소득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2005, 한국인터넷백서)
  - 성별 : 남성의 인터넷 이용률: 75.90%, 여성: 64.6%
  - 연령별: 20대: 95.3%, 50대 이상: 31.1%
  - 직업별: 학생: 98.1%, 사무직: 94.3%, 생산관리직: 37.7%
  - 학력별: 대졸이상: 92.7%, 중졸이하: 25%
  - 소득수준별 : 월 소득 400만원 이상 계층: 85.4%, 100만원 미만의 계층: 32.1%
- 계층간 정보이용 능력수준

구 분	전문/관리직	사무직	서비스/판매직	생산관련직	학생	주부	무직/기타
인터넷 이용률	95.5%	94.3%	65.8%	37.7%	98.1%	54.7%	46.3%

자료 : 한국전산원, 2005 한국인터넷백서

2. 여건변화 전망

1) 정보화에 의한 생활환경 변화

- 현재의 정보, 통신, 오락 미디어와 네트워크 기술은 전화, 팩스, TV, VCR, 컴퓨터 등 각종 기기들에 개별적인 목적을 위해 이용되나 향후 정보화의 진전은 개별적인 기기들을 연결하여 언제, 어디서나 접근 가능케 되어 생활패턴을 크게 변화 시킬 것이다.
- 정보화사회에서 평생직장 개념이 쇠퇴하고, 개인의 경쟁력 보유가 중요한 요인이 되면서 평생학습과 각종 교육에 대한 수요가 증대하고 있다. 특히 교육의 문제는 평생교육의 개념으로 바뀌면서 오프라인상에서 뿐 아니라 온라인 교육에 대한 수요가 증대될 것이다.
- 주5일제 근무, 재택근무 기회 확대, 사이버 공간상에서 각종 업무의 실현 등으로 여가·보건·문화·복지 등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온라인 상에서 관련정보 제공에 대한 수요도 증대될 것이다.
- 컴퓨터통신 이용 증대에 따라 가상공동체(virtual community) 또는 전자공동체(electronic community)의 형성이 촉진되고 기술 정보에 대한 공유도 활발히 이루어지게 할 것이다.

2) 인터넷 사용의 증가에 따른 사회여건 변화

- 1990년대 중반부터 일반화되기 시작한 인터넷은 국내 이용자 수가 1994년말 13만 8천명에서 2005년 2월 발표 31,580만명으로 폭발적인 증가를 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향후에도 지속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구 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인터넷 이용률(%)	22.4	44.7	56.6	59.4	65.5	70.2
인터넷 이용자수(명)	9,430	19,040	24,380	26,270	29,220	31,580

자료 : 한국전산원, 2005 한국인터넷백서

• 인터넷의 사용증가는 다양한 형태의 사회 현상을 발생시킬 것이다.

- 행정부분 : 인터넷으로 모든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전자정부(e-Government) 구현이 중요 이슈화 될 것이다.
- 인터넷 쇼핑 :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며, 소비자와 판매자를 직접연결하며, 소비자 측면에서는 다양한 상품정보를 수집판단하고, 구매까지 완결하는 온라인 쇼핑의 비중이 더욱 증대될 것이다.
- 원격진료, 사이버 무역과 사이버 트레이딩, 인터넷 뱅킹 등을 증가시키고, 인터넷 빌링(billing) 서비스 등 생활전반에 걸친 변화가 야기될 것이다.

3) 세계화 추세로써의 전자정부 구현

• 전자정부의 대두로 행정업무 전산화에 따른 업무효율성 및 투명행정 구현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행정체계의 고도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 문서의 생산, 유통, 보관 등 전자문서관리체계가 확립될 수 있고, 공무원 전자카드 및 원격근무 제도가 도입되면 복무관리의 유연성을 제고시킬 수 있다.
- 사이버 정부를 통한 정부접근, 인터넷을 통한 민원처리 등 새로운 서비스 제공수단과 방법이 개발되고, 고객만족을 중시하는 행정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며, 민원처리 온라인 공개시스템 등과 같이 민원처리과정의 공개 및 공공부분 정보공개 등에 따라 투명행정의 구현 가능성이 높아진다.

• 또한 민원행정처리가 편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 행정업무 처리에 있어 인터넷 및 핸드폰 등 가상공간을 통한 민원접수, 처리가 가능하며 시간, 공간의 제한이 없는 민원서비스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 또 전통적인 활자화된 정보제공에서 탈피하여 인터넷, CD-ROM 등 다양한 정보공개 수단을 통하여 각 부처의 입법예고, 고시, 정책해설, 보도자료, 일반행정자료 등 국민이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4) 실물경제에서 디지털 경제체제로의 변화

• 시간과 장소에 구애 없이 거래, 소비자 중심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특성을 갖는 전자상거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전자상거래의 증가는 제조와 유통부분에 서비스 혁명을 초래하고 있으며, 각 기업은 네트워크를 통한 아웃소싱으로 자신의 핵심역량을 강화하고, 사업의 전문화를 꾀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 가정에서도 쉽게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기술들이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집에 앉아서 쉽게 쇼핑을 하거나 은행이나 증권 거래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며 이 서비스들은 앞으로 더욱 값싸고 편리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 전자상거래의 확산과 함께 미래의 경제구조는 본격적인 디지털 경제체제가 전개될 것이며 이 분야의 발전이 국가의 경제성장을 주도하고, 기업문화를 변모시키는 주역이 될 것이다.

[표 V-1] 한국의 전자상거래 총 규모(2004)

구 분	2003년	2004년			전분기 대비증감		전년 동분기 대비증감	
	3/4분기	2/4분기	3/4분기	구성비(%)		증감률(%)		증감률(%)
전자상거래 총규모	55,833	77,661	79,492	100.0	1,831	2.4	23,659	42.4
기업간(B2B)	50,028	67,651	72,349	91.0	4,698	6.9	22,321	44.6
기업과 정부 간(B2G)	4,195	8,279	5,378	6.8	-2,091	-35.0	1,183	28.2
기업과 소비자 간(B2C)	1,517	1,540	1,549	1.9	9	0.6	31	2.1
기 타	92	191	217	0.3	26	13.5	125	135.2

자료 : 통계청, 2004년 3/4분기 전자상거래 통계조사 결과(2005년 1월)

5) 기업간 경쟁의 심화로 인한 산업정보화 기반 조성 요구 증대

• 기업경쟁의 심화 및 산업 정보화 기반조성에 대한 공공부분 지원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 전자상거래의 확대는 가상공간을 통한 물류의 이동을 확대하고 기업의 경영공간을 전세계로 확대시킬 수 있는 계기도 되지만 한편으로는 기업의 경쟁이 한 국가 내에서가 아닌 세계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살아남아야 하는 실정으로 바뀌게 된다.

- 정보화로 인해 기업의 경쟁이 더욱 심화되며, 기업에서는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핵심역량의 개발이 절실해 지는 계기가 될 것이다.

- 기업이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공공부분에서의 행정규제 및 감독등의 철폐, 기업의 인·허가 및 각종 납세관련 신고 업무의 간소화, 나아가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및 정보화에 대한 지원, 산업정보화를 위한 교육훈련기회확대 및 인력양성 등 기업 정보화를 위한 기반조성에 많은 지원이 필요해질 것이다.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보통신 관련 신산업 육성의 필요성이 증대될 것이다.

-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성장산업의 분야도 바뀌고 있다. 전통적인 제조업이 아닌 서비스산업 특히 정보서비스 산업과 정보통신 관련 산업의 성장이 두드러지고 있다.
- 21세기 지식문화시대에 각광받을 산업분야는 정보제공, 정보컨설팅, 정보서비스 분야로 이중에서도 정보서비스 분야가 가장 많이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정보통신관련 산업의 성장세도 두드러지고 있다.

[표 V-2] 정보통신 분야 벤처 창업과 고용의 변화

구 분 \ 연 도	2000	2004	비고
정보통신 벤처 창업	2,305개	3,502개	약 1.5배 증가
정보통신 분야 고용	392,000명	423,360명	약 8% 증가

자료 : 정보화백서, 2005

- 타분야 산업의 성장세가 저조한 반면 정보통신 및 인터넷 신산업의 성장이 두르러진 것은 서울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이 분야에 대한 공공부분에서의 지원과 투자가 계속되어야 서울의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판단할 수 있다.

6) 정보사회의 역기능 대두 및 이에 대한 대처 필요

•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과 컴퓨터 보급의 확대는 긍정적 효과뿐 아니라 다양한 부작용도 대두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보시스템 불법침입 및 파괴,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 개인정보의 오남용, 인터넷을 이용한 각종 범죄, 암호기술의 부정이용, 전자거래의 안전·신뢰성 저해,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한 문화적 지체현상, 정보 소유 및 분배에 있어서의 불균형 등 정보화의 역기능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 이러한 정보화의 역기능을 방지하기 위해 정보보호 정책기능 강화, 법·제도 정비, 정보보호 환경조성, 정보보호 기술 개발 및 산업 육성 등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으며, 정보화 격차문제 해결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의 노력이 요구된다.

3. 미래상

"세계적인 정보도시"

- 서울시 업무의 지속적 정보화추진으로 업무효율성 및 투명성이 향상되어 작고 효율적인 전자정부가 구현되며, 궁극적으로는 공공부분에서 제공하는 대시민정보서비스가 확대되고 기관의 방문 없이도 각종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 시민의 입장에서 요구되는 주거, 복지, 관광, 직업, 교육 등 생활전반에 걸쳐 요구되는 다양한 정보들이 장소와 시간에 구애없이 제공받을 수 있게되며, 공공과 민간의 영역 구분없이 민간과 공공의 협업체계하에서 구현된 정보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 중소기업 정보화추진과 멀티미디어 산업의 종합적인 지원, 새로운 산업의 창출환경 정비 그리고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력양성, 교육, 세제 및 금융지원 기반마련 등으로 디지털 경제체제에서 산업의 정보화·국제화가 급속히 이루어지며, 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된 도시가 구축된다.
- 정보화의 걸림돌이 되는 정보격차해소를 해소하고 정보화정책, 정보화교육, IT전문인력양성 등을 통한 정보화의 기반이 강화된 정보도시로 발전된다.

4. 계획방향

• 서울의 정보화를 행정, 대시민정보서비스, 산업부분 및 정보화 기반조성의 4개 부분으로 나누고, 공공부분에서 할 수 있는 정보화에 초점을 두고, 공공부분 정보화의 궁극적 목표를 대시민정보서비스의 향상 및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조성에 둔다.

• 부분별 정보화의 방향

행정부분정보화

시정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전자행정 구현을 목표로 하며, 기존의 단위업무 전산화에서 전산화의 효과성 향상을 위한 시스템간 연계 및 통합화를 통해 업무의 효율성, 효과성을 강화한다.

대시민 정보서비스 부분

행정업무중심의 소극적 정보화에서 시민중심의 다양한 정보를 발굴하여 다양한 생활정보 및 복지정보 등을 제공하도록 한다.

산업부분 정보화

중소기업의 정보화 및 서울형 신산업의 육성을 지원하며, 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는 기반조성에 역점을 둔다.

정보화기반조성

정보화를 추진할 수 있는 정보통신 네트워크 등의 물리적 기반뿐 아니라, 정보격차 해소, 정보화정책, 정보화교육 등 소프트한 부분의 성장기반 조성을 강조한다.

• 정보화를 추진함에 있어 공공과 민간부분, 본청과 구청간 역할분담 및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정보화가 효율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한다.

5. 목표체계 "세계적인 정보도시"

목표	과제	전략	시책	단기	중장기	정책지표
1. 시정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전자행정 구현	시정 생산성 향상을 위한 행정업무의 지속적 정보화	• 과학적 도시관리를 위한 기반자료 구축	- 도시관리를 위한 기반자료의 지속적 구축		✔	지표 1. 전산화된 시정업무 비율(%)
			- 과학적인 환경관리를 위한 기초자료 구축 및 정보시스템 구축			
		• 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한 관리체계 확립	- 시민의 안전을 고려한 정보체계 구축		✔	
			- 정보시스템을 이용한 도시기반시설물의 과학적 관리			
			- 교통 행정 및 정보관리 종합화고도화			
			- 도시계획 종합관리 체계확립			
			- 주택/건축행정 업무 시스템화			
			- 세무/재산관리시스템 구축			
	업무시스템 연계 및 통합으로 업무의 고도화	• 업무시스템의 고도화 및 투명행정 구현	- 행정업무의 재설계를 통한 시스템구현	✔		
			- 전사적자원관리(ERP) 개념을 도입한 행정업무 전산화			
			- 행정업무의 지식기반시스템 도입 및 확대			
			- 민원처리온라인시스템 확대			
		• 시스템 연계 및 데이터공유환경 구현	- 개별시스템간 연계성 확보	✔		
			- 데이타웨어하우스 구축			
			- 다부서, 다국, 다기관 협력 정보화 프로젝트 활성화			
2. 대시민 서비스를 위한 정보화사업 확대	언제, 어디서나 제공되는 행정서비스 실현 및 시민참여 활성화	• 언제, 어디서나 제공되는 행정서비스 실현	- 부서별 홈페이지 컨텐츠 확충	✔		지표 2. web site를 통해 처리될 수 있는 민원수 지표 3. 시민의견 제안에 대한 채택비율 (%)
			- 서울시 포탈사이트 지속적 보완			
			- 기구축된 행정시스템을 웹버전으로 개편			
			- 무인민원 자동처리시스템 구축 및 민원 Kiosk설치 확대			
		• 양방향의 의사소통이 가능한 시스템 구현	-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및 새로운 정보통신기술 도입을 통한 시민 시정참여 증대	✔		
	다양한 생활정보 및 시민복지 정보제공	• 시민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정보 제공	- 문화/관광 정보제공		✔	
			- 지역경제에 관한 정보 제공			
			- 보건/의료/복지 시스템구축 및 관련정보 제공			
			- 지역교육정보 제공 및 전자도서관 구축			
		• 민간/공공, 본청/구청간 협업체계 구축으로 양질의 서비스 제공	- 대시민 정보제공에 있어 민간과 공공간 역할분담 및 협업체계 구축		✔	
			- 본청과 구청간 역할분담 및 협력체계 구축			

목표	과제	전략	시책	단기	중장기	정책지표
3. 기업의 생산성향상 및 신산업 육성 지원	중소기업의 정보화 촉진	• 중소기업 정보획득력 향상	- 서울시 소재 중소기업정보센터 및 기업정보 공유유통기지 설치운영	✔		
			- 중소기업의 IT투자에 대한 세제상 혜택, 금융지원 강화			
	정보통신산업 및 인터넷 신산업의 육성 및 지원	• 신산업의 창업 및 사업촉진지원체계 마련	- 정보제공사업(IP)과 정보유통사업(ISP) 육성	✔		
			- S/W산업, 문화산업, 유망 정보통신산업선별체계 및 사업촉진 지원체계 정립			
			- 벤처기업 창업지원			
			- 선정기업 관리체계			
	산업정보화를 위한 기반강화	• 정보화 핵심기술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지원	- 산, 학, 연 공동의 핵심기술연구개발센타 및 정보기술지원센타 설립	✔		
			- 정보화 전문인력양성 교육기관 건립			
			- 기술개발에 대한 금융지원확대 및 인센티브 제도 도입			
		• 산업정보화를 촉진할 수 있는 기반마련	- 세제 및 법체제를 정비하여 전자상거래(B2B, B2C)를 활성화		✔	
			- 정보통신산업단지 조성 및 특구화			
4. 정보화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기반조성	정보인프라 구축 확대	• 통신망 교체 및 정보센타 운영	- LAN확장 및 기존 통신망의 광통신으로 교체	✔		지표 4. 서울시 온라인 시민인터넷 교실 지원액 (백만원) 지표 5. 인터넷 사용료 지원 받는 서울시 저소득층 가구비율(%) 지표 6 정보화 소외계층 가구당 PC 총 보급대수
			- 유·무선 인터넷 접속확대			
			- 행정전산망 확대			
			- 통신시장의 자유화를 통해 정보인프라 구축 유도			
			- 서울시 온라인 시민 인터넷 교육지원			
	정보개방에 따른 정보정책 마련	• 정보화를 유도하는 정책적 기반마련	- 전자인증기반 구축 및 정착		✔	
			- 정보공개 및 개인정보보호조례제정			
	정보교육의 확대 및 정보격차해소	• 정보교육확대를 통한 지속적인 정보화기반 마련	- 다양한 정보화교육 프로그램 제공		✔	
			- 모든 학생이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교육환경 구축			
		•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 디지털 기회제공 및 정보격차 해소	✔		

목표1 시정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전자행정 구현

서울시의 가능한 모든 행정업무를 전산화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정착하고, 가능한 모든 정보를 공개하여 시정의 투명성을 확보한다.

과제1 시정 생산성 향상을 위한 행정업무의 지속적 정보화

과학적 도시관리를 위한 기반자료를 지속적으로 구축하고, 서울시의 가능한 모든 행정업무를 전산화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한다.

전략 1. 과학적 도시관리를 위한 기반자료 구축

과학적인 도시관리를 위한 기반자료의 구축 및 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시책 1. 도시관리를 위한 기반자료의 지속적 구축

시책 2. 과학적인 환경관리를 위한 기초자료 구축 및 정보시스템 구축

전략 2. 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한 관리체계 확립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위한 다양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시책 1. 시민의 안전을 고려한 정보체계 구축

시책 2. 정보시스템을 이용한 도시기반시설물의 과학적 관리

시책 3. 교통 행정 및 정보관리 종합화고도화

시책 4. 도시계획 종합관리 체계 확립

시책 5. 주택/건축행정 종합관리 체계 확립

시책 6. 세무/재산관리시스템 구축

과제2 업무시스템 연계 및 통합으로 업무의 고도화

정보화에 적합한 업무재설계 및 행정업무의 지식기반을 도입하여 업무의 고도화를 구현하며, 구축된 시스템의 연계 및 공유환경 구현으로 전산화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증가시킨다.

전략 1. 업무시스템의 고도화 및 투명행정 구현

투명행정을 위해 다양한 업무시스템 구축 및 시스템 확대를 마련한다.

시책 1. 행정업무의 재설계를 통한 시스템 구현

시책 2. 전사적자원관리(ERP) 개념을 도입한 행정업무 전산화

시책 3. 행정업무의 지식기반시스템 도입 및 확대

시책 4. 민원처리온라인시스템 확대

전략 2. 시스템 연계 및 데이터 공유환경 구현

데이터의 공유 및 시스템간의 연계성을 높인다.

시책 1. 개별 시스템간 연계성 확보

시책 2. 데이타웨어하우스 구축

시책 3. 다부서, 다국, 다기관 협력 정보화프로젝트 활성화

목표2 대시민 서비스를 위한 정보화 사업 확대

시민의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행정서비스 실현과 사회전반에 걸친 지역정보를 확대 구축하여 시민복지 증진에 기여한다.

과제1 언제, 어디서나 제공되는 행정서비스 실현 및 시민 참여 활성화

5일제 근무 정착에 따른 행정서비스 공백을 인터넷 및 자동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접근가능한 행정서비스를 실현하며 다각적인 대화창구 개설로 시민참여를 활성화 시킨다.

전략 1. 언제 어디서나 제공되는 행정서비스 실현

시민의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실현한다.

시책 1. 부서별 홈페이지 컨텐츠 확충

시책 2. 서울시 포탈사이트 지속적 보완

시책 3. 기구축된 행정시스템을 웹버전으로 개편

시책 4. 무인민원 자동처리시스템 구축 및 민원 Kiosk 설치 확대

전략 2. 양방향의 의사소통이 가능한 시스템 구현

양방향 의사소통이 가능한 시스템 구현 및 시민의 시정 참여를 확대한다.

시책 1.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및 새로운 정보통신기술 도입을 통한 시민 시정 참여 증대

과제2 다양한 생활정보 및 시민복지 정보 제공

문화/예술/교육/경제 등 사회전반에 걸친 지역정보를 확대 구축하고 서울시 포탈사이트, 자치구별 홈페이지 및 다양한 미디어를 통하여 관련정보를 제공하여 시민복지 증진에 기여한다.

전략 1. 시민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정보 제공

시민에게 필요한 지역정보 및 문화, 관광, 보건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시책 1. 문화/관광 정보 제공

시책 2. 지역경제에 관한 정보 제공

시책 3. 보건/의료/복지의 시스템 구축 및 관련정보 제공

시책 4. 지역교육정보 제공 및 전자도서관 구축

전략 2. 민간/공공, 본청/구청간 협업체계 구축으로 양질의 서비스 제공

양질의 서비스를 위한 협업체계를 구축한다.

시책 1. 대시민 정보제공에 있어 민간과 공공간 역할분담 및 협업체계 구축

시책 2. 본청과 구청간 역할분담 및 협력체계 구축

목표3 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신산업 육성 지원

중소기업의 정보화 촉진과 신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의 사업촉진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서울이 정보통신 산업의 국제적 중심지로 성장하도록 지원한다.

과제1 중소기업의 정보화 촉진

중소기업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해 정보화에 대한 금융지원과 중소기업 정보센타 및 기업정보공유 유통기지를 구축한다.

전략 1. 중소기업 정보획득력 향상

중소기업의 정보화를 촉진시키기 위해 중소기업정보센터 및 정보공유유통기지 등의 설립과 함께 중소기업의 세제혜택 및 금융 지원을 강화한다.

시책 1. 서울시 소재 중소기업정보센터 및 기업정보공유 유통기지 설치 운영

시책 2. 중소기업의 IT투자에 대한 세제상 혜택, 금융지원 강화

과제2 정보통신산업 및 인터넷 신산업의 육성 및 지원

인터넷 신산업 지원 및 유망 정보통신산업 선별체계를 구축하고 창업 및 사업촉진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서울이 신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의 국제적 중심지로 성장하도록 지원한다.

전략 1. 신산업의 창업 및 사업촉진지원체계 마련

신산업의 창업을 활발히 촉진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시책 1. 정보제공사업 (IP)과 정보유통사업(ISP) 육성

시책 2. S/W산업, 문화산업, 유망 정보통신산업 선별체계 및 사업촉진 지원체계 정립

시책 3. 벤처기업 창업지원

시책 4. 선정기업 관리체계

과제3 산업정보화를 위한 기반강화

정보화에 필요한 핵심기술개발 및 정보화 전문인력양성을 지원하며, 세제 및 법체계 정비, 산업단지 조성 등 산업 정보화를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한다.

전략 1. 정보화 핵심기술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지원

핵심기술개발에 필요한 기술지원센타를 설립하고 전문인력양성 기관에 대해 지원한다.

시책 1. 산, 학, 연 공동의 핵심기술연구개발센타 및 정보기술지원센타 설립

시책 2. 정보화 전문인력양성 교육기관 건립

시책 3. 기술개발에 대한 금융지원확대 및 인센티브 제도 도입

전략 2. 산업정보화를 촉진할 수 있는 기반마련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를 통한 산업정화 촉진 및 정보통신 특구화에 따를 정보화 기반을 마련한다.

시책 1. 세제 및 법체제를 정비하여 전자상거래(B2B, B2C)를 활성화

시책 2. 정보통신산업단지 조성 및 특구화

목표4 정보와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기반조성

정보인프라 구축 및 정보화의 정책적 기반 마련과 정보교육의 지속적인 확대를 통하여 누구나 정보에 접근가능한 도시를 건설한다.

과제1 정보인프라 구축 확대

정보인프라 구축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누구나 정보에 접근가능한 도시를 건설한다.

전략 1. 통신망 교체 및 정보센타 운영

통신망의 교체 및 정보센터 운영으로 정보인프라 구축을 확대한다.

시책 1. LAN확장 및 기존 통신망의 광통신으로 교체

시책 2. 유무선 인터넷 접속확대

시책 3. 행정전산망 확대

시책 4. 통신시장의 자유화를 통해 정보인프라 구축 유도

시책 5. 서울시 온라인 시민 인터넷 교육지원

과제2 정보개방에 따른 정보정책 마련

정보화를 유도하는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고 정보화의 역기능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수립한다.

전략 1. 정보화를 유도하는 정책적 기반 마련

정보화 유도를 위한 정책마련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제도도 함께 마련한다.

시책 1. 전자인증기반 구축 및 정착

시책 2. 정보공개 및 개인정보보호조례제정

과제3 정보교육의 확대 및 정보격차 해소

정보교육을 확대하여 지속적인 정보화 기반을 마련하고 정보화수준의 지역별 계층별 연령별 격차를 해소한다.

전략 1. 정보교육 확대를 통한 지속적인 정보화기반 마련

다양한 정보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환경 개선을 통한 지속작인 정보화기반을 마련한다.

시책 1. 다양한 정보화교육 프로그램 제공

시책 2. 모든 학생이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교육환경 구축

전략 2.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정보화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시책 1. 디지털기회제공 및 정보격차 해소

6. 목표별 정책지표

목표1 시정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전자행정 구현

[지표 1] 전산화된 시정업무 비율 (%)

2001	2005	2010	2015	2020
23.2	40.0	50.0	60.0	2020

- 서울시 행정업무 가운데 전산화된 업무의 비율을 계산하고, 이 비율을 지속적으로 높인다.
- 현재 서울시는 총 306 여종의 전산화 필요업무 중 71종의 시정업무가 전산화처리 가능하다.
- 시정업무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전산화 업무비율을 지속적으로 높인다.

목표2 대시민 서비스를 위한 정보화 사업 확대

[지표 2] website를 통해 처리될 수 있는 민원업무 비율 (%)

2003	2005	2010	2015	2020
41.7	60.0	70.0	75.0	80.0

- 민원업무의 편리성과 신속성을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서울시 민원업무가운데 인터넷을 통해 처리될 수 있는 민원업무의 비율을 나타낸다.
- 서울시는 서울시 본청, 산하 사업소, 구청, 동사무소의 전반적인 업무를 전자정부 통합 민원 서비스와 연계하여 총 957여종의 민원 업무중 400여종의 민원에 대하여 온라인 증명민원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cyber.seoul.go.kr)

[지표 3] 시민의견 제안에 대한 채택비율 (%)

2004	2007	2010	2015	2020
3.4	4.0	4.5	5.0	5.5

- 서울시 시민의견의 접수는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가능하며 2003년부터는 온라인 접수건수가 큰폭으로 증가하여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게재로 시정참여 및 관심이 고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2004년 인터넷 접수 555종, 일반접수 30종으로 총 585종이며 이중 채택된 의견은 8건으로 3.4%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목표3 정보화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기반조성

[지표 4] 지역정보센타 설립수 (개소)

구 분	2003	2004	2010	2015	2020
집행액	60	85	150	200	250

[지표 5] 인터넷 사용료 지원받는 저소득층 가구비율 (%)

2002	2005	2010	2015	2020
5.2	10.0	20.0	35.0	50.0

- 서울시는 정보화의 격차해소 및 정보화 기반조성을 위해 서울시 저소득층 각 가구의 인터넷 사용료를 지원해주고 있다.
- 월수입 100만원 미만의 계층을 저소득층으로 분류하였으며 현재 저소득층의 5.2%만이 인터넷 사용요금을 지원 받고 있으므로 향후 모든 저소득층 가정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지표 6] 서울시 저소득층 가구당 PC 지원율 (%)

2002	2005	2010	2015	2020
23.7	35.0	45.0	55.0	65.0

- 정보화의 격차해소 및 정보화기반조성을 위해 서울시 저소득층(월수입 100만원 미만) 각 가구의 PC 보급률을 측정하고 모든 저소득층 가정에 PC가 보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Ⅵ. 산업경제계획



1. 현황과 문제점
2. 여건변화 전망
3. 미래상
4. 계획방향
5. 목표체계
6. 목표별 정책지표

1. 현황과 문제점

1) 서울시 산업의 특성

(1) 서울시 산업구조

• 서울시의 사업체와 종사자

- 2003년 현재 서울시의 사업체수는 748.953개로 전국대비 23.5%, 종사자수는 3,791,943명으로 전국대비 25.7%를 차지하고 있다.
- 이 가운데 3차 산업이 전체 사업체의 90.5%, 종사자의 86.0%를 차지하고 있고, 제조업이 사업체의 9.5%, 종사자의 14.3%를 차지하고 있다.

• 업종별 구조

- 우선 사업체를 기준으로 도매 및 소매업체가 230,204개(30.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숙박 및 음식업점 123,620개(16.5%), 운수업 94,930개(12.7%) 순으로 나타났다.
- 종사자를 기준으로 도매 및 소매업이 779,325명(20.6%)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제조업과 숙박 및 음식업이 각각 529,493명(14.0%), 398,225명(10.5%)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농업 및 임업은 418명(0.01%), 어업은 370명(0.01%), 광업은 600명(0.02%)에 불과하다.
- 이 가운데 사업서비스업(51.8%), 금융보험업(35.5%), 부동산 임대업(33.1%), 통신업(32.8%), 도소매업(30.7%) 등은 전국 대비 종사자의 비중이 30% 이상을 차지하는 집중도가 높은 산업이라 할 수 있다.

[표 Ⅵ-1] 서울시 종 사업체수 및 종사자 수 (단위 : 개, %)

산업분류	전 국		서 울		서울/전국	
	사업체수 (A)	종업원수 (B)	사업체수 (C)	종업원수 (D)	C/A	D/B
1차 산업	2,321 (0.1)	35,204 (0.2)	40 (0.01)	788 (0.02)	1.7	2.2
2차 산업	328,859 (10.3)	3,431,540 (23.3)	71,066 (9.5)	530,093 (14.3)	21.6	15.4
3차 산업	2,856,736 (89.6)	11,262,422 (76.5)	677,847 (90.5)	3,261,062 (86.0)	23.7	28.9
합계	3,187,916 (100.0)	14,729,166 (100.0)	748,953 (100.0)	3,791,943 (100.0)	23.5	25.7

자료 : 통계청,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보고서, 2003

(2) 서울시 산업경제의 서비스화

- 서울시 산업구조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1980년대 이후 2차 산업이 감소하는 것을 대신하여 3차 산업이 크게 성장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 제조업은 1981-91년에 사업체와 종사자 모두 현저히 증가한 반면, 1991-01년에 사업체와 종사자 모두 그 규모와 비중 모두 현저히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 전체적으로, 3차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1981-91년에 1.4% 포인트 증가한 데 이어, 1991-01년에 다시 5% 포인트 증가를 나타내 전체 산업에서 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확대되는 경제의 서비스화 추세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표 VI-2] 서울시 총 사업체수 및 종업원 수 변화추이 (단위 :개, %)

산업분류	1981년		1991년		2001년	
	사업체수	종업원수	사업체수	종업원수	사업체수	종업원수
1차 산업	49 (0.0)	2,015 (0.1)	87 (0.0)	6,063 (0.2)	37 (0.01)	1,538 (0.04)
2차 산업	53,527 (14.9)	725,132 (30.5)	90,509 (15.5)	1,136,899 (30.8)	75,884 (10.5)	599,837 (15.9)
3차 산업	303,059 (83.1)	1,243,677 (69.6)	486,943 (84.5)	2,200,564 (69.3)	647,780 (89.5)	3,162,419 (84.0)

자료 : 서울특별시,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보고서

(3) 서울시 제조업 현황 및 변화추이

- **전통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적 특화**
  - 2003년 현재 제조업의 주요 업종별 사업체와 종사자를 살펴보면, 의복 및 모피제품제조업(31.6%/29.1%),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18.4%/22.3%), 섬유제품 제조업(9.6%/7.3%)이 가장 많은 사업체와 종사자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들 업종은 전국 대비 종사자 비중 또한 매우 높아, 의복 및 모피제품제조업 이 61.8%, 출판·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이 62.9%를 차지하고 있다.
  - 지역경제의 특화를 확인할 수 있는 입지계수의 경우에도 섬유·의류업, 봉제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및 출판·인쇄업 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들 전통 제조업들이 서울시 제조업의 특화 업종임을 확인할 수 있다.

[섬유제품 제조업]

- 섬유제품 제조업은 2003년 현재 서울시 총 사업체의 9.6%(2,044 개), 총 종사자의 9.19%(24,695명)를 차지하고 있으며, 입지계수도 사업체의 경우 1.15, 종사자의 경우 1.07, 부가가치의 경우 1.90로 나타났다.

[봉제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 봉제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3년 현재 사업체의 31.6%(6,351개), 종사자의 29.1%(82,567명)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입지계수의 경우에도 사업체는 4.02 종사자는 5.96, 특히 부가가치는 10.49로 높은 특화도와 함께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업종임을 알 수 있다.

[출판·인쇄업]

- 출판·인쇄업은 2003년 현재 서울시 전체 사업체의 18.4%(3,689개), 종사자의 22.3%(63,341명)를 차지하고 있으며, 입지계수의 경우에도 사업체가 3.49, 종사자가 6.07, 부가가치가 9.50로 나타나, 봉제·의복 및 모피 제조업과 마찬가지로 높은 특화도와 함께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업종이라 할 수 있다.

• 첨단제조업의 낮은 특화도

- 서울시 산업경제의 정보화, 지식기반화 경향에도 불구하고 첨단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으며, 더욱이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 첨단제조업으로 분류되는 컴퓨터 및 사무용 기기 제조업,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은 전체적으로 1980년대와 1990년대 중반과 비교하여 사업체 및 종사자의 특화도가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던 바, 2003년 현재 첨단제조업의 특화는 높지 않은 수준이다.
- 다만, 세부 업종별로 컴퓨터 및 사무용 기기 제조업,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에서는 다소 높은 특화도를 보이고 있다.

[표 VI-3] 서울시 제조업 현황

(단위 : 개, 명, %)

구 분	사업체수	종사자수		
	서울	서울	수도권	전국
음식료품 제조업	421 (2.1)	7,031 (2.5)	60,183 (4.7)	187,693 (6.9)
담배 제조업	0 (0.0)	0 (0.0)	0 (0.0)	3,295 (0.1)
섬유제품제조업	1,932 (9.6)	20,599 (7.3)	71,457 (5.5)	185,188 (6.8)
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6,351 (31.6)	82,567 (29.1)	100,602 (7.8)	133,534 (4.9)
가죽. 가방. 마구류 및 신발 제조업	630 (3.1)	8,733 (3.1)	20,208 (1.6)	38,672 (1.4)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57 (0.3)	436 (0.2)	15,609 (1.2)	27,179 (1.0)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361 (1.8)	4,918 (1.7)	31,652 (2.5)	61,151 (2.2)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3,689 (18.4)	63,341 (22.3)	81,511 (6.3)	100,633 (3.7)
코크스, 석유정제품및 핵연료제조업	0 (0.0)	0 (0.0)	1,125 (0.1)	9,885 (0.4)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133 (0.7)	2,666 (0.9)	56,427 (4.4)	137,164 (5.0)
고무 및 플라스틱제조업	525 (2.6)	6,217 (2.2)	88,460 (6.9)	184,572 (6.7)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20 (0.6)	1,373 (0.5)	26,731 (2.1)	87,787 (3.2)
제 1 차금속산업	101 (0.5)	1,643 (0.6)	31,101 (2.4)	106,471 (3.9)
조립금속제품 제조업	885 (4.4)	7,842 (2.8)	100,973 (7.8)	211,291 (7.7)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	1,316 (6.6)	15,351 (5.4)	147,221 (11.4)	304,917 (11.1)
사무, 계산, 회계용기계제조업	217 (1.1)	5,701 (2.0)	33,546 (2.6)	41,313 (1.5)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화장치 제조업	830 (4.1)	12,524 (4.4)	80,321 (6.2)	148,259 (5.4)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718 (3.6)	22,855 (8.1)	172,973 (13.4)	306,271 (11.2)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621 (3.1)	7,492 (2.6)	27,623 (2.1)	48,717 (1.8)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91 (0.5)	1,309 (0.5)	76,847 (6.0)	220,059 (8.0)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18 (0.1)	174 (0.1)	3,418 (0.3)	101,923 (3.7)
가구 및 기타 제조업	1,050 (5.2)	10,820 (3.8)	59,687 (4.6)	84,340 (3.1)
재생재료가공처리업	5 (0.0)	100 (0.0)	2,313 (0.2)	5,179 (0.2)
계	20,071 (100.0)	283,692 (100.0)	1,289,988 (100.0)	2,735,493 (100.0)

자료 : 통계청, 광업·제조업통계조사보고서, 2003

[표 VI-4] 서울시 주요 제조업의 항목별 입지계수

구 분	1991		1996		2003	
	사업체수	종사자수	사업체수	종사자수	사업체수	종사자수
봉제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2.83	3.58	3.32	4.80	4.02	5.96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2.92	4.70	3.40	5.62	3.49	6.07
첨단제조업	1.01	1.20	0.92	0.97	0.94	0.86
컴퓨터 및 사무용 기기 제조업	1.45	1.73	1.27	1.30	1.68	1.33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1.03	1.15	0.85	0.98	0.78	0.81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0.85	1.11	0.83	0.84	0.83	0.72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1.19	1.56	1.11	1.39	1.28	1.48

자료 : 통계청,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 각년도

• **서울시 제조업의 업종별 변화 추이**

- 1990년대 이후 서울시 제조업의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종사자를 기준으로 의복 및 모피제품제조업,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등 전통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 한편,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과 사무, 계산, 회계용 기계제조업 등은 1990년대 들어 지속적으로 증가를 보인 업종인 반면,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제조업 등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 따라서, 출판·인쇄, 섬유·의복과 같은 전통제조업은 높은 산업적 비중을 보이는 가운데 증가 추세를 보이는 반면, 첨단 제조업은 낮은 비중 속에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VI-5] 서울시 제조업 사업체 변화 추이 (단위 : 명, %)

구 분	1991	1996	1999	2003
음식료품 제조업	17,659 (4.2)	9,423 (2.8)	6,939 (2.6)	6,939 (2.6)
섬유제품 제조업	38,873 (9.3)	29,027 (8.5)	24,695 (9.2)	24,695 (9.2)
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107,880 (25.9)	102,589 (30.1)	76,960 (28.6)	76,960 (28.6)
가죽, 가방, 마구류 및 신발 제조업	14,575 (3.5)	11,849 (3.5)	9,597 (3.6)	9,597 (3.6)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1,970 (0.5)	1,087 (0.3)	627 (0.2)	627 (0.2)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7,432 (1.8)	5,812 (1.7)	5,179 (1.9)	5,179 (1.9)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49,752 (12.0)	61,743 (18.1)	52,979 (19.7)	52,979 (19.7)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9,116 (2.2)	3,582 (1.1)	2,239 (0.8)	2,239 (0.8)
고무 및 플라스틱제조업	12,593 (3.0)	8,088 (2.4)	7,127 (2.7)	7,127 (2.7)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5,041 (1.2)	2,564 (0.8)	1,626 (0.6)	1,626 (0.6)
제 1 차금속산업	3,649 (0.9)	2,346 (0.7)	1,647 (0.6)	1,647 (0.6)
조립금속제품 제조업	14,281 (3.4)	10,783 (3.2)	7,414 (2.8)	7,414 (2.8)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29,634 (7.1)	20,272 (5.9)	15,928 (5.9)	15,928 (5.9)
사무, 계산, 회계용기계 제조업	6,266 (1.5)	4,847 (1.4)	5,050 (1.9)	5,050 (1.9)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화장치 제조업	17,741 (4.3)	16,073 (4.7)	12,616 (4.7)	12,616 (4.7)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43,382 (10.4)	26,960 (7.9)	19,419 (7.2)	19,419 (7.2)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10,123 (2.4)	8,160 (2.4)	6,393 (2.4)	6,393 (2.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3,105 (0.7)	2,542 (0.7)	1,744 (0.6)	1,744 (0.6)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660 (0.2)	359 (0.1)	198 (0.1)	198 (0.1)
가구 및 기타 제조업	22,395 (5.4)	12,811 (3.8)	10,411 (3.9)	10,411 (3.9)
재생재료가공처리업	29 (0.0)	71 (0.0)	32 (0.0)	32 (0.0)
계	416,156 (100.0)	340,988 (100.0)	268,820 (100.0)	268,820 (100.0)

자료 : 통계청, 서울시사업체기초통계조사보고서, 각년도.

[표 VI-6] 서울시 제조업체 종사자수 변화 추이 (단위 : 명, %)

구분	93	99	2003
음 · 식료품 제조업	74,893 (1.88)	45,187 (1.34)	34,097 (0.90)
담배 제조업	7 (0.00)	4 (0.00)	91 90.00)
섬유제품 제조업	99,115 (2.49)	47,736 (1.42)	39,772 (1.05)
봉제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218,186 (5.49)	97,022 (2.88)	106,730 (2.81)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25,771 (0.65)	15,323 (0.46)	13,350 (0.35)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70,74 (0.18)	2,826 (0.08)	2,078 (0.05)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17,470 (0.44)	13,172 (0.39)	9,144 (0.24)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104,660 (1.61)	77,388 (1.52)	82,808 (1.50)
코크스,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제조업	5,176 (0.01)	1,317 (0.00)	3,241 (0.00)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64,608 (0.17)	40,680 (0.12)	36,767 (0.10)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33,280 (0.35)	15,945 (0.28)	13,288 (0.22)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25,029 (0.14)	20,033 (0.10)	7,608 (0.08)
제 1차 금속산업	40,231 (0.13)	11,189 (0.11)	6,393 (0.08)
조립금속제품 제조업	41,041 (1.16)	23,678 (0.87)	22,604 (0.92)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122,495 (1.36)	43,695 (0.89)	30,800 (0.77)
컴퓨터 및 사무용 기기 제조업	19,485 (0.09)	10,642 (0.06)	10,475 (0.06)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제조업	27,338 (0.37)	19,960 (0.36)	22,002 (0.41)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49,193 (0.23)	34,493 (0.20)	42,117 90.21)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15,755 (0.21)	13,090 (0.21)	12,142 (0.2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45,607 (0.11)	3,616 (0.05)	7,262 (0.04)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45,464 (0.03)	9,709 (0.02)	1,487 (0.01)
가구 및 기타 제품 제조업	43,178 (1.07)	2,4994 (0.89)	25,008 (0.79)
재생용 가공원료 생산업	879 (0.02)	415 (0.01)	229 (0.00)
제조업 소계	1,125,935 (13.01)	572,114 (9.90)	529,493 (9.48)
총계	3,974,457 (100)	3,367,652 (100)	3,791,943 (100)

자료 : 통계청, 서울시사업체기초통계조사보고서, 각년도.

• **서울시 제조업의 성장업종과 특화업종**

- 서울시 제조업을 성장률과 특화도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제조업 종사자가 전반적으로 감소하여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 컴퓨터 및 사무용 기기 제조업에서는 유일하게 양의 성장률과 높은 특화도가 나타난다. 이에 반해 인쇄출판 관련업, 섬유의복 관련업, 의료 및 정밀기기제조업에서는 종사자 급감에 따른 음의 성장률과 높은 특화도가 나타난다.

[표 VI-7] 서울 제조업의 성장업종과 특화업종(1999년 종사자 기준)

구 분		특화도	
		특화 업종 (LQ 〉 1)	비특화 업종 (LQ 〈 1)
성장율 (종사자수)	성장 업종	컴퓨터 및 사무용 기기 제조업 (1.01, 30.9%)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화장치 (0.90, 45.5%)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0.08, 31.3%)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0.76, 3.1%)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0.86, 3.7%)
	쇠퇴 업종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5.96, -13.5%) 봉제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5.01, -30.5%)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1.64, -30.1%)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1.38, -31.5%) 가구 및 기타제조업 (1.18, -37.7%) 섬유제품제조업 (1.01, -27.6%)	음식료품 제조업 (0.37, -8.8)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0.22, -22%)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0.16, -13.2%)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0.46, -23.6%)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0.18, -41.8%) 제1차 금속산업 (0.15, -2.8%) 조립금속제품 제조업 (0.40, -14.9%)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 (0.58, -4.2%)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0.02, -44.6%)

자료 : 서울특별시,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 2000

(4) 서울시 서비스업 현황 및 추이

• **서울시 서비스업종의 분포**

- 2003년 현재 서울시 서비스업의 업종별 현황을 종사자별로 살펴보면 도소매·숙박업이 서비스업 전체의 절반 수준인 52.2%를 차지하고 있고,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19.4%), 운수·창고·통신업(14.37%)이 그 뒤를 잇고 있다.
- 한편 서울시의 서비스업의 전국대비 비중은 제조업보다 훨씬 떨어지는 수준인데, 그 순서는 건설업(28.9%), 금융·보험·부동산 사업서비스업(42.9%), 운수·창고·통신업(29.4%)으로 나타난다.

[표 VI-8] 서울시 서비스업 현황 (단위 : 개, 명, %)

구 분	사업체수	종사자수		
	서울	서울	수도권	전국
전기, 가스 수도사업	190 (0.0)	11,451 (0.4)	23,931 (0.4)	62,312 (0.6)
건설업	19,775 (2.9)	206,068 (6.3)	334,391 (5.9)	713,775 (6.3)
도소매 음식숙박업	353,824 (52.2)	1,177,550 (36.1)	2,091,727 (37.0)	4,277,913 (38.0)
운수, 창고 통신업	96,936 (14.3)	293,452 (9.0)	507,584 (9.0)	997,291 (8.9)
금융, 보험, 부동산 사업서비스	75,535 (11.1)	824,120 (25.3)	1,197,388 (21.2)	1,922,282 (17.1)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131,587 (19.4)	748,421 (23.0)	1,501,540 (26.5)	3,288,849 (29.2)
계	677,847 (100.0)	3,261,062 (100.0)	5,656,561 (100.0)	11,262,422 (100.0)

자료 : 서울특별시,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보고서, 20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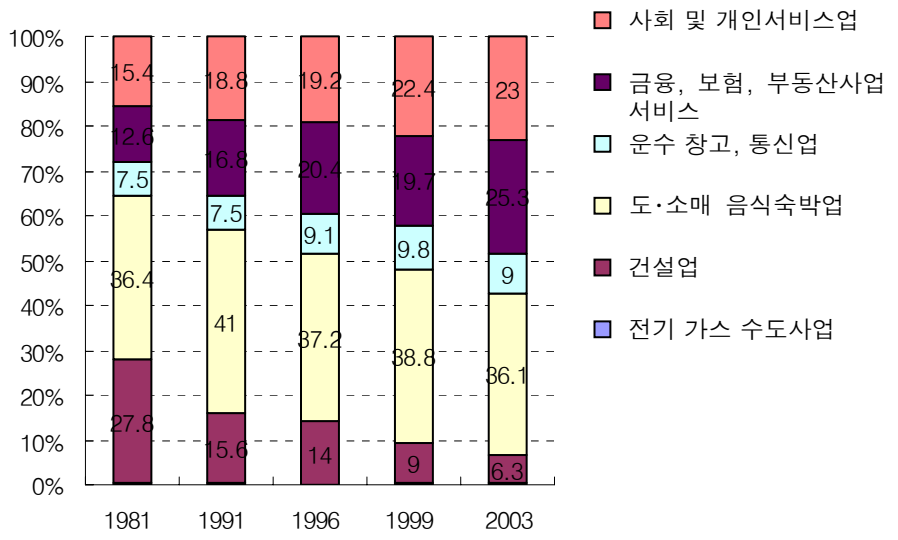
• 네크워크 기능의 서비스업 비중 증대

- 서울시 서비스업 종사자의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1990년대 들어 건설업 종사자는 수나 비중이 급격히 감소한 반면, 사회 및 개인 서비스업 종사자는 수와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여 대조를 보이고 있다.
- 전기·가스·수도업, 도·소매 음식숙박업 등과 같은 전통적 서비스업은 비중의 변화가 거의 없는 반면, 금융·보험·부동산、사업서비스와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은 외환위기의 경제적 여건을 고려하면 종사자 비중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서비스산업의 증가는 수요측면에서 경제성장 및 소득증대에 따라 삶의 질에 대한 요구가 커지면서 서비스산업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었고, 공급측면에서도 산업구조가 복잡·다기화되어 상호 유기적인 산업간 네트워크 형성이 중요해지고 있는 데서 기인한다. 즉, 이러한 네트워크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서비스산업들, 예를 들면 금융·보험, 정보·통신, 유통·물류 등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것이다.
- 또한 과거에는 제조업체들이 기업내에서 해결해 오던 경영컨설팅, 광고, 기획, 엔지니어링, 디자인 등 기업내 각종 비즈니스 활동들을 점차 아웃소싱하는 추세가 증대됨에 따라 새로운 비즈니스관련 업종들이 출현、확대되고 있다.
- 요컨대 서울시의 서비스산업은 전통적인 도·소매 음식숙박업이 주류를 이루는 가운데 금융, 보험, 부동산 사업서비스업과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9] 서울시 서비스업 종사자 변화 추이 (단위 : 명, %)

구 분	1981	1991	1996	1999	2003
전기 가스 수도사업	5,657 (0.3)	7,733 (0.3)	7,424 (0.2)	9,515 (0.3)	11,451 (0.4)
건설업	459,110 (27.8)	386,673 (15.6)	451,439 (14.0)	250,201 (9.0)	206,068 (6.3)
도·소매 음식숙박업	601,069 (36.4)	1,020,538 (41.0)	1,200,814 (37.2)	1,083,243 (38.8)	1,177,550 (36.1)
운수 창고, 통신업	123,806 (7.5)	187,239 (7.5)	292,378 (9.1)	272,802 (9.8)	293,452 (9.0)
금융, 보험, 부동산 사업서비스	208,030 (12.6)	418,063 (16.8)	657,983 (20.4)	551,105 (19.7)	824,120 (25.3)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253,497 (15.4)	466,228 (18.8)	618,242 (19.2)	626,224 (22.4)	748,421 (23.0)
계	1,651,169 (100.0)	2,486,474 (100.0)	3,228,280 (100.0)	2,793,090 (100.0)	3,261,062 (100.0)

자료 : 통계청, 서비스업 조사보고서,1982; 서울특별시,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보고서, 1997, 2000, 2003



[그림 VI-1] 서울시 서비스업 종사자 변화 추이

• **생산자 서비스업의 비중 증대**

- 서울시 전 산업 중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사업서비스업 등 생산자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 우선 사업체수로 살펴보면 1993년 48,340개(7.74%)였던 생산자 서비스업체가 1999년에는 59,821개(8.67%), 다시 2003년에는 75,535개(10.08%)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종사자의 경우에도 1991년 559,347명(14.08%)에서 1999년에는 외환위기에 따른 구조조정으로 인해 551,105명(16.37%)으로 약간 감소하였다가, 다시 2003년 들어 824,120명(21.74%)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 서울시 생산자서비스업을 업종별로 보면, 2003년 현재 종사자를 기준으로 사업지원서비스업이 182,795명(22.18%)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67,380명(20.31%), 부동산업 118,230명(14.35%),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영 관련업 115,562명(14.02%)의 순서를 나타내고 있다.

· 특히,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영 관련업의 경우, 지난 십년동안 급성장을 나타내고 있으며, 서울시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확대되고 있다.

· 컴퓨터시스템 설계 및 자문업 : 93년 사업체 90개(0.01%) 종사자 1,133명(0.03%) ➡ 03년 243개(0.03%), 12,102명(0.32%)

·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및 공급업 : 93년 사업체 536개(0.09%), 종사자 8,341명(0.21%) ➡ 03년 4,993개(0.67%), 83,591명(2.20%)

- 서울의 생산자서비스업의 전국대비 비중 또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사업체를 기준으로 전국 대비 서울의 생산자서비스업 비중이 93년에 33.1%, 2003년에는 32.8%로 전국의 1/3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종사자의 경우에는 전국 대비 서울의 생산자서비스업 비중이 93년 44.5%, 2003년 42.9%로 사업체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 이 가운데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은 사업체(2003년)를 기준으로 전국 대비 66.6%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연구 및 개발업은 34.4%,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은 38.2%를 차지하고 있다.

· 한편, 종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더 높은데,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이 77.3%를 차지하고 있고, 이외에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이 55.9%,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이 49.4%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의 비중 증대

- 서울시 전체 산업 중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의 비중 또한 점차 증가하고 있다.

- 1993년 103,196개이던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사업체는 1999년에 121,928개로, 다시 2003년에는 131,587개로 증가하였고, 서울시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각각 16.5%, 17.7%, 17.6%로 증가하였다.

- 종사자의 경우에도 93년 562,253명, 99년 626,224명에서, 다시 2003년 748,421명으로 증가하였고, 그 비중 또한 각각 14.1%, 18.6%, 19.7%로 증가하였다.

-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가운데 특히 사회복지사업은 1993년 10,387명에서 2003년에는 22,537명으로 10년간 약 2.2배가 증가했으며, 영화, 방송 및 공연산업도 같은 기간 동안 19,564명에서 32,312명으로 1.6배 정도 증가하였다.

2) 서울시 산업입지의 현황과 문제점

(1) 서울시 산업입지의 주요 현황

• 권역별 집적의 주요 특성

- 서울시 제조업의 권역별 주요 업종을 살펴보면 사업체를 기준으로 도심권과 동북권에는 출판·인쇄업, 섬유·모피제품제조업이, 서북권에는 비금속 광물제품이, 구로구와 금천구가 포함된 서남권에는 제1차 금속산업, 음식료품 제조업이, 강남구와 서초구가 포함되어 있는 동남권에는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과 같은 정보통신산업이 집중되어 있다.
- 서울시 서비스업의 권역별 특징을 종사자수 기준으로 살펴보면 도심권에는 금융보험업, 동북권에는 행정·국방 및 교육서비스, 서남권에는 운수업, 동남권에는 건설업, 사업서비스업 등이 특화되어 있다. 특히 동남권에는 도·소매업, 숙박·음식업 등의 전통 서비스업뿐만 아니라 통신업, 사업서비스, 오락·문화 등과 같은 새로운 서비스업이 집중되어 있다.

[표 VI-10] 서울시 권역별 주요 업종

구 분	주요 업종	
	제조업	서비스업
도심권	출판·인쇄업,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제조업	금융보험업(29.2%)
동북권	섬유·제품제조업, 가죽, 가방, 마구류 및 신발제조업	행정·국방(24.9%),교육서비스(31.9%), 공공 및 개인서비스(26.8%)
서북권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없음
서남권	제1차 금속산업, 음식료품 제조업	운수업(30.2%)
동남권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제조업, 비금속 광물제품제조업	전기·가스(35.2%), 건설업(43.6%), 도·소매업(29.9%), 숙박·음식업(26.0%), 통신업(35.0%), 사업서비스(49.7%), 보건·복지(27.4%), 오락·문화(28.9%)

자료 : 서울특별시,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보고서, 2000
서울특별시, 광공업 통계조사보고서, 2000



[그림 VI-2] 서울시 산업집적지 현황도

• **서울시 제조업의 지역별 특성**

- 서울시 구별 제조업의 특화산업은 권역별 주요 업종과 유사하다. 하지만 구별 성장업종과 쇠퇴업종의 경우 권역별로 다른 특징이 나타나고 있다.
- 성장업종을 종사자 기준으로 살펴보면 도심권은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동북권은 비금속광물, 출판·인쇄업, 서북권은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고무 및 플라스틱, 서남권은 섬유제품, 제1차 금속제품, 동남권은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인 것으로 나타났다.
- 쇠퇴업종을 살펴보면 도심권은 목재 및 나무제품, 동북권은 화합물 및 화학제품, 서북권은 제1차 금속산업, 서남권은 화합물 및 화학제품, 동남권은 제1차 금속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 **서울시 자치구별 제조업 특화**

- 서울시 제조업 업종별 지역특화도를 종사자수 기준으로 살펴보면 출판·인쇄업은 중구, 종로구, 마포구에, 의복 및 모피제품은 중랑구, 동대문구, 성북구에, 섬유제품은 동대문구, 도봉구, 영등포구에, 컴퓨터 및 사무용 기기는 구로구, 금천구, 성동구에,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는 금천구, 성동구, 강남구에, 가죽가방 및 신발제조업은 성동구, 성북구, 금천구에, 가구 및 제조업은 성동구, 금천구, 종로구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11] 서울시 제조업 업종별 지역특화

구 분	지 역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복제업	중구 (32.3% : 을지로3,4,5가동, 황희동, 명동, 필동) 종로구 (13.4% : 종로1,2,3,4가동, 사직동) 마포구 (8.6%)
의복 및 모피제품	중랑구 (10.3% : 중화제2동) 동대문구 (6.9% : 장안제1동) 성북구 (5.9%)
섬유제품	동대문구 (7.3% : 장안제1동, 장안제3동) 도봉구 (7.1%) 마포구 (5.7% : 공덕제2동)
컴퓨터 및 사무용기기	구로구 (20.9% : 구로제3동) 금천구 (17.3% : 가산동) 성동구 (15.8% : 성수2가제3동)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금천구 (14.7% : 가산동,독산제1동) 성동구 (12.7% : 성수2가제3동) 강남구 (8.1% : 논현제2동)
가죽가방 및 신발제조업	성동구 (25.1% : 성수1가제2동,성수2가제3동,성수2가제1동,성수1가제1동) 성북구 (10.2% : 장위제3동) 송파구 (8.2%)
가구 및 기타제조업	성동구 (9.7% : 성수2가제3동) 강동구 (9.7%) 금천구 (8.9% : 가산동,독산제1동)

자료 : 서울특별시,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 2000

[표 VI-12] 서울시 구별 제조업 특화산업 현황

구 분	내 용
종 로 구	출판·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3.48), 가구 및 기타 제조업 (1.36)
중 구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3.35)
용 산 구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5.27),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2.6), 기타전기기계 및 전기변화장치 제조업 (1.39)
성 동 구	가죽, 가방, 마구류 및 신발 제조업 (2.74), 조립금속제품 제조업 (1.91)
동대문구	섬유제품제조업 (1.85), 봉제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1.76)
중 랑 구	봉제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2.39), 섬유제품제조업 (1.17)
성 북 구	가죽, 가방, 마구류 및 신발제조업 (3.3), 봉제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1.91), 섬유제품제조업 (1.64)
도 봉 구	섬유제품제조업 (3.35),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3.28), 음식료품제조업 (2.04)
노 원 구	섬유제품제조업 (2.52),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2.26)
은 평 구	목재 및 나무제품제조업 (7.25),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5.65), 섬유제품제조업 (1.29)
서대문구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2.45), 가죽, 가방, 마구류 및 신발제조업 (1.28)
마 포 구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4.29),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2.15), 섬유제품제조업 (1.42)
양 천 구	가죽, 가방, 마구류 및 신발제조업 (1.78)
강 서 구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3.78), 음식료제조업 (3.72),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제조업 (2.5)
구 로 구	제1차 금속산업 (4.69), 기타운송장비 제조업 (4.16), 컴퓨터 및 사무용기기제조업 (4.01)
영등포구	음식료품제조업 (5.9),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 (2.75)
동 작 구	음식료품제조업 (2.15),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1.7)
관 악 구	봉제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1.53), 섬유제품제조업 (1.39)
서 초 구	컴퓨터 및 사무용 기기제조업 (3.12),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2.83)
강 남 구	비금속 광물제품제조업 (2.19), 컴퓨터 및 사무용 기기제조업 (1.86)
송 파 구	가죽, 가방, 마구류 및 신발제조업 (3.49), 비금속 광물제품제조업 (3.26), 음식료품제조업 (2.43)
강 동 구	가구 및 기타제조업 (4.13), 가죽, 가방, 마구류 및 신발제조업 (2.14)
광 진 구	기타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제조업 (1.81), 섬유제품제조업 (1.78)
강 북 구	섬유제품제조업 (2.18), 가죽, 가방, 마구류 및 신발제조업 (2.03)
금 천 구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제조업 (2.73), 제1차 금속산업 (2.71)

주 : 수치가 1이상 업종 가운데 대표적인 업종으로, ( )안은 입지계수임.
자료 : 서울특별시,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 2000

(2) 서울시 권역별 고용중심지 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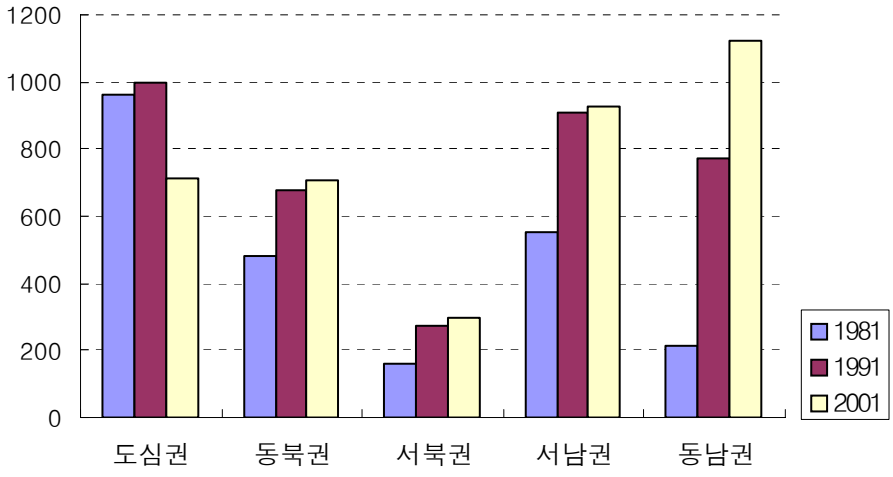
- 제조업의 쇠퇴, 신산업의 등장과 같은 산업구조의 변화는 서울의 고용중심지를 크게 변화시키고 있다.
- 권역별로 볼 때 도심지역은 1981년 현재 최대의 고용중심지였으나, 2001년에는 동남권(29.9%), 서남권(24.6%)에 이어 제3의 고용중심지로 전락하였다.
  - 구체적으로 도심지역은 1981-91년 동안에는 약 3만 6천명의 고용이 증가했으나, 1991-2001년 동안에는 약 28만명의 고용이 감소하였다.
  - 한편 1991년 이후 동남권은 35만명의 고용이 증가하여(45% 증가), 서울시 권역 중 최대의 고용중심지로 부상하였다.

[표 VI-13] 서울시 권역별 종사자수 (단위 : 명)

	종사자수 (2001)	종사자비중(%)		종사자수 증가량(명)		종사자수 증가율(%)	
		1981	2001	81-91	91-00	81-91	91-01
수 도 권	7,014,167	(100.0)	(100.0)	2,462,401	885,330	74.4	15.3
서 울 시	3,763,794	(71.9)100.0	(53.7)100.0	1,249,897	134,362	52.5	3.7
도 심 권	711,696	40.54	18.9	36,052	-289,087	3.7	-28.9
동 북 권	706,043	20.23	18.8	193,671	31,066	40.2	4.6
서 북 권	294,205	6.82	7.8	110,728	21,252	68.3	7.8
서 남 권	926,230	23.34	24.6	352,345	18,61881	63.5	2.1
동 남 권	1,125,620	9.08	29.9	557,101	352,513	257.9	45.6

주 : ( )안은 수도권 비중을 나타냄
자료 : 통계청, 사업체기초통계조사, 각년도

(단위 : 천명)



[그림 VI-3] 서울시 권역별 종사자 수

(3) 서울시 산업입지를 둘러싼 문제점

• 권역별 역할 혼재에 따른 사회적 비용 증가

- 1980년대 이후 도심지역은 쇠퇴한 반면, 강남지역이 급성장함에 따라 산업공간의 권역별 분담이 크게 변화해왔다.
- 강남지역으로 업무공간이 집중되면서 도로, 통신시설 등 기반시설이 과도하게 사용되고 각종 혼잡이 유발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임대료 상승은 기업의 생산성 약화에 주된 원인으로 작용한다. 또한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한 급격한 개발은 직주 불일치와 통근거리 원격화를 유발하는 등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고 있다.
- 도심지역은 국가중추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접근성이 가장 용이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위상에 맞는 역할을 담당하지 못하고 있다.

• 신산업을 수용할 수 있는 산업공간의 부족

- IT산업, 문화산업, 미디어&엔터테인먼트 산업 등 신산업은 기존 업무공간과는 상이한 업무공간을 요청하고 있다.
- 최근 국제적으로 생명공학과 유전자기술을 바탕으로 바이오산업이 출현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중장기적으로 이들 산업의 급속한 성장을 수용할 수 있는 적절한 사업공간 조성도 체계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 업무기능과 생산기능, 연구개발기능, 여가기능 등을 복합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신산업형 업무공간에 대한 지원이 부재하다.

• 기존 산업공간의 재활용 문제

- 산업구조가 지속적으로 변화하면서 기존 산업공간을 새로운 산업수요에 맞게 재활용하거나 개조하여 활용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나, 새로운 산업유형에 적합한 기 업무공간의 재활용을 촉진하는 효과적인 지원체계가 없기 때문에 업무공간의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다.
- 공장이전적지는 새로운 유형의 제조업을 수용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주로 아파트 등 주거용지로 개발되어 왔다.

• 도시형 제조업을 수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부재

- 서울에 입지하였던 제조업체들이 수도권을 포함한 외곽지역으로 분산함에 따라 서울의 제조업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도심업무기능과의 연계가 필수적인 신산업의 제조기능의 도시외곽 이전은 도시경쟁력 약화의 원인이 될 가능성이 크다.
- 외곽유출 제조업 중에는 서울에서 수용가능한 도시형 제조업이 있으나, 공장 및

제조장에 대해 획일적인 규제를 적용하여 이들을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

- 일부 도시형 제조업은 대량생산공장과는 달리 업무, 유통공간과 상충하지 않고 보완적인 경우가 많으므로, 공업·유통·업무공간이 복합적으로 입지하여 기획, 생산, 판매 기능이 결합될 수 있도록 입지규제 완화가 필요하다.

• 주거지역내 소규모 영세사업체 입지로 인한 주거환경의 악화

- 도시내 소규모 노동집약적 영세제조업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을 제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부재하다.
- 영세제조업은 미숙련 노동력을 이용하고 임대료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일반주거지역에 입지하고 있는데, 이는 주거지역의 쾌적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3) 서울시 고용구조의 특성과 문제점

(1) 서울시 고용현황

• 서울시 인구추이 변화

- 서울시의 인구는 91년 1천4십6만여명에서 96년 1천4십7만명으로 최고조에 달했다가 2003년 1천2십8만여명으로 다시 감소하여 1991-2003년 동안 전체적으로 소폭 감소하였다.
- 이에 따라 전국 대비 서울시 인구 비중도 1991년 24.2%에서 2003년 21.1%로 감소하고 있다.

[표 VI-14] 서울시 인구추이 **(단위 : 명, %)**

구 분	1991	1993	1996	1999	2003
전국	43,295,704	45,077,487	46,433,920	47,542,573	48,823,837
서울특별시	10,461,122	10,925,464	10,469,852	10,321,449	10,276,968
서울/전국	24.16	24.24	22.55	21.71	21.05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 인구연보, 각년도.

• 서울시 연령별 인구구조 및 추이변화

- 연령별 인구구조를 살펴보면, 인구의 고령화 추세가 강화되고 있는 바, 14세 이하 인구의 비중은 1991년에 24.02%에서 2003년 17.56%로 감소한 반면, 65세 이상 인구는 91년 3.62%에서 2003년 6.36%로 증가하였다.
- 경제활동인구인 15세 이상 65세 미만 인구의 경우에는 지난 10여년간 7백만명 이상을 유지하고 있으며, 그 비중 또한 1991년 67.7%에서 2003년 76.08%로 다소간 증가를 보이고 있다.

[표 VI-15] 서울시 노동연령 인구추이 (단위 : 명, %)

노동연령인구구조	1991	1993	1996	1999	2003
0-14세	2,512,517 (24.02)	2,466,557 (22.65)	2,139,204 (20.53)	1,935,138 (18.85)	1,786,918 (17.56)
15-65세	7,083,637 (67.71)	7,978,665 (73.21)	7,811,106 (74.98)	7,800,495 (76.00)	7,740,259 (76.08)
65세이상	378,172 (3.62)	444,277 (4.08)	467,766 (4.49)	528,627 (5.15)	646,909 (6.36)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 인구연보, 각년도

- 경제활동인구, 경제활동참가율, 취업인구, 취업율 등 경제활동 참가 정도를 나타내는 각종 지표는 1990년대 중반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외환위기 이후 감소하였다가 최근 다시 증가를 나타내고 있다.
- 실제, 취업인구는 1996년에 15세 이상의 인구 가운데 63.5%인 5백2십만 명의 경제활동인구 가운데 5백만명이 취업하여 97.6%의 취업률을 보이던 고용상황은 99년 경제활동인구와 취업인구 각각 4백8십만명, 4백5십만명으로 감소하였다가, 2003년 들어 다시 경제활동인구와 취업인구 모두 5백만명, 4백8십만명으로 증가를 나타냈다.

[표 VI-16] 서울시 경제활동 추이 (단위 : 천명, %)

구 분	1991	1993	1996	1999	2003
경제활동인구	4,335	4,399	5,200	4,793	4,977
경제활동참가율	61.2	61.8	63.5	60.9	62.0
취업인구	4,188	4,249	5,073	4,463	4,753
취업율	96.6	96.6	97.6	93.1	95.5
실업률	3.4	3.4	2.4	6.9	4.5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 인구연보, 각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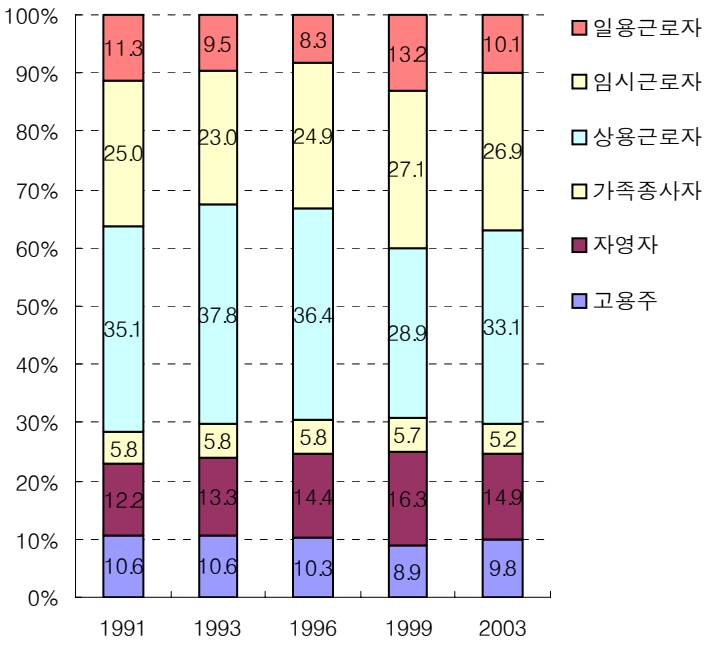
(2) 고용구조 양극화의 심화

• 서울시 종사자지위별 추이를 살펴보면 비임금근로자는 다소 증가하고 있는 반면, 임금근로자는 점차 감소하고 있다. 특히 임금근로자 가운데 상용근로자는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 임시 및 일용근로자는 점차 증가하고 있다.

[표 VI-17] 서울시 종사자 지위별 추이 (단위 : 천명, %)

구분 \ 년도	1991	1993	1996	1999	2003
비임금근로자	1,306 (28.59)	1,386 (29.74)	1,492 (30.46)	1,376 (30.83)	1,420 (29.9)
자영업주	1,042	1,113	1,209	1,122	1,173
고용주	485	495	504	396	466
자영자	557	618	705	726	707
가족종사자	263	272	284	255	247
임금근로자	3,262 (71.41)	3,275 (70.26)	3,406 (69.64)	3,087 (69.17)	3,333 (70.1)
상시근로자	2,744	2,834	3,001	2,500	2,853
상용근로자	1,602	1,761	1,782	1,291	1,572
임시근로자	1,142	1,073	1,219	1,209	1,280
일용근로자	518	441	405	587	480
전 체	4,568 (100.0)	4,661 (100.0)	4,898 (100.0)	4,463 (100.0)	4753 (100.0)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 인구연보, 각년도



[그림 VI-4] 서울시 종사자 지위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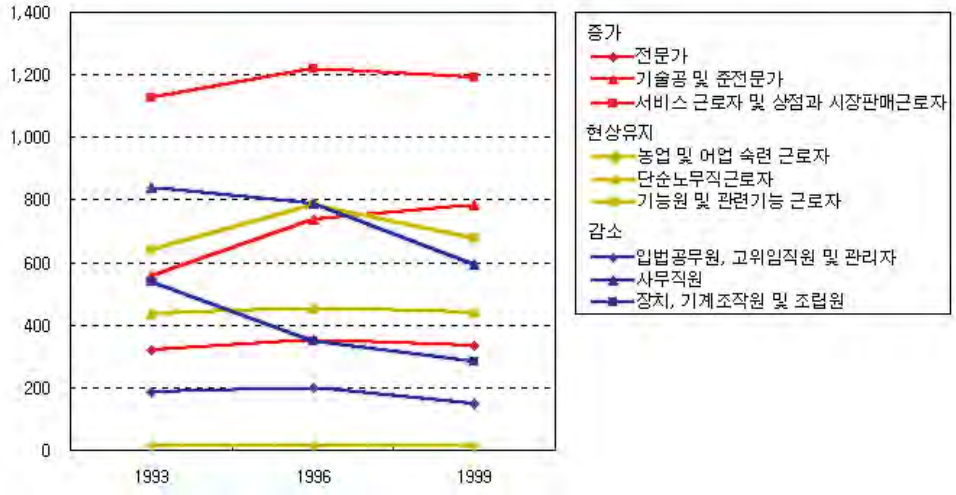
- 서울시 종사자의 직업별 추이를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의 추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전문가, 기술공 및 준전문가, 그리고 서비스 및 판매 종사자는 지난 십여년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사무직 종사자, 장치·기계조작원 및 조립원 등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 한편, 농업 및 어업 숙련 근로자, 단순노무직근로자, 그리고 입법공무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는 지난 91년 이래로 현상유지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 전체적으로 서울시 종사자 직업별 구조는 전문가와 기술공 및 준전문가 등의 크게 증가하는 대신, 기능직 종사자나 사무직 종사자, 장치·기계조작원 및 조립원은 감소하는 등 고숙련 직종으로 전환되는 가운데, 서비스 및 판매 종사자이 증가하는 직업적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VI-18] 서울시 종사자의 직업별 취업자 추이 (단위 : 천명, %)

구분 \ 년도		1993	1996	1999	2003
증가	전문가	318 (6.82)	353 (7.21)	333 (7.46)	563 (11.85)
	기술공 및 준전문가	558 (11.97)	735 (15.01)	783 (17.54)	644 (13.55)
	서비스 및 판매 종사자	1,125 (24.14)	1,221 (24.93)	1,193 (26.73)	1,405 (29.56)
현상유지	농업 및 어업 숙련 종사자	14 (0.30)	15 (0.31)	13 (0.29)	6 (0.13)
	단순노무직 종사자	438 (9.40)	456 (9.31)	439 (9.84)	425 (8.94)
	입법공무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187 (4.01)	200 (4.08)	150 (3.36)	192 (4.04)
감소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642 (13.77)	782 (15.97)	679 (15.21)	603 (12.69)
	사무직 종사자	839 (18.00)	789 (16.11)	592 (13.26)	792 (16.66)
	장치, 기계조작원 및 조립원	540 (11.59)	347 (7.08)	282 (6.32)	281 (5.91)
전체		4,661 (100.0)	4,898 (100.0)	4,463 (100.0)	4,753 (100.0)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 인구연보, 각년도



[그림 VI-5] 서울시 종사자의 직업별 취업자 추이

4) 서울시 신산업의 성장과 산업생태계의 변화

(1) 서울시 신산업의 성장

• 신산업의 성장 및 입지 특성

-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른 산업구조 변화와 소득수준의 향상에 따른 선호의 다양화는 새로운 도시형 산업의 급증을 낳았다. 1990년대 들어 가장 성장한 업종으로는 문화산업, 멀티미디어 & 엔터테인먼트, IT산업 등의 신산업이라 할 수 있다.
- 이 신산업은 짧은 기술주기, 수요의 다양화 및 선호의 급격한 변화 때문에 관련 업체 및 종사자간의 지속적인 협력체계가 불가피하다. 때문에 이들의 입지는 수요자로서 대기업본사 등 대규모 오피스가 집적해 있으며, 교통이 편리하고 통신 인프라가 잘 구축된 지역에 대거 집적하는 경향이 있다.

• 정보처리 및 컴퓨터산업의 집적과 신산업지구의 형성

- 서울시 벤처기업 3,860개(2000년 9월 현재) 중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용관련업(56.8%), 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을 포함한 일반 제조업(36.2%)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이들 산업 대부분은 새로운 벤처집적지로 부상하고 있는 강남(33.3%), 서초(17.8%), 송파구(4.5%) 등 신산업지구와 기존의 제조업 집적지인 영등포구(7.9%)에 집적하고 있다.
- 최근 들어서는 구의지역(강변역 주변), 금천지역(디지털산업단지 주변), 관악지역(서울대 주변) 등에서 지역 특성을 살린 산업집적지가 출현하는 새로운 추세도 나타나고 있다.

• 신산업의 산업별 현황

① 정보산업(IT)

- 서울시의 정보산업은 1999년 현재 총 사업체는 30,596개이고, 종사자는 552,121명에 이른다.
- 세부업종별 현황(1999)
  정보통신기기유통업(68.6%)] 정보통신기기제조업(15.1%)] 정보통신공사업(8.9%)] 소프트웨어 및 컴퓨터관련서비스업(6.6%)] 통신서비스업(0.8%)
- 정보산업(IT)의 서울시내 지역별 현황(1999)
  사업체수별 : 역삼1동(1,521개)] 서초3동(1,172개)] 여의도동(905개)
  종사자수별 : 역삼동(23,963명)] 서초동(19,509명)] 여의도동(16,422명)

- 이러한 모습은 새로운 산업으로 등장하고 있는 정보산업(IT)이 기존의 제조업 집적지가 아닌 강남, 서초와 같은 새로운 지역에 집중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② 문화산업

- 문화산업은 표준산업분류상 영화·방송 및 공연예술 관련산업(SIC 87)과 기타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산업(SIC 88)이 해당된다. 세부업종으로는 영화산업(SIC 871), 방송업(SIC 872), 공연산업(SIC 873), 뉴스제공업(SIC 881), 기타 문화관련산업(SIC 882), 기타 오락관련산업(SIC 889) 등이 포함된다.
- 1999년 현재 서울시 문화산업 사업체수는 32,499개로 전체 사업체수 663,293개의 4.9%를 차지하고 있으며, 종사자수는 158,055명으로 전체 종사자수 3,378,615명의 4.68%를 차지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문화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까지는 미약하나, 점차 비중이 증대되고 있다.
- 지역별로는 강남구(7.8%), 중구(6.9%), 서초구(6.4%), 종로구(5.9%) 순서이다.
- 세부업종별로 공연산업은 종로구, 강남구, 공연기획업은 강남구, 동대문구, 음반산업은 강남구, 영등포구, 게임산업은 중구, 강남구, 용산구, 영상산업은 강남구, 중구, 서초구 등에 집중되어 있다.

(2) 기술집약형 벤처기업의 성장

• 벤처기업의 현황

- 2001년 7월말 현재 우리나라에는 10,431개의 벤처기업이 설립되어 있고 서울, 경기,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에 전체의 72.8%에 해당하는 7,601개의 업체가 입지하고 있다. 특히 서울은 전국 벤처업체의 47.1%인 4,909개의 업체가 집중하여 있다(경기도 20.7%).
- 서울 소재 벤처기업의 주요 업종은 정보처리 및 컴퓨터 관련업(2,811개, 57.3%)과 일반제조업(1,662개, 33.9%)으로 전체의 91.2%에 해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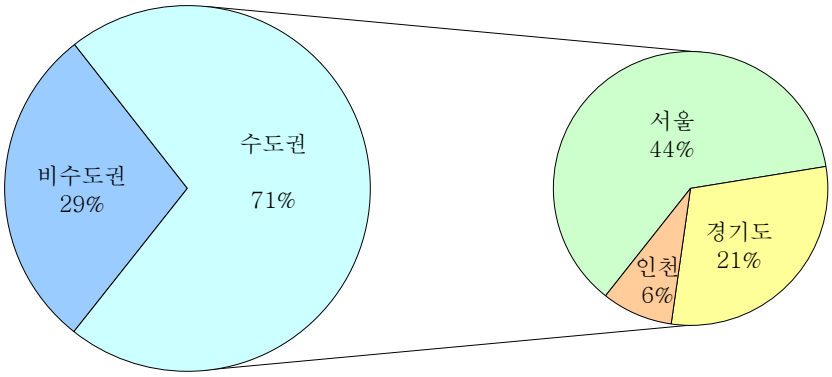
• 동남권 중심의 벤처기업 집적

- 서울 전체 벤처기업의 57.4%인 총 2,816개의 업체가 강남구와 서초구를 포함한 동남권에 집중하고 있으며, 영등포구와 구로구를 포함한 서남권에도 1,037개(21.0%)가 집중하여, 이들 양 지역에 전체 벤처기업의 약 78%가 집중하고 있다.
- 특히, 테헤란로에는 1,000 여 개의 벤처기업이 입지하여 전형적인 '자연발생형 벤처집적지'의 생태계를 이루고 있다.
- 벤처기업 집적시설은 전국의 159개 가운데 서울에 약 70%인 110개업체가 집중되어 있으며, 강남·서초지역을 중심으로 70%가 집중되어 있다(강남구, 47%; 서초구, 23%).

[표 VI-19] 전국 벤처기업 현황(2001년 7월 현재) (단위 : 개수, %)

구 분	전국	수도권				비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계	10,431	7,601	4,909	2,166	526	2,830
비 중	100	72.8	47.1	20.7	5.0	27.2

자료 : 중소기업청, 벤처기업현황, 2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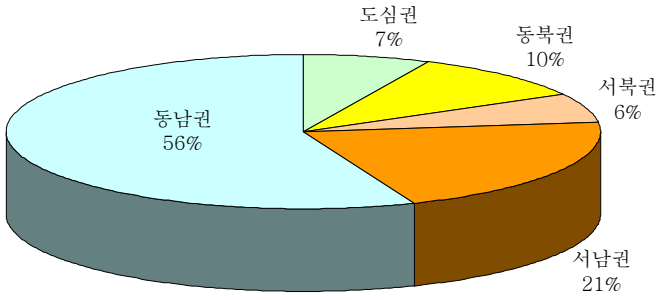


[그림 VI-6] 전국 벤처기업 현황(2001년 7월 현재)

[표 VI-20] 서울시 권역별 벤처기업 현황(2001년 7월 현재) (단위 : 개, %)

지 역	전체	도심권	동북권	서북권	서남권	동남권
계	4,909	353	443	248	1,045	2,820
비 중	100	7.2	9.0	5.1	21.3	57.4

주 : 도심권 - 종로, 중구, 용산
동북권 - 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서북권 - 은평, 서대문, 마포
서남권 - 양천, 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 동작, 관악
동남권 - 서초, 강남, 송파, 강동
자료 : 중소기업청, 벤처기업현황, 2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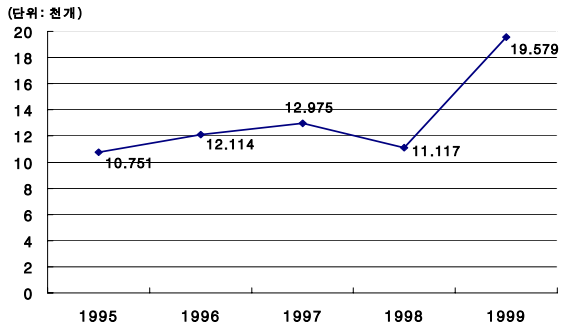


[그림 VI-7] 서울시 권역별 벤처기업 현황 (2001년 7월 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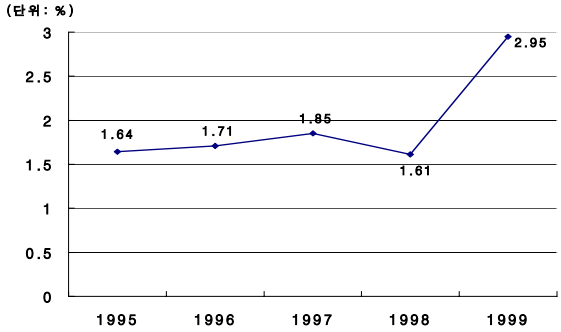
(3) 서울시 창업기업의 현황

• **창업기업의 특성**

- '90년대 들어 서울시 창업기업의 수와 창업률이 지속적으로 증가(IMF 시기 제외)하고 있다.



[그림 VI-8] 서울시 창업 기업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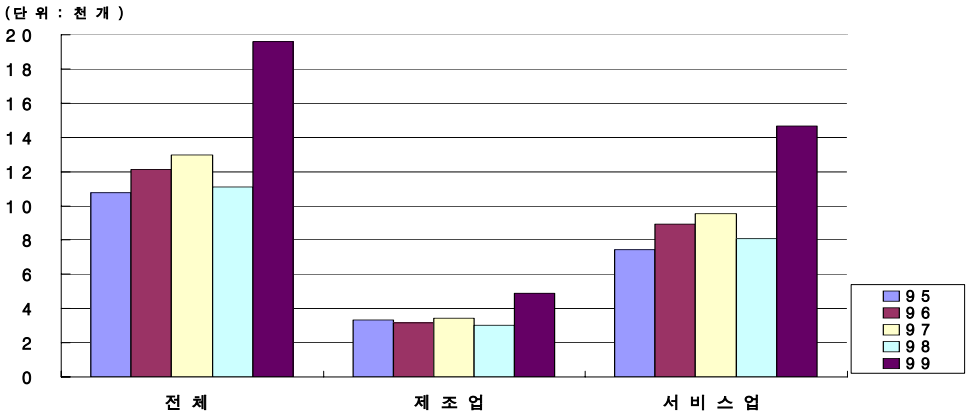
[그림 VI-9] 서울시 창업률 변화

* 창업률 공식

X년도 i업종창업률 = [x년도 I업종창업업체수 ÷ (X-1)년도 I업종 기존업체수] ×100

X년도 j지역창업률 = [x년도 j지역창업업체수 ÷ (X-1)년도 j지역 기존업체수] ×100

-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에 비해 서비스업에서의 증가가 현저하다.
  - 1995 ~ 99년 기간동안 제조업 창업은 48% 증가한 반면, 서비스업 창업은 98% 증가하여 서울시의 서비스산업화를 가속화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그림 VI-10] 서울시 창업기업수 변화(1995년 ~ 1999년)

• **동남권에 집중하는 창업기업**

- 권역별로 창업기업의 분포를 살펴보면, 동남권(서초·강남·송파·강동)이 전체 창업의 약 46%를 차지하고 있으며, 도심권(종로·중구·용산구)이 15%, 영등포 지역이 약 8%를 차지하고 있다.

- 1990년대 들어 도심권의 창업은 감소하는 반면, 동남권 중심의 창업은 증가하고 있다.

  · 동남권(서초·강남·송파·강동) : 22.9%(1987) ➡ 45.9%(1999)
  · 도심권(중구·종로·용산구) : 23.8%(1987) ➡ 14.9%(1999)

[표 VI-21] 서울시 권역별 창업기업의 분포 변화 (단위 : %)

구 분	1987	1991	1995	1999
전체	100.0	100.0	100.0	100.0
도심권	23.8	16.8	15.8	14.9
동북권	16.6	12.0	11.6	11.4
서북권	7.2	8.0	6.7	6.6
서남권	29.4	20.6	20.6	21.2
동남권	22.9	42.6	45.3	45.9

주 : 도심권 - 종로, 중구, 용산
동북권 - 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서북권 - 은평, 서대문, 마포
서남권 - 양천, 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 동작, 관악
동남권 - 서초, 강남, 송파, 강동
자료 : 박삼옥(1994), 서연미(2000)를 재정리

5) 서울시 유통·물류 산업의 현황과 문제점

(1) 다양한 유통경로의 등장과 전통 유통공간의 위축

- 도시화, 공업화 초기단계에는 생산자(제조업자)-도매시장-소매시장-소비자라는 유통단계를 거쳐 상품이 최종소비자에게 유통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소비자들의 소득수준 향상, 기호의 다양화, 전자상거래의 등장 등으로 다양한 유통경로가 출현하고 있다.
-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인터넷의 등장으로 생산자와 소비자, 생산자와 유통업체, 소비자간의 전자상거래를 통한 직거래방식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B2C 전자상거래는 생산자가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전자상거래 형태로 국내 시장은 1천 5백억원 수준이나, 매우 급속한 속도로 확대되고 있다. 국내 전자상거래 사이트는 1994년 인터파크를 시작으로 본격화된 이래 2000년 말 현재 약 8,000여개의 쇼핑몰이 운영 중에 있다.
- 1996년부터 시작된 유통시장 개방에 따라 선진국 대형유통업체들이 국내에 상륙하면서, 대형유통업체 및 물류센터, 전자상거래, 직거래 등 다양한 방식이 확산되고 있다.
- 새로운 유통경로의 등장으로 수퍼마켓, 재래시장, 골목시장 등 기존 유통시장은 크게 위축되고 있으며, 고급화, 현대화, 디지털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반면, 새로운 유통경로는 그 자체가 물류센터의 기능을 담당하기도 하지만, 전자상거래의 경우 새로운 물류거점을 필요로 하고 있다.

(2) 유통시설의 권역별 분포

- 서울시 유통시설은 일반시장, 백화점 및 쇼핑센터, 대형할인점, 도매센터, 편의점 등이 공존하고 있으나, 쇼핑센터, 대형할인점, 도매센터의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 서울시 유통시설의 공간적 분포를 살펴보면, 연면적 기준으로는 도심권과 서북권, 동남권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유통형태별로는 일반시장은 동북권과 서남권, 백화점은 동남권과 서남권, 쇼핑센터는 서남권, 대형할인점은 서남권과 동남권, 도매센터는 동남권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22] 서울시 유통시장현황 (단위 : 개, ㎡)

구분 (2002)	합계		일반시장		대규모 소매점				대형점		도매센타	
					백화점		쇼핑센타					
	개소	건물연면적	개소	건물 연면적	개소	건물 연면적	개소	건물 연면적	개소	건물 연면적	개소	건물 연면적
전체	431 (100.0)	10,454,555	346 (100.0)	5,942,074	28 (100.0)	2,459,396	12 (100.0)	452,222	44 (100.0)	1,477,653	1 (100.0)	123,210
도심권	88 (20.4)	4,018,719	73 (21.1)	3,189,984	6 (21.4)	358,008	3 (25.0)	82,376	5 (11.4)	265,141	1 (100.0)	123,210
동북권	101 (23.4)	1,897,748	81 (23.4)	1,026,628	4 (14.3)	241,486	1 (8.3)	17,417	15 (34.1)	612,217	-	-
서북권	39 (9.0)	257,862	35 (10.1)	163,661	1 (3.6)	57,254	1 (8.3)	8,661	2 (4.5)	28,286	-	-
서남권	109 (25.3)	1,834,411	83 (24.0)	692,168	8 (28.6)	634,010	4 (33.3)	81,779	14 (31.8)	426,454	-	-
동남권	94 (21.8)	2,445,815	74 (21.4)	869,633	9 (32.1)	1,168,638	3 (25.0)	261,989	8 (18.2)	145,555	-	-

자료 : 서울특별시, 서울통계연보, 2003

(3) 브랜드 개발과 서비스 개선이 필요한 전통시장

- 서울의 대형 전통시장인 남대문시장과 동대문시장은 대형 쇼핑컴플렉스로 개조하면서 한국 최대의 의류산업의 집적지로 독특한 문화공간을 형성하고 있다.
- 이 공간은 수많은 소기업들로 구성된 자기 완결적 생산, 판매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네트워크화된 '도시학습지역' 으로 기능하고 있다.
- 동대문 의류타운에는 의류제품의 기획, 디자인, 판매 등을 담당하는 2만7천 여개의 점포 (신흥상가 점포 1만 5천 여 개), 3천4백 여 개의 원단·부자재 점포, 2만 여개에 달하는 배후 생산공장, 수출운반책, 외국인구매안내소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루 평균 2천 여명의 외국상인이 찾는 국제화된 시장으로 성장하였다.
- 동대문 의류타운의 성공요인으로는 첫째, 소비시장의 흐름을 읽고 새로운 시장을 창출한 점, 둘째, 재개발을 통해 대단위 쇼핑단지를 구축한 점, 셋째, 점포, 공장 등이 제각기 독립적인 기업가로 활동한 점, 넷째, 효율적이고 역동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한 점, 다섯째, 기획과 디자인을 강화하고 독특한 패션을 창출한 점 등을 들 수 있다.
- 그러나 이들 시장은 여전히 국내 고객과 방문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제한적인 마케팅으로 세계적인 브랜드로 성장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디자인 능력의 향상, 자체 브랜드의 확보, 세계시장을 대상으로 한 마케팅 등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6) 서울시 산업경제의 위상

(1) 세계도시로써의 위상 취약

-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은 입지여건상 동북아시아 지역의 거대 대도시권인 Be-Se-To (북경-서울-동경)라인의 중심에 위치해 있으나, 세계도시 위계에서의 위상은 취약하다.
- 서울은 대도시 위계상 2차적 세계도시(secondary world city)로 분류된 바 있고 동북아시아 주요 도시간 경쟁력 비교 연구에서 서울의 도시경쟁력은 동경과 홍콩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특히 삶의 질과 개방성 등에서 뒤져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Knox & Agnew; 한영주, 1999)
- 서울의 국제기능은 국제회의 시설, 국제회의 개최현황, 다국적 기업의 본사 및 분사 입지 업체 수, 동북아 주요 도시간 항공운행 회수 등을 통해 도시간 비교가 가능하다.
  - 국제회의 개최건수 순위: 20위(1993년) ➡ 24위(1999)
  - 다국적 기업본사 수: 아시아 6위, 다국적 기업지사: 아시아 7위
  - 동북아시아 도시 1주일간 국제 항공회수: 동경(191), 홍콩(184), 베이징(175), 상하이(163), 서울(120)

(2) 높은 경제집중에 대비되는 낮은 생산성

- 서울은 2003년 현재 전국 면적의 1.2%를 차지하고 있으나, 인구는 전국의 22.3%를 차지하고 있고, 생산과 사업체가 집중되어 있는 국가경제의 중심지이다.
- 전국 대비 사업체 비중은 24.7%, 종사자는 27.2% 수준임에 비해, GRP는 24.0% 수준에 불과하여 서울은 1인당 생산액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 2000년대 초반까지 대기업본사, 금융기관, 연구개발 기능, 국제업무 기능 등 일부 중추관리기능이 경기도 및 지방으로의 분산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핵심기능은 여전히 서울을 중심으로 수행되고 있다.
- 앞으로 서울의 산업은 구상기능 위주의 고차 산업중심지 기능으로 더욱 특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3) 중추관리기능의 집중에 대비되는 수도권산업계획의 부재

- 서울은 수도권 인구의 45%를 차지하고 있지만, 사업체수는 53%, 종사자수는 54%를 점유함으로써 여전히 수도권의 산업중심지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 또한 수도권의 중추관리기능 가운데 금융기관의 67%, 금융기관 예금 및 대출의 75%, 기업본사의 68.5%. 정부출연기관의 70.6%, 기업부설 연구소의 50.9%, 연구개발업체 수의 64.4% 등을 차지하여 압도적 우위를 보이고 있다(표 Ⅴ-1 참조).
- 최근 서울인구가 외곽도시로 분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은 여전히 고용중심지로써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수도권의 산업정책은 인구 및 산업집중 억제에 치중해왔기 때문에 서울산업을 수도권 산업과 연계하여 고려한 계획은 거의 없었으며, 대부분의 산업계획은 자치단체별로 작성되어 왔다.

[표 Ⅵ-23] 서울의 수도권 및 전국 대비 집중도 현황(2003년 현재)

구 분	단위	서울(A)	수도권(B)	전국(C)	A/B	A/C
인 구	명	10,276,968	22,945,043	46,067,474	44.8%	22.3%
면 적	km^2	605.41	8,150.79	52,342.60	5.7%	1.2%
경제활동인구	천명	4,992	10,674	22,837	46.8%	21.9%
GRP (당해년 가격기준)	백만원	175,502,445	352,228,830	731,626,781	49.8%	24.0%
사업체수	개	735,258	1,387,860	2,978,396	53.0%	24.7%
종사자수	명	3,805,462	7,067,544	13,999,614	53.8%	27.2%
금융기관수	개	2,413	3,585	6,044	67.3%	39.9%
금융기관 예금	십억원	259,354.60	347,855.62	500,917.25	74.6%	51.8%

자료 : 행정자치부, 한국도시연감, 2003

2. 여건변화 전망

1) 국제적 여건의 변화

(1) 국제관계 : 경제의 세계화와 도시간 경쟁 심화

- 정보통신기술이 급속히 발전하면서 경제의 세계화 추세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 경제의 세계화는 무역장벽과 투자장벽의 붕괴, 국제간 자본이동의 증대를 통해 세계를 단일의 통합된 생산체계와 소비시장으로 만들고 있다.
- 경제의 세계화가 대도시를 매개로 이루어지면서 세계화와 도시화가 결합하는 "지구도시화" (glurbanization)가 출현하게 되고, 도시경쟁력 확보를 위한 세계도시들간의 경쟁도 심화될 것이다. 특히 이동이 자유로운 자본을 유치하기 위한 도시들간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 질 것으로 전망된다.

(2) 기술발달 : 기술혁신의 가속화와 다품종 소량생산체제로의 전환

- 기술혁신의 가속화와 기술의 융합은 제품수명주기를 단축시키고, 보다 효율적인 생산 활동을 가능케 한다. 새로운 기술은 기존 산업에 광범위하게 응용되어 산업재편을 촉진하고, 고객의 다양한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다품종 소량생산체제로의 전환을 촉진하게 된다.
- 향후 산업의 비교우위는 종래 부존자원 및 생산비의 격차보다는 기술력에 의존할 것으로 전망되며, 그러한 결과로 선진국을 중심으로 국가적 차원의 기술개발이 강화되고 보유기술에 대한 해외이전 기피 등 기술보호주의적 경향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 정보통신기술의 성장, 인터넷의 상용화, 제조업의 서비스화, 경제의 소프트화에 따라 거래에 의한 상품의 독점보다는 소비자의 정보공유, 전자상거래 등 새로운 유통환경이 확대된다.

(3) 지역관계 : 중국의 부상, 아시아경제권 등장

- 향후 21세기에 중국은 가장 강력한 경제력을 보유한 국가로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 특히 중국의 WTO 가입을 계기로 세계경제에서 동북아시아의 비중이 매우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 그 결과 이들 국가간에는 경제의 수직적 분업이 뚜렷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아울러 경제와 무역의 상호보완성이 강하기 때문에 향후 자유무역지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 따라서 향후 동북아 거점을 확보하기 위한 각 국가와 도시간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2) 국내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

(1) 통일 여건의 개선

- 남북교류 확대는 그 동안 정체되었던 경기 북부지역의 개발을 활성화시킬 것이므로, 강북지역의 역할을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
- 평양-서울-대전 축을 중심으로 볼 때, 서울은 생산자서비스 중심으로 그 기능을 고도화하면서, 차하위 기능은 평양-대전 축에 위치하는 다른 도시로 이전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2) 소득증가와 여가시간 증대

- 소득이 증가하고 여가시간이 늘어나면서 문화적 상품에 대한 대중의 욕구가 증대되므로, 관광산업과 문화산업에 대한 재인식이 필요하다.
- 특히, 관광산업의 경우 지역 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한 계획추진이 요구되는 부문이므로,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요구된다.
- 또한 문화산업의 경우 IT 기술과의 접목을 통한 고도기술화가 진행되는 것이 최근의 추세이고, 관련 기업의 집적을 통한 상호학습과 호혜적 관계의 촉진이 중요시되고 있다.

(3) 산업계획 주체의 다양화

- 다양한 경제주체의 공동참여를 통한 지역혁신 체제가 요구된다.
- 산업발전 계획의 주체가 공공주도에서 시장주도로, 다시 이들 양자에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공동주도의 거버넌스(local governance) 체제로 변화될 것이다.

(4) 탈제조업화/정보화의 가속화

- 제조업체의 경기도 및 비수도권 지역으로의 이전에 따라 서울시의 전통적, 대규모 저숙련집약적 제조업기반이 약화될 것이다.

- 서울의 산업공간 기능 고도화에 기여하는 산업으로는 정보통신산업, 생산자서비스업, 관광 및 문화산업 등이다.
- 향후 서울산업은 가령 정보통신네트워크와 같이 대도시가 갖고 있는 자원을 활용하는 산업으로 전개할 필요가 있다.
- 반면, 급격한 기술변화 및 산업구조조정으로 인해 배제된 부적응 인력의 증가, 전문직종 대 하층서비스직, 상용직 대 임시직 간의 양극화 등의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고용 불안정에 따른 실업 확산과 신빈곤층의 출현이 예상된다.

(5) 수도권 개발압력 증대와 지역균형발전 노력

- 국가경쟁력이 대도시권 경쟁력에 의해 결정되므로 향후 수도권은 동북아 지역 대도시권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개발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견된다.
- 수도권정비계획법 및 공업배치법 등 과거 수도권내 산업입지를 제한하였던 규제가 일부 완화됨에 따라 수도권지역에서의 산업입지가 더욱 확대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서울의 제조업 등 기반산업의 경기도 유출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측된다.
- 수도권의 과도한 개발과 경제활동 집중은 지역간 균형발전에 대한 사회적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므로, 지역간 역할분담을 통하여 지방의 발전을 시도할 수 있다.

(6) 수도권의 광역화

- 수도권 개발이 확산되고 서울의 인구 및 산업분산이 증가함에 따라 서울대도시권의 광역화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 광역단위의 산업계획을 통해 효율적인 토지이용-인구-주택-산업 재배분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7) 교통인프라의 첨단화

- 경부고속전철의 건설과 고속전철 역사 입지로 인해 생활방식에서 커다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인천국제공항의 개항에 따라 수송 및 물류 네트워크에서 국제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 신 교통수단 등장에 따른 산업 및 공간구조 개편 요구가 증대될 것이다.

3. 미래상

"산업혁신을 주도하는 동북아 중심도시"

• 서울 산업경제계획은 서울의 창조성, 생산성, 유연성 및 산업주체간 협력을 제고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산업혁신을 주도하는 세계도시 서울을 창조하기 위한 산업기반을 조성하는 데 있다.

산업경제계획의 추구

중 심 성	동북아 산업경제의 거점으로써 역할 증대
창 조 성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유 연 성	산업구조변화에 따른 적응능력 제고
생 산 성	사업여건 개선을 통한 기업생산성 제고
안 정 성	시민경제생활의 안정성 제고

4. 계획방향

- **『서울도시기본계획』 산업경제부문의 위상 정립**

  - 산업경제계획은 산업경제부문에 관한 한 최상위 계획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유도한다.
  - 산업경제계획은 시의 경쟁력 제고를 통해 시민의 생활경제 기반을 안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산업경제계획은 토지이용계획과 교통계획, 주택계획 등 타부문 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한다.

- **지역별 특성과 지역간 연계를 고려한 산업계획의 추진**

  - 업종단위의 산업계획에서 지역적 여건을 고려한 산업계획을 지향한다.
  - 서울산업경제의 중추기능을 수행하게 될 전략지역을 선정한다.
  - 신산업지역과 구산업지역간 연계를 강화한다.
  - 수도권지역과의 연계를 고려한 산업정책을 수립한다.

- **산업구조의 변화에 대한 적응력 제고**

  - 새로운 기술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시내 전통산업의 첨단화를 유도한다.
  -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발생하게 될 고용감소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기술교육과 직업훈련을 강화한다.

- **혁신의 중심지로써 역할 강화**

  - 지역산업의 혁신능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산업의 혁신활동과 혁신의 중심지를 중점 지원한다.
  - 지역산업의 발전잠재력을 제고하기 위해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을 증진시킨다.

- **산업활성화를 위한 추진주체의 설정**

  - 지역산업정책을 주도하는 주체로 공공위주에서 민관파트너십으로의 전환을 활성화한다.
  - 지역산업의 혁신능력 제고와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산업부문에서 여러 주체들에 의한 협력적 관리체계(governance)를 구축한다.

5. 목표체계 "산업혁신을 주도하는 동북아 중심도시"

목 표	과 제	전 략	시 책	단기	중장기	정책지표
1. 동북아의 산업경제 거점도시 육성	경제의 세계화에 부응하는 산업경제 중심지 조성	• 국제업무 중심지 육성	- 구도심, 도심, 여의도, 용산, 강남, 상암지역을 중심으로 다이아몬드형 국제업무거점 육성 - 재개발 추진시 도심의 위상 제고 - 경부고속철도 및 인천국제공항을 활용한 국제업무 지역 조성	✔		지표 1. 아시아 도시 중 다국적 기업 본사수 순위 지표 2. 아시아 주요도시별 1주일간 항공회수 순위
		• 세계 유수기업의 유치	- 다국적 기업의 아시아지역본부 및 지사의 유치 - 외국금융기관 유치를 위한 국제금융센터 조성 - 해외기업의 안정적인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개선		✔	
		• 국제기구 유치 노력 강화	- 아시아지역 금융본부의 서울 유치 : 아시아통화기금(AMF) 등 - 국제기구의 아시아 본부 유치		✔	
	서울의 대외이미지 제고	• 서울의 경제환경에 대한 대외홍보 활동 강화	- 서울경제에 대한 국제자문단 운영확대 - 서울경제 홍보용 국제행사 확대 - 서울영상위원회(film commission) 설립 - 문화산업 해외수출 지원 강화 - 외국유학생 유치활동 지원	✔		
		• 국제적 컨벤션 산업의 체계적 육성	- 국제회의 개최 시 인력 및 자금 지원 - 컨벤션 관련시설 설치 시 조세 및 부담금 면제 - 컨벤션산업 관련 전문인력 및 지원업체 육성		✔	
		• 외국자본 유치 확대	- 외국자본 투자유치 지역 조성 - 외국자본투자를 위한 행정절차 간소화 및 종합서비스 구축 - 외국계 첨단기업 및 연구소에 대한 세제 지원 - 외국기업의 자금조달에 대한 지원 강화 - 외국자본유치를 위한 관련주체간 협력체제 구축 - 외국인 투자협의체 운영 확대	✔		
	동북아 지역 관광거점 육성	• 장소 마케팅 차원의 관광개발	- 북촌 한옥마을의 테마관광 코스개발 - 홍대 앞 클럽지역의 문화활동 거점화 - 이태원관광특구지역의 특색있는 개발지원 - 남대문, 동대문 시장의 쇼핑관광 거점화 지원	✔		
		• 관광자원화를 고려한 도시계획 수립	- 대형 시설물 구축 시 경관, 관광 자원화 고려 - 한강 교량, 대형 시설물, 주요 문화재의 야간 조명 실시	✔		
		• 관광홍보 및 안내체계 구축	- 관광 안내 및 홍보를 위한 책자와 홈페이지 제작 - 관광시장 세분화를 통한 홍보전략 수립 - 관광전략지역의 지정 및 중점적 지원	✔		

목 표	과 제	전 략	시 책	단기	중장기	정책지표
2. 국가의 산업혁신 중심지	서울시 전략산업의 체계적 육성	• 지식기반산업 중심의 산업구조 개편	- 비교우위산업의 지식기반 산업화 유도 - 사업서비스업의 전문화 유도 - 4대 디지털거점 육성		✔	지표 3. 서울시 전체 사업체 창업율 지표 4. 서울시 총예산 중 과학기술관련 예산의 비중
		• 문화산업을 서울시 성장산업으로 육성	- 패션, 디자인, 영상, 게임산업 등 대도시형 산업 육성 - 문화벤처집적시설의 건설 및 운영 - 거점문화지역을 문화지구로 지정 및 지원	✔		
		• 디자인 능력향상을 통한 제품의 고부가가치화	- 서울디자인지원센터 설립 및 지원 - 디자인 전문인력의 체계적 육성 - 패션산업의 해외마케팅 지원 강화		✔	
	산업혁신 지역간 연계망 구축	• 전략적 신산업 지역의 조성	- 상암 DMC의 정보혁신 중심지 조성 - 뚝섬의 문화산업 중심지 조성 - 기존 정보산업집적지와 신규조성지역간 적정 역할분담 및 네트워크 구축	✔		
		• 기존 신산업 집적지역의 연계망 구축	- 지하철 2호선을 연결하는 서울시 산업 Greenline 조성 - 도심, 상암, 금천, 테헤란로, 뚝섬을 전략산업지역으로 조성 (IT Rectangular) - 서울벤처밸리(테헤란밸리), 구로 디지털 산업단지 활성화 지원	✔		
	산업경제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제의 강화	• 산·학·연 협력적 연구개발체제의 확립	- 산·학·연 컨소시움을 통한 기술개발 프로그램의 지원 - 개발된 기술의 상품화 및 창업화 지원 - 산업단체간 협력 강화 지원	✔		
		• 기업간 연계를 통한 혁신능력 강화	- 거점별 산업지원센터의 건립 및 운영의 내실화 -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공동기술개발 지원 - 중소기업 협동화사업 적극 추진		✔	
	수도권 산업과의 네트워크 강화	• 수도권 차원 산업혁신체계 구축	- 범수도권 산업혁신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 수행 - 수도권 산업혁신을 위한 협력체제 구축 - 수도권 산업벨트 조성을 위한 자치단체간 협력 강화		✔	
		• 수도권산업간 역할 분담	- 수도권내 산업네트워크 현황의 주기적 조사 - 수도권의 산업배치계획시 서울 산업과의 역할분담 고려 유도 - 역외이전기업의 네트워크 유지 지원		✔	
	산업정책의 집행능력 제고	• 기존 산업관련 기구의 전문성 강화	- 산업관련 민간전문가의 활용 증대 - 대학, 산업, 공공부문간 인적교류 확대 유도		✔	
		• 서울시 산업정책 전담 집행기구의 역량 강화	- 서울산업발전 자문위원회 설치 - 서울시와 자치구간 산업경제계획의 역할 분담(전략계획과 집행계획) - 도시개발공사의 경제개발 기능 강화	✔		

목표	과제	전략	시책	단기	중장기	정책지표
3.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산업도시 육성	기존 산업의 첨단화 지원	• 섬유·의류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유도	- 패션디자인 지원기능의 강화 - 봉제인력의 체계적 양성 - 국제적인 패션디자인 센터의 유치 지원 - 국내외적 마케팅 능력의 강화	✔		지표 5. 벤처기업 중 강북지역 비중
		• 출판·인쇄업의 현대화 지원	- 공동 구매-생산-판매네트워크 구축 지원 - 인쇄산업 집적단지의 조성 - 출판·인쇄업의 디지털화 유도	✔		
		• 기존 산업체의 디지털화 지원	-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 - 전자상거래지원 자문기관 운영 확대 - 산업경제정보망 확대 운영		✔	
	기존 산업공간의 재구조화	• 권역별 산업경제 체제의 육성	- 전통적 산업집적지역의 산업공동체화 지원 - 성동, 홍릉, 영등포 벤처기업 촉진지구 육성 - 권역별 집적단지 지원센터 설립	✔		
		• 강·남북간 산업간 불균형의 시정	- 도심, 상암, 뚝섬 등의 개발지역내 신산업에 대한 입지지원 - 도심, 상암, 뚝섬 등을 중심으로 신산업의 성장을 수용하기 위한 유보지 확보 - 대학을 거점으로 한 강북지역 산업공동체 결성 지원		✔	
		• 준공업지역 및 공장이전적지의 적절한 활용	- 도심형 산업단지의 조성 - 산업공동체 조성을 위한 상공복합건물의 건설 및 지원 - 산업용도 활용에 대한 용적율 인센티브 부여		✔	
	경제의 구조변화에 대한 산업인력의 적응력 제고	• 기업 및 고용에 관한 자료 축적	- 산업 및 고용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 실시 - 장기 산업인력 수급계획의 수립 - 산업분야별 기술인력에 대한 정보축적 및 제공		✔	지표 6. 서울시 제조업체 1,000개당 제조업 분야 벤처기업 수
		• 구산업인력의 재활용 증대	- 전통산업 숙련공에 대한 정보축적과 신산업 활용 제고 - 숙련공을 시제품 제작에 활용	✔		
		• 산업구조조정에 따른 소요인력의 공급	- 정보화로 인한 고용감소 대처방안 마련 - 대체적 고용 창출원으로써 NGO 지원 - 실업자, 노숙자의 실태 분석	✔		
		• 구산업인력에 대한 재교육 지원 강화	- IT 등 전문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자료축적 및 홍보 강화 - 재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지원 - 실업자에 대한 재취업·재교육 지원		✔	
	기존 유통산업의 재편	• 거점 유통공간의 기능강화	- 대형전통시장을 '쇼핑-관광-여가' 콤플렉스로 조성 - 전통시장에 대한 국내외 홍보물 제작 지원 - 전통시장의 안내체계 구축 - 상가종사자에 대한 상도덕 교육지원 - 상가에 대한 국내외 안내 체계 구축	✔		
		• 재래시장의 현대화 및 재개발의 추진	- 재래시장의 유형별 특색있는 발전방안 유도 - 재래시장의 농산물 직거래화 지원 - 재래시장 상인에 대한 교육 및 경영자문 지원	✔		
		• 소매점의 현대화 지원	- 지역밀착형 소매유통기구(예, 편의점, 할인점)의 네트워크화 - 소상공인 지원센터의 확대		✔	

목표	과제	전략	시책	단기	중장기	정책지표
4. 기업하기 좋은 도시조성	생산활동 지원을 위한 법제도 개선	• 서울산업경제 현황에 대한 기초자료 축적	- 서울의 산업경제구조 변화에 대한 조사·분석 강화 - 서울산업경제에 대한 지표개발	✔		지표 7. 아시아 주요도시별 기업하기 좋은 도시 순위 지표 8. 전국 7대 대도시도로의 교통 혼잡비용 중 서울시 비중
		• 서울산업에 대한 제도 개선 노력 강화	- 도시형 제조업 입지관련 규제완화 - 다국적 기업유치를 위한 금융, 세제, 행정지원 강화 - 수도권내 지역간 산업관련 제도개선을 위한 공동노력 강화		✔	
		• 지역산업 육성정책 수립 및 집행능력의 강화	- 중앙정부의 집행기구와 역할분담 명료화 - 지역실정에 맞는 산업정책조례의 제정	✔		
	중소기업 지원활동의 강화	• 도시형 제조업을 위한 입지 지원 강화	- 도시형 산업용 복합빌딩 건설지원 - 상공복합기능을 위한 아파트형공장 제도 개선 - 임대형 아파트형 공장의 확대	✔		
		• 중소기업을 위한 기술지원 강화	- 기술지도대학 확대 실시 -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움 확대 실시 - 해외 대도시와의 기술개발 교류사업 확대 - 외국대학 및 연구소 유치 및 교류		✔	
		• 중소기업 자금지원 확대	-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지원대상 확대 - 서울신용보증재단의 보증능력 강화 - 기술개발 투자에 대한 자금지원 확대	✔		
		• 창업능력 지원	- 창업보육센터 설치 확대 - 서울벤처박람회 확대 실시 - 여성창업보육센터의 건설 - 서울벤처투자조합 설치	✔		
		• 중소기업의 마케팅 활동 지원	- 중소기업 상설전시관 확대 - 중소기업 제품의 브랜드 및 디자인 개선 지원 - 해외주재관을 통한 지역중소기업 제품 홍보활동 강화 - 수출상담 및 무역업무 지원	✔		
	산업활동을 위한 도시기반시설의 확충	• 산업지역의 교통통신인프라의 개선	- 신산업집적지역의 신교통수단 도입 -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간통신망 구축		✔	
		• 물류비 절감을 위한 물류인프라의 구축	- 서울시 물류구조 및 물류비에 대한 주기적 조사 - 서울시 권역별 물류단지 건설 - 물류단지와 유통단지의 통합운영 유도 - 농수산물유통센터 등 신유통시설 확대		✔	
		• 산업정보체계의 구축 확대	- 생산-물류-유통에 대한 종합정보망 구축 - 유통정보화 우수사례 발굴 및 보급 확대	✔		

목표	과제	전략	시책	단기	중장기	정책지표
5. 생활하기 좋은 도시 조성	고용안정 기반 구축	• 직업훈련기능의 강화	- 산업구조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훈련과목의 개편 - 주문형 직업훈련 확대 - 직업훈련 전문인력의 양성 - 사업장 내 직업훈련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		지표 9. 서울시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 비율
		• 노사관계의 안정화	- 노사정협의회 운영의 내실화 - 지역특성을 반영한 노동정책의 구현 - 노동문제 관련 주체간 의사소통구조의 활성화 - 노사문제에 대한 교육 및 상담활동의 강화 - 근로자 복지공간의 확대 - 노사관계 우수사업장 발굴 및 포상		✔	
		• 실업자 구직정보 제공 및 지원 확대	- 공공근로사업을 이용한 산업정보체계 구축 - 취업정보은행의 확대 운영 - 서울지역산업인력 D/B 구축	✔		
	안정적이고 질 높은 소비 생활 보장	• 소비자 권익의 보호 증대	- 소비자 문제에 대한 교육 및 홍보활동 강화 - 다단계 판매업체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 - 소비자구제활동의 강화	✔		
		• 안정적이고 저렴한 농수산물 수급체계 구축	- 수도권 도매시장의 권역별 역할분담 유도 - 유통질서 선진화를 통한 합리적 가격결정 체계 구축 - 도매시장의 물류하역자동화의 확대 실시 - 정기적인 농수축산물 안전도 검사 강화 - 콜드체인 구축 및 유통기한 감독 강화 - 유전자 변형음식물에 대한 의무표시제 도입		✔	
		• 가격정보제공을 통한 시민경제생활의 안정화	- 소비자 가격정보제공의 확대 - 개인서비스업체 종합가격정보망 구축	✔		지표 10. 세계도시 삶의 질 순위
	에너지절약적 생산 및 소비체제 구축	• 집단에너지 사업의 확대 공급	- 도시가스보급 취약지역 보급 확대 - 집단에너지 공급지역 확대 - 집단에너지 시설의 안정성 증대	✔		
		• 친환경산업의 육성	- 권역별 환경친화적 산업공동체 모델 구축 - 서울시 에너지 조례 제정 - 환경예산제도 도입 - 에너지 절약 인증제도 실시		✔	
	외국인 거주 환경의 개선	• 외국인을 위한 주택, 교육, 문화시설 지원	- 외국인 전용 주거단지 개발 확대 유도 - 외국어판 서울생활가이드북 및 홍보물 발간 - 외국인학교 설립 지원 - 외국인 문화촌 건설 지원	✔		
		• 서울의 거주환경에 대한 실태조사 강화	- 서울의 삶의 질 지표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 실시 - 외국인을 통한 서울생활불편 해소 방안 모색 - 국내거주 외국유학생에 대한 지원 확대	✔		

목표1 동북아의 산업경제 거점도시 육성

동북아 지역이 세계경제의 거대축으로 성장할 것이 예상되는 만큼 서울을 국제적인 업무 활동의 중심지로 육성하면서 서울의 대외적인 이미지를 조성하고 아울러 동북아 지역의 관광의 거점으로 육성하도록 한다.

과제1 경제의 세계화에 부응하는 산업경제중심지 조성

한국의 경제규모에 비해 취약한 수도 서울의 세계도시 위상을 제고하기 위하여 도심이나 강남지역 뿐만 아니라 전략적인 국제업무 중심지를 육성하고 외국의 기업이나 국제기구의 유치를 위해 노력한다.

전략 1. 국제업무 중심지 육성

시책 1. 구도심, 도심, 여의도, 용산, 강남, 상암지역을 중심으로 다이아몬드형 국제업무거점 육성

시책 2. 재개발 추진시 도심의 위상 제고

시책 3. 경부고속철도 및 인천국제공항을 활용한 국제업무 지역 조성

전략 2. 세계 유수기업의 유치

시책 1. 다국적 기업의 아시아지역본부 및 지사의 유치

시책 2. 외국금융기관 유치를 위한 국제금융센터 조성

시책 3. 해외기업의 안정적인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개선

전략 3. 국제기구 유치 노력 강화

시책 1. 아시아개발기금(AMF) 유치

시책 2. 국제기구의 아시아 본부 유치

과제2 서울의 대외 이미지 제고

서울의 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서울경제 환경에 대한 다양한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외국자본이 활동하기 편리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한다.

전략 1. 서울의 경제환경에 대한 대외홍보 활동 강화

시책 1. 서울경제에 대한 국제자문단 운영확대
시책 2. 서울경제 홍보용 국제행사 확대
시책 3. 서울영상위원회(film commission) 설립
시책 4. 문화산업 해외수출 지원 강화
시책 5. 외국유학생 유치활동 지원

전략 2. 국제적 컨벤션 산업의 체계적 육성

시책 1. 국제회의 개최 시 인력 및 자금 지원
시책 2. 컨벤션 관련시설 설치 시 조세 및 부담금 면제
시책 3. 컨벤션 산업 관련 전문인력 및 지원업체 육성

전략 3. 외국자본 유치 확대

시책 1. 외국자본 투자유치 지역 조성
시책 2. 외국자본투자를 위한 행정절차 간소화 및 종합서비스 구축
시책 3. 외국계 첨단기업 및 연구소에 대한 세제 지원
시책 4. 외국기업의 자금조달에 대한 지원 강화
시책 5. 외국자본유치를 위한 관련주체간 협력체제 구축
시책 6. 외국인 투자협의체 운영 확대

과제3 동북아 지역 관광거점 육성

단순히 역사적인 유물의 전시가 아니라 도시전체를 관광자원이 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단계에서부터 도시를 관리하고 특성있는 지역을 관광거점으로 개발하도록 한다.

전략 1. 장소 마케팅 차원의 관광 개발

시책 1. 북촌 한옥마을의 테마관광 코스개발
시책 2. 홍대 앞 클럽지역의 문화활동 거점화
시책 3. 이태원관광특구지역의 특색있는 개발 지원
시책 4. 남대문, 동대문 시장의 쇼핑관광 거점화 지원

전략 2. 관광자원화를 고려한 도시계획 수립

시책 1. 대형 시설물 구축 시 경관, 관광 자원화 고려
시책 2. 한강 교량, 대형 시설물, 주요 문화재의 야간 조명 실시

전략 3. 관광홍보 및 안내체계 구축

시책 1. 관광 안내 및 홍보를 위한 책자와 홈페이지 제작
시책 2. 관광시장 세분화를 통한 홍보전략 수립
시책 3. 관광전략지역의 지정 및 중점적 지원

목표2 국가의 산업혁신 중심지로 육성

서울이 우리나라 산업혁신의 중심으로써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대학, 연구소, 기업, 정부간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나아가 수도권 지역을 포함하는 지역산업혁신체제를 구축하도록 한다.

과제1 서울시 전략산업의 체계적 육성

산업구조의 변화에 부응하여 서울의 전략산업으로 지식 및 정보통신기술, 문화를 기반으로 하는 전략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하도록 한다.

전략 1. 지식기반산업 중심의 산업구조 개편

시책 1. 비교우위산업의 지식기반 산업화 유도

시책 2. 사업서비스업의 전문화 유도

시책 3. 4대 디지털거점 육성

- 도심 : 문화 컨텐츠 개발
- 강남 : S/W, IT 기술개발
- 구로/금천 : 제조형 IT 기술개발
- 상암 : 디지털 컨텐츠 개발

전략 2. 문화산업을 서울시 성장산업으로 육성

시책 1. 패션, 디자인, 영상, 게임산업 등 대도시형 산업 육성

시책 2. 문화벤처집적시설의 건설 및 운영

시책 3. 거점문화지역을 문화지구로 지정 및 지원

전략 3. 디자인 능력향상을 통한 제품의 고부가가치화

시책 1. 서울디자인지원센터 설립 및 지원

시책 2. 디자인 전문인력의 체계적 육성

시책 3. 패션산업의 해외마케팅 지원 강화

과제2 산업혁신지역간 연계망 구축

서울시가 전국 산업혁신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기존 신산업지역을 네트워크로 연결하고 문화와 정보통신기술이 결합하는 새로운 혁신의 중심지로 상암, 뚝섬 등을 중점 육성하여 산업혁신지역간 연계망을 구축한다.

전략 1. 전략적 신산업 지역의 조성

시책 1. 상암 DMC의 정보혁신 중심지 조성
시책 2. 뚝섬의 문화산업 중심지 조성
시책 3. 기존 정보산업집적지와 신규조성지역간 적정 역할분담 및 네트워크 구축

전략 2. 기존 신산업 집적지역의 연계망 구축

시책 1. 지하철 2호선을 연결하는 서울시 산업 그린라인(Green-line) 조성
시책 2. 서울벤처밸리(테헤란밸리), 여의도 IT산업집적지역, 구로 디지털 산업단지 활성화 지원
시책 3. 기존 IT산업거점을 기반으로 도심, 상암 등을 신규 IT산업거점 지역으로 조성

과제3 산업경제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제의 강화

소비자 선호의 다양화와 급격한 기술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역내 산업체간 협력을 유도하고, 산업과 대학, 연구소간의 연계를 강화하여 개발된 기술을 창업과 상품화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한다.

전략 1. 산·학·연 협력적 연구개발체제의 확립

시책 1. 산·학·연 컨소시엄을 통한 기술개발 프로그램의 지원
시책 2. 개발된 기술의 상품화 및 창업화 지원
시책 3. 산업단체간 협력 강화 지원

전략 2. 기업간 연계를 통한 혁신능력 강화

시책 1. 거점별 산업지원센터의 건립 및 운영의 내실화

시책 2.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공동기술개발 지원

시책 3. 중소기업 협동화사업 적극 추진

과제4 수도권 산업과의 네트워크 강화

서울의 제조업 기반 위축과 서비스 경제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서울의 전략적 제조업을 육성하고 아울러 수도권 지역의 산업간 역할분담을 통해 수도권 차원의 지역혁신체제를 구축하도록 한다.

전략 1. 수도권 차원 산업혁신체계 구축

시책 1. 범수도권 산업혁신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 수행

시책 2. 수도권 산업혁신을 위한 협력체제 구축

시책 3. 수도권 산업벨트 조성을 위한 자치단체간 협력 강화

전략 2. 수도권 산업간 역할 분담

시책 1. 수도권내 산업네트워크 현황의 주기적 조사

시책 2. 수도권의 산업배치계획시 서울 산업과의 역할분담 고려 유도

시책 3. 역외이전기업의 네트워크 유지 지원

과제5 산업정책 집행능력 제고

산업관련 전문가의 육성과 산업관련 주체간 인력교류를 활성화하고 서울시 산업정책의 역량을 강화하여 중앙정부 중심의 산업정책을 탈피하고 지방산업계획기능을 확대하도록 한다.

전략 1. 기존 산업관련 기구의 전문성 강화

시책 1. 산업 관련 민간전문가의 활용 증대

시책 2. 대학, 산업, 공공부문간 인적교류 확대 유도

전략 2. 서울시 산업정책 전담 집행기구의 역량 강화

시책 1. 서울산업발전 자문위원회 설치

시책 2. 서울시와 자치구간 산업경제계획의 역할 분담(전략계획과 집행계획)

시책 3. 도시개발공사의 경제개발 기능 강화



[그림 VI-11] 서울 및 수도권 산업집적지간 네트워크 구상

목표3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산업도시 육성

급격한 기술의 발달에 따른 사회경제적 변화에 유연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산업, 산업공간, 산업인력, 유통공간에 대해 첨단화, 디지털화, 정보화를 유도하여 적응력을 제고하도록 한다.

과제1 기존 산업의 첨단화 지원

서울시 제조업 중 가장 특화된 섬유·의류업과 인쇄출판업 등의 디지털화, 정보화를 유도하고 입지여건을 개선하여 서울의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육성한다.

전략 1. 섬유·의류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유도

시책 1. 패션디자인 지원기능의 강화

시책 2. 봉제인력의 체계적 양성

시책 3. 국제적인 패션디자인 센터의 유치 지원

시책 4. 국내외 마케팅 능력의 강화

전략 2. 출판·인쇄업의 현대화 지원

시책 1. 공동 구매-생산-판매 네트워크 구축 지원

시책 2. 인쇄산업 집적단지의 조성

시책 3. 출판·인쇄업의 디지털화 유도

전략 3. 기존 산업체의 디지털화 지원

시책 1.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

시책 2. 전자상거래지원 자문기관 운영 확대

시책 3. 산업경제정보망 확대 운영

과제2 기존 산업공간의 재구조화

산업용지의 재활용을 유도하여 도시 내 제조업 기반 감소를 억제하고, 전통적 산업공간 내에서 산업공동체 형성 지원 및 대학과의 연계 강화를 통하여 경쟁력 있는 산업공간을 조성한다.

전략 1. 권역별 산업경제체제의 육성

시책 1. 전통적 산업집적지역의 산업공동체화 지원
시책 2. 성동, 홍릉, 영등포 벤처기업 촉진지구 육성
시책 3. 권역별 집적단지 지원센터의 설립

전략 2. 강·남북간 산업간 불균형의 시정

시책 1. 도심, 상암, 뚝섬 등의 개발지역내 신산업에 대한 입지지원
시책 2. 도심, 상암, 뚝섬 등을 중심으로 신산업의 성장을 수용하기 위한 유보지 확보
시책 3. 대학을 거점으로 한 강북지역 산업공동체 결성 지원

전략 3. 준공업지역 및 공장이전적지의 효과적 활용

시책 1. 도심형 산업단지의 조성
시책 2. 산업공동체 조성을 위한 상공복합건물의 건설 및 지원
시책 3. 신산업 유치를 위해 토지이용상의 용적율 인센티브 부여

과제3 경제의 구조변화에 대한 산업인력의 적응력 제고

기술발달과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경제활동에서 탈락하는 산업인력에 대한 정보관리를 강화하고 구산업인력에 대한 직업훈련 및 재교육을 지원한다. 아울러 전통숙련 노동력을 디지털 기술과 결합하여 고급 문화산업 자원으로 활용한다.

전략 1. 기업 및 고용에 관한 자료 축적

시책 1. 산업 및 고용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 실시
시책 2. 장기 산업인력 수급계획의 수립
시책 3. 산업분야별 기술인력에 대한 정보축적 및 제공

전략 2. 구산업인력에 대한 재활용 증대

시책 1. 전통산업 숙련공에 대한 정보축적과 신산업 활용 제고
시책 2. 숙련공을 시제품 제작에 활용

전략 3. 산업구조조정에 따른 소요인력의 공급

시책 1. 정보화로 인한 고용감소 대처방안 마련
시책 2. 대체적 고용 창출원으로써 NGO 지원
시책 3. 실업자, 노숙자의 실태 분석

전략 4. 구산업인력에 대한 재교육 지원 강화

시책 1. IT 등 전문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자료축적 및 홍보 강화
시책 2. 재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
시책 3. 실업자에 대한 재취업·재교육 지원

과제4 기존 유통산업의 재편

유통산업의 대형화, 고급화에 따라 쇠퇴하고 있는 재래시장, 소매점 등의 현대화를 지원하고 전통적인 거점 유통공간은 국내외 홍보와 전문화를 유도하여 관광자원으로 활용한다.

전략 1. 거점 유통공간의 기능강화

시책 1. 대형전통시장을 '쇼핑-관광-여가' 콤플렉스로 조성
시책 2. 전통시장에 대한 국내외 홍보물 제작 지원
시책 3. 전통시장의 안내체계 구축
시책 4. 상가종사자에 대한 상도덕 교육지원
시책 5. 상가에 대한 국내외 안내 체계 구축

전략 2. 재래시장의 현대화 및 재개발의 추진

시책 1. 재래시장의 유형별 특색있는 발전방안 모색
시책 2. 재래시장의 농산물 직거래화 지원
시책 3. 재래시장 상인에 대한 교육 및 경영자문 지원

전략 3. 소매점의 현대화 지원

시책 1. 지역밀착형 소매유통기구(예, 편의점, 할인점)의 네트워크화
시책 2. 소상공인 지원센터의 확대

목표 4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

서울에 있는 중소기업이 영업활동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자금, 기술, 판매 등을 지원하고 생산활동을 제약하는 각종 법제도의 개선과 도시기반시설의 확충을 위해 노력한다.

과제1 생산활동의 지원을 위한 법제도 개선

서울산업경제 현황에 대한 기초자료를 구축하고 산업활동에 대한 각종 장애요소를 파악하여 지역의 특성에 맞는 산업정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전략 1. 서울산업경제 현황에 대한 기초자료 축적

시책 1. 서울의 산업경제구조 변화에 대한 조사·분석 강화

시책 2. 서울산업경제 개발에 대한 지표 개발

전략 2. 서울산업에 대한 제도 개선 노력 강화

시책 1. 도시형 제조업 입지관련 규제 완화

시책 2. 다국적 기업 유치를 위한 금융, 세제, 행정 지원 강화

시책 3. 수도권내 지역간 산업관련 제도개선을 위한 공동노력 강화

전략 3. 지역산업 육성정책 수립 및 집행능력의 강화

시책 1. 중앙정부의 집행기구와 역할분담 명료화

시책 2. 지역실정에 맞는 산업정책조례의 제정

과제2 중소기업 지원활동의 강화

급변하는 경제여건 하에서 중소기업이 지속적인 기술개발과 안정적인 영업을 도모할 수 있도록 입지, 기술, 자금, 마케팅 활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전략1. 도시형 제조업을 위한 입지 지원 강화

시책 1. 도시형 산업용 복합빌딩 건설지원
시책 2. 상공복합기능을 위한 아파트형공장 제도 개선
시책 3. 임대형 아파트형 공장의 확대

전략 2. 중소기업을 위한 기술지원 강화

시책 1. 기술지도대학 확대 실시
시책 2.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움 확대 실시
시책 3. 해외 대도시와의 기술개발 교류사업 확대
시책 4. 외국대학 및 연구소 유치 및 교류

전략 3. 중소기업 자금지원 확대

시책 1.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지원대상 확대
시책 2. 서울신용보증재단의 보증능력 강화
시책 3. 기술개발 투자에 대한 자금지원 확대

전략 4. 창업능력 지원

시책 1. 창업보육센터 설치 확대
시책 2. 서울벤처박람회 확대 실시
시책 3. 여성창업보육센터의 건설
시책 4. 서울벤처투자조합 설치

전략 5. 중소기업의 마케팅 활동 지원

시책 1. 중소기업 상설전시관 확대
시책 2. 중소기업 제품의 브랜드 및 디자인 개선 지원
시책 3. 해외주재관을 통한 지역중소기업 제품 홍보활동 강화
시책 4. 수출상담 및 무역업무 지원

과제3 산업활동을 위한 도시기반시설의 확충

도시 내에서 기업에게 고비용 저효율을 초래하는 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산업정보망을 확충하고 교통통신 인프라와 물류단지 건설을 증대하도록 한다.

전략 1. 산업지역의 교통통신인프라의 개선

시책 1. 신산업집적지역의 신교통수단 도입
시책 2. 산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간통신망 구축

전략 2. 물류단지의 건설을 통한 물류비 절감

시책 1. 서울시 물류구조 및 물류비에 대한 주기적 조사
시책 2. 서울시 권역별 물류단지 건설
시책 3. 물류단지와 유통단지의 통합운영 유도
시책 4. 농수산물유통센터 등 신유통시설 확대

전략 3. 산업정보체계의 구축 확대

시책 1. 생산-물류-유통에 대한 종합정보망 구축
시책 2. 유통정보화 우수사례 발굴 및 보급 확대

목표5 생활하기 좋은 도시 조성

서울을 시민이 생활하기 편안한 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고용기반을 확충하고 소비활동의 안정성을 제고하도록 한다. 특히 서울을 국제적인 수준의 거주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외국인이 살기 편안한 도시를 조성한다.

과제1 고용안정 기반 구축

고용구조의 양극화에 따라 발생하는 고용불안정 문제와 노사갈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직업 훈련기능을 강화하고 근로자 복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며 취업관련 정보기능을 강화한다.

전략 1. 직업훈련기능의 강화

시책 1. 산업구조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훈련과목의 개편
시책 2. 주문형 직업훈련 확대
시책 3. 직업훈련 전문인력의 양성
시책 4. 사업장 내 직업훈련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전략 2. 노사관계의 안정화

시책 1. 노사정협의회 운영의 내실화
시책 2. 지역특성을 반영한 노동정책의 구현
시책 3. 노동문제 관련 주체간 의사소통구조의 활성화
시책 4. 노사문제에 대한 교육 및 상담활동의 강화
시책 5. 근로자 복지공간의 확대
시책 6. 노사관계 우수사업장 발굴 및 포상

전략 3. 실업자 구직정보 제공 및 지원 확대

시책 1. 공공근로사업을 이용한 산업정보체계 구축
시책 2. 취업정보은행의 확대 운영
시책 3. 서울지역산업인력 D/B 구축

과제2 안정적이고 질 높은 소비생활 보장

대도시에서의 소비는 대량화, 다양화의 특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안전하고 저렴한 소비가 보장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농수산물 등 소비제품에 대한 가격정보를 확대하고 제품의 안정성을 제고하도록 한다.

전략 1. 소비자 권익의 보호 증대

시책 1. 소비자 문제에 대한 교육 및 홍보활동 강화
시책 2. 다단계 판매업체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
시책 3. 소비자구제활동의 강화

전략 2. 안정적이고 저렴한 농수산물 수급체계 구축

시책 1. 수도권 도매시장의 권역별 역할분담 유도
시책 2. 유통질서 선진화를 통한 합리적 가격결정 체계 구축
시책 3. 도매시장의 물류하역자동화의 확대 실시
시책 4. 정기적인 농수축산물 안전도 검사 강화
시책 5. 콜드체인 구축 및 유통기한 감독 강화
시책 6. 유전자 변형음식물에 대한 의무표시제 도입

전략 3. 가격정보제공을 통한 시민경제생활의 안정화

시책 1. 소비자 가격정보제공의 확대
시책 2. 개인서비스업체 종합가격정보망 구축

과제3 에너지 절약적 생산 및 소비체제 구축

과도한 에너지 사용으로 인한 생산의 효율 저하와 대기오염 증가를 방지하기 위하여 도시내 주거 및 산업에서 에너지 사용을 감소할 수 있도록 공동에너지 시설, 에너지 절약시설 도입을 위해 노력한다.

전략 1. 집단에너지 사업의 확대 공급

시책 1. 도시가스보급 취약지역 보급 확대
시책 2. 집단에너지 공급지역 확대
시책 3. 집단에너지 시설의 안정성 증대

전략 2. 친환경산업의 육성

시책 1. 권역별 환경친화적 산업공동체 모델 구축
시책 2. 서울시 에너지 조례 제정
시책 3. 환경예산제도 도입
시책 4. 에너지 절약 인증제도 실시

과제4 외국인 거주환경의 개선

외국인이 거주하기 좋은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외국자본의 유치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서울의 삶의 질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의의가 있으므로, 서울의 거주환경에 대해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기초로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지원정책을 실시한다.

전략 1. 외국인을 위한 주택, 교육, 문화시설 지원

시책 1. 외국인 전용 주거단지 개발 확대 유도
시책 2. 외국어판 서울생활가이드북 및 홍보물 발간
시책 3. 외국인학교 설립 지원
시책 4. 외국인 문화촌 건설 지원

전략 2. 서울의 거주환경에 대한 실태조사 강화

시책 1. 서울의 삶의 질 지표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 실시
시책 2. 외국인을 통한 서울생활불편 해소 방안 모색
시책 3. 국내거주 외국유학생에 대한 지원 확대

6. 목표별 정책지표

목표1 동북아의 산업경제 거점도시 육성

[지표 1] 아시아 도시 중 다국적기업 본사수 순위

1997	2001	2005	2010	2015	2020
6위	5위	5위	4위	4위	3위

- 이 지표는 아시아 주요 도시의 다국적기업 본사와 지사수를 순위로 표시한 것이다.
- 1997년 현재 주요 아시아 주요 국가/도시의 다국적기업 본사/지사수를 살펴보면 서울은 각각 19개(6위)와 21개(7위)가 입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까지 서울은 본사와 지사수 모두 아시아 도시 중 3위를 목표로 하고 있다.

[지표 2] 아시아 주요 도시별 1주일간 항공회수 순위

1997	2001	2005	2010	2015	2020
5위	4위	4위	4위	3위	2위

- 이 지표는 아시아 주요 도시별 1주일간 항공회수를 순위로 표시한 것이다.
- 1997년 현재 아시아 주요 도시의 1주일간 항공회수를 살펴보면 서울은 120건으로 5위에 머물고 있다. 2020년까지 서울은 아시아 주요 도시 중 2위를 목표로 하고 있다.

목표2 국가의 산업혁신 중심지 육성

[지표 3] 서울시 전체 사업체 창업률

1995	2001	2005	2010	2015	2020
1.6%	1.8%	2.2%	2.6%	3.0%	3.4%

- 이 지표는 서울 서울시 전체 사업체 창업률을 표시한 것이다.
- 1995년 현재 서울시 전체 사업체 창업률은 1.6%인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서울시는 전년도 대비 전체 사업체 창업률을 3.4%까지 상승시킬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표 4] 서울시 총예산 중 과학기술관련 예산의 비중

1998	2001	2005	2010	2015	2020
1.0%	1.2%	2.0%	3.0%	4.0%	5.0%

- 이 지표는 서울시 총예산 중 과학기술관련예산의 비중을 나타내는 것이다.
- 1998년 현재 서울시 총예산은 9조 8,086억원이나 과학기술관련 예산은 1,027억원으로 1% 수준에 머물고 있다. 과학기술예산 중 연구개발예산은 184억원(1999년)으로 총예산의 0.21%에 불과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 평균치인 0.66%에 훨씬 못 미치고 있다.
- 향후 서울시는 과학기술관련 예산의 비중을 2021년에는 총예산의 5% 수준으로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목표로 하고 있다.

목표3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산업도시 육성

[지표 5] 벤처기업 중 강북지역 비중

1997	2001	2005	2010	2015	2020
30%	21%	27%	31%	38%	40%

- 이 지표는 강북지역에 소재한 벤처기업의 비율을 나타내는 것으로 강남북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강북지역에서 첨단산업이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 2001년 7월 현재 서울시 전체 4,909개 벤처기업 중 도심지역, 동북지역, 서북지역에 소재한 벤처기업의 수는 1,044개로 전체의 21.3%에 불과하며, 이 수치는 1990년대 후반이후 계속 감소하고 있다.
- 도심지역 내 인쇄, 출판업, 문화산업의 첨단화디지털화 유도, 상암 DMC의 개발 등을 통해 강북지역의 벤처기업 비중을 2010년까지 30% 수준을 달성하고 2020년에는 40% 대로 성장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표 6] 서울시 제조업체 1,000개당 제조업 분야 벤처기업수

1997	2001	2005	2010	2015	2020
10	20	25	30	40	50

- 이 지표는 서울의 제조업체 수 대비 제조업 분야 벤처기업 수의 비중을 의미하며, 전통제조업이 새로운 산업여건의 변화에 따라 첨단기업으로 변화해 갈 수 있는가를 나타낸다.
- 2000년 현재 서울시 제조업 분야 사업체 수는 68,395개이며 이중 제조업 분야 벤처기업 수는 1,396개로 제조업 분야 사업체 1,000개당 벤처기업수는 약 20개이다.
- 향후 인쇄출판업, 섬유 및 의복제조업, 정보통신기기업 등 제조업 분야에서 첨단화를 유도하여 제조업 분야 사업체 1,000개당 벤처기업수를 5% 수준인 50개 수준으로 향상시키고자 한다.

목표4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

[지표 7] 아시아 주요 도시별 기업하기 좋은 도시 순위

1997	2001	2005	2010	2015	2020
6위	5위	5위	4위	4위	3위

- 이 지표는 아시아 주요 도시별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순위로 표시한 것이다.
- Fortune지 선정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지닌 도시순위를 살펴보면 1997년 현재 서울은 쿠알라룸푸르, 시드니, 싱가폴, 홍콩, 멜버른에 이어 6위를 차지하고 있다. 향후 서울은 아시아 도시 중 기업환경이 좋은 도시 3위를 목표로 하고 있다.

[지표 8] 전국 7대 대도시도로의 교통혼잡비용 중 서울시 비중

1997	2001	2005	2010	2015	2020
43%	40%	38%	36%	33%	30%

- 교통개발연구원에서 매년 발표하는 전국 7대 대도시도로의 교통혼잡비용 자료를 이용하여 전국 혼잡비용 중 서울시가 차지하는 비중을 계산한다. 1998년 현재 서울시는 전국 7대도시 혼잡비용의 43.5%를 유발하고 있다.

목표5 생활하기 좋은 도시 조성

[지표 9] 서울시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 비율

1995	2001	2005	2010	2015	2020
46.6%	42.6%	44%	46%	48%	50%

- 이 지표는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수치로 서울시 고용기반의 확충정도를 측정하는 지표이다.
- 1995년 서울시의 15세 이상 인구는 8,308천명이고 그 중 취업자는 3,875천명으로 취업자비율은 46.6%이었으나, 2000년에는 15세 이상 인구가 8,396천명이고 취업자는 3,575천명으로 42.6%로 점차 감소하고 있다.
- 인구의 고령화 추세에도 불구하고 이 지표가 높아지기 위해서는 실업률이 감소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65세 이상 인구의 취업률이 높아져야 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서울시 취업자 비율을 50%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지표 10] 세계도시 삶의 질 순위

1995	2001	2005	2010	2015	2020
	93	70	60	50	40

- 이 지표는 William M. Mercer사의 삶의 질 평가를 기준으로 서울의 순위를 표시한 것으로 뉴욕을 기준(100점)으로 상대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 서울은 2000년에는 92위(81.5점)였으나 2001년에는 오히려 감소하여 93위(80.5점)를 기록하고 있다. 2005년에는 70위, 2010년에는 60위, 2015년에는 50위, 2020년에는 40위를 목표로 하고 있다.

Ⅶ. 주택계획



1. 현황과 문제점
2. 여건변화 전망
3. 미래상
4. 계획방향
5. 목표체계
6. 목표별 정책지표
7. 권역별 계획

1. 현황과 문제점

1) 양적 측면

• 아파트에 대한 선호 증가로 주택재고에서 아파트 비중 계속 증가

- 2004년 말 현재 주택재고는 약 2,416천호이며, 이 중 아파트가 49.3%, 단독주택이 23.2%, 다세대주택이 17.1%를 차지하고 있다. 아파트의 비중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00년 이후 주택시장의 활황으로 다세대주택 역시 2000년 11.0%에서 2004년 17.1%로 크게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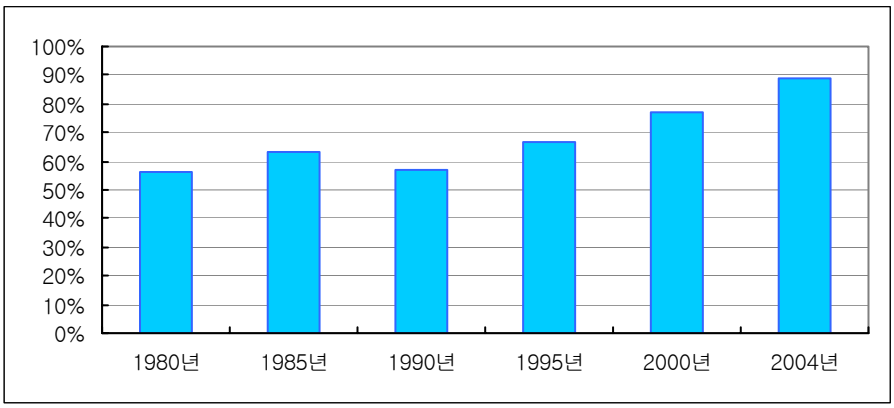
[표 VII-1] 유형별 주택재고 현황 (단위 : 호, %)

연도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계
1995	781,613 (41.9)		737,632 (39.6)	157,092 (8.4)	187,129 (10.0)	1,863,466 (100.0)
2000	611,414 (29.6)	112,343 (5.4)	961,868 (46.5)	154,315 (7.5)	228,113 (11.0)	2,068,053 (100.0)
2003	569,064 (24.3)	116,097 (5.0)	1,120,107 (47.8)	139,411 (6.0)	398,020 (17.0)	2,342,699 (100.0)
2004	561,250 (23.2)	116,197 (4.8)	1,190,834 (49.3)	134,184 (5.6)	413,772 (17.1)	2,416,237 (100.0%)

자료 : 서울시, 서울통계연보, 각년도;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 꾸준한 주택공급으로 주택보급률 90% 근접

- 2004년 공식 주택보급률(보통가구 대비 사유주택수)은 89.2%로 중구, 마포구, 종로구, 강남구, 서초구는 이미 100% 이상을 달성한 반면, 중랑구와 광진구는 각각 62.8%, 66.1%로 자치구간 격차가 상당히 크게 나타났다.



[그림 VII-1] 공식 주택보급률 추이

• **공공임대주택 공급부족**

- 공공임대주택은 공급프로그램의 종류에 따라 영구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재개발·주거환경개선 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등의 유형이 있으며, 현재 재고는 111,518호로 총 주택대비 약 5%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 공공임대주택의 적정 공급 수준에 대해서는 특별한 기준이 없이, 각 국가, 또는 도시의 동원 가능한 자원 규모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전반적으로 재고가 매우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표 VII-2] 공공임대주택 현황 (단위 : 호)

영구임대	공공임대	재개발/ 주거환경개선 임대	국민임대	계
47,224	18,754	45,295	245	111,518

자료 : 서울시, 서울시 내부자료, 2005.

- 향후 공공임대주택을 비롯한 주거복지정책 소요가구는 대략 500천가구 정도로 추정된다. 소득 4분위 이하 임차가구 중 최저주거기준, 가구순자산, 가구원수, 노인 및 장애인, 사회취약계층 여부를 고려하여 추정한 결과 공공임대주택 소요가구는 262천가구, 주거비 지원 소요가구는 237천가구로 나타났다.

[표 VII-3] 주거복지정책 소요가구 추정

주거복지 프로그램		소요가구 (천가구)
공공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73.1
	국민임대주택	189.1
	소 계	262.2
주거비 지원	전세자금 융자	170.4
	임대보증금 융자	26.1
	월세 보조	40.9
	소 계	237.4
총 계		499.6

2) 질적 수준

• **저소득계층의 주거수준 열악**

- 소득 및 자산수준을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주거점유형태별 주거수준은 보증부월세 및 월세가구에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것으로 나타난다.
- 또한 주택 면적이 작을수록 입식부엌, 수세식 화장실, 온수 목욕시설 등을 갖추고 있는 주택의 비율이 낮아지며, 주로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전용면적 9평 이하 주택의 경우 이와 같은 주택 시설을 갖추고 있는 주택이 평균을 밑돌고 있다.

[표 VII-7] 점유형태별 주택시설 (단위 : %)

구 분	자가	전세	보증부 월세	월세	사글세	무상	계
입식부엌	97.7	96.5	89.6	56.3	65.1	79.0	95.0
수세식화장실	96.6	94.0	81.4	49.3	52.0	78.6	92.3
온수목욕시설	96.2	92.9	80.6	47.6	53.1	75.2	91.6

주 : 각시설별 단독사용의 비율임.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000.

[표 VII-8] 규모별 주택시설 (단위: %)

구 분	9평이하	10평 -14평	15평 -18평	19평 -26평	27평 -35평	36평이상	계
입식부엌	90.7	96.9	97.1	98.0	97.2	98.6	95.0
수세식화장실	85.0	95.7	96.6	96.8	95.3	98.2	92.3
온수목욕시설	83.9	94.2	95.7	96.7	95.6	97.5	91.6

주 : 각시설별 단독사용의 비율임.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000.

• **개인당 사용면적 증가**

- 1인당 사용면적은 1990년대 초반 획기적으로 개선되었으나, 주택의 대형화와 가구규모의 축소에 따라 향후 증가할 여지가 있다.

[표 VII-9] 가구당 및 1인당 사용방수, 사용면적 (단위 : 개, 평)

구 분	1980	1985	1990	1995	2000	전국(2000)
가구당사용방수	2.0	2.1	2.5	3.0	3.3	3.4
1인당사용방수	0.4	0.5	0.7	0.9	1.1	1.1
가구당사용면적	13.0	14.5	14.7	16.3	17.8	18.9
1인당사용면적	2.9	3.6	3.9	4.8	5.7	6.0

주 : 국제평균 1인당사용면적은 5.5평이며 중상위국 1인당사용면적은 6.7평임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각년도.

• 유럽의 복지국가인 프랑스, 독일, 네델란드, 스웨덴의 경우

(단위 : 년)

국 가	프랑스	독일	네델란드	스웨덴
가구당사용방수(개)	3.9(2002)	5.1(2003)	3.9(2003)	4.2(2003)
가구당사용면적(㎡)	112.6(2002)	113.9(2003)	115.5(2000)	128(2003)
1인당사용면적(㎡)	37.5(2002)	40.1(2002)	41.0(2000)	44.4(2003)

자료: Housing Statistics in the European Union 2004

[표 VII-7] 연도별 평균 주택 규모 및 평균 가구원 수

년도	평균주택 규모(평)	평균가구원수(인)
1980	24.7	4.5
1985	28.6	4.1
1990	28.8	3.7
1995	28.7	3.4
2000	28.4	3.1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각년도.

• 방수 부족에 따른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증가

- 서울시 전체가구 중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는 20.2%로 그중에 임차가구가 75.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준미달가구 중 방수기준 미달이 18.9%, 면적기준 미달이 6.1%, 방수와 면적기준 모두 미달이 4.8%로 미달가구의 93.6%가 방수미달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I-8] 서울시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현황 (단위 : %)

구분	방수/면적기준 미달				방수·면적 기준 충족
	소계	방수 미달	면적 미달	모두 미달	
서울시	20.2	18.9	6.1	4.8	79.8
경기(서울 통근권)	19.5	17.7	6.7	4.9	80.5

자료 : 2004 서울·수도권 주민주거실태 및 정책수요조사.

• 최저 주거기준의 정책적 활용 미흡

- 최저주거기준은 1998년 서울시의 주택조례로 규정된 이래 2003년 주택법에 전국 기준이 명시되었으나, 정책지표로써 본격적인 활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는 공공임대주택의 재고부족과 임대료보조 재원 미비, 행정관리 체계 미흡에 기인한다. 향후 주택정책이 질적인 정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우선 최저기준 미달가구 해소에 역점을 둘 필요가 있다.

[표 VII-9] 최저주거기준

가구원수	1	2	3	4	5	6	7
실(방) 구성	1K	1DK	2DK	3DK	3DK	4DK	4DK
전용면적(㎡)	12	20	29	37	41	49	52

주 : 1) 숫자는 침실수, D는 식사실, K는 부엌을 뜻함.
2) 인구주택총조사에서는 거실을 1개의 방으로 간주함.
자료 : 주택법

3) 주택소유형태 변화

- 주택유형별 소유형태 차이 : 단독주택·아파트는 자가거주, 다가구·다세대주택은 차가거주
  - 2004년 현재 총 주택의 42.2%가 자가거주주택으로 단독주택과 아파트의 경우 자가거주비율이 높은 반면,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은 주로 전세 형태의 차가거주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피스텔과 같은 비주거용주택의 경우 월세비율이 높았다.

[표 VII-10] 주택유형별 점유형태별 가구비율 (단위 : %)

구분	자가	전세	(보증부)월세/사글세	계
단독주택	67.2	28.5	4.4	100.0
다가구주택	24.6	62.9	12.6	100.0
아파트	50.2	46.9	2.9	100.0
연립주택	39.3	59.4	1.3	100.0
다세대주택	28.8	66.3	4.9	100.0
기타	31.0	44.8	24.1	100.0
전체	42.2	51.9	5.9	100.0

자료 : 2004 서울·수도권 주민주거실태 및 정책수요조사.

- **임대주택으로써 다가구주택의 지위 불안정**
  - 다가구, 다세대주택의 경우 충분한 재고가 확보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 반환에 대한 불안과 주차장 등 부대시설 부족 등으로 인해 주택수요를 흡수하는데 한계가 있다. 앞으로 보증금 반환장치의 보장과 주거환경개선, 임대주택의 질적 수준 개선을 통해 다세대 주택이 중저 소득계층을 위한 임대주택의 대안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

4) 주택가격 및 주거비 부담

• **소득에 비해 높은 주거비 부담**

- 소득대비 주택가격비율을 나타내는 PIR은 서울이 전국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며, 국제적으로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2000년도에 PIR이 7.92까지 증가한 것은 외환위기 이후 소득은 감소한 반면, 주택가격은 오히려 상승한 결과이다.
- 임대료 대비 소득비율(RIR)은 좀더 심각한데 서울은 대략 상한선으로 간주되는 30%를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소득감소와 최근의 임대료 급등 현상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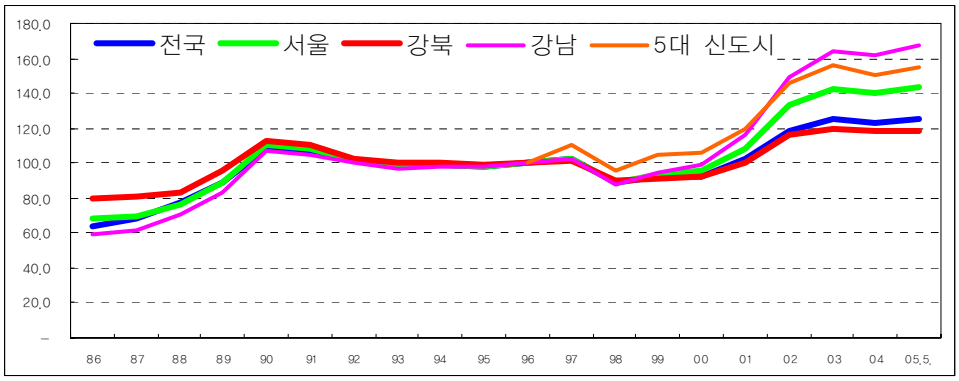
[표 VII-11] PIR 및 RIR

구 분	PIR					RIR
	1997	1998	1999	2000	2004	2004
전 국	4.58	4.16	4.58	5.0	-	-
서 울	6.25	6.67	6.67	7.92	7.23	30.7

주 : 1) 외국의 경우 PIR은 미국 3.26(1999), 영국 4.0(1999), 독일 5.05(1997), 일본 5.64(수도권 4.82)(1999) 임.
2) 2004년도는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4 서울·수도권 주민주거실태 및 정책수요조사' 결과임
자료 : 국민은행, 서울시정개발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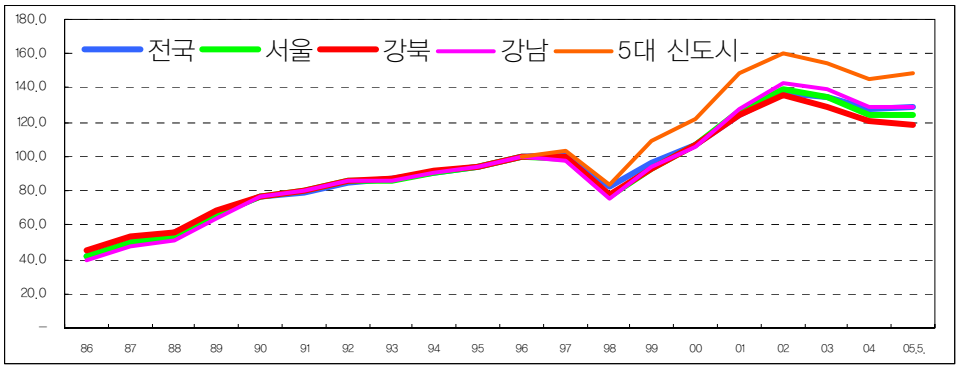
• **매매가격 급등 및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감소**

- 서울시의 주택매매가는 2000년~2005년 5월까지 약 48.7% 상승하였으며, 강남지역이 주택가격 상승을 주도하였다(강남지역 63.4%, 강북지역 28.2% 상승).
- 주택전세가는 외환위기 이후 2002년까지 급격하게 상승하였으나, 2002년 9월 이후 하락세 지속으로 2000년~2005년 5월까지 약 16.5% 상승하였다(강남지역 21.3%, 강북지역 11.5% 상승).



자료 : 국민은행 홈페이지. (1996년 12월 = 100)

[그림 VII-2] 주택매매가격지수의 변화 추이



자료 : 국민은행 홈페이지. (1996년 12월 = 100)

[그림 VII-3] 주택전세가격지수의 변화 추이

- 매매가격의 꾸준한 상승으로 매매가 대비 전세가격의 비율은 계속 감소하고 있다. 매매가 대비 전세가격은 강북이 강남보다 높다.

[표 VII-12] 전세가/매매가비율 (단위 : %)

구분	전국	서울			수도권
		전체	강북	강남	
2000	65.7	60.6	64.6	58.2	63.3
2002	65.3	55.5	63.6	50.5	58.1
2004	57.2	49.1	55.4	44.0	50.3

주 : 각년도 12월말 기준임.
자료 : 국민은행, 월간 도시주택가격 동향조사, 각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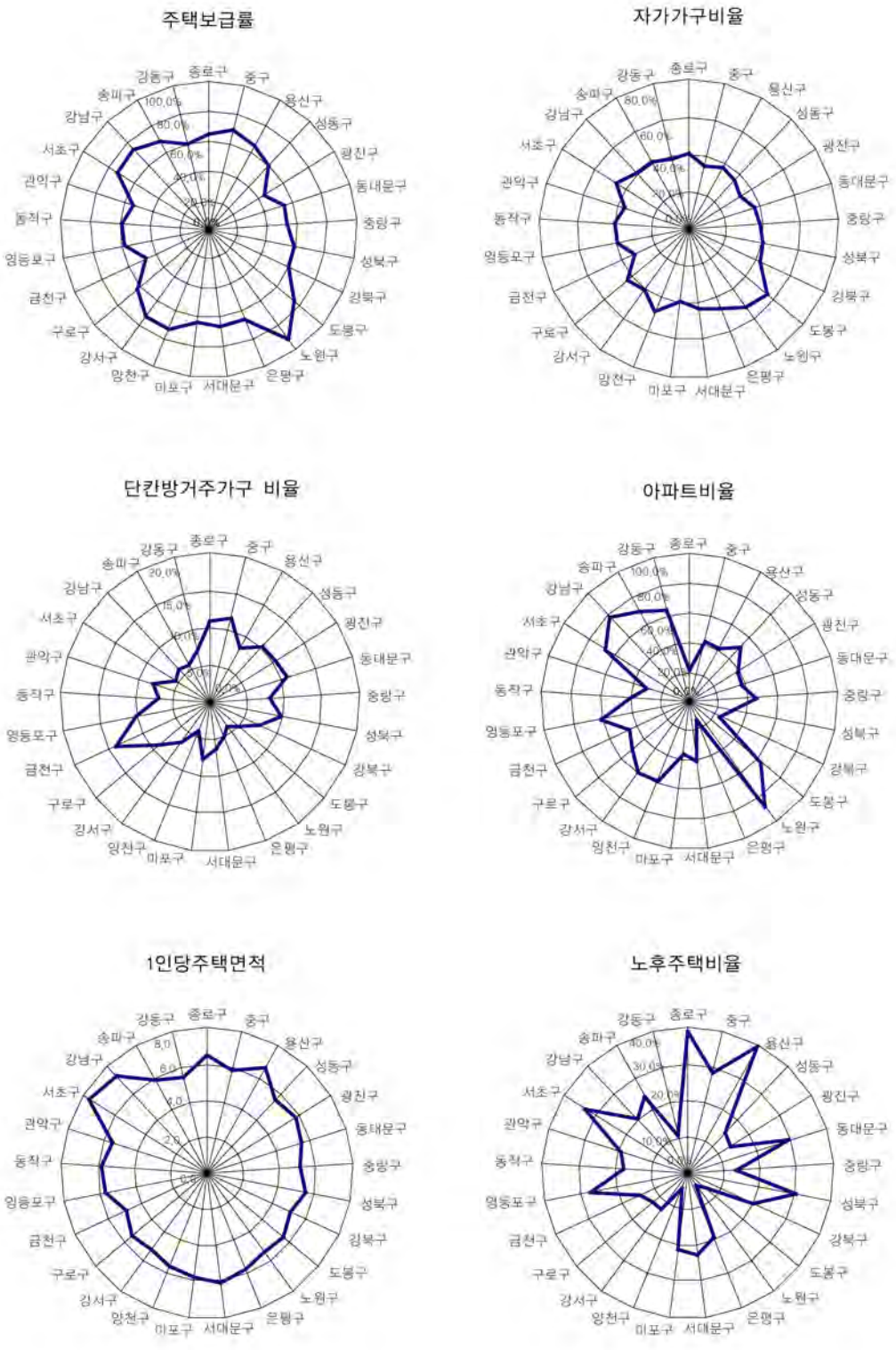
5) 강남북 주거수준 격차

• **강남북간 주택가격 격차 심화**

- 강남북간 주거수준 격차는 주택가격의 격차로 축약될 수 있다. 서울에서 가장 주택가격이 높은 구는 강남, 서초, 용산, 송파, 강동, 양천구 순으로 용산구를 제외한 강남지역이 상위 5위권에 속해 있다. 주택가격이 높을수록 학교, 공원, 도로 등 도시인프라 시설에 대한 투자 여력이 커져 자연히 주거환경이 좋아지고, 소득이 높은 가구들이 집중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 **주거환경지표의 강남북 대비 심화**

- 주택의 양적 질적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들의 강남북 간 대비가 뚜렷해지고 있다. 주택보급률, 자가율, 아파트비율은 강남에서 모두 높게 나타나는 반면, 단칸방 거주율은 금천, 중, 동대문구, 1인당 거주면적의 협소함은 동대문, 중랑, 금천구, 노후주택비율은 종로, 중, 용산, 성북구 등 주로 강북지역에서 높게 나타난다.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000.

[그림 VII-4] 자치구간 주택현황 비교

2. 여건변화 전망

1) 주택수요측면

• **인구증가의 둔화로 신규수요 축소**

- 인구구조와 노령화정도는 주택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로, 1950년대 베이비붐세대(1954～63년)가 1990년대 주택대량소비의 주역을 담당하였다. 2000년도 초반까지는 1970년 전후에 급증한 출생인구가 주택수요를 뒷받침해 줄 것이지만, 2005년 이후부터는 증가율이 점차 둔화하여 2015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VII-13] 서울시 장래 인구수 및 노령인구 추계

구 분	2000	2005	2010	2015	2020
인구(천명)	10,373	10,216	10,038	9,914	9,798
인구증가율(%)	-	-1.51	-1.75	-1.23	-1.16
노령인구비율(%)		7.08	9.29	11.97	15.11

주 : 1) 노령인구는 만 65세 이상임.
2) 인구추계 방법은 제2장 참조.

• **대체수요 중심의 신규수요 변화**

- 서울 및 수도권의 주택시장은 이미 1990년대 중반이후 양적으로는 어느 정도 부족문제가 해소되었고, 도시 내 택지부족에 따라 기존 토지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재건축 사업이 본격화되는 등 상당수의 신규수요가 대체수요의 성격을 띠고 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에는 주택신규분양의 주 수요세력인 중산층이 약화된데다 주택보급률이 실질적으로 거의 포화상태에 있기 때문에 기존주택의 대체수요나 투자목적의 수요성향이 뚜렷해지고 있다.

- 연간 총주택건설량 중에서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율은 1997년 외환위기 이전 대략 45% 내외에서 외환위기 이후 50～60% 정도까지 증가하였으며, 향후 수도권 인구집중이 완화되지 않는 한, 수도권의 주택수요는 연간 20만 호 정도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 **주택수요 전망**

- 장래 주택수요량은 소득증가로 인해 소형주택 수요는 감소하고, 중형 및 대형주택의 수요는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0년까지 소형주택 47.8만호, 중형주택 38.3만호, 대형주택 37.7만호 정도의 추가 수요가 전망된다.

[표 VII-14] 2001-2020 주택수요량 추계

구 분		2003~2005	2006~2010	2011~2015	2016~2020
주택수요 (천호)	전용 60㎡ 이하	129	166	117	66
	전용 60㎡ 초과~85㎡	51	91	110	131
	전용 85㎡ 초과	48	87	109	133
	합계	227	345	337	329

주 : 장기 주택수요 예측은 Mankiw-Weil의 인구 및 연령별 인구에 기초한 인구학적 방법을 이용하여 추정. 추정에 이용된 자료는 각 가구의 주거면적, 연령별 가구원수, 소득 및 주거비용으로 통계청의 2000년 기준「가구소비실태조사」자료 이용. 가구별 주택수요 결정요인 추정 후 통계청의 연령대별 인구변화 전망자료와 소득 및 주거비용에 대한 가정을 통하여 총 주택수요 도출.

• 전세가/매매가 비율 증가와 월세 부담으로 인한 자가수요 증가

- 주택이 재산가치 보전기능을 하는 한, 소유에 대한 열의는 지속될 것이며, 장기적으로 전세가/매매가 비율 상승과 정부의 금융·세제지원 조치로 자가수요는 꾸준히 유지될 것이다. 현재의 주택소유율(자가거주율이 아닌)은 약 50～55% 정도로 추정되지만 앞으로 주택 청약 대기자와 소득의 상승을 고려할 때 주택소유율은 향후 10～15년간 60～65%선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단독가구와 1970~1980년대에 걸쳐 형성된 신중산층의 2세대가 신규가구를 형성함에 따라 분양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적어도 향후 10년간은 지속될 전망이다.

• 가구분화에 따른 소형주택 수요 증가

- 생활방식이 서구화되고 개인주의가 보편화되어 감에 따라 자녀들의 독립, 독신 및 이혼 등으로 1인 가구와 비혈연 가구의 대폭적인 증가가 예상된다. 따라서 이들의 소득수준에 맞춘 저렴하고 다양한 형태의 소형주택 공급이 필요하며, 이들의 수요에 맞추어 도심, 부도심 지역 또는 단독주택 밀집지역 등에서 다양한 수준의 소형주택공급이 예상된다.

[표 VII-15] 1인 가구 비율추정 (단위 : %)

구 분	2000	2005	2010	2015	2020
전 국	14.79	16.90	18.44	19.88	21.46
서 울	15.11	17.40	18.97	20.51	22.55

주 : 1인가구 비율추정 방법은 제2장 참조.

2) 가격측면

• 연평균 소득 대비 주택가격의 높은 비율 지속

- 현재 평균 주택가격은 평균 연소득의 7.2배 수준에 이르며 이 비율은 좀처럼 낮아지지 않을 것이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중산층의 소득감소와 저금리 정책으

로 인한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해 당분간 소득대비 주택가격이 많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 **노령화사회의 진입에 따른 주택가격의 안정적 기조 유지**

- 또한 65세 이상 노령인구가 2020년에는 15.1%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령화사회가 도래하면 주택, 주식 등 자산을 처분해 노후생활자금을 마련하는 것이 보편적인 현상으로 우리나라의 베이비붐세대 부모들도 10년 후에는 은퇴가 시작될 것이며, 따라서 보유하고 있는 집이나 주식을 팔아 생활자금을 마련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될 경우 주택가격의 저하까지도 예상된다.

• **저소득층 주거지로써 다세대·다가구주택 역할 강화**

- 결국 향후 저소득층 주택문제의 구조는 주택소유가 가능한 대상계층(중산화 가능계층)과, 보다 기본적인 문제, 즉 최저의 주거수준 유지가 기본목표인 대상계층(주거빈곤계층)으로 이원화된 구조를 보일 것이다. 다가구, 다세대 주택은 중저소득층을 위한 주거로, 아파트는 중산화 가능계층 이상의 주거로 성격이 더욱 분명해 질 것이며, 따라서 기존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은 저소득층 주거수준 제고와 이들의 중산층으로의 진입을 위한 디딤돌로써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3) 주택임대측면

• **월세중심으로 임대시장 구조개편**

- 장기적으로 저금리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전세금의 목돈 활용이 어려워짐에 따라 이자율 보다 높은 월세 전환율로 전세주택의 월세 전환이 증가할 전망이다. 또한 전세가 유지되더라도 수익보전을 위해서는 주택 가격만큼 전세가격의 상승이 불가피해질 것이다. 오히려 주택의 감가상각 부분을 고려한다면 전세가격이 매매가격을 상회할 가능성까지도 배제할 수 없다.

• **거주의 편리성 추구에 의한 임대수요 증대**

- 앞으로 서울시에서의 지배적인 주거형태는 자가거주가 아닌 차가거주가 될 것이다. 자가 주택은 재산보전과 증식의 수단으로 소유하되, 거주는 교통이 편한 곳에(직주근접), 새로 지은 편리한 아파트나 쾌적한 교외, 원룸 아파트, 주상 복합 등 그때그때 편리하게 세들어 살고 또 쉽게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는 임대를 선호하는 경향이 높아질 것이다.

4) 주택공급측면

• **공급잠재력 전망**

- 서울의 주택공급잠재력은 최대 159만호 정도로, 그중에 90% 이상이 도시 및 주택재정비사업을 통해 공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단독주택 재건축사업, 공동주택재건축사업, 뉴타운사업 등 재건축사업의 공급잠재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장래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위해서는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필요하다.

[표 VII-16] 2001-2020 주택공급잠재력 전망 (단위 : 천호, %)

구분	합계	신규 개발					재정비사업					
		소계	택지 개발	GB 해제	미개발지	도시계 획지역	소계	재개발 주거환경 개선	도심 재개발	뉴타운	노후 공동주택 재건축	단독주택 재건축 등
총건립 가능수	1,591.2 (100.0)	127.4 (8.0)	16.8 (1.1)	78.2 (4.9)	22.3 (1.4)	10.0 (0.6)	1,463.8 (92.0)	208.7 (13.1)	80.8 (5.1)	295.3 (18.6)	313.8 (19.7)	565.2 (35.5)
순증가 주택수	964.1 (100.0)	127.4 (13.2)	16.8 (1.7)	78.2 (8.1)	22.3 (2.3)	10.0 (1.0)	836.7 (86.8)	97.6 (10.1)	74.7 (7.7)	47.7 (4.9)	167.0 (17.3)	449.8 (46.7)

주 : 관련 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주택공급규모를 적용하였고, 단독주택 재건축사업의 경우는 용적률 200%를 적용.

• **리모델링 수요의 증가**

- 향후 서울의 주택수요는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대체수요가 대부분으로, 주택의 노후화가 진행됨에 따라 재건축 및 리모델링사업 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이다. 고층고밀주택의 경우 용적률의 제한으로 점차 리모델링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직주근접화 및 도심부 주택공급 증가**

- 교외화, 원거리화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서울시내에서는 직주근접화가 자연스럽게 진행될 것이다. 이미 서울의 교통, 특히 도로교통 사정은 시민들에게는 충분한 고통을 주고 있고, 따라서 스스로 교통수단 이용횟수와 거리를 줄이고자 하는 노력이 개별적인 차원에서 전개될 것이다. 또한 역세권을 중심으로 지하철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대한 주택선호가 증가하게 될 것이다.

- 직주근접화는 곧 도심공동화를 방지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도심부에서의 주택공급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도심의 비싼 토지를 주거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 규제완화가 전제되어야 한다.

• **주거의 광역화와 통근의 원거리화**

- 수도권 인구집중문제가 지속된다면 서울시내의 주택공급은 한계에 다다르게 될 것이다. 이 경우 보다 쾌적한 주거여건에 대한 욕구로 인해 시 외곽지역의 지속

적인 개발이 이루어질 것이며, 고속전철과 같은 교통시설의 혁신으로 70-80㎞권(천안권)까지의 교외화가 가능해 질 것이다.

뉴타운 사업	
배경	- 뉴타운 사업이란 종래 민간주도의 개발이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충분한 고려없이 주택중심으로만 추진되어 난개발로 이어지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새로운 '기성시가지 재개발 방식'이라고 할 수 있음. - 주택재개발이 민간개발 편의위주로 개별주택 가치중심의 소규모 개발이라면 '뉴타운 개발' 은 공공이 원하는 민간사업으로 적정규모의 생활권역을 대상으로 한 충분한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종합적인 도시계획사업임. - 단순한 도시구조의 정비, 개선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계층과 세대가 함께 살 수 있는 '인간 중심의 커뮤니티' 를 조성하고, 도시전체가 조화를 이루는 '21C형 고품질의 복지주거환경공간'을 만들어 가는 것임.
필요성	- 지역간 격차해소 - 난개발 방지 - 주택문제의 해결 - 교육환경의 격차해소 - 일거리 창출과 경기부양 효과
개발유형	- 뉴타운 개발은 노후불량주택밀집지역, 미(저)개발지역, 도심이나 인근지역의 무질서하게 형성된 기성시가지를 주된 대상으로 함. 이들 대상지역의 서로 다른 자연환경, 개발현황, 지리적 여건 등에 맞게 체계적인 개발이 가능하도록 다음과 같이 3가지 개발유형으로 사업이 추진됨. 1. 주거중심형 타운 · 주택재개발 구역 등 노후 불량주거지 밀집지역 등을 중심으로 적정 생활권역에 대해 전체 도시기반 구조를 개선하여 건설 2. 도심형 타운 · 도심 또는 인근지역에 주거, 상업, 업무 기능 등을 복합 개발하는 방식으로 건설됨. 대형상가, 문화시설, 관공서, 업무시설은 물론 아파트, 주상복합빌딩 등을 함께 배치하여 직주근접형 도심커뮤니티를 조성 3. 신시가지형 타운 · 미(저) 개발지 등을 대상으로 주거, 상업, 생태, 문화 기능 등을 갖춘 신시가지를 조성하는 방식으로 개발
개발원칙	1.도시관리원칙에 충실한 정비 · 전체 도시관리계획 및 지역특성에 적합한 개발 · 도로, 공원, 학교 등 적정수요의 도시기반시설 설치 · 다양한 주택단지, 주거유형 등 주거수준의 질적 제고 2.사회통합형 개발·정비 · 다양한 계층과 세대가 더불어 함께 사는 커뮤니티 조성 · 교육환경 개선을 통한 사회적 격차 완화 · 복지와 안전이 보장되고, 이웃 문화가 살아 숨쉬는 주거환경 3.기능복합형 개발·정비 · 토지 복합이용을 통한 직·주 및 상업·생활편익시설 근접유도 · 공공시설, 복지시설 등 복합화 4.친환경적 개발·정비 · 보행·자전거 중심으로 정비하고 교통유발 요인 최소화 개발 · 생태기반지표 도입을 통한 친환경적 개발 · 충분한 녹지확보, 빗물의 적정이용, 친환경적 자재 활용 등 5.미래형 도시관리시스템 구축 · 자원·에너지 절약형 도시, 정보화 도시 기반 조성 등

주 : 서울시청 홈페이지 http://development.seoul.go.kr 참조

3. 미래상

"주거가 안정된 도시"

- 저소득층 및 서민의 적정주거 확보 -

-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저소득층이 증가하고 저금리로 인해 임대차 시장이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되어 감에 따라 주거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저소득층에 대한 과도한 주거비 부담 문제를 해소하고자 주거복지정책을 강화하고 다양한 주거안정화 시책을 폄으로써, 중저 소득계층의 시민들이 적절한 주거 서비스를 소비하며 더불어 살 수 있는 서울을 만든다.
- 공공임대 주택재고의 양적인 확대를 통해 저소득 시민에게 양질의 저렴한 주거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정책을 강구한다.
-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민간부분에서 다양한 주택공급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주택가격의 안정과 임차인 주거안정을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시행한다.
- 주택의 유지, 관리 및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제도적 지원체제 구축을 통해 주거의 질적 수준 향상과 주택의 수명연장을 통해 다양한 주택재고를 확보하도록 한다.
- 주택정책자금 확보를 통해 저소득층 정책프로그램으로부터 소외된 가구와 그 밖의 지원이 절실한 가구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개발한다.

4. 계획방향

-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복지 정책을 강화한다.**
  - 공공임대주택의 양적 확대를 위한 방안 마련
  - 소외계층을 위한 주택정책 프로그램 개발
  - 복지정책과 주택정책, 다양한 저소득층 주택프로그램간 연계강화
- **부담가능한 수준의 다양한 주택공급 증진을 위해 노력한다.**
  - 기존 주택지내 소규모 택지활용 효율화 방안 제시
  - 중대형 민간임대법인 육성
  - 임대주택의 질적 수준 향상과 임차인의 주거권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 품질관리를 통한 재고주택의 질적 수준 향상
- **도시환경의 질적 수준을 고려하여 주택을 재정비한다.**
  -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사회적 비용 최소화 시책 병행
  - 대규모 재건축사업의 주택시장 파급효과 최소화
  - 도시개발, 재개발 사업의 수익자부담원칙 강화
  - 공공시설 중심의 동네주거환경개선 시책강화
- **주택의 양적 공급에서 질적 유지관리로 정책방향을 전환한다.**
  - 서울시 주택문제가 양적인 문제에서 질적인 문제로 전환되고 있음에 따라 주택유지관리의 투명화, 전문화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마련
  - 주택 관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관리체제 강화
  - 주택관리에 주민참여 유도를 위한 사회적 시스템 구축

5. 목표체계 "주거가 안정된 도시"

목표	과제	전략	시책	단기	중장기	정책지표
1. 저소득층 주거복지 강화	공공임대주택 확대	• 기존 주택지 내 스톡 확보	- 재개발사업지구 임대주택 매입 - 다가구주택 매입, 임대주택 활용 - 최저소득계층을 위한 영구임대주택 추가 확보		✔	지표 1. 전체 주택재고 대비 공공임대주택 비율
		• 저렴한 택지 확보	- 기존 시유지, 기존 택지개발지구, 택지개발예정지구 등 공공임대주택 부지 확보 - 기능이 상실된 재래시장 용지 확보 - 미개설 도시계획시설 용지 중 임대아파트 가능지 확보 - 도시 내 자투리땅 확보	✔		
	소외계층 주거확대	• 공공임대주택의 통합운영을 통한 공급효과 제고	- 통합관리를 위한 입주자격 개선 - 임대료 부과체계 개선 - 입주자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한 통합관리체계 구축 - 자활·가족노숙자, 도시개발사업 철거세입자에 대한 입주 우선자격 부여	✔		
		• 고령자, 장애인용 스톡 확보	- 공공임대주택의 1-2층을 노인가구 및 장애인가구를 위한 임대주택으로 개조·활용 - 노인·장애인 대상 민간주택 건설 및 개조 융자 지원 - 다가구 매입임대주택의 그룹홈 활용		✔	지표 2. 최저주거 기준 미달가구 비율
	최저기준 미달가구 해소	• 주거단위 및 주택상태 파악	- 동별 데이터 및 관리시스템 구축 - 단독주택 및 상가주택 내의 주거단위(1개 이상의 방과 부엌, 독립된 출입구를 가진 영구건물) 조사		✔	지표 3. 기금 적립액수
		• 주거급여와 연계	- 주거급여의 현실화 - 임대료 보조체계 구축 - 주택기금을 활용한 월세 보조제도 확대 - 전세자금 및 임대보증금 융자제도의 개선 및 확대 : 최저기준과 연계		✔	지표 4. 임대료 보조수혜 대상자 수
		• 질적 수준 개선 지원	- 주택개량 융자 지원 - 집수리 지원	✔		
	공공 주택정책 기금 확보	• 지속적인 재원조달창구 확보	- 서울시 주택기금 확대 - 지속적인 재원 발굴	✔		
		• 재원활용계획 수립	- 지원프로그램 우선순위 지정 - 자금 운영 및 관리체제 구축		✔	

목표	과제	전략	시책	단기	중장기	정책지표
2.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저렴한 양질의 주택재고 확보	• 저렴한 주택 개발	- 에너지 효율적 신규주택의 개발		✔	지표 5. 주택보급율
		• 소형아파트 공급 확대	- 주상복합아파트의 중소규모 주택공급 촉진 - 기존 주택지 내 소규모 택지활용 효율화	✔		
		• 양호한 주택재고 확보	- 가구변화에 따른 주택공급계획 수립 - 주거공동체 수요를 기반으로 하는 시설 확대 : 공부방, 보육시설, 주민자치회 시설 등		✔	
		• 매물정보 유통 확산	- 저소득층 주택매물정보 수집체계 구축 - 구청, 동사무소를 통한 시민의 정보망 접근 확대 - 부동산거래 지도·지원유지관리 효율화	✔		
	양질의 민간임대주택 공급	• 법인 민간임대업 육성	- 장기 민간임대주택 지원 - 적정 임대료 부과 - 생명보험 등 기관투자가의 임대사업 육성 - 임대관리업 육성		✔	지표 6. 신규주택 중 소형주택 공급비율
		• 임대주택의 질 향상	- 부동산 거래시 주택 체크리스트 작성 의무화 - 주택의 성능표시 의무화 - 사전 공동점검제 실시	✔		
		• 임차인 주거권 보호	- 전세보증금 반환 보장 - 임차인의 계속거주권 보장 - 거래시 표준계약서 활용	✔		지표 7. PIR
	주택의 품질 개선	• 주택의 질적 품질관리	- 주택성능표시제도 도입 - 주택상태조사(Housing Condition Survey) 시행 - 재고주택의 질적 수준 데이터베이스화를 통한 사회적 정책수요 도출		✔	
3. 도시정비와 주택개발의 조화	기존 주거환경과 조화 있는 주택개발	• 재정비사업 원활화	- 재개발·재건축사업 매뉴얼 제작 - 재건축·재개발 전문 컨설팅 육성 - 역세권 지역의 고도이용 추진 - 다양한 재원조달 방안 개발 - 재정비사업시 복지시설의 병설 추진	✔		지표 8. 주택의 평균 사용연수
		• 수익자 부담에 의한 공공시설 확충	- 재건축사업 개발부담금 부과 - 주상복합건물에 개발부담금 부과	✔		
		• 생활권 단위 계획의 실현	- 자치구 중심의 생활권시설 정비계획 수립 - 블록단위 주거지정비 수법 활성화 및 제도 정비 - 부대복리시설에 대한 공공지원 - 생활권시설정비지구조례 제정		✔	
	커뮤니티 회복을 위한 동네주거환경 개선	• 지역 인프라 개선	- 다세대·다가구주택 밀집지역 공공시설 서비스 개선사업 추진 - 산재한 노후불량주택의 개량과 필지조정 지원 - 소규모 노후주거지에 대한 공공사업 추진 - 도로, 공동주차장, 정보통신기반시설 등의 인프라 확보	✔		
		• 주민 참여를 통한 지역정체성 확보	- 주민협정에 의한 지역환경규범 제정 - 서울시 조례를 통한 주민협정제도 법적 근거 마련 - 지원행정체제 구축		✔	
	환경을 배려한 주거지 정비	• 리모델링 활성화	- 리모델링을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 강구 - 다양한 리모델링 기법·기술 개발 - 재정적 지원방안 수립 - 리모델링을 고려한 신규 아파트 설계기준 마련		✔	
		• 환경을 배려한 주택 정비수법 개발	- 주택리사이클 가이드북 작성 - 환경을 배려한 주택정보 제공 - 시설 교체가 용이한 주택 기술개발	✔		

목표	과제	전략	시책	단기	중장기	정책지표
4. 주택 유지관리 전문화	주택의 내구연한 증대	• 성능 관리시스템 구축	- 장기수선계획 작성기준 및 매뉴얼 제시 - 주택성능보증제도의 적극적 도입 - 하자담보책임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지정 - 지역단위 유지관리체제 구축	✔		지표 9. 장기 수선계획의 적정성
		• 정기점검 강화	- 안전관리대상시설물과 안전관리진단 기준에 대한 구체적 지침 마련 - 전문기관에 의한 공동주택 정기점검 의무화 - 공동주택 정밀점검기간 단축(3년→1년)	✔		
		• 비용확보	- 장기수선계획에 의한 특별수선 충당금 부과 - 잡수입의 특별수선 충당금 적립 - 특별수선을 위한 장기 저리 융자 및 보험제도 개발		✔	
		• 지역단위 유지관리체제 구축	- 서울시SH공사를 중심으로 소형단지의 지역단위 관리시스템 구축	✔		
	운영의 투명성 확보	• 입주자 감시체제 구축	- 관리규약 및 세부지침서 제정 - 표준 관리비 부과내역서 활용 - 비리방지를 위한 입찰·감리 회계규정 제정 - 공동체 형성을 위한 주민 관리참여 - 입주자 대표 선거규정 제정 - 입주자 대표회의 소위원회 활성화	✔		
		• 관리업무 투명화	- 공개입찰에 의한 위탁관리업체 선정 - 표준관리 위탁 계약서 도입으로 책임·권한 보장 - 관리비집행 전문감시기관 설치	✔		
		• 공동체 형성을 위한 주민 관리참여	- 공동체의식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 주거공동체 활성화기반 조성		✔	
		• 전문법 제정	- 공동주택관리법 제정 - 공동주택관리조례 제정 - 자치구별로 공동주택관리위원회 또는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	

목표1 저소득층의 주거복지 강화

자율적인 시장 기조위에 악화되는 소외계층의 주거불안문제를 해결하고 주거여건을 개선하여 모든 시민이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사회소외계층에 대한 주거 서비스를 개선하고 주택공급을 확대한다. 또한 중산층도 입주 가능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등 공급방식의 다양화로 주택을 소유개념에서 거주개념으로 전환해간다.

과제1 공공임대주택 확대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전체 주택재고의 10%까지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우선 2006년까지 10만 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

기존 재고	9.5만호
1차 (2001-2006)	10.0만호
2차 (2007-2012)	5.5만호

신규 공급을 위한 택지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다가구주택 매입 등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한다.

전략 1. 기존 주택지 내 스톡 확보

기존 시가지 내에서는 저렴한 택지를 더 이상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재개발 사업지구와 기존 주택지 내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공공임대주택 재고를 확보한다.

시책 1. 재개발사업지구 임대주택 매입

시책 2. 다가구주택 매입, 임대주택 활용

시책 3. 최저소득계층을 위한 영구임대주택 추가 확보

전략 2. 저렴한 택지 확보

시유지, 택지개발사업용지, 재래시장용지, 기타 자투리 땅 등 저렴한 택지를 확보하여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시책 1. 기존 시유지, 기존 택지개발지구, 택지개발예정지구 등
공공임대주택 부지 확보

시책 2. 기능이 상실된 재래시장 용지 확보

시책 3. 미개설 도시계획시설 용지 중 임대아파트 가능지 확보

시책 4. 도시 내 자투리 땅 확보

과제2 소외계층 주거확대

임대주택 유형별로 구분되어 있는 입주자 자격조건을 통일하며, 특히 사회취약계층인 고령자 및 장애인을 위한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주택개조 융자알선을 통해 주거복지를 향상시킨다.

전략 1. 공공임대주택의 통합운영을 통한 공급효과 제고

임대주택 유형에 따라 다양한 공공임대주택의 자격기준을 일원화함으로써 임대주택 내 사회적 혼합을 달성하고, 임대주택간 주거이동을 가능하게 하여 입주자 편익을 증대시킨다. 또한 임대료를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부과함으로써 입주자간 형평성을 제고한다.

시책 1. 통합관리를 위한 입주자격 개선

시책 2. 임대료 부과체계 개선

시책 3. 입주자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한 통합관리체계 구축

시책 4. 자활·가족노숙자, 도시개발사업 철거세입자에 대한 입주 우선자격 부여

전략 2. 고령자, 장애인용 스톡 확보

노인 인구의 꾸준한 증가에 대비하여 고령자용 공공임대주택을 비롯하여 주택개조에 대한 지원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노인용 주택은 기능과 설비 면에서 장애인 주택과 거의 유사하므로 장애인 주택정책과 더불어 추진함으로써 특수소외계층을 위한 주택정책을 보강한다.

시책 1. 공공임대주택의 1-2층을 노인가구 및 장애인 가구를 위한 임대주택으로 개조·활용

시책 2. 노인·장애인 대상 민간임대주택 건설 및 개조 융자 지원

시책 3. 다가구 매입임대주택의 그룹홈 활용

과제3 최저기준 미달가구 해소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기존의 주택프로그램과 연계를 통해 기준 미달가구를 해소한다.

전략 1. 주거단위 및 주택상태 파악

정책지표를 통해 주택정책의 효과를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주택단위조사 등 지역통계 수집체계를 구축한다.

시책 1. 동별 데이터 및 관리시스템 구축
시책 2. 단독주택 및 상가주택 내의 주거단위(1개 이상의 방과 부엌, 독립된 출입구를 가진 영구 건물) 조사

전략 2. 주거급여와 연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주거급여와 기타 간접적인 주거비 지원정책을 연계하여 정책효과를 제고한다.

시책 1. 주거급여의 현실화
시책 2. 임대료 보조체계 구축
시책 3. 주택기금을 활용한 월세 보조제도 확대
시책 4. 전세자금 및 임대보증금 융자제도의 개선 및 확대
: 최저기준과 연계

전략 3. 질적 수준 개선 지원

저소득층 주택, 특히 자가주택의 질적 수준 개선을 위한 지원정책을 시행한다.

시책 1. 주택개량 융자 지원
시책 2. 집수리 지원

과제4 공공주택정책 기금 확보

다양한 주택정책 수요에 대비하여 서울시 자체의 주택기금을 확대하여, 주택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한다.

전략 1. 지속적인 재원조달창구 확보

공공주택정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자체적인 주택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재원확보 방안을 모색한다.

시책 1. 서울시 주택기금 확대

시책 2. 지속적인 재원 발굴

전략 2. 재원활용계획 수립

정책자금수요가 공급에 비해 월등히 많은 만큼 효율적인 재원활용을 위해 투자 우선순위 지정 등 재원활용계획을 수립한다.

시책 1. 지원프로그램 우선순위 지정

시책 2. 자금 운영 및 관리체제 구축

목표2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1인 및 2인 가구의 증대로 인한 소형주택수요, 소득증가에 따른 주거상향욕구, 노령화에 따른 노인주거수요 등 다양한 수요 충족을 위해서 양질의 주택재고를 확보한다.

과제1 저렴한 양질의 주택재고 확보

주거비가 저렴한 동시에 양질의 주택재고를 확보하기 위하여 새로운 주택을 개발하고, 특히 수요가 많은 소형아파트의 공급 확대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한다.

전략 1. 저렴한 주택 개발

미래지향적이고, 환경친화적인 주택의 개발을 통해 부담가능한 주택을 공급한다.

시책 1. 에너지 효율적 신규주택의 개발

전략 2. 소형아파트 공급 확대

접근성이 우수한 지역에서 저렴한 주택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토지이용 및 행정·재정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시책 1. 주상복합아파트의 중소규모 주택공급 촉진

시책 2. 기존 주택지 내 소규모 택지활용 효율화

전략 3. 양호한 주택재고 확보

2인 이하 가구의 증대, 가구형태의 다양화 등 가구변화에 대응한 주택공급을 다양화하고, 주거서비스를 향상시킨다.

시책 1. 가구변화에 따른 주택공급계획 수립

시책 2. 주거공동체 수요를 기반으로 하는 시설 확대 : 공부방, 보육시설, 주민자치회 시설 등

전략 4. 매물정보 유통 확산

저렴한 매물정보 제공과 매물정보에 대한 접근성 향상을 통해 저렴하고 다양한 주택 선택기회를 제공한다.

시책 1. 저소득층 주택매물정보수집체계 구축

시책 2. 구청, 동사무소를 통한 시민의 정보망 접근 확대

시책 3. 부동산거래 지도·지원유지관리 효율화

과제2 양질의 민간임대주택 공급

주택시장이 소비자 중심으로 전환되는 시장상황에서 소비자의 주거 서비스 욕구에 맞는 다양한 주택을 개발하기 위하여 법인 민간 임대업을 육성하고 임대주택의 질을 향상시킨다.

전략 1. 법인 민간임대업 육성

임대주택의 질적 관리와 세입자 보호를 위해 장기적으로 법인형태의 민간임대주택 산업을 육성하도록 한다.

시책 1. 장기 민간임대주택 육성 - 적정 임대료 부과

시책 2. 생명보험 등 기관투자가의 임대사업 육성

시책 3. 임대관리업 육성

전략 2. 임대주택의 질 향상

중산층도 거주가능하도록 임대주택도 중소평형으로 고급화하도록 제도적인 인프라를 구축한다.

시책 1. 부동산 거래시 주택 체크리스트 작성 의무화

시책 2. 주택성능표시 의무화

시책 3. 사전공동점검제 실시

전략 3. 임차인 주거권 보호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상황에서 전체가구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는 임차가구의 주거권보호를 위해 꾸준히 개도개선을 도모한다.

시책 1. 전세보증금 반환 보장

시책 2. 임차인의 계속거주권 보장

시책 3. 거래시 표준계약서 활용

과제3 주택의 품질 개선

아파트의 증가로 재고주택의 질적 표준화가 상당히 달성되었지만, 단독다가구주택 등의 경우 품질의 표준화가 요원하다는 점에서 주택성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여 다양한 형태의 주택재고를 유지한다.

전략 1. 주택의 질적 품질관리

주택구입시 주택의 성능을 평가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 냉난방, 일조, 소음 등 환경에 대한 주택성능표시제도를 도입하고, 재고주택의 표준화를 위한 질적 수준을 파악한다.

시책 1. 주택성능표시제도 도입

시책 2. 주택상태조사(Housing Condition Survey) 시행

시책 3. 재고주택의 질적 수준 데이터베이스화를 통한 사회적 정책수요 도출

목표3 도시정비와 주택개발의 조화

공공투자를 통한 동네환경개선으로 저소득층 주거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양질의 주거환경을 유지하는 동시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함으로써 지역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도시정비와 주택개발이 조화되도록 한다.

과제1 기존 주거환경과 조화 있는 주택개발

재개발, 재건축을 통한 주택개발로 인한 주거환경 훼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재정비사업의 합리적인 추진과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각종 시책을 개발한다.

전략 1. 재정비사업 원활화

사업추진과정의 전문성 보강과 재원조달 방법의 다양화를 통해 재개발, 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한다.

시책 1. 재개발·재건축사업 매뉴얼 제작

시책 2. 재건축·재개발 전문 컨설팅 육성

시책 3. 역세권 지역의 고도이용 추진

시책 4. 다양한 재원조달 방안을 개발

시책 5. 재정비사업시 복지시설의 병설 추진

전략 2. 수익자 부담에 의한 공공시설 확충

고밀개발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에 대해 수익자 부담원칙을 적용하여 공공시설을 확충하고 무분별한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한다.

시책 1. 재건축사업 개발부담금 부과

시책 2. 주상복합건물에 개발부담금 부과

전략 3. 생활권 단위 계획의 실현

중·소규모 아파트 단지와 소규모 연립주택단지들이 산발적으로 집중되어 있는 지구에 생활권시설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민간과 공공이 합동으로 계획을 실현해 나간다.

시책 1. 자치구 중심의 생활권시설 정비계획 수립

시책 2. 블록단위 주거지정비 수법 활성화 및 제도 정비

시책 3. 부대복리시설에 대한 공공지원

시책 4. 생활권시설정비지구조례 제정

과제2 커뮤니티 회복을 위한 동네주거환경 개선

단독·다가구주택의 거주환경을 향상시키고, 다양한 주택재고를 보유함으로써 주민의 주거성택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다양한 정비방안을 추진한다.

전략 1. 지역 인프라 개선

공공시설서비스개선사업 및 동네주거환경정비사업 등을 통해 기반시설이 부족한 일반주거지역의 질적인 환경을 개선한다.

시책 1. 다세대·다가구주택 밀집지역에 공공시설서비스 개선사업 추진

시책 2. 산재한 노후불량주택의 개량과 필지조정 지원

시책 3. 소규모 노후주거지에 대한 공공사업 추진

시책 4. 도로, 공동주차장, 정보통신기반시설 등의 인프라 확보

전략 2. 주민 참여를 통한 지역정체성 확보

기존도시계획, 건축법의 범위 내에서 지역의 특색에 맞는 건축기준, 조경기준, 가로환경을 주민이 합의하여 제정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의 정체성을 유지하도록 한다.

시책 1. 주민협정에 의한 지역환경규범 제정

시책 2. 서울시 조례를 통한 주민협정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

시책 3. 지원행정체제 구축

과제3 환경을 배려한 주거지 정비

지구온난화 방지의 관점에서 주택의 재정비사업 추진시 자원낭비를 최소화하고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도록 환경을 고려한 주거지정비를 장려한다.

전략 1. 리모델링 활성화

재건축사업의 사회적, 경제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을 강구한다.

시책 1. 리모델링을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 강구

시책 2. 다양한 리모델링 기법·기술 개발

시책 3. 재정적 지원방안 수립

시책 4. 리모델링을 고려한 신규 아파트 설계기준 마련

전략 2. 환경을 배려한 주택정비수법 개발

태양에너지 설비, 옥상 녹화, 골목길 녹화 등 환경의 부하를 절감시킬 수 있는 정비수법을 개발한다.

시책 1. 주택리사이클 가이드북 작성

시책 2. 환경을 배려한 주택정보 제공

시책 3. 시설 교체가 용이한 주택 기술개발

목표 4 주택의 유지관리 전문화

기존 주택의 내구연한 증진을 위해 유지관리와 노후화에 따른 안전관리 문제가 향후 주택의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으므로 개인 및 사회의 비용절감과 안전한 주거생활을 위해 기존 주택의 유지관리 전문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구축한다.

과제1 주택의 내구연한 증대

서울시 주택재고의 50% 이상이 공동주택이므로 장기적으로 개인과 사회적 비용을 절감시킨다는 점에서 유지관리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내구연한을 연장시키고 향후 재정적 수요에 대비한다.

전략 1. 성능 관리시스템 구축

주택의 성능은 주택생산 뿐만 아니라 사후적인 보증체계의 구축에 의해 결정되므로 성능 관리제도 도입을 통해 장기적인 대비를 하도록 한다.

시책 1. 장기수선계획 작성기준 및 매뉴얼 제시

시책 2. 주택성능보증제도의 적극적 도입

시책 3. 하자담보책임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지정

시책 4. 지역단위 유지관리체제 구축

전략 2. 정기점검의 강화

관리주체가 일상적 또는 주기적으로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대상시설물과 안전관리진단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고 전문관리기관에 의한 정기적인 점검을 의무화한다.

시책 1. 안전관리대상시설물과 안전관리진단기준에 대한 구체적 지침 마련

시책 2. 전문기관에 의한 공동주택 정기점검 의무화

시책 3. 공동주택 정밀점검기간 단축(3년→1년)

전략 3. 유지관리 비용확보

장기수선계획에 의해 적정한 유지관리가 이루어지도록 다양한 재원조달방안을 모색한다.

시책 1. 장기수선계획에 의한 특별수선 충당금 부과

시책 2. 잡수입의 특별수선 충당금 적립

시책 3. 특별수선을 위한 장기저리융자 및 보험제도 개발

전략 4.지역단위 유지관리체제 구축

소규모 개발 활성화에 따라 이들 주택의 효율적인 유지관리와 가치보존을 위해 지역단위 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시책 1. 서울시 SH공사를 중심으로 소형단지의 지역단위 관리시스템 구축

과제2 운영의 투명성 확보

아파트 단지는 주민자치의 기초단위이며 투명하고 합리적인 관리행정의 기반구축은 사회적인 비용을 절감시킨다는 점에서 경영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주민의 관리참여를 통해 공동체 형성을 도모한다.

전략 1. 입주자 감시체계 구축

효율적인 유지관리와 경영의 투명성 확보, 아파트 관리 문화의 정착을 위해 관련주체들 간의 체계적인 역할 분담, 주민참여, 행정서비스 지원과 제도정비 등 다각적인 감시체제를 구축한다.

시책 1. 관리규약 및 세부지침서 제정

시책 2. 표준 관리비 부과내역서 활용

시책 3. 비리방지를 위한 입찰·감리 회계규정 제정

시책 4. 공동체 형성을 위한 주민 관리참여

시책 5. 입주자 대표 선거규정 제정

시책 6. 입주자 대표회의 소위원회 활성화

전략 2. 관리업무 투명화

위탁관리의 증가에 따라 위탁관리회계에 대한 심의와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전문적인 감시체제를 구축한다.

시책 1. 공개입찰에 의한 위탁관리업체 선정

시책 2. 표준관리 위탁 계약서 도입으로 책임·권한 보장

시책 3. 관리비집행 전문감시기관 설치

전략 3. 공동체 형성을 위한 주민 관리참여

공동주택이 마을공동체로써 기능할 수 있도록 주민의 관리참여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한다.

시책 1. 공동체의식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시책 2. 주거공동체 활성화기반 조성

전략 4. 전문법 제정

공동주택관리는 이제 사회 전반의 대처가 필요한 문제라는 점에서 독립법을 제정하여 공동주택관리의 기본골격을 세우고 지방지치단체의 역할 규정을 통해 실질적인 감독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시책 1. 공동주택관리법 제정

시책 2. 공동주택관리조례 제정

시책 3. 자치구별로 공동주택관리위원회 또는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6. 목표별 정책지표

목표1 저소득층의 주거복지 강화

[지표 1] 전체 주택재고 대비 공공임대주택 비율

(단위 : %)

1995	2000	2005	2010	2015	2020
3.5	4.9	6.8	9.0	10.0	10.0

- 서울시 전체 주택재고 가운데 공공 임대주택의 증가를 통해 저소득층의 주택재고를 증가시키고 주거불안을 해소한다.
- 2000년 이전은 서울시내부자료 참조

[지표 2]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단위 : %)

구분	1990(1997)	2000	2004	2005	2010	2015	2020
서울	41.3(19.4)	23.5	20.2	19.1	13.1	8.5	4.5
도심권			23.7	22.4	15.4	10.0	5.3
동북권			21.6	20.4	14.0	9.1	4.8
서북권			23.9	22.6	15.5	10.0	5.3
서남권			15.7	14.8	10.2	6.6	3.5
동남권			20.4	19.3	13.2	8.6	4.5

- 저소득층의 질적 주거수준을 향상시켜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를 점진적으로 해소하고 모든 시민이 적절한 주거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한다.
- 2000년은 한국의 주택(통계청, 2002)
- 2004년은 "2004 서울·수도권 주민주거실태 및 정책수요조사" 결과.

[지표 3] 기금 적립액수

(단위 : 억원)

2002	2005	2010	2015	2020
50	260	500	750	1,000

- 서울시가 주택정책을 펴기 위한 기금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 기금액수 및 목표대비 적립 비율을 높임으로써 서울시 주택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한다.
- 2005년까지는 서울시 내부자료임.

[지표 4] 임대료 보조수혜 대상자수

(단위 : 명)

2002	2005	2010	2015	2020
16,000	20,000	50,000	75,000	100,000

- 2002년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차상위계층으로서 서울시의 임대료 보조수혜 대상자 수를 나타낸다.
- 2005년까지는 적립된 주택기금을 통한 임대료보조 수계 대상자수를 나타내며, 2010년 이후부터는 국가차원에서 본격적으로 임대료보조 제도가 시행된다고 보고 수혜대상자수를 산정하였다.

목표2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지표 5-1] 주택보급률

구분	2000	2005	2010	2015	2020
보통가구수 (천가구)	2,548	2,555	2,562	2,646	2,757
주택수 (천호)	1,973	2,343	2,680	3,009	3,309
신규공급 주택수 (천호)		370	337	329	300
주택보급률 (%)	77.4	91.7	104.6	113.7	120.0

[지표 5-2] 권역별 주택보급률

(단위 : %)

구분	2000	2005	2010	2015	2020
서울	77.4	91.7	104.6	113.7	120.0
도심권		101.2	115.4	125.4	132.4
동북권		88.3	100.7	109.6	115.6
서북권		95.6	109.1	118.5	125.1
서남권		91.2	104.0	113.1	119.3
동남권		92.2	105.2	114.4	120.7

- 주택 공급을 꾸준히 유지시켜 서울시 주택재고를 늘리고 주택의 양적인 부족 문제를 완전히 해소한다.
- 1995, 2000년은 한국의 주택(통계청, 2002) 참조.

[지표 6] 신규주택 공급호수 중 소형주택 공급비율

(단위 : %)

1997	2000	2005	2010	2015	2020
32.0	24.2	30	30	30	30

- 전용면적 60㎡이하 비율을 나타냄.
- 997년 외환위기 이후 저소득층이 증가하였고, 또한 단독가구 및 비혈연 가구 등 소규모 가구의 증가로 이들을 위한 소형주택 공급이 필요하다.
- 현재 신규주택공급 가운데 소형평형의 주택이 감소하고 있으므로, 소형평형의 주택공급 비율을 증가시켜 저소득가구 및 단독가구를 위한 주택의 재고를 충분히 확보한다.
- 2000년은 주택업무편람(건설교통부, 2001)

[지표 7] PIR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구분	1997	2000	2004	2005	2010	2020
서울	6.25	7.92	7.23	7.1	6.3	5.0
도심권			6.90	6.8	6.0	4.8
동북권			6.35	6.2	5.5	4.4
서북권			6.85	6.7	6.0	4.7
서남권			7.10	7.0	6.2	4.9
동남권			8.98	8.8	7.8	6.2

- PIR은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으로 주택구입능력을 파악하기 위한 지표이다.PIR이 커질수록 주택구입이 어려워지며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그 규모가 축소됨을 의미한다.
- 1997년 우리나라 PIR은 6.25로 외국과 비교하여 상당히 높은 상태로 2020년의 5.0은 생활에 큰 부담 없이 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수준이다.
- 1997, 2000년은 주택금융수요실태조사(국민은행, 각년도)
- 2004년은 "2004 서울·수도권 주민주거실태 및 정책수요조사" 결과.

목표3 도시정비와 주택개발의 조화

[지표 8] 멸실 주택의 평균 사용연수 (단위 : 년)

1993-1999	2005	2010	2015	2020
20.4[1)]	30	35	40	50

- 이는 멸실주택의 평균 사용연수로써, 현재 20년이 채 안된 주택이 재건축으로 인해 조기 멸실됨으로써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고 있다.
- 따라서 적절한 유지관리를 통해 사회적·물리적 수명을 연장시켜 사회적·개인적 비용을 절감한다.
- 주 1) 아파트만 분석한 자료임.
- 1999년 이전은 '99아파트주거환경통계(대한주택공사, 1999)

목표4 주택의 유지관리 전문화

[지표 9] 장기수선계획의 적정성 (단위 : %)

2001	2005	2010	2015	2020
18.9	33.9	48.9	63.9	78.9

- 전체 단지 중 합리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단지의 비율이다.
- 장기수선계획이 단지상황에 따라 합리적으로 수정되도록 하고 이에 따라 대규모 수선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 2001년은 우수아파트관리평가표(서울특별시, 2001)

7. 권역별 계획

• 2020년까지 총 주택수요량은 최대 1,386천호이며, 주택공급능력은 160만호 정도로 90% 이상이 재정비사업을 통해 공급될 예정이다. 재정비사업의 경우 단독주택 재건축사업, 뉴타운사업, 노후공동주택 재건축사업, 주택재개발사업의 공급잠재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도심권

도심부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도심거주 인구와 주거기능을 확보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도심부 주거기능 확충을 위해 기존 거주자들이 계속 거주하고 새로운 잠재수요계층의 도심유입을 유도하기 위한 도심주거확보시책이 필요하다. 생활환경조성을 통한 도심부의 활력제고를 위해 우선적으로 도심부에 남아있는 기존 주택의 소실을 최소화하고, 신규주택의 공급과 노후주택의 정비를 점진적으로 유도하도록 한다.

동북권

동북부지역 전체의 균형개발을 위하여 지역산업 및 쾌적한 생활환경이 복합될 수 있도록 뉴타운 사업과 균형발전촉진지구 개발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수변지역을 비롯하여 노후 및 낙후된 주거지역에 대해서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고, 역세권별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재정비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일부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저밀도의 자연 친화적인 주거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한다.

서북권

주거환경정비구역이 많은 지역이므로 노후불량 주택지와 과소필지, 부정형 및 세장형 필지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와 정비가 필요하다. 구릉지 및 일정고도 이상에 입지한 노후불량 주택지에 대한 재개발의 경우에는 도시경관 및 자연환경 보호를 위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재정비사업 추진시 주민의 재정착율을 높이고 저렴한 주택재고를 확보하도록 개발방식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서남권

체계적인 도시개발과 낙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뉴타운사업과 더불어 재건축사업, 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점진적인 주거환경 정비를 위해서는 주민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치구 차원의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동남권

공동주택 재건축 수요가 많지만 주택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다는 점에서 점진적인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재건축 종합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존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개보수를 통한 관리지원이 필요하다. 양호한 주거환경의 보호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재건축사업 대안으로써 리모델링 사업을 적극 장려할 필요가 있다.

Ⅷ. 환경보전계획



1. 현황과 문제점
2. 여건변화 전망
3. 미래상
4. 계획방향
5. 목표체계
6. 목표별 정책지표

1. 현황과 문제점

환경정책

1) 통합적 환경관리 미흡

- 리우회의가 열렸던 1992년을 기점으로 우리나라 지방환경행정의 접근방법에 변화가 있었다. 1991년에 주민직선에 의한 지방의회가 구성되었고, 1993년에 문민정부가 들어섰으며, 1994년 12월 환경처가 환경부로 승격되었고, 1995년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민직선으로 선출되는 등 1992년 이후 지방환경행정은 그 질과 양이 모두 성숙해졌다.
- 그렇지만 대기, 수질, 폐기물, 생태 등 환경관리를 위한 계획을 분야별로 수립하고 추진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환경관리체계가 구축되지 못하고 있다.

2) 물리적 환경오염 문제에 치중

- 서울시가 지금까지 다루어 왔던 환경문제는 주로 물리적 환경오염에 관한 것이었다. 즉 수질, 대기, 소음 진동, 토양 오염을 방지하는 시설과 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을 설치하고 오염행위를 하는 업체를 단속하고 시정하는 조치를 내리는 일이 주된 업무였다.
- 이제는 환경문제의 중심이 환경오염 방지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다부문간 통합적 환경관리의 문제로 바뀌고 있다. 예를 들면 공원녹지 확충, 에너지 절약 및 효율적 이용, 녹색소비생활 개선, 녹색교통체계 확립,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등이 그러한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 서울시도 그러한 방향으로 이행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직 지구환경보호를 위한 서울시의 노력은 선진외국 대도시에 비해 미흡한 면이 많다.

3) 환경협력 및 시민참여 미흡

- 환경국 설치, 녹색서울시민위원회 구성, 「서울특별시 환경기본조례」 제정, 「서울환경헌장」 공포, 서울의제 21 발표, 서울시 환경기본계획 수립 등으로 서울시 환경관리의 제도적 기반은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이외에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서울특별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 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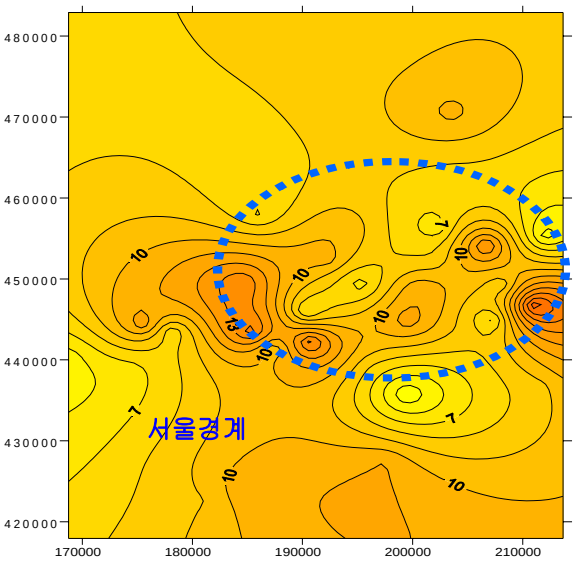
레기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협의회,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위원회,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지하수관리위원회, 생명의 나무 1000만 그루 심기 자문위원회, 수도권 대기질 개선 광역협의회 등 전문가와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환경보전 관련 다수의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으나 아직 서울시, 시민, 기업간의 참여적 파트너십에 의한 환경관리가 성숙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환경정책상의 문제가 있다.
  - 외국 주요도시와의 환경협력 네트워크 구축 미흡
  - 자치구 환경행정이 약화되었고 서울시와 자치구의 환경협력 미흡
  - 환경행정에의 시민참여는 괄목하게 발전하였으나 실질적인 시민참여는 여전히 미흡
  - 서울시 및 자치구의 지방의제 21 행동계획의 실천 평가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 미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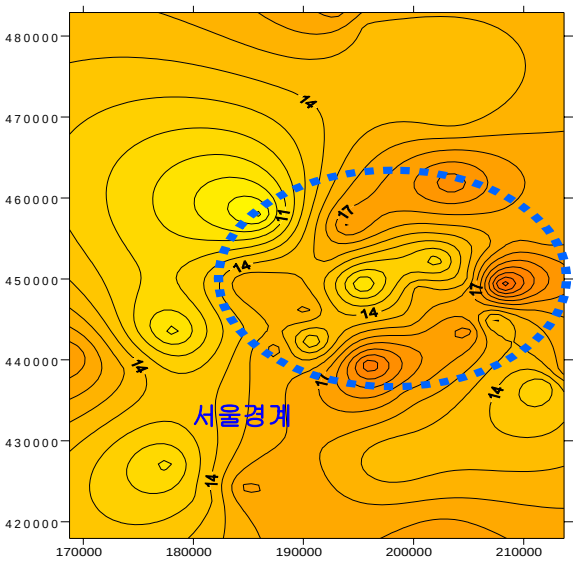
대기 및 기후

1) 수도권의 대기환경오염 광역화 현상 심화

- 1990년대 후반 이후부터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의 대기오염 수준이 전반적으로 악화되는 광역오염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으며, 교통부문이 그러한 현상의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 예나 지금이나 수도권 중심의 개발패턴이 여전히 문제이지만 최근에는 수도권의 난개발이 대기오염을 더욱 더 가중시키고 있다.
- 수도권 오염의 광역화는 수도권 도시들의 양적 팽창과 질적 다변화에 기인하며, 자동차 등록대수, 운행횟수, 주행거리(VKT) 증가에 따른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 증가가 직접적 원인에 되고 있다.
- 1985~2002년 서울시의 전반적인 대기오염도는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기준을 만족하고 있으나 이산화질소(NO_2) 및 미세먼지(PM10)와 같이 자동차에 기인하는 오염물질들은 그다지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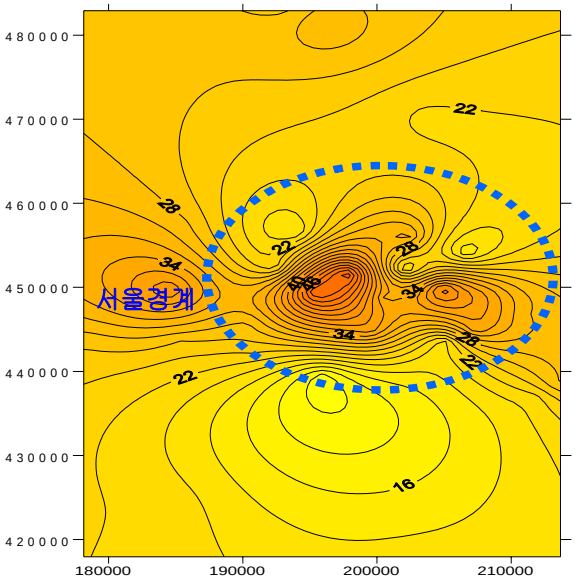


[그림 VIII-1] 수도권 오존오염 분포도(′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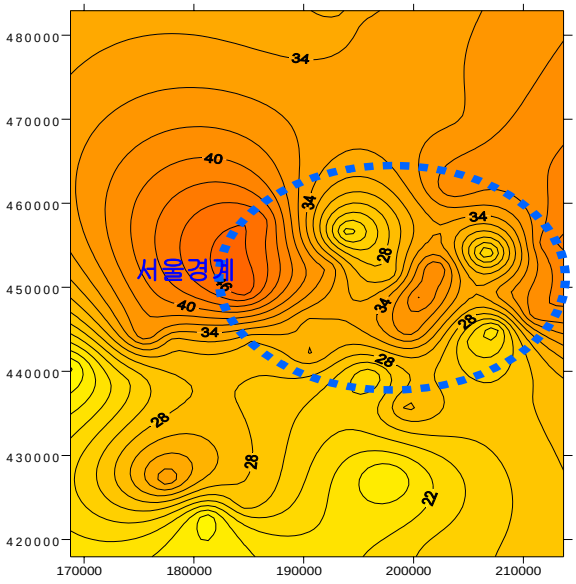


[그림 VIII-2] 수도권 오존오염 분포도(′97)

주 : 1990년 수도권 오존오염분포와 비교하면, 공간지점별 오염수준의 최고수치가 증대되고 있으며,
고농도 오존범위이 수도권역으로 확장되고 있음.



[그림 VIII-3] 수도권 이산화질소(NO_2) 오염 분포도(′90)



[그림 VIII-4] 수도권 이산화질소(NO_2) 오염 분포도(′97)

주 : 1990년 수도권 NO_2 오염분포와 비교하면 공간지점별 오염도 수치가 전반적으로 증대되고,
고농도 NO_2 오염도 범역이 더욱 확장되고 있음을 볼 수 있음.

[표 VIII-1] 서울지역 대기오염도 현황

구 분	SO_2 (ppm/년)	PM10(TSP) (㎍/㎥·년)	O_3 (ppm/8시간)	NO_2 (ppm/년)	CO (ppm/8시간)
국가환경기준	0.02	70	0.06	0.05	9
서울시환경기준	0.01	60	0.06	0.04	9
1985	0.056	(200)	0.009	0.029	2.7
1987	0.056	(174)	0.010	0.032	3.1
1989	0.056	(149)	0.008	0.027	3.2
1991	0.043	(121)	0.012	0.033	2.2
1993	0.023	(88)	0.013	0.032	1.5
1995	0.017	78(85)	0.013	0.032	1.3
1997	0.011	68(72)	0.016	0.032	1.2
1999	0.007	66(84)	0.016	0.032	1.1
2000	0.006	65(99)	0.017	0.035	1.0
2001	0.005	71	0.015	0.037	0.9
2002	0.005	76	0.014	0.036	0.7

주 : 법규개정(2001. 1.1)으로 환경기준의 변화: SO2 0.02ppm/년, PM10 70㎍/㎥·년, TSP 기준삭제.
자료 : 서울특별시. 서울의 환경, 2002z

2)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 광역협의 기능 강화 필요

- 서울은 자체적으로 발생되는 대기오염물질 이외에도 인접지역 대기오염물질의 대기확산을 통한 유입으로 서울의 대기환경을 악화시키는 부가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서울시 및 인접 자치단체간 대기개선을 위한 공동협의 노력이 필요하다.
- 지역환경기준, 지역배출허용기준, 자동차배출가스 합동단속, 자동차중간검사제시행 등 15개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중앙정부에 대한 공동건의를 하는 등 지역 대기질 개선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다.
- 수도권을 단일 공간단위로 인식하고 대기환경 통합관리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수도권대기질개선광역협의회를 구성(1997. 7) 운영하고 있으나, 보다 강화된 광역의결기관으로써의 기능 정비가 필요하다.

[표 VIII-2] 서울지역 소음도 현황

구 분	일반 지역			도로변 지역	
	녹지·전용주거	주거지역	상업·준공업	녹지·주거지역	상업·준공업
소음환경기준	50	55	65	65	70
1996	52	57	64	71	74
1997	51	53	60	72	72
1998	52	53	60	70	72
1999	53	54	63	71	72
2000	53	54	61	70	72
2001	53	55	62	70	72
2002	52	54	60	70	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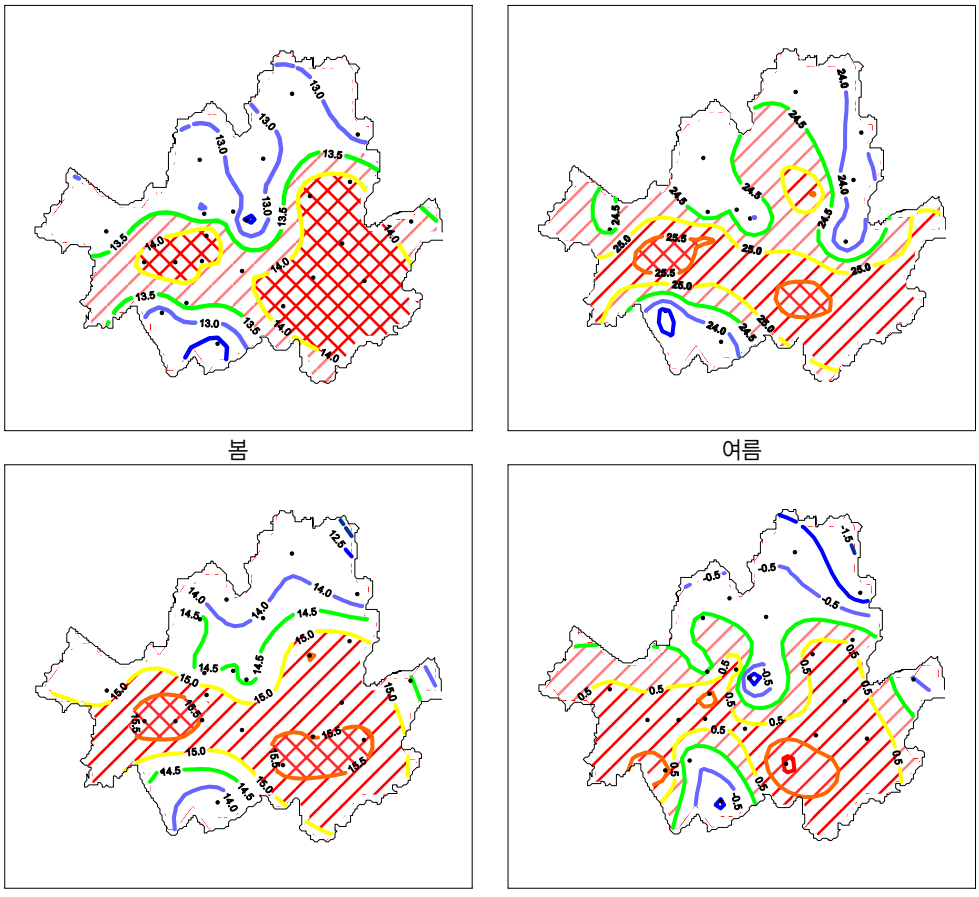
자료 : 서울특별시. 서울의 환경, 2002

3) 개선이 더딘 교통소음도

- 서울시의 소음공해는 공장소음, 건설공사장 소음, 이동행상 소음 등에 의해 주로 유발되며, 가장 큰 원인은 교통량 증가에 따른 교통소음이다.
- 차량 증가나 도로확장 등 소음발생원이 증가하였음에도 제작차 소음허용기준 강화, 방음시설 설치 등 소음저감대책 추진으로 소음도가 더 이상 악화되고 있지는 않다.
- 2002년 연평균 도로변 지역 소음도가 환경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1996~2002년의 소음도 수준과 비교해도 그다지 개선되지 못하고 있어, 보다 정온한 생활공간을 조성하려면 교통소음에 대한 보다 적극적 대책이 필요하다.

4) 편재된 도시 열섬의 발생 및 심화

- 도시지역은 주변지역보다 일사량·풍속·습도 등은 감소하고 반대로 기온·운량·대기오염도은 증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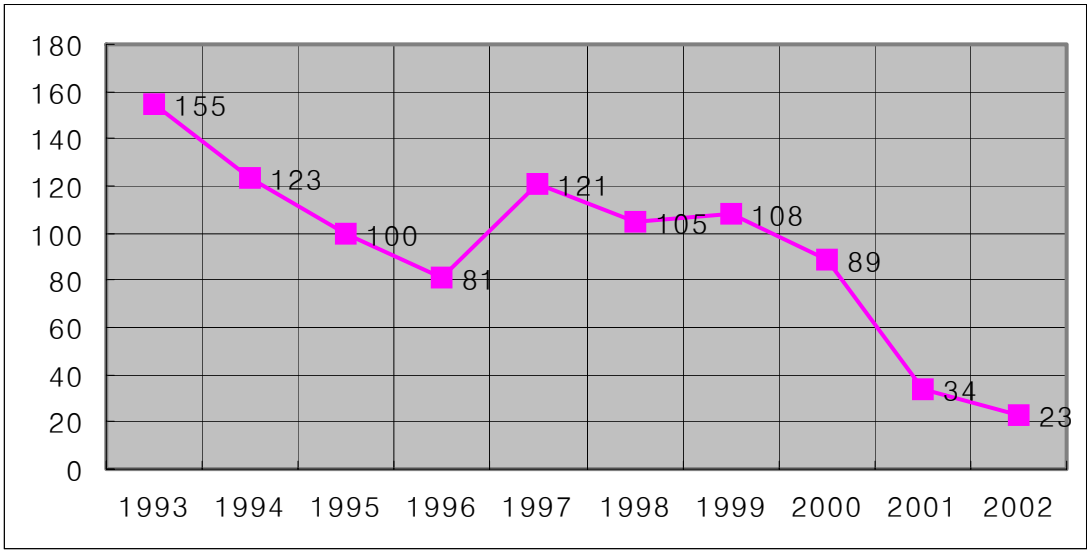


[그림 VIII-5] 1999년 서울의 계절별 일평균 기온(℃) : 0.5℃ 간격

- 도시화로 인한 토지이용 변화는 녹지 감소, 도로 포장률의 증가, 도시 하천의 식생 환경의 변화 등을 유발하여 주변 교외지역과는 다른 도시 특유의 기후를 형성하며, 대표적인 현상이 기온상승 효과이다.
- 서울에서는 지역별로 도시 열섬 현상이 차별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기온이 비교적 높은 고온범역은 도시개발 진행속도가 빠른 청량리를 포함한 강북 도심지, 강남구, 강동구, 영등포구 일대에서 형성되고 있다.

5) 시민의 체감오염도 개선대책 미흡

- 시정거리는 시민들이 체감하는 대기오염 대선지표이나 이를 개선하려는 대책은 아직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 1993~2002년 기간의 기상청 기상자료에 따르면 연간 연무 발생일은 평균 94일에 이르고 2001년 이후 감소추세에 있으며, 연무 발생은 겨울·봄철에 증가하고, 여름철에는 감소하는 계절적 특성을 보인다.
- 시정거리(視程距離)는 부유분진의 입경분포·화학적 조성·대기오염도·상대습도 등과 같은 각종 기상조건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저하되며, 이를 개선하려면 입자상 부유물질의 공간정체 현상과 광화학반응 과정을 억제할 수 있는 바람길 조성이 필요하다.



[그림 VIII-6] 서울시 연도별 연무 발생 현황

수자원 및 수질

1) 취약한 수자원과 낮은 물 자립도

- 한강유역은 연평균 1,286mm의 비가 내려 강수총량이 335억m^3이지만 이 중 2/3가 여름철(6,7,8,9월)의 홍수로 직접 유출되고 있으므로 사실상 이용 가능한 강수량은 많지 않다. 반대로 갈수기에는 하천유지용수가 부족하여 수질오염도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잦은 기상이변은 강수량의 계절적, 시간적, 지역적 편중을 심화시킬 전망이다.
- 서울시는 2002년말 현재 팔당호에서 10.7%인 41만4천톤/일을 취수하고 있으며 잠실수중보 상류에서 88%인 364만톤/일을 취수하고 있다.

[표 VIII-3] 상수원 및 지하수 이용현황 (단위: m^3/일)

총물이용량	하천지표수(잠실수중보상류) (2001년 기준)	저수지수(팔당호) (2001년 기준)	지하수 (2001년 기준)
3,970,027	3,450,000	414,000	106,027
100%	86.9	10.4	2.7

자료 : 서울특별시, 서울의환경(환경백서), 2002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서울시 지하수 개발·이용실태 현황, 2000.

- 총용수 이용량의 2.7%, 106천톤/일은 지하수의 이용 가능량 범위에서 취수하고 있으며, 전년보다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과다 채수할 경우 지하수 고갈로 이어질 수 있으며 지하수 수위가 감소하여 오염물질의 이동을 확산시킬 수 있으므로 향후 물 부족에 대비한 대체수원으로써 지속적인 관리가 요구된다.
- 서울시민들은 좀더 깨끗한 물을 마시기 위해 팔당 상수원의 수질개선비용으로 1톤당 110원의 물이용부담금을 부담하였으나 2003년 1월부터는 1톤당 120원이 인상된다.

[표 VIII-4] 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한 물이용부담금 부담액 (단위 : 백만원)

구분	합계	물이용부담금					기타수입금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수자원공사	전용수도	이자수입	법인세환급
계	696,708	330,829	85,303	263,748	6,764	307	5,403	4,354
	100.00%	47.48%	12.24%	37.86%	0.97%	0.04%	0.78%	0.625%
1999	27,704	15,560	3,037	8,643	435	29	–	–
2000	176,914	85,682	22,325	65,512	1,766	74	1,547	8
2001	236,990	111,408	29,032	87,994	2,159	95	2,356	3,946
2002	255,100	118,179	30,909	101,599	2,404	109	1,500	400

2) 쉽게 개선되지 않는 한강수질

- 한강의 BOD는 1986년 충주댐 완공이후 상당히 낮아졌으나 ' 90년 이후부터 약간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나타났다. 전반적인 수질상태는 상수원수 2급수 수준이고, 계절적인 환경여건에 따라서 약간의 변동을 보이고 있다.
- 잠실수중보 상류의 수질은 팔당댐의 수질보다 20~30% 증가된 오염도를 나타낸다. 이는 경기도 구리시를 통과하는 왕숙천 등 지천을 통하여 구리시, 남양주시 등 주변의 생활하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등이 유입되고 강우시 초기우수가 많은 오염물질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표 VIII-5] 상수원 수질(BOD)과 방류량 (단위 : mg/L)

구 분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2000
팔 당 댐	1.0	1.1	1.0	1.1	1.1	1.2	1.3	1.4	1.5	1.3	1.1
잠 실	1.6	2.4	1.9	2.1	2.1	2.0	2.2	2.6	2.2	1.6	1.8
팔당 방류량(CMS)	314	205	247	207	178	178	141	140	229	295	223

자료 : 서울특별시, 서울의 환경(환경백서), 2002

3) 상수도시설의 노후화

- 서울이 가지고 있는 정수처리능력은 1908년 1.25만톤/일에서 2001년 675만톤/일으로 540배 증가하였으며, 급수인구는 1908년 125천명에서 2001년 10,330천명으로 83배 증가하였다.
- 서울에 설치되어 있는 배급수관의 총길이는 17,398km이며, 이중 정비개량대상 배급수관은 2,169km이다. 수돗물의 유수율은 2001년 현재 75.3%로, 미국, 일본, 유럽 도시들의 유수율 90%와 비교하여 아직 낮은 수준이다.

[표 VIII-6] 상수도 보급 현황

구 분	'93	'94	'95	'96	'97	'98	'99	2000	2001
생산시설용량(만㎥/일)	619	619	619	619	619	680	730	690	675
급수인구(천인)	10,920	10,790	10,580	10,460	10,390	10,320	10,319	10,372	13,331
보급율(%)	99.9	99.9	99.9	99.9	99.9	99.9	99.9	99.9	99.9
가동율(%)	81.3	83.0	80.1	80.6	80.0	67.5	59.5	60.5	59.7
1인당1일사용량(ℓ)	274	296	290	296	296	285	286	289	294
유수율(%)	59.5	62.2	61.9	62.0	63.3	64.2	68.2	72.0	75.3

주 : 1인당 1일사용량 = 1인당일급수량×유수율
자료 : 서울시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서울특별시 수도정비기본계획, 2000
서울특별시, 서울의 환경(환경백서), 2002

4) 꾸준하게 증설을 필요로 하는 하수처리시설

• 서울시는 371만톤이던 기존 하수처리장의 1일 처리능력을 높이고자 '92년부터 증설공사에 착수하여 '98년에 총 581만톤/일 처리용량을 갖추게 되었다. 그 결과 중랑, 탄천, 서남, 난지하수처리구역에서 발생하는 하수 전량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용량을 확보하였다.

[표 VIII-7] 단계별 하수처리장 건설 현황 (단위 : 만톤/일)

하수처리장명	'95년말	증설현황			현재 시설용량
		계	'97완료	'98완료	
총시설용량	371	210	135	75	581
중랑	146	25	25		171
탄천	75	35	10	25	110
서남(가양)	100	100	50	50	200
난지	50	50	50		100

자료 : 서울특별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보고서, 1998

5) 하수관거 불량으로 인한 공공수역의 오염

• 하수관거는 계획면적 358.28㎢에 보급율 100%이고, 2001년말 현재 총연장은 10,015km이다. 하수는 대부분 합류식으로 배제되고 있다.

• 그러나 하수관거 대부분이 20년을 초과한 노후한 상태여서 관 파손, 매몰, 악취발생 등 문제를 노출하고 있으며 하수가 누수되어 지하수, 토양, 하천을 오염시키고 있다. 또한 지하수가 하수관거로 유입되어 하수처리장의 부하를 늘리고 처리효율을 떨어뜨리고 있다.

[표 VIII-8] 하수배제방식별 현황(2001년) (단위 : %)

구 분	계	합 류 식	분 류 식
연장(㎞)	10,015(100%)	8,687(86.8%)	1,328(13.3%)
면적(㎢)	328.28(100%)	311.46(87.0%)	46.81(13.1%)

자료 : 서울특별시, 서울의 환경(환경백서), 2002

6) 도시형 침수피해 발생

- 도시화에 따라 대지의 불투수면이 늘어나서 우수유출량이 증가하고 확장 개발된 지역의 하수관거가 기존 관거에 연결됨에 의해 강우시에 하수관거 용량이 부족하여 저지대에서 침수피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또한 빗물받이, 연결관 등의 설치미비 및 폐쇄로 노면의 물이 제대로 배수되지 않아 침수의 원인이 되고 있다.
- 침수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우수배제시설의 설계빈도를 상향조정하여야 하지만 기존 우수배제시설의 설계빈도를 상향 조절하여 용량을 늘릴 경우 막대한 재원과 시간이 필요하여 현실적으로 어렵다. 따라서 우수유출 저감시설의 도입이 요구되고 있다.

[표 VIII-9] 서울시 주요 홍수연도의 총피해액

년 도	'72	'84	'87	'90	'98	2001
피해액 (백만원)	1,979.6	20,273.6	15,594.7	22,527.6	51,442.0	21,924.9

자료 : 서울시, 2001수해백서, 2002

[표 VIII-10] 서울시 과거 10년간 연도별 침수가옥 현황

년	'90	'91	'92	'93	'94	'95	'96	'97	'98	2001
침수가옥수(동)	17,434	248	95	96	-	4	2,209	234	40,251	94,375

자료 : 서울특별시, 2001수해백서, 2002

폐기물

1) 정체상태에 직면할 쓰레기 줄이기

- 쓰레기종량제의 실시, 1회용품 사용억제, 포장규제 등의 정책적인 노력과 함께 연탄사용 감소, 매립지에서의 음식물 반입 재제, 상주인구의 감소 등 내외부적 요인에 의해 1인당 발생량과 총발생량이 뚜렷하게 감소해 왔다. 재활용품에 대해 수수료 부과를 면제하는 쓰레기종량제, 1998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사업의 추진에 힘입어 1993년 18.4%이던 재활용실적이 2001년에는 47.5%로 급신장하였다.
- 그러나 제품소재와 형태가 변하지 않거나 제품흐름의 전과정에 생산자의 역할이 확대되지 않으면 조만간 감량과 재활용은 한계수준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다.

[표 VIII-11] 서울시 생활폐기물 발생량 및 관리실적 추이

구	분	1993	1995	1997	2000	2001
발생량	1일 총발생량(톤)	16,021	14,102	12,662	11,438	11,968
	1인당 1일 발생량(kg)	1.46	1.33	1.22	1.10	1.16
관리실적(%)	재활용	18.4	29.3	33.5	45.0	47.5
	소 각	0.1	0.5	4.6	5.5	6.9
	매 립	81.0	70.2	61.9	49.5	45.6

자료 : 서울특별시, 폐기물관리현황, 1999; 서울특별시, 주요업무보고(폐기물분야), 2002

2) 빈약한 수도 서울의 자체 처리기반

- 수도권매립지의 기능을 이을 후속 매립지의 확보가 불투명한 상태이기에 수도권매립지(총 매립용량 240백만㎥, 이미 1공구가 소진되고, 나머지 공간 177백만㎥은 2022년까지 사용가능할 전망임)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어야 한다. 결국 재활용을 적극 추진하고 소각 등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양을 늘려야 한다. 재활용품의 물류지원시설,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자원회수시설 등의 지속적인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미이다.
- 그러나 폐기물처리 기반시설에 대한 본질적인 혐오감, 유해물질의 발생에 의한 피해 우려, 행정에 대한 불신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신규시설의 확보가 어렵고, 소각시설의 여유용량을 인접 자치구와 함께 사용하는 여건도 조성되지 못하고 있다.

3) 부절적한 배출 및 투기의 빈발

- 쓰레기종량제의 실시와 분리배출 품목의 세분화는 재활용과 안전한 처리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 그러나 수수료의 부담을 피하기 위한 폐기물 투기, 도로변 쓰레기 버리기가 빈번하게 발생하며, 쓰레기봉투와 재활용품의 수시배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수거회수, 무단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가로휴지통의 철거 등에 의해 도심 곳곳의 청결성이 손상을 받고 있다.

자연생태계

1) 자연환경의 보호 정책 미흡

- 자연환경을 고려한 도시관리계획 체계가 미흡하다. 이런 현상은 녹지체계 보호 및 조성 부족, 생물이동 네트워크 보호 및 적극 조성에 대한 계획적 사고 부족과 함께 구릉지의 재개발 허용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 인간이용 위주의 하천복개 및 하천정비로 생물 잠재서식지가 파괴되고 있다. 그 동안의 하천은 주로 이수와 치수를 목적으로 하천준설, 강변콘크리트공사 등의 정비사업이 이루어졌다. 특히 서울의 하천 연장 237㎞중 33.4%가 복개되어 있다(1996년 기준). 이와 같이 하천생태계를 고려치 않은 콘크리트에 의한 획일적 정비는 한강 및 지천의 수중 및 수변의 생물서식지를 파괴하고, 생물다양성을 크게 감소시켰다.

2) 자연생태계 파괴의 심화

- 급격한 도시성장과 난개발로 인해 서울의 도시녹지 및 농경지가 줄어들고, 남아있는 것은 산지형 녹지에 불과한 실정이다.
- 자연환경과 도시기반시설이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초과한 과도한 개발이 이루어졌는데, 구릉지 산림의 파괴, 농경지의 비중 급감, 산림지의 비중 급감 등이 그 결과로써 나타났다. 이처럼 생물서식환경이 축소 또는 파괴되면서 곤충, 양서·파충류, 조류, 포유류 등의 종과 개체수가 눈에 띄게 감소하였다.
- 환경오염 등에 의한 훼손으로 자연생태계의 질이 저하되었다. 대표적인 예로써 대기오염으로 산림지역 토양이 산성화되어 토양미생물이 사라지는 등 산림생태계가 황폐화되었고, 또한 기온상승과 대기오염 등으로 삼림군집 구조의 변화 및 활력 저하가 나타나고 있다.
- 외래 식물종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60년대 이후 아까시나무, 리기다소나무 같은 외래수종을 심어 서울 고유의 생태계는 심각하게 교란되었다. 특히 자생식물들이 줄어들고 돼지풀, 서양민들레, 서양등골나물, 미국자리공, 가중나무 등 외래식물종이 빠르게 확산 중이다.
- 수중에는 외래종인 블루길, 베스, 붉은귀거북이 등이 번식하여 한강 생태계를 교란시키고 있다.
- 불투수포장의 확대 및 무분별한 지하개발로 지하수위 저하 및 물 순환체계가 교란되고 있다.

3) 하천의 생태적 기능의 상실

- 도시의 곳곳을 그물망처럼 엮고 있는 도시하천은 인간의 쾌적한 휴식과 자연체험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해서도 매우 희소하고 귀중한 기회의 장소이다. 따라서 복개되거나 콘크리트로 획일적으로 정비되어 시민의 관심 밖으로 밀려나 있는 인공하천은 자연형 하천으로 재생되어야 한다.
- 그러나 한강을 제외한 서울시 34개 하천의 총연장 237,715㎞ 중 현재 복개된 곳은 63.29㎞로써 복개율은 약 28%에 달하고 있다. 청계천과 면목천, 월곡천, 녹번천, 봉원천, 시흥천 등은 100% 복개되었으며, 봉천천, 화계천, 가오천은 80%이상, 오류천, 성북천은 70%이상이 복개되어 있는 실정이다.
- 또한, 하천관련 계획 수립시에 환경이나 생태계에 대한 배려 없이 치수에 치중하고 있으며, 사전 조사항목으로써 하천자연생태계에 대한 조사도 없다. 그 결과로 하천은 모든 공간들이 인공적 경관, 인공적 시설물로 가득하게 되고, 지하수 배제, 오수차집관거의 설치 및 유량조절의 실패로 건천화되는 문제점이 노출되었다. 제방도로, 콘크리트 블록 제방, 주차장이나 운동공원화된 일률적 높이의 고수부지, 콘크리트 호안, 주기적인 굴착으로 평탄화된 하상, 어류이동 장애물인 콘크리트 보 및 낙차공으로 대변되는 인공적이고 획일적인 하천단면 등으로 하천내의 다양한 생태적 변이의 발생 가능성 마저 제거되고 있다. 주기적인 하천식생 제거 등의 하천 청소 혹은 하천개수는 어려운 가운데 자연 발생하는 생물서식지를 파괴하고 있다. 식물의 도입이 모색되기도 하지만, 대부분 인공적이고 유지관리비가 많이 드는 잔디밭 조성이 주가 되며, 원예종에 의한 초화단지 등이 여기에 가미되기도 한다.
- 결과적으로 하천은 생물부양기능은 물론이고 친수공간으로써의 기능마저 상실하게 되었다.

2. 여건변화 전망

환경정책

1) 세계화에 따른 환경관리수단의 고도화 압력 증대

- 2000년 8월 30일 환경국이 ISO 14001 인증을 취득하였고 하수처리사업소, 자원회수시설, 정수사업소 등도 ISO 14001 인증을 취득하는 등, 앞으로 환경관리수단이 국제 수준과 비교되면서 더욱 고도화될 전망이다.
- 사전환경성 검토제도가 본격 시행되고 있고, 통합영향평가법이 시행됨에 따라 서울시 환경영향평가조례가 2002년에 제정되었을 뿐 아니라 지속가능성 평가제도 시행에 따라 앞으로 환경관리수단이 점점 다양화될 전망이다.

2) 다부문간 통합사회로의 변화

- 과학기술 발전이 향후 20년간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미래사회는 더욱 더 다부문 통합사회가 될 것이다. 또한 사회가 점점 복잡해지고 한편으로는 전문화되면서 통합적 시각을 가지고 사회를 분석하지 않으면 제대로 된 사회분석 내지 이해가 이루어질 수 없게 되었다.
- 21세기 환경과학은 장소성과 통합성을 중시하는 측면에서의 연구를 필요로 할 것이며, 지구환경변화에 대한 연구가 축적되면서 이전까지는 독립적인 환경문제로 간주되어 왔던 여러 환경문제가 실은 다른 환경분야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게 될 것이다.

3) 사회 변화에 따른 새로운 환경문제 대두

- 여가 증가에 따른 새로운 환경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사람들의 평균수명이 길어지고 평균노동시간은 짧아지면서 레저 또는 스포츠의 중요성이 커질 것이며, 이에 따라 스포츠와 환경의 관계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갈 것이다. 오존층 파괴로 인한 인간에의 부정적 영향이 가시화되면서 사람들의 레저활동이나 야외생활방식이 달라질 것이다.
-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환경정책 결정과정에 참여하고 기회가 확대될 것이다. 노인, 장애인, 여성, 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가 더욱 많은 권리를 요구하면서 환경정책 결

정과정에 적극 참여하게 될 것이다. 결국 환경문제를 다룸에 있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대변하지 않으면 안되게 될 것이다.

4)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증대

- 환경분야에 있어서의 정부의 규제는 더욱 강화될 것이다.
- 지방화가 성숙되면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더욱 강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심화될 전망이다.

대기 및 기후

1) 교통부문에 의한 대기오염 기여도의 증대 경향

- 서울시 대기환경은 교통부문에 의한 영향이 더욱 증대되고 있으며, 자동차에 의한 대기오염 기여도가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앞으로도 자동차 배출가스 배출량은 총량적으로 크게 감소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전체 대기오염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될 전망이다. 77.2%(1994년), 80.7%(1995년), 82.2%(1996년), 85.7%(1997년), 85.4%(1999년)라는 자동차의 영향이 이러한 전망의 근거이다.
- 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 강화, CNG버스 보급 등 품질향상과 노후차량에 대한 배출가스 중간검사제 시행, 노상단속강화, 지하철건설에 따른 교통분담율 조정 등 교통분야의 대기오염 저감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자동차 보급의 급증과 경유차량운행증가 및 매연후처리장비 부착 미흡 등에 따른 자동차 배출가스 배출량의 획기적 감소는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 또한 공간거리 이동수단으로써 서울로의 유입 자동차 통행수요가 감소되지 않아, 교통부문 자동차 환경관리의 한계상황은 지속될 것이다.

2) 대기환경 영향요인의 통합관리 요구 증대

- 도시개발·성장(도시경제의 활성화, 토지이용, 쾌적한 삶의 환경조성), 에너지 이용(수요·공급간 균형, 청정연료의 생산·보급, 재생에너지 이용), 그리고 환경개선(자연자원 관리,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감소, 환경친화적 생산공정, 에너지 이용의 효율화) 등과의 유기적 연계가 필요해지고 있다.
- 대기환경관리의 주도적 역할은 종래의 공공부문에 의한 규제·유도의 시각에서 벗어나, 시민·기업·정부간 역할분담과 참여에 의한 파트너십 체계구축에 의한 대기환경관리의 필요성을 증대시킬 전망이다.

3) 정온하고 쾌적한 생활공간 조성을 위한 시민인식의 변화

- 자동차에 의한 도로변·주거지역에서의 소음수준이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빈도가 높다. 결국 앞으로는 정온한 생활환경 조성에 대한 시민의 기초수요가 더욱 증대할 것이다.
- 도시계획과 건축계획과정에서 도시의 미기후 보호 및 도시 열섬의 억제를 고려하는 도시개발의 환경성 검토제도의 추진에 대한 수요가 증대될 것이다.

4) 지구 및 도시환경 보호를 위한 국제적인 온실가스 감축 압력 증대

- 최근 지구온난화 및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간 협약의 체결과 더불어, 지구환경문제가 국제사회의 새로운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각국의 대기환경정책과 경제활동 전반에 직접·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각종 환경협약이 증가는 지역 대기환경관리의 일차적 책무를 맡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한층 강조하고 있다.
- 서울시의 선도적이며 자발적인 기후변화협약 이행을 위한 대책의 추진이 필요하다. 서울시 차원의 온실가스 감축방안을 수립하여 국제도시로써의 자발적 협정준수 의지를 표명함은 물론, 서울시 경제·산업활동과 대기환경 개선간 균형의 유지를 위한 전략계획의 추진이 요청될 것이다.

수자원 및 수질

1) 물 수요량 증가에 따른 수자원 부족 예상

- 정보 수질개선기획단의 2001년 물관리통계에 따르면 2001년의 용수공급능력은 12,009백만톤이고 용수수요량 12,266백만톤으로 257백만톤이 부족하다고 한다. 더욱이 향후 생활수준의 향상, 지속적인 산업발전으로 물수요는 계속 증가하여 2010년의 용수수요량은 13,056백만톤으로 증가하고 용수공급능력은 12,056백만톤에 그쳐 1,000백만톤 부족한 것이라 한다. 신규 수자원의 개발을 서두르는 이유이기도 하다.

[표 VIII-12] 한강유역의 물수급 현황 및 계획 (단위 : 백만㎥/년)

구 분	1994	2000(2001)	2005	2010	비 고
용수수요량	10,889	12,266	12,512	13,056	• 기존 댐 : 5,117
용수공급량)	11,815	12,009	12,044	12,056	
과부족량	Δ926	Δ257	Δ468	Δ1,000	
신규 수자원 개발	–	430	2,182	2,924	

자료 : 2001년도 물관리통계자료집. 국무총리 수질개선기획단

- 서울시는 상수원수의 98%를 한강지표수에 의존하고 있어 각종 수질오염사고와 가뭄에 구조적으로 취약한 상태이다. 이에 대응하려면 상수원의 다변화가 요구되며 또한 근본적으로 기존의 물공급우선 정책에서 물수요관리 정책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2) 미량물질에 대한 관심 증가

- 지금까지의 BOD, SS 등의 유기물질의 관리에서 환경호르몬이나 다이옥신 등의 유해물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처리농도단위도 백만분의 1에서 10억분의 1까지 강화되어 오염물질을 처리하기가 점점 어려워 질 것이다.
- 서울시 하수처리율이 100%에 육박하지만 합류식 하수도지역에서 강우시의 비점오염물질이 빗물과 함께 하천에 유입되어 공공수역의 수질 및 생태계를 악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3) 양질의 수돗물 관리체계에 대한 시민요구 증대

- 한강수질은 팔당방류량에 의해 크게 좌우되기 때문에 갈수기에 상류지역의 수질이 2급수를 초과할 수 있고 특히 팔당댐의 방류량이 125㎥/s 이하로 장시간 지속될 경우에는 3급수로 떨어질 수도 있다.
- 점진적인 상수원 오염과 음용수 수질기준 항목 확대 및 강화에 대비하여 ' 96년부터 고도정수처리를 위한 단위공정 및 조합공정 실험을 실시하여 한강원수에 적합한 시스템을 선정하였으며, 2002년부터 2003년까지 실증실험을 거쳐 단계별로 고도정수처리시설을 도입하여 보다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할 계획이다.
- 그럼에도 시민들의 수돗물에 대한 만족도는 50%내외에 불과하고, 더욱이 최근의 바이러스 문제와 병원성 원생동물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음용수로써 수돗물의 신뢰도는 저하되고 있다.
- 수돗물의 안전성 확보, 맛있는 수돗물의 생산,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공급, 서비스수준의 향상에 대한 시민의 요구가 증대될 것이다.

4) 한강수질에 대한 관심 증대

- 서울시 하수처리수는 하천을 경유하여 한강으로 유입되며, 2010년 기준으로 하수처리장의 방류량이 72.5㎥/s(1일 평균 627만㎥)에 이를 전망이다. 반면 갈수시에는 팔당댐 방류량이 124.0㎥/s에 불과하고 서울시 상수취수량이 81.3㎥/s에 이르게 되어 하수처리장의 방류수의 한강수질에 대한 영향이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 한강하류의 수질보전을 위해 서울시 하수처리장은 질소와 인의 제거를 강화하고자 고도처리시설이 도입될 예정이다. 고도처리된 하수처리수는 하천유지용수를 비롯하여 화장실 용수, 조경용수, 청소용수 및 농업용수 등으로 공급하도록 요구될 것이며, 이러한 하수처리수 재이용은 서울시 물 자립도를 높여 물수요관리 정책에 중요한 역할을 할 전망이다.

5) 이상기후에 의한 집중호우로 도시형 침수피해 증가

- 이상기후에 의한 집중호우와 지표면의 불투수면의 증가로 강우시에 하수관거의 용량이 부족하여 저지대에서 침수피해가 빈번히 발생할 것이다.
- 서울의 경우 하수관거 5~10년, 유수지 및 빗물펌프장 5~20년 빈도에 대응하도록 우수배제시설이 설치되어 있어 집중호우시 적절한 대처가 어렵고 특히 장시간 집중호우가 발생하면 큰 침수피해를 입을 수 있다. 외국에서는 우수관거의 설계빈도로써 소도시에는 2~25년, 대도시에는 25~50년이 채택되고 있는 실정이다.

폐기물

1) 자체 처리기반 확보와 정비의 필요성 증대

- 상주인구는 감소하나 사업장 활동이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전체적으로 발생량은 늘어날 전망이다. 감량과 자원화를 신장할 수 있는 여지도 점점 감소되어 소각하거나 매립해야할 대상 폐기물량이 명확하게 늘어날 것이다. 수거중심의 재활용사업도 자체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설의 확보를 필요로 할 것이다.
- 특히 수도권매립지의 고갈은 서울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후속 매립지를 찾는 사업을 필요할 것이며, 많은 여유용량이 발생하는데도 시설 소재지만 사용하는 불합리한 운영방식을 개선하라는 요구가 높아질 것이다. 필요할 경우 새로운 소각시설의 건설도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 5종 재활용품과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자원화방식도 변화를 요구할 것이다. 내실있는 자원화를 추진해야 할 것이며 여기에 필요한 필수시설의 확보와 정비가 필요할 것이다. 불합리한 자원화사업이 있다면 재검토도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 대규모 재건축과 재개발사업은 다량의 건설폐기물을 발생시킬 것이며 이는 수도권 건설폐기물 처리분야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반대로 재생골재의 적극적 활용 등 건축사업과 재상산업이 연계되는 새로운 모델의 장이 되기도 할 것이다.

2) 깨끗한 서울에 대한 기대치 상승

- 신속한 수거와 처리 중심의 청소사업에 대해 시민들은 더 이상 만족하지 않을 것이다. 깨끗한 가로와 골목길 등 청소의 결과에 관심을 가질 것이다. 현대화된 장비와 잘 정돈된 시설의 모습을 기대할 것이다. 세계 수준의 도시를 지향하는 서울에 필수조건이기도 하다.
- 기대치를 만족시키려면 청소사업의 범위가 지금보다 확대되어야 한다. 빗자루 청소에 물청소가 추가되고 대형 도로 중심의 가로청소구역이 골목길로 확대될 것이다. 수거할 폐기물이 적게 노출되도록 수거체계도 바꾸고 배출용기도 바뀌어야 할 것이다.
- 그렇지만 깨끗한 거리를 만들려면 많은 비용을 수반할 것이고, 자치구들의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에 대응하고자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청소사업이 추진되어야 하고 민간부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부분은 과감한 민영화가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자연생태계

1) 자연생태계 보존 요구 및 시민참여 증대

- 시민들의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더 높아질 전망이다.
- 시민의 요청에 의한 둔촌동 생태계보전지역의 지정에서 보듯이 시민의 자연환경보존 요구가 급증할 것이다.
- 자연보호 및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시민운동단체 결성 및 시민참여활동이 더욱 증대될 것이다.

2)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법제도 정비 요구 증대

- 자연환경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보전하기 위하여, 자연환경보전계획을 매5년마다 수립·시행하여 자연환경을 공익에 적합하게 보전하고 환경친화적이며 지속가능한 이용이 되도록 하는 자연환경보전조례가 제정되었다. 결국 새로이 자연환경보전 책무가 발생하였으며, 관련 이행조치들이 앞으로 활발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3. 미래상

“맑고 푸르고 수려한 도시”

• 맑고 깨끗한 공기, 늘 푸른 서울하늘

- 시민이 마음껏 안심하고 호흡할 수 있는 공기 질을 유지하고 스모그가 사라진 푸른 서울하늘을 만들어, 시민의 환경가치와 생명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21세기 환경 시대를 선도하는 서울을 만든다.
- 도시경영의 우선순위를 환경복지 증진에 두고 다양한 시민계층 모두의 삶의 질을 고양하기 위해, 서울을 대기환경의 자기진단 및 처방능력을 가진 도시, 도시개발 과정에 기후요소를 도입하여 도시관리의 과학화를 도모하는 도시, 환경가치와 생명가치를 연계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우선하는 도시, 모든 시민에게 공평한 환경서비스가 제공되는 도시로써 거듭 태어나는 계기를 마련하도록 한다.

• 안심하고 사용하며 함께 즐기는 쾌적한 물 환경 도시

- 서울시가 고도기능을 갖춘 도시로써 지속가능하게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물순환계의 재생·보전을 통하여 도시내에 안전하고 풍부한 수량을 확보하고 오염부하를 줄여 맑고 깨끗한 물환경을 창조하는 것과 함께 종합적인 도시재해대책을 구축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쾌적하게 살아 갈 수 있는 물환경도시를 만들어야 한다.

• 폐기물 처리기반을 갖춘 청결한 도시

- 폐기물처리시설이 근린시설로 인정받아 지역의 자랑거리가 되고, 인근주민들이 혜택받는 처리기반을 갖춘 도시를 만든다.
- 시민의 참여와 이해 속에 폐기물이 보이지 않는 도시, 버릴 폐기물이 없는 깨끗한 도시를 만든다.
- 폐기물을 최대한 줄이고, 이미 배출된 것은 자원으로 적극 활용하고, 그래도 남는 부분은 우리의 생활공간에서 적극적으로 처리한다.

• **인간과 자연이 공생하는 도시**

- 인간과 야생동식물이 함께 주인이 되는 도시를 만든다.
- 과거 주로 인간 중심적인 도시의 계획 및 조성에서 이제는 더불어 살아가야 할 야생동식물의 존재를 인식하고 도시의 계획 및 조성에서 이들의 생존과 번영을 함께 배려하는 도시를 시민과 함께 만든다.
- 시민을 포함한 서울시 대내외적 공조체계를 형성하여 생물서식지와 주요 생물종을 보호하고, 나아가 서식지를 적극적으로 복원 또는 창출하는 등 자연과의 공생을 추구하는 세계적 모범도시를 만든다.

4. 계획방향

환경정책

- **지속가능한 발전 이념에 기초한 사전예방적 환경관리체계의 구축**
  - 지속가능한 발전 이념을 서울시 환경관리의 기본적인 이념으로 받아들여 현재와 미래의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사전예방적 환경관리체계를 구축한다.

- **참여와 파트너십에 의한 환경정책 수립 및 집행**
  - 서울시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적절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하여, 서울시, 기업, 시민사회의 3자 파트너십에 기초하여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환경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한다.

- **부문간 통합을 지향하는 환경관리체계의 구축**
  - 환경오염 매체별, 부문별로 분산된 환경관리가 아니라 다부문이 서로 연계되고 통합되는 환경관리체계를 구축하여 환경정책의 효과성 및 효율성을 극대화한다.

- **8자원과 에너지가 순환하는 순환형 사회의 구축**
  - 각종 자연자원과 에너지를 일회성으로 사용하고 폐기하는 폐쇄형 사회에서 탈피하여 자원과 에너지가 순환되는 순환형 사회를 구축한다.

대기 및 기후

- **대기환경용량과 도시기후를 고려하는 도시개발의 추진**
  - 시민의 『삶의 질』에 대한 관심 증대를 도시계획과정에 반영하여 쾌적하고 안락한 생활공간을 조성한다.
  - 도시기후를 고려하는 도시계획과 건축계획의 수립으로 대기환경을 개선하고, 에너지 소비를 억제하고, 쾌적한 도시기후를 조성한다.
  - 대기환경용량과 기후요소를 감안하여 적정수준의 도시개발밀도를 유지한다.

• **대기환경 영향요인별 통합관리**

- 대기환경, 교통, 도시계획, 에너지 소비 등 상호 영향인자간의 연계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서울시 도시성장을 위한 통합패러다임을 개발하고 적용한다.
- 공공부문 중심의 역할부담에서 벗어나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상호 협력하고 협의하는 역할분담의 파트너쉽 구축에 의한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 **대기환경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기 위한 자기진단 및 처방능력의 배양**

- 대기환경 문제의 본질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에 적절히 대응하는 "자기진단" 기능을 갖추어 효과적인 처방능력을 배양한다.
- 대기환경 문제의 사후관리 보다는 사전관리 기능을 확보하여 능동적인 대기환경 개선대안을 마련한다.

수자원 및 수질

• **시민이 안심하고 살수 있는 물 관리 기반 우선 조성**

- 홍수 피해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먹는물을 공급하는 치수체계 및 급수체계를 갖추어 시민의 기본생활을 보호한다.

• **물 자립도 제고와 자체 정화능력 강화를 통한 순환이용체계 마련**

- 발생원에서 처리를 강화하고 처리수의 재이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반 및 유인제도를 마련하여 물순환도시의 조성을 지향한다.

• **시민참여에 의한 도시 물환경 관리 사업 추진**

- 시민의 역할이 강화되고 수혜자인 시민이 만족할 수 있도록 시민과 행정의 교류기회를 증대시켜 물환경보전시스템이 조성되고 운영되게 한다.

폐기물

• **발생된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기반 마련**

- 발생된 폐기물이 안전한 수준으로 처리되고 재활용품이 민간시장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수거체계 및 처리시설 마련

• **국제도시 서울에 위상을 지탱하는 청결성 확보**

- 시민이 일상생활을 방해하지 않고 외국인에게 자랑스럽게 내보일 수 있는 깨끗한 상태의 중심도로와 뒷골목 유지

- **지속적인 감량으로 청소시설의 신규수요 억제**
  - 기업, 시민과 협력하여 감량 및 자원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발생원에서 처리를 확대하여 청소시설의 입지에 따른 사회적 갈등의 완화

자연생태계

- 자연과의 공생을 추구하는 세계적 모범도시를 추구한다.
- 지금까지 방치된 생물서식지 및 주요 종의 보호 대책을 마련한다.
- 복개하천을 포함한 인공화 된 하천을 어린이들과 물고기가 자유롭게 노니는 하천으로 재생시킨다.
- 지속적으로 토착 야생동식물이 감소하고, 외래종이 급속히 확산되는 서울시의 생태계 악화 추세를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생물서식지 및 주요 종의 보존 및 보호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서식지의 적극적 복원 또는 창출로 생활환경 속에서 자연과의 공생을 추구한다.
- 과거 단위 행정관청 주도의 자연환경관리체계에서 탈피하여, 자연생태계 보호, 개선, 창출 추진 주체로써 시민과 전문가를 포함한 서울시 대내외적 공조체계를 형성하여 추진력과 집행력을 강화한다.

5. 목표체계

1) 환경정책

목표	과제	전략	시책	단기	중장기
1. 참여와 파트너십에 의한 환경관리체계 구축	이해관계자 참여 활성화	• 환경행정에의 이해관계자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참여방법 도입	- 외국의 선진 시민참여기법 도입 - 공무원의 시민참여 연수 프로그램 강화 - 대시민 환경교육 및 홍보 지속 추진 - 녹색상품구매제도 촉진		✔
	파트너십을 통한 환경정책 수립 및 집행	• 시민, 기업, 행정의 파트너십 강화	- 「서울의제 21」 실천 강화 - 환경감사제도의 도입 - 지속가능성 평가 지표 도입 - 녹색서울시민위원회의 위상 재정립	✔	
2. 통합적이고 광역적인 환경관리체계 확립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시행	• 서울시 환경영향의 사전평가 및 사후관리 기능의 강화	- 서울시 환경영향평가제도의 통합 시행 - 서울시 지속가능성 평가제도의 정립 - 도시개발사업의 환경적합성 평가를 위한 표준업무 처리 지침의 활용	✔	
	다부문간 통합적인 환경관리체계 구축	• 환경, 도시계획, 교통 부문간 통합적 환경정책 수립 및 집행	- 시정목표와 행정서비스 공급의 재구조화 - 환경용량 평가 - 생태예산제도 도입 - 환경정보시스템 구축 - 환경정보화센터 설치 운영 - 환경친화적 주거단지모델 개발 및 적용	✔	
	광역적·국제적 환경협력체계 구축	• 서울시와 자치구의 환경협력 강화	- 자치구 환경행정의 활성화 - 자치구 환경행정에의 행·재정 지원 강화	✔	
		• 수도권 광역환경행정체제 구축	- 수도권행정협의회 활성화 - 광역환경계획의 통합적 관리	✔	
		• 국제환경협력 강화	- 국제환경협력을 위한 환경행정 강화 - 동북아 대도시 환경협력체제 구축		✔

목표1 참여와 파트너십에 의한 환경관리체계 구축

서울시 환경정책 수립 및 집행에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적극 조장하고 시민, 기업, 행정의 3자 파트너십을 정착시킨다.

과제1 이해관계자 참여 활성화

환경행정에의 이해관계자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참여방법을 도입한다. 이를 위해 공무원의 시민참여 연수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대시민 환경교육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전략 1. 환경행정에의 이해관계자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참여방법 도입

시민참여의 필요성과 중요성은 항상 강조되어 왔으나 시민참여를 촉진하는 실질적인 방법에 대한 논의는 별로 없었으므로 이제 다양한 시민참여 방법을 개발하여 이해관계자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한다.

시책 1. 외국의 선진 시민참여기법 도입
시책 2. 공무원의 시민참여 연수 프로그램 강화
시책 3. 대시민 환경교육 및 홍보 지속 추진
시책 4. 녹색상품 구매제도 촉진

과제2 파트너십을 통한 환경정책 수립 및 집행

환경감사제도를 도입하고 녹색서울시민위원회의 위상을 재정립하는 등으로 시민, 기업, 행정의 파트너십을 강화한다.

전략 1. 시민, 기업, 행정의 파트너십 강화

시민은 생활양식과 소비행태를 환경친화적으로 바꾸고, 기업은 환경을 고려한 생산과 판매활동을 하며, 서울시는 시민과 함께 하는 환경행정을 펼쳐나감으로써 시민, 기업, 서울시가 함께 참여하여 노력하는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해나간다.

시책 1. 「서울의제 21」 실천 강화
시책 2. 환경감사제도 도입
시책 3. 지속가능성 평가지표 도입
시책 4.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위상 재정립

목표 2 통합적이고 광역적인 환경관리체계 확립

도시계획, 교통, 환경 등 여러 부문이 통합되는 환경정책을 수립하는 한편 자치구와 수도권을 포괄하는 수도권 광역환경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나아가 외국 주요 도시와의 환경협력체제를 강화한다.

과제1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시행

서울시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각종 개발사업의 사전 영향을 예측하고 제어할 수 있는 영향평가제도를 시행하여 효율적인 영향평가제도를 강화한다.

전략 1. 서울시 환경영향의 사전평가 및 사후관리 기능의 강화

시책 1. 서울시 환경영향평가제도 시행

시책 2. 서울시 지속가능성 평가제도의 정립

시책 3. 도시개발사업의 환경적합성 평가를 위한 표준 업무 처리 지침의 활용

과제2 다부문간 통합적인 환경관리체계 구축

환경부문의 시정목표와 시책을 도시계획, 교통, 주택, 에너지 등 유관 부문의 시정목표와 시책과 통합한다.

전략 1. 환경, 도시계획, 교통부문간 통합적 환경정책 수립 및 집행

환경관리계획을 도시계획의 상위계획으로 정립하는 한편 환경, 도시계획, 교통부문 정책의 상호 조정과 통합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시책 1. 시정목표와 행정서비스 공급의 재구조화

시책 2. 환경용량 평가

시책 3. 생태예산제도 도입

시책 4. 환경정보시스템 구축

시책 5. 환경정보센타 설치 운영

시책 6. 환경친화적 주거단지모델 개발 및 적용

과제3 광역적·국제적 환경협력체계 구축

환경정책상의 서울시와 자치구간의 역할분담체계를 재정립하며, 서울시는 자치구간 조정기능을 강화하고 자치구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강화한다. 수도권 차원에서의 광역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기존의 행정협의회 제도를 활성화하는 한편 광역환경행정체제를 확립한다. 외국 지방자치단체와 환경협력을 강화하면서 지구환경보호에 기여한다.

전략 1. 서울시와 자치구의 환경협력 강화

광역환경행정의 필요성이 점점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의 환경보전을 위해 서울시와 자치구간 광역차원의 조정 및 역할분담을 체계화한다.

시책 1. 자치구 환경행정의 활성화

시책 2. 자치구 환경행정에의 행·재정 지원 강화

전략 2. 수도권 광역환경행정체제 구축

서울시의 환경문제는 수도권 전체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수도권의 무분별한 개발을 막고 지속가능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서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의 노력을 전개한다.

시책 1. 수도권 행정협의회 활성화

시책 2. 광역환경계획의 통합적 관리

전략 3. 국제환경협력 강화

지구온난화와 오존층 파괴 등 지구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제적 차원에서의 환경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동북아시아 주요도시와의 환경협력을 강화한다.

시책 1. 국제환경협력을 위한 환경행정 강화

시책 2. 동북아 대도시 환경협력체제 구축

2) 대기 및 기후

목표	과제	전략	시책	단기	중장기	정책지표
1. 무지개와 함께 하는 서울하늘의 조성	서울하늘 감성지수의 개발 및 공개	• 시민의 체감 오염도 산정과 공개	- 서울하늘 감성지수의 개발 및 감성지수를 활용한 대기환경정책의 평가체계 구축 - 도로변 대기오염·소음지도 제작과 특정도로 집중관리 - 서울 스모그 발생 메커니즘 분석과 저감방안 모색	✔		지표 1. 서울하늘 단기·중기·장기 계획목표
	환경서비스 접근에의 공평한 기회 제공	• 환경서비스 제공의 기본 원칙 확립과 시민의 삶의 질 개선과 연동화 도모	- 환경신문고 운영으로 환경민원서비스 강화 - 대기오염 실시간 자료의 인터넷 제공 및 연구지원의 확대 - 대기개선 정보, 대안발굴을 위한 기초 자료의 일반공개 - 정보 공개 확대를 통한 대기개선 정책의 투명성 확보	✔		
2.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관리체계 구축	대기환경용량을 고려한 적정 규모의 도시개발 유도	• 지속가능한 도시개발 계획체계의 정립	- 수도권 대기질개선 특별대책 추진 - 도로변 환경부하를 고려한 교통·환경관리정책의 수립 - 교통·환경 통합관리 대상지구의 지정 및 관리		✔	
	자동차 배출 대기오염 특화 관리	• 맞춤형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	- 특정 자동차 배출허용기준강화 및 타지역 차량 진입규제 - 운행자동차 중간검사제도의 확대 시행 - 저공해 차량 보급 추진 - 저공해차량제작·판매·사용 의무화 추진	✔		
	도시개발사업의 환경성과를 평가하여 예산과의 연동화 도모	• 환경성과 계측모형의 개발과 적용	- 환경계량도시 모형의 구축과 활용 - 대기오염물질 배출원의 배출총량규제 실시 추진 - 대기오염물질 과다배출 노후자동차의 조기폐차 유도 및 지원 - 지하생활공간 공기질 관리 강화 - 소음저감 종합대책 - 악취저감 종합대책 - 오존저감 종합대책 - 도시먼지저감 종합대책	✔		
3. 효과적인 대기관리를 위한 도시정보의 통합관리	도시관리 정보시스템의 구축과 활용	• 도시 미기후의 보호 및 쾌적기후 구역의 조성	- 도시관리정보 시스템의 통합DB 구축 - 도시기후 보호를 위한 구릉지 보전		✔	
		• 지구환경 보호와 도시열섬 억제를 위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 온실가스 배출량 DB구축 및 감축방안 추진 - 에너지 저소비형 도시조성을 위한 에너지 소비절약 조례 제정	✔		
	기상특성을 고려한 도시계획 및 건축계획 지침 도입	• 원활한 공기순환 확보를 위한 지구단위계획의 추진	- 도시열섬 완화를 위한 녹지 네트워크 조성 - 토지이용 용도별 토지피복도 상한규정의 조례제정 - 옥상·벽면녹화사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 나홀로 고층건물의 기후생태 영향평가 - 도시개발의 사전환경성 검토지침 적용 - 도시 미기후 분석도면의 제작과 활용		✔	

목표1 무지개와 함께 하는 “서울 하늘” 조성

21세기 대기환경행정의 중심을 시민평가에 두며, 시민의 체감오염도 수준을 시정 평가의 모니터링 수단으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청정 서울하늘을 연상할 수 있는 서울 무지개 계획을 추진하도록 한다.

과제1 서울 하늘 감성지수(sensible index)의 개발 및 공개

서울 하늘의 무지개는 좀처럼 볼 수 없을 정도이며, 이는 대기오염 수준을 반증하는 자연현상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서울 하늘에 걸쳐있는 무지개는 보다 깨끗한 서울의 대기환경을 상징하는 의미이므로, 서울하늘 감성지수는 무지개가 뜨는 깨끗한 서울의 하늘을 유지·달성하고자 하는 청사진을 제공하게 된다.

전략 1. 시민의 체감오염도 산정과 공개

시민의 체감 대기오염 수준은 실제 발표되는 오염지수와는 부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대기오염 상태를 호도(糊塗)한다는 인상을 갖고 있으므로, 시민의 체감오염도 수준과 부합되는 오염지수인 “서울의 대기오염 감성지수” 를 개발한 후에 대기오염 전광판, 서울시 홈페이지 등에 제공하여, 보다 친근하게 대기오염 상태를 시민에게 알려주도록 한다. 한편으로는 년간 감성지수(Smile) 횟수로써 대기환경 개선정책의 평가자료로써 활용한다.

시책 1. 서울하늘 감성지수의 개발

시책 2. 감성지수를 활용한 서울시 대기환경정책의 평가체계의 구축

시책 3. 도로변 대기오염·소음지도 제작과 특정도로의 집중관리

시책 4. 서울 스모그 발생 메카니즘 분석과 저감방안모색

과제2 환경서비스 접근에의 공평한 기회 제공

시민에게 다가가는 서울시 대기환경 개선정책의 구현, 그리고 시민의 다양한 환경기초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대기환경 모니터링 자료의 실시간 공개체계를 더욱 확대한다.

전략 1. 환경서비스 제공의 기본원칙 확립과 서울시민의 삶의 질 개선과 연동화 도모

시책 1. 환경신문고 운영으로 환경민원서비스 강화

시책 2. 대기오염 실시간 자료의 Internet 제공 및 연구지원의 확대

시책 3. 대기개선 정보, 대안발굴을 위한 기초 자료의 일반공개

시책 4. 정보 공개의 확대를 통한 대기개선 정책의 투명성 확보

목표2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관리체계 구축

지속가능한 도시성장을 유도하기 위한 기본전제인 건전한 대기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성장관리의 기본원리를 환경용량에 적합한 도시개발 규모를 지향하고, 또한 이를 달성하기 위한 기본수단으로써 사전 환경영향평가제를 활성화하도록 한다.

과제1 대기환경용량을 고려한 적정 규모의 도시개발

도시개발의 적정규모는 쾌적한 생활환경의 제공 및 삶의 질 제고를 결정하는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특히 도시의 적정규모는 인구·교통·환경·에너지·생태 등 도시의 유기적 성장을 촉진하는 기본전제이기 때문에, 종래의 양적 성장개념에서 탈피하여, 질적 요소를 연계한 적정 성장을 유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대기환경용량을 고려한 도시개발체계를 유지하도록 한다.

전략 1. 지속가능한 도시개발 계획체계의 정립

서울시 도시성장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전제는 건전한 환경성의 확보에 있으므로, 양적 개발 위주의 도시성장을 환경요소를 접목한 계획체계로 전환하여 지속가능한 서울시 도시성장관리를 도모한다.

시책 1. 수도권 대기질 개선 특별대책 추진

시책 2. 도로변 환경부하를 고려한 교통·환경관리정책의 수립

시책 3. 교통·환경 통합관리 대상지구의 지정 및 관리

과제2 자동차 배출 대기오염 특화 관리

서울시 대기환경에 미치는 교통부문의 절대적 비중을 낮추고, 저공해 자동차 운행을 촉진할 수 있는 자동차 배출량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전략 1. 맞춤형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

시책 1. 특정 자동차 배출허용기준 강화 및 타지역 차량 진입 규제
시책 2. 운행자동차 중간검사제도의 확대 시행
시책 3. 저공해 차량 보급 추진
시책 4. 저공해 차량 제작·판매·사용 의무화 추진

과제3 도시개발사업의 환경성과를 평가하여 예산과의 연동화 도모

도시계획, 토지이용 등 대기환경에 직접·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반 요인을 총체적으로 고려하는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또한 서울시 도시정책의 효율성·환경성을 동시에 평가할 수 있는 계량화된 평가모형을 개발하여, 모든 서울市政이 효율성과 환경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책집행자·서울시민이 모두 공감할 수 있는 투명한 서울시정의 평가도구로써 활용이 가능하도록 한다.

전략 1. 환경성과 계측모형의 개발과 적용

서울시 각종 개발사업의 추진에 의한 환경영향을 평가하고, 이의 성과를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연계하여, 건전한 도시성장을 유도할 수 있는 평가모형으로써 "환경성과 계측모형"을 개발하여 적용한다.

시책 1. 환경계량도시 모형의 구축과 활용
시책 2. 대기오염물질 배출원의 배출총량규제 실시 추진
시책 3. 대기오염물질 과다배출 노후 자동차의 조기폐차 유도 및 지원
시책 4. 지하생활공간 공기질 관리 강화
시책 5. 소음저감 종합대책
시책 6. 악취저감 종합대책
시책 7. 오존저감 종합대책
시책 8. 도시먼지저감 종합대책

목표3 효과적인 대기관리를 위한 도시정보의 통합관리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적 시스템으로써 도시개발·교통·에너지·폐기물·토양·수환경 등이 대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고, 이를 적정 관리할 수 있는 환경관리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활용하도록 한다.

과제1 도시관리정보 시스템의 구축과 활용

대기환경오염과 도시생태계 악화 등 도시개발과정의 반작용으로 나타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개발의 영향인자인 대기·기후·폐기물·에너지·교통·수환경·토양 등에 미치는 정량·정성적으로 가늠할 수 있는 도시관리정보 시스템의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연후에 도시관리정보 시스템의 구성 항목별 중첩적용에 의한 도시개발계획의 개발수준을 결정할 수 있게 되어, 결과적으로 환경적으로 건전하며 지속가능한 도시성장이 이루어지게 된다. 한편으로는 지구환경 보호 및 도시열섬 억제를 위한 목적에서 온실가스 배출량 DB구축, 이에 따른 감축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국내·외 환경갈등요인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기반을 구축한다.

전략 1. 도시 미기후의 보호 및 쾌적기후구역의 조성

시민의 쾌적한 생활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인위적 요소에 의한 도시기후 및 생태환경의 변화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특히 기후요소는 시민의 건강수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기 때문에, 도시기후의 인위적인 영향을 배제하고, 건강한 삶의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기본전제로써 쾌적한 기후구역을 조성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시책 1. 도시관리정보 시스템의 통합DB 구축

시책 2. 도시기후 보호를 위한 구릉지 보전

전략 2. 지구환경 보호 및 도시열섬 억제를 위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국내·외 환경여건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환경자치제 역량을 구축하는 환경자치제의 실현과 더불어, 세계속의 선진도시인 서울로써 거듭 태어나기 위해서는 지구온난화를 유발하는 온실가스 감축노력에 적극 동참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주체로써 서울 중심의 배출량 DB구축과, 이에 따른 배출량 저감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시책 1. 온실가스 배출량 DB구축 및 감축방안 추진

시책 2. 에너지 저소비형 도시조성을 위한 에너지 소비절약 조례 제정

과제2 기상특성을 고려한 도시계획 및 건축계획지침 도입

맑고 깨끗한 서울 하늘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대기오염물질의 배출 억제와 함께, 대기확산에 의한 대기질 개선·에너지 소비부하의 감소·온도 조절 등의 효과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친화적 도시계획의 운용이 또한 필요하다. 특히 도시공간의 용도·규모·위치 등을 결정하는 도시계획의 제반과정에서 기후특성을 고려하게 되면, 대기환경 개선·에너지 소비절약 등의 효과를 도모할 수 있게 된다.

전략 1. 원활한 공기순환을 확보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의 추진

시책 1. 도시열섬 완화를 위한 녹지 네트워크 조성

시책 2. 토지이용 용도별 토지피복도 상한규정의 조례제정

시책 3. 옥상·벽면녹화사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시책 4. 나홀로 고층건물의 기후생태 영향평가

시책 5. 도시개발의 사전 환경성 검토지침 적용

시책 6. 도시 미기후 분석도면의 제작과 활용

3) 수자원 및 수질

목표	과제	전략	시책	단기	중장기	정책지표
1. 안전하고 깨끗한 물환경 도시 만들기	먹는 물 수질향상	• 상수원의 수질관리대책 강화	- 상수원보호구역의 수질관리 기반조성 - 수질오염감시체계 강화 및 수질환경사고 대응능력 향상 - 오염물질 처리 및 오염발생원 처리체계 구축	✔		지표 2. 상수도 유수율
		• 먹는물의 관리대책 강화	- 수도물의 수질기준 강화 - 고도정수처리시설 개선 및 확충 - 누수방지 및 수질개선을 위한 노후수도관 개량 - 정수장 운영관리 강화 및 책임체계 확립	✔		
	오염물질 발생원 관리강화	• 비점오염원 관리 및 처리대책 강화	- 강우시 대량 오염을 발생하는 비점오염원의 관리기준 마련 - 도시관리 및 우수유출저감에 의한 비점오염원 저감대책 추진		✔	
		• 산업폐수 저감 및 관리대책 강화	- 산업구조변화로 증가되는 신규 유해물질의 관리체계 마련 - 폐수저감 및 폐수재이용을 위한 처리기술 개발의 활성화	✔		지표 3. 정비대상 하수관거 대비 하수관거 정비율
	하수도 정비·재구축	• 공공수역의 수질보전 강화	- 고도처리의 도입 - 고도처리수의 하천유지용수 공급방안 추진	✔		
		• 하수관거 정비 강화	- 상·하수도 통합관리의 추진 - 합류식하수도의 개선 및 가능한 지역에 대한 분류식 하수도 보급 추진 - 초기강우 월류수 처리 및 관리체계 구축 - 수세변소수 직유입 대비 지속적인 하수관거 종합정비 추진		✔	
2. 풍부한 물의 도시만들기	도시의 자연물순환계 보전·재생	• 지표면 빗물 침투능의 회복	- 산림, 녹지대의 보전 및 조성 - 지표면의 침투능 향상 및 침투면 확대사업 추진	✔		지표 4. 상수사용량 대비 절수율
		• 하천의 자연유량 확보	- 하천유지용수 수원의 보전·회복사업 추진 - 하천수원의 광역적 모니터링 실시 및 평가사업 추진		✔	
	다양한 수자원의 확보	• 상수원의 다변화	- 다양한 상수원의 개발 및 확보 - 정수처리기술개발		✔	
		• 도시수자원의 개발 및 확보	- 오·폐수처리시설 처리수의 수자원으로 활용체계 구축 - 지하수 기초자료 확보 및 지하수 관리방안 마련 - 적정한 지하수 개발·이용 - 유출 지하수 활용	✔		
		• 수자원의 안정적 확보	- 기존댐의 효율적 관리 - 중소규모의 댐건설 추진		✔	
	물의 유효이용	• 수돗물절약·저소비 형태로 전환	- 절수 대책 마련 - 절수시책추진에 의한 절수설비 개발 및 적용확대 - 상수도요금 현실화 추진	✔		
		• 사용용도별 용수 공급체계로 전환	- 중수도의 처리·유지관리기술 개발촉진 및 보급확대 - 하수처리수 재이용·공급체계 구축	✔		
3. 수해에 강한 도시만들기	수해에 강한 수방관리체계 확립	• 하천, 하수도, 수방시설을 연계한 종합적인 치수대책	- 유역단위 하천관리체계의 구축 - 수방시설 대응력 강화 - 수방정보시스템 구축 및 수방관리체계의 강화		✔	
		• 침수피해 저감대책	- 우수유출저감사업 정비 및 확충 - 우수배제시설의 정비 및 강화 - 침수지역의 재개발 및 신규건축물 규제 - 홍수예경보 및 재난대피체계의 확보	✔		
	갈수기 및 비상시의 안전한 물확보 및 공급체계 확립	• 대체용수 개발 및 비상용수공급체계 확보	- 지하수활용에 의한 비상급수체계 구축 - 빗물 및 하수고도처리수의 이용체계 구축	✔		

목표1 안전하고 깨끗한 물환경 도시 만들기

도시활동과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오염부하를 줄여 맑고 깨끗한 수원을 확보하며 안전하고 맛있는 수돗물을 공급한다.

과제1 먹는 물 수질 향상

시민의 입맛을 만족시키고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을 공급한다.

전략 1. 상수원의 수질관리대책 강화

맑고 좋은 원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상수원의 수질오염저감 및 수질관리를 철저히 하여 오염원이 유입되지 않는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시책 1. 상수원보호구역의 수질관리체계 구축

시책 2. 수질오염감시체계 강화 및 수질환경사고 대응능력 향상

시책 3. 오염물질 처리 및 오염발생원 관리체계 구축

전략 2. 먹는 물의 관리대책 강화

시민이 항상 안심하고 마실 수 있고 시민의 요구수준에 대응할 수 있는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수돗물 수질의 안정성 확보, 맛있는 수돗물 생산, 수돗물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공급, 서비스 수준의 만족도를 유지하는 수돗물공급체계를 구축한다.

시책 1. 수돗물의 수질기준 강화

시책 2. 고도정수처리시설 개선 및 확충

시책 3. 누수방지 및 수질개선을 위한 노후수도관 개량

시책 4. 정수장 운영관리 강화 및 책임체계 확립

과제2 오염물질 발생원 관리강화

오염물질을 발생단계에서부터 저감하여 근원적인 수질오염을 막고 상류지역 지차체와 협조체계를 강화하여 공공수역과 하천의 수질 개선에 기여한다.

전략 1. 비점오염원 관리 및 처리대책 강화

비점오염원의 발생을 최대한 저감시키는 관리대책을 강화하고 발생한 비점오염원은 하천으로의 유입을 최소화시키는 빗물유출저감시설 등의 차단시설을 마련한다.

시책 1. 강우시 대량 오염을 발생하는 비점오염원의 관리기준 마련

시책 2. 도시관리 및 우수유출저감에 의한 비점오염원 저감대책 추진

전략 2. 산업폐수 저감 및 관리대책 강화

산업폐수는 오염농도가 높고 유해물질이 포함되어 있어 수질오염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발생업체를 지속적으로 지도단속하고 폐수처리시설개선 등을 유도하며 생산공정에서부터 폐수발생량을 감소시키고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는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시책 1. 산업구조변화로 증가되는 신규 유해물질의 관리체계 마련

시책 2. 폐수저감 및 폐수재이용을 위한 처리기술 개발의 활성화

과제3 하수도 정비·재구축

시민생활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효율적으로 차집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조성뿐만 아니라 하천의 수질을 회복시켜 각종 용수로 공급하고, 친수공간을 제공하며, 자연생태계를 보전한다.

전략 1. 공공수역의 수질보전 강화

향후 하수처리장의 강화된 방류수질기준에 대처하고 한강 수질개선효과의 극대화와 빈번하게 발생하는 부영양화를 방지하기 위해 하수처리장에 고도처리 도입을 추진하여 환경오염과 친수공간에 대한 시민의식의 향상에 대응하고 발생하는 하수처리수는 재이용한다.

시책 1. 고도처리의 도입

시책 2. 고도처리수의 하천유지용수 공급방안 추진

전략 2. 하수관거 정비 강화

정비대상 하수관거를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정비하고, 하수가 원활하고 신속하게 배제되어 위생적으로 처리되도록 하며, 합류식 하수도에서 월류수에 의하여 하천의 수질오염이 발생되지 않는 하수관리체계를 마련한다.

시책 1. 상·하수도 통합관리의 추진

시책 2. 합류식 하수도의 개선 및 가능한 지역에 대한 분류식 하수도 보급 추진

시책 3. 초기강우 월류수 처리 및 관리체계 구축

시책 4. 수세변소수 직유입 대비 지속적인 하수관거 종합정비

목표2 풍부한 물의 도시 만들기

물순환계의 재생·보전과 물재이용을 통하여 도시내에 안전하고 풍부한 수량을 확보하고 물 자립도를 높인다.

과제1 도시의 자연 물 순환계 보전·재생

지표면의 빗물침투능을 향상시켜 유출저감 및 지하수함양을 증가하고 빗물을 저류하여 도시용수로 이용하여 치수기능과 이수기능을 가진 도시환경을 형성한다.

전략 1. 지표면 빗물침투능의 회복

도시지표면에서 빗물이 지하로 침투되도록 하여 지하수를 함양시키고 식물의 성장 및 지하생태계를 활성화시키며 빗물유출을 저감시켜 비점오염원에 의한 수질오염과 침수피해를 줄이도록 노력한다.

시책 1. 산림, 녹지대의 보전 및 조성

시책 2. 지표면의 침투능 향상 및 침투면 확대사업 추진

전략 2. 하천의 자연유량 확보

건천화된 하천의 기능을 회복시키고 시민들에게 자연·친수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하천유지용수 확보대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표면의 침투능력을 재생시키고 녹지공간등 자연침투면을 확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한다.

시책 1. 하천유지용수 수원의 보전·회복사업 추진

시책 2. 하천 수원의 광역적 모니터링 실시 및 평가사업 추진

과제2 다양한 수자원의 확보

도시에서 확보가능한 수자원을 다양하게 개발하여 용수취수의 한강지표수 의존도를 낮추고 수자원의 자립도를 높여 시민에게 안정적으로 물을 공급하고 이상가뭄에 대비한다.

전략 1. 상수원의 다변화

도시상수원을 다변화시켜 지표수의 의존도를 낮추어 용수공급의 구조적인 문제점 해결에 노력한다.

시책 1. 다양한 상수원의 개발 및 확보

시책 2. 정수처리기술개발

전략 2. 도시수자원의 개발 및 확보

물 재이용시스템의 구축과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을 통하여 도시수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앞으로의 물 부족사태와 가뭄시에 물 걱정이 없는 용수공급시스템을 구축한다.

시책 1. 오·폐수처리시설 처리수의 수자원으로 활용체계 구축

시책 2. 지하수 기초자료 확보 및 지하수 관리방안 마련

시책 3. 적정한 지하수 개발·이용

시책 4. 유출 지하수 활용

전략 3. 수자원의 안정적 확보

이와 함께 향후 물 부족에 대처하기 위하여 화천댐을 다목적댐으로 전환하여 관리함으로써 서울 및 수도권지역에 용수를 공급하며, 수도권에 중·소규모(5,000만톤~1억톤) 규모의 댐 건설을 검토하여 수자원을 확보하도록 한다.

시책 1. 기존 댐의 효율적 관리

시책 2. 중소규모의 댐 건설 추진

과제3 물의 유효이용

상수도요금의 현실화, 절수기기의 도입 및 중수도 시설의 확대보급, 하수처리수 재이용, 빗물이용을 통하여 수돗물 사용량을 줄이는 동시에 한번 사용한 물을 처리하고 용도에 맞게 재 이용하여 물을 효율적으로 사용한다.

전략 1. 수돗물 절약·저소비형태로 전환

물 수요를 억제하여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절수형기기의 도입과 상수도요금의 현실화를 추진하는 것과 함께 이용자의 절수의식을 높이고 절수형 기기 사용을 홍보한다.

시책 1. 절수대책 마련

시책 2. 절수시책 추진에 의한 절수설비 개발 및 적용확대

시책 3. 상수도요금 현실화 추진

전략 2. 사용용도별 용수공급체계로 전환

용수공급체계가 지표수의 오염이나 가뭄에 취약한 구조로 형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도시의 물 자립도를 높이고 물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수도 및 빗물과 같은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시스템을 다각적으로 도입한다.

시책 1. 중수도의 처리·유지관리기술 개발 촉진 및 보급 확대

시책 2. 하수처리수 재이용공급체계 구축

목표3 수해에 강한 도시 만들기

종합적인 치수대책의 강화와 안전한 물 확보를 통하여 도시재해의 피해를 줄여 시민의 생명과 자산을 보호한다.

과제1 수해에 강한 수방관리체계 확립

서울시에 적정한 수방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홍수재해로부터 보호하여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한다.

전략 1. 하천, 하수도, 수방시설을 연계한 종합적인 치수대책

시민들이 생명과 재산을 홍수재해로부터 지키고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치수행정면에서 갖추어야 하는 비구조적인 대책과 시설보강 및 확충측면에서 개선해야하는 구조적인 대책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치수대책을 수립한다.

시책 1. 유역단위 하천관리체계의 구축

시책 2. 수방시설 대응력 강화

시책 3. 수방정보시스템 구축 및 수방관리체계의 강화

전략 2. 침수피해 저감대책

최근의 기상이변에 따른 국지적 집중호우에 따른 돌발홍수에 의한 침수피해를 저감시키기 위해 빗물을 발생지역에서 저류·침투시켜 유출을 최대한 막고 이와 함께 침수예상지역의 구체적인 대피체계 확보와 훈련프로그램을 준비한다.

시책 1. 우수유출저감사업 정비 및 확충

시책 2. 우수배제시설의 정비 및 강화

시책 3. 침수지역의 재개발 및 신규건축물 규제

시책 4. 홍수 예상 경보 및 재난대피체계의 확보

과제2 갈수기 및 비상시의 안전한 물 확보 및 공급체계 확립

갈수기나 이상가뭄에 시민이 물을 안정적으로 사용하고 비상시에 필요한 물을 지역의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공급시스템을 구축한다.

전략 1. 대체용수 개발 및 비상용수공급체계 확보

지하수와 빗물 및 하수처리수를 이용하는 급수체계를 구축하여 급수제한기간과 비상시에도 대처가 가능하게 한다.

시책 1. 지하수활용에 의한 비상급수체계 구축

시책 2. 빗물 및 하수고도처리수의 이용체계 구축

4) 폐기물

목표	과제	전략	시책	단기	중장기	정책지표
자원이 순환하는 청결한 도시 구현	폐기물 없는 생활공간 조성	• 감량 추진	- 감량유도형 생산자책임제도 정착 - 불요불급한 제품의 지속적 사용억제 - 음식업소 음식문화의 획기적 개선 - 수혜자부담원칙에 입각한 비용부담 - 발생원 감량화 기법의 개발과 보급 - 폐기물무배출사회 조성 가능성 연구	✔		지표 5. 예상발생량 대비 감량실적
		• 재활용 및 자원화 추진	- 대규모 재개발지역의 건설폐기물 활용 - 처리시설 잔재물의 재자원화 유도 - 사업장의 재활용품 분리 활성화 - 재활용제품산업의 지원 확대 - 미래형 자원화기술의 연구 개발 - 분리수거 품목 확대		✔	
		• 바른 폐기물 배출방법 정착	- 상습투기지역의 체계적 관리 - 가로휴지통의 확충 - 시민의 참여가 용이한 분리품목 설정 - 시민과 함께하는 가로청소 문화 정착	✔		지표 6. 실발생량 대비 자원화실적
	시민이 신뢰하는 폐기물 처리	• 유해물질의 분리수거	- 형광등, 수은건전지 등의 별도 수거 - 유해성폐기물의 처리기반 확충	✔		
		• 기초시설의 환경성 제고	-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확보 - 자치구 재활용선별장 확보 및 개보수 - 공공 처리시설의 환경성 강화 - 난지도매립지의 체계적인 사후관리 - 자원회수시설 가동률 향상 추진 - 자원회수시설의 주민친화공간화으로 재구성 - 미래형 시설의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	지표 7. 실발생량 대비 수도권매립지 의존처분량
		• 시민과의 신뢰 구축	- 「서울의제 21」의 성실한 이행 - 폐기물관리계획의 공동 수립과 이행 - 신뢰성 있는 처리실적 작성 - 관리현황 정보의 수시 공개	✔		

목표 **자원이 순환하는 청결한 도시 구현**

버려지는 양이 대폭 줄고, 도심 곳곳이 청결하고, 폐기물이 원활하게 흘러갈 수 있는 처리체계를 구비한다.

과제1 폐기물 없는 생활공간 조성

불필요한 폐기물을 만들지 않고, 재활용과 자원화가 가능하도록 분리하고, 바른 배출과 정시 수거를 준수하여 도시의 모든 생활공간이 청결하게 유지되도록 한다.

전략 1. 감량 추진

추정 발생량을 기준으로 실 발생량의 목표를 설정하여 달성한다. 제품의 생산방법, 소비형태, 수수료 징수 체계, 발생원에서의 처리 추진 등의 수단이 요구된다. 감량은 재활용과 처리에 수반된 모든 기반시설의 수요를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나 가시적인 성과를 달성하려면 생산자, 시민, 행정부의 노력과 참여가 필요하다.

시책 1. 감량유도형 생산자책임제도 정착
시책 2. 불요불급한 제품의 지속적 사용억제
시책 3. 음식업소 음식문화의 획기적 개선
시책 4. 수혜자부담원칙에 입각한 비용부담
시책 5. 발생원 감량화 기법의 개발과 보급
시책 6. 폐기물무배출사회 조성 가능성 연구

전략 2. 재활용 및 자원화의 추진

소각, 매립 등의 방법으로 처리해야할 생활폐기물, 즉 폐기물의 양을 줄이려면 적극적인 재활용 및 자원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재활용품 대상 품목의 분리율 제고, 자원화 기반확충, 재활용제품 또는 자원화제품의 수요처 창출 등의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시책 1. 대규모 재개발지역의 건설폐기물 활용
시책 2. 처리시설 잔재물의 재자원화 유도
시책 3. 사업장의 재활용품 분리 활성화
시책 4. 재활용제품산업의 지원 확대
시책 5. 미래형 자원화기술의 연구 개발
시책 6. 분리수거 품목 확대

전략 3. 바른 폐기물 배출방법 정착

청소사업의 기본목적은 도시의 청결성과 위생성 제고이다. 감량과 재활용도 중요하지만 폐기물의 바른 배출방법을 정착시켜 깨끗한 서울이 유지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시책 1. 상습투기지역의 체계적 관리

시책 2. 가로휴지통의 확충

시책 3. 시민의 참여가 용이한 분리품목 설정

시책 4. 시민과 함께하는 가로청소 문화 정착

과제2 시민이 신뢰하는 폐기물 처리

서울시의 여건에서 폐기물관리에 요구되는 기반시설들을 신중하게 선택하고 운영하여 시민들이 해를 입거나 심리적으로 불안감을 갖지 않도록 한다.

전략 1. 유해물질의 분리수거

소각시설이나 매립시설에 반입될 경우, 환경오염물질로 작용할 수 있는 품목들을 분리수거하여 별도로 처리하는 체계를 갖춘다.

시책 1. 형광등, 수은건전지 등의 별도 수거

시책 2. 유해성 폐기물의 처리기반 확충

전략 2. 기초시설의 환경성 제고

자원화시설, 소각시설 등 폐기물 관련 기초시설들의 성능조건을 강화하고, 배출규제를 실시하여 환경기초시설로써 역할을 충실하게 이행하게 한다.

시책 1.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확보

시책 2. 자치구 재활용선별장 확보 및 개보수

시책 3. 공공 처리시설의 환경성 강화

시책 4. 난지도매립지의 체계적인 사후관리

시책 5. 자원회수시설 가동률 및 성능 향상 추진

시책 6. 자원회수시설을 주민친화공간으로 재구성

시책 7. 미래형 시설의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전략 3. 시민과의 신뢰구축

소각시설의 건설과정 등에서 행정부와 시민이 마찰을 빚고, 상호불신을 토로하는 사례가 많았던 바, 상호 신뢰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시책 1. 「서울의제21」의 성실한 이행

시책 2. 폐기물관리계획의 공동수립과 이행

시책 3. 신뢰성 있는 처리실적 작성

시책 4. 폐기물관리정보의 수시 공개

5) 자연생태계

목 표	과 제	전 략	시 책	단기	중장기	정책지표
야생동물이 다시 돌아오는 서울	서식지 및 주요 생물종 보호	• 도시녹지의 보호	- 서울시 야생동식물 보호지역의 지정과 관리기준 마련 - 도시공원, 자연공원, 환경공원, 생태공원 등 공원의 종류를 이용 목적에 따라 현실화하고 유형별로 효율적인 관리방안 마련 - 인간이용보다 생물다양성 증진을 우선하는 공원 관리 - 가치 있는 도시녹지의 보호	✔		지표 8. 생태계 보전지역 면적
		• 한강생태계의 보호	- 한강과 지천의 하천 생태계의 조사, 평가와 보호 대책 마련 - 자연형 하천관리정책과 치수와 적절히 조화 - 수변의 지형 및 식생 복원으로 하천생물 서식처 마련 - 하천변에 자연학습장을 조성하여 시민이 가까이 자연을 접함		✔	
		• 습지의 보호	- 자연습지 현황조사 및 보전대책 마련 - 자연습지의 생태보전지역 지정 및 보호 - 생태적으로 건전한 습지 유지를 위한 관리기준 마련	✔		
		• 농경지의 보호	- 농경지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개선 촉진		✔	
	생물 서식환경의 개선과 창출	• 하천의 생태적 재생	- 청계천 등 복개하천의 재생 - 중랑천, 탄천, 안양천, 홍제천 등 인공화 된 하천의 자연형 하천 정비로 하천의 생태적 기능 재생		✔	지표 9. 생태축 연결 개소수
		• 도시녹화	- 모든 적절한 수단을 동원한 생물다양성 증진 - 옥상, 베렌다, 벽면의 녹화 등 시가지 인공건조물 녹화 - 도시 소공간 및 유휴 토지의 녹화		✔	
		• 생태축 설정 및 재생	- 생태축 설정 및 끊어진 생태축을 생태통로로 연결 - 일상생활권까지 녹도를 이용한 생태축 연결 - 생태통로 조성 효과 사후평가	✔		
		• 서식지 조성	- 공원 조성시 적정규모의 인공습지 등 생물서식지 조성 - 개발사업계획에서 생물서식지 조성 권고 - 서식지 조성 효과 사후평가		✔	
		• 생물서식지로의 시민 접근성 개선	- 자연녹지에 대한 시민의 접촉 기회 증진과 접근성 개선 - 하천변에 자연체험·학습장을 조성하여 시민이 가까이 자연을 접할 수 있게 함 - 택지, 마을, 공원, 학교운동장, 환경교육센터, 도시농원 등 인공지역에서도 자연과의 규칙적인 직접 접촉기회 제공	✔		
	서울시 대내외적 공조체계 구축	• 공조체계 구축	-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실천계획의 작성과 이행을 위한 시민 또는 시민단체와의 공조체계 형성과 유지의 장려 및 지원 - 생물다양성 보존분야 세계 중심도시로써의 명성 추구 - 생물다양성 보존에 기업의 역할 장려	✔		
		• 상·하위 및 주변 지자체와의 공조	- 주변 지자체의 생물다양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저감 노력 - 생물종 및 서식처 보호를 위해 중앙정부, 인근 지자체, 기초자치단체와의 공조체계 구축	✔		
		• 환경교육	-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민간 환경교육단체 지원		✔	
	자연생태계 보전 기반 구축	• 자연환경 보전체제의 확립	- 생태계보전지역 지정 확대 - 생물다양성 증진체계 구축 - 자연환경보전 실천계획 수립 - 자연환경 보전 조직의 강화 - 도시생태계 모니터링의 체계화 - 도시생태계 장기모니터링 체계의 구축 - 도시계획에서 자연환경 보전의무의 강화	✔		
		• 자연환경 보전활동의 지원	- 자연환경 기초정보의 수집 및 공개 - 사유지 보전을 위한 보존지협정제도 도입 - 시민참여 생태조사 및 정보유통 활성화 지원		✔	

목표 **야생동물이 다시 돌아오는 서울**

생물서식지 및 주요 종의 보존 및 보호에서 더 나아가 서식지의 적극적 복원과 창출로 도시 속에서 인간과 자연과의 공생을 추구함으로써 서울을 떠났던 토착 야생동식물들이 다시 돌아와 번성하는 세계적 모범도시를 만든다.

과제1 생물서식지 및 주요 생물종 보호

도시의 생물다양성은 생물서식지 범위 전역에 걸친 보호와 적절한 관리에 좌우된다. 급속한 도시개발에 따라 생물서식지가 훼손되어 지속적으로 토착 야생동식물이 감소하고, 외래종이 급속히 확산되는 서울시의 생태계 악화를 막기 위해서는 우수한 생물서식지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거친 보전지 지정과 철저한 보호관리가 시급하다.

전략 1. 도시녹지의 보호

척박한 도시환경 가운데 혹은 도시외곽에 남아있는 공원, 산림 등의 도시녹지는 야생생물들의 귀중한 잠재서식지이므로 이들의 가치를 평가하여 적절한 보호조치를 강구한다.

시책 1. 서울시 야생동식물 보호지역의 지정과 관리기준 마련
시책 2. 도시공원, 자연공원, 환경공원, 생태공원 등 공원의 종류를 이용목적에 따라 현실화하고 유형별로 효율적인 관리방안 마련
시책 3. 인간이용보다 생물다양성 증진을 우선하는 공원 관리
시책 4. 가치 있는 도시녹지의 보호

전략 2. 한강생태계의 보호

한강 본류와 지천은 서울시의 역사와 문화 속에서 독특한 역할을 담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행락과 생물다양성 측면에서도 특별한 가치를 가진다. 하천과 하천주변토지를 포괄하는 하천회랑 개념 하에서 하천과 하천주변토지의 이용과 관리에 관한 원칙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하나의 대안적 원칙은 하천의 자연화 및 보호, 그리고 하천주변의 공원화이다.

시책 1. 한강과 지천의 하천 생태계의 조사, 평가와 보호 대책 마련
시책 2. 자연형 하천관리정책과 치수와 적절히 조화
시책 3. 수변의 지형 및 식생 복원으로 하천생물 서식처 마련
시책 4. 하천변에 자연학습장을 조성하여 시민이 가까이 자연을 접할 수 있게 함

전략 3. 습지의 보호

습지는 생물다양성의 원천임에도 불구하고 도시에서 거의 사라진 희소한 자연경관이므로 이들을 발굴하여 개발로부터 보호하고, 체계적인 조사와 연구를 통해 보존방안을 마련한다.

시책 1. 자연습지 현황조사 및 보전대책 마련

시책 2. 자연습지의 생태계보전지역 지정 및 보호

시책 3. 생태적으로 건전한 습지 유지를 위한 관리기준 마련

전략 4. 농경지의 보호

농경지는 도시에서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할 뿐만 아니라 독특한 생물서식지로써 고유의 기능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주로 도시외곽에 위치하고 개발압력에 노출되어 점진적 토지형질 변경과정을 거치면서 고유의 농경지 모습을 상실해 가고 있다. 명목적인 농경지 보호가 아닌 생물서식지로써 생태적 기능상의 보호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한다.

시책 1. 농경지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개선 촉진

과제2 생물 서식환경의 개선과 창출

하천의 생태적 재생, 도시녹화, 생태축 재생, 서식지 조성 등을 통해 도시에서의 야생생물 서식 잠재성을 높이고 시민들이 생물 서식환경을 체험할 수 있도록 시민 접근성을 개선한다.

전략 1. 하천의 생태적 재생

자연을 찾아보기 힘든 과밀한 도시의 곳곳을 그물망처럼 엮고 있는 도시하천은 인간의 쾌적한 휴식과 자연체험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해서도 매우 희소하고 귀중한 기회의 장소이다. 따라서 복개되거나 콘크리트로 획일적으로 정비되어 시민의 관심 밖으로 밀려나 있는 인공화 된 하천(복개하천 포함)을 어린이들과 물고기가 노니는 자연형 하천으로 정비하여 생태적 기능을 재생시킨다.

이를 위해 복개하천의 상부구조물을 제거하고, 하천유입 수질을 정화하며, 하천 내 물리적 구조를 개선한다. 복개하천의 복원은 하수도 정비, 도로건설, 유지용수 확보 등 시설계획과 안전, 폐기물, 교통처리 대책을 세우고 주변의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시책 1. 청계천 등 복개하천의 생태적 재생

시책 2. 중랑천, 탄천, 안양천, 홍제천 등 인공화 된 하천의 자연형 하천 정비로 하천의 생태적 기능 재생

전략 2. 도시녹화

모든 적절한 수단을 동원하여 도시를 녹화함으로써 야생생물의 서식 잠재성을 높인다.

시책 1. 모든 적절한 수단을 동원한 생물다양성 증진

시책 2. 옥상, 베란다, 벽면의 녹화 등 시가지 인공건조물 녹화

시책 3. 도시 소공간 및 유휴 토지의 녹화

전략 3. 생태축 설정 및 재생

야생생물의 서식장소이자 이동, 확산 통로인 생태축을 설정하고, 일부 끊어진 생태축을 재생시키거나 생태통로로 연결하여 생태축의 기능을 높인다.

시책 1. 생태축 설정 및 끊어진 생태축을 생태통로로 연결

시책 2. 일상생활권까지 녹도를 이용한 생태축 연결

시책 3. 생태통로 조성 효과 사후평가

전략 4. 서식지 조성

도시 내에서 생물서식지의 양적 감소와 질적 저하로 생물종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으므로 보다 적극적으로 양호한 생물서식지를 창출한다.

시책 1. 공원 조성시 적정규모의 인공습지 등 생물서식지 조성

시책 2. 개발사업계획에서 생물서식지 조성 권고

시책 3. 서식지 조성 효과 사후평가

전략 5. 생물서식지로의 시민 접근성 개선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도시계획구역 내에서 자연지역 뿐만 아니라 인위적으로 조성된 생물서식지를 포함한 자연을 접촉할 수 있도록, 기회를 증진시키고 시민의 접근성을 개선한다.

시책 1. 자연녹지에 대한 시민의 접촉 기회 증진과 접근성 개선
시책 2. 하천변에 자연체험·학습장을 조성하여 시민이 가까이 자연을 접할 수 있게 함
시책 3. 택지, 마을, 공원, 학교운동장, 환경교육센터, 도시농원 등 인공지역에서도 자연과의 규칙적인 직접 접촉기회 제공

과제3 서울시 대내외적 공조체계 구축

과거 단위 행정관청 주도의 자연환경관리체계에서 탈피하여, 자연생태계 보호, 개선, 창출 추진 주체로써 시민과 전문가를 포함한 서울시 대내외적 공조체계를 형성하여 추진력과 집행력을 강화한다.

전략 1. 시민과의 공조체계 구축

과거 관 주도의 자연환경계획 및 관리에서 탈피하여 자연생태계 보호, 개선, 창출의 추진주체로써 시민, 기업, 전문가, 정책 결정자 등을 포괄하는 공조체계를 구축하여 대응한다.

시책 1.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실천계획의 작성과 이행을 위한 시민 또는 시민단체와의 공조체계 형성과 유지의 장려 및 지원
시책 2. 생물다양성 보존분야 세계 중심도시로써의 명성 추구
시책 3. 생물다양성 보존에 기업의 역할 장려

전략 2. 상·하위 및 주변 지자체와의 공조

과거 단위 행정관청 주도의 자연환경관리에서 탈피하여 중앙정부와 하위 자치단체, 그리고 인접 지방자치단체와의 공조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상호 적절한 이해 조정과 역할 분담을 통해 효과적이고 원활한 계획과 실천을 담보한다.

시책 1. 주변 지자체의 생물다양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저감 노력
시책 2. 생물종 및 서식처 보호를 위해 중앙정부, 인근 지자체, 기초자치단체와의 공조체계 구축

전략 3. 환경교육

인구밀집지역인 도시에서 자연생태계의 보호와 생물서식지 개선 및 창출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제약요인이자 반대로 가장 중요한 기회요인이기도 한 시민들의 이해와 참여가 요청되므로 다각적인 환경교육 시행 방안을 모색한다.

시책 1. 환경교육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시책 2. 민간 환경교육단체 지원

과제4 자연생태계 보전기반 구축

서울을 떠났던 토착 야생동식물들이 다시 돌아와 번성하는 세계적 모범도시를 만들기 위한 자연생태계 보전 기반으로써 자연환경 보전체제 및 자연보전활동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전략 1. 자연환경 보전체제의 확립

서울을 떠난 토착 야생동식물들이 다시 돌아와 번성하는 도시 만들기라는 야심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에 걸 맞는 자연환경 보전체계가 확립되어야 한다.

시책 1. 생태계보전지역 지정 확대
시책 2. 생물다양성 증진체계 구축
시책 3. 자연환경보전 실천계획 수립
시책 4. 자연환경 보전 조직의 강화
시책 5. 도시생태계 모니터링의 체계화
시책 6. 도시생태계 장기모니터링 체계의 구축
시책 7. 도시계획에서 자연환경 보전의무의 강화

전략 2. 자연환경 보전활동의 지원

자연생태계 보전 목표의 효과적인 달성을 위한 지원방안으로써 필수적인 기초 자연생태계 정보를 제공하고 체계적으로 후속계획을 수립하고, 시민의 보전활동을 지원한다.

시책 1. 자연환경 기초정보의 수집 및 공개
시책 2. 사유지 보전을 위한 보존지협정제도 도입
시책 3. 시민참여 생태조사 및 정보유통 활성화 지원

6. 목표별 정책지표

대기

목표 무지개와 함께 하는 "서울 하늘" 조성

[지표 1] 서울하늘 단기·중기·장기 계획목표

단기 계획목표(~ 2002년)	중기 계획목표(~ 2010년)	장기 계획목표(~ 2020년)
세계보건기구(WHO)의 대기환경 권고기준 만족	대기환경기준의 80% 수준 유지	선진 환경모범도시로써 청정도시의 조성

수자원 및 수질

목표1 안전하고 깨끗한 물의 도시 만들기

[지표 2] 계획년도의 상수도 유수율

계획년도	2000(2001)	2005	2010	2020
목표유수율(%)	78.8	90	90	90

자료 : 수도정비기본계획,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2000, 2002년 상수도 사업본부 내부자료

[지표 3] 정비대상 하수관거 대비 하수관거 정비 계획(단위: ha)

처리구역	계	2005	2010	2020
목표정비율	35117.05(100%)	9,599.77(27.3%)	7,316.38(20.8%)	18,200.90(51.9%)
중 랑	11174.76(31.8%)	6122.48	5052.27	–
탄 천	6406.01(18.2%)	–	–	6406.01
서 남	11794.89(33.6%)	–	–	11794.89
난 지	5741.39(16.4%)	3477.28	2264.11	–

자료 : 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보고서, 서울특별시, 1998

목표2 풍부한 물의 도시 만들기

[지표 4] 상수사용량 대비 계획년도의 절수율

계획년도	2001	2002	2003	2005	2010	2020
상수사용량대비 절수율(%)	4.0	4.2	4.2	4.5	5.0	6.0

• 절수량은 서울특별시 수도정비기본계획에서 제시한 2000년~2003년의 절수증가율 적용하여 계획년도의 절수량을 추정하였으며 상수사용량 대비 절수율은 2000년 상수사용량 432만톤/일을 기준으로 함.

폐기물

목표 청결한 도시, 자족능력을 갖춘 서울 조성

[지표 5] 예상발생량 대비 감량 실적(%)

구 분	2000(2001)	2005	2010	2015	2020
예상발생량(톤/일)	11,968(실적)	11,103	11,253	11,384	11,482
감량목표(%)	–	6	11	8	9
실제 발생량	11,968	10,581	10,053	10,473	10,448

• 현재 추진 중인 1회용품의 사용억제책을 꾸준하게 추진하고, 음식업소에서 음식물 등의 제공방법을 변경하면 장래 서울시 생활폐기물의 실제 발생량은 1일 11,000톤 이내로 유지될 것이다.

[지표 6] 실 발생량 대비 재활용 실적(%)

구 분	2000(2001)	2005	2010	2015	2020
재활용/자원화 목표(%)	47.5	56.4	59.2	61.0	63.0

• 현재 수거하는 재활용품의 분리량을 늘리고 음식물쓰레기 자원화를 확대하면 2020년에는 실제 발생량의 63%까지 자원화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표 7] 실 발생량 대비 수도권매립지에 의존한 처분량(%)

구 분	2000(2001)	2005	2010	2015	2020
외부의존 처분량(%)	45.6	27.3	23.0	17.0	14.0

• 감량과 재활용을 [지표 5]와 [지표 6]의 목표대로 추진하고, 기존 소각시설의 가동능력을 높이는 등의 자체처리기반이 갖추어지면 수도권매립지에의 의존량은 대폭 감소될 것이다.

생태계

목표 야생동물이 다시 돌아오는 서울

[지표 8] 생태계보전지역 면적

구 분	2000(2001)	2005	2010	2015	2020
지정면적 누계(㎡)	246,355	2,939,574	3,978,116	5,016,658	6,055,200
서울시 면적 점유율(%)	0.04%	0.49	0.66	0.83	1.00

• 현재 지속적으로 추진중인 생태계보전지역 확대지정 범위를 2006년도까지는 우수생태계정밀조사연구(2001) 결과 추천 지역 전체로 확대하고, 2021년도까지 서울시 총 면적의 1.00%까지로 확대한다.

[지표 9] 생태축 연결 개소 수

구 분	2000(2001)	2005	2010	2015	2020
환상 산림생태축 연결 개소 수	0	1	1	1	2(1)
환상 산림생태축 연결 개소 수 누계	0	5	10	15	26(2)

주 : 괄호내 수치는 서울시 도시계획구역 밖의 생태축 연결 대상 구간임

• 생태보전축으로써 주생태축을 설정하여 서울시 외곽의 북한산, 관악산을 각각 연결한 광폭의 환상 산림생태축과 한강 본류를 중심으로 한 동서 하천생태축을 보존복원하고, 현재 총 26개에 달하는 생태축의 단절구간을 생태통로로 연결한다.

IX. 공원녹지계획



1. 현황과 문제점
2. 여건변화 전망
3. 미래상
4. 계획방향
5. 목표체계
6. 목표별 정책지표

1. 현황과 문제점

1) 공원

• 외곽에 편중 분포

- 2001년 현재, 도시공원법상 도시공원은 총 1,415개소에 면적 107.34㎢, 1인당 공원면적은 10.39㎡이며, 이중 시설화된 면적은 약 86.09㎢로 1인당 시설화된 공원면적은 8.33㎡이다. 이는 '95년 대비 개소수로 53개소, 면적으로 3.82㎢, 1인당면적으로 0.82㎡가 증가한 것이다.
- 그러나, 공원유형을 구분하여 살펴보면 사정이 다르다. 서울시의 공원으로는 도시공원법상 도시공원외에도 국립공원과 기타공원이 있는데, 이중 도시공원이 68.12%를 차지하고, 국립공원과 기타공원은 각각 25.29%와 6.59%를 차지한다. 이 가운데 도시공원을 다시 유형별로 구분했을 때 도시자연공원이 전체 도시공원 면적의 42.25%, 근린공원이 22.92%, 어린이공원이 1.04%, 묘지공원 1.90%를 차지하여 도시자연공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다(표 Ⅸ-1 참조). 그런데 이러한 공원은 도시외곽의 산림지역에 환상적으로 편재되어 있어, 도심내에서 제공되는 공원의 혜택은 매우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 서울시의 1인당 공원면적(15.25㎡)을 외국의 도시들과 비교해 보면 계획공원 면적으로는 중간 그룹에 속해 프랑스 파리(17.88㎡/인)나 일본의 고베(16.54㎡/인)에 약간 못 미치는 수준이나 실질적인 시설공원면적(13.05㎡/인)만으로는 헝가리 부다페스트(12.0㎡/인) 수준이다. 공원면적 수준에서 볼 때, 세계 유수의 대도시에 비해 크게 떨어지는 편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표 IX-1] 서울시 공원현황

구 분		총 계				시 설				미 시 설	
		개소	면적 (㎢)	점유비 (%)	1인당 면적(㎡/인)	개소	면적 (㎢)	시설율 (%)	1인당 면적(㎡/인)	개소	면적 (㎢)
합계		1,559	157.59	100.00	15.25	1,403	134.85	85.57	13.05	156	22.73
도시공원	소계	1,415	107.34	68.12	10.39	1,264	86.09	80.21	8.33	151	21.25
	도시자연공원	20	66.58	42.25	6.44	11	51.85	77.88	5.02	9	14.73
	근린공원	269	36.11	22.92	3.50	214	29.75	82.39	2.88	55	6.36
	어린이공원	1,121	1.63	1.04	0.16	1,034	1.47	90.07	0.14	87	162.14
	체육공원	1	0.03	0.02	0.00	1	0.03	100	0.00	-	-
	묘지공원	4	2.99	1.90	0.29	4	2.99	100	0.29	-	-
국립공원		1	39.86	25.29	3.86	1	39.86	100	3.86	-	-
기타	소계	143	10.39	6.59	1.01	138	8.90	85.70	0.86	5	1.49
	유원지	3	0.49	0.31	0.05	-	-	-	-	3	0.49
	강변공원	16	7.09	4.50	0.69	14	6.09	85.94	0.59	2	1.00
	올림픽공원	1	1.447	0.92	0.14	1	1.45	100	0.14	-	-
	마을마당	119	0.06	0.04	0.01	110	0.06	100	0.01	-	-
	기타	4	1.30	0.82	0.13	4	1.30	100	0.13	-	-

주 : 서울시 인구 10,373,234인(2001 12. 31 현재)
자료 : 서울특별시, 서울시공원현황, 2002에서 일부 수정보완

• 생활권별 불균형 분포

- 도시자연공원에 접한 자치구(노원구, 종로구, 도봉구, 관악구 등)는 공원면적에 여유가 있지만 시가화지역 중 도심내에 가까울수록 공원면적이 적어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근린생활권 공원이 크게 부족한 상황이다.

- 법률상의 도시공원은 아니나 공원으로 이용되고 있는 곳을 포함하여 공원의 현황을 자치구별로 정리해 본 결과에 의하면, 자치구의 전체 공원면적이 1인당 6㎡(도시계획구역내에서 공원면적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가 5개 구이며, 시설공원 기준으로 3㎡에도 미치지 못하는 자치구도 5개에 이른다.

- 현재 서울시의 공원녹지분포도를 작성한 후, 공원유형별로 공원서비스 지역범위를 공원유형에 따라 차별화하되, 근린공원은 500m, 어린이공원은 250m, 마을공원은 100m를 서비스 거리로 보고, 공원유형별로 공원현황도에 서비스 거리에 해당하는 버퍼링 분석을 수행하여 공원서비스로부터 소외되는 지역을 분석한 결과, 공원녹지비율이 낮은 동북1생활권, 서남1생활권, 서남2생활권, 동남2생활권의 공원녹지 소외면적비율이 각각 23.60%, 30.94%, 26.25%, 20.63%로 높아 공원녹지서비스 소외면적비율은 자치생활권내 공원녹지율과 상관성이 깊은 것으로 보인다(표 IX-2 참조).

- 자치구별로는 은평구(49.33%), 강북구(59.32%), 종로구(43.83%), 노원구(39.30%), 도봉구(49.81%), 서초구(32.52%), 관악구(36.39%)는 자치구 면적당 공원면적 비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은 반면에, 도심중심부의 시가화면적이 넓은 자치구인 영등포구(6.35%), 강서구(7.76%), 강동구(10.46), 성동구

(6.29%), 동대문구(5.98%)는 상대적으로 공원이 부족하다.

- 그리고, 중랑구의 공원비율은 비교적 양호하나, 공원이 일정지역에 편중분포되어 있고, 성동구, 강서구 지역은 자치구역의 면적당 공원비율도 낮을 뿐만 아니라, 근린권내의 공원서비스 소외지역 비율이 자치구역면적의 40% 내외에 달한다.
- 각 자치구별 1인당 공원면적으로 볼 때 종로구(55.47㎡), 노원구(21.99㎡), 관악구(20.46㎡) 등은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지만 동대문구(2.22㎡), 성동구(3.09㎡)를 비롯하여, 영등포구(3.81㎡) 등은 공원율이 매우 낮다. 이렇게 각 자치구간 공원녹지의 불균형적인 배치는 도시 전체적인 녹지네트워크 구성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개별 자치구내에서의 환경의 질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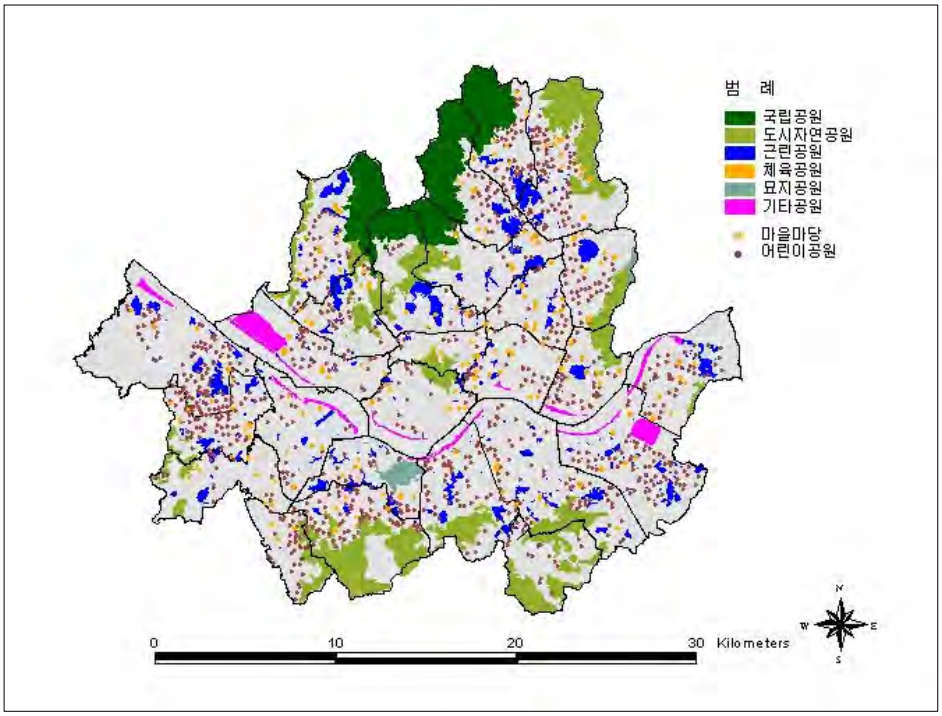
[표 IX-2] 생활권역별 공원녹지서비스 현황

생활권구분		자치구면적 (㎢, A)	인구 (인)	공원면적 (㎢)	공원 점유율 (%)	1인당 공원 면적 (㎡)	서비스 면적 (㎢)	서비스 누락면적 (㎢, B)	서비스 누락비율 (%, 100×B/A)
도심권		55.74	581,814	14.8	26.55	25.44	49.43	6.32	11.34
동북권	동북1	66.60	1,576,940	9.93	14.91	6.30	50.90	15.72	23.60
	동북2	104.44	1,822,260	46.17	44.21	25.34	93.74	10.67	10.22
	계	171.04	3,399,200	56.10	32.80	16.50	144.64	26.39	15.43
서북권		71.19	1,233,953	24.45	34.34	19.81	63.77	7.43	10.44
서남권	서남1	58.79	1,011,244	5.39	9.17	5.33	40.61	18.19	30.94
	서남2	57.68	1,082,953	6.09	10.56	5.62	42.55	15.14	26.25
	서남3	45.92	943,322	14.63	31.86	15.51	44.24	1.68	3.36
	계	162.39	3,037,519	26.11	16.08	8.60	127.40	35.00	21.56
동남권	동남1	86.69	957,351	20.12	23.21	21.02	78.11	8.59	9.91
	동남2	58.47	1,163,397	6.8	11.63	5.84	46.41	12.06	20.63
	계	145.16	2,120,748	26.92	18.55	12.69	124.52	20.65	14.23
마을마당				0.06	0.04	0.01			
과천				9.16	1.51	0.89			
총계		605.52	10,373,234	157.59	26.03	15.19	509.76	95.76	15.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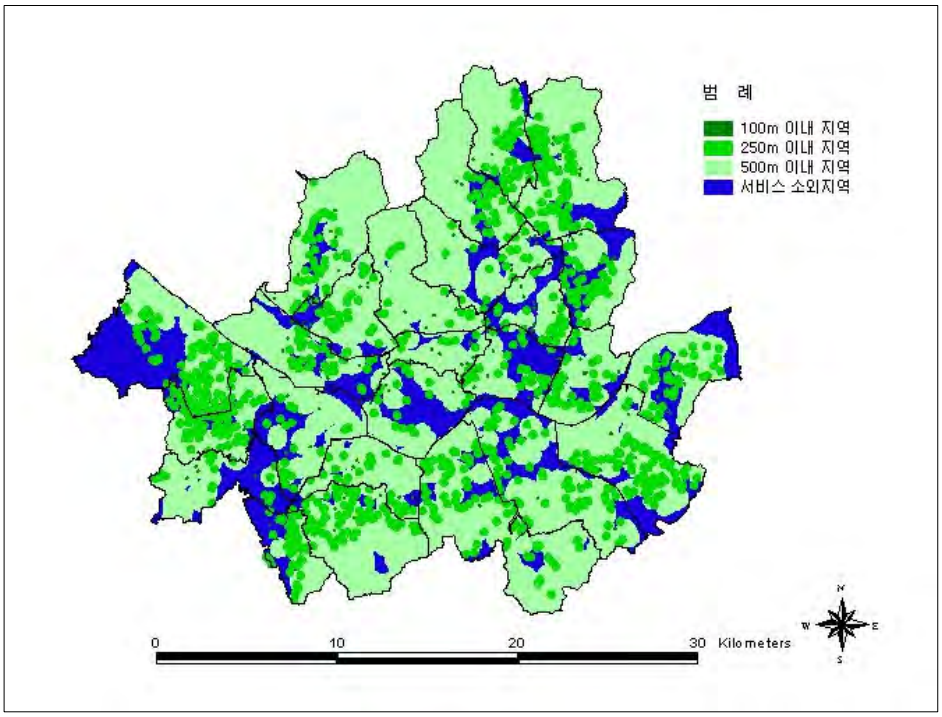
주 : 도심권과 서북권의 생활권별 집계에서 통계자료의 제약으로 종로구지역 모두를 도심권에 포함시킴

[표 IX-3] 자치구별 공원배분을 위한 2020 공원 수요

생활권구분			자치구 면적 (㎢, A)	2020년 추정인구 (천인)	2001년 공원면적 (㎢)	2002년					
						현상유지시 공원점유율 (%)	현상유지시 1인당 공원면적(㎡)	목표 1인당 공원면적 (㎡/인)	목표최소 공원면적 (㎢)	목표 공원점유율 (%)	추가수요 (㎢)
도심권		종로구	23.91	228,536	10.48	43.83	45.86	45.86	10.48	43.83	0
		중구	9.96	150,359	1.82	18.27	12.10	12.10	1.82	18.27	0
		용산구	21.87	320,671	2.50	11.43	7.80	10.00	3.21	14.66	0.71
		계	33.87	699,566	14.8	26.55	21.16	22.17	15.51	27.82	0.71
동북권	동북1	성동구	16.84	289,141	1.06	6.29	3.67	10.00	2.89	17.17	1.83
		광진구	17.05	336,096	3.29	19.30	9.79	10.00	3.36	19.71	0.07
		동대문구	14.21	424,336	0.85	5.98	2.00	10.00	4.24	29.86	3.39
		중랑구	18.50	387,454	4.73	25.57	12.21	12.21	4.73	25.57	0
		소계	66.60	1,437,027	9.93	14.91	6.91	10.60	15.23	22.86	5.29
	동북2	성북구	24.57	495,607	7.87	32.03	15.88	15.88	7.87	32.03	0
		강북구	23.60	396,524	14.00	59.32	35.31	35.31	14.00	59.32	0
		도봉구	20.80	308,275	10.36	49.81	33.61	33.61	10.36	49.81	0
		노원구	35.47	510,796	13.94	39.30	27.29	27.29	13.94	39.30	0
		소계	104.44	1,711,202	46.17	44.21	26.98	26.98	46.17	44.21	5.29
	계		53.97	3,148,229	56.1	32.80	17.82	19.50	61.40	35.90	5.30
서북권		은평구	29.72	531,089	14.66	49.33	27.60	27.60	14.66	49.33	0
		서대문구	17.60	389,322	5.01	28.47	12.87	12.87	5.01	28.47	0
		마포구	23.87	416,388	4.78	20.03	11.48	11.48	4.78	20.03	0.40
		계	71.19	1,336,799	24.45	34.34	18.29	18.29	24.45	34.34	0.40
서남권	서남1	양천구	17.40	462,209	2.18	12.53	4.72	10.00	4.62	26.56	2.44
		강서구	41.39	520,544	3.21	7.76	6.17	10.00	5.21	12.58	2.00
		소계	58.79	982,753	5.39	9.17	5.48	10.00	9.83	16.72	4.44
	서남2	구로구	20.11	308,391	2.51	12.48	8.14	10.00	3.08	15.34	0.57
		금천구	13.00	217,786	2.02	15.54	9.28	10.00	2.18	16.75	0.16
		영등포구	24.57	319,813	1.56	6.35	4.88	10.00	3.20	13.02	1.64
		소계	57.68	845,990	6.09	10.56	7.20	10.00	8.46	14.67	2.37
	서남3	동작구	16.35	422,943	3.87	23.67	9.15	10.00	4.23	25.87	0.36
		관악구	29.57	470,325	10.76	36.39	22.88	22.88	10.76	36.39	0
		소계	45.92	893,268	14.63	31.86	16.38	16.78	14.99	32.64	0.36
	계		95.53	2,722,011	26.11	16.08	9.59	12.23	33.28	20.49	7.17
동남권	동남1	서초구	47.14	357,626	15.33	32.52	42.87	42.87	15.33	32.52	0
		강남구	39.55	490,995	4.79	12.11	9.76	10.00	4.91	12.41	0.12
		소계	86.69	848,621	20.12	23.21	23.71	23.85	20.24	23.35	0.12
	동남2	송파구	33.89	576,782	4.23	12.48	7.33	10.00	5.77	17.02	1.54
		강동구	24.58	466,393	2.57	10.46	5.51	10.00	4.66	18.97	2.09
		소계	58.47	1,043,175	6.8	11.63	6.52	10.00	10.43	17.84	3.63
	계		145.16	1,891,796	26.92	18.55	14.23	16.21	30.67	21.13	3.75
마을마당			-	-	0.06	-	-	-	0.06	-	-
합계			605.52	9,798,401	148.44	24.51	15.15	16.88	165.36	27.31	16.92
과천			-	-	9.16	-	0.93	0.93	9.16	-	0
총계				-	157.60	-	16.08	17.81	174.52	-	16.92



[그림 IX-1] 공원현황도



[그림 IX-2] 공원유치권역도

- 마을마당 유치거리: 100m
- 마을마당 및 어린이공원 이외의 공원 유치거리: 500m
- 어린이공원 유치거리: 250m

• **미시설 공원용지 조성 제한**

- 서울시 전체 공원면적 중 시설투자가 안된 미시설 공원면적은 14.42%(약 22.73㎢)에 이르고, 도시공원만을 대상으로 할 경우 미시설 비율은 19.79%에 달한다(표 IX-1 참조). 대부분의 미시설공원은 사유지로 구릉지의 급경사지로 개발이 어려우며, 공원으로써 이용보다는 자연환경 보존이라는 의미가 강해 이용에 대한 수요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한편, 도시자연공원 중 남산과 안산을 제외하고 대부분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중복 지정되어 있어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실정이다. 기시설공원의 경우에도 시설이 낙후한 실정이다.

• **공원의 단절 및 연계성 부족**

- 도시공원 및 위락자원은 지역적으로 산재되어 있고 연계성이 부족해, Park way, 하천회랑, 그리고 자연탐방로(natural trail) 등에 의한 공원간의 네트워크화가 필요하다.
- 다수의 공원이 도로·재개발 등으로 단절되고 있어 생태통로, 녹지 등의 체계적인 연결이 미흡하여 공원의 생명력 기능이 미흡한 실정이다.

• **공원에 무분별한 공공시설 배치로 공원기능의 저하**

- 공원 내에 도서관, 체육시설, 수련시설 등 무분별한 공공시설 조성으로 공원의 자연성이 크게 훼손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불투수 토양피복율이 증가하고 있다.

• **공원관리 인력 부족**

- 현재, 공원녹지의 관리면적은 행정적 지원이 이루어지는 시직영공원에 국한했을 때, 공원면적 24,543,419㎡에 640명으로 공원녹지관리자 1인당 평균 38,349㎡(서울특별시, 2001 공원현황 참조)이며, 서울시 전체의 공원녹지로 확대하는 경우 공원관리에 실효성을 기대하기란 어렵다. 실상, 다른 행정 업무의 과중으로 실질적인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그리고, 공원녹지가 갖는 다양성, 불특정성, 공공성의 측면으로 볼 때 공공기관만의 조성 및 관리로 감당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2) 녹지

• **자연녹지지역의 급격한 감소**

- 녹지지역 면적비율은 253.13㎢로 서울시 면적의 41.8%이다. 녹지지역은 그간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전용되어 1995년부터 2001년 사이에 60.2㎢가 감소되었다(표 IX-4 참조). 서울시의 녹지지역 중에 공유수면 등을 제외하면 남아있는 녹지의 양이 적으므로 도시 내에서 귀중한 자연환경의 보존이라는 측면에서도 녹지의 보전은 시급하다.

[표 IX-4] 녹지지역의 현황

구 분	1995		2001	
	면적(㎢)	구성비(%)	면적(㎢)	구성비(%)
생산녹지	3.58	1.14	3.55	1.40
자연녹지	309.75	98.86	249.51	98.57
보전녹지	-	-	0.07	0.03
합 계	313.33	100	253.13	100

자료 : 서울특별시. 서울통계연보. 1995; 서울시 공원녹지과 행정자료. 2002

• **녹지축의 단절**

- 서울시 녹지는 환상형으로 외곽지역에 편중분포되어 있고, 도심내의 녹지는 양적으로 부족하며, 질적으로 저하되어 생물서식에 부적절한 장소가 되어가고 있다.
- 그리고, 도시공간구조의 역동적인 변화에 의해 도로의 신설, 역세권의 형성 등 개발로 녹지를 단절 및 파편화하여, 고립시킴으로써 그 기능을 약화시켜 결국 야생동식물서식처 감소와 서식환경의 질적 저하의 원인이 되고 있다.
- 매우 중요한 자연지형으로써 한강이 동서로 서울을 가로지르고 있지만 한강변의 녹지축 기능이 미흡하다.

• **산림의 자연성 저하**

- 도시열섬과 산성우 등 대기환경의 변화로 산림의 자연성이 저하되고 이로 인한 외래종의 확산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 **보존녹지 비중의 미흡**

- 도시계획구역상 녹지지역은 지형적인 여건으로 산림, 하천을 포함하고 있으며 녹지지역의 총면적은 전체 도시계획구역의 42%(253.13㎢)에 이른다. 녹지지역의 대부분(249.51㎢)은 녹지공간 보전의 범위 내에서 제한적 개발을 할 수 있는 자

연녹지이며, 농업적 생산을 위해 개발을 유보하는 생산녹지는 3.55㎢에 불과하고 보전녹지는 0.07㎢으로 극히 적은 면적이다(표 IX-4 참조).

• **가로녹지의 단조로운 경관 및 녹시율 부족**

- 녹시율(綠視率)은 일정지점에 서있는 사람의 시계(視界)내에서 식물의 잎이 점하고 있는 비율을 의미하며, 도시내의 녹시율을 높이는 것은 도시민의 일상생활권내에서 도시민이 실제 눈으로 접하는 녹지의 양을 높임으로써 시민의 녹지 체감 만족도를 제고시키는 것이다.
- 서울시에서는 도시녹지의 대부분이 외곽의 도시산림에 집중 분포되어 있고, 지난 50년간의 양적 성장과 외형적 도시건설 과정 속에서 서울도심의 많은 녹지공간이 잠식되었다. 따라서, 도심내에서 시민이용빈도가 높은 공간인 도로변에서 시민이 느끼는 녹지 만족도는 가로수 및 공개공지에 존재하는 녹지, 시설녹지 등에 주로 의존하게 된다. 그런데 도시내 주요지역을 연결하는 도시고속도로변, 근린주거생활권의 골격을 형성하는 집산도로에서의 녹피율 및 녹시율은 매우 낮으며, 사유지에 존재하는 녹지 등은 울타리로 은폐되어 반 공개형이거나 폐쇄적이기 때문에 실제 시민이 느끼는 녹지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떨어진다. 또한, 도시내부지역에 인구가 집중됨에 따라 건축물, 옹벽 등의 콘크리트 벽면이 증가하여 삭막한 분위기를 점증시킬 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소음, 분진, 열섬화 등 도시환경 악화를 가속시키고 있다.
- 이러한 현상을 구체적으로 점검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서울시 도심의 녹시율을 조사분석하고, 실천적인 녹시율 증진방안을 검토하였는데, 여기서는 그 결과를 요약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녹시율 조사분석 대상은 생활권별로, 그리고 도로위계별로 구분하여 선정하였다.
- 서울시 가로 녹시율은 평균 13.7%이며, 각 5개의 생활권별 녹시율은 도심생활권, 동남생활권, 서북생활권, 서남생활권, 동북생활권 각각 17.8%, 13.9%, 12.6%, 12.3%, 11.8%로 매우 낮다.
- 도시계획법상 도로기능분류에 따른 가로 녹시율을 조사한 결과 주간선도로 및 보조간선도로의 녹시율은 각각 16.3%, 16.9%이나, 집산도로와 국지도로는 각각 14.0%, 7.5% 정도에 그쳐 매우 낮다. 대부분의 주간선도로 및 보조간선도로변에는 가로수 식재가 되어 있고, 가로변에 고밀도 업무, 상업지역이 위치하는 경우 빌딩공개공지의 확보로 생활권역에 관계없이 일정면적의 녹시율 유지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 반면에 집산도로 및 국지도로변은 중밀도의 상업지 혹은 저밀도 주거지역의 복합된 형태로 분포하고 있어 공유할 수 있는 녹지량이 극히 희박하고, 녹지가 존재

하더라도 사유지의 개념이 강해 공유 가능한 녹지의 확보도 어렵기 때문이다.

- 그러나, 주간선도로와 보조간선도로의 경우에도 주요 업무상업지구가 위치함으로써, 대규모 빌딩 공개공지의 일부 녹화에 의한, 점적인 녹지가 부분적으로 존재하나, 각 녹지간 연결성이 없고 이용성이 떨어지며 선형녹지라고 할 수 있는 가로수의 경우 수관 폭이 좁고, 밀도가 낮은 실정이다.

• 도시계획상 녹지의 미시설

- 녹지는 도시의 경관향상이나 재해방지 등을 위하여 지정되며 완충녹지가 200개소에 1,944천㎡(93%), 경관녹지가 73개소로 149천㎡(7%)에 이르고 있다. 완충녹지는 주로 철도변, 간선도로변, 아파트 외곽부, 하천변 등에 선형으로 지정되고, 경관녹지는 주로 보호수, 성곽 주변에 점적인 형태를 가진다. 지정된 녹지면적 가운데 52.4%만이 조성되어 있다(표 IX-5 참조).

[표 IX-5] 시설녹지 현황

계		조 성		미 조 성		건 물 (동)		
개소	면적(천㎡)	개소	면적(천㎡)	개소	면적(천㎡)	계	유허가	무허가
278	1,991	187	1,046	91	945	568	328	240

자료 : 서울특별시. 2001 주요업무계획추진지침. 2001 p.6

2. 여건변화 전망

1) 환경중시 시대의 도래

- **자연이 풍부하고 다양한 녹색도시에의 관심 고조**
  - 자연친화본능(biophilia)의 인식
- **기존 도시관리 기본방향의 전환 요청과 계획 명제로써 지속가능한 개발과 성장**
  - 지속가능한 개발은 단순한 선언적 원칙으로써가 아니라 제도화를 통해 구체적으로 실천되어야 할 당면과제
  - 도시관리의 구체적 실천과제로써 공감대 확산(지방의제 21의 공표)
  - 시민, 기업, 서울시 세 주체가 함께 참여해서 서울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구환경보호를 위해 만든 서울의제 21 실천을 위해 서울의제 21 실천협의회 구성
  - 환경친화적 도시조성을 위한 노력의 요청
  - 도시계획 이념의 전환을 반영한 도시계획법 및 도시계획조례 수정에 의한 환 경성 검토 의무화
  - 자연환경보전법 수정에 의한 생태보전 강화
  - 사전환경성 검토제 도입
- **시정활동에의 시민참여 요구**
  - 환경에 대한 시민의 인식 증대
  - 지역사회운동과 환경운동의 결합
  - 환경보호, 환경감시에서 환경 가꾸기로 지역사회운동의 확산

2) 여가수요의 증가

- 토요일 휴무제 또는 토요일 격주휴무제의 확대 시행으로 인한 근무시간의 단축
- 조기퇴직에 의한 여가시간 증대

3) 개발제한구역의 일부 해제

- 개발제한구역의 일부 해제에 따른 무질서한 개발제한구역 개발확산 방지방안 마련 필요
- 체계적 개발제한구역 관리 대책 마련 시급

3. 미래상

"자연이 살아나는 녹색도시"

도시에 녹색이미지 창출

녹지의 쾌적성을 높이기 위해 도시자연경관을 보전, 복원, 창출하고, 일상생활 속에 푸르름을 가시화하는 주변환경녹화를 추진하여 녹시율을 높인다.

공원녹지 조성관리에 시민참여 확대

생활환경속에서 공원녹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도시녹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역주민, 시민, 기업 운동차원에서 도시의 녹화 및 녹지관리의 활성화를 촉진시킨다.

인간과 생물이 공존하는 공원녹지체계

공원녹지를 네트워크화 하고 훼손된 생물서식지와 끊어진 생물이동통로를 복원 또는 연결하는 등 생물다양성를 증진시켜 정주환경 가까이 인간과 생물이 공존할 수 있는 공원녹지체계를 조성한다.

공원녹지에 대한 시민 만족도 제고

생활권역내에 다양한 형태의 공원을 조성하여 시민의 다양한 여가수요를 충족시키며, 이에 이용프로그램의 도입과 공원기능의 현대화를 통해서 만족도를 제고시킨다.

4. 계획방향

1) 시설공원의 조성

• 서울시의 경우 총량규모 면에서는 어느 정도의 공원녹지 수준이 달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에는 공원녹지 면적의 유지 및 시설의 질적 개선과 다양성을 높이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2) 생활권역별 균형 있는 공원녹지의 배치

• 도심 내 쾌적한 주거환경의 구현, 증가되는 여가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지역주민, 근로자 등이 가까운 도보권내에서 공원녹지를 향유할 수 있도록 각각의 도시공원시설은 근린생활권, 지구생활권 등의 시설설치 목적에 맞추어 생활권역별로 공원 녹지를 균형 있게 배분하도록 한다.

3) 녹지·생태축 설정 및 연결

• 공원녹지체계의 보완을 위해서는 도시외곽의 환상산림축과 한강본류의 동서하천축을 선적으로 연결하고, 한강지류 하천을 자연화 하고 하천변을 공원화하며, 도심내의 소생물권을 보전하고 복원하는 등 위계를 가지는 생태축을 보완·조성한다.

4) 가로 녹시율 증대

• 도심내의 딱딱하고 삭막한 공간을 푸르고 쾌적한 녹지공간으로 변화시키고, 시민이 실제로 느끼는 녹지 체감지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도시의 녹시율, 즉 일정지점에 서 있는 사람의 시계(視界)내에서 식물의 잎이 점하고 있는 비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부분적으로 도시열섬 저감, 구조물의 내구성 향상, 생물서식 기회의 증진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5) 녹도의 확대

• 인접된 공원녹지와 연계하는 공원녹지체계 혹은 녹도(Greenway)에 대한 개념을 교통계획에 반영하여, 도심내부에 산재하는 면적, 점적인 녹지간을 선적으로 연결하고, 시민의 녹지 접근성을 높인다.

6) 녹지조성 및 유지관리에 지역주민 참여 확대

- 도시녹화에 시민참여는 외부환경에 대한 시민의 지식, 인식, 감성, 환경의식을 강화시킴으로써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확대시키고 환경주체자로 역할을 수행하게 하는 참여주의 원리이다. 도시환경의 질 개선에 시민을 직접 참여시킴으로써, 도시공원정책에 시민의 의사반영을 가능하게 하고, 유지관리적인 측면에서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다.

5. 목표체계 "자연이 살아나는 녹색도시"

목 표	과 제	전 략	시 책	단기	중장기	정책지표
1. 양질의 다양한 공원녹지 제공	공원녹지의 확충	• 기존 공원녹지의 보전	- 재개발·재건축시 주변지형과 녹지의 보전 - 구릉지형 근린공원 모형 개발 및 정비 - 개발제한구역 내 녹지보전대책 마련 - 도시생태림 조성	✔		지표 1. 도시공원 면적 지표 지표 2. 생활권역별 공원 배분 계획 지표 지표 3. 가로 녹시율
		• 미시설 공원의 공원조성	- 공원녹지확충 기본계획의 마련 - 미시설 공원용지의 수용 및 재정기법 개발 - 장기 미집행 생활권 공원 조성 - 시설녹지 녹화		✔	
		• 강변녹지 확충	- 그린 마라톤 풀코스 조성, 물고기 관찰실 조성 등 한강 이용 활성화 및 기능개선 - 한강 진입로 추가 설치 등 한강 접근성 개선 - 한강 지천변 공원화계획 수립 - 뚝섬에 대규모 공원 조성		✔	
		• 이전적지 및 대형 신개발지의 공원녹지 확충	- 미군기지, 공장, 학교 등 이전적지의 공원 확보율 제고 - 공공시설 이전적지내 공원확보율 제고 - 개발사업에 따른 공원녹지 확보 의무화 및 확보수준의 상향조정		✔	
		• 자투리땅의 도시공원화	- 쌈지공원 조성	✔		
		• 시가지 녹화	- 도로의 녹화 - 공공기관의 담장 제거 및 녹화 - 벽면, 옥상, 베란다 녹화 등 공공건물의 녹화 - 녹시율 증진방안 마련 - 학교 공원화 - 유휴지 등 공공시설을 활용한 녹지공간 확보 - 녹색 주차장 확대 - 꽃이 어우러진 육교 가꾸기	✔		
		• 가로 공원화	- 도로 유휴지를 활용한 녹지확충 및 보행환경 개선 - 주요 간선가로 및 도심에 보행자 중심 녹화거리 조성 - 대규모 개발계획시 대상지 전체를 순환하는 보행자전용로 조성		✔	
	생활권역별 균형있는 공원녹지 제공	• 도보권 내 공원녹지 조성	- 공원녹지부족 지역에 대한 예산의 우선 조치 - 자치구별 대표적 지구공원 조성 - 자치구별 체육공원 조성 - 공원녹지 균형배치방안 마련 - 녹지 보전 및 녹화 촉진에 관한 장기기본계획 수립 - 1동 1마을공원 조성	✔		
	공원녹지의 수준향상	• 공원 녹지 활용의 극대화	- 공원녹지의 접근성 제고 - 공원 시설율 증대 - 보라매 공원 renovation 등 시설 수준의 향상 - 비법정 공원녹지내 휴식·편익시설 확충	✔		
		• 공원녹지의 질 개선	- 공원녹지 기능의 재정비 및 시설의 현대화 - 도시공원 이용 및 관리 프로그램의 개발 - 물을 이용한 친수공간 확충 - 가로수·가로녹지 관수체계 도입		✔	
	공원녹지시설의 다양화	• 여가수요에 부응하는 다양한 시설 설치	- 3대 유원지를 특성에 따라 적정 개발하도록 공원으로 전환 - 역사문화 공원의 조성 - 과학공원 조성 - 생태공원, 자연생태관찰원, 도시농장 등 조성 - 개발제한구역의 수목원화 및 생태탐방로 조성		✔	
		• 공원녹지 유형별 관리행정체계 정비	- 공원녹지 유형별 관리행정체계 정비 및 관리계획수립 - 공원녹지 유형별 관리지침마련 - 공원시설물 종류 및 설치지침의 조정 - GIS를 이용한 녹지총량 보호관리체계의 확립	✔		

목 표	과 제	전략	시책	단기	중장기	정책지표
2. 인간과 생물이 공존하는 공원녹지 체계의 구축	공원녹지의 네트워크화	• 녹지생태축 설정 및 재생	- 녹지 현황조사 - 공원녹지체계 기본계획 수립 - 생태축 설정 및 조성지침 마련 - 환상 산림생태축 보전 및 재생 - 청계천 복원 등 한강 하천생태축 보전 및 재생 - 도심 육경축 보전 및 재생 - 일상생활권까지 녹도를 이용한 생태축 연결		✔	지표 4. 생태축 연결 지표
		• 공원녹지간 연결	- 공원간 연결녹지의 조성 - 창경궁～종묘간 생태통로 조성 등 생물이동통로의 조성 - 시설녹지(완충·경관녹지)의 선형 녹지공간화		✔	
	공원녹지의 생물다양성 증진	• 우수한 생태자원의 발굴 및 보전	- 자연성이 뛰어난 공원녹지 후보지의 발굴 및 우선 확보 - 생물학적 가치가 있거나 자연경관이 뛰어난 지역의 생태공원화	✔		
		• 지속가능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생물 다양성 증진	- 훼손된 생물서식처 복원 - 고립된 생물서식처의 연결 - 외래종 관리에 대한 지침 마련 - 주요 종 및 자연자원에 대한 관리지침 마련 - 주기적인 도시생태계 현황조사 및 자연환경보전 효과 측정 - 공원녹지의 환경보전효과 증진 - 공원녹지 내 투수포장면적비율 증진		✔	
3. 시민과 함께하는 공원녹지 가꾸기	공원녹지의 조성 및 관리에 시민참여 확대	• 공원녹지 조성에 시민참여 활성화	- 시민이 작성한 공원녹지 행동계획 마련 -「서울 그린 트러스트 운동」 전개 - 도시녹화기금의 조성 - 마을정원 가꾸기 등 마을 단위의 녹화사업 지원 - 시유지에 주민참여형 정원가꾸기 등 시유지 녹화 활성화 - 사유건물 녹화 활성화 - 담장개방 또는 생울타리 조성 등 사유지 녹화 및 공개이용 장려책 마련		✔	지표 5. 시민의 녹화 및 유지관리 참여율
		• 공원녹지 관리에 시민참여 활성화	- 민간 및 자원봉사단에 의한 공원이용 프로그램의 작성 및 운영 - 수목재활용을 위한 나무은행 운영, 유지관리의 민간지원 - 녹지의 실명관리와 큰 나무의 등록관리 - 보호수·보호수림의 관리 - 인터넷을 통한 수목관리정보 제공		✔	
	시민녹화 확대	• 민간분야 조경의 관리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민간 건물조경의 유지·관리 강화 - 시민녹지제도 도입 및 운영 활성화 - 녹지협정제도 도입 및 운영 활성화 - 녹화추진지구 도입 및 지정 - 녹화지원·장려제도 도입 및 운영 활성화 - 도시녹화위원회 도입 및 운영 활성화	✔		

목표1 양질의 다양한 공원녹지 제공

충분하고 다양한 양질의 공원녹지의 확보는 방문객, 관광객의 요구를 만족시키며 도시 환경의 질을 개선하는 기초적인 요소가 된다.

과제1 공원녹지 확충

향후 20년간 서울에서 새로운 대단위의 공원녹지를 확보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므로 서울시의 공원녹지시책은 미시설공원녹지의 시설투자, 그리고 도심지 공공시설 이전적지와 한강 및 지천변의 공원화 등 대체자원의 적극적 확보에 집중되어야 할 것이다. 도시공원의 개념은 법적인 규정보다는 도시민의 이용이라는 측면에서 유연하게 인식되어야 하며 도시공원의 양적인 확보를 위하여 소규모의 짜투리 땅이라도 도시공원화하는 등 다각적 확보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전략 1. 기존 공원녹지의 보전

현재 공원으로 고시되지 않았으나, 실제 공원으로 이용되는 기타 공원들을 개발로부터 보호한다.

시책 1. 재개발·재건축시 주변지형과 녹지의 보전
시책 2. 구릉지형 근린공원 모형개발 및 정비
시책 3. 개발제한구역 내 녹지보전대책 마련
시책 4. 도시생태림 조성

전략 2. 미시설 공원의 공원 조성

공원으로 고시되었으나 미시설인 공원의 수용 및 재정확충방안을 강구하여 적극 시설화한다.

시책 1. 공원녹지확충 기본계획의 마련
시책 2. 미시설 공원용지의 수용 및 재정기법 개발
시책 3. 장기 미집행 생활권 공원 조성
시책 4. 시설녹지 녹화

전략 3. 강변 녹지 확충

한강 본류 및 지천은 서울시의 역사와 문화 속에서 독특한 역할을 담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행락과 생물다양성 측면에서도 특별한 가치를 가진다. 하천과 하천주변토지를 포괄하는 하천회랑 개념 하에서 하천과 하천주변토지의 이용과 관리에 관한 원칙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하나의 대안적 원칙은 하천의 자연화 및 보호, 그리고 하천주변의 공원화이다.

시책 1. 그린마라톤 풀코스 조성, 물고기 관찰실 조성 등 한강 이용 활성화

시책 2. 한강 진입로 추가 설치 등 한강 접근성 개선

시책 3. 한강 지천변 공원화계획 수립

시책 4. 뚝섬에 대규모 공원 조성

전략 4. 이전적지 및 대형 신개발지의 공원녹지 확충

기성 시가지 내에 신규 공원녹지 조성을 위한 토지확보가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공장, 학교, 용산 미군기지 등 이전적지나 대형 신 개발지에 공원녹지를 적극적으로 조성한다.

시책 1. 미군기지, 공장, 학교 등 이전적지의 공원확보율 제고

시책 2. 공공시설 이전적지 내 공원확보율 제고

시책 3. 개발사업에 따른 공원녹지 확보 의무화 및 확보수준의 상향조정

전략 5. 자투리땅의 도시공원화

기성 시가지 내에 대규모 신규 공원녹지 조성을 위한 토지확보가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사유지를 포함한 소규모 토지에 공원을 조성한다.

시책 1. 쌈지공원 조성

전략 6. 시가지 녹화

도로변의 녹화, 공공용지 또는 건물을 적극적으로 녹화하여 시민의 녹지 체감도를 증진시킨다.

[표 IX-23] 가로 녹시율 증진을 위한 대안

가로구분	녹시율 증대를 위한 대안
주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 가로수의 선형녹지와 가로변 빌딩의 공개공지의 점적녹지의 연결성 확보 • 도시가로경관 구성시설의 녹화를 통한 녹화면적 확보 • 중앙분리대 설치 후 녹화(보조간선도로는 편도 3차선인 경우) • 가로구조물(건물외벽, 옹벽, 울타리 등)의 녹화 • 가로수 병렬 식재
집산도로 국지도로	• 가로구조물 녹화 • 가로변 자투리땅(개인주택의 집앞, 도로변 모서리 등)의 토착식물 식재
특수도로	• 가로수 병렬 식재 • 가로경관 시설물의 녹화

주 : 녹시율(綠視率)이란 일정지점에 서있는 사람의 시계(視界)내에서 식물의 잎이 점하고 있는 비율을 말함.

가로녹화 현황 및 개선 예시

가로유형구분	현황 및 녹시율	녹화 시뮬레이션 결과	
		차도	보도
간선도로 및 보조간선도로			
		녹시율 50.1%	녹시율 30.5%
			
	차도 5.73%, 보도 13.19%	녹시율 22.7%	녹시율 26.7%
집산도로			
	차도 6.03%, 보도 4.48%	녹시율 34.1%	녹시율 29.1%
국지도로			
	0%	녹시율 12.2%	

A : 가로수 1열 식재, B : 가로수식수대, C : 중앙분리식수대, D : 벽면녹화, E : 전면공지 녹화, F : 가로시설물 및 구조물 녹화

시책 1. 도로의 녹화
시책 2. 공공기관의 담장 제거 및 녹화
시책 3. 벽면, 옥상, 베란다 녹화 등 공공건물의 녹화
시책 4. 녹시율 증진방안 마련
시책 5. 학교 공원화
시책 6. 유휴지 등 공공시설을 활용한 녹지공간 확보
시책 7. 녹색주차장 확대
시책 8. 꽃이 어우러진 육교 가꾸기

전략 7. 가로 공원화

주요 간선가로를 녹도화하여 보행자를 자동차로부터 보호하고, 보행동선의 효율성을 향상시켜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한다. 이를 위해 보행자를 위한 선형 녹지축을 설정하고 결절지에 다양한 성격의 소규모 휴식공간을 조성한다.

시책 1. 도로의 유휴지를 활용한 녹지확충 및 보행환경 개선
시책 2. 주요 간선가로 및 도심에 보행자 중심 녹화거리 조성
시책 3. 대규모 개발계획시 대상지 전체를 순환하는 보행자전용로 조성

과제2 생활권역별 균형있는 공원녹지 제공

주민에 대한 공공서비스 형평성 차원에서 생활권역별로 부족한 공원녹지를 균형적으로 공급한다. 이를 위해서는 생활권별로 법정 공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대체자원 발굴 등의 다각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어린이공원과 근린공원은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일상생활권의 공원으로 이용하고, 도시자연공원과 국립공원은 주말 이용과 녹지의 존재가치에 의존하는 비일상권의 공원으로써의 역할을 담당하게 한다. 다만, 공원기능의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개발제한구역과 국립공원에서 해제된 기존 집단취락지의 경우 지역여건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전략 1. 도보권 내 공원녹지 조성(골목공원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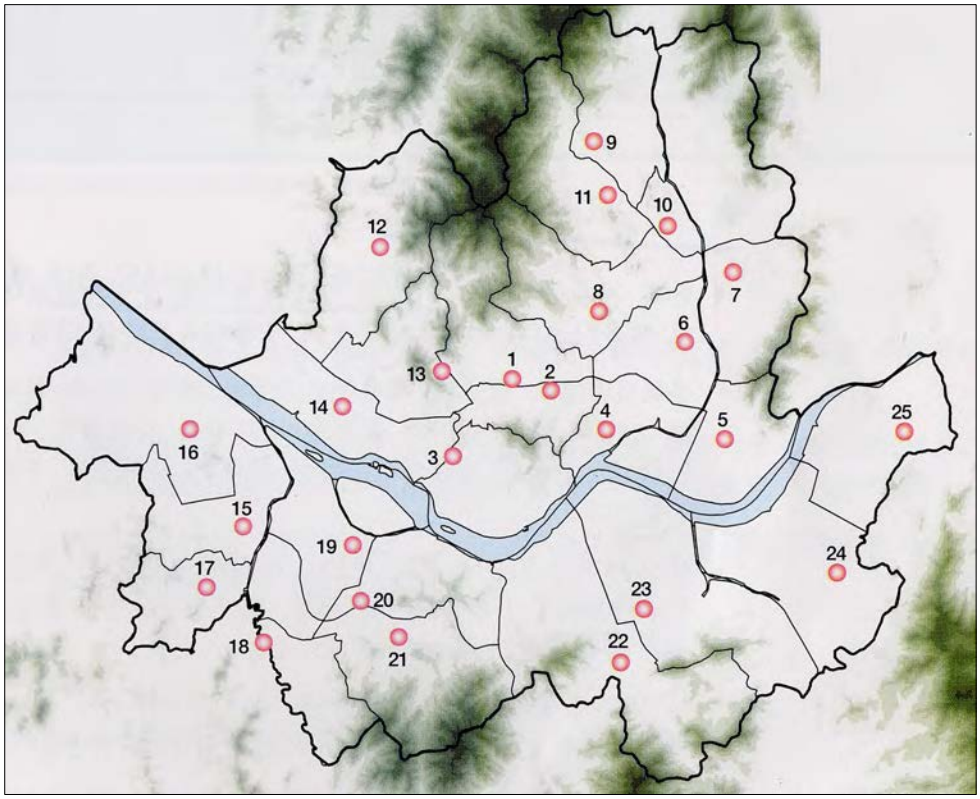
도심내 쾌적한 주거환경의 구현, 증가되는 여가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지역주민, 근로자 등이 가까운 도보권내에서 공원녹지를 향유할 수 있도록 각각의 도시공원 시설은 근린생활권, 지구생활권 등의 시설설치 목적에 맞추어 생활권역별로 공원녹지를 균형있게 배치하여야 한다.

공원서비스 소외면적비율이 30%를 넘거나 자치구별 1인당 공원면적이 서울시 평균

인 15.75㎡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용산구, 성동구, 동대문구, 중랑구,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송파구, 강동구 등을 공원녹지 우선확보지역으로 선정하여 일정수준(1인당 최소 10㎡)의 공원녹지를 확보하고, 이 지역의 가로의 녹시율 증대를 위한 사업을 우선 추진하도록 한다.

그리고, 역세권 주변에 형성되는 지구중심과 연계한 지구공원을 각 생활권별 공원녹지체계의 중심으로 구축하고 어린이 공원, 쌈지공원, 근린공원, 체육공원 등을 연계·정비하여 시민에 대한 서비스를 높이고, 증가되는 여가수요에 대응하여 도시공원시설이 부족한 생활권역에 레포츠, 유희 등 다양한 여가시설을 우선적으로 공급하여 균형 있는 녹지체계를 조성한다.

시책 1. 공원녹지 부족지역에 대한 예산의 우선 조치
시책 2. 자치구별 대표적 지구공원 조성
시책 3. 자치구별 체육공원 조성
시책 4. 공원녹지 균형배치방안 마련
시책 5. 녹지 보전 및 녹화 촉진에 관한 장기기본계획 수립
시책 6. 1동 1마을공원 조성



[그림 IX-3] 자치구별 지구공원

[표 IX-7] 자치구별 지구공원

구 분		명 칭	면적(천㎡)
1	종 로 구	탑골공원	20
2	중 구	훈련원 공원	17
3	용 산 구	효창공원	171
4	성 동 구	응봉1·2공원	382
5	광 진 구	어린이대공원	560
6	동 대 문 구	배봉공원	249
7	중 랑 구	봉화산공원	1,019
8	성 북 구	개운공원	298
9	도 봉 구	쌍문공원	328
10	노 원 구	영축산공원	260
11	강 북 구	오동공원	1,217
12	은 평 구	불광공원	130
13	서 대 문 구	서대문독립공원	109
14	마 포 구	성산공원	51
15	양 천 구	파리공원	30
16	강 서 구	우장산공원	359
17	구 로 구	개봉공원	22
18	금 천 구	안양천변	-
19	영 등 포 구	영등포공원	62
20	동 작 구	보라매공원	421
21	관 악 구	장군봉공원	128
22	서 초 구	시민의 숲	259
23	강 남 구	도곡공원	250
24	송 파 구	오금공원	219
25	강 동 구	명일공원	591

과제3 공원녹지의 수준향상

실질적으로 시민이용이 가능한 각 공원녹지별 자원의 특성을 파악하여 적절한 시설의 현대화와 기능의 재정비를 통해 지역주민에 대한 공원 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고유한 이미지를 대표하는 공원녹지를 제공함으로써 시민 이용 만족도를 제고한다.

전략 1. 공원 활용의 극대화

기존 법정 또는 비법정 공원의 활용을 촉진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한다.

시책 1. 공원녹지의 접근성 제고
시책 2. 공원 시설율 증대
시책 3. 보라매공원 renovation 등 시설 수준의 향상
시책 4. 비법정 공원녹지 내 휴식·편익시설 확충

전략 2. 공원녹지의 질 개선

기존 법정 또는 비법정 공원의 시설, 기능, 이용을 개선한다.

시책 1. 공원녹지 기능의 재정비 및 시설의 현대화
시책 2. 도시공원 이용 및 관리 프로그램의 개발
시책 3. 물을 이용한 친수공간 확충
시책 4. 가로수, 가로녹지 관수체계 도입

과제4 공원녹지시설의 다양화

여가시간의 증대와 함께 다양한 여가공간 수요가 예상되므로 이에 부응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여가 및 휴식공간을 조성하되, 법적인 의미의 도시공원이나 녹지개념을 떠나서 공원녹지 면적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도심에서 실질적으로 도시민이 이용하거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공원녹지 제공 방안을 강구한다.

전략 1. 여가수요에 부응하는 다양한 시설 설치

국립공원, 도시공원, 자연공원 등 법정 공원유형 이외에도 시민의 여가수요에 부응하는 다양한 특색 있는 공원을 제공한다.

시책 1. 3대 유원지를 특성에 따라 적정 개발하도록 공원으로 전환
시책 2. 역사문화공원의 조성
시책 3. 과학공원 조성
시책 4. 생태공원, 자연생태관찰원, 도시농장 등 조성
시책 5. 개발제한구역의 수목원화 및 생태탐방로 조성

전략 2. 공원녹지 유형별 관리행정체계 정비

공원녹지 관리행정체계를 정비하여 공원녹지 유형별로 차별화된 관리행정을 편다.

시책 1. 공원녹지 유형별 관리행정체계 정비 및 관리계획 수립
시책 2. 공원녹지 유형별 관리지침 마련
시책 3. 공원시설물 종류 및 설치지침의 조정
시책 4. GIS를 이용한 녹지총량 보호관리체계의 확립

목표2 인간과 생물이 공존하는 공원녹지 체계의 구축

인간과 동물이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생태적으로 자립성, 안전성, 순환성, 건강성을 지닌 녹지체계를 구축한다.

과제1 공원녹지의 네트워크화

도시의 녹지는 인간생존을 위한 생명자원으로 인식되어야 하며, 생태적으로 안정되도록 보존하여 녹지의 질을 향상시키며, 나아가 수변생태계를 복원하고 야생동물 서식지를 확보하며, 이들을 주변공원이나 녹지와 연결시키는 등 생태계 회복을 꾀한다.

환상의 산림생태축, 남북 육경축, 동서 한강생태축을 중심으로 하는 주생태축의 보전 및 연결

- 도시 외곽에 위치하는 도시자연공원, 생태계보전지역, 개발제한구역의 보전과 올바른 이용방향을 제시함으로써 환경보전을 위한 환상의 산림생태축을 설정한다.
- 청계천 복원을 계기로 북한산과 남산, 관악산을 잇는 훼손된 남북 녹지축을 복구

하기 위하여 세운상가, 용산미군기지, 동작지구 사이의 남북녹지축을 복원하고, 도심내에 생태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다양한 소생물권(Biotope)지역의 보전으로 생태축을 강화한다

- 한강 본류를 중심으로 한 보전 및 이용계획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여 또 다른 축으로 하천생태축을 설정한다.
- 이상의 세 가지를 주생태축으로 설정한다.

주생태축을 보완하는 하위위계 생태축으로써 부생태축을 설정하고 대상지를 적극적으로 복원하거나 재창출한다.

- 중요 녹지와 주생태축 등 녹지가 집중적으로 분포하는 지역들 사이를 선형으로 연결한다.
- 한강수계 지천을 생태적인 하천회랑으로 재창출한다. 이를 위해 하천내 자연화(복원)와 수변공원화를 적극적으로 추구한다.

생태적 회랑기능을 일상생활권까지 끌어들이기 위한 선형적, 점적 기회요소를 발굴하여 이들을 녹도로 상호 연결한다.

- 서울시의 공원녹지를 잇는 선적연결이 약하므로 경관녹지, 보행도로, 폐철도부지, 옥상녹화 등의 다각적인 선형적, 점적 자원을 발굴하여 녹도로 조성하고 상호 연결함으로써 주생태축과 부생태축의 생태적 회랑 기능을 일상생활권까지 끌어들인다.



[그림 IX-4] 서울시 생태축 설정 및 연결 구상

[표 IX-34] 공원녹지체계의 위계 및 유형표

구 분	기 본 개 념	내 용	예 시
주생태축	광역적 수준 즉, 국토 및 수도권 공간구조차원에서 유지·관리되어야 할 선형의 생태보전축	• 수도권 광역녹지축의 일부 • 도시외곽에 자연공원과 개발제한구역의 형태로 존재하는 녹지들을 연결하고 이를 한강축과 연결하여 "주생태축" 조성	• 북한산, 관악산을 서울외곽을 따라 연결한 광폭의 산림녹지 • 한강본류를 중심으로한 동서 하천회랑 • 북한산에서부터 남산을 거쳐 남쪽의 관악산에 이르는 남북 육경축
부생태축	주생태축에서 파생된 지역적 수준 즉, 서울시 공간구조 차원에서 유지·관리되어야 할 선형의 생태보전축	• 주생태축인 환상의 산림녹지와 한강본류 하천회랑을 연결시키는 부 생태축 • 한강의 지류인 중랑천, 양재천, 안양천 등 중소규모의 하천 회랑 • 공원녹지 및 도시림 등을 상호 연결하는 생태축	• 중랑천, 탄천, 안양천, 홍제천 등의 하천복원과 하천변공원화를 통한 녹지네트워크 구상 • 달터근린공원↔양재천↔도곡근린공원
생활녹지축	주생태축이나 부생태축에서 파생되어 시민들의 근린생활권 수준 즉, 마을공간구조 차원에서 유지, 관리되어야 할 선형녹지축	• 부생태축으로부터 이어져 하위 위계로써 기능을 할 수 있는 가로, 보행자도로, 폐철도부지, 시설녹지 등을 녹로로 연결	• 녹화거리 • 보행전용녹도

전략 1. 녹지생태축 설정 및 재생

인간 이용의 장소일 뿐만 아니라 야생생물의 서식장소이자 이동, 확산 통로인 도시공원녹지를 생태축으로 설정하고, 일부 끊어진 구간을 재생시키거나 생태통로로 연결하여 생태축 기능을 회복한다.

시책 1. 녹지현황 조사

시책 2. 공원녹지체계 기본계획 수립

시책 3. 생태축 설정 및 조성지침 마련

시책 4. 환상 산림생태축 보전 및 재생

시책 5. 청계천 복원 등 한강 하천생태축 보전 및 재생

시책 6. 도심 육경축 보전 및 재생

시책 7. 일상생활권까지 녹도를 이용한 생태축 연결

전략 2. 공원녹지간 연결

서울시는 녹지의 파편화와 녹지의 질의 저하로 지속적인 생물다양성 감소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고 있으며, 주요도시계획시설인 도로의 확장은 생물의 이동을 방해하여 도심내 생물의 생태적 고립을 가중시키고 있다.

인접된 공원녹지와 연계하는 공원녹지체계 혹은 녹도(Greenway)에 대한 개념을 교통계획에 반영하여, 도심내부에 산재하는 면적, 점적인 녹지간을 선적으로 연결하고,

시민의 녹지의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이는 현재의 단위 공원녹지 조성 및 관리 정책에서 전환하여 생태적으로 상호 연결시킴으로써 인간과 생물이 공존하며, 모든 시민, 근로자가 도보권에서 공원녹지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증진시키고, 나아가 서울시의 상징으로써 다람쥐가 서식, 이동할 수 있도록 생물의 서식·이동환경을 개선하는 것이다.

시책 1. 공원간 연결녹지의 조성

시책 2. 창경궁~종묘간 생태통로조성 등 생물이동통로의 조성

시책 3. 시설녹지(완충·경관녹지)의 선형 녹지공간화



자료 : 서울특별시, 새서울 우리한강 기본계획, 2000

[그림 IX-5] 한강연안 특화계획도



자료 : 서울특별시, 2011 서울도시기본계획, 1997

[그림 IX-6] 도심 녹지축 구상도

과제2 공원녹지의 생물다양성 증진

생물이 서식하는 공간의 최소단위가 되는 주요 비오톱이 되는 지역을 보호하고 이를 긴밀하게 연결함은 파괴된 도시생태계에 멸종위험에 처한 종을 보전하고 증진시키며, 이것은 더 나아가 도시환경 질 개선에 이바지하게 된다.

전략 1. 우수한 생태자원의 발굴 및 보전

자연성이 뛰어난 공원녹지 후보지를 발굴하여 생태공원으로 조성한다.

시책 1. 자연성이 뛰어난 공원녹지 후보지의 발굴 및 우선 확보

시책 2. 생물학적 가치가 있거나 자연경관이 뛰어난 지역의 생태공원화

전략 2. 지속가능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한 생물다양성 증진

공원녹지의 관리 목표를 인간의 쾌적한 이용과 병행하여 생물다양성 증진에 두고 다각적인 증진 방안을 실천한다. 공원녹지의 자연성 증진과 토양의 생물부양능력 제고를 위해 공원녹지 내 건폐율을 낮추고 불투수포장재를 투수성재료로 교체하는 등 투수포장비율을 점진적으로 증진시킨다.

시책 1. 훼손된 생물서식처 복원
시책 2. 고립된 생물서식처의 연결
시책 3. 외래종 관리에 대한 지침 마련
시책 4. 주요 종 및 자원에 대한 관리지침 마련
시책 5. 주기적인 자연생태계 현황조사 및 자연환경보전 효과 측정
시책 6. 공원녹지의 환경보전효과 증진
시책 7. 공원녹지에 투수성포장비율의 증진

목표3 시민과 함께 하는 공원녹지 가꾸기

도시의 종체적인 녹화를 위해서는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가능하며, 이것은 민간부문은 물론이며 공공부문이 함께 협력하여 이룬다.

과제1 공원녹지의 조성 및 관리에 시민참여 확대

도시를 총체적으로 녹화하기 위해서 사유지의 녹화 등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공공부문도 도시녹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성공적인 도시녹지관리에 시민의 참여는 자원의 잠재성을 극대화하며, 공원의 효율적인 조성 및 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필수조건이다.

전략 1. 공원녹지 조성에 시민참여 활성화

공원녹지 조성과 다양한 도시녹화에서 시민참여를 촉진하고 지원한다.

시책 1. 시민이 작성한 공원녹지 행동계획 마련
시책 2. 「서울 그린 트러스트 운동」 전개
시책 3. 도시녹화기금의 조성
시책 4. 마을정원 가꾸기 등 마을 단위의 녹화사업 지원
시책 5 시유지에 주민참여형 정원 가꾸기 등 시유지 녹화 활성화
시책 6. 사유건물 녹화 활성화
시책 7. 담장개방 또는 생울타리 조성 등 사유지 녹화 및 공개이용 장려책 마련

전략 2. 공원녹지 관리에 시민참여 활성화

지속적인 공원녹지 유지관리에 시민의 참여를 촉진하고 지원한다.

시책 1. 민간 및 자원봉사단에 의한 공원이용 프로그램의 작성 및 운영
시책 2. 수목재활용을 위한 나무은행 운영, 유지관리의 민간지원
시책 3. 녹지의 실명관리와 큰 나무의 등록관리
시책 4. 보호수·보호수림의 관리
시책 5. 인터넷을 통한 수목관리정보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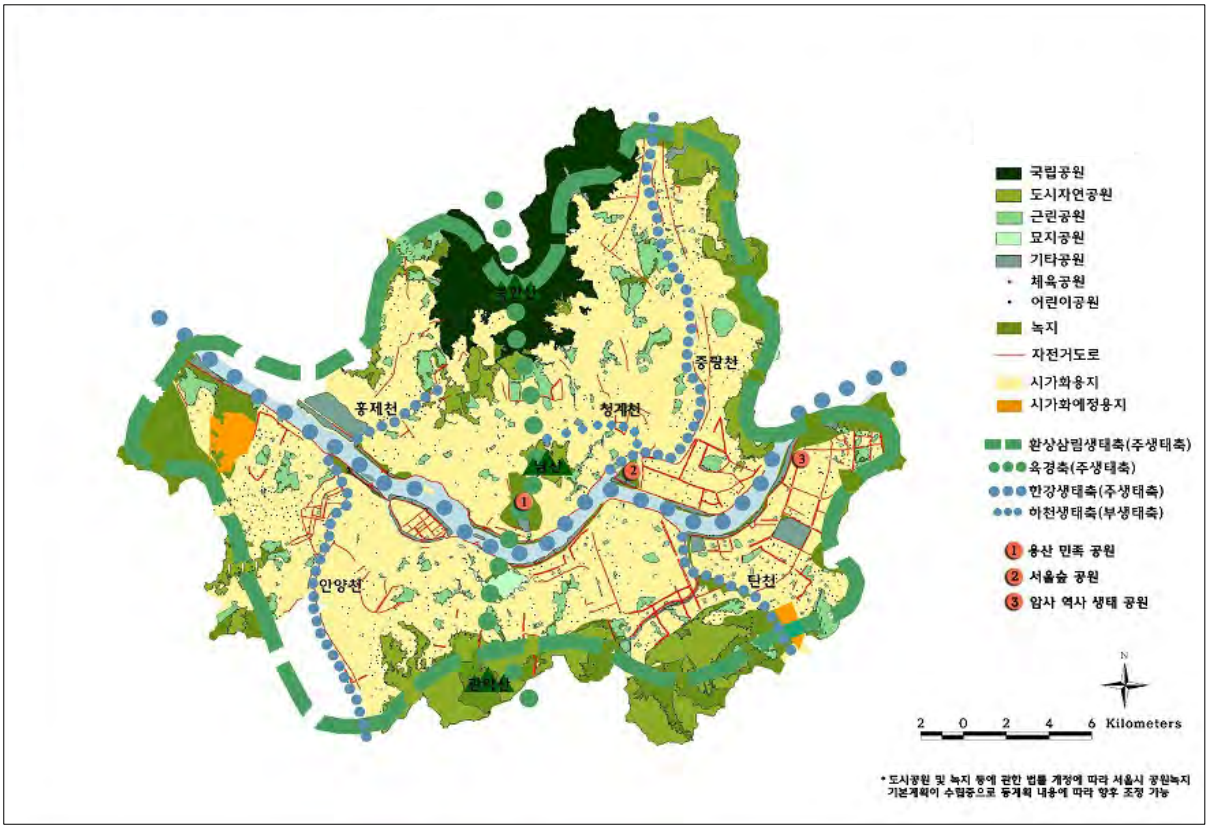
과제2 시민녹화 확대

옥상녹화의 장려와 지원, 생울타리 조성의 장려와 지원, 잔디주차장 조성의 장려와 지원, 시민녹화 재료의 지원과 관리 등 도시녹지의 확충을 위한 효과적인 민간분야 녹화지원의 추진근거를 마련한다. 훼손이 심한 민간분야 조경부문의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각종 개발사업 추진시 기존녹지의 보전을 우선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

전략 1. 민간분야 조경의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민간 건물조경 또는 시민참여 도시녹화를 사후관리하고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시책 1. 민간 건물조경의 유지·관리 강화
시책 2. 시민녹지제도 도입 및 운영 활성화
시책 3. 녹지협정제도 도입 및 운영 활성화
시책 4. 녹화추진지구 도입 및 지정
시책 5. 녹화지원·장려제도 도입 및 운영 활성화
시책 6. 도시녹화위원회 도입 및 운영 활성화



[그림 IX-7] 공원녹지체계 구상도[1)]

[대규모 공원 조성계획]

공원	면적	위치	특징 및 기능
용산 민족 공원	270만㎡	용산구 용산동 1가	주둔중인 미군이 이전하면 이일대를 '민족공원'으로 조성하여 시민의 휴식공간이자 생태공원으로 구상하고 있으나 현재 정부와 미국간 협의가 진행중으로 이전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향후 미군 이전계획 및 정부 방침에 따라 협의하여 구체적 계획을 수립.
서울숲공원	1,156,498㎡	성동구 성수동 1가 685번지	서울숲공원은 자연환경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생태공원'으로 조성 서울숲이 완공되면 서남권-보라매공원, 동남권-올림픽공원, 서북권-월드컵공원, 동북권-서울숲 등 각 거점별 공원녹지가 확보될 것으로 기대됨 서울숲은 크게 ▲문화예술공원▲생태숲공원▲체험학습원▲습지생태원▲한강수변공원 등 5개 테마공원으로 조성 시민의 진정한 휴식터 조성
암사역사 생태공원	110,048㎡	강동구 암사동 113-3외 70필지	• 강동권에 선사유적지 및 한강변과 연계된 역사, 문화, 생태교육을 위한 강동권의 대표적 테마공원으로 조성 • 시민들의 여가 및 휴식장소 제공을 위한 생활권공원으로 조성 • 생태숲을 조성하여 도시생태계 회복 및 개발제한구역의 기능 강화 - 1 단계 : 구암서원복원, 탄생의여울, 생명의숲, 풍요의광장 - 2 단계 : 세계선사주거촌, 선사생활 체험장, 시간의길

1) 자전거도로 현황자료는 중앙대학교 건설환경공학과 조윤호 교수의 협조를 받았음.

6. 목표별 정책지표

목표1 양질의 다양한 공원녹지 제공

[지표 1] 도시공원 면적 지표

구 분	2000(2001)*	2005	2010	2015	2020
계획인구(천인)	10,331	10,216	10,037	9,913	9,798
계획공원면적(㎢)	157.60	161.16	165.61	170.06	174.52
1인당 계획공원면적(㎡/인)	15.26	15.78	16.50	17.16	17.81
시설공원면적(㎢)	134.85	139.36	148.39	157.14	165.79
1인당 시설공원면적(㎡/인)	13.05	13.64	14.78	15.85	16.92
공원시설화비율(%)	85.57	86.47	89.6	92.4	95.0

• 이용 가능한 다양한 기타공원녹지 확대를 통해 각 자치구별로 1인당 공원면적이 최 10㎡를 충족하도록 공원을 제공한다.
* 2001년 자료를 활용함

[지표 2] 생활권역별 공원 배분 계획 지표

대생활권	중생활권	2000(2001)		2005	2010	2015	2020	
		공원 점유율 (%)	1인당 공원면적 (㎡)	공원 점유율 (%)	공원 점유율 (%)	공원 점유율 (%)	공원 점유율 (%)	1인당 공원면적 (㎡)
도심생활권	도심생활권	26.55	25.35	26.87	27.19	27.50	27.82	22.17
동북생활권	동북1생활권	14.91	6.34	16.26	18.51	20.41	22.32	10.35
	동북2생활권	44.21	25.27	44.21	44.21	44.21	44.21	26.98
서북생활권	서북생활권	34.34	20.00	34.09	33.84	33.59	33.34	18.29
서남생활권	서남1생활권	9.17	5.34	10.53	12.61	14.34	16.07	9.62
	서남2생활권	10.56	5.58	11.59	12.62	13.64	14.67	10.00
	서남3생활권	31.86	15.60		31.87	32.13	32.39	16.65
동남생활권	동남1생활권	23.21	21.31		23.21	23.21	23.21	23.71
	동남2생활권	11.63	5.92	13.18	14.74	16.29	17.84	16.21

• 녹지면적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자치구와 구별 1인당 공원면적이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자치구, 그리고 공원서비스 소외면적비율이 30%를 넘는 자치구 등을 대상으로 공원녹지 우선확보지역으로 선정하여 지역별로 고르게 일정수준의 공원녹지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한다.

[지표 3] 서울시 도로 기능상 구분에 따른 가로 녹시율

구 분	2003년 녹시율 (%, A)	2005년 녹시율 (%)	2010년 녹시율 (%)	2015년 녹시율 (%)	2020년 녹시율 (%, B)
주간선도로	16.3	18.2	23.0	31.5	40.0
보조간선도로	16.9	18.9	24.0	32.0	40.0
집산도로	14.0	15.9	20.6	25.3	30.0
국지도로	7.5	8.0	9.4	10.7	12.0
평균	13.7	15.3	19.3	24.9	30.5

- 도심내의 딱딱하고 삭막한 공간을 푸르고 쾌적한 녹지공간으로 변화시키고, 시민이 실제로 접하고 녹지 체감지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도시의 녹시율 제고를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부분적으로 도시열섬 저감, 구조물의 내구성 향상, 생물서식 기회 증진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목표2 인간과 생물이 공존하는 공원녹지체계의 구축

[지표 4] 생태축 연결 지표

구 분	2001년	2005년	2010년	2015년	2020년
환상 산림생태축 연결 개소 수	0	1	1	2	2(1)
환상 산림생태축 연결 개소 수 누계	0	4	9	18	26(2)

주 : 괄호내 수치는 서울시 도시계획구역 밖의 생태축 연결 대상 구간임

- 광역적 수준 즉, 국토 및 수도권 공간구조차원에서 유지·관리되어야 할 선형의 생태보전축으로써 주생태축을 설정하여 북한산, 관악산을 각각 연결한 광폭의 환상산림생태축과 한강 본류를 중심으로한 동서 하천생태축, 북한산에서부터 남산을 거쳐 남쪽의 관악산에 이르는 남북 육경축을 보존 복원한다.
- 주생태축에서 파생된 지역적 수준 즉, 서울시 공간구조 차원에서 유지·관리되어야 할 선형이 생태보전축으로써 부생태축을 설정하여, 한강의 지류인 중랑천, 양재천, 안양천 등 중소규모의 하천 회랑을 생태회랑으로 연결 복원한다.
- 주생태축이나 부생태축으로부터 근린생활권까지 생태적 연결이 이어지도록 선형녹지축을 설정하여 가로, 보행자도로 등을 녹도로 연결한다.

목표3 시민과 함께 하는 공원녹지 가꾸기

[지표 5] 시민의 녹화 및 유지관리 참여율

구 분	2001	2005	2010	2015	2020
참여마을 수	635	635	635	635	635
식재수량(단위: 주)	462,952	462,952	462,952	462,952	462,952

- 공공 및 민간부문의 공동참여에 의한 생활주변녹화 및 공원녹지관리운영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하여 사회의 각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촉진하면, 공원녹지 정책결정에 시민의견을 직접적으로 반영하여 시민만족도를 높이고, 공원녹지의 관리운영에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X. 경관계획



1. 현황과 문제점
2. 여건변화 전망
3. 미래상
4. 계획방향
5. 목표체계
6. 목표별 정책지표

1. 현황과 문제점

1)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구릉지경관 훼손 심화

• 서울의 구릉지지역 대규모 고층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해 주변지역과 시각적 부조화 및 단절을 초래하고, 자연지형에 대한 지나친 훼손으로 녹지 및 구릉지가 잠식되는 등 서울의 자연경관 골격이 점차 훼손되어 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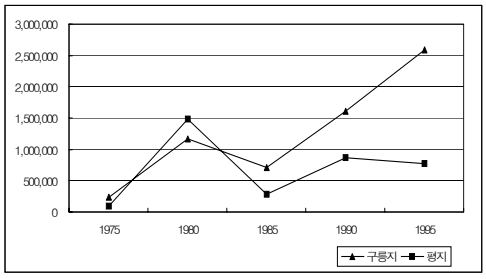
구릉지 훼손 심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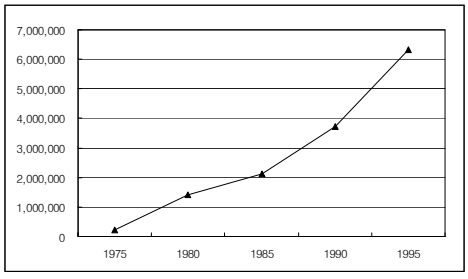
• 서울의 전체 재개발사업을 볼 때, 재개발 아파트의 약 66%가 구릉지에 지어지고, 이는 구릉지의 잠식으로 인해 고유한 자연환경을 변형, 훼손시키는 것 뿐 아니라, 도시의 과도한 스카이라인 변화로 경관문제를 유발하고 있다. 또한, 평지보다 구릉지내 재개발 사업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며 그 면적 또한 증가하는 추세로 구릉지의 훼손 및 잠식현상을 가중시킬 것이다.

[표 X-1] 전체 재개발사업에 대한 구릉지 재개발사업의 비율

구 분	재개발 전체	구릉지 재개발	구릉지 재개발의 비율(%)
구역면적(㎡)	12,615,281	8,393,006	66.5%
구역수(구역)	263	143	53.4%
정비가옥(호)	105,390	68,789	65.3%
건립가옥(호)	178,382	111,628	62.6%



[그림 X-1] 재개발 사업으로 인한 입지변화



[그림 X-2] 구릉지 재개발사업지의 누적면적

• 재개발 면적을 보면, 17～18층이 15～16층보다 2배 정도의 면적으로 이는 전체 재개발아파트의 평균층수인 16층보다 3개층, 약 9m이상 높다. 이는 구릉지 고층아파트 건설로써 서울의 구릉지 원형과 스카이라인 변화가 더욱 확대될 것이다.

[표 X-2] 구릉자-평지재개발 층수 비교

구분	구릉지 재개발		평지 재개발		전체 재개발	
	구역수	시행면적(㎡)	구역수	시행면적(㎡)	구역수	시행면적(㎡)
5층이하	2	21,473	2	25,611	4	47,084
6-10층	5	110,623	1	6,550	6	117,173
11-12층	9	388,449	5	130,454	14	518,903
13-14층	11	314,312	8	182,811	19	497,123
15-16층	14	822,139	9	348,129	23	1,170,268
17-18층	14	1,533,896	7	340,940	21	1,874,836
19-20층	6	902,135	5	149,114	11	1,051,249
21-25층	6	358,401	6	316,073	12	674,114
26층이상	1	112,000	1	45,753	2	157,753
합계	68	4,563,428	44	1,545,435	112	6,108,503
평균층수	19층		13층		16층	

자료 : 서울시 주택개량과, 각구청 주택개량과 현황자료 재구성-층수 확인 가능한 112개 자료기준

2) 지나친 공동주택 건설로 인한 주요 하천변 경관특성 훼손

• 1990년대 이후 한강변 아파트의 개발추세는 고층화, 고밀화 및 대형화를 동반하고 있어 예측 불가능한 급속한 경관변화가 주요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한강연접지역내의 아파트 단지는 현재 총 166개로써 평균층수는 12층, 평균용적률은 213%이다. 연접지역내 아파트 단지 가운데 한강에 인접한 61개 단지의 전면길이는 총 16.4km에 이르며, 이것은 강남북 강변길이의 약 1/5에 해당한다.

또한 한강변에는 7개 지역의 대단위 밀집 아파트단지가 있어 한강변을 따라 거대한 아파트 숲을 형성하고 있다. 이들 7개 지역의 단지면적과 세대수는 연접지역내 전체단지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다. 중랑천, 탄천, 안양천 등 주요 지천변의 경우도 한강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어 이에 대한 경관관리가 요구된다.

[표 X-3] 한강변 아파트의 밀도 및 규모 변화

시기(년도)	단지수(개)	면적(㎡)		용적률(%)		층수(층)	
		전체	평균	분포	평균	분포	평균
1970이전	3	19,630	6,543	96-251	170	5-12	8
1971-1980	70	3,773,910	53,913	47-477	169	5-18	10
1981-1990	46	1,195,823	25,996	113-301	204	3-20	12
1991-2000	121	1,526,792	12,618	170-648	245	4-28	15
계	240	6,516,155	27,151	47-648	216	3-28	15

자료 : 시정연, 서울시 도시경관 관리방안 연구(Ⅲ), 1997. 최근자료 보완 (서울대 도시설계연구실)

- 이와 같이 한강 및 주요 지천변 고층아파트는 주변 시가지 및 자연경관으로의 조망을 차폐하고, 주변과 조화되지 않는 경관문제를 나태내고 있기도 하다.
- 또한 한강 등 주요 하천으로의 보행접근성이 결여되어 있고, 단조로운 고수부지 조성으로 시민의 수변 여가공간으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 대부분의 소하천은 복개되어 도시의 자연하천으로 역할과 기능이 미흡하고, 시민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수변 공간 조성 역시 미비하다.

3) 시민이 직접 느끼는 도시내 녹지경관 취약

- 서울내 도시민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원녹지는 양적, 질적으로 절대 부족하다. 서울시의 공원면적은 도시자연공원 66.58㎢, 근린공원 35.93㎢, 어린이공원 1.63㎢, 묘지공원 2.99㎢, 한강시민공원 6.93㎢, 국립공원 39.71㎢, 기타 2.28㎢(서울시, 공원현황, 2001.1)등 총 155.85㎢에 이르고 있으나 80%이상의 녹지가 대규모 산림 형태로 시 외곽에 위치하고 있고, 실제 시민생활공간에서 녹지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현재 시민들이 가깝게 이용할 수 있는 근린공원 및 어린이공원 등의 면적은 37.56㎢(24.1%)에 불과하고 시민 1인당 공원면적은 3.62㎡으로 시민생활공간에서 녹지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4) 조망단절 및 조망점 부재 등 조망경관 취약

- 무분별한 시가지 개발로 한강 및 주변의 아름다운 경관과 남산, 북한산, 인왕산 등 주요 산으로의 조망경관이 점차 상실되어가고 있다.
- 주요 산이나 한강 등 주요경관자원 주변으로 조망기준점 등이 지정되어 있지 않아 도시 조망경관자원 관리 이행의 어려움이 있다.

조망 단절 및 조망점 부재





5) 도시 스카이라인에 영향을 주는 고층·고밀 개발

•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응한 시가지 건축물 높이관리방안 부재로 인해 도시 중심성 혼란 및 시가지 정체성을 상실하고 있다.

도시스카이라인 혼재



• 최근 서울시내 20층 이상 오피스 및 고층 건축물의 비율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80년대 이후 오피스 건축물의 신축이 증가하기 시작하면서 20층 이상의 고층건물 신축이 증가되기 시작하였다. ' 95년 이후에는 신축건물의 약 50%가 20층을 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울의 주요 중심상업지 및 주거지역 도시경관에 많은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표 X-4] 서울시 오피스 건물 신축현황

년도	신축건물수	신축건물 평균층수	신축고층건물 (20층이상)의 수	20층이상 고층건물 신축비율(%)
1960-1969	56	12.8	2	3.6
1970-1979	97	13.7	16	16.5
1980-1989	309	12.3	28	9.1
1990-1995	311	13.0	44	14.1
1996-2000	104	18.2	51	49.0
합계	877	14.0	141	16.0

주 : 자료중 일부(1/3)로 재구성
자료 : 한국감정원, 서울시 오피스빌딩 실태조사, 2000

• 고층 주상복합 타워형 아파트의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도시스카이라인 변화가 예상되고 이는 서울의 스카이라인 변화를 예측하기 힘들게 하고 있다.

- 준공년도별 아파트 층고변화를 보면, '80년 이전에는 5층 이하의 아파트비율이 50%를 넘었으나 '81년 이후부터는 11층 이상의 고층아파트의 비율이 73%를 넘어 점차 고층화되고 있는 추세임을 알 수 있다. 또한, '90년 이후부터 16～20층, 20층 이상 등 초고층아파트의 건설도 늘어나는 추세이다. 현재 주거지역 세분화가 완료되었으나 고층 재건축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고층화 추세가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도시경관의 부조화를 초래할 뿐 아니라 서울의 우수 조망자원을 독점하는 것으로써 도시 경관자원의 공공성 및 형평성 문제가 대두될 것이다.

[표 X-5] 준공년도별 아파트 증고변화

층 수	5층이하		6-10층		11-15층		16-20층		21층이상		계
준공년도	세대수	%	세대수	%	세대수	%	세대수	%	세대수	%	
1970년이전	7,661	57.5%	4,697	35.3%	282	2.1%	399	3.0%	273	2.1%	13,312
1971-1980년	78,362	53.5%	12,346	8.4%	55,511	37.9%	278	0.2%		0.0%	146,497
1981-1990년	54,898	18.2%	15,115	5.0%	220,407	73.3%	8,599	2.9%	1,870	0.6%	300,889
1991-2001년	13,754	1.7%	34,793	4.3%	381,993	46.8%	214,562	26.3%	171,866	21.0%	816,968
합계	154,675	12.1%	66,951	5.2%	658,193	51.5%	223,838	17.5%	174,009	13.6%	1,277,666

주 : 2001년-일부자료(서대문구) 누락
자료 : 서울시, 공동주택 단지현황, 2001

- 준공년도별 아파트의 용적률을 살펴보면, 시간에 따라 지속적으로 상승하였음을 알 수 있다. 특히, '80년 이전에 준공된 아파트의 경우 용적률 200%이하인 중·저밀 아파트가 주를 이루고 있으나, '81년 이후에 준공된 아파트의 경우 용적률 200~300%인 아파트가 상당히 증가하여, '91년 이후에 준공된 아파트의 경우 용적률 300%를 초과하는 고밀아파트가 약 57%정도 차지함을 알 수 있다.

[표 X-5] 준공년도별 아파트 용적률 변화

용적률	100%이하		101 ~ 200%		201 ~ 300%		301 ~ 400%		400%초과		계
준공년도	세대수	%	세대수	%	세대수	%	세대수	%	세대수	%	
1970년이전	4,590	32.9%	3,747	26.9%	1,601	11.5%	1,628	11.7%	2,387	17.1%	13,953
1971-1980년	53,896	36.1%	65,388	43.7%	25,707	17.2%	2,430	1.6%	2,050	1.4%	149,471
1981-1990년	47,876	15.8%	172,049	56.9%	80,844	26.8%	706	0.2%	640	0.2%	302,115
1991-2001	49,789	6.1%	74,752	9.1%	230,868	28.2%	137,782	16.9%	324,077	39.7%	817,268
합계	156,151	12.2%	315,936	24.6%	339,020	26.4%	142,546	11.1%	329,154	25.7%	1,282,807

주 : 2001년-일부자료(서대문구) 누락
자료 : 서울시, 공동주택 단지현황, 2001

6) 주변과 조화되지 못한 난개발로 주거지경관 악화

- 지역성과 경관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주거지 고도관리방식의 한계로 인해 돌출형 아파트개발 등 주변과 조화되지 못한 주거지경관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 단독 또는 다세대·다가구 중심의 저층주택가에서 사업지 단위의 주택재건축으로 인해 '나홀로 아파트'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들 '나홀로 아파트' 는 1동인 경우 11 ~ 15층, 2동인 경우 16 ~ 20층이 주를 이루고 있어 주변지역과의 일조, 조망, 통풍 등의 주거기본권을 해치고 이웃한 인접 주거지의 사생활을 침해함으로써 주거환경 확보를 위한 주민들의 집단민원과 반목·불신이 심화되고 있다.

주변과 조화되지 못한 주거지경관 - 나홀로 아파트



• 또한, 재건축 이전 용적률과 재건축 후의 용적률을 비교할 수 있었던 28개 단지를 검토한 결과, 89%의 단지에서 용적률이 재건축 이전 200%이하였으나 재건축 후 19개 단지가 300~400%의 용적률로 계획되었다. 따라서 평균적으로 재건축 이전 용적률은 132.7%인 반면 재건축 후에는 319.8%로 그 차이가 187.1%에 달하는 데 이러한 양상은 서울시 경관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된다.

[표 X-7] 나홀로 아파트(1동 또는 2동)사업계획 승인 현황

구 분	계	2000. 6	'99	'98	'97
단지수	171	44	50	28	49
세대수	20,663	4,210	5,730	2,950	7,773

자료 : 서울시, 나홀로 아파트 관리대책, 2000

[표 X-8] 재건축 전·후 용적률 변화

구 분	100%이하	100-200%	200-300%	300%초과	평균용적률
재건축 이전	9	16	2	1	132.7%
재건축 이후	-	-	9	19	319.8%

주 1) 재건축 이전의 용적률은 공동주택관리대장의 연면적과 대지면적으로 추정
2) 재건축 이후의 용적률은 서울시 96,97,98 재건축 사업승인자료 참조

[표 X-9] 나홀로 아파트 층수현황

구분	계	10층이하	11~15층	16~20층	21층이상
계	171	29	62	77	3
1동단지	120	27	57	35	1
2동단지	51	2	5	42	2

자료 : 서울시, 나홀로 아파트 관리대책, 2000

7) 역사적 건축물 및 문화재주변 경관관리 미흡

- 개별 문화재 시설 보존중심의 관리이외에 역사 · 문화재주변 지역과 연계된 지구차원의 경관관리를 이행하고 있지 못하다.
- 근대 역사와 관련된 근대 건축물들의 보전계획 수립이 미비하다.
- 서울의 지역별로 역사, 문화자원을 활용한 특색 있고 개성 있는 경관 창출이 미흡하다.

8) 혼란스러운 옥외광고물 및 획일적인 시가지 경관

- 도시의 지역특성과 연계한 특색 있는 경관형성이 미흡하다.
- 상업가로에서는 보행의 단절, 옥외 휴식공간의 미비, 광고물 난립, 차량동선 혼재 등으로 혼란스러운 경관양상을 띠고 있다.
- 특히, 시가지 가로에서 무질서한 광고물의 난립은 시가지 경관훼손의 주 요인으로써 지적되고 있다.

개성 없는 시가지경관 현황



9) 특색 있는 야간경관 조성 미흡

- 도시야경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점차 제고되고 있으나 미적으로 아름답고 효과적인 야간경관을 관리하기 위한 계획과 행정이 미흡한 실정이다.
- 최근 서울시에서는 야간경관계획을 수립하는 등 개선의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보다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야간경관 행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2. 여건변화 전망

1) 도시정체성 회복 및 도시이미지 제고 요구 증대

- 도시민의 경관에 대한 인식 전환으로 「서울다움」을 느낄 수 있는 도시 모습을 추구함으로써 도시정체성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 기존 경관계획은 산지·구릉지 및 하천주변의 경관관리를 위한 목표설정과 시책방향 제시가 주로 연구되어 왔으나 앞으로는 서울의 경관골격을 지키고 가꾸는 노력과 시민이 함께 참여하여 만들고 형성해가는 경관형성사업 및 생활권 단위에서 생활환경의 관리 및 경관형성' 등에 대한 경관계획의 필요성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2) 자연경관 개선을 통한 쾌적한 환경조성 요구 증대

- 서울을 대표하는 주요 산·구릉지, 하천주변 경관개선을 통한 서울의 특색 있는 자연경관을 보전하고자 하는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주요 산·구릉지 주변지역의 자연경관지구와 더불어 하천주변 수변경관지구지정 등을 통해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도시의 모습을 형성할 필요가 있다.

3) 경관관리의 제도적 실현수단 보완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경관지구의 도입, 주거지역 세분화, 지구단위계획 제도 도입 및 건축법에 의한 가로구역별 높이규제 등 제도적 여건변화에 따라 경관관리의 실현수단이 보강되었다.
- 그러나 경관관리의 구체적 이행을 위해 경관행정 업무체제 정비 및 (가칭)도시경관조례 등 후속적 경관관리의 행정 이행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요구된다.

3. 미래상

"서울다움이 살아있는 수려한 도시"

- 서울은 급속한 도시화로 인해 자연의 산지, 구릉지가 많이 훼손되었으며 한강과 하천변에는 대단위 공동주택 건축물들로 인해 자연과 조화되지 못하는 경관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시가지내 개성 없는 고층 건축물들과 무질서한 옥외광고물, 부족한 녹지 공간 등은 어디서나 똑같은 가로풍경으로 단조로운 경관과 혼란스러운 도시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서울 도시경관의 미래상은 이와 같은 혼란스러움과 개발위주로 인한 경관훼손이 지양되고 환경친화적인 도시모습을 갖출 수 있도록 **"환경적으로 건강한 도시"**로 설정될 필요가 있다.
- 아울러 도시 간 국제경쟁시대에 「서울다움」을 담는 **"아름답고 매력적인 도시"** 또한 세계속의 도시로써 서울을 자리매김 하기위해 매우 중요한 목표라 하겠다. 결과적으로 서울이 자연과 조화하는 가운데 환경적으로 건강하고, 미적으로 아름다운 서울다움이 살아있는 도시로써 만들어 가야 하겠다.

4. 계획방향

경관계획의 실천력 강화

- 서울의 경관골격과 여러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경관계획을 수립하고, 경관보호를 위해 필요한 지역에 한해서 경관관리계획구역 및 경관지구 등을 도입·지정한다. 한편 고도지구, 주거지역 세분화, 가로구역별 높이기준 등 여타의 기존 경관관리수단과 연계하여 종합적 경관관리가 이뤄지도록 한다. 또한 구체적 경관형성사업을 통해 경관계획의 실현성을 제고 한다.

체계적인 경관관리의 실현

-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등 도시계획위계별 경관부문계획의 위상 및 역할을 규정하고, 도시관리계획 차원의 경관관리계획 시스템을 도입 한다.

5. 목표체계 "서울다움이 살아있는 수려한 도시"

목표	과제	전략	시책	단기	중장기	정책지표
1. 자연적 경관특성이 강화된 매력적인 도시회복	산지-구릉지 경관훼손 방지	• 주요 산 주변의 경관특성 보전 및 강화	- 주요 산 주변의 경관지구 지정 및 관리 - 주요 산주변 경관관리계획의 수립		✔	지표 1. 하천에서의 개방감 비율
		• 구릉지 주거지역의 고층화 억제	- 구릉지 재건축·재개발시 고도관리 기준 강화 - 구릉지를 저층 주거지역으로 지정 관리	✔		
		• 훼손 구릉지 경관특성의 점진적 회복	- 그린네트워크 및 능선잇기사업 전략 수립		✔	
	주요 하천변 경관특성 강화	• 한강변 경관차폐지양 및 단조로운 경관 개선	- 수변 경관지구 지정 및 관리 - 수변 경관관리계획 수립 및 도시관리 계획 결정	✔		
		• 주요 지천변 경관특성 보전 및 개선	- 주요 지천변 경관관리의 이행		✔	
		• 하천변 녹지공간 확충	- 하천변 녹화로 녹지 네트워크 형성 - 수변공간을 자연생태 공간으로 조성		✔	지표 2. 서울의 주요 조망 대상수
		• 접근성 제고로 가고 싶은 하천 만들기 시행	- 접근로 시설 개선을 통한 고수부지 이용 활성화	✔		
	도시내 풍부한 녹지공간 제공	• 녹지축 경관특성 강화	- 주요 녹지축 지정 및 경관관리 - 녹지 네트워크 형성계획 수립	✔		
		• 경관특성가로 조성	- 풍치로의 지정 및 경관조성 - 상징·시범가로의 지정 및 경관조성 - 기타 낙엽의 거리 등 지정 및 관리		✔	
		• 도로 유휴공간의 녹지 조성	- 도로변 유휴공간의 녹지조성 계획 수립 - 간선가로 가로수 및 식수대 복원 정비		✔	지표 3. 주요 조망가로 개수
	매력적인 조망경관 확보	• 주요 조망점 발굴 및 조성	- 서울시 주요 조망점 발굴 및 선정		✔	
		• 주요 조망가로 지정 및 관리	- 주요 조망가로 경관계획 수립과 관리		✔	
		• 새로운 조망경관요소의 개발	- 새로운 구조물 및 볼거리 개발 및 조성		✔	

목표	과제	전략	시책	단기	중장기	정책지표
2. 쾌적한 환경속에서 삶, 역사,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생활자족 도시 조성	쾌적하지 못한 주거지 경관 개선	• 주거지역 세분화로 주변과 조화되는 개발관리	- 일반주거지역 종세분화 적용과 용적률 규제, 층수제한 등 차별 관리 - 나홀로 아파트 등 주변과 조화되지 못한 개발 승인요건 강화	✔		지표 4. 주거지역 세분화 실현 비율
		• 일반주거지 주거환경 정비	- 시민생활과 연계된 생활형 공원의 확충 - 생활공간과 공원녹지를 도로 및 주거지와 체계적으로 연계	✔		
		• 공동주택단지 경관개선	- 신축아파트의 식재계획 및 개성화 유도 - 아파트 환경가꾸기 대회 및 경관상 추진		✔	
		• 주민참여형 마을만들기 사업 활성화	- 주민참여형 마을만들기 사업시행 - 공동체 운동 등 주민자치운동 활성화 및 지원		✔	
	역사성, 지역성 및 근대건축물의 관리 강화	• 문화재 주변 경관관리 강화	- 주요 문화재 주변 경관지구 지정 및 관리 - 문화재와 연계된 문화공간 조성	✔		지표 5. 시급히 정비해야할 경관 혐오요소의 개수
		• 근대 건축물 관리 강화	- 전통적 건조물, 장소 등을 지정·관리 - 근대역사 건축물 주변 식재 및 보도, 안내판 등 경관관리		✔	
		• 집단적 역사지구 보전 관리	- 집단적 역사지구 지정 및 관리 - 4대문안 근대역사 유적밀접지역 문화유산 회복 및 경관개선사업 - 풍납토성, 삼성동 토성, 대모산성 등 백제관련 유적밀접지역 등 역사지구 지정 및 경관개선사업		✔	
	문화적 지역특성의 보전 및 강화	• 문화적 지역특성 발굴 강화	- 무형의 역사자원 발굴 및 관리 - 문화공간 주변을 지역내 소규모 휴식공간으로 활용		✔	지표 6. 관리되고 있는 역사속의 건축물 수
		• 새로운 문화지구 지정 확대	- 문화지구 지정 등 문화관련 건축물 및 무형자산 회복 보전	✔		
		• 문화 네트워크의 조성	- 유적지 및 문화지역을 연결한 문화 네트워크 조성 - 문화의 거리 조성방침을 통한 문화행사·축제 활성화 및 장소제공		✔	
3. 세계 도시로써의 기능과 매력을 갖춘 도시공간 조성	도시 스카이라인 관리	• 중심지 위계와 연계한 도시 스카이라인 관리	- 미관지구 정비를 통한 특정 상업지 및 중심지 경관특성 강화 - 중심지 위계별 높이제한을 통한 도시 스카이라인 관리 - 일반지역에서 인접지역 특성을 무시한 고층건물 등 급격한 스카이라인 변화 규제	✔		지표 7. 서울하면 떠오르는 랜드마크적 건축물 수
		• 특징적인 시가지 경관 조성	- 대규모 전략적 개발지역의 특별경관관리 실시 - 대규모 도시개발지역에 대한 스카이라인 특별관리방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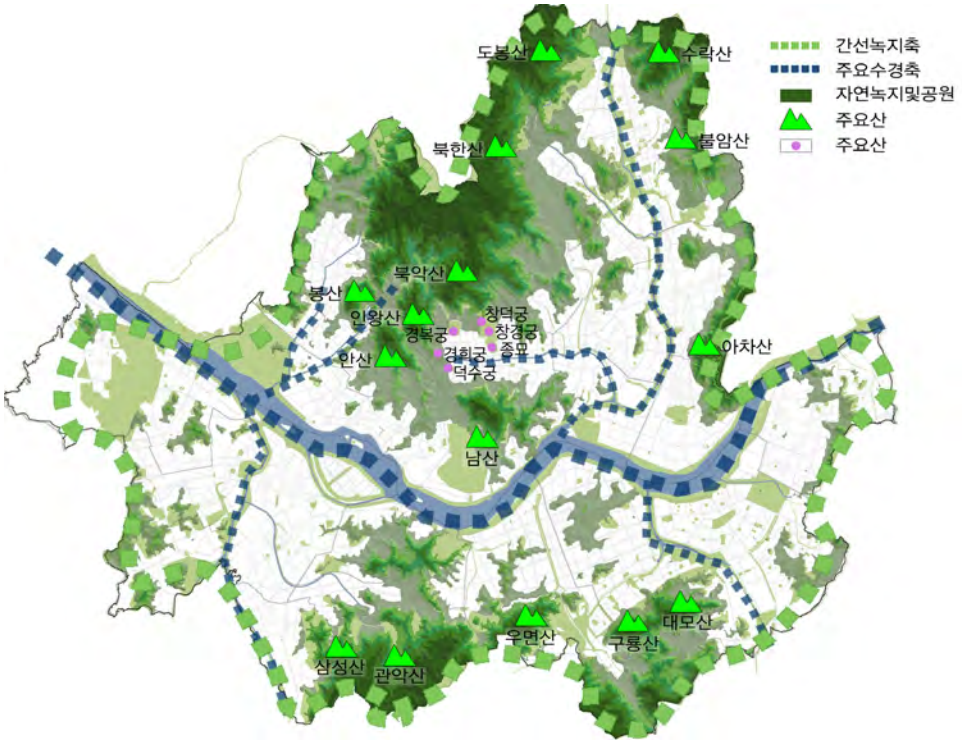
목표	과제	전략	시책	단기	중장기	정책지표
3. 세계 도시로써의 기능과 매력을 갖춘 도시공간 조성	혼란스러운 가로경관 개선	• 가로의 무질서한 가로 미관 개선	- 문제경관 유형별 경관저해요인 분석 및 개선대책 마련 - 미관지구 정비개선을 통한 도시전체에 대한 가로경관 계획 수립		✔	지표 7. 서울하면 떠오르는 랜드마크적 건축물 수
		• 특징적인 가로경관 조성	- 특색있는 가로 경관 조성 및 개선 - 유형별 특화거리 지정 및 조성 - 가로변 보행공간 확충 및 개선 - 학교주변 등 생활도로의 정비		✔	
		• 옥외광고물 정비	- 옥외광고물의 지역별 특성화 유도 - 무질서하고 과다한 광고물의 조절방안 제시	✔		
	일반 건축물 및 구조물의 경관수준 향상	• 수준 높은 건축물 조성 유도	- 서울시 경관상 제정 및 대표경관 100선 선정사업 추진		✔	지표 8. 대표적 야간조명 건축물이나 구조물 수
		• 일반 건축물 경관관리 개선	- 일반시가지 건축물 경관관리 강화 - 주변 건축물군과의 조화 등 관리방안 마련	✔		
		• 하천변 주요 다리 구조물의 경관개선	- 하천변 구조물 경관관리 방향 설정 - 한강 교각에 대한 야간조명 설치		✔	
		• 시가지내 주요 토목구조물의 경관 수준 향상	- 시가지내 주요 토목구조물 경관개선 계획 수립		✔	
	야간 경관 조성 및 개선	• 특징적인 야간경관 조성	- 주요 공공시설물 및 문화재와 역사유물 야간경관 연출 - 도심 상업중심지 야간경관 개선 - 랜드마크 야간경관 개선	✔		
		• 체계적인 야간경관 관리	- 각 자치구 및 시에서 체계적인 야간경관 관리계획 수립		✔	
4. 체계적인 경관관리 구현	경관관리 체계의 구축	• 경관관리 행정체계 정비	- 시·자치구의 경관관련 전담부서 설치 - 경관 주무부서의 협의 조정기능 강화	✔		지표 9. 경관지구 지정 비율
		• 전략적 접근방식 시도	- 서울시에서 경관관리에 관한 큰틀 제시 및 경관기본계획 수립 - 5대 권역, 12개 소권역별 경관계획 및 경관관리구상 수립 - 시민참여 확대, 경관가꾸기 운동 등 새로운 접근방법 모색		✔	
	경관관리 제도의 정비 실현	• 도시경관조례 제정 및 서울시 경관기본계획 수립	- 체계적인 경관관리를 위한 도시경관조례 및 경관기본계획 수립 확정	✔		
		• 경관지구의 지정 및 관리	- 주요 산, 하천변, 문화재 주변 등 특별경관관리가 필요한 지역에 경관지구 지정 - 경관관리지침 마련 및 관리 이행	✔		

목표1 자연적 경관특성이 강화된 매력적인 도시 회복

서울만이 가지고 있는 매력적인 자연적 경관특성을 향유하고, 자랑할 수 있는 경관만들기를 시행하도록 한다.

서울의 경관구조 및 특성

- 주요 산 및 한강 등 수변공간은 서울을 대표하는 중요한 경관요소이다. 한강 등의 수경축과 주요 산 주변의 녹지축은 서울의 주요 경관구조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림 X-3] 서울시 경관구조도

과제1 산지-구릉지 경관훼손 방지

서울의 자연적 지형특성을 고려하여 매력적인 경관자원으로써 산지・구릉지의 경관훼손을 방지하도록 한다.

전략 1. 주요 산 주변의 경관특성 보전 및 강화

서울의 자연적 특성을 나타내는 주요 산 주변 경관특성을 보전하기 위하여 경관지구를 지정·관리한다.

시책 1. 주요 산 주변 경관지구의 지정 및 관리

시책 2. 주요 산 주변 경관관리계획 수립

전략 2. 구릉지 주거지역의 고층화 억제

구릉지 재개발승인 요건의 강화를 통해 구릉지 주거지역의 고층화를 억제하고, 구릉지경관을 보호한다.

시책 1. 구릉지 재건축・재개발시 고도관리 기준 강화

시책 2. 구릉지를 저층 주거지역으로 지정 관리

전략 3. 훼손 구릉지 경관특성의 점진적 회복

훼손된 구릉지 경관의 특성을 점진적으로 회복시키기 위한 장기 전략을 수립한다.

시책 1. 그린네트워크 및 능선잇기사업 전략 수립

과제2 주요 하천변 경관특성 강화

서울의 대표적 경관자원으로써의 한강 및 주요지천변 경관특성을 강화하여 도시내 부족한 오픈 스페이스를 확보하고, 서울을 아름답고 시민 휴식공간이 풍부한 쾌적한 도시로 가꾸어 나간다.

전략 1. 한강변 차폐지양 및 단조로운 경관 개선

한강변의 경관을 가로막는 아파트 등을 억제하고, 가고 싶은 한강을 만들기 위해 수변경관지구 지정 및 도시관리계획을 입안·결정한다.

시책 1. 수변 경관지구 지정 및 관리

시책 2. 수변 경관관리계획의 수립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

전략 2. 주요 지천변 경관특성 보전 및 개선

주요 지천변 경관특성을 보전하기 위해 수변경관관리계획 수립한다.

시책 1. 주요 지천변 경관관리의 이행

전략 3. 하천변 녹지공간의 확충

도시내 부족한 오픈스페이스를 확보하고 편히 쉴 수 있는 녹지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하천변 녹화 및 자연생태공간을 조성하여 네트워크로 연결한다.

시책 1. 하천변 녹화로 녹지 네트워크 형성

시책 2. 수변공간을 자연생태 공간으로 조성

전략 4. 접근성 제고로 가고싶은 하천 만들기 시행

접근하기 쉬운 하천변을 만들기 위해 관련시설을 개선하고 이용을 활성화한다.

시책 1. 접근로 시설 개선을 통한 고수부지 이용 활성화

과제3 도시내 풍부한 녹지공간 제공

서울의 자연적 경관특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절대적으로 부족한 녹지공간을 확충하고 풍부한 녹색 경관을 제공 한다.

전략 1. 녹지축 경관특성 강화

도시내 부족한 녹지공간을 확충하기 위하여 주요 녹지축 및 이를 연계한 녹지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녹지경관 특성을 강화한다.

시책 1. 주요 녹지축 지정 및 녹지경관 조성

시책 2. 녹지 네트워크 형성계획 수립

전략 2. 경관특성가로 조성

풍치로, 상징로, 낙엽거리 등 경관특성가로를 지정 및 관리함으로써 특색 있는 경관을 느낄 수 있는 가로경관을 창출한다.

시책 1. 풍치로의 지정 및 경관조성

시책 2. 상징·시범가로의 지정 및 경관조성

시책 3. 기타 낙엽의 거리 등 지정 및 관리

전략 3. 도로 유휴공간의 녹지 조성

각 도로변 유휴공간을 녹지로 조성하여 시민들이 생활속에서 느낄 수 있는 녹지공간을 확충한다.

시책 1. 도로변 유휴공간의 녹지조성 계획 수립

시책 2. 간선도로 가로수 및 중앙식수대 복원 정비

과제4 매력적인 조망경관 확보

주요 산, 하천, 도로 등 경관 특성 강화를 통해 생활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서울다움의 회복하고, 매력적인 조망경관을 확보한다.

전략 1. 주요 조망점 발굴 및 조성

서울을 느낄 수 있는 주요 산, 하천 등에 주요 조망점을 발굴 및 지정함으로써 도시 공공의 조망경관을 보호한다.

시책 1. 서울시 주요 조망점 발굴 및 선정

전략 2. 주요 조망가로의 지정 및 관리

주요 조망가로 등을 지정하고 관련계획을 수립 · 관리한다.

시책 1. 주요 조망가로 경관계획 수립과 관리

전략 3. 새로운 조망경관 요소의 개발

자연경관 이외에 서울을 대표할 수 있는 구조물 및 볼거리 등의 경관요소를 개발한다.

시책 1. 새로운 구조물 및 볼거리 개발 및 조성

목표2 쾌적한 환경속에 삶, 역사,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서울다운 도시 조성

도시의 경관은 그 도시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을 보다 여유롭게 하고, 역사와 문화를 느낄 수 있는 서울다운 도시조성을 위해 경관만들기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

과제1 쾌적하지 못한 주거지 경관 개선

생활공간과 녹지를 연계하고, 아파트단지의 개성화 등을 통해 쾌적하고 푸른 주거환경을 조성한다. 또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자신의 주거환경을 가꾸고, 꾸며 나갈 수 있도록 주거환경을 창출한다.

전략 1. 주거지역 세분화로 주변과 조화되는 관리

주변 주거지지역과 조화되지 못한 나홀로 아파트 등의 건설을 지양하고 조화로운 주거지경관을 조성하기 위해 용적률 및 층수제한 등의 관리방안을 도입한다.

시책 1. 일반주거지역 종세분화 적용과 용적률 규제, 층수제한 등 차별 관리

시책 2. 나홀로 아파트 등의 주변과 조화되지 못한 개발 승인요건 강화

전략 2. 일반주거지 주거환경 정비

생활속에서 느낄 수 있는 생활형 공원 및 녹지 등을 주거지와 연계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을 정비한다.

시책 1. 시민생활과 연계된 생활형 공원의 확충

시책 2. 생활공간과 공원녹지를 도로 및 주거지와 체계적으로 연계

전략 3. 공동주택단지의 경관 개선

공동주택단지의 단조로움 및 위압감을 감소시킬 수 있는 식재계획 및 단지의 개성화를 통해 생활공간속의 경관을 개선한다.

시책 1. 신축아파트의 식재계획 및 개성화 유도

시책 2. 아파트 환경가꾸기 대회 및 경관상 추진

전략 4. 주민참여형 마을 만들기 사업의 활성화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한 주민참여형 마을 만들기 활성화를 통해 삶이 묻어나는 주거환경을 창출한다.

시책 1. 주민참여형 마을 만들기 사업 시행
시책 2. 공동체 운동 등 주민자치운동의 활성화 및 지원

과제2 역사성, 지역성 및 근대건축물의 관리 강화

역사 및 문화재지역을 지정·관리하여 서울을 역사가 함께 살아 숨쉬는 공간으로 만들도록 한다.

전략 1. 문화재 주변 경관관리 강화

주요 문화재주변지역을 문화재주변경관지구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문화재와 연계된 공간을 개방함으로써 시민들이 느낄 수 있는 문화공간을 조성한다.

시책 1. 주요 문화재 주변 경관지구 지정 및 관리
시책 2. 문화재와 연계된 문화공간 조성

전략 2. 근대 건축물 관리 강화

근대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지역을 지정 및 관리함으로써 서울을 역사가 함께 살아 숨쉬는 공간으로 만든다.

시책 1. 전통적 건조물, 장소 등을 지정·관리
시책 2. 근대역사 건축물 주변 식재 및 보도, 안내판 등 경관관리

전략 3. 집단적 역사지구 보전 관리

4대문 안의 근대역사 유적지역에 대한 경관개선사업을 실시하고 집단적 역사지구로 지정함으로써 보전 · 관리한다.

시책 1. 집단적 역사지구 지정 및 관리
시책 2. 4대문안 근대역사 유적밀접지역 문화유산 회복 및 경관개선사업
시책 3. 풍납토성, 삼성동 토성, 대모산성 등 백제관련 유적밀접지역 등 역사지구 지정 및 경관개선사업

과제3 문화적 지역특성의 보전 및 강화

무형의 역사자원 및 유적지역을 지정·관리하여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느낄 수 있는 문화공간을 창출한다.

전략 1. 문화적 지역특성 발굴 강화

문화적 지역특성을 가진 지역을 개성화하고 이를 지역내 주민들을 위한 소규모 휴식공간으로 활용한다.

시책 1. 무형의 역사자원 발굴 및 관리

시책 2. 문화적 지역주변을 지역내 소규모 휴식공간으로 활용

전략 2. 새로운 문화지구 지정 확대

문화관련 건축물 및 무형자산이 있는 지역을 새로운 문화지구로 확대 지정해 그 특성을 회복·보전한다.

시책 1. 문화지구 지정 등 문화관련 건축물 및 무형자산 회복 보전

전략 3. 문화 네트워크의 조성

각 유적지 · 문화지역을 연계한 문화네트워크 및 문화거리를 조성함으로써 시민이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는 문화공간을 확보한다.

시책 1. 유적지 및 문화지역을 연결한 문화네트워크 조성

시책 2. 문화의 거리 조성방침을 통한 문화행사축제 활성화 및 장소제공

목표3 세계도시로써의 기능과 매력을 갖춘 도시공간 조성

서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시기능과 매력을 증진시킴으로써 세계도시로써 서울을 조성한다.

과제1 도시 스카이라인 관리

중심지 및 대표지역을 나타낼 수 있는 스카이라인을 조성하도록 함으로써 도시의 특성을 강화한다.

전략 1. 중심지 위계와 연계한 도시 스카이라인 관리

미관지구 정비 및 중심지 위계별 높이제한을 통해 중심지의 경관특성을 강화할 뿐 아니라,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관리한다.

시책 1. 미관지구 정비를 통한 특정상업지 및 중심지 경관특성 강화
시책 2. 중심지 위계별 높이제한을 통한 도시 스카이라인 관리
시책 3. 일반지역에서 인접지역 특성을 무시한 고층건물 등 급격한 스카이라인 변화 규제

전략 2. 특징적인 시가지 경관 조성

대규모 전략적 개발지역의 시가지 경관을 관리·유도한다.

시책 1. 대규모 전략적 개발지역의 특별경관관리 실시
시책 2. 대규모 도시개발지역에 대한 스카이라인 특별관리방안

과제2 혼란스러운 가로경관 개선

가로마다의 특색과 개성을 부여하여 시민들이 여유롭게 즐길 수 있는 가로공간을 창출함으로써 걷고싶은 거리를 만들도록 한다.

전략 1. 무질서한 가로 미관 개선

주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경관상 문제지역에 대한 혐오요소를 분석하여 개선하고 미관지구 정비를 통해 걷고싶은 거리를 조성한다.

시책 1. 문제경관 유형별 경관저해요인 분석 및 개선대책 마련

시책 2. 미관지구 정비개선을 통한 도시전체에 대한 가로경관 계획 수립

전략 2. 특징적인 가로경관 조성

시민들이 여유롭게 거닐 수 있는 가로공간을 만들기 위해 특화거리를 조성하고 보행공간 생활도로 등을 확충 · 개선한다.

시책 1. 특색 있는 가로 경관 조성 및 개선

시책 2. 유형별 특화거리 지정 및 조성

시책 3. 가로변 보행공간 확충 및 개선

시책 4. 학교주변 등 생활도로 정비

전략 3. 옥외광고물 정비

무질서한 옥외광고물의 난립을 조정함으로써 깨끗한 거리를 조성하고, 각 지역별 특색을 나타낼 수 있는 옥외광고물 특성화를 유도한다.

시책 1. 옥외광고물의 지역별 특성화 유도

시책 2. 무질서하고 과다한 광고물의 조절방안 제시

과제3 일반 건축물 및 구조물 경관수준 향상

서울을 대표할 수 있는 건축물 및 주변과 조화된 건축물 조성 등을 통해 도시의 특색을 강조한다.

전략 1. 수준 높은 건축물 조성 유도

서울을 대표할 수 있는 수준 높은 건축물 조성을 유도하기 위해 경관상 제정 및 대표경관 선정사업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시책 1. 서울시 경관상 제정 및 대표경관100선 선정사업 추진

전략 2. 일반 건축물 경관관리 개선

일반 시가지 건축물에 대한 경관관리 및 주변 건축물과의 조화를 추구한다.

시책 1. 일반시가지 건축물 경관관리 강화

시책 2. 주변 건축물과의 조화 등 관리방안 마련

전략 3. 하천변 주요 다리 구조물 경관 개선

한강 및 주요 하천변의 다리 구조물에 대한 경관관리 방향을 설정하고 야간조명을 설치함으로써 하천변 경관을 개선한다.

시책 1. 하천변 주요 구조물 경관 관리방향 설정

시책 2. 한강 교각에 대한 야간조명 설치

전략 4. 시가지내 주요 토목 구조물 경관수준 향상

시가지내 토목구조물에 대한 경관개선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경관수준을 향상시킨다.

시책 1. 시가지내 주요 토목구조물 경관개선 계획수립

과제4 야간 경관 조성 및 개선

서울을 대표하는 건축물 및 시설물에 야간조명을 설치함으로써 개성 있는 야간경관 조성 및 랜드마크적 경관을 강화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밤에도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창출한다.

전략 1. 특징적인 야간경관 조성

도심의 대표적 건축물 및 문화재급 역사유적지 등에 야간조명을 설치 · 조성함으로써 아름다운 야간경관을 도모한다.

시책 1. 주요 공공시설물 및 문화재급 역사유물에 야간경관 연출

시책 2. 도심 상업중심지 야간경관 개선

시책 3. 랜드마크 야간경관 개선

전략 2. 체계적인 야간경관 관리

각 자치구 및 시에서 야간경관계획 수립을 통해 체계적인 야간경관을 조성한다.

시책 1. 각 자치구 및 시에서 체계적인 경관관리계획 수립

목표4 체계적인 경관관리 구현

도시경관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서는 경관관리 목표를 명확화하고, 구체적 실천수단으로써 경관관리 행정체계와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과제1 경관관리 체계의 구축

바람직한 도시경관관리 및 형성을 위해 경관관리 행정체계, 계획체계, 제도체계 등을 정비하고 개선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경관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전략 1. 경관관리 행정체계 정비

경관관련 전담부서의 설치 및 관련부서의 업무기능을 조정·통합함으로써 종합적인 경관관리 행정체계를 정비한다.

시책 1. 시·자치구의 경관관련 전담부서 설치

시책 2. 경관 주무부서의 협의 조정기능 강화

전략 2. 전략적 접근방식 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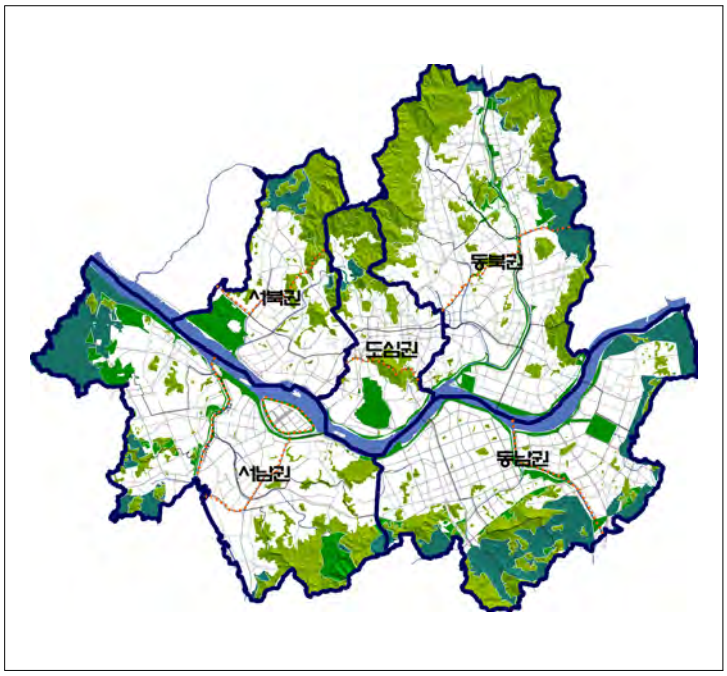
서울시에서 경관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민들의 경관가꾸기 시민운동 등의 도움을 받아 경관관리 행정이 실천될 수 있게 하는 전략적인 접근방식을 모색한다.

시책 1. 서울시에서 경관관리에 관한 큰 틀 제시 및 경관기본계획 수립

시책 2. 5대 권역, 12개 소권역별 경관계획 및 경관관리구상 수립
서울시 전체를 5대 경관권역으로 나누어 각 권역별 일반적 사항에 대한 방침을 제시하고, 12개 소권역의 구분을 통해 동일한 경관권역별 경관특성을 반영한 구체적이고 지역적인 경관관리를 시행한다.

시책 3. 시민참여 확대, 경관가꾸기 운동 등 새로운 접근방법 모색

권역	소권역	특성구분
도심권	도심	상업/업무, 역사문화
	용산	전략개발, 녹지, 수변
동북권	미아·상계	주거, 자연특성
	아차산	주거, 자연특성, 청량리 부도심
동남권	천호·잠실	주거, 자연특성 상업, 역사문화
	강남·서초	상업/업무, 부도심
서남권	강서·양천	주거, 신시가지 마곡전략개발
	영등포	상업/업무, 부도심
	여의도	상업/업무, 부도심 고층건물군
	관악산	주거, 자연, 대학군
서북권	마포·신촌	주거, 대학군 상암전략개발
	은평	주거, 자연



과제2 경관관리 제도의 정비 실현

경관지구 지정 및 관리, 도시경관조례 제정, 경관기본계획 수립 등의 방법을 통해 서울의 경관을 보전하고 관리한다.

전략 1. 도시경관조례 제정 및 서울시 경관기본계획 수립

경관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조례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경관관리에 대한 기본 틀을 제시한다.

시책 1. 체계적인 경관관리를 위한 도시경관조례 및 경관기본계획 수립 확정

전략 2. 경관지구의 지정 및 관리

중점적 경관관리가 필요한 지역에 경관지구를 지정 및 관리함으로써 서울의 도시경관을 보전·관리한다.

시책 1. 주요 산, 하천변, 문화재 주변 등 특별경관관리가 필요한 지역에 경관지구 지정

시책 2. 경관관리지침 마련 및 관리 이행

6. 목표별 정책지표

목표1 자연적 경관특성이 강화된 매력적인 도시 회복

[지표 1] 하천에서의 개방감 확보 비율(%)

1995	2001	2005	2010	2015	2020
28	30	33	35	38	40

- 한강조망가능지역은 한강을 조망할 수 있는 지역으로써 한강 주변지역이다.
- 한강주변을 수변경관지구로 지정 관리함으로써 한강조망가능지역을 보호 관리할 수 있다.

[지표 2] 서울의 주요 조망대상 수(개)

1995	2001	2005	2010	2015	2020
17	19	22	25	30	40

- 서울에서 가장 중요한 조망대상은 한강이고, 17개정도의 조망대상을 꼽는다. 이에 서울을 조망할 수 있는 주요대상의 확대가 필요하다.

[표 1] 서울시 주요 조망대상 분석

주요 조망대상	비율(%)	주요 조망대상	비율(%)
한강	21.7	올림픽 공원	1.6
서울시전경	16.6	광화문	1.5
남산(남산타워)	12.2	청와대	1.4
63빌딩	8.8	서울대학교	1.4
한강 시민공원	5.6	한강의 다리	1.2
북한산	3.8	국회의사당	1.2
경복궁	2.0	관악산	1.1
예술의 전당	1.6	여의도	1.1

자료 : 서울시, 서울시 도시경관 기본계획안, 1994

[지표 3] 주요 조망가로 개수(개)

1995	2001	2005	2010	2015	2020
10	12	15	20	25	30

- 도시진입도로는 방문자에게 도시의 첫인상을 주는 주요한 조망점으로 서울의 진입로에서 경관이 막히지 않고 조망되는 시가지 경관지역을 조성, 관리한다.

목표2 쾌적한 환경속에서 삶, 역사,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서울다운 도시조성

[지표 4] 주거지역 세분화 실현 비율(%)

1995	2001	2005	2010	2015	2020
0	2	50	70	90	100

• 일반주거지역에서 '주거지역 세분화'가 점차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쾌적한 주거지역이 조성될 것이다.

[지표 5] 시급히 정비해야할 경관 혐오요소의 수(개)

1995	2001	2005	2010	2015	2020
20	18	15	10	5	0

• 불량주거지의 건축물이 가장 높은 15.3%이며, 다세대주택, 스카이라인, 조망차폐 등 건축물의 난개발 및 관리미비 등이 경관혐오 요소로 대두되고 있다.
• 또한 자연경관과 문화재로의 조망차폐가 13.5%로 비교적 높게 나타나 자연경관 및 문화재에 대한 조망확보가 시급하다.
• 이에 2021년에는 경관을 훼손하는 혐오요소 대상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선함으로써 경관을 관리한다.

[표 2] 서울시 도시경관상 시급히 정비되어야할 대상

도시경관상의 문제점	비율(%)	도시경관상의 문제점	비율(%)
불량주거지의 건축물	15.3	가로의 간판 및 광고물의 난립	4.4
고밀화된 다세대 주택	10.4	개발로 인한 문화재 훼손	4.3
무질서한 건축물의 높이 (스카이라인)	9.4	구릉지에 위치한 재개발 아파트	3.8
자연경관으로의 조망차폐	8.6	한강변의 아파트	3.4
노후화된 지역의 건축물	7.2	주위 건물과 조화되지 않는 건축물의 외관	2.4
보행을 무시한 도로체계	6.3	고가도로등의 구조물	2.1
문화재로의 조망차폐	4.9	한강의 교량	0.8

주 : 상위 14개 대상만 표시
자료 : 서울시, 서울시 도시경관 관리방안연구 II, 1994

[지표 6] 관리되고 있는 역사속의 건축물 수(개)

1995	2001	2005	2010	2015	2020
62	66	70	75	80	85

• 현재 문화재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는 역사적 건축물은 약 66곳이다.
  - 종로구 인사동 승동교회, 세종로 경교장, 동아일보 사옥, 중구 정도 옛미국공사관 등이 서울시 문화재로 최근 지정·관리되고 있다.
• 고궁 및 성곽 등의 역사적 경관
  - 경복궁, 경희궁, 덕수궁, 창경궁, 창덕궁등 역사적 건물 및 장소를 보존관리한다.
• 근대건축물
  - 1883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현존하는 약 61개의 건축물로써 앞으로 지정·관리함으로써 역사적 가치를 보존하도록 한다.
  - 일제강점기 시대의 건축물을 이용한 신세계백화점(1930, 미쓰코시 백화점), 롯데백화점(1907, 조선식산은행), 미도파백화점(1939, 정자옥), 한일은행(1937, 조선신탁주식회사)과 그 맥을 이어 외환은행, 서울은행, 국민은행, 한빛은행 본점들이 명동중심부에 입지함으로써 80년대 사무소건축의 전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목표3 세계도시로써의 기능과 매력을 갖춘 도시공간 조성

[지표 7] 서울하면 떠오를 수 있는 랜드마크적 건축물 수(%)

1995	2001	2005	2010	2015	2020
15	17	20	25	30	40

- 서울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를 알아본 결과, 건축물과 관련된 것으로 남산타워, 63빌딩, 경복궁, 서울역, 남대문, 광화문, 올림픽경기장, 동대문, 국회의사당, 세종문화회관, 창덕궁, 예술의 전당, 명동성당, 무역센터, 경희궁 등의 순으로 뽑혔다.(서울시 도시경관 기본계획안('94)-서울시를 대표하는 지형, 지물, 장소 조사분석 중)

[지표 8] 대표적 야간조명 건축물이나 구조물 수(개)

1995	2001	2005	2010	2015	2020
22	30	35	40	45	50

- 시민들이 인지하는 시가지야경으로는 남산야경, 북악 스카이웨이에서 내려다본 서울모습이 대표적이다.
- 주로 가로야경과 환경조명시설이 설치된 건축물, 한강야경 등을 꼽고있으며 앞으로 야간경관계획을 수립·실시함에 따라 서울의 밤을 밝힐 야간경관을 적극적으로 조성한다.

[표 3] 서울의 주요야경(대표적 야간경관의 일부)

구 분	야경대상
시가지 야경	남산의 야경,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의 야경 북악스카이웨이 야경, 북악스카이웨이에서 본 서울야경
가로야경	올림픽대로, 삼성플라자등의 가로변야경
특징적 시설의 야간조명	돈화문, 독립문, 세종문화회관, 남대문, 동대문, 양화인공폭포, 종각, 광화문, 이순신장군동상등
한강야경	신행주대교, 청담대교, 성수대교, 영동대교, 천호대교등 교각, 한강변 야경등
특정건축물의 야간조명	코엑스, 포스코빌딩, 동아일보사옥, 테크노마트, 밀리오레등, 잠실 야구장(야간경기중)

자료 : 서울시, 서울시 도시경관 기본계획안, 1994

목표4 체계적인 경관관리 구현

[지표 9] 경관지구 지정 비율(용도지구 전체면적 중 %)

1995	2001	2005	2010	2015	2020
7.4	7.0	15.0	20.0	25.0	30.0

- 2001년 현재 지정된 경관지구의 면적은 자연/시계경관지구(과거 풍치지구) 등 16.1㎢로 용도지구 전체면적(232.1㎢)의 약 7%이다(서울시 도시계획현황, 2001 참조). 앞으로 자연경관과 조화된 서울시를 조성하기 위해 주요 산 주변과 하천변에 경관지구를 지정함으로써 서울시 주요 자연경관의 보존을 도모한다.

XI . 사회개발계획



1. 현황과 문제점
2. 여건변화 전망
3. 미래상
4. 계획방향
5. 목표체계
6. 목표별 정책지표

1. 현황과 문제점

1) 시설 및 인력

• 문화·복지 기반시설의 공급은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국제도시 서울의 위상 및 인구 규모와 비교하여 아직도 부족한 상황이다.

- 의료시설 : 시설 공급이 점차 증가하여 1개 병원 당 담당해야 할 인구수는 감소하였다. 종합병원은 1980년 32개소에서 2000년 66개소로 증가하여 시설당 담당 인구수가 15만 명으로 감소하였다.

- 공공의료기관인 보건소는 1구 1개소씩 총 25개소가 있으며, 6개 시립병원을 운영중이다.

[표 XI-1] 의료시설 현황

구 분	1980		1990		2000	
	시설수	시설당 인구수	시설수	시설당 인구수	시설수	시설당 인구수
종합병원	32	261,461	64	166,059	66	154,824
병원	64	130,730	87	122,158	107	97,861
의원	2,265	3,693	3,609	2,944	4,969	2,071
치과병·의원	1,114	7,510	2,091	5,082	3,275	3,167
한방병·의원	1,080	7,746	1,741	6,104	2,180	4,823
부속의원	75	111,556	84	126,521	60	172,887
보건소	17	492,162	22	483,081	25	395,653

자료 : 서울시, 서울통계연보, 각년도

- 사회복지 시설 : 서울시 및 자치구에서 건립한 공공복지시설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복지관이나 노인종합복지관, 청소년 수련관 등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는 공공복지시설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 교육시설 : 1990년 이후 학교시설 공급은 증가한 반면 학령기 아동 수는 점진적으로 감소하여 학급당 학생수는 감소하는 추세이다. 초등학교의 경우, 1990년 학급당 학생수가 약 51명이던 것이 2000년에는 37.3명 수준으로 크게 감소하였다.

- 문화시설 : 문화시설은 공연시설 및 전시시설 등 민간 영리시설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공공 문화복지시설은 아직 미미한 수준이다. 또한 국제적인 도시이자 한국의 대표도시로써 위상에 걸 맞는 문화예술 공간 및 시설이 부족한 실정이다.

[표 XI-2] 사회복지시설 현황(2000)

구 분		시 설 수			수용인원		
		계	공 립	사 립	계	공 립	사 립
복지일반	사회복지관	90	72	18	-	-	-
	부랑인시설	5	4	1	3,305	1,336	1,969
장애인복지	장애인 생활시설	28	0	28	2,919	-	2919
	직업재활시설	44	0	44	-	-	-
	장애인복지관	29	12	17	-	-	-
노인복지	양로·요양시설	13	2	11	1,230	270	960
	치매전문요양시설	3	1	2	502	278	224
	노인종합복지관	20	19	1	-	-	-
	주간·단기보호시설	45	12	33	-	-	-
여성복지	모자보호시설	8	0	8	229	-	229
	가정폭력보호시설	7	0	7	95	-	95
	성폭력보호시설	2	0	2	20	-	20
	여성발전센터	4	4	0	-	-	-
아동복지	양육시설	34	1	33	2,757	1,040	1,717
	자립지원시설	3	0	3	75	-	75
	보육시설	4,067	527	3,549	130,952	44,831	86,121
청소년복지	청소년수련관	26	23	3	-	-	-
	가출청소년 쉼터	3	0	3	56	-	56

[표 XI-3] 각급학교 현황

구 분		1990				1995				2000			
		학교수	학교당 학급수	학급당 학생수	교사당 학생수	학교수	학교당 학급수	학급당 학생수	교사당 학생수	학교수	학교당 학급수	학급당 학생수	교사당 학생수
유치원		1,398	2.1	31.6	19.8	1,322	2.6	30.4	19.2	1,160	3.1	26.6	19.2
초등학교	국립	463	48.2	51.2	44.9	2	27.0	34.5	26.7	2	28.5	29.4	23.0
	공립					478	40.5	38.3	30.6	491	39.7	37.4	30.0
	사립					39	21.7	41.8	36.7	39	21.1	36.2	31.8
중학교	국립	2	24	52.9	26.5	2	24.0	48.7	21.5	2	24.0	35.5	16.1
	공립	208	35.9	52.4	27.8	240	35.3	46.0	24.3	241	33.8	34.4	18.9
	사립	117	26.2	53.6	32.6	113	25.0	47.4	27.7	110	24.5	34.7	21.1
일반계고교	국립	2	15	55.3	20.5	2	16.5	48.1	17.6	2	16.5	48.9	18.4
	공립	55	35.3	56.1	23.8	57	36.4	50.5	22.1	58	35.6	46.3	21.3
	사립	120	41.9	55.9	31.1	129	36.6	50.9	26.1	140	36.3	46.9	25.0
실업계고교	공립	11	46.8	53.8	19.5	17	43.1	51.9	19.8	19	39.6	40.8	16.3
	사립	51	53.8	54.7	32.0	69	43.6	52.8	29.4	60	34.2	42.3	22.5

[표 XI-4] 문화시설 현황(1999)

공연시설		전시시설		지역문화복지시설		기타 시설	
종 류	시설수	종 류	시설수	종 류	시설수	종 류	시설수
종합공연장	9	박 물 관	64	구민회관	20	문 화 원	22
일반공연장	17	미 술 관	16	복지회관	87	국 악 원	1
소공연장	61	화 랑	223	청소년회관	23	전수회관	3
영 화 관	154	전 시 실	29	-	-	-	-
계	241	계	332	계	130	계	26

자료 : 서울시, 서울통계연보, 2000.

- 시설공급은 전반적으로 증가하였으나, 시설입지가 지역적으로 편중되어 모든 시민들이 동일한 서비스 접근권을 누리고 있지 못하다.
  - 의료시설은 도심부를 제외하고는 강남, 서초, 송파 등 고소득층 밀집지역에 많이 분포하고 있어, 의료시설 및 인력분포의 지역간 불균형 현상이 나타난다.
  - 교육시설 가운데 초등학교와 일반계 고등학교는 강북지역이, 중학교와 실업계 고등학교는 강남지역에서 학급당 학생수가 더 높다.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 은평, 도봉, 광진구 등 인구가 밀집된 강북지역의 학급당 학생수가 상대적으로 높아 초등학교 부족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 대규모 시설 중심의 시설 투자로 소생활권 단위에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하다.
  - 생활문화·복지시설을 전시효과 중심의 대규모로 공급함으로써 소생활권 단위에서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및 프로그램이 부족하다.
  - 예를 들어, 구민회관, 구민체육센터, 문화원 등은 구별 1개소가 공급기준이며, 사회복지시설 가운데 대표적인 이용시설인 복지관들도 구 단위의 대규모 시설로 건립되고 있다. 특히 사회복지관은 시설공급에 지역간 편차가 나타난다.
- 사회적 서비스는 전문적 대인(對人)서비스로 전문인력의 확보가 필수적이나, 관련 분야 인력이 양적으로 부족할 뿐 아니라 전문성도 부족하다.
  - 복지수요가 노인, 장애인, 아동 등 가정복지 분야까지 확대되었으나,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여전히 저소득 가구 수 기준으로 인력이 배치되어 효과적인 복지서비스 공급이 불가능하다.
  -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의 일선기관인 보건소의 전문인력도 부족한 상황이다. 주요 인력인 간호직도 1999년 구 평균 24명으로 건강증진센터로써의 기능을 수행하기에 한계가 있다.
  - 점차 중요성이 강조되는 문화 및 평생교육 분야 전문인력이 전무하며, 상담인력도 크게 부족하다.

[표 XI-5] 구별 시설분포 현황(2000)

구분	의료시설		교육시설(초등학교)			문화·복지시설					
	1,000인당 의료인수	1,000인당 병상수	학교수	학생수	학급당 학생수	구민 회관	구민 체육센터	공공 도서관	사회 복지관	노인종합 복지관	청소년 수련관
계	6.9	5.2	532	759,443	37.3	20	13	27	88	20	13
종 로	29.3	19.1	14	11,671	33.0	-	1	3	1	1	-
중	28.5	17.4	12	11,693	34.2	1	-	-	2	1	1
용 산	9.4	6.7	15	13,763	33.8	1	-	2	1	-	-
성 동	6.9	5.8	15	23,648	37.2	1	1	1	2	1	-
광 진	6.0	6.7	20	29,926	39.0	-	-	-	3	-	-
동대문	11.8	10.0	20	26,436	36.0	1	1	1	2	-	-
중 랑	2.6	3.2	21	37,687	38.5	1	1	1	4	1	1
성 북	6.0	4.5	24	31,222	36.3	1	1	-	4	1	-
강 북	3.4	3.0	12	20,781	37.0	-	-	-	3	1	1
도 봉	3.7	3.7	21	36,246	39.4	1	-	1	1	1	-
노 원	5.5	4.5	40	55,466	37.4	1	1	1	9	1	1
은 평	3.3	4.1	23	37,359	41.1	1	-	-	3	1	-
서대문	10.3	5.7	18	24,993	37.5	1	1	1	2	-	-
마 포	3.4	1.8	20	24,704	36.9	-	-	2	2	1	-
양 천	4.9	3.4	25	38,165	38.2	1	-	1	5	1	1
강 서	4.0	2.1	32	44,075	38.4	1	1	1	10	1	1
구 로	4.7	3.3	20	29,761	36.7	1	1	3	1	1	-
금 천	3.1	2.6	16	22,033	36.5	-	1	1	2	1	-
영등포	11.8	9.5	20	29,107	36.5	1	-	1	1	1	1
동 작	3.6	2.2	18	28,694	37.5	1	-	1	6	1	1
관 악	3.0	2.0	19	32,532	37.6	1	1	-	5	1	1
서 초	8.1	5.6	20	22,687	35.4	1	1	1	4	1	-
강 남	13.9	8.0	30	35,151	36.0	1	1	2	3	-	2
송 파	8.0	6.0	33	51,456	37.1	1	-	1	7	1	1
강 동	5.5	5.3	24	40,187	37.4	1	-	2	2	1	1

자료 : 서울시, 서울통계연보, 2000; 서울시 교육청, 서울교육통계연보, 2000 서울시 내부자료

[표 XI-6] 공공복지 및 보건인력 현황(2001)

구 분	총인력(명)	전문인력 1인당			
		대상가구수	대상자수	총가구수	총인구수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동사무소)	727	112	268	11,900	35,107
방문간호사(보건소)	183	501	963	16,993	54,072

자료 : 서울시 내부자료

[표 XI-7] 보건소 인력현황(1999)

구 분	계	의 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기사	의료직	간호직	보건직	행정직	기 타
서울시	2,063	141	24	7	197	178	592	255	285	384
구평균	82.5	5.6	1.0	0.3	7.9	7.1	23.7	10.2	11.4	15.4

자료 : 서울시, 서울통계연보, 2000 서울시 내부자료, 2000

2) 서비스 및 프로그램

- 사회분야에 대한 관심과 투자는 늘어나고 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으로 취약계층 최저생계보호 및 자활지원사업이 강화되었고, 보건복지국 내에 장애인복지과와 노인복지과를 신설하여 다양한 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서울시의 2001년 일반회계 예산은 전년도 대비 17.5% 증가한 반면, 사회개발분야 예산은 26.8% 증가하였으며, 서울시 총예산 대비 구성비도 2000년 13.6%에서 2001년 14.7%로 증가하였다.
- 복지사업의 유형은 선진국 수준으로 다양하나 그 대상집단이 요보호·저소득층 등으로 제한적이며, 지원수준도 최저생활을 위한 보충적 수준에 불과하다.
  - 인구 및 가족구조의 변화로 사회적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모든 계층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서비스가 저소득층을 사업대상으로 한정하고 있다.
  - 빈곤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기초생활보장사업도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으로 수혜집단이 양적으로 증가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전 인구의 1.8%에 불과하다.
  - 지원수준도 미약하여 최저생활을 위한 보충적 서비스에 제한되며, 인간적 삶을 유지하기 위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표 XI-8] 기초생활보호 대상인구

구분 \ 연도	1989	1994	1999	2000	
				총수급자	조건부수급자
가구수	60,250	44,988	36,986	80,556	8,544
인구수	194,377(1.8%)	123,304(1.1%)	80,146(0.8%)	178,605(1.8%)	10,379

주 : 1989～99년 생활보호대상자, 2000년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임. (%)는 전체인구 대비 구성비

- 보건·복지분야는 사후치료적 서비스 중심의 정책으로 예방적·자립지원적 사업이 부족하다.
  - 문제발생후의 사후치료적 서비스에 중점이 주어지는 반면, 상담·교육·정보제공 등 예방적 서비스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관련 시설·인력·프로그램·재정투자가 크게 부족하다.
  - 저소득층 대상 사업도 경제적 지원 등 안전망적 복지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직업훈련, 직업상담, 취업알선 등 생산주체로써 자립·자활할 수 있는 능력개발을 위한 지원서비스가 부족하다.

- 도시경쟁력 차원에서 고도(古都) 서울시의 문화자원 활용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서울시의 문화적 정체성을 찾지 못하고 있다.
  - 전통적 문화자원 및 프로그램, 인력 등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여 서울의 전통성과 역사성을 상실하고 있다.
  - 세계화 추세에 따라 문화적 정체성이 크게 흔들리고 있으며, 600년 역사의 풍부한 문화자원과 도심공간 활용전략의 적극적 개발이 필요하다.
- 평생교육법의 제정과 함께 서울시도 학교중심 교육체계에서 평생학습 체계로 개편을 시도하고 있으나 기반시설 및 전달체계가 정비되지 못하고 있다.
  - 평생학습에 대한 개념정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관련업무가 교육청과 서울시로 분산되어 있다.
  - 기반시설 및 전문인력이 갖추어지지 못해 기존의 복지관, 구민회관 등에서 실시하던 문화복지사업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 평생학습에 대해서는 학력 및 소득수준에 따라 접근성에 차이가 나타나 교육소외계층에 대한 지원계획이 필요하며, 여성, 노인, 저소득층은 특히 정보화 측면에서 소외계층으로 대두된다.
- 청소년 정책이 소외계층 청소년의 보호 및 복지정책에서 일반 청소년의 여가·문화·사회참여 정책으로 확대되고 있다.
  - 시설이나 제도 등 하드웨어 개발은 많이 이루어졌으나, 운영 프로그램 등 소프트웨어 개발이 부족하여 사업의 효과성·효율성이 낮다.
  - 또한 시설이나 관련 행정부서간의 네트워크 체제가 없어 정책 효과성이 낮다.
-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투자가 부족하며, 공공과 민간의 서비스 차별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 공공재원의 투자우선순위가 시설 설치에 주어져 있으며,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투자는 부족하다.
  - 유사사업에 대해 시·구·동 단위 프로그램 간 위계가 없이 혼재되어 있으며, 평생학습, 시립병원, 문화복지시설 등 공공과 민간의 프로그램 차별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 소프트웨어 개발의 부재로 국제적인 도시의 위상에 걸 맞는 세계적인 문화예술 향수기회가 없으며, 생활문화시설의 프로그램도 획일적이어서 다양한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 새롭게 성장하고 있는 테크노 문화를 비롯한 독립·하위문화에 대한 육성 및 보호 정책이 필요하며,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즐기고 참여할 수 있는 시민 문화프로그램 개발이 절실히 요구된다.

3) 전달체계

- 서비스 전달체계가 분산되고 지역사회 네트워크가 형성되지 않아 서비스 연계·조정기능이 미약하다.
  - 유사 서비스간의 조정기능이 미약하여, 서비스의 중복 또는 누락현상이 나타나며 효율적인 자원활용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 역동적인 지역 네트워크를 통한 관련서비스의 연계기능이 부족하여 서비스 효과성을 극대화하지 못하고 있다.
- 자원봉사활동 등 민간자원 활용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기반이 구축되어 있지 않다.
  - 문화·복지서비스는 공공에서 전담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민간자원의 활용이 필요하다. 그러나 자원봉사인력이나 민간재원 등의 민간자원 활용이 저조하다.
  - 지역공동체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 재정, 시설, 조직 등의 기본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점도 민간자원 참여기회를 제한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 기초정보에 대한 접근권이 제한적이다.
  - 문화·복지서비스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서비스이기 때문에 생활권 단위의 정보구득이 필수적이나, 정보제공을 위한 시설 및 인력은 물론 실태파악 등 기초자료도 갖추어져 있지 않다.

2. 여건변화 전망

1) 인구구조의 변화

-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노인대상 사회서비스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건강한 노인을 위한 여가, 취업, 사회참여, 주택, 평생학습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 반면에 수명연장은 병약한 노인인구의 증가도 초래함에 따라, 노인부양, 보건의료, 치매관련 서비스, 가족 및 시민대상 노인부양 및 지원방법 교육 등의 수요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 경제활동인구의 감소로 여성인력, 노인인력의 활용 필요성이 높아질 것이다.
  - 여성 및 노인의 사회참여 기회확대 및 취업직종 개발수요가 늘어난다.
  - 여성의 사회참여로 가사 및 자녀양육 등에 대한 사회서비스 수요가 증대할 것이다.

2) 가치관의 변화

- 생활양식의 변화는 다양한 사회서비스 수요를 발생시킨다.
  - 여가시간의 증가 및 중요도 증가로 문화 및 여가활동, 평생학습 등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 개인화, 개별화로 인한 사회공동체가 붕괴하고, 네트워크 중심의 다원공동체가 확산되고 있다.
  - 연령계층, 소득계층, 사회계층별 하위문화가 다양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 세계시민의 등장으로 외국인을 고려한 서비스, 외국문화의 수용과 이해가 필요해진다.
- 이혼 등의 증가로 가족형태가 다양해지고, 여성의 사회활동 증가로 가족기능의 사회화가 나타난다.
  - 혈연중심의 핵가족의 해체가능성이 커지며, 청소년 및 노인 단독가구의 증가가 예상된다.

- 이에 따라 가정해체를 예방하기 위한 가족지원 시스템 강화가 필요하고, 가족간의 상호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 수요도 증대되고 있다.
- 가정 내에서 해결되던 보육, 노인부양, 교육 등 가족기능을 대행 또는 보완해주는 사회서비스 수요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입시위주의 학교교육에서 중도 탈락하는 청소년 문제가 증대되고, 세대간의 가치관 차이가 커짐에 따라 가족내, 사회내의 세대간 갈등이 커질 우려가 있다.

- 이는 학교 밖 활동에 대한 지원, 청소년 아르바이트, 대안학교, 청소년 직업훈련 등 청소년 정책의 다양화 필요성을 의미한다.

3) 분배구조의 악화

• 분배구조가 악화되어 빈부격차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소외계층 문제는 지속적인 사회문제로 남으며, 빈곤노숙자 문제 등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지역간(자치구별), 계층별, 성별, 직종별, 연령별 편차가 심화될 것이다.

• 실업문제가 다양해지며, 취업과 실업상태가 주기적으로 반복될 가능성이 커진다.

- 청소년 실업문제가 심화되며, 현재 전체 실업률에 비해 청년실업(15～24세) 비율이 높다.
- 청소년, 여성, 노인 등 집단특성을 고려한 취업 및 실업문제 해결방안이 필요해진다.

• 고용구조가 임시·일용직의 비율이 증대되는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4) 문화의 중요성 대두

• 삶의 질 향상 차원에서 문화에 대한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 소득수준 향상으로 문화에 대한 수요가 점증하고 있으며
- 다양한 문화활동과 예술활동에 대한 참여 등의 욕구가 증가하고 있다.

• 도시경쟁력 차원에서 문화는 점차 핵심적인 경쟁력 요소가 되어가고 있다.

- 문화를 기반으로 도시의 산업구조가 변화하고 있으며, 문화가 곧 경쟁되는 '문화경쟁력' 의 시대로 나아가고 있다.
- 이에 따라 문화의 자원화와 산업화를 위한 정책이 요구된다.

5) 정보통신 발달 및 지식기반사회의 도래

- 정보화 사회의 도래는 생활행태에 영향을 미친다.
  - e-lifestyle의 확산으로 e-commerce, e-citizen, cyber community 형성이 활발해지며, 지리적 공간을 넘어서 네트워크 사회 또는 커뮤니티 사회가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 정보화 사회는 이동성이 증대되면서 수도권 광역화로 물리적 공간의 재편이 일어날 수 있다. 수도권 광역화는 도심 공동화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도심의 문화환경 보존 필요성이 증대된다.
  - 반면에, 여성,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소외계층의 디지털 격차가 심화되어 계층간 정보 및 소득격차가 커질 수 있다.
- 직업생활이 평생직장 개념에서 평생직업 개념으로 전환된다.
  - 일을 중심으로 개인의 생활과 정체성이 구성될 가능성이 커지며, 직장이동의 빈도수가 늘어난다.
  - 변화하는 직업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직업재훈련 기회가 필요해지며, 이는 평생학습사회의 도래를 의미한다.

3. 미래상

“더불어 함께 사는 풍요로운 서울”

- 사회의 다양화 과정에 수반되는 도시 내 주민들 간의 갈등을 조정하여 모든 주민들이 공평하고 풍요롭게 살 수 있는 도시환경의 창출을 목표로 하며, 동시에 다양한 계층간의 사회적 통합과 다양성을 도모하는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는 서울을 만든다.
- 도시 내의 사회적 약자는 사회·경제적으로 상대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도시의 안정성과 건전성은 도시 내에서 사회적 약자가 얼마나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가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삶의 질을 골고루 높이기 위하여 보다 취약한 계층인 사회적 약자에 더 높은 관심과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
- 동시에 소득수준의 향상과 생활양식의 변화에 따른 다양한 사회적 수요에 대처한다. 삶의 질 향상 차원에서 증대되는 여가문화수요, 평생학습사회에 대비한 지원체계, 예방적 차원의 시민건강 증진사업 등 기초생활보장 수준을 한 단계 넘어선 시민생활의 질적 향상과 다양성을 추구한다.

4. 계획방향

1) 구성체계

- 사회개발부문에는 i) 보건·의료, ii) 사회복지, iii) 교육, iv) 문화·체육 등 4개 부문이 포함된다.
- 본 계획에서는 위의 4개 부문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모든 서울시민의 “well-being”을 공통목표로 4개 부문을 통합·연계적으로 계획한다.

2) 계획방향

- 시민생활 향상을 목표로 하는 사회분야의 계획은 2011년 계획의 연장선 상에서 수립된다.
  - 사회분야에서 개선되어야 할 과제들은 특별하고 새로운 것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도 유사한 형태로 존재할 것이다.
  - 현재 우리 사회에서 부딪히는 사회분야 문제들은 (심지어 저소득층의 빈곤문제까지도) 20년 후라고 해서 완전히 해결된다고 볼 수 없다.
  - 따라서 사회개발계획은 2011년 계획을 바탕으로, 주요 변화경향을 반영하는 수준에서 계획되었다.
- 문화·복지 등 사회분야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변화경향은 아래와 같으며, 본 계획도 이러한 경향을 기본방향으로 계획내용을 구성한다.
  - 소프트웨어 중심 : 문화·복지의 향상을 위해서는 시설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서 운용될 소프트웨어 개발이 더욱 중요하다. 따라서 2011년 계획과 비교하여 시설계획보다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내용이 많이 추가되었다. 특히 서비스의 전달체계 및 정보·인력 등 기반구축에 대한 내용을 강화하였다.
  - 보편적 서비스 : 요보호·소외계층 중심의 제한적 서비스에서 일반주민의 일상생활을 지원하고 질적 향상을 추구하는 보편적 서비스에 대한 내용으로 확대하였다. 평생학습, 상담, 재가복지서비스, 여가생활지원 등 전체 서울시민의 생활향상을 목표로 하는 내용이 강조되었다.
  - 지역사회 중심의 접근 : 문화·복지분야 서비스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서울시를 하나의 단위로 계획·공급되기보다는 지역사회 중심으로 생활권

단위의 접근이 효과적이다. 따라서 생활권 단위의 소규모 시설공급, 지역단위 서비스 거점 확보 및 네트워크 구축 등이 강조되었다.

- 민간참여 강조 : 모든 공공서비스 가운데 민간부문의 참여가능성이 가장 높은 분야가 문화·복지분야이다. 자원봉사, 시민참여 지역축제, 지역사회 공동체 활성화 등 민간참여 지원체계를 강화하였다.

• 문화·복지 등 사회분야는 자치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치구 단위 계획 수립 시에도 위의 4가지 계획방향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 지역성 : 각 자치구별 수요자 특성 및 요구사항, 서비스 공급수준 등 차별화된 특성을 반영한다.
- 종합성 : 보건·복지·문화·교육 등 사회부문은 상호 연관성이 높으므로, 종합적으로 접근함으로써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서비스 공급의 효과성을 극대화한다.
- 주민참여 : 계획단계에서 사후평가에 이르기까지 실소비자인 지역주민의 참여를 유도한다.
- 자원활용 : 개인, 단체 등 민간자원과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5. 목표체계 "더불어 함께 사는 풍요로운 서울"

목 표	과 제	전 략	시 책	단기	중장기	정책지표
1. 모든 시민에게 인간다운 기본생활 보장	최저 주거권 보장	• 최저 주거기준 확보			✔	지표 1. 공공의료 기관
		• 노인, 장애인 등을 위한 다양한 주택유형 개발	- 노인, 장애인 특성을 고려한 주택 공급		✔	
		• 저소득층 주거문제 해소	-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 - 비닐하우스 거주자 대책 마련		✔	
	기본적인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 공공의료기관의 의료 사각지대 지원 강화	- 노숙자, 쉼터거주자 건강검진 - 보건소 시설 및 인력의 활용 - 시립병원의 공공기능 강화		✔	
		• 정신보건센터 확대	- 센터의 양적 확대 - 보건소 및 전문의료기관과 연계 - 정신장애인 사회복귀시설 확충		✔	
		• 응급의료체계 정비	- 환자발견 및 후송체계 정비 - 119 구급체계 확충 - 독거노인 상시모니터링 체계 구축		✔	지표 2. 노인요양 시설
		• 노인·장애인 요양시설 확충 및 전문화	- 노인보호 관련체계 정비와 전문화 - 요양원, 노인병원, 치매요양시설 확충 - 장애인 재활시설 확충	✔		지표 3. 장애인재활시설
	이동권 및 접근권 확보	• 도시 내 barrier-free 환경 조성	-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 보행환경 정비	✔		지표4. 장애인 이동서비스
		• 장애인 교통서비스 정비	- 장애인 종합교통대책 수립 - 장기적으로 일반버스의 초저상버스화 - 지하철 편의시설 확충·정비 - 무료셔틀버스를 각 구별로 확대운영 - 복지택시 운영 실시	✔		
		• 주택 내 barrier-free 환경 정비	- 노인, 장애인 특성을 고려한 주택제공 - 주택개조 비용 지원		✔	
		• 청각/언어장애인, 시각 장애인의 정보통신권 확보	- 청각장애인용 컴퓨터, 팩스, 전화기 보급 - 시각장애인용 컴퓨터, 점자도서 보급		✔	지표 5. 취약계층 보호시설
	취약계층 보호기능 강화	• 청소년 보호	- 가출청소년 쉼터 확충 - 가출청소년 상담기능 강화	✔		
		• 취약여성 보호	-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쉼터 확충 - 성폭력·가정폭력 방지센터 설치 - 피해자 신고 및 상담체계 정비	✔		
		• 기타 취약계층 보호	- 노숙자, 쪽방거주자 서비스 제공 - food bank 사업 내실화		✔	
		• 외국인 근로자 보호	- 외국인 근로자 실태파악 - 인권보호를 위한 지원체계 마련		✔	

목 표	과 제	전 략	시 책	단기	중장기	정책지표
2. 개인·가족·공동체의 역량 강화	자활지원 사업의 활성화	• 자활사업 인프라 구축	- 자활후견기관 확충 - 기초생활보장기금 확충	✔		지표 6. 자활사업
		• 자활지원사업의 내실화·다양화	- 민간자원 참여형 자활사업 실시 - 제3섹터형 자활사업 실시 - 사회적 일자리 확대	✔		
		• 직업훈련의 내실화	- 시립직업전문학교 기능 강화 - 기초기술교육의 무료제공 - 실업계 고등학교 지원		✔	
		• 실업대책의 다양화	- 청소년 실업대책 수립 - 여성특화 실업대책 수립 - 취업알선 시스템 구축		✔	
	동등한 사회참여 기회의 제공	• 장애인 사회적응 훈련	- 중도장애인 재활교육 실시 - 정신장애인 사회복귀 시설 및 프로그램 확대 - 고등교육과 계속교육을 위한 지원 - 장애유형별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		✔	지표 7. 장애인 자립지원
		• 노인인력의 재활용	- 노인 자원봉사 활성화 방안 모색 - 노인 취업기회 확대 - 고령자 취업알선센터 확충 및 활성화		✔	
		• 청소년의 사회경험 기회 제공	- 아르바이트, 사회참여 체험 프로그램 확대 - 청소년 고용안정 보장 - 정규학교 중도탈락자를 위한 대안학교 지원		✔	지표 8. 청소년 시설
		• 정보화 격차 해소 및 양성 평등교육 실시	- 정보화 소외계층을 위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제공 - 남녀 양성평등 교육의 확대		✔	
	상담 및 예방서비스 확 대	• 상담기능의 강화 및 다양화	- 학교사회사업 실시 - 청소년 상담시설 확대 - 가정문제 상담시설 및 인력확충 - 직업훈련 및 평생학습 상담체계 강화		✔	
		• 예방적 보건·의료 서비스 확대	- 모자보건사업 내실화 - 장애예방 교육(음주운전, 산업재해 방지 등) 확대 - 성인병, 만성병 예방교육 및 검진확대		✔	
	가족기능 지원 강화	• 재가복지 서비스 확대	- 가정봉사원, 방문간호 사업 확대실시 - 주간 및 단기보호시설 확충	✔		지표 9. 방문간호 인력
		• 유료 복지시설의 확대	- 유료 요양시설, 치매노인시설 확충 - 민간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	
		• 아동보육·청소년 서비스 보강	-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확대 - 장애아동 및 영아보육서비스 확대 - 청소년 여가시설 및 프로그램 확대	✔		지표 10. 보육사업
	지역사회 공동체 활동 지 원	•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	- 자원봉사학교 및 교육 활성화 - 자원봉사축제, 사회적 인정제도 실시 - 자원봉사 정보관리 시스템 구축		✔	
		• 주민참여 지역프로그램 확대	- 지역연구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 - 바자회, 공동구매 등 공동사업 확대 - 지역축제, 평생학습 페스티벌 개최		✔	
		• 동사무소 주민자치 기능 활성화	-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의 개편 - 의사결정과정에 주민참여 공식화를 위한 제도 정비		✔	
		• 지구별(소지역별) 공동체 문화의 보호와 육성	- 공공 문화공간 확보(골목가꾸기, 공원조성, 담장허물기 등) - 사이버 공동체 문화조성		✔	

목 표	과 제	전 략	시 책	단기	중장기	정책지표
3. 건강하고 풍요로운 시민생활 기반 조성	평생건강 관리체계 확립	• 보건소의 건강센터 기능 강화	- 저소득층·아동대상 구강보건사업 실시 - 기초체력 검진기능 강화 - 건강교육 및 질병예방 교육실시	✔		
		• 건강생활습관 개선교육 확대	- 흡연, 음주, 영양, 운동 등 건강교육 강화 - 생활체육 활성화		✔	
		• 노인건강증진 사업실시	- 노인대상 무료건강진단 실시		✔	
	평생학습 체계 구축	• 평생학습 기반시설 정비	- 학교시설 정비 및 활용 - 평생학습 정보센터 개설 - 평생학습업무 전담 행정기구 설치		✔	지표 11. 학교시설
		•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	- 인터넷 등 통신기술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 중고생 진로지도 프로그램 강화 - 정보화 관련교육 활성화		✔	
		• 평생학습 참여활성화를 위한 지원강화	- 소외계층 평생학습을 위한 재정지원 강화 - 개인별 학습구좌 개설 지원 - 고등교육 기회 개방 및 계속교육 지원		✔	
	여가 및 문화활동 지원	• 문화예술활동 지원	- 문화예술진흥기금의 확대 운영 - 공연 및 전시예술활동 지원 강화 - 기업메세나 및 예술지원 활동에 대한 정책적 지원 강화	✔		
		• 여가 및 문화시설 확충	- 문화복지시설 정비 및 확충 - 문화·체육시설 시설복합화 및 집적화 - 전시공연장 정비 및 확충 - 장애인, 노인, 청소년 등 특수계층을 위한 여가, 체육, 문화공간 확보	✔		지표 12. 문화·여가시설
		• 여가·문화 프로그램 개발	- 체육 및 건강 프로그램의 활성화 - 생활문화 프로그램의 다양화 - 문화축제 및 행사, 이벤트 지원		✔	
	시민참여형 축제문화 정착	• 시민축제의 활성화	- 세계적인 도시문화 축제 개최 - 시민의 날 행사 등 시민축제 활성화		✔	
		• 거리문화 공간 및 지구별 문화환경 조성	- 거리를 활용한 문화공간 조성 - 지하철 및 거리 문화활동 지원 -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내실화 - 다양한 문화지구 선정 및 문화벨트화	✔		
		• 지역축제 및 문화활동 지원 강화	- 지역축제에 대한 지원 강화 - 주민참여 행사 및 프로그램 개발 - 마을단위 축제의 개발		✔	
	역사 문화유산의 보존	• 전통문화유산의 보수·유지	- 문화재 집중관리 - 북촌 한옥마을 등 전통마을 보존 - 근대적 건축물 및 문화유산의 보존을 위한 종합적 유적 정비 추진		✔	
		• 전통 문화예술활동의 발굴과 지원	- 무형문화재의 발굴과 보존 - 전통문화 예술행사 지원 강화 - 전통문화 예술인 지원 강화		✔	
		• 전통문화자원의 보전 및 관광자원화	- 전통문화자원을 활용한 관광프로그램 개발 - 역사문화 탐방로 조성 및 운영 내실화 - 역사문화지구의 선정 및 지원프로그램 강화	✔		
	화장중심의 장묘문화 확산	• 장묘시설 확충·정비	- 장묘정책 중장기 계획수립 - 장묘시설 수급전망 및 공급계획 수립 - 장묘시설 고급화, 다양화		✔	지표 13. 화장률 및 화장시설
		• 장묘의식 개선사업 추진	- 홍보 및 교육사업 강화 - 시민운동 지원		✔	

목표	과제	전략	시책	단기	중장기	정책지표
4. 효율적인 지역사회 서비스 전달체계 구 축	역동적인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 동사무소를 지역(서비스) 센터로 활용	- 지역사회 보건, 복지, 문화, 교육 등 서비스의 중심센터로써의 역할 정립		✔	
		• 지역사회 협의체 구축	- 지역사회의 복지, 보건, 문화, 교육분야 민간활동 주체간의 협의체 구축		✔	
		• 적극적인 민·관 협조 체계 구축	- 민관 협조체계 구축 - 행정기관 간 협조체계 구축		✔	
	생활권 단위의 서비스 접근성 제고	• 소규모 생활권 단위 시설 확대	- 소수 대규모 시설 공급방식을 지양하고, 생활권 단위의 다수의 소규모 시설로 공급 - 신규시설 공급은 지양하고, 기존시설을 적극 활용		✔	
		• 지역정보시스템 구축	- 보건, 복지, 문화, 평생학습 등 일상 생활관련 정보망 구축 - 동사무소 지역(서비스)센터를 정보제공 중심으로 활용		✔	
		• 자치구 단위의 계획 수립	- 자치구 단위로 서비스 수요 및 공급계획 수립		✔	
	전문인력 양 성	• 지역사회서비스 전문인력 양성	- 동사무소 지역(서비스)센터의 중심인력 양성		✔	
		• 분야별 전문인력 확충 및 양성	-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확충 - 평생학습 지도자 및 시설종사자 교육 - 문화예술 관련 단체 육성 - 문화재 및 지역유산 보호 인력 양성		✔	
		• 자원봉사 인력의 활용	- 평생학습과 자원봉사 활동연계 - 단순노력봉사로부터 문화, 교육 등 전문분야 자원봉사자 발굴 - 자원봉사자 정보체계 구축		✔	
	기초조사 및 자료구축	• 보건·복지 기초조사 실시	- 정기적인 보건지표 조사 실시 - 정기적인 사회복지 센서스 실시		✔	
		• 문화기초자료 구축	- 정기적인 문화지표 조사 - 문화분포 지도 작성		✔	

목표1 모든 시민에게 인간다운 기본생활 보장

모든 시민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으로 최소한의 기초생활 안정을 보장한다.

과제1 최저 주거권 보장

최소한의 인간다운 주거환경을 제공한다.

전략 1. 최저 주거기준 확보

인간적 삶을 위해 필요한 최저 주거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주택건설기준으로 적용한다.

전략 2. 노인, 장애인 등을 위한 다양한 주택유형의 개발

신체적 행동제약이 있는 노인이나 장애인들의 생활패턴에 맞는 다양한 주택유형을 개발하여 생활편의를 도모한다.

시책 1. 노인, 장애인 특성을 고려한 주택 공급

전략 3. 저소득층 주거문제 해소

저소득층 대상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비닐하우스 거주자 등 비정상적 주거생활을 유지하는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대책을 마련한다.

시책 1.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

시책 2. 비닐하우스 거주자 대책마련

과제2 기본적인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하여 보건의료서비스를 공급함으로써 누구든지 생활유지에 필요한 기본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전략 1. 공공의료기관의 의료사각지대 지원 강화

노숙자 등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인구집단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보건소 등 공공의료시설이 일차적으로 담당하도록 한다.

시책 1. 노숙자, 쉼터 거주자 건강검진
시책 2. 보건소 시설 및 인력의 활용
시책 3. 시립병원의 공공기능 강화

전략 2. 정신보건센터 확대

증가하는 정신장애인의 재가보호를 위하여 지역 정신보건센터를 확충한다.

시책 1. 센터의 양적 확대 : 2011년까지 구별 1개소 확보
시책 2. 보건소 및 전문의료기관과 연계 : 광역정신보건센터 확보
시책 3. 정신장애인 사회복귀시설(그룹홈, 공동작업장 등) 확충

전략 3. 응급의료체계 정비

혼자 사는 노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등 요보호집단을 위한 응급의료체계를 정비한다.

시책 1. 환자의 발견 및 후송체계 정비
시책 2. 119 구급체계 확충
시책 3. 독거노인의 상시모니터링 체계 구축

전략 4. 노인·장애인 요양시설 확충 및 전문화

더 이상 가족 내에서 부양이 어려운 중증 노인, 장애인 등을 수용·보호할 수 있는 요양시설을 확충하고 분야별 전문화를 추구한다.

시책 1. 노인보호체계 정비와 전문화 : 급성질환 치료병원 중심에서
요양기능으로 전환
시책 2. 요양원, 노인병원, 치매요양시설 등 확충
시책 3. 장애인 재활시설 확충

과제3 이동권 및 접근권 확보

장애인·노인 등 사회적 약자들도 동등한 사회참여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기본권 차원에서 이동권, 접근권을 제공한다.

전략 1. 도시 내 barrier-free 환경 조성

장애인도 사회구성원으로 모든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하며, 그 전제조건으로 장애인들이 모든 도시 내 이동이 가능하도록 장애없는 도시환경을 조성한다.

시책 1.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시책 2. 보행환경 정비

전략 2. 장애인 교통서비스 정비

기본권으로써의 이동권, 교통권 확보를 위해 장애인 교통서비스를 정비한다.

시책 1. 장애인 종합교통대책 수립

시책 2. 장기적으로 일반버스에 초저상버스화

시책 3. 지하철 편의시설 확충·정비

시책 4. 무료셔틀버스를 각 구별로 확대운영

시책 5. 복지택시 운영 실시

전략 3. 주택 내 barrier-free 환경 정비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나 노인들의 가정 내 이동 및 생활편의를 위해 주택내의 시설정비도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한다.

시책 1. 노인, 장애인 특성을 고려한 주택제공

시책 2. 주택개조 비용 지원

전략 4. 청각·언어장애인, 시각장애인의 정보통신권 확보

동등한 정보접근권 확보를 위한 지원서비스를 강화한다.

시책 1. 청각장애인용 컴퓨터, 팩스, 전화기 보급

시책 2. 시각장애인용 컴퓨터, 점자도서 등 보급

과제4 취약계층 보호기능 강화

특별보호가 필요한 취약계층에게 기본생계보장 및 자활기회를 제공한다.

전략 1. 청소년 보호

가출청소년이 더 나쁜 상태에 처하기 전에 초기 상담기능을 강화한다.

시책 1. 가출청소년을 위한 쉼터 확충

시책 2. 가출청소년 상담기능 강화

전략 2. 취약여성 보호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보호 및 예방사업을 확충한다.

시책 1.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 쉼터 확충 : 2020년까지 구별 1개소 확보

시책 2. 성폭력·가정폭력 방지센터 설치 : 2020년까지 서울시 5개 권역별로 1개소 확보

시책 3. 피해자 신고 및 상담체계 정비

전략 3. 기타 취약계층 보호

노숙자, 쪽방거주자 등 취약계층의 보호서비스를 제공한다.

시책 1. 노숙자, 쪽방거주자를 위한 서비스 제공

시책 2. food bank 사업 내실화

전략 4. 외국인 근로자 보호

동남아 등지에서 유입되는 단순노동 외국 근로자의 기본적인 인권보호를 위한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시책 1. 외국인 근로자 실태파악

시책 2. 인권보호를 위한 지원체계 마련

목표2 개인·가족공동체의 역량강화(Empowerment)

개인의 자활 및 발전능력을 키워줌으로써 모든 시민들이 생산적인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가족과 공동체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개인·가족공동체가 주체적으로 함께 참여하는 복지사회를 구현한다.

과제1 자활지원사업의 활성화

저소득 개인 및 가족이 경제적으로 자활할 수 있는 지원사업을 확대한다.

전략 1. 자활사업 인프라 확충

자활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본적인 인프라를 확충한다.

시책 1. 자활후견기관 확충

시책 2. 점포 임대 및 사업자금 대여를 위한 기초생활보장 기금 확충

전략 2. 자활지원사업의 내실화·다양화

자활후견기관 중심의 자활사업을 내실화·다양화한다.

시책 1. 민간자원 참여형 자활사업 실시

시책 2. 제3섹터형 자활사업 실시

시책 3. 사회적 일자리 확대

전략 3. 직업훈련의 내실화

자활을 위한 기초교육 및 기술교육을 강화한다.

시책 1. 시립직업전문학교 기능 강화

시책 2. 기초기술교육의 무료제공

시책 3. 실업계 고등학교 지원

전략 4. 실업대책의 다양화

청소년, 여성 등 계층별 특성에 따른 실업대책을 수립한다.

시책 1. 청소년 실업대책 수립

시책 2. 여성특화 실업대책 수립

시책 3. 취업알선 시스템 구축

과제2 동등한 사회참여 기회의 제공

장애인, 노인, 여성 등 사회적 약자도 동등한 사회참여를 할 수 있도록 개인적 역량을 키워주고 사회적 여건을 조성한다.

전략 1. 장애인 사회적응 훈련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정신적, 기술적 적응훈련을 실시한다.

시책 1. 중도장애인 재활교육 실시

시책 2. 정신장애인 사회복귀 시설 및 프로그램 확대

시책 3. 고등교육과 계속교육을 위한 지원

시책 4. 장애유형별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

전략 2. 노인인력의 재활용

증가하는 노인인구의 소득을 보장하고, 노후인력을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시책 1. 노인 자원봉사 활성화 방안 모색
시책 2. 노인 취업기회 확대
시책 3. 고령자 취업알선센터 확충 및 활성화

전략 3. 청소년의 사회경험 기회 제공

청소년 아르바이트가 일반화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지원 및 보호서비스를 강화한다.

시책 1. 아르바이트, 사회참여 체험 프로그램 확대
시책 2. 청소년 고용안정 보장
시책 3. 정규학교 중도탈락자를 위한 대안학교 지원

전략 4. 정보화 격차 해소 및 양성 평등교육 실시

여성, 노인, 저소득층 등 정보화 소외계층을 지원하고, 남녀 양성평등 교육을 실시한다.

시책 1. 정보화 소외계층을 위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제공
시책 2. 남녀 양성평등 교육의 확대

과제3 상담 및 예방서비스 확대

사회서비스 수요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상담 및 예방 서비스를 확대한다.

전략 1. 상담기능의 강화 및 다양화

상담기능을 양적, 질적으로 개선하고, 학교사회사업 등 새로운 상담분야를 개척한다.

시책 1. 학교사회사업 실시
시책 2. 청소년 상담시설 확대
시책 3. 가정문제 상담시설 및 인력 확충
시책 4. 직업훈련 및 평생학습 상담체계 강화

전략 2. 예방적 보건·의료서비스 확대

예방적 서비스를 확대함으로써 사회적인 의료비용을 최소화한다.

시책 1. 모자보건사업 내실화
시책 2. 장애예방 교육(음주운전, 산업재해방지 등) 확대
시책 3. 성인병, 만성병 예방교육 및 검진 확대

과제4 가족기능 지원 강화

가족의 부양부담을 사회가 함께 부담함으로써 건강한 가정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전략 1. 재가복지 서비스 확대

재가복지서비스를 확대함으로써 노인 및 장애인 가족의 부양부담을 감소시킨다.

시책 1. 가정봉사원, 방문간호 사업 확대 실시
시책 2. 주간 및 단기보호시설 확충

전략 2. 유료 복지시설의 확대

중산층 요보호 노인이나 장애인들을 위한 유료복지시설을 확대하여, 수요에 부응하고 공공의 재정부담을 최소화한다.

시책 1. 유료 요양시설, 치매노인시설의 확충
시책 2. 민간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 유료복지시설 설립절차 간소화, 재정지원 등

전략 3. 아동보육청소년 서비스 보강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로 아동보호 기능을 사회적으로 지원하는 서비스를 강화한다.

시책 1.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확대
시책 2. 장애아동 및 영아보육서비스 확대
시책 3. 청소년 여가시설 및 프로그램 확대

과제5 지역사회 공동체 활동 지원

지역사회문제에 주민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공동체 의식을 고취하고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사회통합형 복지도시를 구현한다.

전략 1.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

자원봉사 활성화를 통해 민간자원을 활용하고 시민들의 참여의식을 고취한다.

시책 1. 자원봉사학교 및 교육 활성화
시책 2. 자원봉사 축제, 사회적 인정제도 실시
시책 3. 자원봉사 정보관리 시스템 구축

전략 2. 주민참여 지역프로그램 확대

지역사회 내에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한다.

시책 1. 지역연구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
시책 2. 바자회, 공동구매 등 공동사업 확대
시책 3. 지역축제, 평생학습 페스티벌 개최

전략 3. 동사무소 주민자치 기능 활성화

주민자치센터로 기능 전환한 동사무소 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을 활성화하여 명실상부한 주민자치센터로 개선한다.

시책 1.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의 개편 : 주민참여확대
시책 2. 의사결정과정에 주민참여 공식화를 위한 제도 정비

전략 4. 지구별(소지역별) 공동체 문화의 보호와 육성

소지역별 문화공동체 활동을 보호·육성하여 지역공동체 의식을 고취한다.

시책 1. 공공 문화공간 확보 : 골목가꾸기, 공원조성, 담장허물기
시책 2. 사이버 공동체 문화조성

목표 건강하고 풍요로운 시민생활 기반 조성

풍요롭고 건강하며, 활기찬 시민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기초생활보장 수준을 한단계 넘어선 시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추구한다.

과제1 평생건강관리체계 확립

생애주기별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사업을 확대함으로써 건강하고 활기찬 시민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다.

전략 1. 보건소의 건강센터 기능강화

공공의료기관인 보건소를 건강센터화 함으로써 시민의 기초건강증진에 기여한다.

시책 1. 저소득층 및 아동대상 구강보건사업 실시

시책 2. 기초체력 검진기능 강화

시책 3. 건강교육 및 질병예방 교육실시

전략 2. 건강생활습관 개선교육 확대

예방적 사업의 일환으로 건강생활습관 교육을 강화한다.

시책 1. 흡연, 음주, 영양, 운동 등 건강교육 강화

시책 2. 생활체육 활성화

전략 3. 노인건강증진 사업 실시

노인대상 건강증진사업을 확대한다.

시책 1. 노인대상 무료건강진단 실시

과제2 평생학습체계 구축

지식기반사회, 정보화 사회에 대비하여 모든 시민이 유아기에서 고령기까지 평생에 걸쳐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전략 1. 평생학습 기반시설 정비

평생학습을 실시하기 위한 기반시설을 정비한다.

시책 1. 학교시설 정비 및 활용
시책 2. 평생학습 정보센터 개설
시책 3. 평생학습업무 전담 행정기구 설치

전략 2.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

현재의 문화복지 프로그램 중심에서 기술 및 직업교육을 포함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시책 1. 인터넷 등 통신기술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시책 2. 중고생 진로지도 프로그램 강화
시책 3. 정보화 관련교육 활성화

전략 3. 평생학습 참여활성화를 위한 지원강화

모든 계층에서 평생학습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재정적·제도적 지원을 강화한다.

시책 1. 소외계층의 평생학습을 위한 재정적 지원 강화
시책 2. 개인별 학습구좌 개설 지원
시책 3. 고등교육 기회 개방 및 계속교육 지원

과제3 여가 및 문화활동 지원

일상생활 속에서 여가생활 및 문화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와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풍요로운 도시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다.

전략 1. 문화예술활동 지원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직·간접적인 지원을 통해 문화예술 활동의 활성화를 유도한다.

시책 1. 문화예술진흥기금의 확대 운영
시책 2. 공연 및 전시예술 활동 지원 강화
시책 3. 기업메세나 및 예술지원 활동에 대한 정책적 지원 강화

전략 2. 여가 및 문화시설 확충

시민들의 문화, 예술 향수기회를 늘리기 위해 기반시설을 정비·확충한다.

시책 1. 문화복지시설 정비 및 확충
시책 2. 문화체육시설을 시설복합화 및 집적화
시책 3. 전시공연장 정비 및 확충 : 박물관, 미술관, 음악당 등
시책 4. 장애인, 노인, 청소년 등 특수계층을 위한 여가, 체육, 문화공간 확보

전략 3. 여가문화 프로그램 개발

여가 및 문화 프로그램의 개발을 통해 점차 다양화하는 여가 및 문화활동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에 대응한다.

시책 1. 체육 및 건강 프로그램 활성화
시책 2. 생활문화 프로그램의 다양화
시책 3. 문화축제 및 행사, 이벤트에 대한 지원

과제4 시민참여형 축제문화 정착

서울시민이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문화축제를 통해 실질적인 문화향수기회를 제공하고 문화도시로써 서울의 이미지 개선 및 문화적 정체성을 확보한다.

전략 1. 시민축제의 활성화

서울의 상징적인 도시문화 축제를 개최함은 물론 시민들이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시민문화 행사 및 축제를 개최, 시민과 함께 하는 서울의 문화를 만들어간다.

시책 1. 세계적인 도시문화 축제 개최

시책 2. 시민의 날 행사 등 시민축제 활성화

전략 2. 거리문화 공간 및 지구별 문화환경 조성

다양한 거리 공간을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고 지구별로 특징있는 문화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서울의 문화 및 정체성을 확보한다.

시책 1. 거리를 활용한 시민문화공간의 조성

시책 2. 지하철 및 거리 문화활동 지원

시책 3.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의 내실화

시책 4. 다양한 문화지구의 선정 및 문화벨트화 유도

전략 3. 지역축제 및 문화활동 지원 강화

지역축제 및 마을단위 활동에 대한 지원을 통해 주민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문화환경을 조성한다.

시책 1. 지역축제에 대한 지원 강화

시책 2. 주민참여 행사 및 프로그램 개발

시책 3. 마을단위 축제의 개발

과제5 역사문화유산의 보존

조선왕조 600년의 문화유산 및 서울의 역사성을 보존·활용함으로써 문화적 풍부함을 제공하는 동시에 관광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토록 한다.

전략 1. 전통문화유산의 보수·유지

조선왕조 600년의 문화유산 및 근대적 건축물에 대한 집중적인 보전대책을 마련, 서울의 문화적 정체성을 형성한다.

시책 1. 문화재 집중관리

시책 2. 북촌한옥마을 등 전통마을 보존

시책 3. 근대적 건축물 및 문화유산의 보존을 위한 종합적 유적 정비 추진

전략 2. 전통문화예술 활동의 발굴과 지원

사라져 가는 전통문화예술을 복원, 후세에 자랑할만한 전통적인 서울의 문화를 만들어간다.

시책 1. 무형문화재의 발굴과 보존

시책 2. 전통문화 예술활동 지원 강화

시책 3. 전통문화 예술인 지원 강화

전략 3. 전통문화자원의 보전 및 관광자원화

전통문화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관광 및 마케팅 프로그램을 개발, 문화자원 보전의 내실화를 기한다.

시책 1. 전통문화자원을 활용한 관광 프로그램 개발

시책 2. 역사문화탐방로 조성 및 운영 내실화

시책 3. 역사문화지구의 선정 및 지원 프로그램 강화

과제6 화장중심의 장묘문화 확산

매장중심의 장묘문화를 화장중심으로 개선함으로써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장례관습의 간소화를 유도한다.

전략 1. 장묘시설 확충·정비

화장 및 납골시설을 양적으로 확대하여 이용편리성을 제고하고, 현대화·고급화함으로써 화장·납골시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한다.

시책 1. 장묘정책 중장기 계획수립
시책 2. 장묘시설 수급전망 및 공급계획 수립
시책 3. 장묘시설의 고급화, 다양화

전략 2. 장묘의식 개선사업 추진

화장 및 납골시설에 대한 의식을 근본적으로 개선함으로써 화장률을 제고하고, 화장문화를 정착시킨다.

시책 1. 홍보 및 교육사업 강화
시책 2. 시민운동 지원

목표4 효율적인 지역사회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모든 시민이 지역사회 단위에서 사회적 서비스에 손쉽게 접근하고 함께 참여하며 지역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선한다.

과제1 역동적인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분야별 서비스를 연계·조정하는 지역사회 단위의 네크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서비스 공급의 효율성, 생산성을 극대화한다.

전략 1. 동사무소를 지역(서비스)센터로 활용

소생활권 단위의 서비스 정보제공 및 연계조정 중심으로 동사무소를 활용한다.

시책 1. 지역사회 보건, 복지, 문화, 교육 등 서비스의 중심센터로써의 역할 정립

전략 2. 지역사회 협의체 구축

지역사회 서비스의 연계·조정 기능을 담당할 지역사회 협의체를 구축한다.

시책 1. 지역사회의 복지, 보건, 문화, 교육분야 민간활동 주체간의 협의체 구축

전략 3. 적극적 민·관 협조체계 구축

민간참여를 활성화하고 공공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서비스 전달체계의 효율성을 극대화한다.

시책 1. 민관 협조체제 구축
시책 2. 행정기관 간 협조체계 구축

과제2 생활권 단위의 서비스 접근성 제고

소생활권 단위에서 서비스 수요가 발생할 때, 언제 어디서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지역사회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한다.

전략 1. 소규모 생활권 단위 시설 확대

소수의 대규모 시설공급을 지양하고 다수의 소규모 시설공급을 확대함으로써 소생활권 단위에서의 접근성을 높인다.

시책 1. 소수 대규모 시설 공급방식을 지양하고, 생활권 단위로 다수의 소규모 시설로 공급
시책 2. 신규시설 공급은 지양하고, 기존시설을 적극 활용 : 학교, 공공시설 등

전략 2. 지역정보시스템 구축

기초 생활정보 제공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공급자와 소비자의 효율적인 연계체계를 구축한다.

시책 1. 보건, 복지, 문화, 평생학습 등 일상생활관련 정보망 구축
시책 2. 동사무소 지역(서비스)센터를 정보제공 중심으로 활용

전략 3. 자치구 단위의 계획 수립

보건, 복지, 문화 등은 지역사회단위로 추진되는 것이 효율적이므로 자치구 단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시책 1. 자치구 단위로 서비스 수요 및 공급계획 수립

과제3 전문인력 양성

시민생활의 기반조성 및 질적 향상을 위한 기초자원으로써 분야별 전문인력을 양적으로 늘리고 질적 전문화를 추구한다.

전략 1. 지역사회서비스 전문인력 양성

동사무소 지역사회 서비스 센터에서 상담 및 정보제공 등의 일선업무를 담당할 기초인력을 확보한다.

시책 1. 동사무소 지역(서비스)센터의 중심인력 양성

전략 2. 분야별 전문인력 확충 및 양성

보건, 복지, 문화 등 사회서비스 공급을 담당할 전문인력을 양적, 질적으로 육성한다.

시책 1.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확충
시책 2. 평생학습 지도자 및 시설종사자 교육
시책 3. 문화예술 관련 단체 육성
시책 4. 문화재 및 지역유산 보호 인력 양성

전략 3. 자원봉사 인력의 활용

민간자원 활용 및 시민참여 확대를 목적으로 자원봉사 인력의 적극적 활용방안을 모색한다.

시책 1. 평생학습과 자원봉사 활동의 연계

시책 2. 단순노력봉사로부터 문화, 교육 등 전문분야 자원봉사자 발굴

시책 3. 자원봉사자 정보체계 구축

과제4 기초조사 및 자료 구축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보건, 복지, 문화분야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데이터 베이스화하여 기본지표로 활용한다.

전략 1. 보건·복지 기초조사 실시

정기적으로 보건 및 복지분야 실태 및 욕구조사를 실시하여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시책 1. 정기적인(매4년) 지역보건지표 조사 실시

시책 2. 정기적인(매5년) 사회복지 센서스 실시

전략 2. 문화기초 자료 구축

문화관련 기초자료 조사 및 데이터를 구축한다.

시책 1. 정기적인(매5년) 문화지표 조사

시책 2. 문화분포 지도 작성

6. 목표별 정책지표

목표1 모든 시민에게 인간다운 기본생활 보장

[지표 1] 공공의료기관 계획지표

구 분	2010						2015						2020					
	계	도심권	동북권	서북권	서남권	동남권	계	도심권	동북권	서북권	서남권	동남권	계	도심권	동북권	서북권	서남권	동남권
정신보건센터	25	3	8	3	7	4	25	3	8	3	7	4	25	3	8	3	7	4

[지표 2] 노인요양시설 계획지표

구 분	2010						2015						2020					
	계	도심권	동북권	서북권	서남권	동남권	계	도심권	동북권	서북권	서남권	동남권	계	도심권	동북권	서북권	서남권	동남권
65세이상 인구(천명)	932.5	58.9	302.8	118.5	266.6	185.7	1186.7	79.8	383.4	156.3	334.5	232.7	1480.5	105.7	475.7	202	411.3	285.8
주간보호 시설	50	3	16	7	14	10	75	5	21	12	21	16	100	6	32	14	28	20
단기보호 시설	30	2	9	4	8	7	40	3	12	6	10	9	50	4	14	8	12	12
실비노인 요양시설	10	1	3	1	3	2	20	2	6	3	5	4	25	3	7	4	6	5

[지표 3] 장애인 재활시설 계획지표

구 분	2010						2015						2020					
	계	도심권	동북권	서북권	서남권	동남권	계	도심권	동북권	서북권	서남권	동남권	계	도심권	동북권	서북권	서남권	동남권
장애인 종합복지관	25	3	8	3	7	4	25	3	8	3	7	4	25	3	8	3	7	4
재활병원	3	1	1	-	1	-	4	1	1	-	1	1	4	1	1	-	1	1

[지표 4] 장애인 이동서비스 계획지표

구 분	1995	2000	2005	2010	2015	2020
편의시설 설치율(%)	-	82	95	100	100	100
지하철역 엘리베이터 설치(%)	–	24	100	100	100	100
무료셔틀버스(대)	-	15	50	70	90	100
시내버스 대폐차시 저상버스 도입율(%)	–	–	5	15	30	50

[지표 5] 취약계층 보호시설 계획지표

구 분	2010						2015						2020					
	계	도심권	동북권	서북권	서남권	동남권	계	도심권	동북권	서북권	서남권	동남권	계	도심권	동북권	서북권	서남권	동남권
가출청소년 쉼터	15	2	4	2	4	3	20	3	5	3	5	4	25	3	8	3	7	4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18	1	6	2	6	3	22	2	7	2	7	4	25	3	8	3	7	4
모자복지시설	16	1	5	2	5	3	20	1	7	2	6	4	25	3	8	3	7	4

목표2 개인·가족·공동체의 역량 강화

[지표 6] 자활사업 추진 계획지표

구 분	2010						2015						2020					
	계	도심권	동북권	서북권	서남권	동남권	계	도심권	동북권	서북권	서남권	동남권	계	도심권	동북권	서북권	서남권	동남권
자활후견기관	40	3	15	6	8	8	45	4	16	7	10	8	50	5	17	7	13	8
자활공동체 육성	130	9	50	20	26	25	170	15	60	28	34	33	200	20	67	30	45	38

[지표 7] 장애인 자립지원 계획지표

구 분	2010						2015						2020					
	계	도심권	동북권	서북권	서남권	동남권	계	도심권	동북권	서북권	서남권	동남권	계	도심권	동북권	서북권	서남권	동남권
자립생활지원센터	15	1	4	2	5	3	20	2	6	2	6	4	30	3	10	3	9	5
직업재활시설	80	8	28	8	24	12	90	10	30	10	26	14	100	12	32	12	28	16

[지표 8] 청소년시설 계획지표

구 분	2010						2015						2020					
	계	도심권	동북권	서북권	서남권	동남권	계	도심권	동북권	서북권	서남권	동남권	계	도심권	동북권	서북권	서남권	동남권
청소년 수련관	25	3	8	3	7	4	25	3	8	3	7	4	25	3	8	3	7	4
청소년 문화센터	60	8	18	6	16	12	80	10	24	10	22	14	100	12	32	12	28	16

[지표 9] 방문간호인력 계획지표

구 분		1996	2000	2005	2010	2015	2020
사업대상 인 구	계	-	36,300	47,300	58,700	72,600	88,700
	노 인	-	29,000	39,800	51,300	65,300	81,500
	장애인	-	7,300	7,500	7,400	7,300	7,200
수혜율(%)		-	7	15	20	25	30
수혜인구수		861	2,500	7,000	12,000	18,000	27,000
방문간호사수		170	175	470	780	1,200	1,800

• 방문간호사업의 대상인구는 저소득 병약한 노인 및 저소득 중증 재가장애인임.

[지표 10] 보육사업 계획지표

구 분	1995	2000	2005	2010	2015	2020
맞벌이 가정 보육수요 충족율(%)	-	60	80	100	100	100
방과후 보육시설수	-	200	300	400	500	500
영아전담 보육시설		10	130	150	180	200

목표3 건강하고 풍요로운 시민생활 기반 조성

[지표 11] 학교시설 계획지표

구 분		1995	2000	2005	2010	2015	2020
학령인구(천명)	초등	831	760	684	641	643	579
	중등	567	376	367	315	317	311
	고등	533	453	368	358	290	329
학급당 학생수	초등	41.2	37.3	35.0	30.0	30.0	30.0
	중등	49.9	34.5	33.0	30.0	30.0	30.0
	고등	50.5	45.4	33.0	33.0	30.0	30.0
필요 학급수	초등	20,300	22,000	19,523	21,367	21,433	19,300
	중등	11,350	10,070	11,121	10,500	10,567	10,367
	고등	10,563	9,988	11,152	10,848	9,667	10,967
부족 학급수	초등	-	-	-	-	-	-
	중등	-	-	-	-	-	-
	고등	-	-	651	347	-	466

[지표 12] 문화·여가시설 계획지표

구 분		1995	2001	2005	2010	2015	2020
문화복지 시 설	구민회관	18	23	25	25	25	25
	구민체육센터	9	21	25	25	25	25
	계	27	44	50	50	50	50
문화전수 시 설	문화예술회관	-	5	15	25	25	25
	지방문화원	4	21	25	25	25	25
	계	4	26	40	50	50	50
공 공 도서관	구립도서관 (괄호는 공공도서관)	0(21)	4(35)	10	25	25	25
	작은도서관	-	5	20	25	50	58
	계 (공공도서관 제외)	0(21)	9	30	50	75	83

- 문화복지 및 문화전수시설 등 기초적인 문화기반시설은 1구 1관을 목표로 계획함.
- 구립도서관은 구당 1개소를 확보하고, 지역주민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작은 도서관을 자치구당 2개소를 설치, 인구밀집지역을 감안하여 3개 자치구 당 1개소씩 추가 설치함.

[지표 13] 화장률 및 화장로 시설 계획지표

구 분	1995	2000	2005	2010	2015	2020
화장률(%)	28.3	48.3	65.0	80.0	85.0	88.0
화장로당 1일 처리건수	2.5	3.5	3.0	2.5	2.0	2.0
화장로 공급(기)	16	23	41	58	79	84

- 2010년까지 화장로 1기당 2.5회, 2015년까지 화장로 1기당 2회 가동을 목표로 화장로 공급기수를 확대함.

XII. 방재계획



1. 현황과 문제점
2. 여건변화 전망
3. 미래상
4. 계획방향
5. 목표체계
6. 목표별 정책지표

1. 현황과 문제점

1) 재해대응조직의 기술적 역량 및 운용 체계미흡

- 재해관리 업무의 분산 및 총괄기능의 미흡으로 각종사고와 재난의 유형별 수습 책임부서가 각각 분리되어 있어 종합대책이나 총괄조정 기능이 마련되지 못해 초기대처에 어려움이 있다.
- 재해예방과 수습에 관련되는 부서는 자발적인 재해예방과 수습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많은 통솔력과 지휘 감독권이 요구되나, 재해관련 부서는 사실상 낮은 서열로 되어있어 사고발생시 재해종합 관리업무에 어려움이 있다.
- 지식 기반형 재해관리체제가 미흡하여 재해관련 담당 공무원은 타 행정업무와 재해관리업무를 병행함으로써 재해관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잦은 보직순환과 인수인계의 미흡으로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다. 따라서 각종 재난재해에 대비하여 신속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는 조직 및 전문인력을 확보함으로써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여 서울 시민의 생활안전을 지키고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할 것이다.

2) 재난수요대비 재난전문인력의 부족

- 급증하는 재난행정수요와 고기능 안전서비스를 원하는 시민정서에 따른 재난조직확대 및 전문인력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렇다할 대책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재해 전 과정에 걸쳐 숙련된 재난전문인력의 확보 및 양성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아래 표 참조).

[표 XII-1] 재난수요 변화

구 분	화재			구 조			구 급		
	발생건수	인명피해	재산피해	출동건수	구조인원	일평균	이송건수	환자수	일평균
1995	7,153	사망 119 부상 426	163억	7,145	5,125	14.1명	88,613	89,620	246명
2000	7,058	사망 100 부상 332	173억	34,692	12,701	34.8명	205,765	210,217	576명

자료 : 서울시, 서울통계연보, 2000l

3) 기후변화에 따른 방재시스템 미비

• 기후 온난화가 진행됨에 따라 최근 가뭄 등 기상재해가 잦고, 기후가 급진적으로 변하고 있다. 장마일수는 10여일 정도로 줄어든 반면 국지적이고 산발적인 소나기성 폭우가 빈번하여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최근 빈번히 발생하는 시간당 120mm의 폭우와 하루 500mm씩 쏟아 붓는 아열대성 기후에 맞는 방재시스템을 구축하여 효율적인 치수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최근 6년간('94～'99) 서울시 풍수해 피해는 1998년도에 가장 심했으며, 시설별 피해규모는 도로, 하수도, 역사와 같은 공공시설에 집중되었고, 지역별 피해규모는 중랑천 주변인 도봉구, 강북구, 성북구에 집중되고 있어 시급히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한 피해는 지속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표 XII-2] 서울시 연도별 풍수해 현황 (단위 : 명, 정보, 천원)

년도	사망및 실종	이재민	침수 면적	피 해 액				
				합계	건물	농경지	공공시설	기타
1995	5	26	414.0	4,293,962	14,388	143,750	3,995,697	140,127
1996	2	–	1.7	1,069,105	1,054,650	153	6,963	7,339
1997	–	161	–	468,227	148,850	107	31,785	28,748
1998	19	2,287	453.0	51,441,607	950,000	52,948	27,027,597	23,411,062
1999	–	1,823	422.0	10,810,523	472,500	148	9,175,335	1,162,540

자료 : 서울시, 서울통계연보, 2000

[표 XII-3] 서울시 지역별 풍수해 현황 (단위 : 명, 정보, 천원)

구별	사망및 실종	이재민	침수 면적	피 해 액				
				합계	건물	농경지	공공시설	기타
도봉	–	–	7.3	1,699,282	–	–	1,565,302	133,980
성북	–	28	–	1,495,610	94,500	–	1,001,110	400,000
강북	–	4	–	1,340,716	40,500	–	1,040,216	260,000
중랑	–	–	–	1,027,847	40,500	–	987,347	–
서대문	–	–	–	1,005,990	40,500	–	911,490	54,000

자료 : 서울시, 서울통계연보, 2000

4) 과학화된 전산처리 기반의 고도화 필요

• 미국경제의 심장부인 뉴욕무역센터의 비행기테러사건에도 불구하고 단시간내에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회복될 수 있었던 것은 지난 '93년 폭탄테러사건이후 구축된 별도의 백업센터 때문이다. 전산정보에 의존하는 업무 비중이 날로 커지고 컴퓨터 없이는 일을 못하는 상황에서는 뉴욕테러와 같은 사고가 발생한다면 전산마비로 인한 혼란은 불을 보듯 자명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과학화된 서울종합방재센터의 전산처리 시스템들이 고도화되어야 하며 시스템의 위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2. 여건변화 전망

1) 신종 다중이용업소의 증가

• 많은 인명과 재산의 피해가 발생한 인천 "라이프" 호프집 및 성남 "아마존" 유흥주점 화재사고 등에서 보듯이 최근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유흥업소 등에서 화재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신종유흥업에 대한 안전기준의 미비로 연소우려가 높은 각종 마감재를 사용하고 있고, 초기 경보 및 방화상황 감지가 곤란한 실정이다. 더구나 앞으로도 새로운 유형의 유흥업소가 계속 생겨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이에 대한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 PC방, 무도방 등 신종 다중이용업소의 지속적인 증가로 화재위험성이 증가하고 있다.
- 피난통로 협소로 다수인 동시 피난장애 요인이 발생한다.
- 각 방마다 방음시설이 설치되어 초기경보 및 방화상황 감지가 곤란하다.
- 대부분이 임대료가 싼 지하를 선호하여 화재발생시 배연장애 및 인명피해 위험성이 높다.

[표 XII-4] 신종다중이용업소 증가 전망

구 분	1995	2001	2005	2010	2015	2020
업 종 수	5	11	15	20	25	30
업 소 수	23,481	29,352	34,048	40,857	49,028	49,028

• 업종은 매년1개씩 신규발생, 업소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가 2015년을 기점으로 현상유지

2) 건축물 및 도로시설물의 노후화·특수화·대형화

• 서울의 전통적인 시가지인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북구 등은 70년대 이전에 지어진 노후건축물이 많아 화재의 위험뿐만 아니라 건축물의 붕괴 등 재난의 사각지대로 대두되고 있어 이에대한 효율적인 안전관리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 서울도심과 주위의 지역이 70년대 이전의 건축물로 노후도가 높다.
- 전통적인 시가지가 많아 화재의 위험성이 높다.

• 도로시설물의 대량건설로 유지관리 대상시설이 급증하고 있고 80년대 이전에 건설된 시설물은 20년 이상 공용화로 노후화가 되어가고 있어 지속적인 보수·보강이 필요하고, 건설기술 발달과 도시경관 고려 등으로 시설물이 대형화·특수구조로 건설됨에 따라 특별관리가 요구되고 있으며, 성수대교 사고이후 도로시설물의 안전에 대한 인식의 변화로 지속적인 예방위주의 시설물 유지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3)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의 증가

• 기후온난화 현상으로 인하여 최근 가뭄 등 기상재해가 잦고, 기후가 급진적으로 변하고 있다. 장마일수는 10여일 정도로 줄어든 반면 국지적이고 산발적인 소나기성 폭우가 빈번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 열대야현상 등 아열대성 기후가 증가한다.
- 국지적이고 산발적인 게릴라성 폭우가 증가한다.

4) 테러위험 증가

• 매년 약 500여건 발생되는 국제테러 사건대처는 군경찰·국정원을 중심으로 한 국가업무이나, ASEM 및 월드컵경기 등 국제적인 행사유치가 날로 증가되고 있어 테러가 발생될 경우 초동조치 측면에서 위기관리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테러의 양상은 인질과 상호대치, 폭파 및 무장공격, 암살, 납치뿐만 아니라 단시간 내에 많은 희생을 부를 수 있는 독가스 살포 등 화생방 테러조차 서슴치 않고 자행되고 있는 추세로 보아 이에 대한 초동조치대책마련이 시급히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 테러와 관련하여 예측 가능한 매뉴얼을 확보해야 한다.
- 인명구조 및 초동조치 운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3. 미래상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도시"

- 산업의 발전에 따라 전기, 가스, 유류 등 위험물 사용의 급증과 교통량 폭증 등 위험요소가 증가함은 물론 재해 양상의 대형화속에서 방재정책에 대한 발상의 전환을 통해 모든 시민들이 안전하고 평화롭게 살 수 있는 도시환경의 창출을 목표로 하며 더불어 살 수 있는 서울을 만든다.
- 각종 재난/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은 물론 사회간접자본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방재대책과 비상관리 체계를 제시하여 위험발생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긴급조치 사항등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여 시민생활 안정에 기여하며, 삶의 질을 향상시켜 보다 취약한 계층인 재해약자에 더 높은 관심과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 사회의 다양화 과정에 수반되는 도시 내 주민들간의 갈등을 조정하여 모든 주민들이 공평하고 풍요롭게 살 수 있는 도시환경의 창출을 목표로 한다. 동시에 다양한 계층간의 사회적 통합과 다양성을 도모하는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는 서울을 만든다.

4. 계획방향

1) 지역위험도 저감

- 대규모 연소방지를 위한 공간 및 응급복구활동 공간 마련
  - 도심권을 동·서·남·북 4개권역 방면본부로 나누어 방면본부별 기본방재원칙 수립
  - 간선도로 및 주택가 피난도로(공간) 확보
  - 재해시 응급활동을 위한 출동로 확보
  - 이면도로 주·정차 금지 확대

- 재난취약지역 지정 확대
  - 거점시설의 지정 및 안전도 등급화 시행
  - 가건물 등 지역특성에 따른 재난취약지점 관리
- 지역별 위험지수개발(위험 재해도 작성)
- 전문 격리수용시설 확보(격리된 화생방 전문병원, 수용시설 등)
- 도시기반시설 정보구축

2) 주민 자율적인 재해대응체계 구축

- 주민재해 대처 능력배양을 위한 교육공간 확보
- 현장체험 및 자원봉사를 통한 방재활동 참여 동기부여
- 주민협력방안 마련

3) 지진 및 대규모 사고에 강한 서울 구현

- 대규모 연소방지 방안 마련 및 재해시 수송 네트워크 및 응급복구 활동 방재축 형성
- 지하공동구 및 도시생명선(라이프라인)의 내진성 확보
- 지진시 행동매뉴얼 개발
- 지진에 대한 대비를 통하여 기타 대규모 재해시에도 위기관리 능력 제고

4) 서울의 지역 특성에 따른 4개 방재권역 설정

- 지역에 맞는 에리어 컨셉개발
- 동·서·남·북 4개 권역별 방재대응 세부계획 마련

5)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물 유지관리

- 첨단장비에 의한 과학적인 시설물 관리
- 도로시설물의 성능향상 및 안전점검 강화
- 119를 이용한 재해위험 신고센터 운영으로 신속한 복구체계 확립

5. 목표체계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도시"

목표	과제	전략	시책	단기	중장기	정책지표
1. 도시안전 취약구조 개선	효율적 위험관리 기반구축	• 취약대상 중점관리	– 가건물 및 주거용비닐하우스, 무허가 집단거주지 안전대책강구 – 피난안전여건 중첩제공, 외부비상계단보급 – 건축허가동의범위 및 소방점검의 효과성 제고, 사각방지, 위임관리방식 도입 – 대형화재취약대상등 중점관리대상 소방안전대책수립 및 제도개선 추진	✔		지표 1.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건수
		• 안전시설 강화	– 빗물펌프장 확대, 빗물처리 하수관로 신설 및 용량 확대 – 홍수조절용 연못확대와 복개천 복원 – 전문 격리수용시설 확보(격리된 화생방 전문병원, 수용시설 등) – 화생방 시민안전대책 추진(화생방조직 강화, 다용도방독면 보급 등) – 지하철 시설물 감시망 확립	✔		
		• 위험물저장, 운송, 활용지침	– 위험물 분류 및 보관시설 기준 선진화 – 위험물 운송로 지정 및 유사시 출동체제구축 확대 – 위험물 저장 및 운송 등 활용지침 개발 – 유해화학물질 현황관리 및 정보전달 대응체계 구축		✔	
		• 도시생명선 안전관리체계 구축	– 최첨단 장비 활용 도시가스 안전관리 체계 구축 – 영세민가구 LPG시설 무료개선 추진 – 합동안전점검 강화(소방서, 자치구, 가스안전공사 등) – 지하매설물 비상대응훈련 실시	✔		
	시설물 안전도 강화	• 피난, 비상활동 거점 시설의 안전성 강화/ 도시기능의 지속성 보장	– 거점시설의 지정 및 안전도 등급화 시행 – 공공시설의 안전성 강화	✔		
		• 중·저층 건물의 내진성능 개선	– 내진 안전성평가체계 확립 – 수납설비 보강방안 강구 – 안전실태 인증체계 확립, 거래자료화	✔		
		• 도로시설물의 안전성 확보	– 첨단장비를 이용한 과학적인 교량관리 – 전문가에 의한 안전점검 강화 – 도로시설물 안전점검을 위한 매뉴얼 작성 – 한강교량 1등급 수준으로 성능향상 – 일반도로시설물 B급 이상 유지 – 가로등 시설물 안전성 확보 – 중차량 통행 가능한 노선축 개발		✔	지표 2. 비상수원 확보비율
	사각지역 해소대책 확보	• 접근성 강화	– 도로, 교량, 지하철터널, 공동구 안전설계 지침 확보 – 저수조 확보 방안강구 – 소방용수시설 확충 및 보수, 기술력제고	✔		
		• 사각지역 해소	– 시민 의견수렴 및 상담 창구개설 – 119 구조대 전진배치방안 강구	✔		

목표	과제	전략	시책	단기	중장기	정책지표
2. 종합위기 관리 체제 구축	조직 운용의 효율성 제고	• 광역/기초 연계효용 극대화	– 유사업무의 연계체제 확보 – 소방(광역), 구청(기초)의 연계 효율 극대화	✔		지표 3. 도시인구 대비 병원전 처리 성공률 (생존율)
		• 유형·단계별 관리의 시너지 효과 창출	– 소규모 대응과 병행 상시대응체제 강구	✔		
		• 소방관서 확충 및 근무여건 개선	– 재난취약지역 소방관서 연차적 신설 및 이전재건축 – 외근 근무자 3교대근무 단계적 추진 – 업무 과중에 따른 출동수당 신설	✔		
		• 대형재난 긴급구조 시스템 구축	– 선진국형 방면별 현장 지휘통제 체제 구축 – 다양한 재해유형의 전문 대응 구조대 확충·보강 – 인위 재난 배상책임 보험제도 마련	✔		
	초기대응의 신속성 확보	• 종합방재센터 대응기능 확대	– 30초이내 출동체제 강화 – 종합방재센터 정보처리 및 통보기능의 고도화, 정확·신속성제고 – 통합운영시스템 및 백업센터 설치 – 119를 이용한 24시간 재해위험신고센타 및 긴급복구반 운영	✔		
		• 비상수원, 특수구조, 진압장애 최소화	– 비상수원 확대방안 마련으로 동원장비 경량화 – 특수구조 능력 신장, 교육체계 확립 – 비상차량 운행여건 확립	✔		
	방재행정의 신뢰성, 권위 획득	• 공백배제	– 신종유흥업 및 게임장 안전관리방안 강구 – 동일 시설군 내의 임의 개수에 따른 위험성 배제 관리체제 구축	✔		
		• 유연성, 현실성 확보	– 점검의 내실화 방안강구 – 성능위주의 평가체계의 보급	✔		
		• 소방 역량의 국제화	– 안전도시 서울만들기추진(안전도시 인증 등) – 주요 대도시 선진 위기관리행정 벤치마킹 추진 – 세계적 수준의 국제소방관 양성		✔	
	재해약자의 안전보장	• 고령인구, 소외계층 구급능력 제고	– 119 자동신고기 보급확대방안 강구 – 119 구급대 역량 강화(기동성 제고) – 보건소와 연계 무료 정기검진 방안강구 – 응급의료 정보시스템 구축 – 소외계층 구급봉사활동 강화		✔	지표 4. 1인당 담당해야 하는 안전검사 대상수
		• 장애인 및 소년소녀 가장을 위한 안전환경 조성	– 안전점검 및 안전시설보수 기술의 보급 활성화 – 정례적 상황파악 기능 확보		✔	
	과학적·분석적 지식기반 구축	• 통계분석 및 예측상황 판단 능력의 강화	– 종합방재센터 정보처리 기능강화. 계층화 NET 구성 – 피해평가, 위험도평가 기반과 연계 – 소방관서 화재전문감식반 설치운영		✔	
		• 확률적 분석에 근거한 관리기반 활용	– 이상기후 및 재해요인 분석방법 강구 – 위험도 및 피해 평가 수치모형 확보	✔		

목표	과제	전략	시책	단기	중장기	정책지표
3. 침수지역 해소 및 제설 효율화	수해항구 대책사업 조기 마무리	• 수해예방시설 대폭확충	– 빗물펌프장 및 간이펌프장 신,증설을 통한 충반한 처리능력 확보 – 빗물저류시설 설치 : 망우산, 드림랜드, 석관동, 장위2동 등 – 불량하수관거 및 하천 정비 –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방지대책 추진	✔		
		• 수방시설 자동화 (빗물펌프장 자동운전시스템)	– 92개 빗물펌프장을 대상(73개소 구축완료, 나머지는 2003년까지 완료) – 펌프, 수문 등의 자동운전 및 원격제어시스템 구축	✔		
	극한강우에 따른 돌발홍수 대응체계 마련	• 이상기후에 따른 도시강우특성 분석 및 대응책 수립	– 하천범람에 따른 홍수재해지도 작성 – 내수에 의한 주택침수지도 작성 – 대피장소 및 대피로 지정 등 30분 대피체계발전	✔		
	산사태 위험지역 예방	• 산림내 붕괴위험 시설물의 위험요인 해소	– 절개지 및 산사태 위험시설물에 대한 관리카드 작성 – 절개지 위험시설물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 실시 – 시설물에 대한 보강공사 조속 시행	✔		
	제설방법 및 체계 개선	•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제설방법 강구	– 비염화물계 제설제 시험 살포 : 한강교량 등 – 액상염화칼슘(염화칼슘+물+소금 교반) 시험 사용 : I-C, 램프 등 – 일정구간 소금 살포 : 융설효과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시민과 함께하는 제설대책 추진	• 시민과 함께 하는 제설 문화 운동전개 및 참여 의무화 추진화	– “내 집앞, 내 점포앞 눈치우기 운동” 전개 – 아파트 주민 단지내 제설 권장 – 관리사무소 협조 – 시민참여 의무화를 위한 법 제정 추진(가칭 “ 제설 및 제빙 관리법”)		✔	

목표	과제	전략	시책	단기	중장기	정책지표
4. 시민자율 방재능력 향상	시민반응의 반영체계 구축	• 검사후 평가제도 운용	– 검사행정 모니터링 체계 구축	✔		지표 5. 검사 만족도 지표 6. 시민참여 비율
		• 불안요인 신고 및 상담 활성화	– 안전신고 창구의 활성화 – 시민단체 연계 전문가 네트워크 활용		✔	
	시민권익 보장	• 피해청구, 위험배제를 위한 법률서비스 기능 육성	– 전문컨설턴트 운영방안 강구 – 전문상담실 확보비용 지원		✔	
		• 재해시 참여에 따른 보상 규정 확보	– 활용인력, 장비에 대한 보상기준 마련 – 재해 참여자 지속적 관리방안 강구	✔		
		• 재해후유증 관리	– 외상성 스트레스 관리 지원		✔	
	시민의식 함양	• 시민안전체험 학습기회 확대	– 시민안전체험관 추가건립 및 운용 – 소방서 활용방안 강구 – 교육학습 대상별 전문화 – 시민안전대학 운영 – 시민안전올림픽 개최 – 재난체험투어코스 개발 등 시민과 함께하는 홍보활동 강화		✔	
		• 네트워크에 의한 교재 공급	– 유형별/단계별/계층별 교재 개발	✔		
	방재활동 참여동기 부여	• 자원봉사 참여동기 유발 및 능력 제고	– 유아·어린이 방재지도자 육성 – 이벤트 활용방안강구 – 자원봉사학교 및 교육강구 – 사회적 인증제도 도입 – 지역축제 개최 – 아르바이트, 참여프로그램 개발 – 의용소방대/민방위대 활용방안강구 – 민간자원봉사단체 통합관리체계 마련 (멤버쉽제도 도입 등) – 지역단위 민간자율 안전문화 활동 활성화		✔	
		• 자율방재조직의 지원	– 자율방재조직 D/B 구축 – 지역별 자율방재조직 마련 – 자율방재인을 위한 모임 마련. 커뮤니티 문화 육성		✔	

목표	과제	전략	시책	단기	중장기	정책지표
5. 미래지향적 소방안전관리 기반 확충	IT기술 접목 NET의 활성화	• 계층적 통합관리 네트워크 사업 활성화, 원격감지 기능 고도화	– 취약지역 원격 감시망 구축 – 사이버 감시체계 구축방안 강구		✔	지표 7. 전산화 시스템 구축 비율
		• 개인DB, GPS의 관리사업 활성화 연계	– 인적정보관리 및 장비동원관리센터 설치 – 관련분야 전문가DB 활용방안 강구 – 정보통신 신기술 접목		✔	
	시장 경제적·구조적 방재기술 수요 확보	• 부동산 거래시 안전자료 제공 의무화	– 소방 및 건축분야 검사자료 공유방안강구 – 안전수준의 부동산 가치 반영	✔		
		• 보험적용 유형/대상의 확대	– 위험시설 우선 보험가입방안 마련 – 보험 적용대상 기준의 확대 (재해, 재난보험)	✔		
	재해진압 기술의 고도화	• 소화약제 및 소방기술개발 지원	– 개발비용지원 방안 마련 – 실험연구기반 구축 – 상황별 대응매뉴얼 보급		✔	
		• 진압장비의 현대화	– 위험지역내 활용장비 선진화 연구 – 개인보호 장비의 보급 확대 – 노후소방차 교체 및 신설관서 소방차 증차 – 화재진압·구조·구급장비 교체 및 보강 – 전문의료장비 구비 인명구조 전용헬기 및 구급차 도입 – 다목적 차량 구매		✔	
	지속적 기술 발전의 기반 마련	• 우수기술 우선 구매, 기술 경쟁 유도	– 우수기술 인센티브부여방안 강구 – 설계, 시공, 감리비용의 통합 운용 – 종합교육시설 확충 및 소방방재연구 기능 강화		✔	
		• 공공발주시 안전계획 가점제 운용	– 공공시설 발주시 우수업체에 인센티브 부여 – 안전전문팀 운영방안 강구		✔	

목표1 도시안전 취약구조 개선

모든 시민이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과학적 관리기반을 구축하여 취약요소를 사전에 발견하고 보완하여 재난을 미연에 방지한다. 시설물 안전도를 높이는 한편 주거용 비닐하우스, 서초구 헌인가구단지, 강남구 구룡마을 등 대응 사각지역을 해소하여 도시 구조적 방재성능을 강화한다.

과제1 효율적 위험관리기반 구축

가건물 및 주거용 비닐하우스 등 취약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안전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자연재해대비 시설물 강화를 통해 재난발생시 신속하게 대처하도록 한다.

전략 1. 취약대상 중점관리

취약대상에 대한 중첩관리 및 안전대책 강구로 위험요소를 사전 배제한다.

시책 1. 가건물 및 주거용 비닐하우스, 무허가집단거주지 안전대책 강구
시책 2. 피난안전여건 중첩제공, 외부비상계단 보급
시책 3. 건축허가동의 범위 및 소방점검의 효과성 제고, 사각방지, 위임관리방식 도입
시책 4. 대형화재취약대상 등 중점관리대상 소방안전대책 수립 및 제도개선 추진

전략 2. 안전시설강화

단계별 안전시설의 강화로 예측될 수 있는 재난/재해에 대비한다.

시책 1. 빗물펌프장확대, 빗물처리 하수관로 신설 및 용량확대
시책 2. 홍수조절용 연못 확대와 복개천 복원
시책 3. 전문격리용시설 확보(격리된 화생방전문병원, 수용시설 등)
시책 4. 화생방 시수민안전대책 추진(화생방조직강화, 다용도방독면 보급 등)
시책 5. 지하철 시설물 감시망 확립

전략 3. 위험물 저장, 운송, 활용지침

위험물관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지침서를 개발 활용한다.

시책 1. 위험물 분류 및 보관시설 기준 선진화
시책 2. 위험물 운송로 지정 및 유사시 출동체제구축 확대
시책 3. 위험물 저장 및 운송 등 활용지침 개발
시책 4. 유해화학물질 현황관리 및 정보전달 대응체계 구축

전략 4. 도시생명선 안전관리체계 구축

도시 생명선에 대한 현장 밀착형 안전관리로 재난 예방

시책 1. 최첨단 장비 활용 도시가스 안전관리체계 구축
시책 2. 영세민가구 LPG시설 무료개선 추진
시책 3. 합동안전점검 강화(소방서, 자치구, 가스안전공사 등)
시책 4. 지하매설물 비상대응훈련 실시

과제2 시설물 안전도 강화

재해의 양상이 날로 변화함에 따라 새로운 재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거점시설 및 인증문제의 안전성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 최저 방재성능을 확보한다.

전략 1. 피난, 비상활동 거점시설의 안전성 강/화도시기능의 지속성 보장

예측불허의 재난/재해대비 거점시설 및 공공시설의 안전성 강화를 통한 도시기능의 흔들림 없는 안정성 및 지속성을 확보한다.

시책 1. 거점시설의 지정 및 안전도 등급화 시행
시책 2. 공공시설의 안전성 강화

전략 2. 중·저층 건물의 내진성능 개선

중·저층 건물에 대한 안전성 평가방안 및 안전실태 인증체계를 확립한다

시책 1. 내진 안전성 평가체계 확립
시책 2. 수납설비 보강방안 강구
시책 3. 안전실태 인증체계확립, 거래자료화

전략 3. 도로시설물의 안전성 확보

첨단장비와 전문가에 의한 안전점검 시행과 지속적인 보수·보강공사를 시행하여 도로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한다

시책 1. 첨단장비를 이용한 과학적인 교량관리
시책 2. 전문가에 의한 안전점검 강화
시책 3. 도로시설물 안전점검을 위한 매뉴얼 작성
시책 4. 한강교량 1등급 수준으로 성능향상
시책 5. 일반도로시설물 B급 이상 유지
시책 6. 가로등 시설물 안전성 확보
시책 7. 중차량 통행가능한 노선축 개발

과제3 사각지역 해소대책 확보

시민 누구에게나 안전생활이 가능하도록 기반시설확보와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전략 1. 접근성 강화

기반시설에 대한 안전성 확보와 급수중단에 사전대비 공공서비스를 강화한다.

시책 1. 도로, 교량, 지하철터널, 공동구 안전설계지침 확보
시책 2. 저수조 확보방안 강구
시책 3. 소방용수시설 확충 및 보수, 기술력 제고

전략 2. 사각지역 해소

시민 의견수렴창구 개설과 119구조대의 확대 및 근접배치로 시민 누구나 생활 속에서 안전에 대한 공공서비스를 경험하도록 한다.

시책 1. 시민의견 수렴 및 상담 창구개설
시책 2. 119구조대 전진배치방안 강구

목표2 종합위기관리 체제 구축

빈틈없는 재난/재해대책 마련과 안전한 도시구현을 위한 기본적인 방재서비스 기반을 구축한다.

과제1 조직 운용의 효율성 제고

재난발생시 시민 누구나 고른 혜택이 부여될 수 있도록, 그리고 위험성 예측이 가능하도록 과학적 관리기반을 구축한다.

전략 1. 광역/기초 연계효용 극대화

광역적인 상호연계와 지원을 강화한다.

시책 1. 유사업무의 연계체제 확보
시책 2. 소방(광역), 구청(기초)의 연계 효율 극대화

전략 2. 유형·단계별 관리의 시너지 효과 창출

소규모 재난/재해에 대한 대응을 통해 유형별·단계별 상시대응방안을 강구한다.

시책 1. 소규모 대응과 병행 상시대응체제 강구

전략 3. 소방관서 확충 및 근무여건 개선

시책 1. 재난취약지역 소방관서 연차적 신설 및 이전·재건축
시책 2. 외근 근무자 3교대근무 단계적 추진
시책 3. 업무 과중에 따른 출동수당 신설

전략 4. 대형재난 긴급구조시스템 구축

시책 1. 선진국형 방면별 현장 지휘통제 체제 구축
시책 2. 다양한 재해유형의 전문 대응 구조대 확충·보강
시책 3. 인위 재난 배상책임 보험제도 마련

과제2 초기대응의 신속성 확보

종합방재센터 중심의 대응체제를 구축하여 보다 빠르고 신속한 정보처리 및 대응체제 확보에 만전을 기한다.

전략 1. 종합방재센터 대응기능 확대

종합방재센터의 신속·정확한 대응능력 통하여 고도의 안전대처 능력을 시민이 체감하도록 한다.

시책 1. 30초이내 출동체제 강화
시책 2. 종합방재센터 정보처리 및 통보기능의 고도화, 정확·신속성 제고
시책 3. 통합운영시스템 및 백업센터 설치
시책 4. 119를 이용한 24시간 재해위험신고센타 및 긴급복구반 운영

전략 2. 비상수원, 특수구조, 진압장애 최소화

재난/재해 대처장비의 첨단화 및 경량화를 통해 비상 출동시 장애요인을 최소화한다.

시책 1. 비상수원 확대방안 마련으로 동원장비 경량화
시책 2. 특수구조 능력 신장, 교육체계 확립
시책 3. 비상차량 운행여건 확립

과제3 방재행정의 신뢰성, 권위 획득

방재행정의 신뢰성을 회복하여 시민의 안전불감증 및 불신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한다.

전략 1. 공백배제

도시화에 따른 신규업종을 사전예측하고 대처방안을 강구한다.

시책 1. 신종유흥업 및 게임장 안전관리방안 강구
시책 2. 동일시설군 내의 임의 개수에 따른 위험성 배제관리체제 구축

전략 2. 유연성, 현실성 확보

외형적·양적인 점검을 성능위주로 전환하여 방재행정에 대한 신뢰성 및 안전불감증을 해소한다.

시책 1. 점검의 내실화방안 강구
시책 2. 성능위주의 평가체계의 보급

전략 3. 소방역량의 국제화

소방관 교육·훈련기준을 국제수준으로 상향

시책 1. 「안전도시 서울만들기」 추진(안전도시 인증 등)
시책 2. 주요 대도시 선진 위기관리행정 벤치마킹 추진
시책 3. 세계적 수준의 국제소방관 양성

과제4 재해약자의 안전 보장

재해약자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환경을 조성한다.

전략 1. 고령인구, 소외계층 구급능력 제고

고령화에 따른 안전서비스 확대로 복지능력을 향상시킨다.

시책 1. 119 자동신고기 보급 확대방안 강구
시책 2. 119 구급대 역량 강화(기동성 제고)
시책 3. 보건소와 연계 무료 정기검진 방안강구
시책 4. 응급의료 정보시스템 구축
시책 5. 소외계층 구급봉사활동 강화

전략 2. 장애인 및 소년소녀 가장을 위한 안전환경 조성

주거시설의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통해 재해약자의 안전환경을 조성한다.

시책 1. 안전점검 및 안전시설 보수 기술의 보급 활성화
시책 2. 정례적 상황파악 기능 확보

과제5 과학적 분석적 지식기반 구축

서울의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재난예측분석 시스템의 정보처리 기능을 강화하여 재해요인 및 위험성 예측이 가능하도록 한다.

전략 1. 통계분석 및 예측상황 판단능력의 강화

과학적 관리기반을 통해 재난/재해를 예측한다.

시책 1. 종합방재센터 정보처리 기능강화, 계층화 NET구성
시책 2. 피해평가, 위험도평가 기반과 연계
시책 3. 소방관서 화재전문감식반 설치운영

전략 2. 확률적 분석에 근거한 관리기반 활용

지역특성 및 연중재해경향 등을 분석 재해요인 및 위험성을 예측한다.

시책 1. 이상기후 및 재해요인 분석방법 강구
시책 2. 위험도 및 피해평가 수치모형 확보

목표3 침수지역 해소 및 제설 효율화

수방시설 대폭 확충으로 수해대응능력 향상, 빗물펌프장 적기 가동체계 구축으로 저지대 침수방지 등 수방개념 및 정책 전환으로 돌발홍수 발생시 인명·재산피해의 최소화를 구현한다.

과제1 수해항구대책 사업 조기 마무리

수방시설의 대폭확충 및 자동화로 수해대응능력 및 신뢰도를 향상한다.

전략 1. 수해예방시설의 대폭 확충

수해대응능력을 대폭 향상하여 상습침수지역을 없앤다.

시책 1. 빗물펌프장 및 간이펌프장 신,증설을 통한 충분한 처리능력 확보
시책 2. 빗물저류시설 설치 : 망우산, 드림랜드, 석관동, 장위2동 등
시책 3. 불량하수관거 및 하천 정비
시책 4.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방지대책 추진

전략 2. 수방시설의 자동화

빗물펌프장 자동운전시스템 도입으로 적기 작동 신뢰도를 높인다.

시책 1. 92개 빗물펌프장을 대상(73개소 구축완료, 나머지는 2003년까지 완료)
시책 2. 펌프, 수문 등의 자동운전 및 원격제어시스템 구축

과제2 극한 강우에 따른 돌발홍수 대응체계 마련

기습폭우시 피해 최소화를 위한 혁신적인 방재시설 기준을 재정립한다..

전략 1. 이상기후에 따른 도시강우특성 분석 및 대응 수립

시뮬레이션을 통한 강릉지역과 같은 돌발 홍수피해를 예측한다..

시책 1. 하천범람에 따른 홍수재해지도 작성
시책 2. 내수에 의한 주택침수지도 작성
시책 3. 대피장소 및 대피로 지정 등 30분 대피체계발전

과제3 산사태 위험지역 예방

절개지 및 산사태 위험시설물에 대한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한다.

전략 1. 산림내 붕괴위험 시설물의 위험요인 해소

시책 1. 절개지 및 산사태 위험시설물에 대한 관리카드 작성
시책 2. 절개지 위험시설물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 실시
시책 3. 시설물에 대한 보강공사 조속 시행

과제4 제설방법 및 체계 개선

제설방법 및 체계의 효율화와 더불어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개선한다.

전략 1.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제설방법 강구

시책 1. 한강교량 등에 비염화물계 제설제 시험살포
시책 2. I·C, 램프 등에 액상염화칼슘(염화칼슘+물+소금 교반)시험 사용
시책 3. 일정구간 소금 살포 : 융설효과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과제5 시민과 함께 하는 제설대책 추진

시민이 참여하는 제설대책을 추진함으로써 효율 및 비용절감의 극대화를 도모한다.

전략 1. 시민과 함께 하는 제설문화 운동전개 및 참여 의무화 추진

시책 1. “내 집앞, 내 점포앞 눈치우기 운동” 전개
시책 2. 아파트 주민 단지내 제설 권장 – 관리사무소 협조
시책 3. 시민참여 의무화를 위한 법 제정 추진(가칭 “제설 및 제빙 관리법”)

목표4 시민자율 방재능력 향상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방재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자주적인 방재 행동력을 높여 자기책임의 원칙에 근거한 방재인식을 심어준다. 시민안전체험 학습기회를 확대하여 자율방재체제를 구현한다.

과제1 시민반응의 반영체계 구축

시민의 고른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정책수립시 반영한다.

전략 1. 검사후 평가제도 운영

안전검사에 대한 평가제도를 도입 신뢰도를 높인다.

시책 1. 검사행정 모니터링 체계 구축

전략 2. 불안요인 신고 및 상담 활성화

시민단체 및 전문가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불안요인을 사전에 제거한다.

시책 1. 안전신고 창구의 활성화
시책 2. 시민단체 연계 전문가 네트워크 활용

과제2 시민권익 보장

재난으로 인한 피해보상 등 놓치기 쉬운 각종 혜택을 행정지원 서비스의 확대로 적극 지원한다.

전략 1. 피해청구, 위험배재를 위한 법률서비스 기능 육성

전문컨설던트를 활용 피해보상등에 대한 행정·법률지원 서비스를 실시한다.

시책 1. 전문컨설턴트 운영방안 강구
시책 2. 전문상담실 확보비용 지원

전략 2. 재해시 참여에 따른 보상규정 확보

자원봉사자 및 장비지원자에 대한 보상 실시로 참여율을 높인다.

시책 1. 활용인력. 장비에 대한 보상기준 마련
시책 2. 재해 참여자 지속적 관리방안 강구

전략 3. 재해 후유증 관리

재해로 야기된 상병에 대한 보상기준을 마련한다.

시책 1. 외상성 스트레스 관리 지원

과제3 시민의식 함양

시민 스스로 재난은 자기가 예방해야 한다는 방재인식을 심어준다.

전략 1. 시민안전체험 학습기회 확대

모든계층에게 적절한 안전체험 기회의 확대로 방재인식을 확고히 하여 안전한 도시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다.

시책 1. 시민안전체험관 추가건립 및 운용
시책 2. 소방서활용방안 강구
시책 3. 교육학습 대상별 전문화
시책 4. 시민안전대학 운영
시책 5. 재난체험투어코스 개발 등 시민과 함께하는 홍보활동 강화

전략 2. 네트워크에 의한 교재 공급

안전교육 교재를 유형별/연령대별로 적절하게 개발하여 안전에 대한 대처방법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시책 1. 유형별/단계별/계층별 교재 개발

과제4 방재활동 참여동기 부여

일상생활 속에서 여가생활 및 문화활동에 안전체험학습의 기회를 폭넓게 확대하여 자율방재 체제가 가능하도록 한다.

전략 1. 자원봉사 참여동기 유발 및 능력제고

여가생활 및 문화생활과 연관된 자율적인 방재체제가 되도록 동기를 유발한다.

시책 1. 유아어린이 방재 지도자 육성
시책 2. 이벤트 활용방안 강구
시책 3. 자원봉사학교 및 교육 강구
시책 4. 사회적 인증제도 도입
시책 5. 지역축제 개최
시책 6. 아르바이트, 참여프로그램 개발
시책 7. 의용소방대/민방위대 활용방안 강구
시책 8. 민간자원봉사단체 통합관리체계 마련(멤버쉽제도 도입 등)
시책 9. 지역단위 민간자율 안전문화 활동 활성화

전략 2. 자율방재조직의 지원

안전분야의 전문기술과 자격을 가진 민간자원 조직을 마련하여 재난/재해시 신속히 전문가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시책 1. 자율방재조직 D/B 구축
시책 2. 지역별 방재조직 마련
시책 3. 자율방재인을 위한 모임 마련, 커뮤니티문화 육성

목표5 미래지향적 소방안전관리 기반 확충

풍요롭고 건강하며, 활기찬 시민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원격감지 기능의 고도화, 방재전분야의 시장경제적·구조적 동기를 부여하여 기초 생활안전 수준을 높이고 재해진압 기술의 향상과 방재부문 기술을 육성·발전시켜 시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추구한다.

과제1 IT기술 접목 NET의 활성화

전산정보화를 통한 빈틈없는 방재 감시체제를 구축한다.

전략 1. 계층적 통합관리 네트워크 사업 활성화, 원격감지 기능 고도화

인력중심의 감시체계를 무인감시체계로 전환하고 민간자원을 적극활용 신속하고 정확한 원격 감시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시책 1. 취약지역 원격감시망 구축
시책 2. 사이버 감시체계구축방안 강구

전략 2. 개인데이터베이스(DB), GPS(Global Positioning System)의 관리사업 활성화 연계

수준높은 전문가 및 첨단장비에 대한 DB를 구축 재해발생시 신속히 투여할 수 있도록 한다.

시책 1. 인적정보관리 및 장비동원관리센터 설치
시책 2. 관련분야 전문가 DB활용방안 강구
시책 3. 정보통신 신기술 접목

과제2 시장경제적·구조적 방재기술 수요확보

시장원리에 안전에 대한 의식을 추가함으로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수요를 확보한다.

전략 1. 부동산 거래시 안전자료제공 의무화

각종 안전점검에 대한 자료를 공유하고 부동산 거래시 안전자료제공을 의무화 함으로 안전에 대한 의식과 신뢰도를 높인다.

시책 1. 소방 및 건축분야 검사자료 공유방안 강구

시책 2. 안전수준의 부동산가치 반영

전략 2. 보험적용 유형/대상의 확대

재해는 한꺼번에 모든 것을 빼앗아가므로 보험적용 대상의 기준을 점차 확대 시행하여 시민의 안정된 생활 보장에 기여한다.

시책 1. 위험시설 우선 보험가입방안 마련

시책 2. 보험적용대상 기준의 확대(재해, 재난보험)

과제3 재해진압 기술의 고도화

소화약재 및 기술개발, 장비의 소형화, 경량화를 통해 재해진압 기술을 높인다.

전략 1. 소화약제 및 소방기술개발 지원

첨단 소화약재 및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기반을 마련하여 소방수요에 부응하고 재해규모를 최소화하는데 기여한다.

시책 1. 개발비용 지원방안 마련

시책 2. 실험연구기반 구축

시책 3. 상황별 대응매뉴얼 보급

전략 2. 진압장비의 현대화

첨단화된 건물 형태와 밀집화 된 도시공간 형태에 맞는 선진화된 진압장비를 활용하여 최소의 비용과 개인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한다.

시책 1. 위험지역내 활용장비 선진화 연구
시책 2. 개인보호 장비의 보급 확대
시책 3. 노후소방차 교체 및 신설관서 소방차 증차
시책 4. 화재진압•구조•구급장비 교체 및 보강
시책 5. 전문의료장비 구비 인명구조 전용헬기 및 구급차 도입
시책 6. 다목적 차량 구매

과제4 지속적 기술발전의 기반 마련

열린 행정을 통해 우수기술을 발굴하여 재난 현장실무에 지속적으로 지원이 가능한 기반을 마련한다.

전략 1. 우수기술 우선구매, 기술경쟁 유도

현장대응과 직결된 우수한 기술을 적극 발굴 활용함으로 안전문화에 대한 경쟁원리를 도입한다.

시책 1. 우수기술 인센티브 부여방안 강구
시책 2. 설계, 시공, 감리 비용의 통합 운용
시책 3. 종합교육시설 확충 및 소방방재연구 기능 강화

전략 2. 공공발주시 안전계획 가점제 운용

안전계획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공시설에 우선적으로 도입함으로 안전여건과 분위기를 조성한다.

시책 1. 공공시설 발주시 우수업체에 인센티브 부여
시책 2. 안전전문팀 운영방안 강구

6. 목표별 정책지표

목표1 도시안전 취약구조 개선

[지표 1]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건수

구 분	1995	2001	2005	2010	2015	2020
인명피해	545	449	409	368	331	298

• 인명피해는 5년단위로 약 10% 감소를 목표로 함.

[지표 2] 비상수원확보 비율

구 분	1995	2001	2005	2010	2015	2020
비상수원	55%	67%	80%	100%	100%	100%

• 소방법시행규칙 제44조 적용, 2006년 64,415개소 설치완료를 목표로 함.

목표2 종합위기관리 체제 구축

[지표 3] 도시인구대비 병원전처리 성공률(생존율)

구 분	1995	2001	2005	2010	2015	2020
성 공 율	36.8%	40%	44%	49%	54%	59%

• 병원전 응급처치 성공률(생존율)을 5년단위로 5%는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함.

[지표 4] 1인당 담당해야하는 안전검사 대상수

구 분	1995	2001	2005	2010	2015	2020
대 상 수	3.5	3.6	3.7	3	2.3	1.5

• 안전검사 대상은 2006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가 2010년을 기점으로 감소.

목표3 시민자율 방재능력 향상

[지표 5] 검사만족도

구 분	1995	2001	2005	2010	2015	2020
만 족 율	60%	70%	78%	83%	88%	93%

• 안전검사에 대한 만족도를 매년 2%씩 증가 하였다가 2005년을 기점으로 5년단위로 5%씩 증가.

[지표 6] 시민참여 비율

구 분	1995	2001	2005	2010	2015	2020
참 여 율	30%	35%	45%	60%	70%	80%

• 시민 참여비율을 2010년까지 60%이상 높이는데 중점을 둠.

목표4 미래지향적 소방안전관리 기반 확충

[지표 7] 전산화시스템 구축비율

구 분	1995	2001	2005	2010	2015	2020
참 여 율	20%	60%	80%	95%	97%	99%

• 전산화시스템 구축비율을 2005년까지 80%이상 높이는데 중점을 둠.

제3부 실현방안

Ⅰ. 계획의 실현화방안

3

Ⅰ. 계획의 실현화방안



1. 현황과 문제점
2. 여건변화 전망
3. 실현화방안
4. 부문별 계획의 중장기 투자계획
5. 목표별 정책지표

1. 현황과 문제점

1) 행정 현황과 문제점

(1) 행정조직의 현황과 문제점

• 행정조직의 개편과 사무의 민간위탁

- [표 I-1]에 나타난 것과 같이 지난 십여년간 행정수요의 지속적 증대로 인해 공무원 수가 90년 총 14,568명에서 97년 총 18,309명으로 증가하는 행정조직의 양적 성장이 있었다.
- 점차 비대해지고 있는 시행정 조직에 대해 행정수요의 다양화와 재정압박의 증대는 효율적 조직으로의 전환을 요구하는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 이에 98년 이후 전개된 구조조정 조치를 통해 2000년 12월 현재 서울시는 공무원 수를 92년 수준인 16,000명 수준으로 유지하였고, 이에 필요한 직제개편이 이루어졌다.

[표 I-1] 서울시 본청의 행정조직 변천

년 도	공무원 수	직 제
1990 (7월1일)	14,568	1실 2관 15국 1본부 8담당관 85과 285계
1992 (7월10일)	16,296	1실 14국 5관 71과 237계 4본부 1원 67사업소
1994 (8월1일)	16,699	1실 13국 5관 237계 4본부 1원 64사업소
1996 (12월5일)	18,155	3실 13국 8관 73과 298계 3본부 1원 64사업소
1997 (12월5일)	18,309	3실 13국 8관 73과 298계 3본부 1원 84사업소
1998 (8월12일)	16,687	3실 8국 5관 65과 291담당 3본부 87사업소
1999 (12월31일)	16,166	3실 8국 5관 63과 290계 3본부 78사업소
2000 (12월31일)	16,169	3실 8국 5관 63과 291팀 3본부 79사업소

주 : 사업소를 포함.
자료 : 서울특별시 조직변천사 II, 2001.

- 이러한 구조조정 추세에 따라 자치구의 조직 또한 98년 총 25개 자치구의 25실 138과 에서 99년 48과로 통합 조정되었고, 자치구 공무원 수도 95년 3만7천여명에서 2000년 3만여명으로 감소하는 일련의 변화가 있었다.
- 이러한 결과로 서울시 전체적으로 97년 5만5천여명에 달하던 공무원이 2000년 현재 4만7천여명으로 7천6백여명이 감소되었다.
- 이와 같이 시행정의 효율화를 위한 행정조직의 축소 및 개편은 공공서비스를 효율적으로 공급함으로써 시재정을 절감하기 위한 일환으로 시행되었던 사무의 민간위탁과도 병행하여 이루어졌다.

- 서울시는 이미 98년까지 보건복지 분야와 환경관리 분야를 중심으로 민간위탁을 실시해 온 바 있으며, 시행정의 구조조정이 있었던 98년 이후에도 행정기능을 축소하고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일환으로 민간위탁이 확대·추진되었다.
- 99년 상수도 검침업무(강남, 강동 수도사업소), 여성발전센터 등 9개 기관을 민간에 위탁하였고, 2000년에는 탄천하수처리장, 청소년문화교류센터, 강남 자원회수시설과 노인종합복지관 4개소 등 11개 기관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중이다.
- 이러한 일련의 조치에 의해 2000년까지 본청과 사업소의 경우 모두 2,462명의 인원을, 투자기관의 경우 모두 4,261명(지하철공사 1,612명, 강남병원 63명, 농수산물공사 228명, 도시개발공사 26명, 시설관리공단 676명, 도시철도공사 1,656명)을 감축하였다.

[표 I-2] 서울시 공무원 연도별 현황 (단위 : 명,%)

년도	합계	서울시 소계	구 분		자치구
			본청	사업소	
1995	54,449	17,522 (32.2)	2,055	15,467	36,927 (67.8)
1997	54,973	18,309 (33.3)	2,610	15,699	36,664 (66.7)
1998	48,650	16,687 (34.3)	2,637	14,050	31,963 (65.7)
1999	47,774	16,166 (33.8)	2,819	13,347	31,608 (66.2)
2000	46,859	16,126 (34.4)	2,930	13,196	30,733 (65.6)

자료 : 서울시, 새서울시정개혁백서, 2001

[표 I-3] 서울시 사무의 민간위탁 추진현황(2001년 현재)

사무분야	사회복지	산업 · 환경	체육 · 청소년	보건 · 의료	문화예술	기타
102 (100%)	34 (33.3%)	21 (20.6%)	26 (25.5%)	10 (9.8%)	3 (2.9%)	8 (7.8%)

[표 I-4] 서울시 산하기관 민간위탁 현황(1999년 ~ 2000년)

구 분	민간위탁	기타		일부 사무위탁	비고
		법인화	기능전환폐지		
대상기관	7	1	1	11	

자료 : 서울특별시, 새서울시정개혁백서, 2001

- 행정조직 개편과 사무민간위탁이 행정운영의 효율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적절한 인사·조직 제도 정비와 공무원들의 전문역량 강화가 선결요건이라 할 수 있다.
- 실제, 민간위탁의 경우 그 목적이 경쟁원리 도입을 통해 조직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데 있으므로 비용효율성과 투명한 계약절차를 준수하되, 사무위탁 과정 및 결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사후 모니터링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 **전문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적절한 인사 · 조직 제도의 미흡**

- 복잡해지고 다원화된 사회에서 전문 지식과 행정처리 역량은 효율적 행정운영에 결정적 요소가 되고 있는데, 행정의 국제화 및 정보화 추세와 직결된 국제, 법률, 정보통신, 과학기술 분야에서 행정의 효율화 요구가 특히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 현행 서울시의 인사제도는 지방공무원법상의 직위분류제에 의거하여 경력직(일반직/특정직/기능직)과 특수경력직(정무직/별정직/전문직/고용직)을 대별한 후, 이를 다시 직군, 직렬, 직류로 세분화하고 있다.

- 그렇지만 이 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거대 직렬을 구성하는 행정직렬이나 토목직렬은 압도적인데 비해, 교육행정과 도시계획 등에는 정원이 거의 배치가 되지 않는 등 인력배치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아 직렬간 불균형이 존재하고 있다.

- 공무원의 인사이동의 경우에도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적 장치로 기여해 온 것이 사실이지만, 전문성이나 업무간 연계를 확보하기 어렵게 하는 문제를 지니고 있다. 실제 6급 이하 공무원의 경우, 한 직위당 재직기간이 1년 반에서 2년에 불과(4급과 5급 공무원의 경우 평균 재직기간이 17.74-18.71개월 정도)한 실정이다.

[표 I-5] 서울시 공무원의 평균재직기간과 평균보직수(4급 이상)

직급(명)	평균재직기간	평균 직위수	한 직위재직기간(월)
4급(70)	99.2	5.59	17.74
5급(68)	106.3	5.68	18.71
6급(26)	53.0	3.30	16.06
7급(24)	42.0	1.75	24.0
8급(14)	29.0	1.75	16.57
9급(12)	30.0	1.36	22.06

자료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서울시 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방안, 1999

- 한편 인사、조직 제도와 관련하여 최근 유연하고 분권화된 행정조직시스템으로의 전환도 활발한데, 전통적인 계선제로부터 실국 책임경영제와 팀제, 그리고 업무재설계(BPR) 도입 등이 이에 해당한다.

- 실국 책임경영제는 각 기관별、부처별 기능 및 사무에 대해 제반의 책임을 질 수 있는 행정시스템으로의 점진적 전환이 바람직하며, 이에 수반되는 적절한 권한을 위임함으로써 제도 운용의 내실을 기할 필요가 있다.

- 팀제가 가지는 의의는 행정조직의 전환을 통해 의사결정을 신속하게 하고 팀구성원들이 상호 협력·학습하게 함으로써 조직의 유연성을 도모하는데 있다.
- 이러한 제도는 기존의 위계적 계선제와 적절히 조정되지 못할 경우 하위 부서를 단순히 통합하거나 업무의 기능적 효율화를 위한 방편으로 전락할 수 있는 소지를 안고 있다.
- 이와 함께 시정효율화 방안의 하나로 98년 도입된 업무재설계는 전체 업무를 19개의 프로세스로 구분하고 각 업무프로세스에 대해 흐름도를 작성함으로써 각 업무의 성격을 상세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업무를 재설계 하였다.
- 현행의 업무재설계는 업무수행상의 중복, 낭비 등 행정 비효율을 제거하는데 초점이 주로 맞춰져 있는 바, 업무재설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관련 제도와의 연계성이 고려되지 않은 채 개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실정이다.
- 전반적으로 이러한 인사·조직 제도의 변화는 서울시 행정의 효율성 향상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것이지만, 운영의 묘를 살리고 시스템을 정착하기 위해서는 그 제도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할 것이 요구된다.
- 우선 무엇보다도 구성원들 사이에 목표의식을 공유하고 상호 협력할 수 있는 조직 문화가 확산되어야 할 것인데, 이를 위해 상기 제도들은 타 성과주의 제도와 연계·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업무재설계 또한 원활한 의사소통, 상호 학습과 제도의 혁신을 촉진시키는데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 업무재설계 또한 변화하는 계획환경에 대응하여 장기적이고 주기적으로 실행되어야 할 것이며, 성과주의 제도와도 연계되어 운용될 것이 요구된다.

(2) 성과 지향적이고 개방적인 행정시스템의 추진 현황

• 성과주의 제도와 그 보완

- 행정수요의 양적, 질적 증대를 포함한 계획환경의 변화는 행정체계가 더욱 성과지향적, 시민지향적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 이러한 변화추세에 대응하여 서울시는 최근 목표관리제, 시민평가제 등 성과지향적 행정제도들을 다각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 우선 목표관리제는 99년부터 5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시행하다가, 2000년 이후부터 4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여 년 1회를 실시하고 있다.

- 또한 시정운영에서 성과지향에 대한 요청은 공공서비스 공급에 관한 시민평가제의 도입으로도 이어졌는데, 서울시는 이를 위해 '99년부터 평가모델을 개발하고, 시민만족도를 조사(99년 6개 분야, 2000년 10개 분야)함으로써 연도별 측정결과를 대외적으로 공표 하였다.

[표 I-6] 서울시 시민평가제 추진 현황

시행 년도		시행 분야
1999년	상반기(6)	- 지하철, 보건의료, 민원행정, 상수도, 청소, 시내버스 등 6개 분야
	하반기(6)	상 동
2000년	상반기(6)	상 동
	하반기(10)	- 민원행정, 청소, 보건의료, 시내버스, 지하철, 상수도, 시립병원, 도시가스, 사회복지관, 세무행정
2001년 (26개 분야)	상반기(13)	- 민원행정, 청소, 보건의료, 세무행정, 사회복지관, 계약지출,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보육시설, 여성발전센터, 도서관, 청소년수련관, 체육시설
	하반기(13)	- 지하철, 시내버스, 상수도, 시립병원, 도시가스, 택시, 공원관리, 도시개발공사, 시설관리공단, 농수산물 공사, 종합병원, 장례식장, 민영아파트
2002년 (26개 분야)	상반기(13)	- 2001년 상반기와 동일
	하반기(13)	- 2001년 하반기와 동일

자료 : 서울시 내부자료

- [표 I-7]의 조사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각 분야별 시민만족도에 일정한 차이가 존재하는데, 민원, 보건소 분야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나타내는 반면, 상수도와 지하철 분야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 이러한 분야별 차이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공급에 대한 종합만족도 수준은 99년 상반기 59.6에서 2000년 하반기 62.2로 매 시기 점진적 향상을 보이고 있다.
- 이러한 성과지향적 행정체계로의 전환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시민평가제도는 평가지표 및 척도, 평가주체 및 대상자 선정 등 객관적인 평가방법의 마련이 미흡하고, 평가결과가 서비스 공급의 질적 향상으로 환류하는 제도적 장치를 미비하는 등 제도운영상의 문제가 있었다.

[표 I-7] 각 분야별 시민평가 만족도 현황

분야	종합 만족도	민원	보건소	청소	시내 버스	지하철	상수도	복지관	도시 가스	세무 행정	시립 병원
'99년(상)	59.6	71.1	63.4	62.2	57.6	56.5	47.1				
'99년(하)	60.6	73.7	63.4	61.1	57.8	52.4	54.4				
2000년(상)	62.1	73.8	66.1	63	58.8	52.5	58.3				
2000년(하)	62.2	74.8	65.3	61.1	60.7	56.2	54.9	74.3	69.3	67.4	62.1

자료 : 서울시, 새서울 시정개혁백서, 2001

- 양질의 공공서비스에 대한 시민들의 수요가 확대되는 추세에 비추어 볼 때, 향후 시민평가의 제도적 확대를 위해서는 합리적 시민평가제 운용을 위한 제도적 개선책이 요구된다.
- 시민평가제는 2003년 이후 행정품질평가제로의 전환이 예정되어 있는데, 우선 평가주체 및 평가지표 등 시민평가모델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이 요구됨은 물론, 평가 결과를 통해 서비스 공급기관의 질적 향상을 유도할 수 있는 다각적인 인센티브 제도가 필요하다.

• 투명한 행정에 대한 요구 증대와 그 대응

- 서울시는 투명한 행정시스템을 확립하기 위해 시민감사관제, 청렴계약제와 민원처리온라인시스템과 같은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 시민감사관제는 시민단체, 감사원, 검찰이 각각 추천한 3명의 감사관에 의해 시민감사 청구사항 감사, 감사결과 시정조치 및 제도개선 등을 수행하는 제도인데, 2002년 10월 현재 시민감사 32건, 시장의뢰 14건, 고충민원 26건, 주민감사 4건 등이 처리되었다.
- 현재 인터넷 활용의 증대와 전자정부로의 전환추세에 비추어 볼 때 사이버상의 옴브즈만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청렴계약제는 입찰-계약체결-이행의 3단계로 구성되며 이를 위반할 시에 시정요구 내지 감사를 요구할 수 있게 한 것인데, 2000년 12월 현재 서울시에서 발주하는 총 644개의 사업이 모두 청렴계약제의 대상이 되고 있다.
- 이 제도의 효과는 반부패지수, 즉 청렴도 측정을 통해 파악되는데, 2000년 현재 7개 분야 전체적으로 향상되고 있음을 보이며, 특히 과거 부패소지가 상대적으로 컸던 주택건축 및 건설공사에서 일정한 개선이 있었다.
- 민원처리 온라인 공개시스템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행정의 신속, 투명, 공정, 편리를 도모하고자 한 것으로, 이 제도를 통해 민원처리과정에서 그 절차가 가하거나 처리기간이 길고, 부조리 개연성이 높은 업무를 공개한다.
- 온라인 공개시스템은 도시계획, 건설공사, 교통, 주택 등 10개 분야로 되어 있고, 사업은 업무별 특정 사업명을 입력하게 되어 있으며, 문서에는 업무분석시 공개절차를 규정한 절차별 표준모델로 구성되어 있다.

[표 I-8] 서울시 각 분야별 청렴도 현황

구분	평균	위생	세무	주택건축	건설공사	소방	교통행정	공원녹지
'99	64.0	67.5	63.6	60.8	58.7	69.5	-	-
2000	68.3	68.9	65.8	65.9	68.3	72.8	69.1	67.0
증감	4.3	1.4	2.2	5.1	9.6	3.3	-	-

자료 : 서울시, 새서울 시정개혁백서, 2001

- 1999년에 26개 업무가 인터넷에 공개된 이후, 2000년도에 2회에 걸쳐 28개 업무를 추가하여 현재 54개 업무가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공개되고 있다.
- 이 시스템이 개설된 이후 2년 반이 지난 2002년 10월 현재 방문자수가 3,172천명(1일 평균 3,200명), 사업등록이 178천건, 문서등록이 968천건에 이르고 있으며, UN과 공동으로 온라인 공개제도를 전 세계에 보급하고자 한다.

• **규제의 정비와 적극적 규제시스템의 확립**

- 민간부문의 다양한 요구와 공공부문의 창의적 사고가 요구되는 계획환경은 비합리적인 규제를 정비해야 할 필요를 크게 증대시키고 있다.
- 이에 서울시는 98년 5월 규제개혁위원회를 구성하는 동시에, 규제개혁신고센터를 설치하여 기존의 고충처리 방식에서 규제중심의 일괄정비로 제도적 틀을 전환하였다.
- 2000년 현재 모두 1,114개의 규제사무가 발굴되어 이 가운데 462개의 사무가 폐지되고, 372개의 사무가 정비되었다.
- [표 I-9]에 나타나듯이, 문화관광, 교통, 환경, 산업 분야가 상대적으로 많이 폐지되었고, 건축, 소방, 보건복지는 상대적으로 많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 이러한 여건에서 인구집중과 도시과밀로 인해 환경/교통/주택、건축 분야에서 새로운 문제들이 출현、심화되고 있어 기존의 수동적 규제정비체제로부터 적극적인 규제정비체제로의 전환이 시급해지고 있다.
- 공익적 차원에서 합리적 규제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것과 더불어 규제에 인센티브를 적절히 절충시킬 수 있는 방안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표 I-9] 서울시 규제사무 제도개선 현황

분야별	규제사무수	폐지		개선		존치	
		사무수	비율	사무수	비율	사무수	비율
계	1,114	462	41.5	372	33.4	280	25.1
주택분야	117	44	37.6	17	14.5	56	47.9
건축분야	99	37	37.4	48	48.5	14	14.1
보건복지분야	55	15	27.3	21	38.2	19	34.5
산업분야	74	34	45.9	27	36.5	13	17.6
경제분야	87	30	34.5	22	25.3	35	40.2
문화관광분야	202	110	54.4	65	32.2	27	13.4
환경분야	79	38	48.1	26	32.9	15	19
소방분야	41	15	36.6	20	48.8	6	14.6
교통분야	84	46	54.8	19	22.6	19	22.6
건설공사분야	112	32	28.6	42	37.5	38	33.9
상수도분야	52	21	40.4	26	50	5	9.6
일반행정분야	112	40	35.7	39	34.8	33	29.5

자료 : 서울시, 새서울시정개혁백서, 2001

(3) 지식기반사회에 대응하는 전자정부의 추진현황

• 정보인프라 구축과 시정업무의 정보화

- 지식기반사회로의 이행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전자정부는 정보인프라의 구축과 행정정보시스템의 확립 등 두 축을 근간으로 전개되고 있다.
- 정보인프라의 구축이 첨단 정보하부구조를 통해 시 전체를 네트워크화하는데 기초한 것이라면, 행정정보시스템의 확립은 다음의 세 가지 구성요소가 그 핵심을 이루고 있다.

  · 전자문서관리시스템 · 민원처리공개시스템

  · 지식관리시스템

- 이러한 행정정보시스템 운용과 관련하여 시스템의 성과를 높이는데 관건은 다양한 지식의 축적과 더불어 축적된 지식의 흐름 및 활용에 있으며, 특히 이전되기 힘든 암묵적 지식(tacit knowledge)을 관련 주체와 기관들 사이에 널리 공유·확산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 서울시의 경우, 90년대 중반부터 광역통신망구축계획을 계기로, 99년 시청 본관과 별관간 자가광케이블을 포설하였고, 2002년 현재 지하철 노선을 활용하여 서울시 36개 기관을 연결하는 광케이블 180㎞를 포설하는 등 정보인프라 구축을 본격화하고 있다.
- 정보인프라 구축과 함께 시정업무의 정보화도 추진되고 있는데, 상기 정보인프라를 통해 기존의 결재방식을 전자결재로 대체하는 전자결재시스템과 문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자문서관리시스템(EDMS)을 추진하고 있다.
- 현행 문서관리시스템은 부서별로 자기 업무에만 필요한 형태로 정보가 입력되고 있어 타 부서와의 정보공유 및 활용이 미흡하고, 정책결정과정에 요구되는 정보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각 개인들의 업무상 경험과 학습으로부터 획득되는 암묵적 지식이 시정업무 수행에 효과적으로 활용되고 있지 못하다는 점에서 암묵적 지식들을 데이터베이스화할 수 있는 효과적인 지식관리시스템 확립이 당면한 과제이다.

• 정보에 대한 개방적 접근과 혁신적인 민원처리

- 전자정부가 가지는 다른 의의는 전자정보처리장치를 활용하여 시민 모두에게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절차적 민주화를 증진시키고 정보획득 및 민원처리 과정에서 발생하기 쉬운 시민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사실에 있다.
- 행정정보 공개는 이미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등 필요한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었는데, 이 조례에 따라 9종의 정보가 정례적으로 공표되고, 14종의 정보는 수시로

공표하도록 되어 있으며, 시정운영에 관련된 기본 사항을 필수적으로 공개토록 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다.

- 그러나 시민과 시민단체에 의한 정보공개청구가 여전히 증대되고 있는데서 볼 수 있듯이, 현행 행정정보 공개가 공급자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이 문제로 지적될 수 있다.
- 전자정보처리를 통한 시정운영은 민원처리에서도 그 효력을 발휘하고 있는데, 인터넷 사용의 급증에 힘입어 기존의 방문 및 대면접촉에 의한 민원처리로부터 온라인을 통한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처리가 가능해지고 있다.
- 서울시의 경우 99년 8월 온라인 민원처리에 필요한 관련 계획을 수립하고, 2000년 7월부터 사이버민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제도를 통해 시본청과 사업소 민원 375종, 구청과 동사무소 민원 500종에 대한 인터넷 민원서비스 처리와 사이버상에서의 민원상담 및 지방세 납부가 가능해졌다.
- [표 I-10]에서 알 수 있듯이 민원실을 운영한 지난 6개월간 3,000건 이상의 민원상담이 처리되는 등 상당한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향후 사용이 지속적으로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 이와 동시에 시민만족도 조사결과(99년 상반기 실시), 민원처리부서의 분산에 따른 불만이 제기됨에 따라 이 불만을 해결하기 위해 민원처리기능을 집중·처리하는 원스톱 민원처리체계로써 새서울 민원봉사실이 마련되었는데, 현재 13개부서 34명이 파견되어 30종의 증명민원발급, 5개 생활민원 상담, 시정에 대한 불만·진정·건의 등을 접수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 이러한 현황 및 문제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향후 정보민주화를 향한 전자정부구현에 있어서 제도적 개선 및 확대가 요구되는데, 우선 체계적인 정보수요조사와 정보분류에 기초하여 종래의 공급자 지향적 정보시스템으로부터 사용자 지향적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
- 이와 함께 정보공개에 따른 사후적 파급효과나 부정적 결과를 사전에 면밀히 분석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절차를 확립하는 것도 시급하다.
- 이외에 온라인 민원처리에 있어서는 더욱 광범위한 행정영역으로 확대하고, 그 처리방식이나 절차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표 I-10] 사이버민원실 민원상담 처리현황(2000. 7. ~ 2000. 12)

구분	계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건수	3,018	650	881	570	456	461

[표 I-11] 새서울민원봉사실 민원사무 처리현황 (단위 : 건, 천원)

구분	'98		'99		2000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100,081	51,730	104,708	47,809	125,506	39,632

자료 : 서울시, 새서울 시정개혁백서, 2001

2) 재정 현황 및 문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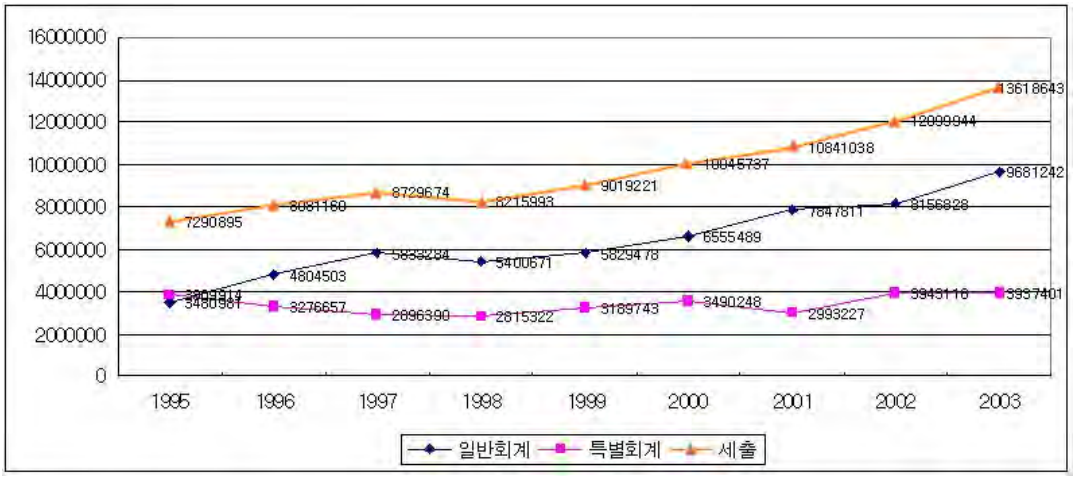
(1) 지방재정구조의 현황과 문제점

• **선진국형 세출구조로의 점진적 이행**

- 서울시의 세출은 [그림 I-1]에서와 같이 90년대 중반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98년 외환위기를 전후하여 일시적 감소가 있었다.

- 99년 이후 세출결산총액이 10조를 상회하는 재정규모에 도달했으며, 2003년 현재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 13조 6천 2백만원 규모에 이르고 있어 명실상부한 대도시 행정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 회계별 세출 구성을 보면 1995년 이후 2003년까지 일반회계는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인 반면, 특별회계는 정체된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95년에는 특별회계가 일반회계를 약간 상회하다가, 96년 이후 일반회계가 우위를 보이는 가운데 양 회계간의 차이가 점차 확대되어 2003년 현재 양 회계는 71:29의 구성비를 보이고 있다.



자료: 서울시 통계연보, 각년도.

[그림 I-1] 서울시 본청 세출추이(1995-2003)

[표 I-12] 서울시 세출의 기능별 구성(2002년 현재) (단위 : 백만원)

일반회계				특별회계	
본청		자치구		본청 + 자치구	
전체	8,156,828	전체	3,469,762	전체	4,184,069
• 일반행정비	282,940	• 일반행정비	1,685,311	• 가업	746,179
• 사회개발비	4,063,683	• 사회개발비	1,377.549	• 기타	3,437,890
• 경제개발비	1,999,276	• 경제개발비	377,682		
• 민방위비	326,435	• 민방위비	18,795		
• 지원 및 기타경비	1,484,494	• 지원 및 기타경비	10,425		

자료 : 서울시, 서울통계연보, 2003

- 기능별 세출구조의 경우, [표 I-12]에 나타나듯이 2002년 현재 본청은 사회개발비가 가장 높은 비중인 49.8%를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경제개발비가 24.5%를 차지하여 전체 세출에서 이들 두 기능이 차지하는 비율은 74.3% 정도에 달한다.

- 전체 재정에서 지방재정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선진국의 경우, 기능별 세출 구성에서 사회개발비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표 I-3] 참조), 이와 비교하여 서울시 세출은 여전히 경제개발비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는 하나, 점차 선진국형 구조로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표 I-13] 주요 선진국 중앙과 지방의 세출 기능별 구성

	일본			영국			미국		
	계	중앙	지방	계	중앙	지방	계	중앙	지방
일반행정	9.1	1.9	7.3	4.1	3.1	1.0	6.2	4.4	1.8
국방	3.3	3.3	–	7.6	7.6	–	11.2	11.2	–
교육	15.3	2.1	13.2	10.6	2.6	8.0	17.7	1.0	16.7
사회개발	43.4	13.2	31.2	43.3	35.4	7.9	41.5	26.8	14.7
경제개발	7.2	2.2	5.0	6.7	5.0	1.7	7.6	3.3	4.3
기타	20.8	11.9	8.9	27.6	23.0	4.6	16.8	8.9	7.9
합계	100.	34.4	65.6	100	76.8	23.2	100	54.5	4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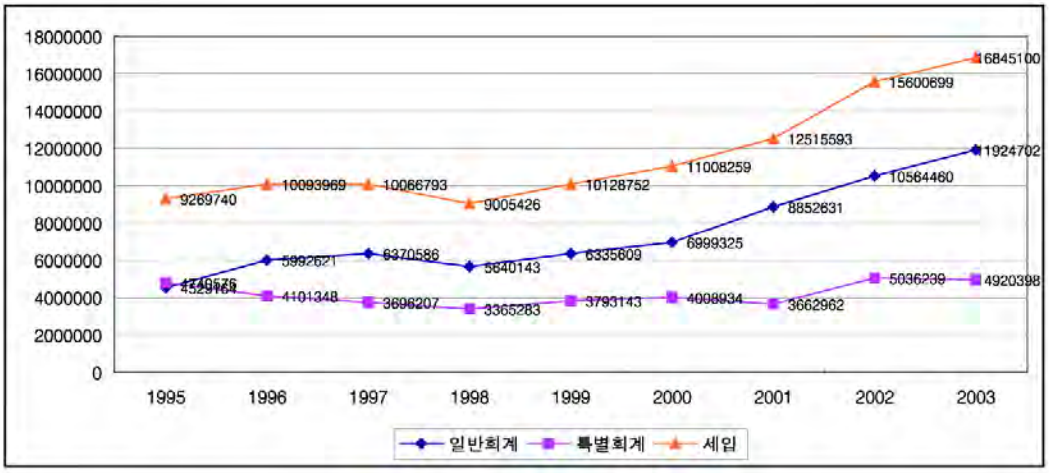
자료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서울시 재정지출 요인분석 및 수요전망, 2000

• 시세입의 구조적 취약성과 지방재정제도

- 지방세입은 [그림 I-3]에서와 같이 97년 이후 일시적으로 감소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3년 현재 세입은 16조8천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이들 시세입의 58.3%인 9조8천억원이 지방세로 충당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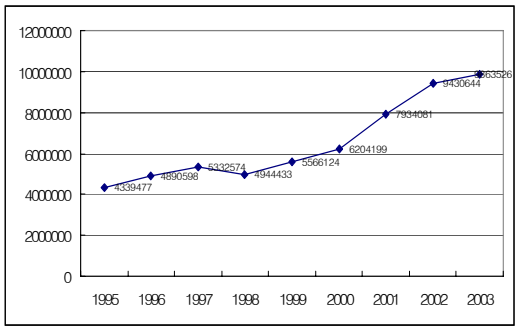
- 주민 1인당 세부담 또한 98년을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00년 이후에는 큰 폭의 증가를 보여 2003년 현재 97만원에 달하고 있는데, 이는 95년 수준을 2배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 전체적으로 지난 95년 이래로 세입은 세출을 상회하고 있으며, 회계별 세출구조도 일반회계를 중심으로 하는 재정구조를 보여, 비교적 건전한 재정구조로 발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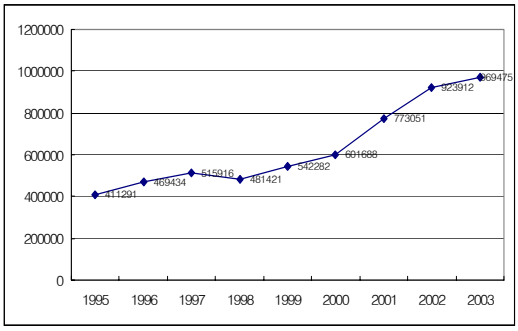


자료: 서울시 통계연보, 각년도.

[그림 I-2] 서울시 본청 세입추이(1996-20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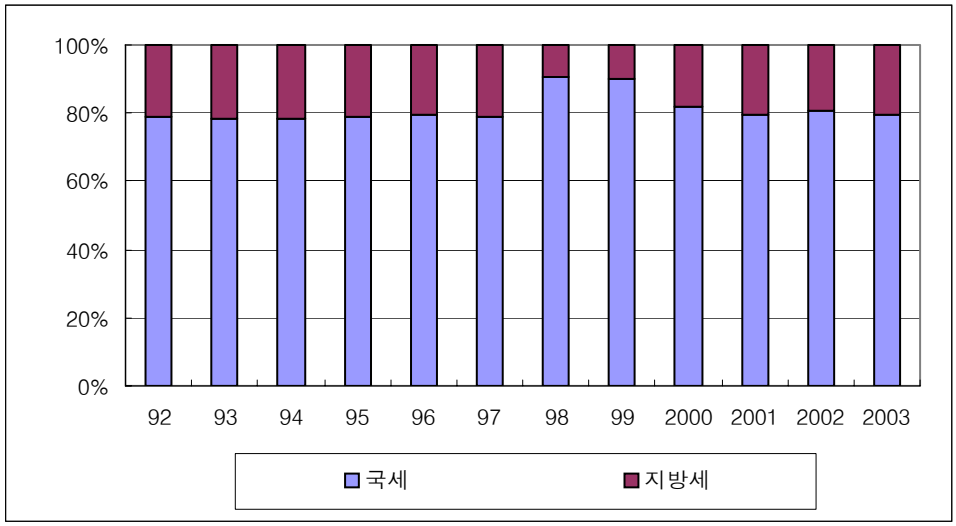
[그림 I-3] 서울시 지방세 추이(1995-2003)



[그림 I-4] 1인당 지방세 부담액 증가 추이

- 외관상으로 재정구조가 건전한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세입은 여전히 취약한 구조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중앙과 지방간 재정관계를 규정하고 있는 제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 현재 중앙과 지방의 재원배분은 각각 80%, 20%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들 재원 가운데 국세인 소득세의 경우 중앙과 지방에 각각 93% 대 7%, 지방세인 재산세의 경우 중앙과 지방에 각각 약 20% 대 80%가 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 [표 I-14]는 서울시의 지방세 구성을 나타내고 있는데, 전체 지방세입 가운데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부동산 관련 세제가 52.2%(시세 가운데 44.1%)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 이러한 부동산거래 관련세제는 경기흐름에 상당히 민감한 세원이라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세입의 불안정을 초래하고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반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소비관련세제는 대개 중앙에 귀속되고 지방에 귀속되는 유일한 소비관련세제가 담배소비세로써, 전체 서울시세 가운데 6.3%에 불과한 실정이다.
- 일반회계를 기준으로 할 때 지방세 대비 세외수입 비율은 2001년, 2002년, 2003년 각각 11.7%, 13.2%, 23.7%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기는 하나, 전체적으로 지방세입에서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저조하므로 향후 다각적인 세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필요가 있다.



2001년까지는 결산액, 2002년과 2003년은 당초 예산액
자료 :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예산개요, 각년도.

[그림 I-5] 중앙재정 대 지방재정의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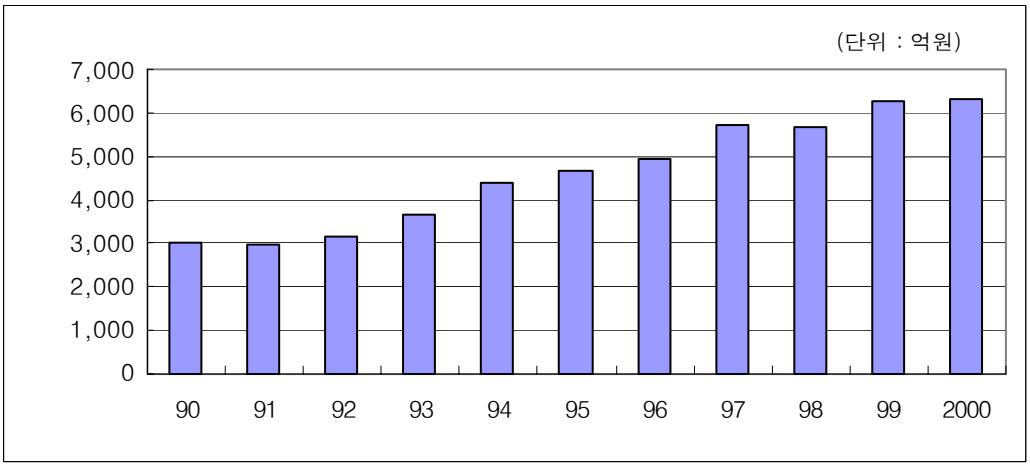
[표 I-14] 서울시 지방세 구성 내역(2003년) (단위 : 백만원, %)

서울시 지방세			
시세		구세	
취득세	1,551,146 (17.8)	재산세	239,334 (24.7)
등록세	2,303,475 (26.4)	종합토지세	541,886 (55.8)
주민세	1,796,022 (20.6)	면허세	17,580 (1.8)
자동차세	417,259 (4.8)	사업소세	155,512 (16.0)
농지세	3 (0.0)	과년도 지방세	16,205 (1.7)
도축세	3,484 (0.04)		
레저세	259,160 (3.0)		
담배소비세	552,174 (6.3)		
주행세	288,000 (3.3)		
도시계획세	323,497 (3.7)		
공동시설세	105,790 (1.21)		
지역개발세	593 (0.01)		
지방교육세	842,164 (9.64)		
과년도 지방세	134,720 (1.54)		
계	8,733,000 (100.0)	계	970,517 (100.0)

주 : ( )는 비중임.
자료 : 서울시, 서울통계연보, 2003

(2) 시의 부채증가와 재정압박

- **재정자립도에 대비되는 높은 부채수준**
  - 일반적으로 도시재정의 여건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 가운데 하나가 재정자립도인데, 서울시의 경우 재정자립도는z 98년과 99년 각각 97.9%, 90.7%를 보여 지역의 재정자립도 평균인 60%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
  - 그렇지만, 이와 같이 시의 재정자립도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해서 재정이 건전하다거나 재정적 자율성의 여지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 실제 서울시는 높은 재정자립도에도 불구하고 매년 누적되고 있는 부채로 인해 상당한 재정압박에 직면하고 있다. [그림 I-6]에서 알 수 있듯이 시 부채는 90년 3조원에서 95년 4조7천억원, 99년에 6조3천억원으로 증가하여 지난 10여년간 2배의 증가를 나타낸다.



자료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서울시 부채관리 종합대책 연구, 1999
서울특별시, 서울시 지하철 부채관리 특별대책, 2001

<그림 I-6> 서울시 부채증가 추이(1990-2000)

- 2000년 말 현재 서울시의 부채는 총 6조3천억원에 이르고 있는데, 이는 2001년 기준 서울시 전체 예산 11조3천7백8십6억의 53.4%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 이 부채총액 가운데 28.97%가 서울시 부채에 해당하며, 나머지 71.0%인 4조4천7백6십억원이 시투자기관의 부채에 해당하는데, 시 부채의 경우 일반회계 부채가 1,692억원(2.68%), 특별회계 부채가 1조 5,524억원(24.64%)을 차지하고 있다.
- 시의 부채 가운데 상하수도 특별회계 부채가 향후 수익자부담으로 상환 관리할 수 있게 되어 부채는 점차 감소할 것인데 비해,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시 부채의 주된 증가요인이 되고 있어 상환시기가 도래할 경우 재정부담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

• **지하철 부채를 중심으로 한 악순환**

- 현재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부채는 대부분 지하철 부채와 관련된 것으로써, 2000년 말 현재 지하철 관련 부채는 서울시 부채의 80.9%를 차지하는 총 5조 2천억원이다.
- 이러한 지하철 부채 가운데 도시철도 특별회계 부채가 2000년 12월말 기준 6,237억을 차지하고 있고, 투자기관 부채로써 지하철공사 부채가 2000년 말 현재 2조 6,244억원, 도시철도공사 부채가 1조 8,500억원을 각각 차지하고 있다.
- 이러한 추세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2004년에 6조 94억원, 2008년에는 6조 480억원, 2010년에는 6조 1,421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바, 시 부채가 점차 감소됨에도 불구하고 지하철 부채로 인한 재정압박이 증대될 것이기 때문에 부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각적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표 I-15] 서울시 부채운용 현황(2000년말 현재) (단위 : 백만원)

구 분	부채 현황	점유 비율(%)
부채 총규모	6,301,747	100
서울시(본청)	1,825,874	28.97
- 일반회계	169,151	2.68
· 지하철건설	101,000	1.60
- 특별회계	1,552,439	24.64
· 도시철도건설	623,680	9.90
시투자기관	4,475,873	71.03
· 지하철공사	2,624,470	41.65
· 도시철도공사	1,850,821	29.37
· 도시개발공사	582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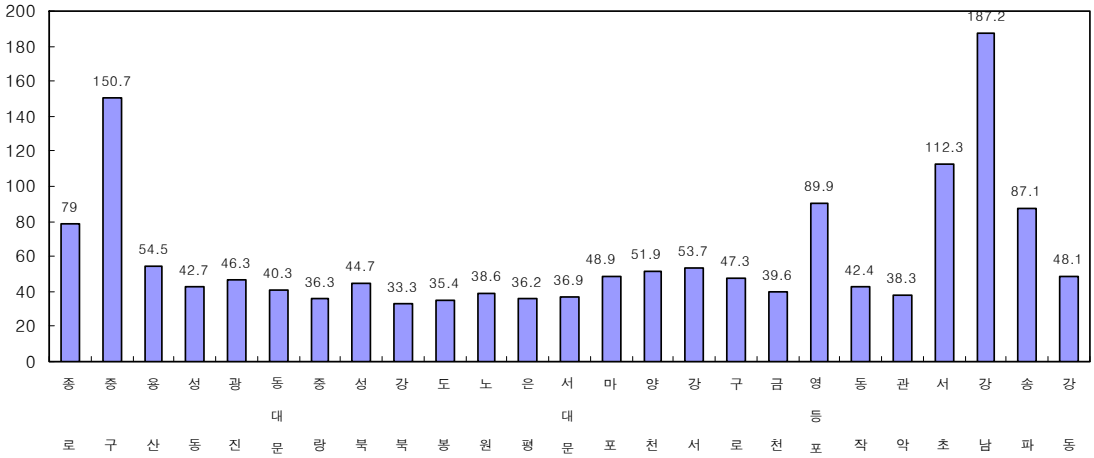
자료 : 서울특별시, 지하철 부채관리 특별대책, 2001

(3) 불합리한 정부간 재정조정제도

- **서울시에 대한 중앙정부의 차별적인 지원제도**
  - 중앙정부의 재정조정제도에는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 등이 있고, 자치구간 재정조정제도로는 조정교부금, 시비보조금, 시비예산 재배정 등이 있다.
  - 현재 정부의 재정조정제도는 하급정부의 재정수요를 체계적으로 반영하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어, 하위 개별 자치단체들이 나타내는 현행의 재정적 취약성과 지역간 재정 격차를 해결하는데 미흡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 특히, 지방교부세와 관련하여 서울시는 재정자립도가 높다는 사실을 이유로 들어 교부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재정자립도가 서울시의 실제적인 재정적 여건이나 재정력을 정확하게 반영한 것이라 보기 힘들다.
  - 자치구의 경우에도 교부세의 교부근거인 기준재정수요를 광역자치단체인 서울시에 합산하여 산출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세 교부의 현실화가 미흡한 실정이다. 즉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하는 자치구마저 지방교부세를 교부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 실제 98～2001년 동안 서울시 전체 25개 자치구의 기준재정수요 충족도는 각각 67.0%, 56.3%, 59.9%, 65.1%로 평균 62.1%에 불과하여 서울시 전체의 높은 재정자립도와는 상당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 도로정비, 수질오염방지, 청소년육성, 지역개발에 양여하는 지방양여금의 경우에도 중앙정부는 지방양여금 배분에서 서울시를 제외하고 있지만, 부문별 계획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서울시에서 이들 영역에 대한 행정 수요는 급격하게 증대되고 있다.

$$\text{재정력 지수} = \text{기준재정수요충족도} = \frac{\text{기준재정수입액}}{\text{기준재정수요액}}$$



<그림 1-7> 서울시 자치구별 기준재정수요충족도 현황(1998 ~ 2001년 평균)

• **서울시 재정조정 기능의 미흡**

- 2001년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예산규모는 총 3조 7,209억원으로 자체재원이 50.4%, 의존재원이 49.6%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총 1조 2,334억원의 조정교부금을 교부하고 있다.
- 1998 ~ 2001년까지의 서울시 각 자치구들은 서로 다른 사회경제적 조건, 재정적 기반의 차이로 인해 강남과 같이 기준재정수요충족도가 187%에 이르는 자치구가 있는 반면, 서대문구와 같이 33.3%에 불과한 자치구가 있어 상당한 재정력 격차가 존재하고 있다.
- 실제 187%로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내는 강남구에 이어 서초구가 114.9%, 중구 158.8%, 영등포구 99.5%로 상대적으로 높은 재정력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 반면, 강북구가 35.1%, 중랑구가 36.1%, 은평구 37.3%, 서대문구 37.5% 정도에 불과한 실정이다.
- 이처럼 강북 지역의 자치구와 비교하여 강남 지역의 자치구들의 상대적으로 높은 재정력 수준은 필요경비의 조달에 상당한 격차를 유발하는바, 강남구, 서초구는 필요경비의 100%를 훨씬 초과하여 조달할 수 있는 반면, 강북구 등 강북 지역의 8개 자치구는 필요경비의 40%도 조달하기 힘든 재정능력을 가지고 있는 실정이다.

- 이처럼 향후 점점 심화될 소지를 안고 있는 자치구간 재정력 격차는 행정서비스의 질적 차이는 물론, 궁극적으로 서울시 전체의 균형적 발전과 사회통합의 유지를 저해할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관심과 해결노력이 필요하다.
- 현재 이들 자치구간 재정력 격차 및 일부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적 취약성을 해결하기 위해 재정조정제도가 운용되고 있는데, 각 자치구의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기 힘든 단순한 기준재정수요액 산정체계가 상당한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 뿐만 아니라, 조정교부금 재원이 취득세/등록세와 같이 부동산 경기에 민감한 불안정한 재원에 기반을 둔 시의 재정에만 의존하고 있는 등 조정에 필요한 충분한 세원을 확보하기 힘들어 국세와 지방세 재조정과 같은 보다 근원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4) 재정계획·운용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 중기재정계획

- 중기재정계획은 전통적인 통제목적을 위주로 하는 단년도 예산제도의 제약성을 보완하기 위해 단년도 예산을 중장기의 사업계획과 유기적으로 연계시키고자 도입된 제도이다.
- 중기재정계획은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주요 정책 방향이나 재정여건의 변화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계획 내용의 변경에 재정계획이 유연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연동계획(rolling plan)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 서울시는 현재 예산수립과 실행을 위해 중기재정계획을 활용하고 있는데, 이 계획에 따라 서울시의 정책과 주요 사업 예산은 다음과 같이 8개 부문으로 편성되고, 매년 5개년 중기재정계획이 수립·집행되고 있다.

  - 방재
  - 환경보전
  - 문화수준 향상
  - 산업경제
  - 도로교통
  - 사회복지 증진
  - 주택-도시개발
  - 행정

- 2000년 현재 서울시의 중기재정계획(2000-2004)은 향후 5년간 총투자비로 31조 6,139억원이 도시안전, 교통, 환경, 복지, 문화, 주택·도시개발, 도시안전, 문화, 일반행정, 산업경제에 배분되어 있다.

[표 I-16] 서울시 중기재정계획

구분	계	도시안전	도로교통	환경
금액 (백만원)	31,613,967 (100)	2,353,034 (7.4)	12,223,186 (38.7)	6,355,701 (20.1)
복지	문화	주택 · 도시	산업경제	일반행정관리
4,750,934 (15.0)	1,083,483 (3.4)	3,053,501 (9.7)	861,468 (2.7)	932,660 (3.0)

자료 : 서울특별시, 중기재정계획(2000-2005)

- 동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도시발전의 장기적 방향을 담는 동시에 구체적인 정책에 지침을 제공해 주는 도시기본계획을 수립·집행하는데 있어서도 중기재정계획 틀에 입각할 필요가 있다.

• 성과 지향적 예산 운영

- 현재 시의 예산제도는 목표관리제와 예산제도를 통합적 틀 속에서 운영한다는 취지에 따라 기능·사업·활동별로 예산을 편성하는 동시에 객관적인 성과지표를 엄선한 뒤, 이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성과주의 예산제로 전환하고 있다.

- 이와 같은 성과주의 예산제에 따라 우선 조직별 성과관리와 예산편성을 위한 성과계획이 수립되는데, 성과계획은 조직별 임무, 정책목표와 달성수준 및 수단 등이 체계화 되어 있는 시정운영의 기본계획임과 동시에 성과관리를 위한 종합계획이라 할 수 있다.

- 성과계획에 따라 예산이 편성·집행되고, 집행결과에 대해 업무평가 절차에 따라 연말에 종합적인 성과평가가 이루어짐은 물론, 차년도 계획수립과 예산에 환류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 따라서 목표관리제와 성과주의 예산은 궁극적으로 조직의 성과향상이라는 동일한 지향점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상호 긴밀하게 연계·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제도의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중요한 요건이 되고 있다.

- 목표관리제와 성과주의 예산제는 객관적이고 측정이 가능한 목표와 성과지표의 설정이 제도의 성공에 관건을 이루는 바, 객관적 지표설정에 비교적 어려움이 많은 사무들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인 지표설정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 이와 함께 평가의 결과가 근무 고과 및 보수에 반영되기 때문에 조직의 성과를 향상시키려는 원래의 취지보다는 용이한 목표를 설정하려는 경향으로 인해 제도운영이 보수적으로 흐를 소지가 있다.

• **투융자 심사**

- 2001년 9월 개정된 지방재정법은 건축비가 50억원 이상 소요되는 청사 신축에 대해 재정투융자심사 전에 미리 전문기관의 타당성 조사를 거칠 것을 의무화하여 객관적 근거 위에 청사를 신축하도록 제도화하였다.

- 이러한 타당성 조사는 ① 공공·공공용 건물의 건축타당성 여부, ② 건축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위치와 규모의 적정성, 재원분석 내용과 사업비 조달 방안의 타당성, 사업기간의 적정성, 기본설계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 ③ 건축 이후 건축물 관리방안으로써 직영관리 여부, 관리위탁 여부, 기타 관리방법 등을 그 내용을 하고 있다.

-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 규칙은 투자사업심사 대상사업의 범위를 [표 I-16]에서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표 I-17] 투자심사 대상사업의 범위

구분	대상사업 범위
자체심사	- 시, 군, 자치구의 사업비 30억원 미만의 신규투자사업과 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신규투자사업 - 특별시, 광역시, 도의 사업비 200억원 미만의 신규투자사업과 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신규투자사업
시도 의뢰심사	- 시, 군, 자치구 사업비 3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의 신규투자사업 - 2개 이상의 시, 군, 구와 관련되는 사업
중앙 의뢰심사	- 시, 도 또는 시, 군, 구의 사업비 200억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 - 2개 이상의 시, 도와 관련되는 사업 - 외국의 자본이 도입되는 사업 - 기타 행정자치부 장관이 국가경제 및 사회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자료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사회간접자본 투자결정체계합리화방안 연구, 2002

- 이러한 법률적 요건에 따라 서울시는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사업의 타당성, 필요성 등을 사전에 심사하도록 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 총사업비 3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 차관사업 또는 시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자치구 사업으로써 10억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 2개 이상 자치구에 관련되는 사업, 기타 시장이 투자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은 서울시가 투자심사를 수행하고 있다.

- 반면, 총사업비 200억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 가운데 국고보조금 등이 지원되는 사업, 2개 이상의 시·도와 관련되는 사업 등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 장관의 투자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다.

- 투융자 심사제도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는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되는 있는지 여부, 투자심사 기준, 평가절차 및 방법 등인데, 1996-2000년간 제안된

260여개의 투자심사 대상사업 가운데 약 7.3%만이 중기 재정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등 양자간 제도적 연계가 미흡한 실정이다.

- 가기준이나 평가절차와 관련해서는 현재 투자심사 매뉴얼을 정비하고 현장 중심의 투자심사를 강화하고, 1,000억원 이상 규모의 투자사업에 대해 2단계 심사제도를 도입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향후 심사기준이나 심사절차를 분야별 특성에 맞게 다양화할 수 있는 지속적으로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3) 기본계획 실현화의 현황과 문제점

(1) 기본계획의 위상과 실현상의 문제

- 계획기간이 장기간이라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계획환경이 나타내는 복잡화, 다양화, 역동성 증대는 목표 및 시책의 전제인 예측의 타당성과 계획실현의 불확실성을 증대시키고 있다.
- 매 5년 단위로 기본 계획의 실현(추진)성과를 지속적으로 재검토함으로써 계획실현을 본래의 계획수립에 재연계시키는 환류시스템을 구축하는 것과 아울러, 계획실현과정 및 성과를 모니터링하고 평가할 수 있는 체제를 확립해야 할 것이다.
- 계획의 실현과 관련해서도 계획과 예산을 연계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고 있는데, 실제에 있어서는 이들 두 기능이 분리되어 있어 계획의 실현을 어렵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 마찬가지로 조직적 측면에서도 도시계획과, 타부서에서 계획관련 부서, 그리고 예산관련 조직과의 상호연계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2) 상·하위 계획과의 정합성 문제

- 제 4차 국토종합계획은 더불어 잘 사는 균형국토, 자연과 어우러진 녹색국토, 지구촌으로 열린 개방국토, 민족이 화합하는 통일국토 등 네 개의 목표를 추구하고 있다.
- 이러한 목표하에 개방형 통합국토축 형성, 지역별 경쟁력 고도화, 건강하고 쾌적한 국토환경 조성, 고속교통·정보망 구축, 남북한 교류협력기반 조성과 같은 5대 추진전략 하에 다양한 과제와 시책들이 추진되고 있다.

- 특히 행·재정 부문의 경우에는 국토계획의 법적、제도적 기반 강화, 국토개발투자재원의 다변화와 효율적 조달, 지역중심의 개발 및 지역간 협력체계 확립 등을 목표로 하여 다양한 시책들이 모색되고 있다.
- 제 2차 수도권 정비계획은 지역을 균형적으로 개발하고 도시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조를 두고 계획의 기본 방향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설정하였다.
  - 세계화, 지방화 시대의 전개 및 통일 대비 미래지향적 공간구조의 기틀 마련
  - 수도권 외곽에 지역특성을 고려한 자족적 지역생활권 형성
  - 수도권과 지방간 및 수도권내 지역간 적정 수준의 기능분담 추진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역할분담
  - 지역생활권별 정비계획 마련

- 제 2차 수도권 정비계획에서 행·재정 계획은 계획의 관리와 효율적 재원조달을 목표로 하여 5년 주기로 평가를 보완하고, 추진 사업들을 중장기재정계획에 반영하며, 민간/자치단체/중앙정부간 투자재원을 분담하는 시책을 마련하였다.
- 마지막으로 도시기본계획의 관련계획 가운데 하나인 광역도시계획도 수립되었는데, 이 계획에서는 국가경쟁력을 주도하는 동시에 삶의 질 향상을 기조로 하여 다음과 같은 계획의 기본방향을 설정하였다.
  - 환경보전의식 증대에 부응
  - 세계화 시대의 국제경쟁력 제고
  - 정보화, 광역화, 지방화에 따른 다원화된 생활문화 창출
- 이처럼 최근 수립된 국토종합계획, 수도권 정비계획, 수도권 광역계획 등은 현행 서울시 기본계획의 상위계획으로써 거시적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기본계획을 실현하는데 있어서 이들 계획내용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수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특히 계획의 기조나 기본방향이 국토의 균형발전 및 중앙、지방간 협력, 세계화와 지방화에 대응하는 공간구조의 마련, 쾌적한 생활환경 확보와 자연환경의 보전 등에 두고 있기 때문에 기본계획의 수립과 그 실현에 있어서도 이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 이들 상위계획에서의 변화와 함께 하위 계획에서도 상당한 변화가 있는데, 과거 자치구가 수립하던 기본계획은 도시계획으로 대체되어 이들 도시계획에 기초하여 매년 자치구 계획을 수립·집행해 가고 있다.
- 이러한 여건 하에서 시의 기본계획 및 도시계획이 각 자치구에서 수립·집행하고자 하는 자치구 계획과 실행계획에 지침을 제시하고 조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치구에 대한 획일적이고 위계적인 계획조정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자치구의 특성 및 여건, 사무 및 계획의 성격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적절한 관계정립이 요구된다.
  - 자치구의 차별적 특성과 여건을 반영하는 사무들 : 자치구의 자치사무 기능을 강화
  - 유사성、연계성을 요하는 사무들 : 자치구와 서울시의 협력 체제를 강화
  - 자치구간 경쟁적, 갈등적 사무들 : 자치구에 대한 서울시의 조정기능 강화

(3) 부문계획의 상호 연계 및 조정 문제

- 대도시가 내재하는 계획 환경의 보편적 특성인 각 부문간 상호연관과 중첩이 점차 심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계획의 실행에 관련된 부서는 말할 것도 없고, 시민사회나 주변 자치단체와 같이 관련된 주체들과의 협력의 필요성도 현저해지고 있다.
- 이러한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본 기본계획상의 부문계획에서도 많은 목표와 시책들이 상호 연관、중첩되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 따라서 이들 부문계획에서 추구될 목표와 추진될 시책들이 계획의 실현화 과정에서 어떻게 통합되고 조정·연계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고민과 함께 효과적인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2. 여건변화 전망

1) 거시적 사회환경 변화와 전망

(1) 복잡하고 역동적인 국제환경의 전개

• 경제 환경의 세계화와 파급효과

- 경제활동의 글로벌화를 매개하여 전개되는 기업의 국제적 분산, 금융의 실시간 이동은 경제시스템의 근본적 변화를 의미하고 있다. 상품의 수출입을 넘어 생산과 연구개발을 둘러싼 해외기업의 직접투자 및 다자간 전략제휴, 기업간 인수합병(M&A)은 도시경제의 흥망성쇠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
- 이러한 변화는 경제 영역 자체는 말할 것도 없고 정치·사회 전반에 심대한 영향을 주고 있는데, 1997년 외환위기는 국제환경의 변화가 국가 전반의 금융시스템(환율/금리/주가)을 심각하게 교란시키고, 지역적으로 기업 활동에 직접 영향을 줄뿐만 아니라 대량실업 및 사회적 양극화와 같은 사회적 파급효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잘 예시하고 있다.
- 전국적으로 97년 이후 기업의 부도율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특히 서울은 99년 하반기 이후 전국 평균 부도율을 상회하는 수준이고, 2000년 현재 전국 6,693개의 부도업체 가운데 30% 이상인 2,555개가 서울에서 발생하였다.
- 실업의 경우에도 전국적으로 98년 이전의 2%대에서 98년 6.8%, 99년 6.3%, 2000년 4.1%로 급상승하였고, 서울의 경우 98년 이후 각각 6.8%, 6.9%, 4.8%로 전국보다 더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표 I-18> 서울시 부도율 현황(99.1.4-2000.4.4)

구분	96	97	98	1999				2000			
				1/4	2/4	3/4	4/4	1/4	2/4	3/4	4/4
전국	0.14	0.40	0.38	0.11	0.12	0.70	0.35	0.23	0.17	0.28	0.37
서울	0.08	0.36	0.30	0.09	0.11	0.75	0.38	0.24	0.16	0.28	0.37

자료 : 한국은행, 통화금융통계, 각년도

• 불확실성의 증대 및 새로운 행·재정 수요에 대한 효과적 대응

- 국제경제상의 교란으로부터 초래되는 파급효과는 계획 환경 전반에 걸쳐 불확실성과 위험을 증대시키고, 새로운 행·재정적 수요를 유발하고 있다.

- 이는 계획의 실현과 관련하여 상술한 파급효과에 가급적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시스템이 갖춰져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 지역 내·외부의 기업들에게 유리한 사업 환경을 제공하고, 이와 함께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대량실업이나 사회적 양극화 문제를 해결해 가는 것이 계획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실현해 가는데 있어서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2) 도시행정의 국제화 및 교류 증대

• 서울시 주요 기능 및 활동의 국제화

- 현대 대도시에서 주요 기능 및 활동들의 지리적 범역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이에 과거 중앙의 소관 사무이던 국제교류 및 협력네트워크가 도시정부 차원에서 활성화되는 등 도시행정의 국제화도 꾸준히 전개되고 있다.
- 이러한 추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국제연합(IULA), 세계대도시연합(METROPOLIS), 국제시/카운티경영자협회(ICMA)와 같은 국제기구에의 참여, 미국 국제자매도시협회(SCI)와 같은 국가기관과의 교류 등 지자체의 국제교류 활동이 증대되고 있고, 관련해서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도 증가하고 있다.
- 서울시 본청은 샌프란시스코와 동경 등 18개 도시와 그리고 25개 자치구 또한 46개 시 및 구와 자매결연을 체결한 바 있으며, 국제회의의 경우에도, 93년 59건, 94년 50건, 95년 70건, 96년 67건, 97년 70건 등 90년대 이후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 국제사회를 향한 인식과 관점의 전환

- 이러한 변화추세에 따라 행·재정 제도상의 국제적 표준(global standard)의 확립, 해외 우수사례의 교류·확산, 환경/보건/안전과 같은 공동관심사에 대한 상호협력 및 국제적 협약체결이 급속하게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 국제적 수준에서 각 주체간 상호이해증진, 인력 및 지식의 다각적인 교환이 중요해지고 있는 바, 이는 계획 환경을 한 국가나 도시에만 국한시키지 않고 국제사회로 확대하는 인식과 관점의 전환을 요구하는 것이다.
- 향후 도시행정의 국제화와 관련하여 시행정의 국제화에 대응할 수 있는 관련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행、재정 제도상의 국제적 추세변화 및 국제 규범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정보체계를 확립하며, 이를 다각적으로 촉진·지원할 수 있는 민관협력체제 및 전문가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것이 주요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3) 지식사회 및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

• 인적·물적 자원 및 지식 흐름의 가속화

- 새로운 교통·통신 수단의 발전은 e-Commerce, e-Community와 같은 새로운 사회관계와 라이프스타일이 발전하는데 촉매제로 작용하고 있다.
- 2000년 5월 현재 인터넷 인구는 1,500만명을 돌파하였고, 인터넷 도메인 수나 호스트수의 급증 등 인터넷 인프라 수준도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이에 힘입어 개인간(C2C),기업과 개인간(B2C), 기업과 기업간(B2B), 기업과 정부간(B2G), 기업과 기업, 개인간(B2B2C), 시장과 시장간(M2M) 등 다각적인 전자상거래 형태가 전개되고 있다.
- 행정적 측면에서 볼 때, 이러한 변화는 시민들의 직업적 유연성과 전문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고, 새로운 공동체적 정체성과 문화를 촉진할 수 있는 행정지원시스템을 요구하는 것이다.
- 이와 유사하게 현재 국제적 추세가 되고 있는 도시행정영역의 정보화 또한 신속한 의사결정, 효율적인 행정서비스 전달, 공무원들간 상호교류와 학습의 증대를 가능하게 한다.
- 현재 서울시는 공공기관을 광케이블로 연결하는 초고속 광통신망을 구축하고, 지하시설물 및 건축물과 같은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정보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다각적 노력을 벌이고 있다.
- 이러한 노력으로 정보인프라는 어느 정도 구축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지식의 흐름을 촉진하고, 지식을 상호교류·학습할 수 있는 시스템은 여전히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

• 사회계층의 분화 및 행정수요의 다양화

- 산업사회에서 지식기반사회로의 이행에 따라 사회의 분화가 심화되는 동시에 사회에 새로운 주체들이 출현하고 있으며, 이러한 가운데 이질적 가치와 다원화된 문화를 지향하는 집단들이 도시사회의 전면에 등장하고 있다.
- 산업경제의 측면에서 첨단지식기반산업과 같은 산업의 형성·확대는 새로운 지식노동자를 형성하고 있다. 이들은 직업적/지리적 이동성 증대, 일과 여가의 융합 등 산업의 특성에 따라 새로운 가치와 라이프스타일을 추구하며 지식관련 서비스를 강렬하게 요구한다.
- 사회복지의 측면에서도 여성 및 새로운 세대의 권리신장에 따라 새로운 행정수요가 증대되고 있으며, 사회적 양극화 과정에서 파생된 새로운 하위계급, 소외집단에 대한 사회적 안정망 확충도 시행정의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 도시정치의 측면에서도 다원적 이해집단의 이질적 가치와 다양한 문화에 개방되는 구조로 전환되고 있으며, 이에 상응하여 도시행정 또한 과거 권위주의나 관료주의가 통용되던 시대로부터 더욱 고양된 시민의식과 더욱 증대된 시민권리에 대면하고 있다.

(4) 개발과 보존을 둘러싼 경쟁

• 교통문제 및 환경문제의 심화와 새로운 도시개발 압력

- 인구증가와 산업화는 대도시 교통체증과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바, 서울시 교통혼잡비용이 91년 1조 3,900억원에서 97년 4조 3,960억원으로 3.21배 증가하였고, 대기오염도 심각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 서울시와 각 자치구, 민간에 의해 신산업을 육성하고 관련 인력을 수용하기 위한 주거지 개발 등 도시개발의 새로운 압력이 증대되고 있다.
- 이처럼 교통, 환경 등 환경보존을 둘러싼 요구와 도시개발을 둘러싼 요구가 동반 발전하고 있어, 향후 장기계획의 실현에 상당한 제약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령 기성시가지의 재개발에서 해당 공간을 어떤 용지로 개발할 것인지를 둘러싸고 이해당사자간의 경쟁과 갈등이 심화될 것이다.

• 공유자산 및 시설을 둘러싼 경쟁 및 갈등의 심화

- 교통 및 환경문제의 심화와 더불어 사회의 민주화 증대 및 이해관계의 다양화는 선호공공시설과 기피공공시설의 입지문제를 둘러싸고 집단간 경쟁과 갈등을 점차 첨예하게 만들고 있다.
- 쓰레기 소각장이나 매립장, 교통·통신과 같은 기반시설, 각종 산업지원시설, 장묘사업소, 여가시설, 사회복지시설 등 최근 그 수요가 증대되고 있는 시설 등인데, 이들 공공시설들은 직·간접적으로 해당 부동산의 경제적 가치를 변화시키고, 주거지 쾌적성 등에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주는 바, 시설의 입지선정과 개발과정에서 새로운 도시갈등으로 대두되고 있다.
- 95년 6월부터 97년 5월의 2년간 국토개발관련 분쟁사례는 총 3백40건 정도로 정부간 분쟁이 50%, 정부와 주민간 분쟁이 50%를 차지하고 있고, 입지를 둘러싼 분쟁이 65%, 권한을 둘러싼 분쟁이 35%를 각각 차지한다.
- 특히 환경문제를 둘러싼 분쟁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데, 91년에서 97년까지 발생한 환경 분쟁은 모두 280건(공공기관과 관련된 분쟁이 146건)으로 폐기물이나 하수 등 환경기초시설 관련한 분쟁이 82건(36.4%)을 차지하고 있다.

[표 I-19] 서울시 지역개발관련 분쟁사례

갈등사례(갈등주체)	갈 등 내 용
저밀도 아파트지구 재건축기준관련 (서울시-지역주민)	• 저밀도 아파트지구의 재건축방향(용적율 등)에 대한 의견차이 - 주민들은 300 ~ 400% 용적율 요구, 서울시 270% 인정
목동자원회수시설 증설분쟁 (서울시 양천구-지역주민)	• '93. 9. 기존 소각장 시설용량을 150톤/일에서 550톤/일로 증설발표하자 소각장 주변주민들의 반대 • 서울시가 공사입찰을 실시하는 등 사업시행을 추진하자, 주민들이 강경하게 집단행동, 교착상태 진입
마포자원회수시설 건설분쟁 (서울시-마포구 지역주민)	• 주민협의체와 협의과정에서 중구·용산구를 처리권역으로 한 시설설치 반대('95년)
도봉자원회수시설 건설분쟁 (서울시-도봉구 지역구민)	• 인근주민의 건설반대('94년)
노원자원회수시설 건설분쟁 (서울시-노원구 지역주민)	• '92년에 노원·중랑·동대문구 쓰레기를 처리하는 광역시설을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다이옥신 발생 등 공해물질의 위해성을 우려, 주민들이 건설을 반대. • 노원구 자체시설로 축소완공('96. 4)후에도 주민협의체 구성 등 주민요구사항 수용을 주장하며 시험가동을 저지
난지도 골프장 건설분쟁	• 상암도 난지도 골프장 건립계획에 대한 시민단체의 반대 및 녹색서울시민위원회와의 갈등
서울시립 추모공원 건설 분쟁	• 서울시의 제 2시립 추모공원 건립계획에서 부지로 선정된 서추구 주민의 건립 반대

자료 : 행정자치부·국토연구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1999), 지방자치시대의 분쟁사례집

- 서울시의 경우 이러한 문제는 해당 시설을 경기도와의 경계지역에 설치하는 예가 빈번해 짐에 따라 도시갈등 광역화 현상과도 중첩되어 나타나고 있다.

- 이처럼 증대되고 있는 집단 간 경쟁과 갈등 양상은 공공부문과 주민 그리고 시민단체 등 이해당사자간 자율적 협의, 대화와 설득, 토론 및 협상이 존재할 경우 해결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국내외 사례를 통해 입증되고 있다.

- 따라서, 이처럼 증대되고 있는 경쟁과 갈등 현상을 놓고 관련된 이해당사자간 협력과 조정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사회적、경제적、환경적 파급효과에 대한 철저한 조사에 기초하여 적정 보상체계를 마련하고 관련 시설 및 서비스의 관리실태도 공개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2) 제도적 여건변화 및 전망

(1) 중앙사무의 지방이양 확대와 신 중앙집권주의 출현

• 중앙사무의 지방이양 확대

- 지방자치제의 실시 이후 중앙 사무가 점차 지방으로 이전되는 분권화 경향이 전개되고 있다. 그 일환으로 99년 1월 '중앙행정권한의지방이양촉진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사무이양을 추진하고 있다.
- 지방이양추진을 통해 607건이 이양되고, 153건이 위임, 49건은 공동사무로 되는 등 중앙 대 지방의 정부간 관계는 점차 분권적 관계로 이행되었다. 이양사무의 경우, 시도 280건 대 시군구 327건, 위임사무의 경우, 시도 79건 대 시군구 74건, 공동사무의 경우, 시도 4건 대 시군구 45건을 나타내고 있으며, 보건복지가 134건, 환경 174건, 건설교통 123건인 반면, 산업자원 95건, 행정자치 75건을 차지하고 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양되는 사무기능이나 귀속주체와 관련하여 시민생활이나 지역개발에 필요한 중요한 사무는 관련 법률에 의해 여전히 국가사무로 존속하고 있고, 법률상의 의무불이행에 대해 이행명령제를 두고 있다.
- 99년 지방공기업법 개정에서도 지방공기업에 대한 규제완화를 반영하여 지방공사나 공단의 경우, 이사장 임명권, 공사 및 공단설립권, 자본금 출자 승인권 등이 단체장에게로 이양되었다.

[표 I-20] 1999년 지방이양대상사무 발굴 현황

부처 / 재배분 유형		계	건설교통	문화관광	보건복지	농림	해양수산	산림청	행정자치	환경	산업자원	노동	법무	병무	외교통상
계		815	123	41	134	38	72	23	72	174	95	8	14	17	6
지방이양	소계	607	76	35	111	19	58	21	63	104	89	7	14	10	–
	시도	280	30	7	27	10	34	13	29	75	47	–	–	8	–
	시군구	327	46	28	84	9	24	8	34	29	42	7	14	2	–
지방위임	소계	153	41	6	1	19	10	2	4	53	6	–	–	5	6
	시도	79	24	3	1	4	10	–	1	31	5	–	–	–	–
	시군구	74	17	3	–	15	–	2	3	22	1	–	–	5	6
공동사무	소계	49	1	–	21	–	4	–	4	17	–	–	–	2	1
	시도	4	–	–	1	–	2	–	1	–	–	–	–	–	–
	시군구	45	1	–	20	–	2	–	3	17	–	–	–	2	–
위임기관 변동 기타		6	3	–	1	–	–	–	1	–	–	1	–	–	–

• **중앙집권화의 역행적 경향 출현**

- 중앙정부는 지방재정의 건전 운영이라는 취지하에 지방교부세법 개정을 통해 보통교부세 산정에서 종래 운영되던 인센티브제를 강화하고, 방만한 재정운영에 대해 교부금을 감액하는 패널티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 이와 함께 지방공기업법 재개정을 통해 현재 자치단체 조례로 규정되어 있는 지방공기업 사장 추천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바꾸고 행정자치부 장관과 자치단체장이 공유하는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권한을 행정자치부 장관으로 일원화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기초단체장 임명직, 부단체장 국가직화, 자치단체장에 대한 서면경고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 이와 같이 최근 전개되는 있는 중앙정부의 재집권화 경향은 지방화라는 국제적 추세에 역행하는 것이며, 지방자치의 본래의 취지와도 부합하지 않은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통제는 중앙정부에 의한 행정통제보다는 시민참여 및 시민에 의한 통제를 통해 추구되어야 할 것이다.

• **지방이양에 필요한 정치 · 행정적 역량 강화**

- 대도시 서울 시정의 복잡성, 역동성, 다양성 등에 비추어 볼 때 해당 지역의 사정에 밝고 새로운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으며, 주민들의 참여가 실질적이기 위해 부문별 계획시책 관련 사무들의 실질적 이양이 더욱 촉진되어야 할 것이다.
- 사무의 이양과 관련하여 사무의 성격과 절차적 요건을 파악하여 관련 부서로 사무를 적절하게 귀속시키는 것도 행정시스템의 측면에서 중요한 문제이며, 현실에 적절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인력을 지속적으로 교육·양성하는 것도 중요하다.
- 실제 많은 유사 내지 관련 정책들이 중앙의 서로 다른 부처들에 의해 경쟁적으로 추진되는 상황에서 중앙의 조직구조(부처의 편성)와 서울시 조직구조의 차이는 계획실현에 장애로 작용할 수 있다.

(2) 자치구의 자율성 요구 증대 및 불균형의 심화

• **자치구의 독자성 및 자율성 요구 증대**

- 지방자치제 이후 구청장이나 구의회의 정치적 이해관계, 지역사회 주민조직(CBOs)의 활성화는 자치구의 독자성과 자율성을 증대시키고 있다.

- 실제 각 자치구는 자신들의 자원과 역량을 토대로 다각적인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외에도 해당 자치구의 주민조직들도 독자적으로 혹은 자치구 정부와 공동으로 지역개발 과정에 참여하고 있다.
- 이러한 독자성 및 자율성의 요구는 지방화의 시대에 창의적인 지역개발을 촉진하고 광범위한 주민참여를 활성화할 것이므로 육성되어야 할 바람직한 가치라 할 수 있다.
-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개별 자치단체의 자율적인 지역개발 노력은 자칫 과도한 개발과 자치구간 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상호 조정되고, 연계되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 자치구간 행·재정적 역량의 차이

- 자치구가 가지는 경제적, 사회적 조건의 차이는 자치구간 상당한 격차를 유발하고 있는데, 특히 90년대 이후 강남과 강북의 불균형적인 발전은 점차 심화、확대되는 경향을 나타나고 있다.
- 이러한 불균형 발전은 궁극적으로 자치구간 행、재정적 역량의 불균형으로 이어져, 대도시 서울의 중요한 정책문제로 부상하고 있는 바, 도시계획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도 적극적인 관심과 다각적인 해결책이 요구된다.
- 이러한 해결책을 모색함에 있어서 자치구의 자발적 노력과 역량을 강화하는데 우선적으로 초점이 맞춰야 할 것이며, 필요한 경우 서울시의 행、재정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3) 광역행정수요 및 자치단체간 협력의 필요성 증대

• 도시의 광역화 및 광역행정수요 증대

- 8,90년대 전개되었던 서울로의 집중은 최근 들어 서울 외곽지역으로의 확산을 통해 수도권 집중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수도권 집중 현상은 1)과잉개발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 2)난개발을 예방 및 치유하기 위한 다차원적인 광역행정수요를 유발하고 있다.
- 그러한 결과로, 현재 광역적 공공시설의 설치, 광역적 계획의 수립 및 집행, 사회적 편익과 비용의 배분 등을 둘러싼 광역적 도시관리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는 대도시 행정의 미래에도 심각한 도전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I-21] 수도권 지자체간 주요 분쟁사례

분 쟁 명	분쟁 내용
팔당댐 수자원 관리	경기도 의회와 서울시가 팔당댐 수자원 관리를 둘러싸고 갈등
평촌-관악구 신림 도로개설사업	서울시와 경기도가 통과 노선사업비 부담문제를 놓고 갈등
지하철7호선 차량기지건설	서울시와 의정부시가 차량기지 건설을 둘러싸고 갈등
과천-우면산간 연결도로 개설	경기도와 서울시가 연결도로 개설을 둘러싸고 갈등
용마산터널, 암사대교 건설	서울시와 구리시가 도로 및 암사대교 건설 협의과정에서 사업비분담과 노선을 둘러싸고 갈등
부천시 작동-고척동간 도로개설	광역교통계획상의 도로노선개설을 두고 서울시와 부천시가 갈등
광명시 기아대교 및 진입도로 확장	대교 및 진입도로 확장에서 시행구간배분을 둘러싸고 서울시와 광명시가 갈등
강남구 대왕교 조기가설	대왕교(강남구 율현동) 철거후 재가설하지 않아 이용자들의 불편을 초래
강변북로(천호대교-토평동간) 건설	사업비 분담문제를 둘러싸고 서울시와 구리시가 갈등
가양대교 북단 연결도로 개설	도로개설에서 사업부 분담문제로 서울시와 고양시가 갈등
송파 소각장 건설	성남시와 경계지점인 송파구 장지동 송파소각장 건립에 대해 성남시의 반대로 갈등
강서구 오곡동 소각장 건설	일일 1,500톤 규모의 소각장을 건설하려는 서울시의 계획을 부천시가 반대하여 서울시와 부천시가 갈등
의정부 경전철 건설사업	종착역 환승역사 건립부담금 문제로 서울시와 의정부가 마찰

자료 : 행정자치부; 국토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자치시대의 분쟁사례집, 1999

• 광역 조정 및 협력제도의 미흡

- 도시서비스의 광역화에 대처하기 위한 수도권 행정협의회, 특정 사무의 일부 혹은 전부를 공동 처리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조합, 사무위탁을 통한 광역행정처리, 중앙정부의 조정에 의한 광역행정(물관리정책조정위원회,수질개선기획단,중앙및지방분쟁조정위원회, 중앙 및 지방환경분쟁위원회 등)
- 수도권 행정협의회를 통해 수도권 광역교통대책기구 설립, 한강상수원 수질관리대책기구 설립이 이루어졌고, 지방자치단체조합에 의거 수도권 매립지관리조합이 수도권 쓰레기 문제에 공동 대처하기 위해 설립 운영되었다.
- 수도권 행정협의회의 경우 매년 2회 시행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매년 1회 정도 실시(92년 이후 감소하다 98년 이후 증가)되었다. 전체 9회 협의를 통해 111건이 협의된 결과, 56%가 합의된 반면 21건이 계속 협의되고 있고 28건은 중앙에 건의된 것으로 나타났다.
- 이와 같은 광역적 차원의 조정 및 협력 제도의 운영에도 불구하고, 동 제도는 실효성을 가지지 못하고 있으며, 중앙정부에 의한 조정에 주로 의존하는 실정이다.

- 현행 제도는 광역행정에 일정한 기여를 보이고 있으나, 첨예한 사안에서 조정기능의 미흡, 대표성과 부서 및 전문인력의 결여, 예산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문제해결역량이 부족하고, 분담에 관한 합의원칙도 부재하고 있는 실정이다.
- 관련 자치단체간 실질적인 협의와 조정을 위한 행·재정 시스템을 구축하고, 법적 해결책 외에 관련 당사자간 설득과 협상, 제 3자의 알선·조정·중재로 이루어진 대안적 논쟁과 해결책을 활성화하는 것이 향후 광역행정에서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표 I-22] 수도권 행정협의회 현황

구분	협의결과				추진현황		
	계	합의	계속 협의	중앙건의	계	추진 완료	추진중
제 1회 (88.12)	20	9	3	3	20	16	4
제 2회 (89.6)	15	6	3	6	15	13	2
제 3회 (90.6)	16	9	2	5	16	14	2
제 4회 (91.11)	14	8	5	1	14	12	2
제 5회 (92.11)	14	11	–	3	14	8	6
제 6회 (93.11)	7	5	–	2	7	5	2
제 7회 (95.12)	3	3	–	–	3	2	1
제 8회 (98.9)	10	4	2	4	미확인		
제 9회 (98.11)	12	7	1	4	미확인		
합	111	62	21	28	89	70	19

자료 : 행정자치부 내부자료

(4) 시민참여와 파트너십의 활성화

• 시민참여 요구의 증대

- 정치적 민주화의 전개로 인해 가치가 다원화되고, 시민권리의식이 증대됨에 따라 행정의 결정과 집행과정에 대한 개별 시민 및 집단들의 정보공개와 참여에 대한 열망이 증대되고 있다.
- 전통적으로 공청회, 행정정보 열람, 위원회와 같이 시민참여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가 운영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운영과정이 다분히 사후적이고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 최근 유럽의 도시정책결정과정에서 심의민주주의에 기반을 두고 실험이 이루어지고 있는 새로운 참여 기법들은 전통적인 대의민주주의제를 보완하고 실질적인 시민참여를 활성화하는데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 **협력적 관계정립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써 파트너십**

- 서구 사회에서 비영리 부문과 파트너십 제도의 발전은 시민사회의 참여욕구와 부족한 시의 재정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으로 인식되고 있다.
- 사회적 자본이란, 상호이익을 위해 조정과 협력을 촉진하는 네트웤, 규범, 신뢰, 그리고 이에 기초한 비영리의 각종 사회단체를 의미하는데, 이들 사회적 자본은 지역사회의 유대를 강화하는 접착제이자, 경제적 성공을 보장하는 촉진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 서울시를 포함하여 전국적으로 90년대 이후 비영리부문이 비약적으로 확대되었고, 이러한 발전에 기초하여 현재 비판자로서의 역할과 협력자로서의 이중적 역할을 다각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 2000년 11월 현재, 서울시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거하여 214개의 비영리 민간단체가 등록되어 있는데, 이 가운데 시민사회, 문화체육, 보건복지, 환경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 방재, 국제, 산업경제, 도시계획과 같은 영역에서 비영리 민간단체 설립은 여전히 미흡한 수준에 있으며, 활동범위도 자치구보다는 전국과 서울시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
- 건전한 사회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다양한 영역에서 활력적으로 운영되는 비영리 민간단체를 육성하는 동시에, 자치구 수준에서 활동하는 비영리 민간단체를 육성·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장기적으로 이들 비영리 민간단체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해 감으로써 견제와 동반자적 역할을 확립해야 할 것이다.

[표 I-23] 서울시 비영리민간단체 현황(2000년 11월 현재)

활동분야	단체성격		활동범위		계
	민간시민단체	법정시민단체	전국/서울시	자치구	
시민사회	41	15	41	15	56
문화/체육	38	36	2	38	38
보건/복지	31		27	4	31
환경	25		21	4	25
여성	24		23	1	24
교통	19		19		19
방재	3	3	4	2	6
국제	5		5		5
산업/경제	4		3	1	4
도시계획/주택	3		3		3
신문/방송	3		3		3
계	196	18	185	29	214

자료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서울시와 NGO의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사례연구, 2000

• **시정 운영에서 위원회의 활용**

- 현대 도시행정에서 위원회제는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는 절차적 기제로써 운용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자문위원회에서 심의 및 의결위원회로의 전환을 통해 위원회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국제적 추세가 전개되고 있다.
- 그간 양적, 질적으로 확대되었던 위원회를 정비함으로써 2,000년 현재 서울시에는 50개의 위원회, 자치구에는 1,241개의 위원회가 활동 중인데, 사회복지나 인·허가와 관련된 건설교통·보건복지 위원회가 상대적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산업경제·안전관리·환경관리 위원회는 상대적으로 미약하다.
- 서울시의 경우 심의위원회가 48%, 자문위원회가 40%, 의결위원회가 16.8%를 차지하여 전국이나 자치구에 비해 의사결정기구인 심의·의결위원회보다 형식적 기구인 자문위원회가 상대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 지난 3년간 서울시 전체적으로 위원회 운영은 99년 470회, 2000년 519회, 2001년 511회 등이 개최되었는데, 지난 3년간 17개의 위원회가 5회 이하의 회의개최를 보여 다분히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2000년 1년간 8개의 위원회는 개최실적이 없고 8개는 단 1회의 개최에 불과한 실정이다.
- 따라서, 위원회별로 목적 및 기능, 절차를 명확히 하되, 일정범위 안에서 결정권 내지 집행권을 부여함으로써 위원회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각계각층의 요구와 전문지식을 반영할 수 있도록 대표성을 확립해야 할 것이다.
- 위원회와 시민사회의 주요 단체들과 연계를 활성화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상의 상향적 채널을 확보하고, 위원회 활동과 성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함으로써 제도개선의 기초로 삼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 I-24] 위원회 설치분야별 분포 (단위 : 개, %)

구분	계	기관운영	보건복지	건설교통	산업경제	농림수산	문화예술	안전관리	환경관리
전국	10,509 (100)	4,262 (40.6)	1,756 (16.7)	1,645 (15.7)	928 (8.8)	551 (5.2)	540 (5.1)	535 (5.1)	292 (2.8)
서울	50 (100)	14 (28)	7 (14)	10 (20)	3 (6)	1 (2)	7 (14)	2 (4)	6 (12)
자치구	1,241 (100)	493 (39.7)	223 (18.0)	271 (18.0)	103 (8.3)	7 (0.6)	37 (3.0)	71 (5.7)	36 (2.9)

[표 I-25] 위원회 성격별 분포 (단위 : 개, %)

구분	위원회수	심의	의결	자문	협의
전국	10,509 (100)	6,753 (62.5)	1,890 (18.0)	1,176 (11.2)	870 (8.3)
서울	50 (100)	24 (48.0)	3 (6.0)	20 (40.0)	3 (6.0)
자치구	1,241 (100)	757 (61.0)	207 (16.7)	174 (14.0)	103 (8.3)

3) 계획여건 변화에 따른 새로운 행정수요 발생

- 각 시책들로 구현된 새로운 행정수요([표 1-25] 참조)는 서울 시정에 도시 거버넌스로의 이행을 뒷받침하는 제도들을 도입하고 운영상의 내실을 기하는 것이 계획의 실현과정에 긴박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을 함축한다.
  - 상호조정과 협력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시책들의 원래 취지나 효과성은 손상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각 부문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목표와 시책들은 관련 주체를 명확히 하고, 나아가 이들 주체들간 적절한 관계를 확립해야 할 것이다.

[표 I-26] 새로운 행정수요

구분	행정수요	비고
방재	• 효율적 위험관리를 위한 기반구축과 정보화 • 시설물 안전도 강화와 평가체계 확립 • 방재 사각지역문제 해소대책 확보	
	• 조직운영의 효율성 제고 • 초기대응의 신속성 확보 • 방재행정의 신뢰성과 권위성 확립 • 재해약자의 안전보장	
	• 시민의식의 함양과 방재활동 참여동기 부여 • 시민권익의 보장과 시민 반응의 반영체계 확립	시민의 참여와 협력
	• 과학적·분석적 지식기반의 구축 • IT기술접목 NET의 활성화 • 시장경제적·구조적 방재기술 수요확보 • 재해진압의 기술고도화 및 지속적 기술발전의 기반마련	관련 부서간 협조
교통	• 교통시설의 이용효율 개선과 수요관리를 통한 시설공급체계 확립 • 수도권 종합교통망 및 광역간선도로망 구축	광역행정
	• 승용차에 우선하는 대중교통체계 운영 및 시설의 확충 •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대중교통 결절점 체계 구축 • 지역간 및 대중교통수단간 분산된 연계체계기능의 통합운영 • 대중교통 이용의 경쟁력을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안 마련 • 신교통수단의 도입과 대중교통수단의 다양화로 서비스의 다양화 및 질적 향상	
	• 국지적이고 다양한 교통관리정책 수립 • 수익자·원인자 부담원칙의 형평성 있는 교통시설 이용체계 확립 • 계획적인 주차시설공급 및 관련정책의 추진	재정
	• 무공해 교통수단의 이용촉진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 및 정비 • 대중교통이용 및 보행자의 안전성과 접근성 개선 •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이용 및 보행여건 개선	
	• 토지이용과 환경을 통합한 교통계획 수립 • 문화, 관광 등과 연계한 교통안내 및 이용체계 수립 • 교통지식 저변확대와, 전문 연구인력 조직체계 구성	관련 부서간 협조
	• 첨단기술 도입을 통한 지속가능한 교통체계 구축 • 실시간 신호체계 개선 및 전문적 신호관리 방안 수립 • 지속가능한 교통환경개선체계(TSM) 구비	관련 부서간 협조
	• 물류기반시설의 확충 • 효율적인 물류운송 및 정보체계 구축	
환경	• 서울환경 감성지수의 개발과 공개 • 환경서비스 접근에 대한 공평한 기회제공 • 환경용량 고려한 적정규모 도시개발 유도 • 환경성과 평가를 통한 예산과의 연동화 도모 • 환경·교통영향평가제도의 통합 적용 • 도시관리정보시스템의 구축과 활용 • 기상특성을 고려한 도시계획 및 건축계획지침 도입	
	• 수질향상과 다양한 수자원 확보 및 도시의 자연물순환계 보전·재생 • 오염물질 발생원 관리강화와 하수도 정비 및 재구축 • 물 이용의 유효성 확대방안 • 수방관리체계 확립과 갈수기 및 비상시 물 확보·공급체계 구축	관련 부서간 협조
	• 쓰레기 없는 생활공간 조성과 기반시설 운영의 신뢰성 확보	
	• 주요 생물종과 서식지 보호 및 서울시 대내외적 공조체계 수립	광역행정

[표 I-26] 새로운 행정수요(계속)

구분	행정수요	비고
공원녹지	• 공원녹지의 충분한 확보와 질적 수준 및 다양성 증대 • 생활권역별 균형 있는 공원녹지의 확충	
	• 공원녹지간 네트워크화와 생물다양성 증진	광역행정
	• 공원녹지 조성과 관리에 대한 시민참여 및 민간분야의 관리기능 강화	민간의 참여·협력
경관	• 산지 및 구릉지, 주요 하천변 경관훼손 방지와 경관특성 강화 • 도시내 풍부한 녹지공간과 조망경관 확보	
	• 주거지 경관의 개선	관련 부서간 협조
	• 역사적·문화적 지역특성 및 건축물 보전·관리 강화	
	• 건축물·구조물의 경관 및 가로경관의 개선 • 야간경관의 조성 및 개선	
	• 경관관리체계의 구축과 제도정비	
사회복지	•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생계보호, 최저 주거권 보장, 기초 의료서비스 제공, 이동권 및 접근권 확보 • 청소년, 여성, 노숙자, 쪽방 거주자 등 취약계층의 보호기능 강화	관련 부서간 협조
	• 자활지원사업의 활성화 • 동등한 사회참여 기회의 제공 • 상담 및 예방서비스 확대 • 가족기능지원의 강화와 지역사회 공동체 활동 지원	
	• 평생건강관리 체계 및 평생학습체계 구축	
	• 역동적인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 생활권 단위의 서비스 접근성 제고 • 전문인력 양성과 기초조사 실시 및 자료구축	
문화	• 여가문화활동 지원 • 시민참여형 축제문화의 정착 • 역사문화유산의 보전	관련 부서간 협조
주택	• 공공임대주택 공급의 확대 • 소외계층의 주거확대와 최저기준 미달가구 해소방안 마련 • 저렴한 양질의 주택공급과 임차자 주거의 보호	
	• 공공주택정책 기금 확보방안 마련	재정
	• 기존 주거환경과 조화있는 주택개발 • 커뮤니티 회복을 위한 동네주거환경 개선 • 도시 정비사업의 사회적 비용절감	
	• 주택의 내구연한 증대 • 운영의 투명성 확보와 전문관리제도 구축	
재개발 재건축	• 개발시 자연지형의 훼손 최소화와 물길 확보 • 특수면적과 녹지공간, 보행공간의 확대	
	• 기성시가지 전역의 계획적 관리 • 계획수립시 공공의 역할 확대와 다양한 행정지원책 마련	
	• 1인당 거주면적의 확대와 정보화 공간 구비 •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대한 공공지원 확대	
	• 민간개발의 계획적 유도와 개발자의 공공시설 확보방안 마련	민간부문 협조

[표 I-26] 새로운 행정수요(계속)

구분	행정수요	비고
토지 이용	• 대기오염 완화를 위한 토지이용방안 수립 • 오픈스페이스 및 녹지공간 확대	
	• 중심지 및 주요 산과 하천에 대한 도시경관 관리 • 역사문화적 지역의 환경보전	
	• 중심지 및 역세권 토지의 이용 고도화와 계획적 관리 • 기존의 교통여건을 반영한 적정밀도 계획 • 중심지 및 역세권내 보행환경 개선 • 입체적 토지이용과 지하공간의 관리	
산업 경제	• 외국인을 위한 주택, 교육, 문화시설의 지원 • 실업자노숙자 실태분석, 재취업·재교육에 관한 지원 • 평생교육체계의 구축	관련 부서간 협조
	• 컨벤션 관련시설 설치시 조세 및 부담금 면제 • 신산업 육성을 위한 세제 및 금융지원 • 다국적 기업유치를 위한 금융·세제·행정지원	재정
	• 지역혁신체계의 구축 • 대체적 고용창출원으로서 NGO의 지원 • 협력적 산업거버넌스 모델의 개발 • 산학연 협력연구개발 체계의 확립 • 산업관련 주체간 네트워크 구축	민간의 참여와 협력
	• 기존 산업관련 기구의 전문성 강화 • 서울시 산업정책 전담 집행기구의 역량강화	
정보 통신	• 시정 생산성 향상을 위한 행정업무의 지속적 정보화 • 업무시스템 연계 및 통합으로 업무의 고도화	
	• 언제, 어디서나 제공되는 행정서비스 실현과 시민 참여활성화 • 다양한 디지털 생활정보 및 시민복지 정보 제공	
	• 정보통신산업 및 인터넷 신산업의 육성 및 지원 • 정보화 핵심기술개발 및 전문인력양성 지원	
	• 정보인프라 구축 확대와 정보교육의 확대 및 정보격차 해소 • 정보개방에 따른 정보정책 마련	

3. 실현화방안

1) 기본방향

(1) 각 부문별 계획과 실현화방안의 상응성 확보

- 행·재정 시스템 내부의 현황 및 문제점, 해결방안에 주로 초점을 맞추었던 2011년 기본계획과 달리 2020년 기본계획에서는 각 부문계획 전반에 작용하게 될 여건과 아울러 부문계획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현화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 부문별 계획과 실현화방안의 내적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황 및 문제점을 실현화방안의 계획 환경으로 수용하되, 종래 행·재정 시스템이 내재하고 있는 문제를 행·재정 여건의 현황과 문제점으로 설정함으로써 실현화방안 전체 현황 및 문제점의 일부로 파악할 것이다.
- 각 부문별 계획과 실현화방안간의 상응성은 궁극적으로 각 부문별 사업추진체계와 각 부문별 중장기 투자계획으로 구체화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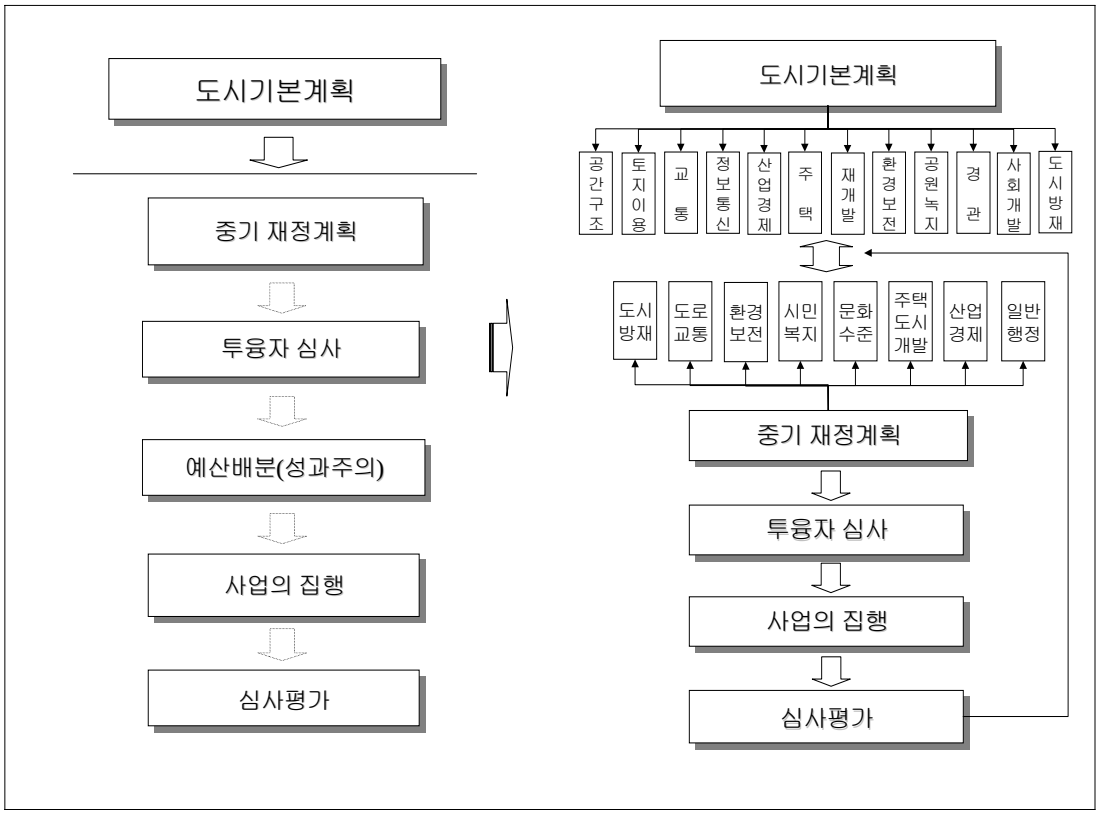
(2) 바람직한 도시행정체계의 확립

- 과학기술의 발전, 기업의 유연성과 공간적 이동성 증대, 시민사회의 내적 분화를 매개하여 시장경제의 힘이 전례 없이 확대되고, 시정참여와 정보로의 개방적 접근에 대한 열망이 증대되는 동시에 집단간/조직간 갈등도 심화되고 있다.
- 이처럼 날로 복잡하고, 역동적이며, 다양해지는 사회변화에 따라 도시사회의 통치가 매우 어려워지고 있는 바, 전통적인 대의민주제 외에 시민의 참여와 협력에 기반한 다각적인 네트워크와 행·재정 시스템을 투명하고 효과적이게 만드는 제도 등 새로운 도시거버넌스 기제(apparatus)들이 점차 도입되고 있다.
- 2020년 계획에서는 이러한 도시거버넌스의 문제를 계획의 실현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차원으로 인식하는 바, 시정에 새로운 공공관리 시스템을 확립하고, 중앙정부-서울시-자치구간 적절한 관계를 조성하며, 참여와 협력을 활성화할 수 있는 행·재정적 제도적 방안들을 모색할 것이다.

(3) 기본계획의 실현화를 위한 주요 재정제도의 연계·통합 운용

- 이처럼 도시계획을 수립·실현하는데 있어서 현행의 주요 재정 제도들은 [그림 I-8]의 우측에 보이는 것과 같이 긴밀한 연계 속에서 통합적으로 운영될 것이 필요하다.

- 즉 기본계획상의 13개 부문계획은 투자예산을 수립할 때 현행의 중기재정계획틀에 따라 8개 부문으로 재편성되고, 각 부문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투자들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심사가 이루어짐으로써 사업의 타당성이 선행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사업의 성과에 대해서도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본래의 기본계획으로 환류되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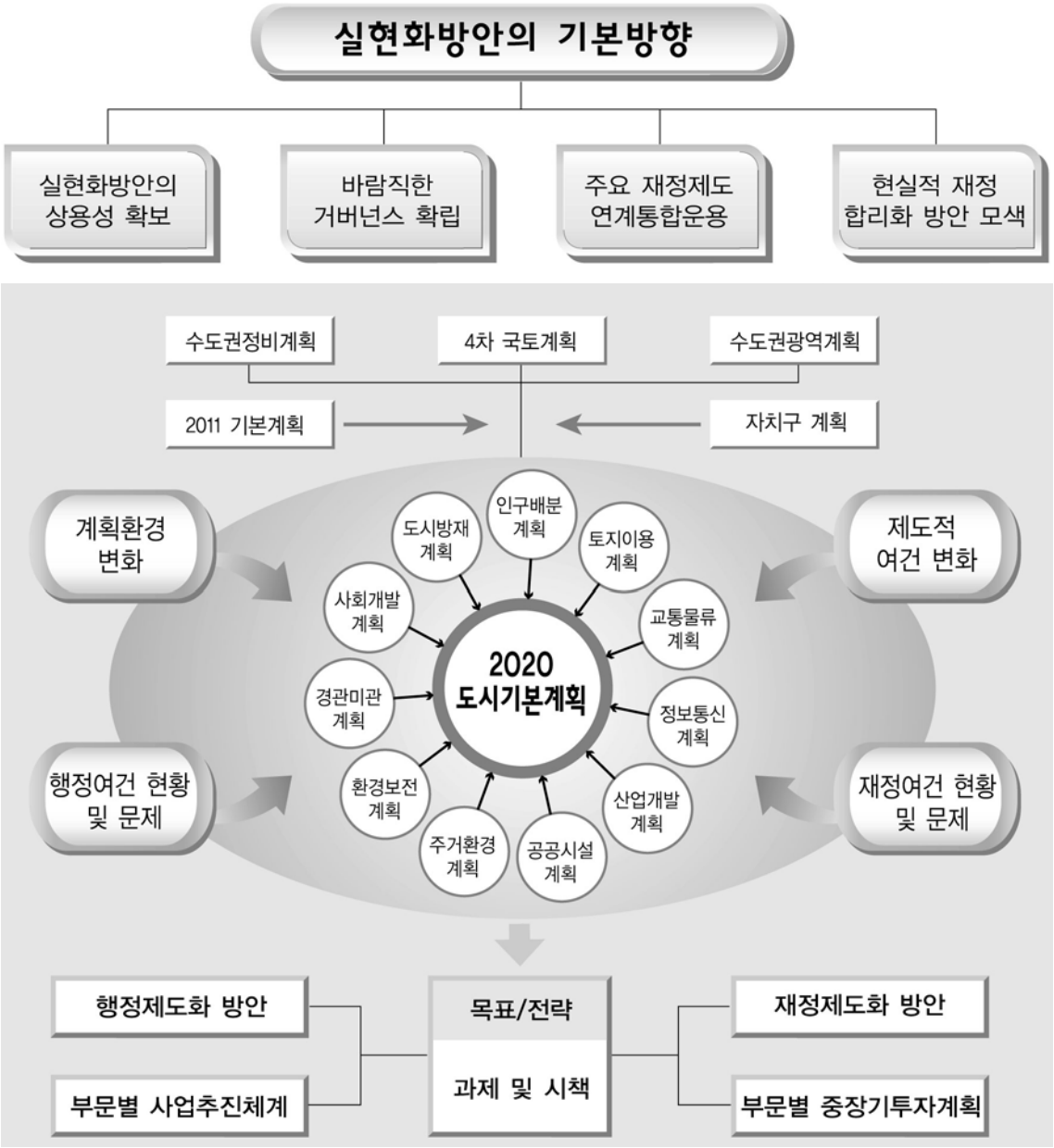
[그림 I-8] 현행 지방재정제도 정비방안

(4) 보다 현실적인 재정합리화 방안의 모색

- 각 부문계획에서 추구하려는 시책들을 실현하기 위한 전제조건은 사업에 필요한 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고, 그것을 적절하게 운용하는데 있다.
- 현재 불합리한 재정조정제도, 증가하는 시의 부채, 자치구간 재정불균형 등이 현실적 문제로 대두되는 상황에서 새로운 성과지향적 재정제도의 도입은 관련 제도들이 합리적으로 운용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
- 이에 2020년 기본계획 실현화 방안에서는 현행의 재정적 문제를 해결하고, 도입되고 있는 새로운 제도를 내실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5) 계획의 실현성 강화를 위해 관련 주체간 협력시스템 강화

- 계획의 실현 여부는 재정적 기반 외에도 사업의 목표와 진행과정을 두고 관련 주체들이 얼마만큼 원활하게 상호 조정 및 협력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으므로, 본 실현화 방안에서도 관련 주체간 협력시스템 강화를 기본방향의 하나로 설정할 것이다.
- 물론 관련 주체간 협력시스템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추진하고자 하는 전략의 구체적인 성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또 각각의 전략에 담겨지게 될 내용과 절차 등을 체계적으로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 2020 기본계획(보완)에서는 전략의 보다 효율적 추진을 위해 별도의 '전략계획' 이 수립되고 있는 바, 본 실현화 방안에서도 이에 상응하여 관련 주체간 협력적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동 '전략계획' 에서 수립된 계획내용에 따라 참여하는 주체와 각 주체들간 관계 등에 관한 계획이 작성될 것이다.



2) 목표

(1) 신공공관리(NPM) 제도틀의 확립 – 성과지향적 도시행정시스템의 확립

- 최근 몇 년 사이에 도입된 새로운 행·재정 제도들을 상호 조정·연계시켜 운영함으로써 제도의 효과성을 제고한다.
- 계획실현 과정을 전략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확립하기 위해 성과주의 행-재정 제도를 통합적으로 운용한다.

- 행정 영역 내부 관련 지식의 축적과 교류를 활성화할 수 있는 지식관리시스템과 함께, 그에 상응하는 적절한 인사·조직 제도를 확립한다.
- 이러한 신공공관리 제도적 틀을 확립함으로써 환경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성과를 지향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할 수 있다.

(2) 계획관련 주체간 협력적 관계조성 – 개방적이고 합의지향적인 시민사회의 구축

- 최근 증대되고 있는 이해당사자간 경쟁과 갈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관련주체간 협력적 관계조성이 필요하다.
- 협력적 관계조성을 위해서는 시민사회의 사회적 자본을 육성하고, 관련 주체들이 계획의 실현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채널을 다각화하며, 행정정보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개방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 이와 같이 경쟁과 갈등으로부터 협력적 관계를 조성함으로써 개방적이고 합의지향적인 거버넌스를 구축할 수 있다.

(3) 분리된 부문계획들의 상호조정과 연계 – 협력적인 대도시 광역행정의 구축

- 종래 분리되어 추진되던 기본계획상의 부문계획들을 상호조정 및 연계시키기 위해 도시계획기능과 예산기능의 조정 및 연계를 확립한다.
- 각 부문별 계획에 관련된 주체들이 참여하고 협력할 수 있는 정책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동시에, 정부간/지역간 협력적 관계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 이와 같은 다차원적인 조정과 연계를 통해 한 차원 높은 문제해결역량을 가진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할 수 있다.

(4) 합리적이고 건전한 지방재정체계의 확립

- 계획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시의 재정을 확충하고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 현재 불합리하게 운용되는 지방재정제도를 제도적으로 개선하고, 필요한 경우 새로운 제도를 도입한다.
- 강남과 강북간 재정적 격차를 완화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 이와 같은 제도적 개선과 내실화를 통해 합리적이고 건전한 지방재정체계의 확립할 수 있다.

3) 목표체계

"성과지향적 도시행정시스템의 확립"

목표	과제	전략	시책	단기	중장기	정책지표
1. 성과지향적 도시행정시스템의 확립	내실이 있는 공공관리 시스템운영	• 시정개혁의 지속적 추진	– 센서스를 통하여 삶의 질에 관한 사회지표 개발 – 업무재설계를 통해 업무처리절차 및 시간 단축 – 서비스품질평가제 시행에 의한 고품질 행정서비스 제공 – 시민생활과 기업활동에 불편을 주는 규제 개혁	✔		지표 1. 평균 반부패지수
		• 성과주의 제도의 정착	– 성과주의 제도의 통합적 운영체제 마련 – 실·국·본부별 중기 전략계획의 수립 – 성과지향적, 창의적 행정문화의 확산을 위한 인센티브제 실시		✔	
		• 시정운영의 효율적 경영기법 도입	– 민간위탁 확대를 통한 시정운영의 경영화 – 상·하수도 사업의 공사화 등 경영개선 추진 – 기금운용의 투명화 및 자금활용의 극대화	✔		
	21세기 지식사회를 대비한 전자정부 구현	• 시정영역에 지식관리시스템(KMS)의 확립	– 지식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한 문제해결능력 역량 강화 – 효율적인 정보자원 관리를 위한 행정전산망 통합 – 신속하고 편리한 사무처리용 모바일 행정 시행 – IT기술을 활용한 전사적자원관리 시스템의 도입	✔		지표 2. 행정서비스에 대한 시민종합 만족도
		• 대시민 정보네트워크 촉진을 통한 지식교류 활성화	– 대시민 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보통신인프라 확충 – 시민정보화 교실 운영의 내실화 – 사이버공간을 통한 마을커뮤니티 활성화		✔	
	시정의 전문역량 강화	•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인사제도의 도입	– 자치조직권 확보에 의한 탄력적 조직 · 인력 운영 – 주기적 조직진단을 통한 중장기 인력수급계획 수립 및 조직재설계 –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다면평가제 도입 – 시나리오 워크샵, 브레인스토밍 등 역량 강화를 위한 다각적인 행정기법 도입		✔	지표 3. 외국인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 시행정의 국제화를 뒷받침하는 행정역량의 강화	– 국제적 지식교류를 위해 해외 선진 대도시와 국제교류 증진 – 세계도시 서울에 대한 대외 전략적 마케팅 추진 – 해외 주요 자치단체 및 기관을 연결하는 국제적 정보네트워크 구축	✔		

목표	과제	전략	시책	단기	중장기	정책지표
2. 개방적이고 합의지향적 시민사회 구축	비영리 민간단체 육성	• NGO를 위한 활동기반의 조성	– NGO 지원센터의 건립 – 시민파트너십 전담 조직의 설립 – 위원회와 시민의 정보네트워크 구축	✔		지표 4. 민원처리 온라인시스템 공개대상 업무 확대
		• 시 및 자치구와 NGO간 협력네트워킹 강화	– 근린단위의 주민협의체, 자치회, 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활성화 – 시와 NGO간 바람직한 파트너십 모델 개발 및 시범사업화 – NGO의 지역간 협력네트워크에 대한 제도적 지원		✔	
	다각적인 시민참여 채널의 구축	• 개방적이고 참여지향적 행정절차의 구축	– 사이버 정책토론 및 전자투표 실시 – 시장이 직접 찾아가는 현장시청 운영 – 위원회제의 재정비를 통한 운영의 실효성 제고	✔		
		• 투명한 행정시스템의 확립	– 조사 발표를 통한 시정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반부패지수 조사 · 발표 – 민원처리 온라인 공개시스템에 의한 행정의 투명성 제고 – 시민의 시정참여 확대를 위한 사이버 옴브즈만 운영	✔		지표 5. 서울시 위원회에서 여성위원의 위촉비율
		• 정책결정을 위한 여론전달체계의 정비	– 시민의식과 요구에 관한 주기적 조사와 D/B화 – 여론수렴조직의 체계적 정비 및 정책결정기구와의 연계 강화 – 시정에 관한 사전홍보체제 구축 및 자치구와의 네트워크 구축		✔	

목표	과제	전략	시책	단기	중장기	정책지표
3. 협력적인 대도시 광역행정의 구축	중앙과 서울시의 협력적 관계조성	• 중앙과 서울시의 협력적 관계 조성	– 지방이양사무 범위의 지속적 확대와 관련 법률의 정비 – 위임사무에 관한 중앙과 지방의 역할 및 감독범위의 명확화 – 이양사무에 관한 공무원의 교육 및 훈련 강화 – 국가와 지방간 합리적 세원배분 추진	✔		지표 6. 총사무 가운데 자치사무가 차지하는 비율
		• 계획추진에 필요한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	– 중앙정부의 조직 및 정책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조직재설계 – 중앙정부의 지방정책에 관한 종합정책 심의회 운영 – 특별지방행정기관과 협력적 관계 조성 – 교육청과의 협력시스템 강화	✔		
	계획추진에 필요한 광역적 조정 및 협력 강화	• 시와 자치구간 협조체제 구축	– 자치구 위임사무에 관한 주기적 심사 및 재정비 – 시와 자치구간 행 · 재정 협의회 내지 조정위원회 설치 운영 – 시설입지 분쟁해결 모델 개발과 효과적 교육 및 홍보체제 마련 – 자치구 도시계획 인력 강화 및 관련 교육프로그램 운영		✔	지표 7. 수도권 행정협의회에서 합의비율
		• 광역행정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협조체제 구축	– 광역행정문제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협조체제 구축 – 전문인력의 보강과 예산확보를 통한 수도권 행정협의회 운영의 내실화 – 지역간 공동개발사업을 중심으로 한 자치단체간 전략적 제휴의 활성화 – 전문화된 협상시스템 구축		✔	

목표	과제	전략	시책	단기	중장기	정책지표
4. 건전한 지방재정 시스템 확립	지방재정 운영시스템의 내실화	• 예산관련제도의 상호연계 강화	– 중기재정계획 수립시 도시기본계획 사전심의제 실시 – 중기재정계획과 성과예산제, 심사평가가 연계된 예산편성체제의 확립 – 기획예산기능과 도시계획기능간 연계 강화		✔	지표 8. 서울시 자치구간 세원배분 비율
		• 투자사업 심사평가의 내실화	– 3단계 심사제도 도입을 통한 지방재정 투 · 융자 심사 강화 – 투자심사에 대한 심사관련 주체의 핵심 역량 강화 – 각 사업영역별 투자심사 결과, 기법, 기준에 관한 D/B 구축 – 투자사업 제안절차의 제도 개선	✔		
	지방재정의 확충	• 다각적인 재원대책 마련	– 미활용 시유재산의 적극적 활용 – 재정부담 완화 및 민간자원 활용을 위한 민자유치의 활성화 – 부가가치세의 일부 양여를 통한 지방소비세의 도입 – 지방주행세의 합리적 인상 – 광역적 공동개발사업을 위한 국세 일부의 지방 양여	✔		지표 9. 국세 대비 서울시 지방세 배분 비율 지표 10. 자치구 재정격차 지수
		• 원인자사용자 부담원칙의 강화	– 경영개선 및 운임현실화에 의한 지하철 부채 감축 – 공공시설 및 서비스 사용요율의 현실화 – 지방채 운용의 합리화 – 각종 부담금의 징수교부율 재조정 및 부담금 일부의 지방이양	✔		지표 11. 지하철 건설부채 규모
	자치구간 재정격차의 완화	• 자치구 재정조정 제도의 정비	– 자치구 재정지원 제도 개선을 통한 균형발전 도모 – 국세와 지방세의 합리적 재조정에 의한 자치구 재정조정 재원 확보 – 자치구에 대한 지방교부세 추진을 위한 지방재정조정 제도 합리화 – 교부금 측정 항목과 실제 예산의 연계강화를 위한 조정교부금 산정체계 개선		✔	

목표1 성과지향적 도시행정시스템의 확립

정책의 성과를 지향하는 인적, 조직적, 지적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전략 및 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거버넌스 시스템을 확립한다.

과제1 내실있는 공공관리시스템 운영

서울시정에 도입되고 있는 새로운 공공관리 제도들이 계획실현을 뒷받침하는 효율적인 행정시스템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각각의 제도들을 상호 조정하고 연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전략 1. 시정개혁의 지속적 추진

시책 1. 센서스를 통하여 삶의 질에 관한 사회지표 개발
시책 2. 업무재설계를 통해 업무처리절차 및 시간 단축
시책 3. 서비스품질평가제 시행에 의한 고품질 행정서비스 제공
시책 4. 시민생활과 기업활동에 불편을 주는 규제 개혁

전략 2. 성과주의 제도의 정착

시책 1. 성과주의 제도의 통합적 운영체제 마련
시책 2. 실·국·본부별 중기 전략계획의 수립
시책 3. 성과지향적, 창의적 행정문화의 확산을 위한 인센티브제 실시

전략 3. 시정운영에 효율적 경영기법의 도입

시책 1. 민간위탁 확대를 통한 시정운영의 경영화
시책 2. 상·하수도 사업의 공사화 등 경영개선 추진
시책 3. 기금운용의 투명화 및 효과적인 자금활용체계 확립

과제2 21세기 지식사회를 대비한 전자정부 구현

지식기반사회에서 행정의 유연성과 창의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타 주체가 소유하고 있는 다양한 정보 및 실천적 지식을 획득하고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제고해야 한다.

전략 1. 시정영역에 지식관리시스템(KMS)의 확립

시책 1. 지식관리시스템(KMS) 구축을 통한 문제해결능력 역량강화
시책 2. 효율적인 정보자원 관리를 위한 통합적 행정전산망 구축
시책 3. 신속하고 편리한 사무처리를 위한 모바일 행정 시행
시책 4. IT기술을 활용한 전사적 자원관리(ERP) 시스템의 도입

전략 2. 대시민 정보네트워크 촉진을 통한 지식교류 활성화

시책 1. 대시민 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보통신인프라 확충
시책 2. 시민정보화교실 운영의 내실화
시책 3. 사이버공간을 통한 마을커뮤니티 활성화

과제3 시정의 전문역량 강화

복잡하고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도시사회에서 계획을 지속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담당 인력의 전문적 지식과 역량을 향상시켜야 한다.

전략 1.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인사제도의 도입

시책 1. 자치조직권 확보를 통한 탄력적 조직·인력 운영
시책 2. 주기적 조직진단을 통한 중장기 인력수급계획 수립 및 조직재설계
시책 3. 공무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다면평가제 도입
시책 4. 행정역량 강화를 위한 시나리오 워크샵, 브레인스토밍 등 각종 행정기법의 도입

전략 2. 시행정의 국제화를 뒷받침하는 행정역량의 강화

시책 1. 국제적 지식교류를 위해 해외 선진 대도시와 국제교류 증진
시책 2. 세계도시 서울에 대한 대외 전략적 마케팅 추진
시책 3. 해외 주요 자치단체 및 기관을 연결하는 국제적 정보네트워크 구축

목표2 개방적이고 합의지향적 시민사회의 구축

전체 과정을 일반 시민들과 주요 이해당사자들에게 개방하고, 정책결정에서 합의를 지향함으로써 계획실현이 보다 민주적인 절차에 기초하도록 한다.

과제1 비영리 민간단체의 육성

계획실현과정에 시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시와 주민을 중개할 수 있는 NGO를 육성하고 나아가 적절한 관계를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략 1. NGO를 위한 활동기반의 조성

시책 1. NGO 지원센터의 건립 및 운영
시책 2. 시민파트너십 전담 조직의 설립
시책 3. 위원회와 시민의 정보네트워크 구축

전략 2. 시 및 자치구와 NGO간 협력네트워킹 강화

시책 1. 근린단위의 주민협의체, 자치회, 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활성화
시책 2. 시와 NGO간 바람직한 파트너십 모델 개발 및 시범사업화
시책 3. NGO의 지역간 협력네트워크에 대한 제도적 지원

과제2 다각적인 시민참여채널의 구축

계획을 민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차별적인 가치, 이해관계 등을 계획과정에 투입하기 위해 다양한 참여채널을 제공해야 한다.

전략 1. 개방적이고 참여지향적 행정절차의 구축

시책 1. 사이버 정책토론 및 전자투표 실시
시책 2. 시장이 직접 찾아가는 현장시청 운영
시책 3. 위원회제의 재정비를 통한 운영의 실효성 제고

전략 2. 투명한 행정시스템의 확립

시책 1. 조사발표를 통한 시정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반부패지수 조사 · 발표
시책 2. 민원처리 온라인 공개시스템에 의한 행정의 투명성 제고
시책 3. 시민의 시정참여 확대를 위한 사이버 옴브즈만 운영

전략 3. 정책결정을 위한 여론전달체계의 정비

시책 1. 시민의식과 요구에 관한 주기적 조사와 D/B화
시책 2. 여론수렴조직의 체계적 정비 및 정책결정기구와의 연계 강화
시책 3. 시정에 관한 사전홍보체계 구축 및 자치구와의 네트워크 구축

목표3 협력적인 대도시 광역행정의 구축

중앙정부와 서울시, 서울시와 자치구 및 인근 자치단체간 협력적 관계를 조성함으로써 계획실현과정에서 시너지를 창출하고, 발생하기 쉬운 갈등을 제어할 수 있는 광역적 거버넌스 시스템을 구축한다.

과제1 중앙과 서울시의 협력적 관계 조성

기본계획을 지방의 여건에 맞게 자율적이고 창의적으로 실현해 나가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적절한 역할분담 및 협조체제를 조성하는 것이 요구된다.

전략 1. 중앙과 서울시의 협력적 관계 조성

시책 1. 지방이양사무 범위의 지속적 확대 및 관련 법률의 정비
시책 2. 위임사무에 관한 중앙과 지방의 역할 및 감독범위의 명확화
시책 3. 이양사무에 관한 공무원의 교육 및 훈련 강화
시책 4. 국가·지방간 합리적 세원배분 추진

전략 2. 계획추진에 필요한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

시책 1. 중앙정부의 조직 및 정책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조직재설계
시책 2. 중앙정부의 지방정책에 관한 종합정책 심의회 운영
시책 3. 특별지방행정기관과 협력적 관계 조성
시책 4. 교육청과의 협력시스템 강화

과제2 계획추진에 필요한 광역적 조정 및 협력강화

계획의 실현과정에서 발생하기 쉬운 자치단체간 경쟁과 갈등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호조정과 협력을 기초한 광역적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이 요구된다.

전략 1. 시와 자치구간 협조체제 구축

시책 1. 자치구 사무위임에 관한 주기적 심사 및 재정비
시책 2. 시와 자치구간 행·재정 협의회 내지 조정위원회 설치 운영
시책 3. 시설입지 분쟁해결 모델 개발과 효과적 교육 및 홍보체제 마련
시책 4. 자치구 도시계획인력 강화 및 관련 교육프로그램 운영

전략 2. 광역행정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협조체제 구축

시책 1. 광역행정문제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협조체제 구축
시책 2. 전문인력의 보강과 예산확보를 통한 수도권 행정협의회 운영의 내실화
시책 3. 지역간 공동개발사업을 중심으로 한 자치단체간 전략적 제휴의 활성화
시책 4. 전문화된 협상시스템 구축

목표 4 건전한 지방재정시스템 확립

계획을 실현하는데 필수불가결한 물질적 기반과 그 합리적 운용시스템을 확립함으로써 계획실현의 재정적 실효성을 제고한다.

과제1 지방재정 운영시스템의 내실화

서울시정에 도입되고 있는 성과지향적 예산제도들은 각 제도의 효과성을 높이고 나아가 계획수립과 예산간의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상호 조정하고 연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전략 1. 예산관련 제도의 상호연계 강화

시책 1. 중기재정계획 수립시 도시기본계획 사전심의제 실시
시책 2. 중기재정계획과 성과예산제, 심사평가가 연계된 예산편성체제의 확립
시책 3. 기획예산기능과 도시계획기능간 연계 강화

전략 2. 투자사업 심사 · 평가의 내실화

시책 1. 3단계 심사제도 도입을 통한 지방재정 투 · 융자 심사강화
시책 2. 투자심사에 대한 심사관련 주체의 핵심 역량 강화
시책 3. 각 사업영역별 투자심사 결과, 기법, 기준에 관한 D/B 구축
시책 4. 투자사업 제안절차의 제도 개선

과제2 지방재정의 확충

계획상의 주요 시책을 추진하고 자치구간 재정적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재정적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을 확충해야 한다.

전략 1. 다각적인 재원대책 마련

시책 1. 미활용 시유재산의 적극적 활용
시책 2. 재정부담 완화 및 민간자원 활용을 위한 민자유치의 활성화
시책 3. 부가가치세의 일부 양여를 통한 지방소비세의 도입
시책 4. 지방주행세의 합리적 인상
시책 5. 광역적 공동개발사업을 위한 국세 일부의 지방 양여

전략 2. 원인자 · 사용자 부담원칙의 강화

시책 1. 경영개선 및 운임현실화에 의한 지하철 부채 감축
시책 2. 공공시설 및 서비스 사용요율의 현실화
시책 3. 지방채 운용의 합리화
시책 4. 각종 부담금의 징수교부율 재조정 및 부담금 일부의 지방이양

과제3 자치구간 재정격차의 완화

계획시책을 원활하게 실현하고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재정적으로 취약한 자치구로 재원을 재분배할 수 있도록 재정조정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전략 1. 자치구 재정조정제도의 정비

시책 1. 자치구 재정지원제도 개선을 통한 균형발전 도모
시책 2. 국세와 지방세의 합리적 재조정에 의한 자치구 재정조정 재원 확보
시책 3. 자치구에 대한 지방교부세 추진을 위한 지방재정조정 제도 합리화
시책 4. 교부금 측정항목과 실제 예산의 연계강화를 위한 조정교부금 산정체계 개선

4. 부문별 계획의 중장기 투자계획

1) 투자계획의 수립방법

- 투자계획은 추계된 예산총계로부터 예비비를 공제하여 경비(투자경비와 경직성 경비)를 산출하고, 이것으로부터 경직성경비를 공제함으로써 각 부문별 시책추진에 소요될 투자비를 산정하였다.
- 예산총계, 예비비, 경상경비, 예비비, 부문별 투자예산은 각각 5년을 단위로 수립되는데, 이는 현행 지방중기재정계획이나 투융자심사 제도상의 단위와 부합한다.
- 투자계획은 각 부문별 시책들에 소요될 투자사업비를 취합하되, 부문별 목표를 기준으로 하여 투자비를 편성한다.

예산총계치	투자가용재원*	부문별 투자재원**
투자경비		
예비비		
경직성 경비***		

부문별 투자재원
방재
도로교통
환경보전
사회복지
문화
주택 · 도시개발
산업경제
행정

* : 예산총계 - 경직성 경비
** : 투자가용재원 - 예비비
*** : 경직성 경비는 인건비+기본경비+법정의무경비

- 예산총계 추정
  - 향후 20년간 기본계획 실현에 필요한 예산의 추정은 지난 20년간(1980-2000) 지방재정 결산자료에 기초하였다.
  - 추계방법은 지방재정에 관한 세부 항목들에 대한 개별 추계를 합산하여 총예산을 추계하기보다는 20년 장기계획이라는 계획의 성격을 반영하여 과거 서울시 재정총계를 가지고 추계하였다.
  - 추계에는 세입과 세출 각각에 대해 네 가지 기준이 적용되었는데, 그 기준으로는 단순선형 추계, GDP(고성장)를 이용한 추계, GDP(저성장)를 이용한 추계, 1인당 재정규모이다.(각 추계결과는 별첨을 참조).

- 단순선형예측 : 서울시 세입 내지 세출 결산 액에 대한 과거추세의 연장 (향후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가정)
- 국내총생산(GDP)을 이용한 예측 : GDP의 일정 비율이 서울시 세입 내지 세출액에 반영되었을 것으로 가정(잠재성장률은 KDI예측에 근거
  ➡ 2000-2010 : 고성장(5.1%), 저성장(4.4%), 2010-2020 : 고성장(4.1%), 저성장(3.3%))
- 서울시 1인당재정지출을 통한 예측

- 기본계획 예산수립을 위해 이들 추계 결과 가운데 세출에 대한 단순선형을 수용하였는데, 이는 투자사업에 따른 미래의 세출계획에 과거의 세출경향성을 반영할 수 있고, 세입액 > 세출액으로 나타나 건전 재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 단순선형에 의한 추계결과는 현행 중기재정계획(2001-2005)상의 예산 추계와 상당히 근접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 투자비 추정

- 상기 단순선형추계에 의한 예산총계치에서 인건비/기본경비/법정의무경비 등으로 구성된 경직성 경비를 차감한 것이 투자가용재원인데, 경직성 경비에 대한 추계는 1996년부터 2001년까지 기 수립된 중기재정계획상 세출총액 대비 경직성 경비의 비중에 기초하였다.
- 이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경직성 경비는 세출총액에서 42~45%를 차지하고 있는데, 경직성 경비 추계는 처음 5년간(2001-2005) 세출추계의 44%를 차지하고, 이후 재정효율성을 전제하여 매 5년마다 0.5%씩 감소할 것을 예측하였다.
- 예산총계로부터 경직성 경비를 차감한 재원이 투자가용재원인데, 투자가용재원에는 부문별 시책추진 외에 우발적 요인이나 추가적 요인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신규 시책들의 추진을 위한 여유투자재원으로써 예비비가 포함된다.
- 이러한 투자가용재원으로부터 10%의 예비비를 차감한 투자재원이 향후 20년간 기본계획의 실현에 소요될 부문별 투자재원이라 할 수 있는데, [표 1-26]이 향후 20년간 투자재원을 나타내고 있다.

[표 I-26] 투자재원(2001-2020)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1-2005	2006-2010	2011-2015	2016-2020	총계
단순선형	28,470,600	34,873,566	41,749,118	48,739,878	153,833,163
GDP(고성장)	29,686,017	38,247,027	48,040,628	59,245,493	175,219,165
GDP(저성장)	29,116,893	36,233,548	43,828,566	52,069,884	161,302,890
1인당재정규모	26,773,017	31,769,186	37,529,081	43,290,906	139,362,190

2) 부문별 중장기 투자계획

• **중장기 투자계획의 기본 원칙**

- 최종 부문별 투자사업비는 중기재정계획체제와의 일관성을 기하기 위해 8개 부문으로 재편성하되, 앞서 추계된 총투자비를 계획전체의 기조나 부문계획상의 우선순위에 근거하여 총괄·조정하였다.
- 이에 따라 기본계획의 기조인 시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우선적 투자가 이루어진 바, 복지, 문화, 환경보전, 방재 등에서는 기간별 투자예산이 점진적으로 증가한다.
- 반면, 도로교통의 경우 간선도로 건설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종결되고 향후 시스템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주택도시개발 또한 대규모 택지개발이 완료됨을 반영하여 점진적으로 감소한다.

• **중장기 투자예산 총괄**

- 전체 20년간 소요될 총투자비는 153조 8천3백3십1억원으로, 2001-2005년에 28조 4천7백억원, 2006-2010년에 34조 8천7백억원, 2011-2015년에 41조 7천4백억원이, 2016-2020년에 48조7천3백억원이 각각 소요된다.
- 매 계획기간 중 일반회계 대비 특별회계 비율은 2001-2005년에 61.1대 28.9, 2006-2010년에 65.6대 34.4, 2011-2015년에 67.0 대 33.0, 2016-2020년에 66.2 대 33.8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

[표 I-28] 각 부문별 투자예산 총괄 (단위 : 백만원)

회 계	부 문	2001-2005	2006-2010	2011-2015	2016-2020
일반회계	방 재	1,537,413	1,918,046	2,337,951	2,778,173
	도로교통	3,829,598	5,224,816	6,293,913	5,363,729
	환경보전	3,345,926	3,518,956	4,443,825	6,309,219
	시민복지증진	5,246,502	6,453,501	7,808,122	9,258,975
	문화수준향상	1,480,472	1,883,173	2,379,700	2,924,393
	주택도시개발	1,409,354	1,708,089	2,134,976	2,600,771
	산업경제	768,706	941,587	1,127,227	1,315,977
	행 정	996,471	1,220,575	1,461,220	1,705,895
	소 계	18,614,442	22,868,743	27,986,934	32,257,132
특별회계	도로교통	4,740,053	5,097,760	5,855,081	8,575,876
	환경보전	3,458,548	4,885,573	5,701,211	5,680,790
	시민복지증진	504,559	625,832	750,448	830,179
	주택도시개발	1,152,999	1,395,659	1,455,446	1,395,899
	소 계	9,856,159	12,004,824	13,762,186	16,482,744
총 계	153,833,164	28,470,601	34,873,567	41,749,120	48,739,876

[표 I-29] 각 부문별 일반회계 투자비

(단위 : 백만원)

부 문	부문목표	2001-2005	2006-2010	2011-2015	2016-2020
방 재	구조적 방재성능의 강화	239,970	252,636	341,265	333,891
	방재행정 역량의 강화	344,360	623,283	716,249	277,838
	시민방재 능력의 고도화	252,372	193,801	304,805	577,807
	미래지향적 발전기반 확보	700,711	848,326	975,632	1,588,637
도로교통	합리적 도로 및 소통계획 수립	2,718,072	3,620,350	4,067,578	1,465,240
	편안한 대중교통시설 구축	164,592	420,679	782,707	1,438,324
	수익자/원인자 부담의 교통체계	418,574	542,463	681,456	1,169,023
	인간중심의 교통 패러다임 전환	139,400	220,228	276,655	474,597
	도시경쟁력 향상 및 균형발전	10,028	11,091	13,932	23,900
	지속가능한 교통환경체계	222,299	251,545	315,998	542,088
	효율적 물류체계의 구축	155,965	157,404	154,260	248,280
	외부환경 개선을 통한 계획목표의 실현	668	1,056	1,327	2,277
환경보전	무지개와 함께 하는 서울하늘의 조성	189,549	209,532	243,979	209,650
	지속가능한 도시성장 관리체계의 구축	132,089	95,121	14,304	17,865
	성과주의 예산을 반영한 도시관리체계	35,712	25,678	22,400	14,667
	도시정보 통합관리	1,159	789	728	1,042
	자족능력을 갖춘 서울 조성	174,293	152,384	76,772	110,066
	야생동물이 다시 돌아오는 서울	137,016	151,372	176,924	252,262
	양질의 다양한 공원녹지 제공	1,678,208	1,862,436	2,434,264	3,489,953
	인간과 생물이 공존하는 공원녹지 구축	65,114	71,442	84,471	119,715
	시민과 함께하는 공원녹지 가꾸기	37,375	41,483	48,486	69,513
	특화거리 조성사업	343,847	449,511	664,998	1,012,243
	도시환경림 조성	343,847	449,511	664,998	1,012,243
	경관지구 지정 및 조망점 조성사업	1,009	9,371	11,045	0
	경관개선 및 가로구역별 높이계획	1,084	326	456	0
	역사 탐방로 조성	28,255	0	0	0
	야간조명 개선	156,974	0	0	0
	경관특성도로조성계획 작성	20,395	0	0	0
시민복지 증진	사회복지분야	1,766,913	2,262,130	3,027,434	3,190,005
	보건분야	1,791,303	2,318,353	2,669,259	2,788,808
	여성분야	1,208,532	1,268,732	1,299,767	1,642,433
	체육 청소년분야	479,754	604,286	811,662	1,637,729

[표 I-29] 각 부문별 일반회계 투자비(계속)

(단위 : 백만원)

부 문	부문목표	2001-2005	2006-2010	2011-2015	2016-2020
문화수준향상	예술문화	611,979	804,019	985,314	1,353,184
	문화재관리	722,757	777,842	873,156	992,077
	박물관·미술관	0	261,863	469,501	443,023
	월드컵기획	0	39,449	51,729	136,109
	세종문화회관	78,475	0	0	0
	예술단체	67,261	0	0	0
주택도시개발	도시정비와 주택개발의 조화	109,032	207,074	215,944	250,602
	주택유지관리 전문화	981	1,030	1,074	1,246
	자연재해로 부터 주민의 안정성 확보	177,190	201,118	262,310	300,723
	친환경적 인간중심의 도시계획 구현	44,786	50,291	59,566	82,558
	기성시가지의 관리차원에서 환경개선	196,799	206,359	246,243	329,172
	공공주도로 계획수립과 주민참여 활성하	48,706	46,184	68,262	77,636
	생활수준 향상에 부응한 주거환경 구축	92,496	99,686	137,598	142,778
	지구내 필요한 공공시설 우선 확보	187,092	192,973	255,867	320,512
	지구여건을 반영하여 공공자원의 차등화	94,478	94,425	142,970	173,963
	자연친화형 토지이용계획	42,102	61,988	75,597	91,468
	수려한 도시경관의 확보	91,950	121,784	149,131	190,612
	한정된 토지자원의 효율적 이용	47,893	59,826	73,019	67,665
	계획밀도에 인프라시설 수용용량 반영	22,987	30,446	37,283	47,653
	일정수준 이상의 주거환경 구축	114,937	152,229	186,414	238,265
	기존 준공업지역내 산업기반 유지	137,925	182,676	223,698	285,918
산업경제	동북아 산업경제의 거점도시 육성	43,414	50,448	47,593	57,222
	국가산업혁신의 중심지 육성	167,942	155,683	151,738	157,982
	유연한 산업도시의 육성	107,391	113,372	150,058	163,207
	기업하기 좋은 도시조성	181,651	312,452	356,108	432,895
	시정생산성 향상을 위한 전자행정 구현	33,474	47,736	88,467	111,956
	대시민 서비스를 위한 정보화사업 확대	36,902	38,189	43,226	50,753
	생산성 향상 및 신산업 육성지원	131,212	179,226	222,287	260,608
	정보화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기반조성	66,720	44,481	67,750	81,354
행정	성과지향적 도시행정시스템 확립	328,835	402,789	482,202	562,945
	협력적 대도시 광역행정의 구축	179,365	219,704	263,020	307,061
	개방적이고 합의지향적 시민사회 구축	219,224	268,527	321,469	375,297
	건전한 지방재정시스템 확립	269,047	329,555	394,529	460,592
총 계	101,727,251	18,614,442	22,868,743	27,986,934	32,257,132

[표 I-30] 각 부문별 특별회계 투자비 (단위 : 백만원)

부 문	부문목표	2001-2005	2006-2010	2011-2015	2016-2020
도로교통	합리적 도로 및 소통계획 수립	2,377,250	2,552,312	3,431,273	4,987,709
	편안한 대중교통시설 구축	2,362,803	2,545,448	2,423,808	3,588,167
환경보전	안전하고 깨끗한 물환경도시 만들기	2,473,278	3,769,384	4,383,778	4,171,878
	풍부한 물의 도시만들기	61,619	135,499	175,492	217,592
	재해에 강한 도시만들기	923,651	980,690	1,141,941	1,291,320
시민복지	사회복지분야	504,559	625,832	750,448	830,179
주택도시개발	저소득층 주거복지 강화	1,105,233	1,345,541	1,403,181	1,345,772
	서민 주거비부담 완화	4,342	4,556	4,751	4,557
	주택재원 확보	43,424	45,562	47,514	45,570
총 계	52,105,913	9,856,159	12,004,824	13,762,186	16,482,744

3) 투자재원 조달의 기본방향

- 지방세와 관련한 과세자료의 철저한 관리로 지방세 징수율을 제고한다.
- 현행의 비현실적인 요율 체계를 점진적으로 합리화함으로써 투자재원을 증대한다.
- 현재 중앙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는 지방재정조정제도를 장기적으로 개선한다.
- 재원조달을 다변화하기 위해 민자유치 및 지방채 조달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5. 목표별 정책지표

목표1 성과지향적 도시행정시스템 확립

[지표 1] 평균 반부패지수

1999	2001	2005	2010	2015	2020
64.3	70.4	74.3	79.3	84.3	90.0

[지표 2] 행정서비스에 의한 시민종합만족도

1999	2000	2005	2010	2015	2020
60.1	62.2	70.0	80.0	85.0	90.0

주 : 2003년 이후 행정서비스품질지수(CSQI)로의 전환이 예상되는 바, 관련 제도의 시행여부에 따라 해당 지표는 수정될 수 있음.

[지표 3] 외국인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건)

2001	2005	2010	2015	2020
120	180	200	220	250

목표2 개방적이고 합의지향적인 시민사회 구축

[지표 4] 민원처리 온라인시스템 공개대상업무 확대(건)

2001	2005	2010	2015	2020
54	90	150	200	300

[지표 5] 서울시 위원회에서 여성위원 위촉 비율(%)

2002	2005	2010	2015	2020
28	32	35	37	40

목표3 협력적인 대도시 광역행정의 구축

[지표 6] 총사무 가운데 자치사무가 차지하는 비율(%)

2000	2010	2020
22%	35%	40%

[지표 7] 수도권 행정협의회에서 합의비율(%)

1999	2005	2010	2015	2020
55.3%	60%	65%	70%	75%

목표4 건전한 지방재정시스템 확립

[지표 8] 서울시와 자치구간 세원배분 비율(%)

2000	2005	2010	2015	2020
84:16	80:20	76:24	73:23	70:30

[지표 9] 국세 대비 서울시 지방세 배분 비율(%)

2001	2005	2010	2015	2020
92.4:7.6	89:11	85:15	82:18	80:20

[지표 10] 자치구 재정 격차 지수

2000	2005	2010	2015	2020
37	33	28	23	20

· 재정격차 지수는 25개 자치구 기준재정수요충족도의 표준편차임

[지표 11] 지하철 건설부채 규모(억원)

2002	2005	2010	2015	2020
49,392	24,000	11,000	4,000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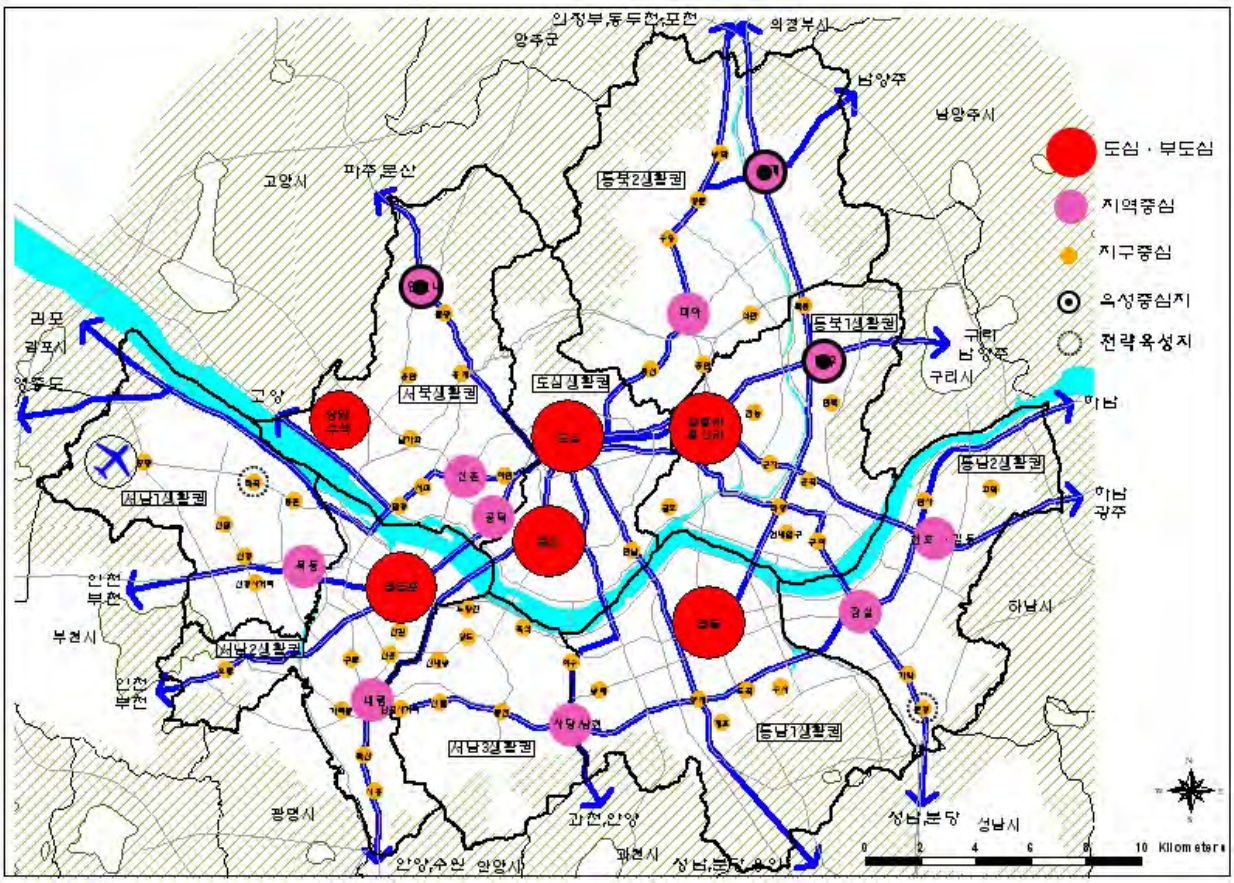
부록

1. 공간구조 개편구상 관련
2. 자치구별 생활환경 관련
3. 시가화예정용지 수요근거
4. 서울시 세출 및 세입예산 추계방법 및 결과
5. 계획의 실현화방안 관련자료
6. 용도지역별 수요량 산출
7. 서울시 관내 하천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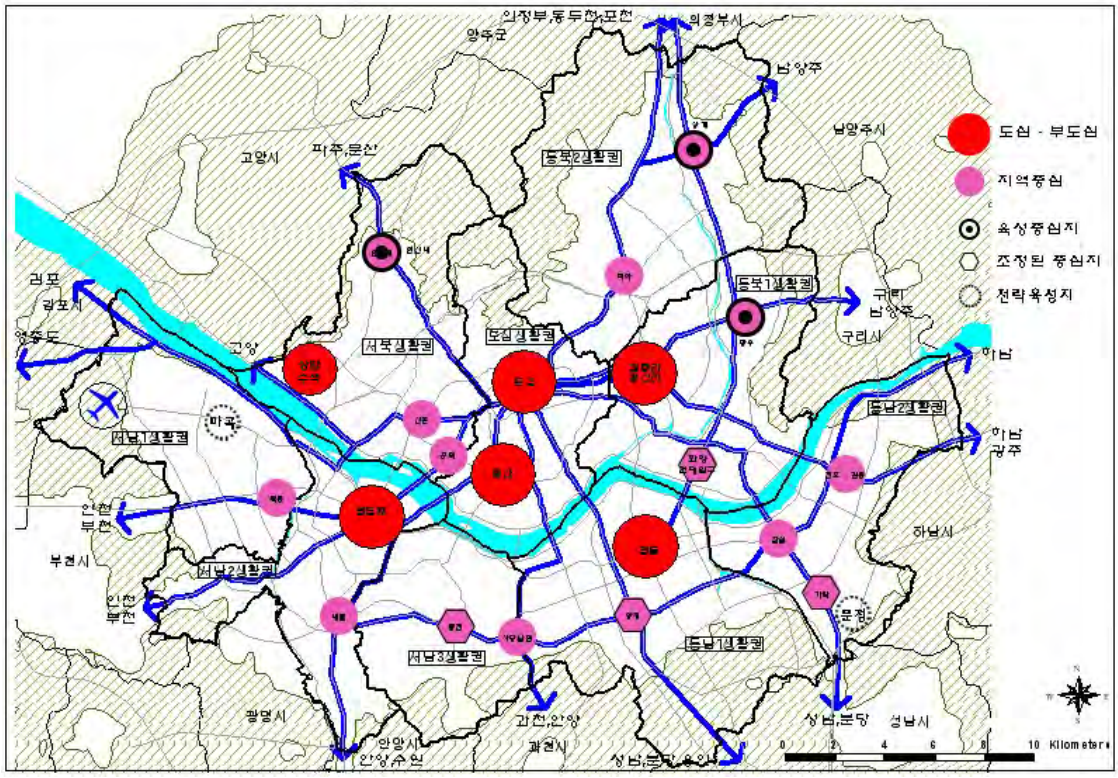
부록 1. 공간구조 개편구상 관련(중심지체계 대안 설정 및 평가)

1) 대안

구 분	대안 I(기존 중심지체계 보완)	대안 II(적극적인 공간구조 개편)
중심지 체 계	• 1도심 5부도심 (상암 신부도심 포함) • 11지역중심 • 53지구중심	• 1도심 5부도심 • 15지역중심 ※ 지구중심은 자치구가 자율 선정 (기존 중심지 중에서 자치구당 1개소 선정 원칙. 단, 2개소 이상 선정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후 확정)
핵 심 전 략	• 정책일관성 유지를 위해 기존 중심지체계를 수용하되 “전략적 육성중심지” 개념을 도입하여 중심지 육성의 우선순위 설정	• 다핵분산형 공간구조 구현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중심지체계를 조정하되 지구중심은 자치구가 자율적으로 선정하도록 역할 분담



[그림] 중심지체계 대안1



[그림] 중심지체계 대안2

2) 대안별 중심지체계 비교

구분	기존계획	대안 1	대안 2
중심지 체계	1도심 4부도심(수색은2011년 이후) 11지역중심 54지구중심	1도심 5부도심 11지역중심 53지구중심	1도심 5부도심 15지역중심
도심/ 부도심	도심 청량리·왕십리, 영동, (수색) 용산, 영등포	도심 청량리·왕십리, 영동 영등포, 용산, 상암(수색)	도심 청량리·왕십리, 영동, 영등포, 용산, 상암(수색)
지역 중심	미아, 상계, 망우, 연신내, 신촌 공덕, 천호·길동, 잠실, 사당·남현 목동, 대림	미아, 상계, 망우, 연신내, 신촌 공덕, 천호·길동, 잠실, 사당·남현 목동, 대림	미아, 상계, 망우, 연신내, 신촌 공덕, 천호·길동, 잠실, 사당·남현 목동, 대림, 가락, 양재, 봉천 화양·건대입구
지구 중심	한남, 화양, 중곡, 군자, 금호, 구의 건대입구, 전농, 면목, 묵동, 종암 동선, 석관, 방학, 쌍문, 수유, 불광 남가좌, 응암, 홍제, 아현, 서교 합정, 수색, 도곡, 개포, 방배, 양재, 수서 가락, 암사, 이수, 문정, 고덕 신정4거리, 등촌, 신월, 화곡, 신정 공항, 오류, 구로, 가리봉, 시흥 신길, 신풍, 상도, 노량진, 신대방, 흑석 난곡4거리, 봉천, 독산, 신림	한남, 화양, 중곡, 군자, 금호, 구의 건대입구, 전농, 면목, 묵동, 종암 동선, 석관, 방학, 쌍문, 수유, 불광 남가좌, 응암, 홍제, 아현, 서교 합정, 도곡, 개포, 방배, 양재, 수서 가락, 암사, 이수, 문정, 고덕 신정4거리, 등촌, 신월, 화곡, 신정 공항, 오류, 구로, 가리봉, 시흥 신길, 신풍, 상도, 노량진, 신대방 흑석, 난곡4거리, 봉천, 독산, 신림	지구중심은 기존 중심지중 자치구가 자율적으로 1개소 선정

3) 대안 평가

구 분	대안 I	대안 II
정책 일관성 (consistency)	• 정책일관성 유지 및 정책혼선 최소화 • 각종 도시계획사업 반영	• 정책일관성 유지 곤란으로 정책 혼선 불가피 • 시정책에 대한 주민의 신뢰성 상실 우려
이동성 (mobility)	• 동북2생활권과 서북권의 장거리 및 교차통근 완화로 시민들의 편리성 제고 • 동북2생활권과 서북생활권의 지역중심으로 인접 광역생활권의 교통 흡수	• 동북2생활권과 서북권의 장거리 및 교차통근 완화로 시민들의 편리성 제고 • 인접 광역생활권의 교통 흡수
직주균형 (job-housing balance)	• 동북2생활권과 서북권생활권의 고용기반 개선	• 지역중심의 위상 강화로 생활권별 자족기반 강화 • 동북2생활권과 서북생활권의 고용기반 개선
중심성 (centrality)	• 다핵분산형 공간구조 구현 • 중심지간 기능적 연계 강화 필요	• 육성 대상 중심지로 개발여력 집중 가능
환경쾌적성 (amenity)	• 바람길, 오존발생, 풍수해다발지역 등 환경 및 재난요소를 도시계획 수립시 반영 • ‘선계획 후개발’ 의 원칙 견지로 친환경적 도시구조 구현	• 중심지위계 상향조정으로 과밀개발 조장 우려 • 바람길, 오존발생, 풍수해다발지역 등 환경 및 재난요소를 도시계획 수립시 반영
개발잠재력 (development potential)	• 남북교류축 거점 기능 강화 • 국제업무축 기능 강화	• 남북교류축 거점 기능 강화 • 국제업무축 기능 강화
기 타	• 정책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전략육성중심지 등에 개발여력 집중 • 지구중심의 과다지정 문제 상존	• 기존 공간구조의 적극적 개편 • 자치구 자율성 확보 (지구중심) • 제외되는 중심지로부터 집단민원발생 예상

부록 2. 자치구별 생활환경 관련

1) 생활환경 격차분석 지표

구 분		인 구			주거환경				산업 / 경제	
		인구 증감율 (10년간) (%)	순 인구밀도 (인/ha)	노령화 지수 (%)	30년이상 경과 노후주택 비율(%)	1인당 주거면적 (㎡/인)	평당 아파트 가격 (만원/평)	차량통행 불가능 필지비율 (%)	종사자수 증감율 (10년간) (%)	순 고용밀도 (인/ha)
기준연도		1990-2000	2000	2000	2000	2000	2002	2000	91-2000	2000
강북	종로구	-30.1	148.9	50.6	23.4	22.4	637	31.0	-30.6	193.0
	중 구	-28.1	173.4	46.9	16.1	17.2	825	26.1	-38.3	441.7
	용산구	-23.6	182.7	46.9	14.9	25.5	998	27.5	-7.7	91.2
	성동구	-25.7	323.3	30.7	5.8	19.3	706	25.3	5.4	114.6
	광진구	5.5	362.5	24.2	1.4	19.4	734	21.2	-9.7	91.8
	동대문	-27.0	323.7	38.1	11.1	16.7	610	25.3	-14.6	107.2
	중랑구	-1.7	451.7	24.8	2.1	18.1	499	15.5	8.8	85.2
	성북구	-16.5	321.0	37.2	14.8	19.1	573	26.1	2.6	58.4
	강북구	-6.9	376.1	34.7	6.5	17.5	528	23.6	1.5	59.2
	도봉구	15.3	397.4	25.4	1.5	21.3	474	15.5	22.0	64.6
	노원구	26.3	438.7	24.8	1.6	20.9	507	14.8	50.0	63.0
	은평구	-5.8	357.7	32.1	5.4	18.9	493	22.9	22.6	57.0
	서대문	-9.2	302.0	37.0	7.8	21.1	602	26.5	29.4	68.5
	마포구	-15.7	317.0	37.2	8.1	19.9	688	27.3	-16.9	110.4
강남	양천구	-6.3	385.5	23.1	0.3	19.9	779	6.2	46.2	77.6
	강서구	29.0	347.7	25.7	0.9	18.5	605	16.5	31.8	81.5
	구로구	-13.6	344.3	24.6	2.5	20.0	531	26.5	-34.0	99.7
	금천구	-8.6	319.1	23.1	0.7	17.3	474	7.7	23.6	122.9
	영등포	-17.0	262.0	29.4	6.1	21.3	660	17.9	-27.1	167.8
	동작구	-0.6	363.3	33.3	6.6	20.6	663	25.0	41.8	79.4
	관악구	-12.1	460.4	28.8	4.1	17.5	634	13.8	5.7	90.9
	서초구	-6.9	193.2	31.4	0.2	29.4	1176	16.0	28.7	144.4
	강남구	6.6	224.7	30.2	0.1	27.6	1458	9.8	45.7	213.1
	송파구	-0.1	316.6	23.4	0.7	21.8	1169	11.5	41.6	91.9
	강동구	-10.9	371.2	23.2	1.2	18.8	1020	15.4	9.6	76.1
서울시평균		-6.8	315.5	29.4	4.5	20.4	721.7	21.1	-1.5	114.0
최 고		29.0	460.4	50.6	23.4	29.4	1458	31.0	50.0	441.7
최 저		-30.1	148.9	23.1	0.1	16.7	474	6.2	-38.3	57.0
변이계수		-2.06	0.26	0.25	1.04	0.15	0.35	0.35	2.77	0.68

구 분		산업 / 경제		기반시설			문화 / 의료 / 교육			
		재정 자립도 (3년평균) (%)	대형 승용차 등록비율 (%)	1인당 공원면적 (㎡/인)	주차장 확보율 (%)	정보화 지수	인구 만명당 문화 시설수 (개/만명)	인구 10만명당 병원수 (개/만명)	초·중·고 노후학교 건물비율 (30년이상 경과)(%)	전문대졸 이상 인구비율 (%)
기준연도		2000-2002	2000	2001	2001	2002	2000	2000	2002	2000
강북	종로구	71.4	14.7	61.6	103.2	134	12.8	4.7	44.2	30.4
	중 구	94.4	20.0	13.5	118.8	109	4.7	4.4	42.3	24.0
	용산구	52.2	11.6	10.8	106.9	98	1.0	2.6	32.5	30.5
	성동구	42.6	7.9	3.3	104.8	89	0.3	2.2	29.3	25.0
	광진구	42.3	7.1	8.6	71.4	98	0.6	1.6	5.4	30.6
	동대문구	36.4	6.5	2.3	70.0	86	0.2	2.4	29.4	22.1
	중랑구	33.3	4.0	10.7	65.6	84	0.3	0.7	3.1	20.1
	성북구	43.9	6.1	17.1	80.3	99	0.4	1.3	22.8	23.7
	강북구	31.3	4.3	41.1	57.5	87	0.3	2.1	14.0	20.5
	도봉구	37.0	4.0	29.4	79.1	83	0.1	1.1	4.2	29.3
	노원구	34.5	3.7	23.0	105.4	96	0.3	0.8	7.6	33.1
	은평구	32.2	4.2	33.1	77.7	97	0.1	1.1	15.1	27.3
	서대문구	40.3	5.8	14.2	81.6	94	0.9	1.1	29.2	30.8
	마포구	46.7	7.2	13.0	72.4	114	0.5	1.6	18.5	32.1
강남	양천구	56.6	5.5	4.7	94.1	93	0.3	1.5	0.0	32.9
	강서구	44.0	4.6	6.4	65.9	94	0.3	1.8	4.9	29.2
	구로구	38.0	4.7	6.4	35.6	91	0.2	1.3	9.1	25.7
	금천구	45.5	5.3	7.5	72.1	88	0.1	1.5	14.8	19.9
	영등포구	78.3	9.1	4.0	146.1	114	0.5	3.8	15.6	31.1
	동작구	41.0	5.5	9.6	78.9	108	0.5	0.7	24.0	33.7
	관악구	33.0	4.0	21.3	83.6	102	0.3	1.0	3.8	29.9
	서초구	91.1	14.7	41.6	109.6	171	0.8	2.2	2.9	53.6
	강남구	89.9	16.4	9.2	115.4	195	2.5	3.1	2.3	52.1
	송파구	69.2	8.2	6.7	92.9	113	0.7	1.1	2.1	39.7
	강동구	42.6	5.2	5.4	72.1	91	0.3	1.5	5.1	30.3
서울시평균		52.6	7.8	15.0	87.8	105	0.8	1.7	14.1	31.1
최 고		94.4	20.0	61.6	146.1	195	12.8	4.7	44.2	53.6
최 저		31.3	3.7	2.3	35.6	83	0.1	0.7	0.0	19.9
변이계수		0.38	0.57	0.89	0.26	0.25	2.20	0.57	0.84	0.27

2) 종 합

- 지금까지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생활환경을 인구, 주거환경, 산업경제, 기반시설, 문화·의료·교육 등 5개 부문으로 나누고, 부문별 지표를 추출하여 비교분석하였다. 그 결과, 각 지표들은 부문별, 자치구별로 다양한 양상과 패턴을 보이지만, 전반적인 경향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인구부문과 관련하여 종로·중구·용산구 등 도심부 구시가지에서는 상주인구가 감소하고, 낮은 인구밀도를 보이면서 노령화가 심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반해, 강서·노원, 관악·중랑, 양천·금천구 등 외곽지역에서는 인구가 증가하거나, 높은 인구밀도를 보이며, 상대적으로 젊은층 인구의 거주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 둘째, 주거환경 및 기반시설 여건과 관련한 자치구간 격차는 공통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즉, 도심부와 외곽에 위치한 구시가지에서는 차량통행 불가능필지와 노후주택 비율이 높고, 1인당 주거면적과 아파트가격이 낮게 나타나는 등 전반적인 주거환경 수준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반해, 강남·서초·송파·양천구 등 토지구획정리사업나 택지개발사업 등을 통해 개발된 신시가지에서는 주차장, 정보인프라를 비롯하여 1인당 주거면적 등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 주거환경 수준의 격차를 보이고 있다.
- 셋째, 산업·경제부문에서는 도심부(종로·중구)와 강남지역(강남·서초구) 등에서 순고용밀도와 재정자립도, 대형승용차 등록비율 등이 높게 나타나는 반면, 노원·도봉·중랑, 은평, 관악구 등에서는 산업경제기반이 취약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 넷째, 문화·의료시설은 종로·중구, 그리고 교육여건은 강남·서초·송파구의 수준이 높게 나타났으며, 구로·금천구(서남권)와 노원·중랑·도봉구(동북권) 등에서 문화·의료시설의 분포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후한 학교건물의 비율은 종로·중·용산구 등 도심부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렇게 볼 때, 25개 자치구간에 복잡한 양상을 띠면서 나타나는 각 부문별 생활환경 지표들은 크게 도심부와 강남지역으로 구분되면서 지역별로 그룹화되는 패턴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 다섯째, 각 부문별 지표의 변이계수를 통해 볼 때, 종사자수 증감율(2.77), 인구 만명당 문화시설수(2.20), 인구증감율(-2.06), 30년이상 노후주택 비율(1.04), 1인당 공원면적(0.89) 순으로 자치구간에 격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록 3. 시가화예정용지 수요근거

- 서울시는 기성시가지로 도시의 대부분이 기개발되어 장래 도시발전을 위해 필요한 시가화예정용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임.
- 현재 시가화예정용지로 계획하고 있는 지역은 대규모 개발 가능지중 용도지역 변경이 예상되는 마곡, 문정/장지, 뚝섬 지역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대규모 집단취락, 지역현안사업 대상지 및 국책사업으로 인한 임대주택단지 대상지임

1. 서울시의 대규모 미개발지역(시가화예정용지)

토지이용	강서구 마곡일대	송파구 문정일대	송파구 장지일대	성동구 뚝섬일대
대상지역 면적	**3,419,032㎡**	**1,210,000㎡**	**1,336,000㎡**	**1,157,030㎡**
용도지역 변경예상	2,591,938 ㎡	1,175,000㎡	149,000㎡	83,870㎡
녹지지역 유지예상	827,094㎡	35,000㎡	1,187,000㎡	1,073,160㎡

- 대규모 미개발지역에 대한 시가화예정용지 대상면적은 마곡 3.419㎢, 문정·장지 2.546㎢, 뚝섬 1.157㎢ 임. 다만, 녹지지역에서 주거, 상업, 공업지역 등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되어 실제 시가화가 되는 면적은 마곡 2.59㎢, 문정·장지 1.33㎢, 뚝섬 0.084㎢임, 현재 계획상 공원이나 녹지지역으로 계획된 부분은 가급적 녹지지역으로 유지할 계획이나 향후 개발계획이 구체화 되면서 계획내용이 일부 변동 될 수 있음.

- 전술한 서울시의 대규모 미개발지역은 개발행위제한의 기한이 만료되어 더 이상 방치 시 소규모 개별필지별 건축행위가 예상되어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임. 따라서 바람직한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계획수립이 불가피하므로 이를 시가화예정용지 대상지로 지정함.

- 전술한 시가화 예정용지 대상지를 제외한 2020년 토지수요추정치의 여유분은 미래의 주거 및 상업용도 수요 추정치와 현재 지정된 주거 및 상업용도(공급)의 공간적 불일치 문제와 미래의 주거 및 상업용도 수요추정에 대한 일부 불확실성 문제를 감안한 것임.

2. 서울시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구분	해제면적(㎡)	용도지역변경	비고
개발제한구역 해제 총 예상면적 (2005.1부터)	4,585,139	3,792,117	
집단취락	4,037,439	3,365,667	
가. 대규모(1천인이상)-16개소 중 6개소	3,358,859	2,687,087	80% 변경 가정
1) 노원구 중계본동 104마을	133,331		
2) 노원구 상계1동 노원마을	118,786		
3) 노원구 상계4동 희망촌	27,178		
4) 은평구 진관내동, 구파발동 중 일부 (미인가 지역)	2,702,759		
5) 도봉구 도봉1동 무수골	81,177		
6) 성북구 정릉3동 경국사 일대	295,628		
나. 중규모(100호이상)-13개소 중 10개소	678,580	678,580	100% 변경 가정
지역현안사업	547,700	426,450	
1) 구로구 천왕동 천왕지구(임대단지)	485,000	363,750	75% 변경 가정
2) 중랑구 신내동 상봉터미널	39,700	39,700	100% 변경 가정
3) 도봉구 도봉동 서울승마장 이전	23,000	23,000	100% 변경 가정

- 개발제한구역중 기해제된 대규모 집단취락지역은 2004년도 시가화용지상 용도지역 현황에 포함되어 있음.
- 다만 일부 대규모 집단취락(희망촌, 무수골, 정릉3동, 노원마을)은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었으나 아직 구체적인 용도지역이 결정이 되지 않았으므로 현재는 자연녹지 상태임.
- 국책사업인 국민임대주택단지 15개소와 개발제한구역내 차량기지 및 차고지 10개소 추진 중이나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사업이므로 포함하지 않았음. 향후 이를 모두 반영할 경우 개발제한구역중 2020년 시가화예정용지 대상지역은 다소 증가할 수도 있음.

부록 4. 서울시 세출 및 세입예산 추계방법 및 결과

세출기준

• **추계방법**

- 단순선형예측

1) 세입총계와 세출총계는 1980-2000년간 서울시 세입 · 세출결산 총계자료를 선형예측한 것이다.
2) 각 연도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는 1980-2001년 자료를 이용해 세입·세출계 대비 평균비율을 구하여 그 비율을 세입·세출계 예측치에 곱하여 구하였다.

$$\alpha = \mathrm{MIN}\left(\frac{B}{A}\right)_{'80-'99} \qquad \beta = \mathrm{MIN}\left(\frac{C}{A}\right)_{'80-'99}$$

$$B_i = \alpha * A_i \qquad C_i = \beta * A_i \quad (i = 2001 \sim 2020)$$

세입: 계(A), 일반회계(B), 특별회계(C), 세출: 계(D), 일반회계(E), 특별회계(F)

4) E, F 계산방법은 B, C 계산방법과 동일하다.
5) 이하에서 B, C, E, F 계산방법은 위와 동일하다.

- 국내총생산(GDP)을 이용한 예측 : GDP의 일정 비율이 서울시 세입 내지 세출액에 반영되었을 것으로 가정한다.

1) GDP 잠재성장률은 고성장과 저성장(KDI예측) 각각에 대해 GDP 값을 예측하였다.
2) 1980-2001년 GDP 자료와 서울시재정규모 자료를 이용하여 GDP 대비 서울시재정규모 비율을 2002-20년까지 예측하였다.

국내총생산(G), 서울시재정규모(S)

$$\gamma_i = \left(\frac{S}{G}\text{의 i년도 예측값}\right)$$

$$A_i = \gamma_i * G_i \qquad D_i = \gamma_i * G_i \quad (i = 2001 \sim 2020)$$

※ KDI에 의한 GDP 잠재성장율

구 분	2000-2010년		2010-2020년	
	고성장	저성장	고성장	저성장
잠재성장률(%)	5.1	4.4	4.1	3.3

- 서울시 1인당재정지출을 통한 예측

1) 서울시의 2001-20년 인구예측치를 기본 자료로 이용.
2) 1980-2001간 서울시 1인당 재정지출 자료를 통해 1인당 재정지출액을 선형예측
3) 1인당 재정지출 예측치와 인구예측치을 통해 최종 서울시 총재정규모를 예측인구(P), 서울시 1인당 재정지출액(T)

$$\delta_i = \left(\frac{T}{P}\text{의 i년도 예측값}\right)$$

$$A_i = \delta_i * P_i \qquad D_i = \delta_i * P_i \quad (i = 2001 \sim 2020)$$

서울시 세입 및 세출 추계결과

• 세입추계

(단위 : 백만원)

구 분	단순선형예측			GDP고성장			GDP저성장			1인당 재정규모		
	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2001	12,515,593	8,852,631	3,662,962	12,515,593	8,852,631	3,662,962	12,515,593	8,852,631	3,662,962	12,515,593	8,852,631	3,662,962
2002	11,966,128	6,739,847	5,226,281,	13,457,483	7,579,844	5,877,639	13,278,818	7,479,212	5,799,606	11,947,317	6,468,927	5,478,390
2003	12,521,974	7,052,924	5,469,050	14,143,815	7,966,416	6,177,399	13,863,086	7,808,297	6,054,789	12,453,867	6,743,201	5,710,666
2004	13,077,820	7,366,001	5,711,819	14,865,149	8,372,703	6,492,446	14,473,061	8,151,862	6,321,199	12,948,090	7,010,800	5,937,290
2005	13,633,667	7,679,078	5,954,589	15,623,272	8,799,711	6,823,561	15,109,876	8,510,544	6,599,332	13,431,128	7,272,343	6,158,785
소계	63,715,182	37,690,481	26,024,701	70,605,312	41,571,305	29,034,007	69,240,434	40,802,546	28,437,888	63,295,995	36,347,902	26,948,093
2006	14,189,513	7,992,155	6,197,358	16,420,059	9,248,496	7,171,563	15,774,711	8,885,008	6,889,703	13,957,377	7,557,283	6,400,094
2007	14,745,359	8,305,232	6,440,127	17,257,482	9,720,170	7,537,312	16,468,798	9,275,948	7,192,850	14,475,807	7,837,989	6,637,818
2008	15,301,206	8,618,309	6,682,897	18,137,613	10,215,898	7,921,715	17,193,425	9,684,090	7,509,335	14,986,166	8,114,325	6,871,841
2009	15,857,052	8,931,386	6,925,666	19,062,632	10,736,909	8,325,723	17,949,936	10,110,190	7,839,746	15,487,243	8,385,636	7,101,607
2010	16,412,898	9,244,463	7,168,435	20,034,826	11,284,491	8,750,335	18,739,733	10,555,038	8,184,695	15,978,442	8,651,597	7,326,845
소계	76,506,028	43,091,545	33,414,483	90,912,612	51,205,964	39,706,648	86,126,603	48,510,274	37,616,329	74,885,035	40,546,830	34,338,205
2011	16,968,744	9,557,540	7,411,204	20,856,254	11,747,156	9,109,098	19,358,145	10,903,355	8,454,790	16,500,548	8,934,294	7,566,254
2012	17,524,591	9,870,617	7,653,974	21,711,360	12,228,789	9,482,571	19,996,963	11,263,165	8,733,798	17,013,324	9,211,939	7,801,385
2013	18,080,437	10,183,694	7,896,743	22,601,526	12,730,169	9,871,357	20,656,863	11,634,850	9,022,013	17,517,520	9,484,938	8,032,582
2014	18,636,283	10,496,771	8,139,512	23,528,188	13,252,106	10,276,082	21,338,539	12,018,800	9,319,739	18,013,637	9,753,563	8,260,074
2015	19,192,130	10,809,848	8,382,282	24,492,845	13,795,443	10,697,402	22,042,711	12,415,420	9,627,291	18,502,013	10,017,996	8,484,017
소계	90,402,185	50,918,470	39,483,715	113,190,173	63,753,663	49,436,510	103,393,221	58,235,590	45,157,631	87,547,042	47,402,730	40,144,312
2016	19,747,976	11,122,925	8,625,051	25,497,051	14,361,056	11,135,995	22,770,120	12,825,129	9,944,991	19,013,997	10,295,212	8,718,785
2017	20,303,821	11,436,001	8,867,820	26,542,430	14,949,859	11,592,571	23,521,534	13,248,358	10,273,176	19,515,781	10,566,905	8,948,876
2018	20,859,667	11,749,078	9,110,589	27,630,669	15,562,803	12,067,866	24,297,745	13,685,554	10,612,191	20,007,929	10,833,381	9,174,548
2019	21,415,514	12,062,155	9,353,359	28,763,527	16,200,878	12,562,649	25,099,570	14,137,177	10,962,393	20,490,895	11,094,885	9,396,010
2020	21,971,360	12,375,232	9,596,128	29,942,832	16,865,114	13,077,718	25,927,856	14,603,704	11,324,152	20,965,456	11,351,838	9,613,618
소계	104,298,338	58,745,391	45,552,947	138,376,509	77,939,710	60,436,799	121,616,825	68,499,922	53,116,903	99,994,058	54,142,221	45,851,837
총계	334,921,733	190,445,887	144,475,846	413,084,606	234,470,642	178,613,964	380,377,083	216,048,332	164,328,751	325,722,130	178,439,683	147,282,447

• 세출 추계

(단위 : 백만원)

구 분	단순선형예측			GDP 고성장 가정			GDP 저성장 가정			1인당 재정규모 고려		
	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2001	10,841,038	7,847,811	2,993,227	10,841,038	7,847,811	2,993,227	10,841,038	7,847,811	2,993,227	10,841,038	7,847,811	2,993,227
2002	10,643,999	6,211,535	4,432,464	11,133,877	6,497,414	4,636,463	10,986,061	6,411,152	4,574,908	9,938,800	5,587,656	4,351,144
2003	11,156,041	6,510,348	4,645,693	11,701,705	6,828,782	4,872,923	11,469,447	6,693,243	4,776,204	10,366,326	5,828,014	4,538,312
2004	11,668,083	6,809,161	4,858,922	12,298,492	7,177,050	5,121,442	11,974,103	6,987,746	4,986,357	10,783,534	6,062,571	4,720,963
2005	12,180,125	7,107,974	5,072,151	12,925,715	7,543,080	5,382,636	12,500,964	7,295,207	5,205,757	11,191,367	6,291,857	4,899,510
소계	56,489,286	34,486,829	22,002,457	58,900,827	35,894,137	23,006,691	57,771,613	35,235,159	22,536,453	53,121,065	31,617,909	21,503,156
2006	12,692,167	7,406,787	5,285,379	13,584,927	7,927,777	5,657,150	13,051,006	7,616,196	5,434,810	11,635,166	6,541,364	5,093,802
2007	13,204,208	7,705,600	5,498,608	14,277,758	8,332,093	5,945,665	13,625,250	7,951,308	5,673,942	12,072,423	6,787,192	5,285,231
2008	13,716,250	8,004,413	5,711,837	15,005,924	8,757,030	6,248,894	14,224,761	8,301,166	5,923,595	12,502,924	7,029,223	5,473,701
2009	14,228,292	8,303,226	5,925,066	15,771,226	9,203,638	6,567,587	14,850,651	8,666,417	6,184,234	12,925,654	7,266,884	5,658,770
2010	14,740,334	8,602,039	6,138,294	16,575,558	9,673,024	6,902,534	15,504,080	9,047,740	6,456,340	13,340,108	7,499,893	5,840,215
소계	68,581,251	40,022,065	28,559,184	75,215,393	43,893,562	31,321,830	71,255,748	41,582,827	29,672,921	62,476,275	35,124,556	27,351,719
2011	15,252,376	8,900,852	6,351,523	17,255,156	10,069,618	7,185,538	16,015,714	9,346,315	6,669,399	13,780,344	7,747,396	6,032,948
2012	15,764,417	9,199,665	6,564,752	17,962,617	10,482,472	7,480,145	16,544,233	9,654,743	6,889,489	14,212,774	7,990,511	6,222,263
2013	16,276,459	9,498,478	6,777,981	18,699,085	10,912,254	7,786,831	17,090,192	9,973,350	7,116,843	14,638,018	8,229,586	6,408,432
2014	16,788,501	9,797,291	6,991,210	19,465,747	11,359,656	8,106,091	17,654,169	10,302,470	7,351,698	15,056,493	8,464,855	6,591,638
2015	17,300,543	10,096,104	7,204,438	20,263,843	11,825,402	8,438,441	18,236,756	10,642,452	7,594,304	15,468,475	8,696,474	6,772,001
소계	81,382,296	47,492,390	33,889,904	93,646,448	54,649,402	38,997,046	85,541,064	49,919,330	35,621,733	73,156,104	41,128,822	32,027,282
2016	17,812,584	10,394,917	7,417,667	21,094,660	12,310,243	8,784,417	18,838,569	10,993,653	7,844,916	15,900,180	8,939,181	6,960,999
2017	18,324,626	10,693,730	7,630,896	21,959,542	12,814,963	9,144,578	19,460,242	11,356,443	8,103,799	16,323,341	9,177,085	7,146,256
2018	18,836,668	10,992,543	7,844,125	22,859,883	13,340,377	9,519,506	20,102,430	11,731,206	8,371,224	16,738,430	9,410,451	7,327,979
2019	19,348,710	11,291,356	8,057,353	23,797,138	13,887,332	9,909,805	20,765,810	12,118,336	8,647,474	17,145,818	9,639,487	7,506,331
2020	19,860,752	11,590,169	8,270,582	24,772,821	14,456,713	10,316,108	21,451,082	12,518,241	8,932,841	17,546,156	9,864,560	7,681,597
소계	94,183,340	54,962,715	39,220,623	114,484,044	66,809,628	47,674,414	100,618,133	58,717,879	41,900,254	83,653,925	47,030,764	36,623,162

• 투자가용재원 추계

- 세입(세출) 추계에서 경직성 경비 지출추계를 차감한 것이며, 인건비+기본경비+법정의무경비로 구성된다.
- 경직성 경비는 지난 5년간 중기재정계획상의 경직성 경비에 근거하여 산정하였는데, 경직성 경비는 세출에서 42～44%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 이를 통해 경직성 경비를 추계한 뒤, 세출총액으로부터 차감함으로써 향후 20년간 투자가용재원을 산정하였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단순선형	GDP(고성장)	GDP(저성장)	1인당 지방세부담액
2001–2005	31,634,000	32,984,463	32,352,103	29,747,796
2006–2010	38,748,407	42,496,697	40,259,498	35,299,095
2011–2015	46,387,909	53,378,475	48,758,406	41,698,979
2016–2020	54,155,421	65,828,325	57,855,426	48,101,007
총계	170,925,736	194,687,961	179,225,434	154,846,878

- 이들 투자가용재원은 우선 중기재정계획상의 8개 사업부문으로 재배정하였는데, 총예산에서 각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5년간 중기재정계획상의 사업부문 비중에 기초하였다.

- 중기재정계획상의 8개 사업부문이 총세출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아래 표에 나타나 있는데, 도시방재의 경우 7.44～11.01, 환경보전의 경우 19.85～21.46, 시민복지증진의 경우 9.94～17.16, 문화수준향상의 경우 1.75～4.08, 주택 및 도시개발의 경우 8.74～15.10, 산업경쟁력제고의 경우 0.72～5.76 등이다.

[표] 중기재정계획 8개 사업부문별 예산비중(세출예산 총계 기준)

구 분	2001-2005	2000-2004	1999-2003	1998-2002	1997-2001	1996-2000
도시안전관리	11.01	7.44	8.45	9.85	7.89	8.07
도로-교통	31.09	38.66	34.79	36.90	43.62	41.33
환경보전	21.46	20.10	20.41	19.96	19.85	21.39
시민복지증진	17.16	15.03	12.44	13.15	11.86	9.94
문화수준향상	4.08	3.43	4.051	1.90	2.60	1.75
주택-도시개발	8.74	9.66	11.60	15.10	10.88	14.11
산업경쟁력제고	2.28	2.72	5.76	1.84	0.80	0.72
일반행정	4.17	2.95	2.49	1.30	2.50	2.69

부록 5. 계획의 실현화방안 관련자료

서울시(본청) 세입/세출 변화추이(1980-2000)

(단위 : 백만원)

년도	세입			세출		
	계	일반	특별	계	일반	특별
1980	722,175	429,794	292,381	672,890	409,483	263,407
1981	877,532	510,616	366,916	774,964	473,257	301,707
1982	1,262,305	675,639	586,666	1,040,882	572,132	468,750
1983	1,646,732	873188	773,544	1,318,393	706,963	611,430
1984	1,690,556	940,048	750,508	1,483,364	855,570	627794
1985	1,853,823	888,858	964,965	1,705,749	848,815	856,934
1986	2,200,855	981,781	1,219,074	1,925,924	895,124	1,030,800
1987	2,443,714	1,073,551	1,370,163	1,940,854	944,971	995,883
1988	2,754,160	1,266,056	1,488,104	2,011,597	1,012,746	998,851
1989	3,919,349	2,047,512	1,871,837	2,901,899	1,490,124	1,411,775
1990	4,715,703	2,392,258	2,323,445	3,006,694	1,952,970	1,053,724
1991	7,143,299	3,906,025	3,237,274	4,968,000	2,524,152	2,443,848
1992	6,748,999	3,179,973	3,569,026	5,865,646	2,825,430	3,040,216
1993	6,905,784	3,260,676	3,645,108	6,045,031	2,962,877	3,082,154
1994	8,132,260	3,707,881	4,424,379	6,578,828	3,164,355	3,414,473
1995	9,269,740	4,529,164	4,740,576	7,290,895	3,480,981	3,809,914
1996	10,093,969	5,992,621	4,101,348	8,081,160	4,804,503	3,276,657
1997	10,066,793	6,370,586	3,696,207	8,729,674	5,833,284	2,896,390
1998	9,005,426	5,640,143	3,365,283	8,215,993	5,400,671	2,815,322
1999	10,128,752	6,335,609	3,793,143	9,019,221	5,829,478	3,189,743
2000	1,1008,259	6,999,325	4,008,934	10,045,737	6,555,489	3,490,248

주 : ~1999년은 결산총계, 2000년, 2001년은 예산총계 기준.
자료 : 『지방재정연감』 각년도; 서울시, 『2001 서울시예산현황』

자치구 기준재정수요 충족도 현황(1998-2001)

(단위 : %)

구별 \ 년도	98	99	2000	2001
계	67.0	56.3	59.9	65.1
종 로	80.8	72.1	77.7	85.5
중 구	162.2	131.9	149.8	158.8
용 산	57.4	50.5	54.5	55.5
성 동	44.3	39.3	41.9	45.1
광 진	54.1	40.7	44.6	45.7
동대문	44.7	34.7	40.5	41.4
중 랑	39.1	34.2	35.6	36.1
성 북	46.8	40.4	44.2	47.5
강 북	37.2	29.8	31.1	35.1
도 봉	37.2	29.9	34.1	40.2
노 원	40.3	37.3	38.0	38.9
은 평	38.0	33.6	35.9	37.3
서대문	41.2	33.3	35.5	37.5
마 포	51.0	44.9	47.4	52.4
양 천	50.2	43.9	45.8	67.7
강 서	59.2	47.4	51.0	57.2
구 로	52.4	44.4	44.7	47.7
금 천	44.5	35.8	37.7	40.2
영등포	93.2	79.5	87.3	99.5
동 작	45.1	40.2	41.8	42.4
관 악	40.3	37.3	37.7	38.0
서 초	122.9	103.1	108.3	114.9
강 남	205.8	162.4	177.3	203.1
송 파	98.5	85.2	80.8	83.7
강 동	53.6	42.3	46.8	49.7

자치구 지방세수입 및 1인당 지방세 부담액

자치구	지방세수입 (백만원)	1인당 지방세부담액 (원)
종 로	41,328	218,666.67
중 구	71,478	554,093.02
용 산	25,696	104,455.28
성 동	19,795	58,049.85
광 진	20,257	51,676.02
동대문	20,947	56,921.20
중 랑	15,826	34,255.41
성 북	20,644	43,461.05
강 북	12,831	36,348.44
도 봉	13,605	36,183.51
노 원	18,430	29,773.83
은 평	16,603	35,027.43
서대문	17,236	46,458.22
마 포	24,420	62,938.14
양 천	19,458	40,369.29
강 서	31,854	61,140.12
구 로	20,478	51,581.86
금 천	15,279	56,588.89
영등포	55,460	136,265.36
동 작	19,133	45,446.56
관 악	18,708	36,046.24
서 초	68,658	169,525.93
강 남	124,673	223,829.44
송 파	52,941	79,252.99
강 동	24,431	49,656.50

부록 6. 용도지역별 수요량 산출

2004.12.31 현재

구분	세분	면적(㎢)	비율(%)
계		605.96	100.0
주거지역	제1종전용주거지역	4.89	0.808
	제2종전용주거지역	0.13	0.022
	제1종일반주거지역	65.17	10.756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92.29	15.231
	제2종일반주거지역	43.73	7.217
	제3종일반주거지역	87.91	14.507
	준주거지역	9.64	1.592
	소 계	303.78	50.13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22.35	3.69
	근린상업지역	0.74	0.12
	유통상업지역	1.00	0.17
	소 계	24.10	4.00
공업지역	준공업지역	27.89	4.60
	소 계	27.89	4.60
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246.89	40.74
	생산녹지지역	3.24	0.53
	보전녹지지역	0.07	0.01
	소 계	250.19	41.29

[표] 서울시 용도별 토지이용현황

토지이용구분		면적(㎢)	%
시가화용지	주거지역	303.78	50.13
	상업지역	24.10	3.98
	공업지역	27.89	4.60
	소 계	359.08	59.26
시가화예정용지	마곡	3.419 (2.592)	0.56
	문정·장지	2.546 (1.324)	0.42
	뚝섬	1.157 (0.84)	0.19
	소 계	7.12 (4.756)	1.17
보전용지 (자연녹지, 생산녹지, 보전녹지지역)		239.76	39.57
계		605.96	100.0

주 : - 시가화용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택지개발예정지구, 도시공원 중 어린이 공원, 근린공원 등
- 시가화예정용지: 도시지역의 자연녹지지역을 중심으로 개발의 타당성을 분석하여 시가화가 예상되는 지역
- 보전용지: 개발제한구역, 보전생산녹지 및 시가화예정용지를 제외한 자연녹지지역 · 도시공원 등
- 대규모 미개발지역에 대한 시가화예정용지 대상면적은 마곡 3.419㎢, 문정·장지 2.546㎢, 뚝섬 1.157㎢ 임
- ( )은 용도지역 변경예상 면적임

자료 : 서울시 내부자료, 2004년

• 서울시 용도지역은 크게 시가화용지, 시가화예정용지, 보전용지로 분류될 수 있다. 시가화용지는 주로 용도지역상 주거, 상업, 공업지역과 택지개발예정지구, 도시공원 중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등이 포함된다. 시가화예정용지는 녹지지역을 중심으로 개발 타당성을 분석하여 시가화가 예상되는 지역이다. 보전용지는 개발제한구역을 포함하는 자연녹지, 생산녹지, 보전녹지지역, 도시공원 등으로써 환경보전이 요구되는 지역이다.

• 2004년 현재 서울시의 시가화용지는 행정구역의 약 59%에 해당하는 359㎢ 정도이다. 이 중 용도지역상 주거지역이 약 304㎢(약 50%)로써 가장 많고 상업지역이 24㎢(약 4%), 준공업지역이 약 28㎢(약 4.6%) 정도이다. 주거지역은 제1, 2종 전용주거지역이 5㎢를 약간 상회하는 정도이고 일반주거지역은 289㎢로 1,2,3종으로 세분화되어 있다. 제1종 주거지역이 약 65㎢, 제2종 주거지역은 약 44㎢이며 제3종 주거지역이 88㎢정도이다. 그리고 준주거지역이 약 9.6㎢이다. 용도지역상 주거지역은 증가하는 추세인데 이는 서울시의 상주인구는 감소하나 가구수의 증가와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인한 1인당 주거면적 증가가 주요 원인이다. 특히 1인당 주거면적의 증가에 있어 주택재개발 및 주택재건축사업 등을 통한 아파트 건설과 단독주택지내 다세대, 다가구주택의 건립에 의한 영향이 크다.

- 도시계획상 준공업지역의 면적은 약 27.9㎢이나 실제로 공업용지는 약 7.4㎢ 정도로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이는 산업구조의 변화와 수도권 집중억제책으로써 신규 공장입지규제, 지기 상승 등으로 인하여 기존 공장의 운영이 어렵기 때문이다. 즉, 대규모 공장은 대부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였고 공장이전적지는 아파트단지나 상업시설로 전환되었기 때문이다.

- 서울은 대부분이 이미 기성 시가지화되어 있어 시가화예정용지는 그리 많지 않다. 강서구의 마곡지역이 약 3.4㎢, 송파구의 문정, 장지지역이 약 2.5㎢ 그리고 성동구 뚝섬지역이 약 1.2㎢로써 약 7.1㎢에 해당한다. 이들 지역은 현재 녹지지역이나 전철역사 입지 등에 따른 개발압력으로 대부분 개발행위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되어 왔다. 그러나 개발행위제한구역의 시효가 만료됨에 따라 예상되는 난개발을 방지하고 장래 바람직한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장기 종합계획의 수립이 불가피한 지역들로써 시가화예정용지로 분류하였다.

- 보전용지는 약 240㎢로써 전체 행정구역의 약 40%를 차지하는데 개발제한구역을 포함하는 용도지역상 자연녹지, 생산녹지, 보전녹지지역으로 구성된다. 서울시의 녹지지역은 감소추세인데 이는 정부의 개발제한구역 조정, 공공주도의 대규모 국책사업, 지역 현안사업 등의 영향을 받아 더욱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부록 7. 서울시 관내 하천현황

- 서울시에는 하천은 국가하천인 한강, 중랑천, 안양천 및 청계천 등 33개 지방하천 등 총 36개 하천이 있다.
- 36개 하천에 대하여 2004.8월까지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을 모두 완료하였고, 총 하천연장 435,042m에 대한 개수계획도 100%완료하였다.
- 다만, 서울시에서는 중랑천·정릉천·우의천 등 17개 하천에 대하여 자연생태가 되살아나는 친수 환경으로 복원하여 쾌적한 도시하천으로 조성하기 위한 하천정비 계획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도림천·도봉천·불광천 등 6개 하천 6.42㎞에 대하여 이용상황, 교통대책, 주민의견 등을 감안한 복원의 타당성조사로 장기적인 복원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있다.
- 또한 소하천에 대하여도 6개구 총 18개 소하천 지정고시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별첨과 같이 추진하고 있다.
- 아울러 도시기본계획의 방재계획부분에 침수지역 해소 등을 위한 각종 시책에 대한 사항을 보완 반영하였다.

[표] 서울시 관내 법정하천 현황

구분	수 계	하천명	하 천 연 장 (m)	유 로 연 장 (m)	평 균 하 폭 (m)	하천면적 (㎡)	유 역 면 적 (㎢)	개 수 계 획 (m)	기개수 (m)	개수율 (%)	구 간	
											시 점	종 점
계		36개 하천	241,100	787,524		62,493,181	27,663.45	435,042	435,042	100		
소계		3개 하천	74,610	551,370		53,535,675	26,804.25	124,859	124,859	100		
국가	한 강	한 강	40,190	481,700	1,155	46,413,675	26,218.6	59,410	59,410	100	하남시 시계 (강동구 하일동 663)	김포군 시계 (강서구 개화동 658)
		중랑천	20,470	37,170	200	4,194,000	299.65	37,250	37,250	100	의정부 시계	한 강 합류점
		안양천	13,950	32,500	200	2,928,000	286.0	28,199	28,199	100	안양시 시계	
소계		1개 하천	8,120			774,470	5,096	15,319	15,319	100		
지방 1급	중랑천	청계천	3,670		131	480,770	50.96	6,419	6,419	100	동대문구 신설동 (성북천 합류점)	중랑천 합류점
지방 2급			4,450		66	293,700		8,900	8,900	100	종로구 서린동 148	동대문구 신설동 (성북천 합류점)
소계		32개 하천	158,370	222,404		8,476,736	808.24	303,764	303,764	100		
지방 2급	한 강	* 홍제천	11,110	13,380	45	499,950	40.77	18,944	18,944	100	종로구 평창동 49	한 강 합류점
		* 봉원천	1,250	1,250	25	31,250	6.01	2,500	2,500	100	마포구 노고산동 (용산선철도교)	
		* 반포천	4,860	8,360	40	194,560	31.49	7,220	7,220	100	서초구 서초동1385	
		탄 천	8,800	35,620	245	2,156,000	300.95	16,640	16,640	100	성남시 시계 (강남구 세곡동 13)	
		* 성내천	7,720	9,850	55	424,600	34.11	16,150	16,150	100	하남시 시계 (송파구 마천동 77)	
		고덕천	3,420	7,000	40	136,720	18.63	8,995	8,995	100	하남시 시계 (강동구 상일동 425)	
	중랑천	* 도봉천	3,320	3,320	40	132,800	8.36	6,220	6,220	100	도봉구 도봉동 417,428-8	중랑천 합류점
		* 방학천	3,050	3,480	15	45,750	5.23	1,120	1,120	100	도봉구 방학동 587-2	
		* 당현천	6,100	6,100	44	268,400	13.65	11,100	11,100	100	노원구 상계동 산155-1 중계동 203-2	
		* 우이천	8,330	8,330	60	499,800	27.43	16,660	16,660	100	도봉구 우이동 200 (북한교)	

구분	수 계	하천명	하 천 연 장 (m)	유 로 연 장 (m)	평 균 하 폭 (m)	하천면적 (㎡)	유 역 면 적 (㎢)	개 수 계 획 (m)	기개수 (m)	개수율 (%)	구 간	
											시 점	종 점
지방 2급	중랑천	묵동천	3,030	3,030	35	106,050	9.92	6,058	6,058	100	중랑구 신내동 71-37 공릉동 25-21	중랑천 합류점
		* 면목천	1,900	1,900	40	76,000	8.67	3,800	3,800	100	중랑구 상봉동 131-1	
		* 전농천	1,850	1,850	15	27,750	5.68	3,700	3,700	100	성동구 답십리 신답로	
	안양천	목감천	3,600	15,500	55	203,060	52.09	5,217	5,217	100	광명시 시계 (구로구 천왕동 257-19)	안양천 합류점
		* 도림천	11,000	14,200	77	847,000	41.93	27,200	27,200	100	관악구 신림동 808-126	
		* 시흥천	2,050	2,050	10	20,500	4.52	3,850	3,850	100	금천구 시흥동 230,산93-1	
	청계천	* 성북천	5,200	5,450	25	130,000	7.41	9,700	9,700	100	성북구 성북동 236	청계천 합류점
		* 정릉천	9,030	10,850	33	297,990	19.32	22,600	22,600	100	성북구 정릉동 산1-1	
	홍제천	* 불광천	7,300	9,830	40	292,000	20.72	17,380	17,380	100	은평구 불광동 424	홍제천 합류점
	반포천	* 사당천	7,470	7,470	35	261,450	12.79	14,100	14,100	100	동작구 사당동 291	반포천 합류점
	탄 천	양재천	7,900	7,900	90	711,000	62.62	12,884	12,884	100	과천시 시계 (서초구 우면동)	탄 천 합류점
		세곡천	4,800	5,750	35	167,930	13.17	9,300	9,300	100	서초구 내곡동1-2583	
	우이천	* 화계천	2,800	2,800	20	56,000	4.19	5,600	5,600	100	도봉구 수유동 산146-1	우이천 합류점
		* 가오천	2,020	2,016	15	30,240	2.52	4,032	4,032	100	도봉구 수유동 산120	
		* 대동천	1,600	1,600	10	16,000	3.91	3,100	3,100	100	도봉구 수유동 산127-3	
	도림천	* 대방천	7,400	7,400	30	222,000	8.32	14,200	14,200	100	동작구 상도동 34, 211, 278-1	도림천 합류점
		* 봉천천	5,150	5,150	27	139,050	9.34	9,200	9,200	100	관악구 봉천동 산239	

구분	수 계	하천명	하천연장 (m)	유로연장 (m)	평균하폭 (m)	하천면적 (㎡)	유역면적 (㎢)	개수계획 (m)	기개수 (m)	개수율 (%)	구간	
											시 점	종 점
지방 2급	개화천	* 오류천	4,670	4,670	40	186,800	5.52	9,340	9,340	100	구로구 오류동 80	개화천 합류점
	정릉천	* 월곡천	3,500	3,750	24	84,000	4.06	5,254	5,254	100	도봉구 미아동 837	정릉천 합류점
	불광천	* 녹번천	2,220	2,220	20	44,400	5.75	4,240	4,240	100	은평구 불광동 2,239	불광천 합류점
	양재천	여의천	4,690	5,800	30	140,670	11.84	6,600	6,600	100	서초구 신원동 144	양재천 합류점
	고덕천	망월천	1,230	4,528	22	27,016	7.32	1,720	–	0	강동구 하일동 346-1	고덕천 합류점

주: *는 복개하천임

[표] 소하천 지정고시 및 정비계획 수립 현황

서울특별시 건설기획국 치수과(2005년 현재)

구 분 (개)	하천명	시 점	종 점	연 장 (m)	소 하 천 고 시 (고시 번호 및 일자)	정비계획 수립 여부			하천정비 시행 여부 (정비, 미정비)	
						소하천정비종합 계획 수립 현황 (고시번호및일자)	소하천정비중기 계획 수립 현황 (일자)	소하천정비시행 계획 수립 현황 (공고번호및일자)		
종로구 (5)	구기천	구기동 120-1	구기동 192-1	1,040	종로 고시 제1997-7호 1997. 2. 27 변경고시종로 제2003-22호 (2003.3.7)	종로 고시 제2002-93호 2002. 12. 26	2004. 3.	소하천정비실시 설계용역완료 (2004. 11. 2)	미정비 (2006예산반영)	미복개
	구기1천	구기동 123-9	구기동 191	1,050						미복개
	평창천	평창동 63-1	평창동 산6-2	1,110						미복개
	평창1천	평창동 64-2	평창동 2-2	470						미복개
	평창2천	평창동 59-1	평창동 산6-2	170						미복개
강북구 (3)	인수천	우이동 319	우이동 265-10	290	강북 변경고시 제1999-26호 1999. 6. 9	-	-	-	1998년도 수해 발생 후 현 상태 정비 완료(종결)	미복개
	백운천	우이동 185-5	우이동 4-1	394		-	-	-		부분복개
	오리천	수유동 산 124	수유동 516-44	406		-	-	-		부분복개
은평구 (1)	진관천	진관내동 283-1 (창릉천 합류점)	진관외동 1-1 (진관사 입구)	2,000	은평 고시 제1998-22호 1998. 5. 25	은평 고시 제2002-79호 2002. 7. 8	구청장 방침 2002. 8. 8	은평 공고 제2002-508호 2002. 10. 15	일부정비:500m 미정비:1,500m	미복개
서초구 (7)	내곡천	내곡동 산1-149 2	내곡동 1-1332	530	서초 고시 제1997-32호 1997. 7. 1	서초 고시 제1999-58호 1999. 9. 4	구청장 방침 1999. 9. 15	-	미정비	미복개
	우면천	우면동 산94-1	우면동 634-4	1,400				-	미정비	미복개
	형촌천	우면동 634-108	우면동 356-1	750				-	미정비	미복개
	신원천	내곡동 184-15	신원동 436-1	1,330				서초 공고 제2000-539호 2000.11. 30	기정비:330m 정비중:330m	미복개
	원지천	원지동 211	신원동 480-8	1,000				-	미정비	미복개
	새원천	원지동 162	원지동 516-3	1,600				-	미정비	미복개
	안골천	내곡동 350	내곡동 304-1	1,000	서초구 고시 제2003-27호 2003. 3. 12	-	-	-	미정비	미복개
구로구 (1)	역곡천	항 동 22-1	항 동 162	1,010	구로 고시 제1998-138호 1998. 10. 13	구로 고시 제2001-9호 2001. 2. 28	구청장 방침 2001. 3. 23	구로 공고 제2001-185호 2001. 6. 1	미정비 역곡하수처리장 설치와 연계시행	미복개
송파구 (1)	장지천	거여동 487-1 장지동 524 (서울시계)	장지동 769 (탄천합류점)	4,080	송파 고시 제2004-83호 2004. 12. 7	송파 고시 제2005-9호 2005. 3. 7	-	-	미정비	미복개
	계		18개 하천	19,630						

참여기관 및 연구진

서 울 특 별 시

서울특별시	**시 장**	이명박	고 건(전)		
	부 시 장	장석효	양윤재(전)	최재범(전)	김학재(전)
	도시계획국장	김영걸	이종상(전)	진철훈(전)	
	도시계획과장	조성일	이인근(전)	공성석(전)	송득범(전)
			박필용(전)	문승국(전)	
	담당팀장	김명용	선권수(전)		
	담당주임	정제호	우진택	심재욱	류춘광
			원효연	최영수	정성국
			이강수	김태현	이성로(전)
			모완수(전)	이기호(전)	김길남(전)
	상임기획단장	이정중			
	상임기획단	최석우	장재영	김흥준	김현주
서울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	**위원장**	김진수	명영호(전)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원 장**	강만수	백용호(전)	권원용(전)	
	연구책임	김문현	정희윤		

공 청 회

사회자	최상철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토론자	권용우 (성신여자대학교)	이종상 (서울시 도시계획국장)
	김광식 (성균관대학교)	최흥석 (고려대학교)
	김창석 (서울시립대학교)	하성규 (중앙대학교)
	노수홍 (연세대학교)	한응용 (서울시의회건설위원회)
	이가옥 (성공회대학교)	허재완 (중앙대학교)

연 구 자 문

주제발표

강병기 (한국도시설계학회장, 전구미대학장)
김성균 (서울대학교)
박은미 (목원대학교)
양승우 (서울시립대학교)
온영태 (경희대학교)
이규환 (중앙대학교)
이승재 (서울시립대학교)
임창호 (서울대학교)
조명래 (단국대학교)
조임곤 (경기대학교)
주성재(경희대학교)
최상철(서울대학교)
최선주(동경대학교박사)

토론자

강양석 (홍익대학교)
강영호 (울산대학교)
고정민 (삼성경제연구소)
공성진 (한양대학교)
구자훈 (한동대학교)
권두승 (명지대학교)
권용우 (성신여자대학교)
김광식 (성균관대학교)
김귀곤 (서울대학교)
김문조 (고려대학교)
김범수 (평택대학교)
김상묵 (서울산업대학교)
김선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김성수 (서울대학교)
김성식 (LG경제연구소)
김수근 (서영기술단)
김용태 (대한주택공사주택연구소)
김정훈 (서경대학교)
김종순 (건국대학교)
김창석 (서울시립대학교)
김현성 (서울시립대학교)
김현수 (대진대학교)
김형진 (연세대학교)
김흥주 (한국교육개발원)
남기범 (서울시립대학교)
동종인 (서울시립대학교)
류중석 (중앙대학교)
배인명 (서울여자대학교)
손세관 (중앙대학교)
손의영 (서울시립대학교)
안건혁 (서울대학교)
여홍구 (한양대학교)
유진성 (선진엔지니어링)
윤중경 (제일엔지니어링)
이명훈 (한양대학교)
이주희 (국가전문행정연구원)
이창수 (경원대학교)
이희연 (건국대학교)
임승빈 (서울대학교)
장연태 (서울시전산정보관리소)
전승훈 (경원대학교)
정갑영 (한국문화정책개발원)
정윤수 (명지대학교 교수)
정의철 (대구대학교)
정창무 (서울시립대학교)
정희성 (환경정책평가연구원)
조주현 (건국대학교)
조중래 (명지대학교)
최막중 (서울대학교)
한명섭 (서울YMCA)
현인환 (단국대학교)
홍경준 (전북대학교)
황기원 (서울대학교)
황주성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진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책임

총괄 · 조정
김문현 (연구책임, 도시기본계획팀장)
정희윤 (연구책임, 도시계획설계연구부장, 현 수도권정책센터장)

계획의 기본지표
김문현 (도시기본계획팀장)
김학열 (도시정보연구센터 부연구위원, 현 서경대학교)

공간구조 개편구상
김문현 (도시기본계획팀장)
정희윤 (도시계획설계연구부장, 현 수도권정책센터장)
김선웅 (도시계획설계연구부 연구위원, 현 도시계획부장)

생활권계획
양재섭 (도시계획부 연구위원)

토지이용계획
권영덕 (도시계획부 선임연구위원)

재개발 · 재건축계획
권영덕 (도시계획부 선임연구위원)

교통 및 물류계획
황기연 (도시교통연구부 선임연구위원, 현 홍익대학교)
이청원 (도시교통연구부 연구위원, 현 서울시립대학교)
이신해 (도시교통부 부연구위원)

정보통신계획
강영옥 (도시정보연구센터 실장, 현 디지털도시부 연구위원)

산업경제계획
신창호 (도시경영부 선임연구위원)
변창흠 (도시경영연구부 부연구위원, 현 세종사이버대학교)
정병순 (도시경영부 부연구위원)

주택계획
장영희 (도시사회부 선임연구위원)

환경보전계획 · 공원녹지계획
김운수 (도시환경연구부 연구부장, 현 도시환경부 연구위원)
이창우 (도시환경연구부 연구위원, 현 기획조정실장)
유기영 (도시환경부 연구위원)
김영란 (도시환경부 연구위원)
조용현 (도시환경부 연구위원)

경관계획
이희정 (도시계획설계연구부 연구위원, 현 아주대학교)
목정훈 (도시계획부 부연구위원)

사회개발계획
김경혜 (도시사회연구부 연구부장, 현 도시사회부 선임연구위원)
신경희 (도시사회연구부 연구위원, 현 도시사회부장)
라도삼 (도시사회부 연구위원)

방재계획
윤명오 (서울시립대학교)

계획의 실현화방안
신창호 (도시경영부 선임연구위원)
정병순 (도시경영부 부연구위원)

연구원

김 용 (도시계획설계연구부)
김성륜 (도시교통연구부)
김성이 (도시계획설계연구부)
김성현 (도시계획설계연구부)
박은경 (도시계획설계연구부)
박은미 (도시계획설계연구부)
박재성 (서울시립대학교)
손은경 (도시계획설계연구부)
신지혜 (도시환경연구부)
윤신희 (도시정보연구센터)
박은철 (도시사회부)
이삼수 (도시계획설계연구부)
이소라 (도시환경연구부)
정주영 (도시환경연구부)
조용학 (도시교통연구부)
진유리 (도시환경연구부)
최석우 (도시계획설계연구부)
최지훈 (도시경영연구부)
한재혁 (도시환경연구부)
한혜숙 (도시사회연구부)
이동관 (도시계획부)

표지디자인

권연정 (도시계획설계연구부)　김희주 (도시계획부)